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김학순 공개증언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21. 8. 13.(금) 10:00~19:0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 ZOOM

한·ENG·日 동시통역 제공

주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한국여성학회,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 우원식, 김민기, 홍익표, 이재정, 김원이, 민형배, 한준호, 장혜영

목 차

목 차 3

프로그램 4

인사말 7

축사 9

세션 1. 김학순 공개증언 30 주년의 의미 25

정진성 I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前 정대협 공동대표 25

양징자 I 일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공동대표 30

우에무라 다카시 I 일본 '주간금요일' 발행인 겸 사장, 前 아사히신문 기자 38

세션 2. 김학순 증언의 파장(波長)과 공명 51

양현아 I 서울대학교 교수 51

알렉시스 더든 I 미국 코네티컷대학교 교수 64

엘리자베스 W. 손 I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교수 66

캐서린 배스게이트 I 독일 뮌스터대학교 석사과정 73

세션 3. 역사부정의 백래시 79

김부자 I 일본 도쿄외국어대학교 교수 79

야마구치 도모미 I 미국 몬타나주립대학교 교수 86

강성현 I 성공회대학교 교수 101

나유신 I 독일 GPB 컬리지 강사 126

세션 4.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과제 및 방향 141

백재예 I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 박사과정 141

이재임 I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53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10:15	**축사 및 개회사** 사회: 최광기(정의기억연대 이사)
10:15~10:30	**국내외 축하영상 메시지** 이옥선(인권운동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이용수(인권운동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테오 반 보벤(네덜란드 마스트리트대학교 교수, 前 UN 배상문제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미국 포드햄대학교 교수, 前 UN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유사 성노예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우스티나 돌고폴(호주 플린더스대학교 교수, 前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검사) 패트리샤 셀러즈(영국 런던정경대학교 교수, 前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검사) 인다이 사호르(노르웨이 노르웨이난민협의회 고문, 前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공동대표) 와타나베 미나(일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관장) **김학순 공개 증언 30주년 기념 영상 <우리가 김학순이다>**
10:30~12:00	**<세션1> 김학순 공개 증언 30주년의 의미** 사회: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학교 교수) 기조발제. 정진성(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前 정대협 공동대표) 발표 1. 양징자(일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공동대표) 발표 2. 우에무라 다카시(일본 '주간금요일' 발행인 겸 사장, 前 아사히신문 기자)
12:00~13:30	**점심시간**
13:30~15:10	**<세션2> 김학순 증언의 파장(波長)과 공명** 사회: 배은경(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1. 양현아(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2. 알렉시스 더든(미국 코네티컷대학교 교수) 발표 3. 엘리자베스 W. 손(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교수) 발표 4. 캐서린 배스게이트(독일 뮌스터대학교 석사과정)
15:10~15:20	**휴식**
15:20~17:00	**<세션3> 역사부정의 백래시** 사회: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발표 1. 김부자(일본 도쿄외국어대학교 교수) 발표 2. 야마구치 도모미(미국 몬타나주립대학교 교수) 발표 3. 강성현(성공회대학교 교수) 발표 4. 나유신(독일 GPB컬리지 강사, 코리아협의회 회원)
17:00~17:15	**휴식**
17:15~18:00	**<세션4>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과제 및 방향** 사회: 김수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발표 1. 백재예(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 박사과정) 발표 2. 이재임(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8:00~19:00	**질의응답 & 종합토론** 사회: 김수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인사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 나 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8월 14일(토)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 김학순의 공개증언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의 용기 있는 증언은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 세계 피해자들을 일깨움으로써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전시 성폭력을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장을 열었습니다. 김학순의 공개증언으로 촉발된 초국적 시민운동의 결과 국제사회는 인권규범을 갱신하며 여성의 관점에서 글로벌 인권사를 새롭게 써 왔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회피와 조직적인 소녀상 철거는 계속되고 있으며, 역사부정세력의 확장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피해자들의 증언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의미를 확산·계승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김학순이 남긴 유제를 돌아보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투쟁한 피해생존자 활동의 의미를 다각도로 논의하면서, 여전히 남은 과제와 새롭게 대두된 문제를 살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총 4개로 구성된 패널에는 정진성 교수, 일본의 양징자 대표,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 김부자 교수, 한국의 양현아, 강성현 교수, 미국의 알렉시스 더든, 야마구치 토모미, 엘리자베스 손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물론, 발표문 공모를 통해 함께하게 된 국내외 신진연구자들이 참여해, 성별과 민족, 세대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지한 토론의 장을 펼칩니다.

이 자리를 빛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 단계부터 함께 하며 기꺼이 공동주최에 응해주신 일본군'위안부'연구회와 한국여성학회, 김상희 국회부의장,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이재정, 우원식, 김민기, 김원이, 민형배, 장혜영, 한준호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현장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함께 해주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이용수 인권운동가, UN 특별보고관 테오 반 보벤 교수, 게이 맥

두걸 미국 포드햄대학교 교수,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검사였던 우스티나 돌고폴 호주 플린더스대학교 교수와 패트리샤 셀러즈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교수,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공동대표였던 인다이 사호르 노르웨이난민협의회 고문, 그리고 와타나베 미나 일본 WAM(전쟁과 평화의 여성 박물관) 관장 등 일본군 성노예제문제 해결 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국내외 인사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행사가 김학순 증언의 의미를 나누고 되새기며 계승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축사



일본군‘위안부’연구회장 김 득 중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1년 8월 14일 한 여성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의 경험을 토로한 김학순 할머니에게 이 증언은 50년 전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내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선 김학순 할머니의 담대한 증언은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지, 식민지·반식민 하에서 많은 여성들이 전장에 끌려가 고통 받은 실상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관심은 김학순의 용감한 공개증언에서부터 비로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학순의 공개증언 30주년이 되는 오늘, 김학순의 증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봅니다. 김학순의 증언으로 드러난 역사적 진실은 다른 많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증언하는 시발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시민운동과 학술 연구는 폭과 깊이에서 많은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여성인권과 식민지문제 더 나아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발걸음은 이제 전세계적 여성운동과 평화운동의 차원의 연대로 발전하며,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하는 미래 세상의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김학순의 마음을 되새기며, 오늘 개최하는「김학순 공개증언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는 오늘의 현황을 짚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귀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귀중한 논문을 발표해주는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사회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 학술회의를 마련해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김학순 증언의 의미를 마음 속에 간직하고, 일본군‘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한국여성학회장 이 혜 숙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고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학순의 증언 이후 국내 피해자 뿐 아니라 필리핀, 네덜란드 등 세계 각지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김학순의 증언은 묻혀 있었던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첫 증언을 했던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강제동원과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면서 법적 책임 회피와 외면, 왜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김학순 공개증언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별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신진연구자들이 김학순 공개 증언 30주년의 의미, 김학순 증언의 파장과 공명, 역사부정의 백래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과제 및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여성학회는 학회 활동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와 함께 하는 오늘 학술대회를 계기로 피해자 증언의 의미 뿐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 향후 과제 등에 학계와 시민사회, 정부 모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관련한 쟁점과 향후 과제들을 이해하고 담론과 운동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론적, 실천적 좋은 방안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사회자님들, 축하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 또 준비를 위해 애 쓰신 분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 쪼록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학술대회가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국회부의장 김 상 희

(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국회부의장 김상희입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증언했습니다. 피해자 한 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 덕분에 반세기 가까이 가려졌던 위안부 문제가 국내외에 공론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개증언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지난한 여정의 시작이자, 전시 성폭력 문제에 관한 인권 운동과 국제적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00년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가 채택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해 함께 기리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도 1,500회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의 연대로 만들어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진기록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려는 움직임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올해 들어 피해자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이제 14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시점에 김학순 공개증언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의기억연대와 일본군'위안부'연구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맡아주실 국내외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새겨듣겠습니다. 피해자 활동의 의미를 어떻게 확산 계승해 나아갈지, 한일 관계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국회의원 정 춘 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경기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1991년 8월 14일, 故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리신지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새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얼마나 길고 지난한 싸움을 해오셨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故김학순 공개증언 30주년을 맞이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한국여성학회,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함께 논의해나가길 바랍니다. 좋은 의견 나눠주시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활동가,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신 해외 패널분들께 더욱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은 숨죽여 울분을 삼키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전 세계에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시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 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해온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매주 수요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시위는 얼마 전 1500 회차를 넘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슬프고도 자랑스러운 기록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부인하거나, 조직적으로 소녀상 철거 운동을 벌이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해 생존자분들이 1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본 정부가 법적 배상과 진정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힘 모으겠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살피겠습니다.

축사



국회의원 우 원 식

(서울 노원구을, 더불어민주당)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진실을 위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아픈 역사의 진실이 드러난지도 어언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피해자의 명예와 여성 인권 회복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 온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올해로 꼭 30주년입니다. 30년 전 김학순 할머니의 조그마한 외침은 1500회의 수요집회와 시민들의 목소리로 이어져 진실을 알리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우리 법원은 일본에게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광복 76년만에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제국주의의 잔인한 만행에 대해 부인하며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역사적 논쟁거리가 아닌 진실의 문제이며, 일본의 사죄 역시 찬반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보편적 기준에 맞게 과거사를 인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인권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제 열 네 분이 계십니다. 인권이 침탈받고 노동이 수탈당한 이 같은 고통의 역사를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여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슬픈 역사를 함께 아파하며 연대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연구가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등불이 되어주셨듯이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겠습니다. 제 사무실 한 켠에는 원내대표 시절 <정의기억연

대>로부터 받은 '평화의 소녀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소녀상을 보며 그 날의 참상을 기억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최선을 다해 답할 것임을 다짐해왔습니다. 소녀상의 불끈 쥔 주먹처럼 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던 할머니들의 아픔과 상처가 아물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국회의원 김 민 기

(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민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며 김학순 할머니께서 용기 있게 아픈 역사를 증언해 주신지 30년이 흘렀습니다. 광복 후 반백 년 가까이 침묵을 지켜왔던 통한의 역사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증언 이후, 유엔 인권위 현장에서, 거리와 법정에서, 할머니들의 증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뒤에 숨어 있기보다 앞에 나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길을 선택하셨고, 다시는 잔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며 활동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범죄 피해자였던 어린 소녀는 강인한 인권운동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국내외를 다니며 전시의 여성 성폭력 문제에 대해 말하고,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의 지치지 않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사실을 왜곡하는 논문들은 여과 없이 학계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김학순 공개증언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30년을 돌아보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투쟁의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세계 인권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겨 온 30년 투쟁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한국여성학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국회의원 홍 익 표

(서울 중구성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홍익표입니다.

「김학순 공개증언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신 정의기억연대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한국여성학회,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1년 8월 14일은 故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최초로 공개증언한 날입니다. 정부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이루어진 날을 기리며'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공개증언의 용기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끌어냈고 숨겨질 뻔했던 위안부의 강제동원, 인신매매, 성착취의 비극를 드러내 전시 성폭력과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켰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자 했던 한 인간의 존엄한 결정과 용기에 한일 양국의 양심있는 시민들은 물론 세계가 연대하여 전시 성폭력 문제에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조속히 해야하며, 한일 양국을 비롯하여 세계는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할 역사에 대해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문제를 넘어 세계가 기억해야 할 전쟁범죄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7일,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맞아 주한이스라엘대사관과 주한독일대사관이 공동으로 추모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쟁범죄 가해국과 피해국으로 제3국에서 이와 같은 기념식을 여는 날이 아직은 요원해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책임있는 태도로 역사를 마주하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증언 이후 30년을 돌아보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투쟁한 피해자 활동의 의미를 다각도로 논의

하는 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온 시민활동가와 연구자분들이 국가와 언어, 세대를 넘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다양한 논의를 저도 귀담아듣고 국회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 보다 책임있게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사



국회의원 이 재 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입니다.

30년 전, 우리 김학순 할머니께서 용기 내 증언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이하며 어제의 진실을 알리고 내일의 과제를 고민하는 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셨던 그 증언은 진실은 가려질 수 없다는 울림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조직적인 소녀상 철거와 역사를 부정하려는 움직임 속에서도 그날의 용기 있던 목소리가 평화를 향한 논의로 연결되는 오늘의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절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외치셨던 그녀의 외침을 기억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알리고 투쟁하신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저도 함께하겠다는 다짐 드립니다.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 연구회와 한국여성학회 실무진분들, 그리고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논의를 저도 경청하며,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해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또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국회의원 김 원 이

(전남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김학순 공개증언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한국여성학회를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8월 14일은 故김학순 할머니께서 30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증언하신 날입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전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깨웠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호소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정립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극우세력은 평화의 소녀상 나고야 전시회를 비롯한 오사카, 뮌헨 전시회 측에 각종 협박과 위협을 집요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성 없는 행태를 멈추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공식 인정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하루빨리 동참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 명예회복, 역사왜곡 대책 마련과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단호하고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국제학술대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림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위안부 피해자 운동의 지속적인 활동과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역대급 무더위 속, 열네 분 생존 피해 할머니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국회의원 민 형 배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반갑습니다. 민형배 의원입니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故김학순 선생님의 증언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수십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제의 추악한 악행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연이어 전 세계 곳곳에서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故 김학순 선생님의 용기있는 결단이 있었기에 참혹한 진실을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김학순 공개증언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한국여성학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애 많이 써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도 함께 진실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위안부 문제, 온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물어야 할 과제들이 남았습니다. 최초 증언으로부터 29년이 흘렀습니다. '수요집회'는 어느덧 1500회를 넘겼습니다. 240분의 피해자 가운데 14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저희가 좀 더 더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용기있는 증언을 되새기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작은 물방울은 커다란 바위를 뚫어냅니다. 우리의 하나된 뜻으로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법과 제도 보완 등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국회의원 한 준 호

(경기 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피해자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제9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기념행사가 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개회식 때 쓰였던 선수단 입장곡의 작곡자가 일본군 '위안부' 만행을 부정하는 데 앞장서 온 일본의 대표적 극우 인사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올림픽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를 낸 지 30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일본 정부는 독일 남부 뮌헨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 철거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UN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사과와 올바른 교육을 권고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체제 아래에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유린당하며 어린 소녀들이 성노예로 전쟁에 강제 동원된 가슴 아픈 역사는 영원히 기억돼야 할 진실입니다.

국민 없이 존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방향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피해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면하신 피해 할머님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국회의원 장 혜 영

(비례대표, 정의당)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김학순 선생님의 공개 증언과 함께 '위안부' 운동이 시작된 지도 30년이 흘렀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피해자 투쟁의 의미를 많은 분들과 함께 되새기는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가 피해자요". 30년 전의 증언은 아프다고 말하기에도 모자랐던 참혹함을 개인의 기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역사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8월 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제정되었고, 이후 또 다른 기억들이 촛불을 함께 켜듯 이어졌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 "나도 피해자"임을 사회에 고발하는 미투 운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첫 증언을 시작하신 김학순 선생님의 용기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투쟁 30년 동안 역사가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사실 인정과 공식 사죄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2015년의 한일 합의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녀상 철거 요구에서 보듯, 과거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는 이상 역사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멈춤 없이 기억하고 말해야 할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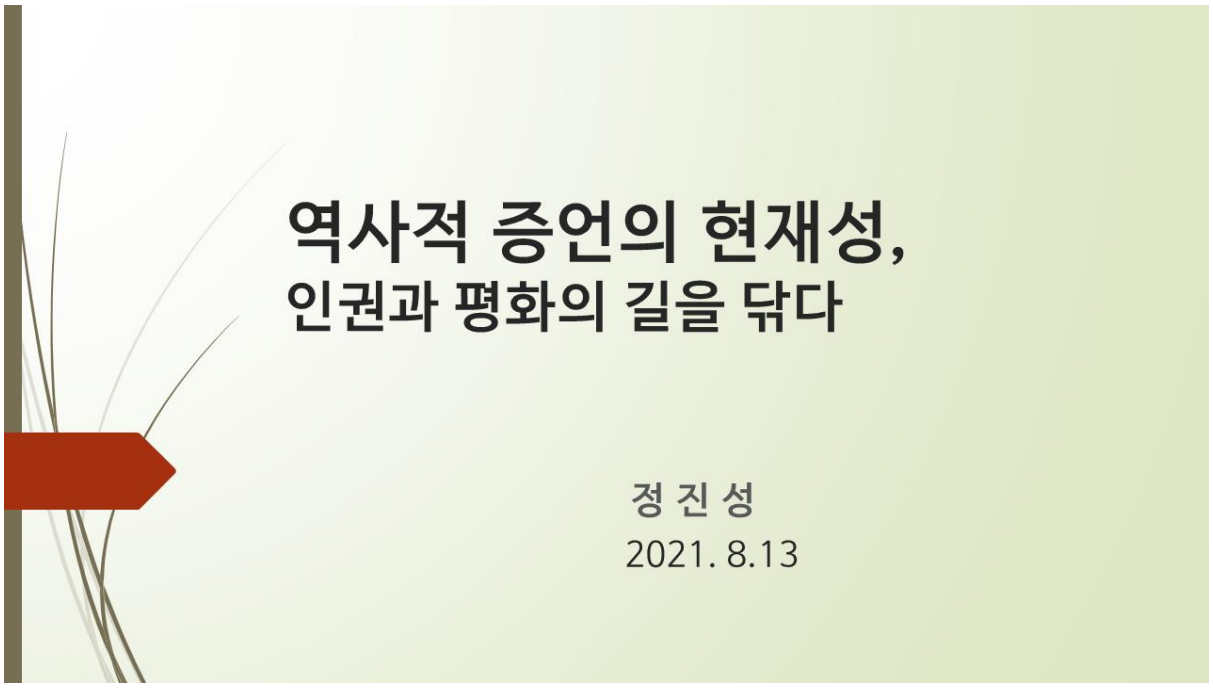
저도 위안부 운동 30주년을 맞아, 사과 없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굿긴 부고만 울리며 남은 생존자를 헤아릴 수밖에 없는 무력한 세상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회복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부단히 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를 주관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주최한 일본군 '위안부'연구회와 한국여성학회, 그리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션 1. 김학순 공개증언 30 주년의 의미

기조발제: 역사적 증언의 현재성, 인권과 평화의 길을 닦다!

정진성 I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前 정대협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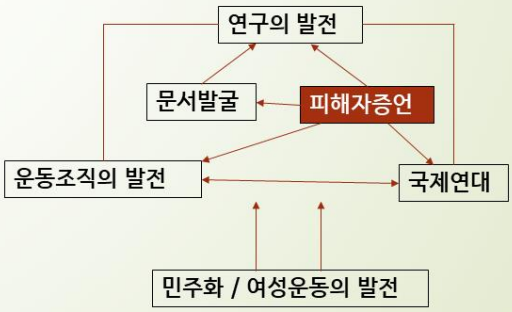
내용

- (1)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사회적” 발견과 김학순의 등장
- (2) 김학순 증언의 구체적 과정
- (3) **김학순 증언** 이후 I: 사회적 관심, 운동과 연구의 폭발
- (4) 김학순 증언 이후 II: 피해자에서 활동가로
- (5) 포스트 피해자 시기의 김학순 증언의 의미와 과제





(1)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사회적“ 발견과 김학순의 등장



오랜 은폐: 요인: 가부장제, 해방 후 국제관계, 권위주의 정부, 경제적 난관 등
그럼에도 꾸준한 자료발굴, 연구, 소설, 영화 등 지속.

1991.7 증언
1991.8.14 기자회견.공개증언
1997.12.16 세상을 떠남
2012. 아시아연대회의에서 8.14을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로
2018. 한국정부 국가기념일로 정함







(2) 김학순 공개증언의 구체적 배경과 과정

- 1. 일본정부의 역사적 사실 부정
- 2. 전후보상운동의 전개
- 3.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활동
- 4. 정대협 조직의 발전







(3) 김학순 증언 이후 I: 사회적 관심, 운동과 연구의 폭발

- 1. Me Too의 확산: 문옥주… 한국, 북한, 일본, 아시아 피해국, 네델란드
- 2. 운동의 폭발: 수요시위 (1992.1.8), 해외증언집회, 추모비…
- 3. 법적 정의 추구: 소송 (일본, 미국, 한국 등지)
- 4. 연구의 획기적 발전: 문서 발굴 (1991.11), 진상규명
- 5. 일본정부의 태도 변화: 1,2차 조사보고서, 역사교과서 수록, 국민기금..
- 6. 한국정부의 특별법 제정 (1993.6)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7. 남북한 연대/해외동포 연대/아시아연대/국제연대
- 8. 새로운 국제인권규범의 형성: 전시 성폭력 문제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s.



(4) 김학순 증언 이후 II: 피해자에서 활동가로

- 1. 피해자의 의식 변화: 피해자에서 활동가로
  가장 중요한 치유. 명예회복
  나비기금. 김복동센터. 베트남 연대활동. 조선학교 장학금 등.
- 2. 역사적 특수성과 보편성의 화해/ 탈식민주의 연구 과제 남음
- 3. 운동의 실천 방향 제시







(5) 포스트 할머니 시기의 김학순의 의미와 과제

- 1. 김학순 증언의 현재성
  여성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
  한일관계를 넘어서 아시아로,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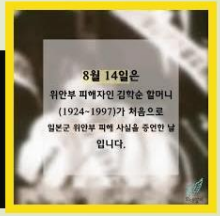


1997.12.16

- 2. 김학순 증언의 실천성

김학순이 피해자에서 활동가로 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피해보상에서 보편적 가치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확장
아시아의 여성인권과 평화에의 기여





30년 운동을 기초로, 새로운 단계를 준비:

1. 끊임없는 자료발굴과 연구. 자료의 종합. 체계화. 아카이빙. 보존
   출판되지 않은 증언 발굴. 소설. 영화. 다큐 등 제작
2. 교육과 기억
3. 일본의 법적 책임, 역사부정 추궁

* 흔들리지 않는 원칙 지키기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4.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일어난 아시아에서 탈식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조직.
   체계적 연구와 자료 발굴. 국제연대 등에 리더십 발휘,
   아시아에서 무력분쟁하 여성인권을 위한 중심으로.

* 위안부문제 해결운동에 시너지를 만들 것임.



김학순 증언과 일본 운동의 역사

양징자 | 일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공동대표

1. 일본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시작

한국의 운동이 윤정옥이라는 한 인물의 강한 신념에 촉발되어 시작되었듯이,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도 큰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 있다. 바로 다카하시 기쿠에(高橋喜久江)다. 1933년에 태어난 다카하시는, 1957년에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에 들어가, 교풍회(矯風会)의 활동을 하는 한편, 1973년 결성된 '매춘문제와 맞서는 모임(이하 '맞서는 모임')'[1]의 사무국장으로서 일본의 기생관광 반대운동,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위해 노력한 선구자다.

1973년 7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회 한일교회협의회에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하 '한교여연')는 기생관광에 반대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이 회의에 참가했던 일본 대표가 가지고 온 그 성명을 보고 다카하시는 놀랐다. "이건 큰일이다. 어떻게든 일본의 기독교 여성으로서 한국 기독교 여성들의 바람에 응해야겠다."[2]라고 생각한 다카하시는, 일본기독교협의회(이하 'NCC')의 야마구치 아키코(山口明子)[3]와 함께 같은 해 11월에 한국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일본의 기생관광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1988년 4월 한교여연이 주최한 「여성과 관광문화 국제 세미나」(제주도 YMCA 캠프장, 10개국으로부터 130명이 참가)에 참가했는데, 다카하시는 여기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윤정옥의 조사 보고를 듣게 된 것이다.

이 세미나에서 윤정옥과 만나, 그녀의 조사 보고를 듣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다카하시는, 귀국 후 윤정옥에게 센다 가코(千田夏光)의 『종군

[1] 처음에는 매춘방지법(1956 년 공포, 1957 년 4 월 시행) 제정을 위해 22 개의 민간단체가 결성한 '매춘대책국민협의회'(1953 년 결성)와 '오키나와의 매춘문제와 맞서는 모임'이 합병하는 형태로 1973 년에 '매춘문제와 맞서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그 후 1986 년에 '매매춘문제와 맞서는 모임'으로 명칭이 바뀌고, 나아가 '성착취문제와 맞서는 모임'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18 년에 해산되었다.

[2] 다카하시 기쿠에,『매매춘 문제와 맞서다(売買春問題ととりくむ)』, 아카시쇼텐, 2004 년.

[3] 1935 년 태어난 야마구치 아키코는 다카하시와 함께 기생관광반대운동에 힘썼으며, 그 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관여해 오고 있다.

위안부』 등 일본에서 출판된 '위안부' 관련 서적 세 권과,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인 시로타 스즈코(城田すず子)의 바람으로 '가니타 부인의 마을'에 건립된 비석 「아아, 종군위안부」의 사진이 실린 「가니타 소식지」를 보낸다. 윤정옥은 같은 해 여름에 조사를 위해 일본에 갔고, 다카하시의 안내로 가니타 부인의 마을을 방문하였다. 또한, 이때 다카하시는 국회의원회관에 여성의원, 기자, 여성단체들을 모아 윤정옥과의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2. 역사적인 집회 (1) ——1990년12월

1990년 12월 1일,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생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집회가 열렸다. 다카하시가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맞서는 모임'의 주최로 개최된 「인권과 전쟁을 생각하는 집회」이다. 이 집회에서, 윤정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강연을 한 것이다. 도쿄 YWCA에서 개최된 이 집회에는 300명이 모였는데, 나 자신도 이 집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정대협이 결성된 그 다음 달의 일이다. 초대 대표로서 일본에 온 윤정옥은,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정대협의 결성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아직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반적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아, 미디어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던 시절의 일이다. 하지만 그 장소에는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나 자신을 포함해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참가했기에, 다카하시 등이 이미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널리 퍼뜨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편에서 함께 싸우게 되는 여성들 중 다수가 이 장소에 와 있었다. 시바 요코(柴洋子)[4]는 "윤정옥 씨의 강연 내용은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뜨거운 열기, 당시의 집회의 모습은 지금도 눈 앞에 떠오른다."라고 말한다. 필자 자신도 당시 집회 장소의 광경이 생생히 눈 앞에 떠오른다.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열기,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으로 이야기를 전했던 윤정옥의 마음이 강하게 전해졌기에, 뇌리에 새겨지는 광경으로 남아 있는 것이리라.

그 집회 장소에서는, 참가자들이 일어나 '종군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 결성된 사실을 전하는 장면 등도 있었다. 오키나와의 [증언자인] 배봉기의 생애를 정리한 『빨

[4] 1947 년에 태어난 시바 요코는 이 집회 이후에 '그룹・성(性)과 천황제를 생각하다'의 결성에 참가하여, 대만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지원 운동을 중심적으로 담당했다. 현재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의 공동대표.

간 기와집』의 저자 가와타 후미코(川田文子)[56]등이 만든 그룹이다. 또한, 일찍이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인 스즈키 유코(鈴木裕子)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성(性)과 천황제를 생각하다」가 결성된 계기도 이 집회라고 한다. 나아가, 나 자신이 참가한 재일동포 여성들에 의한 '종군위안부문제 우리여성네트워크'(이하 '여성네트')」도, 이 집회와, 집회 다음 날 열린 윤정옥과 재일동포 여성들의 간담회를 계기로 결성되었다[7]. 주최자였던 '맞서는 모임'의 다카하시가 "집회 개최 이후부터 운동이 고조되고 재판 등도 제기되어..." 라고 술회[8]하고 있듯이, 김학순이 아직 실명 증언을 하기 전인 1990년 12월에 개최된 이 집회는, 다음 해부터 시작되는 피해자들의 실명 증언을 받아들여,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구하는 일본 운동의 설립과 확산을 촉진한 역사적인 집회였다고 할 수 있다.

3. 역사적인 집회 (2) ——1991년12월

1990년 12월의 집회가 운동의 역량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 집회였다고 한다면, 1991년 12월에 도쿄와 간사이(関西) 각지에서 개최된 김학순의 증언을 듣는 집회는 운동의 역량을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일본의 시민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는 움직임이었다. 12월 5일에 일본에 와, 6일에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소송의 원고로서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한 김학순은, 그 다음날인 7일에 오사카에서 첫 증언 집회를, 그리고 9일에는 도쿄에서 증언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도쿄 집회를 주최한 것이, 내가 소속한 여성네트였다.

실은 12월에 김학순을 일본에 초대해 증언 집회를 여는 것은 김학순의 제소가 결정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원래는 간사이로 입국한 후 다시 간사이에서 귀국할 예정으로, 도중에 한 번 도쿄에 와서 증언 집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짜여 있었다. 그런데 도쿄 지방법원에의 제소 일정이 간사이 증언 집회의 전날이 되어버려서, 김학순은 원고단과 함께 도쿄로 입국해 제소 다음날에 오사카에서 집회를 한 뒤, 다시 도쿄에 돌아가 집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간사이에 간다고 하는, 왔다갔다하는 하드 스케줄이 되어버렸다. 또, 김학순이 유족회 소송의 원고단에 들어감으로써 그 소송에 대한 보도가

---

[5] 1943 년에 태어난 가와타 후미코는 1987 년에 배봉기의 생애를 좇은『빨간 기와집(赤瓦の家)』을 출판. 그 후에도 '위안부' 문제에 힘써 온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송신도의 재판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관여해 오고 있다.

[6] [역주] 가와타 후미코의 저서『빨간 기와집』은 한국에서『빨간 기와집: 일본군 위안부가 된 한국 여성 이야기』(오근영 역, 꿈교출판사, 2014)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7] 같은 집회의 다음날 열린 간담회에 참가한 재일동포 여성 17 명은 의논을 거듭한 끝에 1991 년 11 월 3 일에 '종군위안부문제 우리여성네트워크'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8] 다카하시 기쿠에, 전게서.

굉장히 큰 건이 되어 금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들이 집회에 모이게 되었다. 우리 여성네트가 준비한 장소는 통상 100명에서 200명이 들어가는 규모의 장소였으나, 당일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숫자는 450명에 달했다[9]. 계획 초기에 '사람이 별로 모이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던 우리는, 이 이상 사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명을 지르게 되었다.

집회는 2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 정대협의 김혜원이 한국에서의 운동에 대해 보고한 후, 이어서 김학순의 증언과 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일본 시민들의 노력과 마음을 김학순에게 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11명이 발언했다. 또한 사전에 65통의 편지가 김학순 앞으로 보내졌다.

김학순은 집회를 하면서, 일본에 올 때 탄 JAL(일본항공) 비행기의 날개에 일장기가 보여 숨 쉬기가 힘들었다, 일본에 도착해서 숙소에 가니 다다미 방이라 당시가 떠올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마 과거를 다 모를 거에요. 젊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한국 청년이나 일본 청년들이 그거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만 하지 말고, 엄연히 살아있는데. 내가 당하기는 한 4~5개월밖에 안 당했다고 해도, 그래도 일본 사람, 일본 군인 때문에 내 전신이 버려 가지고, 여자의 행동을 못하게 되었잖아.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일본 정부에서도 잘못한 것은 어디까지나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 주시고, 불쌍한 우리들을 생각해서라도, 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호소했다.

이 집회에는, 가와타 후미코, 니시노 루미코(西野留美子), 스즈키 유코,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10]등 이미 '위안부' 문제를 위해 힘쓰고 있는 다수의 일본인 여성들이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집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새로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사람도 많았다. 이후 필리핀인 피해자 지원에 인생을 걸게 되는 시바사키 하루코(柴﨑温子)[11]는, "남성의 피해만 들려오던 중에 김학순 씨가 나타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집회 장소로 갔다. 집회가 끝나고, 끝까지 남아 학순 씨와 악수했다. 그때, 나는 이 문

[9] 실제로 그곳에 온 사람들의 수는 600 명 이상. 하지만 400 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돌아가게 하는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성네트의 회보인「여성네트 알림」및 이 집회의 보고서인「이『한』을 풀기 위해서」에 게재된 공식 발표 수는 450 명으로 되어 있다.

[10] 1928 년 3 월~2013 년 1 월. 사회당, 사민당의 참의원 의원. '위안부' 문제가 일본 사회에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질문을 반복했던, 운동의 선구자 중 한 명이다.

[11] 1937 년생. 필리핀인 피해자의 재판 지원, 송신도의 재판 지원 등 폭 넓게 활동. 85 세가 된 지금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제에 나서기로 결의했다.”라고 말한다.

4. 일본 정부・사회를 움직인 김학순의 등장

김학순의 등장은 일본 사회를 뒤흔들고, 일본 정부도 움직이게 되었다. 1991년 12월에 김학순이 제소한 시점에는, 일본 정부는 아직 ‘민간업자가 데리고 다닌 것이다’라며 정부와 군의 ‘관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를 움직이게 했다. 당시의 상황을 요시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김학순 씨가 일본에 오기 직전에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에게 짓밟혀, 평생을 처참하게 보내온 것을 알아줬으면 한 거에요. 일본이나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이 과거에 한 일을 알아줬으면 해요.” (11월 28일, 「뉴스21」)라고 말한 것에 대해 강한 감명을 받아, 종군위안부 문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중략) (군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부 답변의 거짓은 분명했다. 실제로 나 자신이 유학을 가기 전에, 일본군이 군 위안소 설치를 지시한 공문서를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확인했었다. 김학순의 발언을 듣고 다시금 나는 같은 도서관에 가, 관련 문서를 찾았다. 그리고 인멸을 모면한 여섯 점의 증거를 발견하여 신문에 발표할 수 있었다(『아사히신문』 1992년1월11일자). 어째서 분명히 인멸되었을 자료가 남아있었던 것일까. 이것들은 패전 직전에 공습을 피하기 위해 하치오지(八王子)의 지하 창고에 피난시켜 둔 탓에, 연합국군이 도착하기 전에 미처 소각할 수 없었던 42년까지의 자료군이었다.” [12]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를 지시한 것을 나타내는 공문서가 『아사히신문』 1992년1월11일자에 게재되자, 1월 13일, 가토(加藤) 관방장관은 “군의 관여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며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 또한 1월 16일~18일에 한국에 온 미야자와(宮澤) 수상도, 한일정상회담의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군의 관여’를 인정하며 ‘사죄와 반성’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연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보도되는 속에, 운동단체[13]들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핫라인 ‘위안부 110번’을 1월 14일~16일 3일간에 걸쳐 개최했다. 여기로 미야기현에 거주하던 송신도의 정보가 들려온 것이다. 그 정보를 전한 전화의 주인은, 자신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5. 감쪽같이 없어진 목소리, 들려온 목소리

---

[12] 요시미 요시아키, 『종군위안부(従軍慰安婦)』, 이와나미쇼텐, 1995 년. ( ) 안은 필자.

[13] ‘위안부 110 번’을 주최한 것은, 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 종군위안부문제 우리여성네트워크, 일본의전후책임을분명히하는모임, 한국민주여성회의 네 단체였다.

'위안부 110번'으로 들려온 정보에 기반하여 가와타 후미코가 처음으로 송신도를 찾아갔을 때, 송신도는 김학순의 재판에 대해서 열심히 물어왔다고 한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김학순을 보고 "나랑 같다."라고 말했다. 그 후에도 송신도는, '위안부'가 된 경험을 듣기 위해 방문하는 가와타에게 '김학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었다. 어쩌면 송신도도 재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싶었던 가와타는, 몇 번이고 송신도에게 재판에 대한 의향을 물었지만 확실히 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변호사 한 명과 재일조선인 여성 한 명이 가와타와 함께 송신도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변호사가 동행한 것은 재판에 대해 설명하여 송신도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고, 재일조선인 여성은 종잡을 수 없는 송신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였다. 이 때의 이 재일조선인 여성으로서, 필자가 송신도의 집에 동행하였다. 1992년 8월의 일이다. 결국, 이때도 송신도의 의중을 헤아릴 수는 없었다. 그 후, 송신도를 도쿄에 불러 '위안부 110번' 실행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듣거나, 전화로 대화하며 송신도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해인 1993년 4월 제소에 이르게 된다. 제소 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송신도에게 있어 '김학순'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 송신도가 '김학순'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 거기에는 존경과 동경, 연민 등이 섞여있는 독특한 감정이 표정과 어감에 드러났다.

한 가지 더, 송신도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것이 있다. 그것은 "('위안부'가 된 것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럼, '위안부 110번'에 송신도의 정보를 들려준 익명의 전화의 주인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는 송신도의 '비밀'을 어떻게 안 것일까.

그 후, 우리들이 알아낸 전화의 주인은, 센다이(仙台)의 재일거류민단(민단)의 관계자였다. 전후에 일본 군인에게 끌려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왔으나,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그 군인에게 버려진 송신도는, 미야기현에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 남성과 알게 되어 함께 생활했다. 그리고 물장사나 도로공사현장, 생선 가공공장 등에서 일했으나, 남성의 투병생활이 길어지면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기초생활보호수급을 신청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을 위한 엄격한 심사 과정에서 속을 태운 송신도는 "나는 중국까지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싸우고 온 여자라고!"라고 외치며,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렸다.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의 소동이었는데, 송신도의 화를 억누를 수가 없어, 관공서는 민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달려온 민단 관계자가 송신도가 뱉어낸 말에서 사정을 짐작했던 것이었다.

"나는 중국까지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싸우고 온 여자라고!"라는 외침은, 그 때 처음으로 부르짖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난한 조선인 여성에게 모멸적인 말이나 시

선이 던져질 때마다, 송신도는 너무나 분했던 나머지, 이 대사를 마구 소리쳤다.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경험은 결국,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운동이 세워졌을 때 가까스로 송신도의 '외침'이 '목소리'가 되어 전해진 것이다.

송신도 뿐이 아니다. 아시아 각지에서, 피해 여성들은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허우챠오롄(侯巧蓮)은 중국 산시성(山西省)의 산 속에서 "가끔 발작을 일으키며 난동을 피워, 아이들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알몸으로 집을 뛰쳐나가 기이한 소리를 내면서 달리고" 있었고, 문필기는 한국에서 매일같이 가위에 눌려 "미오사키!"라고 군인의 이름 같은 것을 외치면서 자고 있던 동생의 목을 졸랐다. 여성들이 발산하는 고통의 표현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잡음'으로 처리되고 '기행'이라고 단정지어졌다. 그것을 '목소리'로서 '받아들여줄 곳'이 생길 때까지, 피해 여성들은 아시아 각지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마구 소리지르고, 울부짖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김학순도 같다. 재한피폭자(在韓被爆者)인 이맹희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정대협과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었다. 피해 여성들은 결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닌 것이다. 그것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까지, 그 '목소리'가 감쪽같이 지워져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1991년 12월 9일, 도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김학순의 증언 집회에서, "어째서 전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야기하기로 결심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그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사회에 제기했던 초기에 너무나도 많이 받은 질문이었다. 어째서, 50년이나 지난 지금, 이냐고. 당시의 일본 사회는 그녀들이 그 50년동안, 사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상상력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들의 목소리가 묵살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책임 의식 없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다. 운동을 위해 일어선 여성들조차, 한국의 운동으로부터의 물음이 있었기에 비로소, 우리들이 놓쳐 온 일본의 과거의 죄악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필요성에 눈 뜨게 된 것이다.

8월 14일은, 아직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 한국 여성들의 운동과, 한 명의 용기 있는 피해자의 만남이 낳은 기적과 같은 순간이었던 것이다. 어느 한 쪽이라도 없었다면, 그 순간이 태어나는 일은 없었다.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집중하여 혼자 부지런히 조사를 계속한 윤정옥의 강한 마음, 그 마음을 한국 여성 운동에 연결한 이효재의 리더십, 윤정옥의 조사 활동에 함께하며 피해 여성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한 김혜원, 김신실, 김학순의 실명 증

언을 처음 받아들인 윤영애, 정대협 운동의 골격을 떠받친 이미경, 지은희, 연구 활동을 떠받친 정진성, 국제 활동을 전개한 신혜수, 그리고 김학순 보도를 보고 유학 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가 생애를 이 운동에 바친 윤 미향..... 김학순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보다 널리 사회에 알리려는 여성들과 만나, 그 큰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김학순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녀의 용기를 지지해 준 수많은 여성들의 존재를 마음에 새기고 싶다.

김학순이 전하고 싶었던 것-최초로 보도한 기자로부터의 보고

우에무라 다카시 | 일본 '주간금요일' 발행인 겸 사장, 前 아사히신문 기자

1990년 여름, 한 명의 전 위안부의 증언도 들을 수 없었다

1990년,『아사히신문』오사카 본사의 기자였던 나는 여름의 평화 기획 기사로 전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을 소개하고 싶었다. 당시 나는 재일한국・조선인문제를 담당하는 '민족담당'이었다. 재일한국・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는 오사카시 이쿠노구(生野区)에 아파트를 빌려 살면서, 재일한국・조선인 인권문제와 재일한국인 정치범 문제 등을 취재하고 있었다.『아사히』의 어학 유학생으로서 1987년 여름부터 1년간, 서울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유학했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해 취재할 수도 있게 되었고, 종종 한국으로 출장도 다녀왔다.

1990년 6월,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모토오카 쇼지 의원(사회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노동성 직업안정국장은 "민간 업자가 군과 함께 데리고 다니고 있다."라고 답변해 한국 내에서 반발이 높아졌다. 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다. 친구인 한국인 여성 언론인에게 "전 위안부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을까"라고 상담했다. 그녀는 "내가 전에 취재했던 여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 여성을 만나면 취재가 가능할 것이었기에 한국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이미 사망해 있었다. 어떤 단서도 없게 되어버렸다. 그 해 1월 한국의『한겨레』신문에「정신대 '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를 연재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윤정옥 씨에게도 이야기를 들었다. 그 외 다른 관계자와도 만나, 여러 정보를 토대로 각지를 돌아다녔지만 증언자는 한 명도 없었다.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만주 할머니'라고 불리는 여성을 만났는데, 나에게는 "만주 같은 데는 가본 적도 없다."라며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2주간의 취재는 헛수고로 끝났다. 취재 협력자 중의 한 명은 내게, "전 위안부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 그것은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니까."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오사카에서 고깃집을 하는 하는 재일 여성을 만났다. 한국에서 '정신대(위안부)에 있었던 것 같다'는 정보를 듣고, 그 가게를 찾은 것이다. 몇 차례 다녀왔지만 증언은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설령 그랬다고 해도 말할 리가 없지.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라고 했다.

결국 1990년의 여름에는 위안부 한 명의 증언도 듣지 못했다. 나는 당시 32세로, 아무리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해도 과거에 한반도를 식민지로 수탈했던 일본의 한 애송이인데, 피해자라고 해도 그런 괴로운 이야기를 일본인, 그것도 남성에게 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여름의 2주간의 취재 기간 중, '한국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유족회)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다. 여성 이사(당시)인 양순임의 딸이었다. 어머니는 반대했지만 우리는 결혼했다.

'김학순 씨 증언 시작'이라는 특종

이듬해인 1991년 여름.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아사히』의 서울 지국에 국제전화를 걸었더니, 당시 지국장이었던 오다가와 고(小田川興) 씨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서울에 있는 전 조선인 종군 위안부가 증언을 시작했다고 해. 우에무라 군, 취재하러 오면 어때." 오다가와 씨는 내가 전년도 여름에 2주간 한국에서 취재를 하고 전 위안부의 증언을 전혀 얻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특종으로서 이 정보를 준 것이었다. 오다가와 씨의 뉴스 소스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공동대표 윤정옥 씨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윤 씨와는 그 전년도 취재로 이미 면식이 있었다. 오사카에서 전화로 윤 씨에게 취재를 요청하니, 그는 그 전 위안부에 대해 "취재에 응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이름도 가르쳐줄 수 없다. 하지만 청취 테이프를 들려줄 수는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줬다. 본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 위안부가 서울에 생존해 있고 '정대협'의 청취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큰 뉴스라고 생각했다. 곧바로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향했다.

1991년 8월 9일, 윤 씨의 서울 자택을 찾았다. 윤 씨는 그 여성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정신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못 참겠다'며 실명 증언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일, 정대협 사무실에서 테이프를 들려주고 주요 청취 조사 내용도 가르쳐 주셨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어떻게든 잊고 지내고 싶지만 잊을 수 없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다시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의 털이 쭈뼛 선다."라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여성은 중국 동북부에서 태어나 17살 때 속아서 위안부가 되었다고 한다. 중국 위안소로 끌려가 매일 서너 명씩 상대해야 했다고 한다. 몇 달 동안 강제로 일을 했지만 도망칠 수 있었고, 전후(戰後)가 되어서야 서울로 돌아왔다. 결혼은 했지만, 남편과 아이도 죽어 기초생활보호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었다.

나는 취재를 마치고 서둘러 서울 지국으로 가 원고를 완성했다. 다음 날 8월 11일자 오사카 본사판 사회면 1면에 내 기사가 나왔다**=사진 ①=**. 제목은「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 전 조선인 종군 위안부 / 전후 반세기 / 무거운 입을 열다 / 한국 단체 청취」로, 기사 전문(前文)에는 "여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일본 군인을 대상으로 매춘을 강제당한 '조선인 위안부' 중 한 명이 서울 시내에 생존해 있다."라고 썼다. 본문에서는, 윤 씨 등에게 들은 대로 "17살 때 속아 위안부가 되었다"라고 썼다. 당시 한국에서는 위안부를 '정신대'나 '여자 정신대'라고 불렀으며, 한국과 일본의 매체들도 이 말을 '위안부'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이 기사가 이후 '날조'라며 비판받고, 강제연행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세계에 퍼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공격당하리라고는 그 당시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나의 기사는 대폭 편집되었지만, 그 다음 날인 12일자로 도쿄 본사판 제2사회면에도 게재되었다. 그러나 전 위안부의 증언 시작이라는 특종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는 어느 곳도 후속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 여성이 '김학순'이라는 실명을 밝히고 14일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은 오사카에서 알았다. 서울 지국으로부터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5일 한국 각 신문의 조간에는 김학순 씨의 증언 기사가 실렸다. '기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오사카로 돌아온 것을 후회했다. <그대로 서울에 있었더라면, 속보를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분했다.

당시 한국의 신문 보도 제목은 이러했다.「정신대 치욕 꼭 배상받겠다」(『동아일보』),「나는 정신대」(『중앙일보』),「정신대의 산증인으로 일죄상 밝히겠다」(『한국일보』).[1]

윤정옥 씨에게 전화했다. 윤 씨는 이런 내용의 말을 했다. "14일에 2차 인터뷰를 한 결과, 김 씨는 '일본 정부가 정신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분노를 느낀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표하겠다고 했다. 그동안은 비공개로 청취를 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한국 취재진에게 공개하게 되었다".

나는 오사카 본사판의 15일자 석간에 김학순 씨의 실명 증언에 대한 속보(續報) 기사를 썼다. 그러나 일본 언론의 특파원들은 김학순 씨의 등장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주요 신문인『요미우리신문』이나『마이니치신문』에는 이 기자회견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다. 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홋카이도신문』의 서울 지국장이었던 기타 요시노리(喜多義憲) 씨가 14일 김학순 씨를 단독 인터뷰했었다. 기타 씨도 나의 기사의 전문(前文)과 마찬가지로 정신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와 같이 썼다.

---

[1] [역주] 당시 기사의 한국어 원문 제목으로 수정함.

"전쟁 이전, 여자 정신대라는 미명 하에 종군 위안부로서 전쟁터에서 일본군 장병들에게 능욕을 당한 한국인 여성이 14일, (중략) 홋카이도 신문의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이 김학순 씨의 기자 회견으로 용기를 받은 각지의 전 위안부들이 연달아 피해 증언을 시작했다. 김학순 씨의 용기 있는 증언은, 위안부 문제가 전시 성폭력으로서 세계에 인지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나 자신은 8월 14일 김학순 씨의 기자회견에 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영화감독 김동원 씨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끝나지 않는 전쟁』(2008년)의 일본어 자막판에 이 기자회견을 전하는 KBS의 뉴스 영상이 소개된 것이다. 첫 화면에는 "나는 정신대였다"라는 제목이 쓰였고, 남성 앵커가 이렇게 설명했다. "50년 전 일본군에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한 할머니가 그동안의 수치심을 딛고 일제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앞에 두고 김학순 씨가 기자회견하는 장면이 나왔다. 김학순 씨는 이렇게 호소했다. "16살 조금 넘은 것을 끌고 가서 강제로 그 울어도 안 당할려고 쫓아나오면 붙잡고 안 놔줘요. 내가 눈감기 전에 말이라도 분풀이하고 싶어요". 김학순 씨의 분노가, 강하게 전해진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네덜란드인 피해자 얀 루프 오헤른 씨도 등장한다. 오헤른 씨는 김학순 씨의 증언에 용기를 얻어 자신도 피해 증언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50년간 침묵하던 우리 '위안부' 여성이 동시에, 돌연, 입을 연 것입니다". 오헤른 씨는 그걸 "뻥[2]"이라고 표현했다. 김학순 공개 증언의 임팩트가 얼마나 강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증언이다. (주: 이『끝나지 않은 전쟁』의 일본어 자막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에서 상영용 DVD를 대여하고 있다)

김학순 씨가 호소했던 것

김학순 씨는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의 원고가 되기로 했다. 제소(1991년 12월 6일)를 앞두고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에 입회해, 1991년 11월 25일 일본 변호인단의 청취 조사를 받았다. 동석을 허가 받은 나는 그 자초지종을 보고, 김학순 씨의 이야기를 테이프에 녹음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5일자 오사카 본사판 조간 시리즈「여자들의 태평양 전쟁」에서「돌아오지 않는 청춘, 한의 반생(かえらぬ青春　恨の半生)」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사진②=**. 전문(前文)에는「증언 테이프를 재현하다」라고 썼다.

김 씨는 청취 조사의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돈을 받아도 버려진 이 몸은 돌

[2] [역주] 폭발음

이킬 수 없어요.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석을 세워주길 바라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김 씨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이다.

김학순 씨 등의 재판을 받은 일본 정부는 전 위안부들에게 청취 조사 등을 하였으며,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 장관이 정부 담화('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군의 관여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나아가 역사교육 등을 통해 기억에 남기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의 기술이 게재되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아베 신조(후일 총리) 씨를 비롯한 역사수정(개찬) 주의자들이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그 후 많은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이 사라졌다. 아베는 '고노 담화'의 재검토도 주장했고, 사실상 '고노 담화'는 껍데기만 남은 형국이다.

2014년, 우에무라 때리기가 시작되었다

김학순 씨 증언 시작 기사로부터 23년 후인 2014년, 나는 심한 때리기(bashing)를 당했다. 일본의 보수적인 잡지 <주간문춘>의 2월 6일호가 「"위안부 날조" 아사히 신문 기자가 부잣집 딸들이 다니는 여대 교수로」라는 제목으로, 나의 1991년 8월 11일 기사를 날조로 몰아붙인 것이다. 도쿄기독교대학교 교수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씨의 담화가 불씨를 제공했다. 니시오카는 이렇게 코멘트하고 있었다. "우에무라 기자의 기사에는 "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끌려가"라고 쓰여있습니다만, 정신대란 군수 공장 같은 곳에 근로를 동원하는 조직으로 위안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게다가 이 때 실명 증언을 한 여성은 부모에게 몸을 팔려 위안부가 됐다고 소장에 썼으며, 한국 신문의 취재에도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에무라는 그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듯이 기사를 썼으니, 날조기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1991년 8월 11일 기사에서는 "17살 때 속아 위안부가 된"이라고 썼지 "강제연행"이라고는 쓰지 않았지만, 니시오카는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니시오카는 1992년 4월호의 「문예춘추」에서는 나의 이 기사에 대해서, "중대한 사실오인(誤認)"이라고 했는데, 1998년경부터 "날조"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런 니시오카의 코멘트를 사용한 『주간문춘』의 기사가, 나만을 '표적'으로 한 공격인 것은 분명했다. 심지어 이 기사는 '고노 담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주간문춘』이 발행된 직후부터, 나를 향한 격렬한 때리기가 시작되었다. 전임 교

수 취임이 결정된 고베의 여자대학에 '교수 취임'에 항의하는 메일과 팩스, 전화가 쇄도했다. 결국, 고용 계약은 취소되었다. 내가 시간강사를 했던 삿포로의 호쿠세이가쿠엔대학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었다.

보수단체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이사장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씨도 우에무라 때리기에 나섰다. 사쿠라이는 몇 가지 글로 나를 공격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WAC이 발행하는 잡지 「WiLL」의 2014년 4월호 기사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일본과 일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들의 선전은, 그러나, 일본인이 쓴 「종군위안부」 날조 기사가 그 애초의 출발점이었다. 일본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듯한, 일본인이 쓴 그 날조 기사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렇게 쓴 뒤 나의 8월 11일 기사를 비판하고, (김학순 씨가 일본 정부를 고소한 재판의) "소장에는 14세 때 계부에 의해 40엔에 팔려간 것, 3년 후, 17세 때 다시 계부에 의해 베이즈(北支)[3]의 티에삐쩐(鉄壁鎮)[4]으로 끌려가 위안부가 된 경위 등이 적혀 있다. 우에무라 씨는 그녀가 계부에 의해서 인신매매되었다는 중요한 점을 보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자 정신대'와 연관 지어 보도했다."라고 써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언설이 인터넷 등지에도 퍼졌다. 『아사히』는 2014년 8월 5, 6일 "위안부 보도"검증 특집에서 내 기사의 '날조'를 부정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연행하고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등의 증언을 한 고(故)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씨에 대한 기사 16개(최종적으로는 18개)를 취소한 것으로 인해 『아사히』에 대한 때리기가 심해졌다. 나는 요시다 씨에 관한 기사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때리기는 더욱 강해졌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딸도 '표적'으로 찍혀 인터넷에 얼굴 사진과 이름이 노출되었다. 한 블로그에는 "이 녀석의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고생을 했는지. (중략) 자살할 때까지 몰고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심지어 '딸을 죽이겠다'는 협박편지**=사진③=**까지 왔다. 딸이 등하교를 할 때는 순찰차가 경비를 서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나는 2015년 초에 니시오카와 사쿠라이를 명예훼손으로 각각 도쿄, 삿포로의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제소 후인 2015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위안부 문제의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되었다. 심포지엄 종료 다음날인 8월 15일, 한국 충청남도 천안시의 국립묘지 '망향의 동산'에 잠든 김학순 씨의 무덤을 방문했다=사진④=. 나는 들고 온 노트북을 묘비 옆에 놓고 1991

[3] [역주] 과거 중국 북부 지방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의 화베이(華北)에 준함.
[4] [역주] '쩐(鎮)'이란, '마을'에 준하는 명칭이다

년 8월 14일 김학순 씨의 실명 기자회견 뉴스를 재생했다. 다큐멘터리 영화『끝나지 않는 전쟁』에 소개되었던 영상이다. 김학순 씨의 목소리가 묘지로 흘러나왔다. 나는 동행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학순 씨는, 일본에서 '거짓말쟁이', '매춘부'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어.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김학순 씨에게 마음 속으로 사과했다. 김학순 씨가 돌아가신 1997년 12월 16일, 나는 서울 특파원이었는데, 사망 기사를 담담하게 썼을 뿐, 그 후 위안부 문제를 열심히 보도하지는 않았다. 김학순 씨가 증언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처음 썼음에도 불구하고, 장모가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가족회의 간부라는 이유로 어처구니없는 중상 비방이 이어져 위안부 문제에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심한 공격을 받은 것을 계기로, 그때까지의 자신을 반성하고 제대로 위안부 문제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나의 재판은 김학순 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투쟁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했다. 김학순 씨가 자신의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했던 진술서(1994년 6월 6일자)에 이런 구절이 있다. "저는 일본군에 의해 연행되어 '위안부'가 되어 인생 그 자체를 빼앗긴 것입니다." 나는 이 원통한 심정을 종이에 검은 매직으로 적고 책상 앞에 붙여 두었었다. 그리고 때때로 양복 주머니에 넣고 법정에 임했다.

부당판결과 아베 신조의 개입

니시오카와 사쿠라이, 두 피고 모두 김학순 씨를 취재한 적은 없었다. 본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팔려나가 위안부가 된 것이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은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두 피고는, 그것을 내가 강제연행이라고 썼기 때문에 오해가 세계로 퍼졌다, 일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입장이다. 그에 더해 니시오카는 김학순 씨가 평양 시절에 기생학교를 다녔던 사실을 내가 기사에 쓰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날조'라는 주장까지 했다. (주: 일본 변호인단의 청취가 있었을 때, 김학순 씨는 기생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강제연행이든 인신매매든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일본 군인의 성상대를 하게 된 피해자인데, 이들은 피해자들이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라면 일본군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니시오카의『주간문춘』담화가 그 상징이다. 니시오카는 "실명 증언에 나선 여성은 부모에게 팔려나가 위안부가 되었다고 소장에 썼고, 한국의 신문 취재에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라고 썼다. 그러나 도쿄지법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장에도, 한국 신문 기사에도 '인신매매되었'다는 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 기사를 '날조'라고 비판하는 전제 자체가 거짓이었던 것이다. 또한 니시오카는 저서『알기 쉬운 위안부 문제』에서 우에무라 비판의 근거로『한겨레』를 인용했지만, 원래 기사에는 없는 부분인 "나는 40엔에

팔리고, 기생 수업을 몇 년 정도 하고, 그 후 일본의 군대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를 자신이 가필한 뒤, 그 전체를『한겨레』의 기사로 소개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김학순 씨의 '인신매매'를 강조하기 위한 조작인 것이다.

한편, 사쿠라이도 니시오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①김학순 씨가 인신매매로 위안부가 되었다 ②위안부와 '여자 정신대'는 아무 관련이 없다——이러한 전제 하에 내 기사를 '날조'라고 중상 비방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학순 씨의 소장에는 "계부에 의해서 40엔에 팔려갔다."라거나 "다시 계부에 의해서...위안부가 되었다."라는 구절은 없었다. 김 씨가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단정지을 만한 문장도 없다. 사쿠라이는 증인신문에서도 그 잘못을 인정했고, 결국 정정했다.

니시오카와 사쿠라이, 두 피고 모두 나를 비판하는 근거가 허술했던 것이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나를 취재하지도 않은 채 '날조'로 단정지었다. 그러나 도쿄, 삿포로 재판에서는 '진실상당성[5]'의 벽을 크게 낮춰 두 피고인을 면책했다. 게다가 도쿄의 재판에서는 일부 니시오카의 언설의 '진실성'까지 인정했다. 비정상적인 판결이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는 내가 이겼을 것이라 생각한다. 패소의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법원의 우경화나, 법원이 아베 정권(당시)의 의중을 헤아린 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도쿄지방법원 판결에서 '종군위안부'에 대한 설명으로, "공창 제도 하에, 전쟁터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던 여성"이라고 써 있었던 것은 기가 막힐 일이었다. 위안부가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다. 재판관 자신이 넷우익화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니시오카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논단」(2016년 5월 23일자)에, "나는 1991년 이래,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쟁에 참여해 왔다. 아베 신조 현 총리대신과 사쿠라이 요시코 본 연구소 이사장 등도 오랜 동지다."라고 썼다. 사쿠라이는 아베의 '선전꾼[광고탑]' 같은 존재로, 그가 추진하는 헌법 개악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다. 나는 두 사람과 싸웠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아베라는 존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일본 사회에 퍼져 있는 역사수정(개찬)주의의 만연도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재판관의 오판이 허용된 것이 아닌가 싶다. 세 번째로,『아사히신문』자체가 내 기사가 '날조'가 아니라고 발표해 두고서는,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취소했던 문제 등으로 심하게 비난을 받고 위축되어, 나와 함께 싸우지 못했던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사쿠라이와의 소송에서 나의 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직후, 이런 일이 있었다. 아

[5] [역주]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법리. 한국에서는「오신(誤信)의 상당성」이라고 한다.

베 신조 전 총리가 2020년 11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에무라 기자와 아사히신문의 날조가 사실로서 확정됐다는 것이지요."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 내 이름을 거명하며 '날조 확정'을 널리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상한 집념과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쿠라이와의 소송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날조가 사실로서 확정됐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였다. 나는 대리인을 통해 아베에게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아베는 나에 대한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아베 총리가 사쿠라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쿄에서도 삿포로에서도 100명 이상의 변호단이 조직되어 6년간의 우에무라 재판에서 싸웠다. 그로 인해 우리 가족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에 더해 다수의 시민이나 연구자들도 재판 지원에 나서 주었다. 신문노련[6], 일본저널리스트회의(JCJ) 등의 조직적인 지원, 『아사히』의 옛 동료들의 헌신적 응원도 컸다. 김학순 씨를 취재하고 나와 같은 종류의 기사를 썼던 『홋카이도 신문』의 기타(喜多)씨는 삿포로 소송에서 증인으로 섰다. 그는 사쿠라이의 우에무라 비판에 관해 '트집잡기'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증언했다. "한 쪽은 날조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날조기자라고 비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문책되고 있지 않는 듯한, 그런 기분인데, 역시 그러한 상황을 보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인간이고, 언론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김학순 씨를 취재한 한국의 『한겨레』, 『경향신문』, 『동아일보』의 여성 기자 세 명도, 내 기사가 '날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내 주었다. 그들 언론인들의 목소리는, 판결에서는 완전히 묵살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언론인들로부터의 '승소 판결'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9월 말, 일본의 진보 잡지 『주간금요일』의 발행인 겸 사장으로 초청받아 일본 언론계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였다. 일본 언론이 위축되고 우에무라 때리기를 자세히 전하지 않는 시기에도, 『주간금요일』은 우에무라 때리기를 과감히 보도했다. 그 기사만으로도 한 권의 「별쇄판」(2016년, 우에무라재판을지원하는시민모임 작성)=사진⑤=이 만들어졌을 정도다. 이 잡지의 저널리즘 정신에 경의를 갖고 있기에, 경영난에 직면해있는 이 잡지의 책임자를 맡았다.

우에무라 때리기가 한창이던 중, 나는 한국 가톨릭대학교에 초빙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초빙교수로 일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왕래가 어려워져 교수직을 계속하는 것을 단념했지만, 한국에서의 5년간은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김학순 씨의 증언 시작을 특종 보도한 것이나, 그 후의 우에무라 때리기에 대한 투쟁을 평가받아 '김영

[6] [역주]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의 약칭

근 민족교육상'(2018년)과 '리영희상'(2019년)을 수상했다. 한국의 언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보도기관에서 부당 해고된 전『동아일보』기자 이부영 씨나『한겨레』창간 부사장 임재경 씨 등 '해직 기자'분들과 깊이 교류할 수도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나의 재판지원조직을 결성하는 등, 우에무라 때리기는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기자 교류를 낳게 되었다.

우에무라 때리기에 휘말린 딸

내 딸도 우에무라 때리기에 휘말려 인터넷에서 여러 중상 비방을 당했다. 딸을 걱정하는 변호사들이 딸의 변호인단을 조직하여, 트위터에 딸의 이름과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을 찾아내 제소했다. 그 남성은 이렇게 썼다.

"아사히 신문 종군 위안부 날조의 우에무라 다카시의 딸이 고등학생 평화 대사로 뽑혔다. 사기꾼 외할머니, 반일 한국인 어머니, 반일 날조 공작원 아버지가 키운 초(超) 반일 명문가. 장차 반드시 일본의 원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2016년 8월에 도쿄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고, 재판장은 글을 쓴 남성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170만 엔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판결 후,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딸의 코멘트를 대독했다. 딸은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하고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게 일어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판결이 이러한 부당한 공격을 멈추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당초 재판장은 화해를 권유했지만 딸은 이를 거부하고 판결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의연한 태도로 일관한 딸이 자랑스럽다.

증언으로부터 30년, 김학순 씨가 던진 '물음'

내가 김학순 씨의 등장을 보도한 지 30년, 다시금, 김학순 씨가 호소한 기사를 다시 읽어 보고서는 생각한다. 김학순 씨가 재판에 앞서 일본 변호인단에게 호소한 세 가지 바람 ①일본 정부의 사과 ②젊은 세대로의 기억 계승 ③비석 건립——이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일본 정부는 전 위안부 피해자의 마음에 닿는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고노 담화'를 통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의 기술이 실리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아베 등의 운동에 의해 이는 대부분 사라졌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서술이 있는 '마나비샤(学び舎)'의「함께 사는 인간의 역사」을 둘러싸고는, 2016년에 이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효고현의 나다 중학교 등에 항의 엽서가 대량으로 발송되는 등의 사건도 일어났다. 위안부 문제의 기억을 전하는 행위에는 다양한 방해가 있다. 비석을 세운다는 것조차 일본 본토 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에 있는 소녀상의 복제품이 일본 국내에 전시되는 것만으로도 여러 괴롭힘과 방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기억의 계승에 대한 공격을 일본 정부가 저지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다.

30년 전 김학순 씨의 증언을 전한 나는, 일본인으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부끄럽다. 그리고 김학순 씨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하고 싶다.

김학순 씨의 공개증언 30주년인 올해, 전 RKB마이니치방송의 기자 출신인 니시지마 신지(西嶋真司) 씨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표적』=사진⑥=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영화는「우에무라 때리기」를 주제로 하여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흐름을 묘사하고 있다. 니시지마 씨는 김학순 씨가 증언을 한 1991년 여름 당시 같은 방송국의 서울지국장이었다. 김학순 씨의 재판 전, 취재를 하여 뉴스 형식으로 일본에서 전국 방송을 한 경험도 있다. 니시지마 씨는 나만 우파의 '표적'이 된 것에 의문을 품고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당시 재직하던 RKB마이니치방송의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려 했으나 기획이 통과되지 않자 퇴사를 하고, 직접 사무실을 차려 제작에 착수했다. 김학순 씨를 취재한『홋카이도 신문』의 기타 씨나, 전 NHK 디렉터였던 이케다 에리코(池田恵理子) 씨 (액티브 뮤지엄「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의 현 명예관장)의 인터뷰도 나오고,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당시) 담화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

이 영화의 또 하나의 주제는 김학순 씨=사진 ⑦=등 전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기도 하다. 니시지마 씨가 직접 촬영한 김학순 씨의 영상은 저작권을 가진 민간 방송국이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때문에 한국 MBC의「PD수첩」이 촬영한 영상을 사용했다. 그 속에서 김학순 씨는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나눔의 집에 사는 전 위안부 이옥선 씨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도 나온다. 나와 동료 언론인들이 2017년에 설립한 '저널리스트를 지망하는 한일학생포럼'의 첫 기획으로 나눔의 집을 방문한 한일 학생들에게, 이 씨가 피해 체험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다.

니시지마 감독은『주간 금요일』의 2021년 7월 23일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에서는 언론이 위안부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게 된 탓도 있지만, '위안부'는 매춘부니까 일본을 고소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김[학순] 씨 등의 영상을 보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학순 씨나 이옥선 씨의 인터뷰 영상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일이 없을 것이기에 귀중한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나도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DVD를 들고 다니며, 각지에서 상영 활동을 하고, 김학순 씨 등 전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하고 싶었던 것을 계승하는 작업을 해 나가고 싶다.

참고문헌

서적

『진실』(2016년 2월 26일, 우에무라 다카시, 이와나미 서점)(『真実』(2016年2月26日、植村隆、岩波書店))

『나는 날조기자가 아니다』(2016년 10월 9일, 글쓴이 = 우에무라 다카시, 옮긴이 = 길윤형, 푸른역사)

신문, 잡지

「아사히신문」오사카본사판 1991년 8월 11일자 기사(「朝日新聞」大阪本社版1991年8月11日付記事)

「아사히신문」오사카본사판 1991년 12월 25일자 기사 (「朝日新聞」大阪本社版1991年12月25日付記事)

『마일』1991년 11월호(『MILE』1991年11月号)

「히라 사장이 간다」131「김학순 증언으로부터 30년 그 호소를 실현시켜라!」(우에무라 다카시, 『주간금요일』2021년 7월 30일호, 주식회사 금요일)(「ヒラ社長が行く」131「金学順証言から30年　その訴えを実現せよ！」(植村隆、『週刊金曜日』2021年7月30日号、(株)金曜日))

「영화『표적』의 니시지마 신지 감독에게 묻다 / 「따님의 이야기는 어떻게든 듣고 싶었다」」(문성희, 『주간금요일』2021년 7월 23일호, 주식회사 금요일)(「映画『標的』の西嶋真司監督に聞く /「娘さんの話はどうしても聞きたかった」」(文聖姫、『週刊金曜日』2021年7月23日号、(株)金曜日))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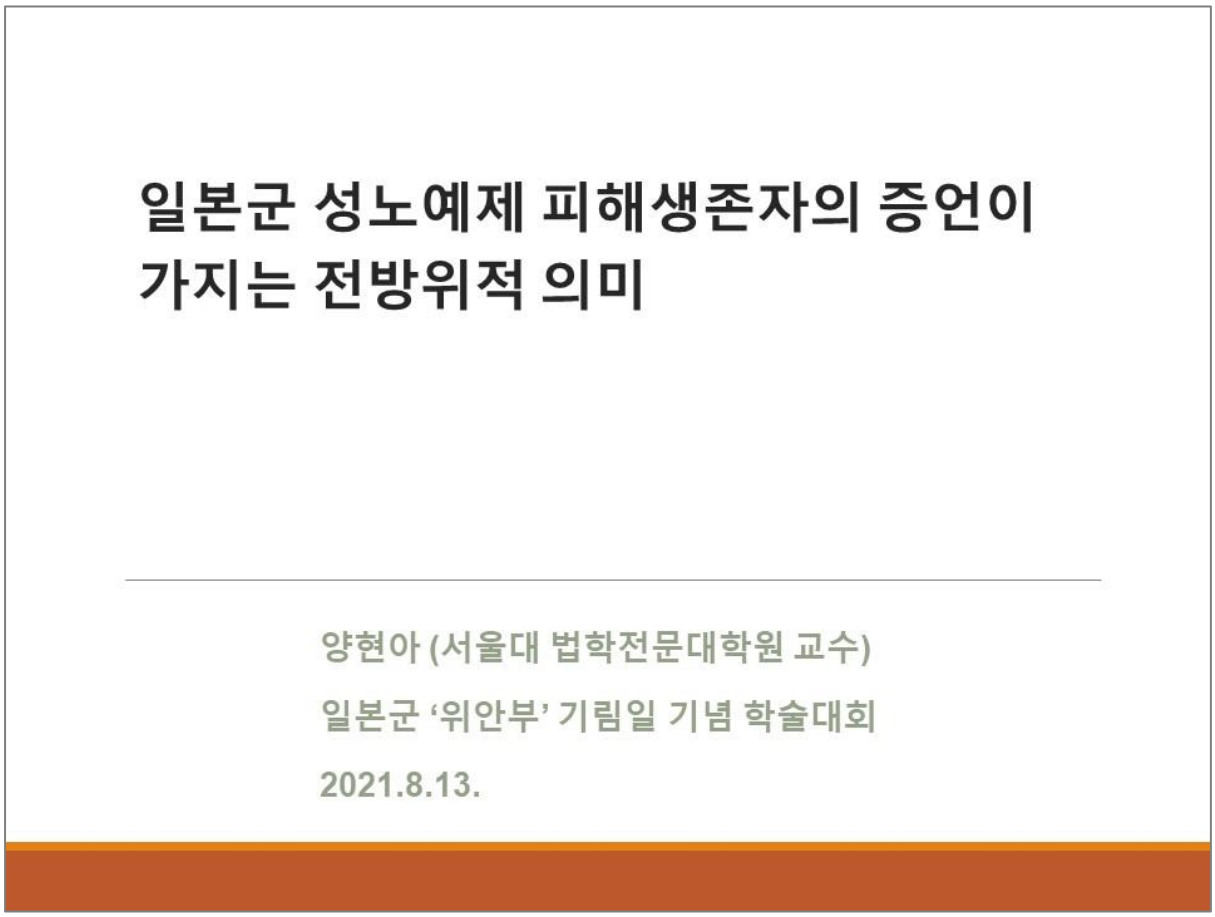
다큐멘터리 영화「표적」(2021년, 감독: 니시지마 신지, 배급:그룹 현대) (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標的」(２０２１年、監督 = 西嶋真司、配給 = グループ現代))

다큐멘터리 영화 「끝나지 않는 전쟁」일본어 자막판(2008년, 감독: 김동원) (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終わらない戦争」日本字幕版(２００８年、監督 = 金東元))

세션 2. 김학순 증언의 파장(波長)과 공명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생존자 증언이 가지는 전방위적인 의미

양현아 I 서울대학교 교수



목 차

I. 한국의 피해자 증언연구

II. 그 의의: 진실과 정의, 회복의 기초

III. 증언연구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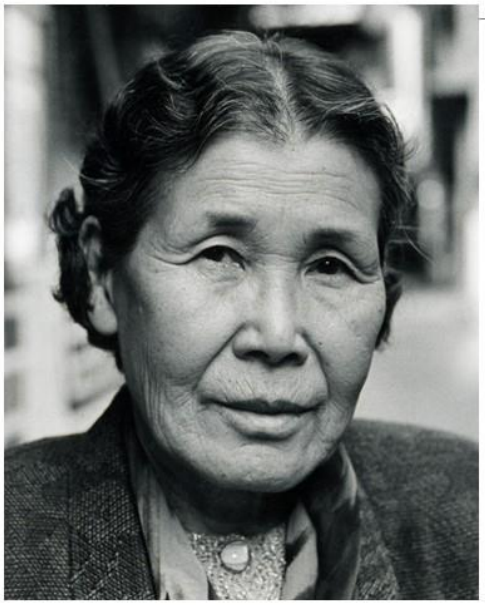
IV. 맺음말

I. 한국의 피해자 증언연구

* 1990년대 초 민주화와 여성운동이라는 증언 청취의 맥락 형성

* 한국에선 최초로 김학순의 공개증언(1991.8.14)을 하자 다른 생존자들도 줄지어 자신을 드러냄 (참고로, 오키나와의 배봉기 피해생존자는 보다 먼저 증언하였음)

故 김학순(1924-1997)의 한국 소재 피해자의 최초 증언 (1991)



1991년 8월 14일 한국에서는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김학순의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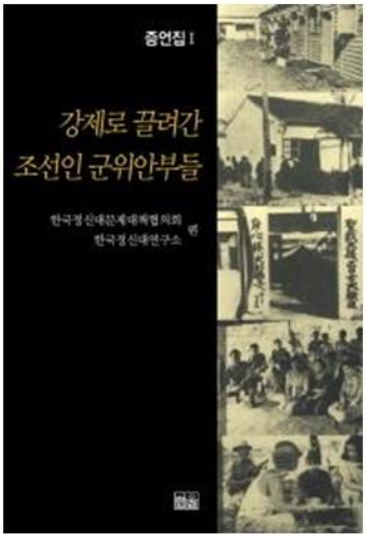
**"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 순간을 내 평생 기다려왔다."**

힘 없고 이름 없었던 지역의 기층민에 의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깊은 침묵을 깨졌던 계기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출간

* 제1권 (1993):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신대연구회 출간(19명의 증언)
* 제2권 (1997): 정대협 & 한국정신대연구회(15명)
* 제3권 (1999): 한국정신대연구소 & 정대협 (14명)
* 제4권 (2001): 정대협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9명)
* 제5권 (2001): 정대협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한국정신대연구소 (10명)
* 제6권 (2004): 정대협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12명)
* 중국으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증언집 1 (1995): 한국정신대연구소 & 정대협 (10명)
* 중국으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증언집 2 (2003): 한국정신대 연구소 (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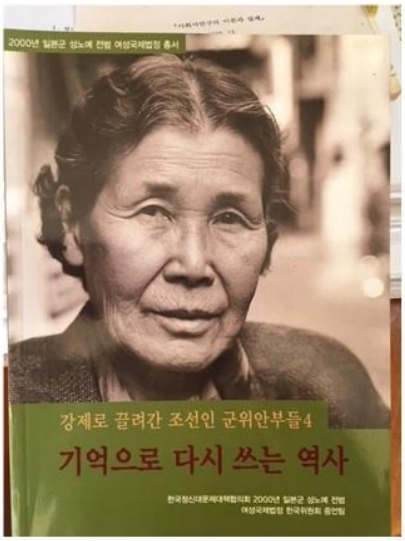
증언 1집(1993)과 증언 2집(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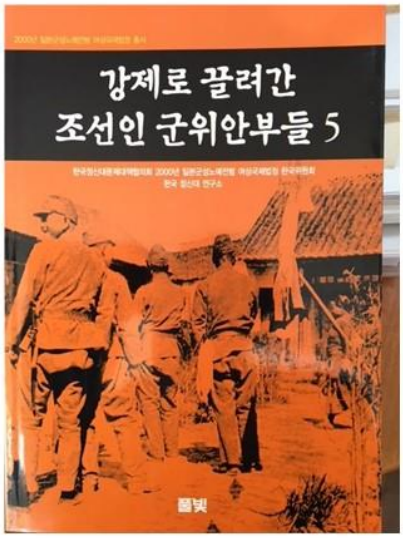


증언 3집(1999)과 증언 4집(2001)





증언 5집(2001)과 증언 6집(2004)





* 위 이상 증언집 시리즈에는 100여명의 피해생존자 증언이 수록됨

* 이외에도 지역 단체들에 의해 출간된 증언집을 합하면 17권 (박정애, 2019). 위 증언집 시리즈에 수록된 증언들과의 중복성은 미상

* 한국의 여타 공권력 피해자들의 증언연구와 비교할 때 가장 지속적이며 대규모, 복수면접, 심층면접, 일관된 증언들이 증언집으로 출간됨

* 한국의 공권력 피해자, 여성, 기층민중 등 구술사 연구의 사표(師表)

* 10여 년간의 조사연구 과정에서 '위안부' 운동의 진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속에서 방법론적/인식론적 변화가 나타남

II. 그 의의: 진실과 정의, 회복의 기초

* **피해자 증언은 진실과 정의, 회복에 "전방위적(panoramic) 영향"**

* 피해자들의 출현(coming out):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의 피해자, 네덜란드 피해자 등이 출현하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여성인권" 이슈로 부상시킴

* 사회운동의 동력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결성,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일본군 '성노예제' 운동 촉발

* 소송 제기로 이어짐: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legal actions) 제기 [참고: '관부재판(關釜裁判)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下關) 지부에서 1심 원고 일부 승소(1998)했으나 최고심에서 패소(2003)

* 인권기구의 조사: 국제법률가위원회(ICJ), UN 노동위원 회(ILO),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이끔

* 연구에의 영감: '90년대 초부터 관련 연구에 큰 영감을 줌

1. 피해 사실 규명에 결정적 기여

* 위안부 동원: 일본 공권력의 사기와 강압(enforced-ness); 업자의 공모

* 조선의 피식민 상황이 강압과 사기에 취약한 조건 형성 + 여성차별

* 위안소에서 전방위적 인권유린: 감시, 기아, 구타, 고문, 질병, 마약 등

* 성폭력: 전대미문의 장기적 체계적 강간 + 재생산적 폭력(Reproductive Violence: 생식기 훼손, 성병감염, 불임 등) 증언

* 2차대전 종전 후 적진에 방치; 기아, 살인, 폭격 등에 관한 목격 증언

* 귀국 후 한국사회에서 기나긴 편견과 소외, 빈곤 지속(postcolonial da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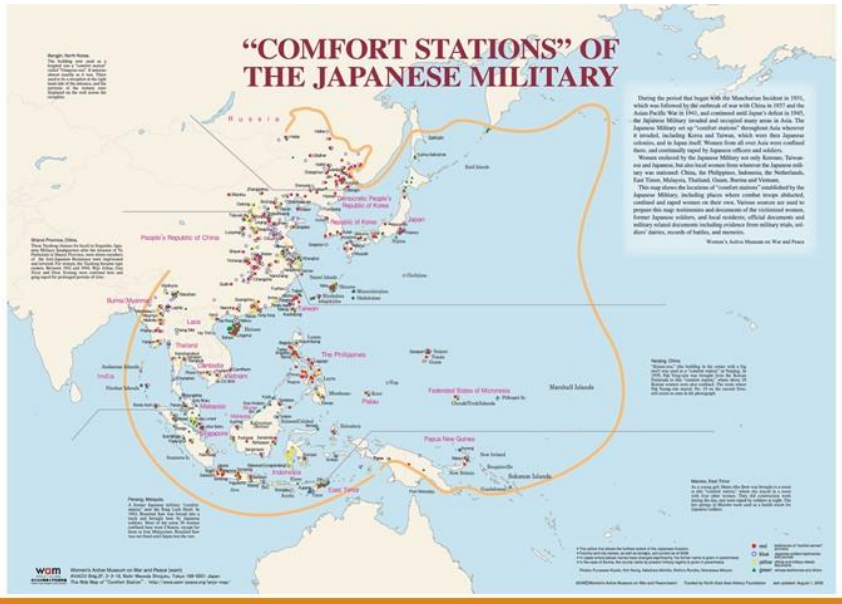
2. 일본군 성노예제 규명에 기여

*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방식, 동원시기, 동원경로, 위안소의 종류, 위치, 운영방식, 불법행위 양상 등 규명에 큰 기여함

* 피해자들의 민족적 구성 및 이에 대하 차이 조명에도 기여: 피해 여성들은 남/북한, 중국, 타이완, 일본,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필리핀, 동티모르 등에 산재하는데, 식민지인, 일본인, 교전지, 점령지 등 당시 "일본과의 관계성 " 에 따라 그 경험과 피해양상에 차이가 있음

* 미국, 영국 등에서 연합군 문서자료, 사진자료 등을 발굴하여 이 자료들과 피해자 증언을 교차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 (예: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앞에 서다〉 2018)

[사례] 일본군 '위안소' 지도:
피해자 증언, 군인 증언, 기타 증언, 문서 자료에 기초해 작성



3. 피해생존자 주체성과 정체성의 회복: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 한국의 증언 연구 경험과 연구자들이 축적되면서 연구 방법론에도 변화가 나타남

* 피해자는 "할머니"이자 "생존자"라는 정체성으로 표상됨

* "피해/생존자"라는 호칭: 극심한 인권유린 피해자이자 그 피해를 "살아낸" 생존자로 표상됨

* 나아가, 다른 이와 한국과 아시아의 '피해자' 대변해 주는 '증인(witness)'

* 일본군 성노예제 운동의 역동성 속에서 인권운동가로 자리매김한 피해자들: 피해자의 존엄성과 영혼(spirit)의 회복

* 증언활동의 피해생존자에 대한 회복기능: 증언 연구가 계속되면서 증언자들은 더 자세하고 힘있게 증언함 ['들을만한 이야기'가 됨, 김성례 (2002)]

* 이렇게 증언은 피해의 서사를 넘어 생존의 서사로, 민족의 서사를 넘어 개인의 서사로, 개인의 서사를 넘어 공동체 서사로 진화함

* 증언 연구자 공동체: 연구자를 넘어서서 증언자들에 대한 "증인"이 되고, 증언을 "공공기억"으로 매개하는 매개자/지지자 역할

* 공감하는 청중 공동체 (김수진, 2006)를 만드는 일: 가장 넓은 범주의 '피해자 ' 공동체의 회복 작업

III. 증언연구의 시사점

1. 진실과 사실 문제

* 50여 년전 엄청난 성폭력과 인권유린을 당했으며, 한국사회와 국가의 방치 속에서 생존한 피해자의 기억과 증언이란 "사실인가 아닌가" 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언어 투쟁(struggle for seeking the words)" 상황에 놓여 있음

* 자신들이 동원되었던 장소, 동원 과정, 동원 주체 등에 관해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었던 인질(captives)과 같은 상태의 증언 구술: 이런 '사실'은 국가와 군대 등 공권력의 기록물 부족,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책임, 연구자의 노력으로 풀어야 할 사안임, 일본 정부의 책임과 책임 부정이 핵심임

* 대부분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했던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반세기를 살았음 (군대 성매매 - 강제 성매매-체계적 강간 - 성노예제)

2. "피해" 경험: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피해생존자들이 가장 말하기 힘든 체험, 성폭력

* 어렵게 꺼내는 [일본군인을] "받았다 " 혹은 [손님을] "받았다"는 경험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역사적, 여성주의적, 법적 연구 등의 과제임

* 1920, 30년대에 출생해서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던 식민지 여성들의 분절된(broken) "모국어"이자 고립 속에 살아온 여성들의 언어 : 한국어와 함께 일본어, 중국어 섞여서 나옴

*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한 "피해 " 란 일본군 '위안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성병 후유증, 자식에의 대물림 등), 가족(정규 혼인 하지 못함), 주위의 평판 등 일생 전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

* 일본군인과의 "이름 붙이기' 어려운 관계: 사랑? 강간? 등 피해생존자 증언 재현에서 "민족주의" 역사쓰기의 경계를 넘어선다. 그러나 이런 "사랑"에도 지속적 피해가 나타남(자식, 평생의 비밀)

故 한옥선
(1919-2009)

"태원에 있을 제는 뭐, 억지루 정말 뭐, 할 수 없어서 정말 뭐, 내가 그런 데 간 저걸루다가, 몇 명, 몸은 저기 저, 뺏긴 거니께, 매 맞아가면서 받았지만두, 맬 명이래는 건, 뭐, 숫잔, 안 머리에 안 뒀어."

"그랬다가, (울음을 터트리며) 그러다가, 또 얼만가 있더니 거기서부터 기타 타고 한참 가더라구요. 가더니 오수이징이라는 동네에 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는 정말 어차피 몸은 버린 몸이고 그래서 그냥 군인을 상대를 하다가 (울며)…"



3. 피해자 중심 증언 재현과 증언자 주체성과의 만남

* 복수(3회 이상)의 심층 인터뷰 속에서 매우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말해진 사건들을 발견하게 됨: 증언의 "흔들리지 않는" 진실

* 어릴 적 어머니에 대한 기억, 가난, 연행 도중의 배의 파선과 죽을 고비, 종전 이후 귀국 후 남성과의 관계, 자식, 일 등 고유한 기억이 있음

* "기억의 구조"에 입각해서 증언을 재현하는 것은 "생생한" (raw) 증언 보고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증언 독자들이 이미 정해진 기억의 틀 - 피해자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끌려가서, 어떤 고통을 받았다는 식-이 아니라 증언자의 기억 회로 또는 정동(affect) 회로에 들어가게 하려는 방법



故 안법순 (1925-2003)

"("2000년 여성국제법정" 참가를 위해 일본 도쿄에 와서) 이곳 일본에 일본군 '위안소'에 왔던 사람들이 아무도 법정에 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당시 병사들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 나이였으니… 여기 우리가 살아있으니 그 사람들도 살아 있을 것"

故 김화선
(1926-2012)

"그냥 어떤 땐 말이여, 일본놈을 어떻게 찢여 죽여야 하나. 혼자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

"제일 높은 악독한 놈, 죽여버려 가지고. 그런 마음이 다 품어져, 저절로. 원수 갚을려고."

"사과해 가지고 이 가슴에 못 백힌 거 풀어지나 안 풀어지지.."

"돈도 안 주고, 내가 못 사니께, 시집도 못 가고, 기냥내가 이렇게 늙었으니께"



IV. 맺음말

1. '아래로부터의' 역사쓰기이자 공공기억 (public memory)

*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 피해자에 대한 증언 연구는 조선의 식민지 역사를 남성 엘리트가 아니라 '피해생존자의 체험과 언어로 다시 쓴 역사;

* 제2차 세계대전의 체험을 식민지 조선인의 기억으로 다시 쓴 세계사;

*한국정부와 한국인이 식민주의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일본정부와의 외교관계에서, 한국인 부역자들의 침묵에서,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편견 등에서)을 고발하는 "포스트식민의 " 역사라는 전방위적 의미를 지님

*** 피해자들은 증언을 통해 배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쓰기의 주체가 됨**

2. 증언 기록물의 보존과 2차적 기록물의 생산

* 현재의 기록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존과 재현의 노력이 필요함
* 영상, 전시, 번역물 등 2차적 생산물의 보존 및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한국의 증언 연구의 역사는 곧 연구자의 역사이기도 함: 연구자 공동체와 연구자 육성의 중요성

3. "포스트"의 시대, 증언과 기억의 중요성이 더 깊어짐

* 공공기억의 확산; 그리고 피해생존자들의 기림(commemoration)을 위하여

故 최갑순
(1919-2012)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산 생각을 하며는, 잠이 안 와서 낮에도 요로콤 누워 있다가,"

"누구 하나 안 올까? 아무도 안 우고 이러면, 잠이 슬며시 오며는, 한숨 살짝 자고 나면 저녁에는 인자 잠이 안 와서 그러며는, 그런 것이 다 생각이 나."

"우리 어매한테 [서] 살아나온 일 생각하고, 그 일반 사람한테 당한 거. 만주서 나올 쩍에 두부장사하고, 기양 뭐 사다 팔고, 돈 만들러 두만강서 빠져 죽을 뻔한거."



세션 2. 김학순 증언의 파장(波長)과 공명

진실을 말한 김학순: 그때와 지금의 의미

알렉시스 더든 | 미국 코네티컷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실제로 참석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새롭게 규정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경험한 성노예제 범죄는 UN에서 반인류적인 범죄라고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 친지를 잃은 분들에게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학순은 매일 3-4인, 어떤 날에는 7-8명의 남성들에 의해 성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이며, 인간이 버틸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김학순 할머니에게서 배운 기억에서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도쿄에 있을 때 제 일본어 선생님이 아사히 신문에 실린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읽게 했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에 대한 제 개인적인 기억은 이렇습니다. 김학순이 말한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된 증언은 단순한 반일 증언이 아닌, 수백, 수천 명의 유사한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의 가장 저명한 대학 중 하나에서 일본어 교사에게 그의 진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오늘, 이 모든 여성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일본의 현 정부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미국에서 올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존 마크 램지어는 큰 논란을 일으키며 모든 증언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0년 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은 전세계 법조계에 인간의 증언의 가치를 설명해줬습니다. 특히 특권층이 아니고 특정 대학 지위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증언의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팬데믹의 시대, 들리지 않는 곳에 있는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세계사를 위해 김학순 할머니가 하신 증언과 일치하는 결을 가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학순은 자신의 몸에 가해진 범죄 이후 수십 년을 버텼으며, 그 일이 끔찍하고, 내 인생을 망쳤다고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있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 있다고 증언합니다. 저는 당시 도쿄의 여학생이었고, 제 남성 교사는 "나는 너희들이 일본어로 이런 내용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 하는 이유는, 그가 세상이 그 자신의 역사와 진실에서 배우는 것이 있었으면 했고, 특정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반대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1930~40년대 일본 정부에 의해 자행된 군사화된 성노예제도는 인신매매 또는 강간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가장 큰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만 명의 피해자와 생존자를 대변하는 그 개인의 증언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부정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김학순은 20세기의 가장 용감한 사람들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으며 그의 몸에 각인된 공포를 영원히 끝내기 위해 그 유산을 21세기에 지속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정의: 생존자의 목소리의 힘

엘리자베스 W. 손 |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교수

먼저 오늘 학술대회에 함께할 기회를 주셔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와 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많은 학자분들, 활동가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문에서는 살아있는 정의의 개념,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과 다른 생존자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위안부 정의를 위한 국제 운동을 지탱하는 울림들을 가져왔는지 얘기해보려 합니다.

들어가며

14년 전 제가 일본군 위안부 역사 관련 여성 예술과 활동주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을 때, 당시 생존자 할머니들께 왜 수요시위에 참석하시는지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셨던던 길원옥 할머니께서는 미래를 위해서라고 답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세상에 당신의 전쟁 경험을 전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생각은 또 다른 생존자이시자 1991년 8월 14일 공개 증언을 하셨던 김학순 할머니의 언행과도 닮아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전세계 여러 세대의 여성들이 본인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얀 루프 오헨 할머니와 같은 생존자들은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하였고, 본인도 1992년 공개석상에서 증언하셨던 바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의 군 성폭력 생존자들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공개증언에 힘입어 유엔에서 증언하기로 결정했던 일이 있고, 2010년 "과테말라 무력분쟁 성폭력 여성 생존자를 위한 양심법정"은 2000년에 도쿄에서 열렸던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여성법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에 영향을 받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정의

김학순 할머니와 같이 목소리를 낸 생존자분들, 매주 수요집회에 참여하는 활동가들, 생존자를 기리는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 그리고 소녀상을 지켜온 지지자들까지 이들 모두가 현재 진행중인 정의의 영역 확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공식 배상 외에도 생존자들과의 관계 구축, 교육 캠페인 및 워크샵 주도, 추모 작업 지원, 연대 구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법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확장된 관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상의 개념의 확장은 정의가 온전히 정부나 법원의 결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달려있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구체화된 행위와 공동체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고, 이렇게 실현된 정의가 바로 우리가 지지하는 살아있는 정의인 것입니다. 제 저서인 Embodied Reckonings: "Comfort Women," Performance, and Transpacific Redress에서 저는 바로 이 살아있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수요시위, 공개증언, 법정, 연극 및 예술, 추모비 건립 같은 구체적인 행위들이 활동가, 생존자분들, 지지자들이 공식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과 배상의 영역의 확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적었습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중점으로 한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는 시위, 법정, 연극, 추모비 건립 등의 행위들을 통해 그러한 신체를 의미있게 재현하고 동원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 책에도 나오듯이 수요집회에 대한 저의 관심은 시위를 통한 공식배상 요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탐구로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7년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은 그것보다 더 의미깊은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요집회는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정의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지지자들이 일본 대사관을 마주선 채로 공식배상을 요구할 때에도 그들은 생존자분들과 그분들의 지지자들에게 관심이 가도록 마주선 채로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일본 대사관에서 몸을 돌려 서로를 마주보는 일련의 물리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미적 확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요집회는 "일본 대사관 앞의 공공 장소를 배상을 요구하는 장소으로 변화시켰고, 시위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역사 교육과 치유적 공동체 구현을 거쳐 범세대적, 초국가적 연합 구축을 통한 사회적 구제를 상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1] 이러한 살아있는 정의를 묘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례 중 하나는 길원옥 할머니께서 시위참가자들을 "자식들"로 여기시는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의 인터뷰에서 할머니께서는 "가끔 초등학생들이

[1] Elizabeth W. Son, *Embodied Reckonings: "Comfort Women," Performance, and Transpacific Redres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2018), 23. 역주: Elizabeth Son 님의 저서.

와서 '할머니,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면 마음이 절로 열린다" 고 하시며 할머니와 이 어린이 지지자들간의 특별한 유대를 표현하셨습니다.[2]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할머니의 가족이 되어 아주 의미있는 사회적 배상을 이뤄드린 것입니다.

오늘 발표문에서 저는 간략하게나마 살아있는 정의를 지탱하는 원천들인 성폭력 생존자분들의 증언, 연극을 비롯한 예술 작품, 그리고 추모 관련 행위들에 대해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이 갖는 울림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울림들: 얀 루프 오헨, 보스니아와의 연관성, 그리고 한국의 트로이의 여인들

김학순 할머니와 다른 생존자들의 공개증언과 정의에 대한 탄원을 텔레비전으로 본 뒤, 일제의 네덜란드령 동인도 (오늘날 인도네시아) 통치 당시 성노예 생존자이신 얀 루프-오헨 할머니께서는 1992년 본인 또한 공개 석상에 나와 한국 생존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호주에서 위안부 문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일본에서 열린 1992년 전후배상 국제청문, 2000년 여성법정, 2007년 미 하원 청문회 등 세계 각지에서 증언 활동을 하셨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 (HR 121)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 하원에서 증언하셨을 때 할머니는 침묵을 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1992년, 보스니아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나는 여성들이 다시 한 번 조직적으로 강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텔레비전에서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도 보았습니다. 그 여성들은 자신들의 오랜 침묵을 깼고, 김학순 여사는 첫번째로 입을 연 위안부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들이 정의를 호소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보스니아에서 여성들이 다시 한 번 조직적으로 강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보고서 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3]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은 1990년대 위안부 정의에 대한 운동을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스니아 전쟁같은 무력 분쟁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일조하였습니다. 강간이 전쟁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과 지지자들은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2] 길원옥 할머니와의 인터뷰. 2007 년 7 월 27 일 서울.

[3]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Comfort Women,"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the Global Environment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Serial No. 110-16, February 16, 2007, 25-26.

유엔 세계인권회의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유럽의 활동가들과 보스니아 집단 강간의 생존자들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4] 이러한 국제 무대에서 활동가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같은 집단 성폭력의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면책과 불처벌이 보스니아 같은 곳에서의 현대 전시 성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5] 또한 이 모임에 참석한 생존자들은 서로가 고통스러운 과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며 가슴 아픈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비엔나 회의에서 구 유고슬라비아의 조직적 여성 강간에 대해 증언한 파딜라 메스미세르비치는 "김복동 할머니에 대해 들었을 때, 내 영혼에서 끔찍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 대전 당시 한국 여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여성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6] 앞서 말했듯이, 보스니아 여성들의 경험은 얀 루프 오헨 같은 생존자들에게 앞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얀 루프 오헨 할머니는 2000년 여성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 제가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스니아에서도 이런 끔찍한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7]

예술가들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와 보스니아 전쟁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보스니아 태생 연출가인 아이다 카릭은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영감을 받아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를 다루기 위해 트로이 함락 이후 트로이 여성들이 노예가 되는 내용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을 발전시켜 <트로이의 여인들> 이라는 작품을 구상하고 연출했습니다. 아이다는 "이 작품은 트로이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국 '위안부'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며 내 조국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8] 수천 명의 일본군 성노예 희생자들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이 약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슬람 여성과 소녀들이 강간당했던 보스니아 전쟁 초기를 살아낸 그녀에게 큰 반향을 준 것입니다. 카릭은 한국과 오스트리아를 오가며 국내 안무가와 작곡가, 판소리꾼,

---

[4] Charlotte Bunch and Susana Fried, "Beijing '95: Moving Women's Human Rights from Margin to Center," *Signs* 22.1 (Autumn 1996): 200-204.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지하는 활동가들도 보스니아 사건을 법적 선례로 지적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여성법정)은 1996 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내렸던 재보스니아 세르비아인 군인 및 경찰관 8 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재판소가 강간을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최초의 판결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Marlise Simons 의 1996 년 6 월 28 일자 뉴욕타임즈 기사 "U.N. Court, for First Time, Defines Rape as War Crime"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N. Court, for First Time, Defines Rape as War Crime," The New York Times, June 28, 1996.

[6] Gertrude Fester,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Agenda* 20 (1994): 77.

[7] Yayori Matsui,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Memory, Identity, and Society,"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19.4 (December 2001), 124.

[8] Hyun Noh, "Geuleeseo Bigukgua Mannan Wianbudul" [The 'Comfort Women' Meet Greek Tragedy], Maeil Kyungjae [The Daily Economics], October 22, 2007, A35.

극단과 함께 2년간 <트로이의 여인들>을 만들었습니다. 2007년 비엔나 샤우스필하우스에서의 공연을 끝낸 뒤 <트로이의 여인들>은 미국과 한국에서 공연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의 노력과 더불어 카릭과 같은 예술가들은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를 다루기 위해 시나 다큐멘터리부터 연극에 달하는 다양한 문화적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기억을 소재로 하는 연극의 제작은 지난 25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연극은 생존자의 존재를 구체화하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객에게 정서적인 수단을 통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의 경험을 극화하는 것은 또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개인적인 고통처럼 공식 활동에서 논의되지 않는 주제를 조명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카릭의 <트로이의 여인들>같은 경우 관객들이 전시 성폭력의 오랜 역사와 잔혹함을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로이의 여인들>은 특정한 주제(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험)와 초역사적 주제(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등장하는 트로이 여성들), 그리고 침해와 (강덕경 할머니와 안점순 할머니 증언) 치유(무속 의식 운동들) 같은 주제들 사이의 청각적, 시각적, 움직임에 기반한 변화를 통해 이러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극은 또한 여러 시대상(트로이 전쟁과 제2차 세계 대전) 사이를 이동하며 일본군 성노예제를 고립된 사건이 아닌 길고 긴 전시 성폭력 역사의 일부로 위치시켰습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여성에게 행해진 수세기에 걸친 전시 성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과 여성과 공동체에 행해진 파괴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도덕적 문제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정의라는 더 커다란 틀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트로이의 여인들>과 같은 연극은 관객들을 추모하고, 증언하는 국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울림들: 김복동 할머니, 평화의 소녀상, KAN-WIN의 #ComeSitWithHer[9] 운동

얀 루프 오헨 할머니의 행동과 아이다 카릭의 연극에서 찾아볼 수 있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의 울림처럼, 김복동 할머니의 행동과 추모 프로젝트에서도 김학순 할머니 증언의 울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이 있은지 얼마 뒤, 김복동 할머니도 1992년 증언을 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또한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위안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세계를 돌며 증언하셨고 정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길원옥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무력분쟁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해 2012년 나비기금을 만드셨습니다. 두 분은 시위와 해외 증언 활동

[9] 역주: "그녀 곁에 앉아주세요"

중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부하기를 독려하셨고 후원단체들에게 기금 마련 행사 개최를 권장하셨습니다. 2013년에 길원옥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콩고의 강간 피해자들과 베트남전 한국군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기금을 기부하셨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웃어른으로서, 두 분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폭력 희생자들을 돕는 후원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두 할머니께서는 세계의 살아있는 정의를 키워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김복동 할머니께서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의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하셨을 때, 저는 할머니께서 다른 이들도 살아있는 정의를 유지하는 것에 동참하기를 촉구하시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다음은 제 책에서 발췌한 당시의 상황입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연설은 그 날 행사 중 가장 강렬한 순간이었다. 하얀 저고리와 검정 치마 한복을 입으신 할머니의 모습은 평화의 소녀상 그 자체였다. 할머니의 옷은 강제로 성노예가 되셨던 그 때의 나이를 상기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다는 강력한 제스처였다. 우아하게 차려입으신 할머니는 깔끔하고 단호한 말투로 "그동안 많은 나라를 순방하면서 일본이 나서서 사과하지 않는다면 세계를 돌며 기념비를 건립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글렌데일 시에서 이 기념비를 설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기념비 건립은 그 자체로서 배상임과 동시에 배상에 대한 요구이기도 했다. 할머니께서는 "이 기념비는 과거사를 대표하는 것이니 이 평화의 소녀상을 꼭 여기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일본이 망언을 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대신 일본 정부가 망언 대신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쟁은 필연적으로 우리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이용수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념비와 후손들의 보호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할머니께서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 다른 이들이 동참하기를 바라시면서,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넓은 평화의 지평을 분명히 하셨다.[10]

몇 년 뒤,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공개증언을 하시기 위해 2015년 시카고에 방문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방문은 1991년 설립되어 시카고에 기반을 둔 아시아계 미국인과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대상이 된 이민자 지원 단체인 KAN-WIN의 후원으로 성사되었습니다. KAN-WIN은 또한 24시 상담전화를 비롯해 가정 폭력 및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임시 거

[10] Son, Embodied Reckonings, 171-172.

처, 상담, 직업 기술 교육, 재정 관리 교육, 법률 워크샵, 지원 단체, 어린이 프로그램 및 사교 모임을 제공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KAN-WIN은 시카고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를 지원하는 국제 운동을 지지하는 가장 큰 단체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부터 KAN-WIN은 생존자들의 증언 행사, 연대 시위, 교육 워크샵, 예술 전시회 등을 조직해왔습니다. 단체의 비전 선언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KAN-WIN은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와 생존자들의 지지자로서 "위안부" 옹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비전은 자신들의 정의를 요구함과 동시에 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외치는 "위안부" 생존자와 활동가들의 정신과도 일치합니다.[11] KAN-WIN은 공식적인 배상을 위한 세계적 요구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교육, 추모, 연대 구축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배상을 실현함으로써 정의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단례로 KAN-WIN은 "위안부" 기림일에 #ComeSitWithHer 이라는, 시카고 시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가져와 연대의 표시로 참가자들이 소녀상 옆의 빈 자리에 앉도록 권하는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KAN-WIN은 행인들에게 "#ComeSitWithHer" 이라고 묻는 과정에서 이 행사의 참가자들에게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를 기억하고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되짚어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소녀상의 옆 자리에 앉거나 다른 사람이 앉는 것을 볼 때마다, 저희가 김복동 할머니와 김학순 할머니의 정의를 위한 투쟁에 응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마치며

생존자분들, 활동가들, 그리고 "위안부" 운동의 지지자들이 공식배상의 완전한 실현을 계속 지지함에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생존자 할머니들의 경험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작업들과 젠더 기반 폭력의 생존자들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젠더 기반 억압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정의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30년 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의 울림들을 느끼며, 살아있는 정의를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11] KAN-WIN "Comfort Women" Justice Advocacy, "KAN-WIN Statement on 'Comfort Women' Advocacy," accessed on August 2, 2021, https://www.comfortwomen-justice.com/uploads/5/1/4/6/51462959/kw_cwadvocacystatement.pdf.

운동에서 자서전(자기기술)의 역할: 어떻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권리를 위한 투쟁에 증언을 활용했는가

캐서린 배스게이트 I 독일 뮌스터대학교 석사과정

들어가며

30년 전 김학순 할머니가 나서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제국 군대의 손에 성폭력을 당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낙인을 극복하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태도, 일본과 아시아의 전쟁 기억과 역사에 대한 이해에 도전했다. 그가 깨버린 침묵은 수백 명의 전 '위안부'들이 용기를 내어 일본 정부의 군'위안부' 제도 부정을 반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여성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특히 증언과 자기기술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반적으로, 증언이나 자기기술은 한 사람의 삶에서 특정한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위안부'들은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여성들은 말을 통해 '위안부' 제도와 가부장제에 대한 기억에 도전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는 일종의 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동에서 증언과 자기기술지의 역할을 두 명의 전 '위안부', 마리아 로사 헨슨Maria Rosa Henson과 얀 루프-오헨Jan Ruff-O'Herne의 자기기술지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최초의 필리핀 '위안부'이자 네덜란드 '위안부' 증언자로서, 그들이 운동에 기여한 바는 크다. 그들은 페미니스트 운동의 지향점을 응원함과 동시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러한 자기기술지를 운동적 행위로 분류하기 위해, 정치적 자기기술지에 관한 마고 퍼킨스Margo Perkins와 카르멘 펠프스Carmen Phelps 의 글뿐만 아니라 시도니 스미스Sidonie Smith, 케이 섀퍼Kay Schaffer, 줄리아 왓슨Julia Watson의 자기기술지에 관한 글도 활용하였다. 이러한 측면들이 자기기술지, 나아가 증언이 일종의 운동이라는 주장을 확인하고 강화한다.

운동으로서의 자기기술지

퍼킨스와 펠프스는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강조하려는 운동가들의 노력에 자기기술지만큼 도움이 되는 글의 형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1). 기술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구조와 정치적 결정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줄 수 있다.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결합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자기기술지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운동의 한 형태이며,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운동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 제도의 일부 기존 요소에 도전하기 위해 행하는 행동은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운동은 포럼 참여에서부터 재산 파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동들을 포함한다." (Saunders 9)
>
> 운동의 1차 목표는 노력을 통해 체계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오랫동안 무시되거나 숨겨져 왔던 '위안부'들의 역사와 같이, 일차적 사료 firsthand accounts에 기반한다. 운동과 생존자는 서로 의지한다: 단체들은 그들의 주장과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페미니스트 운동 내에서 모든 목표는 가부장제와 가부장제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구조, 여성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성평등을 막는 결과적 태도의 해체에 초점을 둔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운동은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이 제도의 구조에 도전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목표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오랜 관점의 변화, 여성의 안전, 권리, 신체 자율성보다 남성의 성적 만족을 우선시하는 위계질서를 없애는 것을 포함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강제 성매매와 성착취 시스템을 번창시키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의 일차적 사료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대항으로 기능한다.

스미스와 왓슨이 말했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며, 누가 기억하는지는 역사적으로 특정되어있다" (23). 권력을 가진 자, 영향력을 가진 자, 승리자들이 역사를 쓰고 무엇이 기억될 것인가를 선별한다. 과거에는, 이것은 특정 목소리, 이야기, 사건의 배제를 의미했다. 대항역사counter-history에는 "과거의 재해석"이 포함된다. (22)

>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는 다른 종류의 주체들, 즉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고문당하고, 쫓겨나고, 간과되고, 침묵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주체들이 목소리 내는 대안 또는 대항역사를 서술한다."(Smith and Schaffer 4).

자기기술지는 증인의 진술을 확대함으로써 증언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과 역사적 문서, 사진, 그림 등 확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더불어 자기기술지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맥락화하고, 사건이 그들의 삶의 궤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 충격적인 경험을 넘어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1992년에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개한 마리아 로사 헨슨은 자서전 <Comfort

Woman: A Filipina's Story of Prostitution and Slavery Under the Japanese Military 위안부: 필리핀 여성의 일본군성노예제 이야기>에서 이 형식을 차용해서 자신의 삶의 사건들과 경험을 기술했다. 그는 일본군에게 납치된 후 위안소에서 9개월을 보냈다. 헨슨의 자기기술지는 그의 성적 착취를 매우 상세하게 묘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안부'로서의 그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던 역사에 대한 대항역사를 제안하며, 이 제도 속의 가부장제에 도전한다. 그의 자서전은 생존자 내러티브와 정치적 자기기술의 혼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생존자 내러티브에서는 저자가 "자신을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변화시키는 학대의 경험 공유를 통해 제도적 원인에 주목한다" (Smith and Schaffer 15). 이 유형에서 기술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동시에 문제가 되는 정치나 사회 제도에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그들이 스스로를 보는 시각을 드러냄과 동시에 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지고 싶은지를 드러낸다. 반면, 정치적 자기기술지는 정치와 개인을 통합하고 특정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서술의 틀을 만든다. 이 하위 장르는 텍스트 내의 특정 운동 또는 원인을 강조한다. 이렇게 분류되기 위해서 텍스트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기술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보다는 둘러싼 투쟁의 이야기를 강조한다; (2) 기술자가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치적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이야기를 사용한다; (3) 기술자가 목소리 없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한다; (4) 기술자가 투쟁의 진실성과 다른 운동가들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 침묵을 지킨다; (5) 기술자가 억압적인 상황과 국가의 억압적인 전략을 폭로한다; (6) 기술자가 자기기술지를 정치적 개입의 한 형태로, 폭넓은 청중들을 교육하기 위해 사용한다." (Perkins and Phelps 20).

자기기술지에서 헨슨은 개인적 경험과 정치를 결합시켜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이를 형성하고 규정하는 사건들을 엮어냈다. 해당 형식이 자아내는 공간과 정치적 자기기술지의 여러 측면들을 활용함을 통해, 헨슨은 자신, 다른 '위안부'들, 다른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롭게 싸움과 동시에 운동의 지향점을 지지할 수 있다. 그는 위안소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가혹행위에 대한 기록을 제공한다. 이는 제도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교육하고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의 경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과하게 하게 위함이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구조적 변화를 보고 싶어한다. 이는 운동이 되며 그들의 권리와 정의를 위한 적극적인 싸움으로 귀결된다. 이를 통해 헨슨은 계속해서 정의와 변화를 추구할 용기를 얻고, 자신의 정체성을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

헨슨은 비록 미묘하긴 하지만, '위안부' 제도 내에서 가부장제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일본인과 그들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페미니즘 운동이 그에게 끼친 영향은 필리핀 '위안부' 태스크포스를 언급하고, 그가 전면에 나올 수 있도록 보조한 그들의 역할 속에서만 언급된다. 그는 자신과 다른 여성들을 위해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그를 침묵으로 몰아넣고, 경험에 대해 수치심을 갖게 하고, 남성들이 이를 오랫동안 용인하도록 한 가부장제의 확립된 구조에 도전한다.

또다른 전 '위안부'인 얀 루프-오헨은 자서전 < Fifty Years of Silence: The Extraordinary Memoir of a War Rape Survivor 오십 년간의 침묵: 전시성폭력 생존자의 자서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위안부'이자 전쟁포로로서의 경험에 대해 기술했다. 1992년, 그녀는 김학순과 다른 한국 여성들을 텔레비전에서 보았고, 영감을 받아 앞으로 나왔다. "나는 그 여자들과 함께해야 한다. 난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동안 가슴에 담아왔던 이야기가 이제서야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한국 여성들의 용기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다. (O'Herne Ch. 6) 그는 일본인들이 갑자기 위안소를 폐쇄하기 전까지 '칠해정' 위안소에서 3개월을 보냈다. 오헨의 자서전은 헨슨의 것과는 약간 다른 틀과 어조를 취하고 있다.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보낸 시간이 그의 전시 경험에서 결정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자서전에서 중심적인 주제가 된다. 전시 체험에 중점을 둔 자서전은 역사성이 더 짙어졌고, '위안부'뿐 아니라 포로 수용소에 대한 역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을 짐작케 한다.

오헨은 자신의 책을 일본군 '위안부' 시스템의 역사를 기록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 교육하고 사법 체계에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그의 이야기는 정치적 자기기술의 많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제목과 문체 때문에 생존자 내러티브로서 읽힌다. 정치와의 연관성은 헨슨의 자서전보다 더 미묘하다. 그는 거의 전적으로 전시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억 속에서 저항과 극복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엮어내고 있다. 오헨은 자기-기술의 형식을 활용해 일본인들이 자신에게 어떤 짓을 했든 자신은 생존자라는 것을 전한다. 그는 자신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고통을 극복했다고 강조한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용기 있는 생존자가 됨으로써 고통을 의의 있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었다. 오헨은 자신이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변화하여 자신의 새로운 목소리와 정체성을 활용해 사람들을 교육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개인적인 목표와 운동의 목표를 지지했다.

헨슨의 설명처럼, 오헨의 이야기는 소녀들이 위안소에서 겪은 경험 대한 통찰과 군

인들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오헨의 설명은 헨슨의 설명보다 가부장적 구조와 태도를 더 강조한다. 오헨은 동의와 저항의 강조를 통해 남자들이 소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드러낸다. 소녀들은 군인들의 성적 욕망을 위해 통제되고 사용되는 물건들이었다. 숨고, 싸우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 폭력을 포함 포함해 자신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짓을 자행했다. 군인들이 소녀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한 도구 이상의 것으로 보았다면, 그들은 멈췄을 것이다.

결론

거의 50년 동안 '위안부' 여성들은 침묵했다. 범죄가 일어날 당시,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사회적 낙인이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불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그들은 물결을 일으켰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페미니스트 운동의 발전은 저해되었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공적인 대화가 가능해진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페미니스트 운동이 진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던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섹슈얼리티에 대한 낙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발전으로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마침내 듣고 믿게 되었다. 김학순이 정의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다른 전 '위안부'들은 섹슈얼리티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변화했고 지금이 침묵을 깨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를 밝히는 것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은 변화를 일으키고 정의를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그들의 연대는 페미니스트 운동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지지와 함께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고,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변모한 여성들은 스스로 활동가가 되었다. 이야기로써 그들은 전시 성폭력에 맞서는 운동의 면모를 바꾸었다.

헨슨과 오헨의 자서전은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운동이 되었다. 경험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나선 그들의 용기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도록 구속한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의 행위였다. 그러나 그들의 글은 운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출판과 접근성을 통해 그들은 증언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권위와 담론장을 만들 수 있었다. 두 여성 모두 자서전으로 더 많은 청중을 교육하고 가부장제에 도전할 수 있었다. 퍼킨과 펠프스의 기준에 따른 생존자 내러티브와 정치적 자기 기술을 통해 운동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두 경우 모두 위안소 시스템에 대한 대항 역사를 제공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주었으며, 다른 여성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줌과 동시에 가부장적 체계에 도전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러한 목표는 페미니스트 운동의 목표와 일치했고 전시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진

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전 '위안부'들의 자서전을 운동적 작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와 운동에서의 자기기술지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안부'들의 증언과 자서전은 문헌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들의 내러티브는 자기기술지 연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 문헌의 영역을 넓혀준다. 또한, 이 주제를 계속 연구하면 문헌의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할 수 있다. 여성들은 이야기를 해서 다른 이들이 배우고, 자신들의 기억이 살아있는 기록이 되도록 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잊혀지지 않게 하며 그들이 시작한 운동이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보장해준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만 이런 범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참고문헌

"Activism." The Wiley-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Clare Saunders, 2013, pp. 9-11.

Henson, Maria Rosa. Comfort Woman: A Filipina's Story of Prostitution and Slavery Under the Japanese Militar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9.

O'Herne, Jan Ruff. Fifty Years of Silence: The Extraordinary Memoir of a War Rape Survivor. Kindle ed., Random House Australia, 2008.

Perkins, Margo V., and Carmen L Phelps. Autobiography as Activism: Three Black Women of the Sixties. UP of Mississippi, 2000.

Schaffer, Kay and Sidonie Smith. "Conjunctions: Life Narrativ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Biography, vol. 27, no. 1, 2004, pp. 1-24.

Smith, Sidonie, and Julia Watson. Reading Autobiography: A Guide for Interpreting Life Narratives. E-book. 2nd ed., U of Minnesota P, 2010.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생존자 증언 부정

김부자 | 일본 도쿄외국어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30년 전인 1991년 12월, 김학순 씨(이하 경칭 생략)가 일본 정부를 제소하기 위해 일본에 왔을 때의 일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상황은 일본의 TV 뉴스에서 크게 보도되어, 다큐멘터리 방송이 만들어졌다. 관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김학순 씨의 증언을 듣는 모임'(종군위안부문제우리여성네트워크[1] 주최, 도쿄 YMCA)에 일본 시민 약 450명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증언에 귀를 기울였다. 김학순의 일본 방문과 증언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는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연구나 시민운동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전시 성폭력 생존자의 일본 방문이나 재판이 계속되어, 일본 각지에 재판 지원이나 생존자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가 결성되었다. 생존자의 증언은, 운동의 원동력이었다.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는, 한계가 있다고는 해도 그 성과였다.

하지만,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에서는 1997년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나 '일본회의'가 결성되면서 역사수정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위안부의 증언은 거짓', '위안부는 거짓말쟁이'와 같이 생존자의 증언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페미니스트 중 일부도 다른 방식으로 생존자의 증언을 의심했다.

오늘의 보고에서는 우선 생존자의 증언을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의 두 가지 패턴을 살펴보고, 이어서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들의 논거로 활용되는 하타 이쿠히코가 어떻게 김학순의 증언을 부정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생존자의 증언을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의 두 가지 패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제국에 의한 가부장제와 식민지주의의 복합적인 산물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생존자의 증언을 의심하는 역사수정주의를 고찰하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동 지역의 동포 여성들로 구성된 여성단체

면, 다음의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가부장제 비판(페미니즘)을 가장하여 식민지주의를 이어가는 역사수정주의이다. 이는 가부장제 비판을 동반하고 있어 알아차리기 어려우나, 일본이나 한국의 페미니스트 및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서 볼 수 있다. 우에노 지즈코의 '모델 피해자론'이나 박유하의『제국의 위안부』가 그 전형이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에노는『내셔널리즘과 젠더』(1998)에서, 조선인 '위안부'를 염두에 두고 '순수', '순결'한 '모델 피해자'상(像)이 만들어졌으나, "문제는 말하는 이보다도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듣는 이 쪽"이라고 주장했다. 즉, 순결주의적인 '모델 피해자'상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밖에 듣지 않는 '듣는 이'의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며, 그 '듣는 이'의 방식을 문제시하는 형태로 생존자의 증언을 의심한 것이다. 게다가 우에노는 '군대 성노예'를 주장하는 한국 여성운동(정대협)이 그 '듣는 이'로서 '모델 피해자'상을 만들어냈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이를 '창부 차별'이나 '한국의 반일 내셔널리즘'으로의 동원과 연관 지어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이나 성노예제를 부정했다. 하지만 우에노는 '듣는 이'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으며, 중요한『증언 1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엮음, 종군위안부문제우리여성네트워크 번역, 1993)에 실린 것은 '모델 피해자'상으로부터 벗어난 '다양한' 피해자들이었다(김부자, 2020).

우에노의 '모델 피해자'론을 실천한 것이 바로 박유하의『제국의 위안부』(2013=2014[2])이다. 박유하는 '소녀상'을 예로 들며 '위안부=소녀' 이미지는 1990년대에 '정신대를 위안부 그 자체로 오해한 것에서부터 만들어진 것', '한국의 피해의식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생긴 무의식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의 하나로 든 것이 생존자의『증언집』이었다. 박유하는 '20세' 이상의 생존자 세 명의 '증언'을 잘라내어 조선인 '위안부'에 미성년자가 없었다는 증거로 든 것이다. 그러나 그 세 명의 '증언'의 근거가 되는『증언집』이 박유하가 부정하고자 하는 바로 그 한국 정대협의 이름으로 출판된 것이었다는 점은 모순적이다. 또한 이들『증언집』여섯 권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78명 중 73명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부자, 2017). 즉 박유하가 근거로 삼고 있는 생존자의『증언집』이 바로 박유하의 주장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후술할 하타 이쿠히코는 박유하의『제국의 위안부』가 '강제연행이나 성노예설을 부정'했다고 이해한 후, 이것이 자신의 이해와 '비슷한 이해'[3]라고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을 덧붙여 두

[2] [역주] 박유하『제국의 위안부 : 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제 1 판]』(뿌리와이파리, 2013) = 朴裕河『帝国の慰安婦 植民地支配と記憶の闘い』（朝日新聞出版，2014）

[3] 하타 이쿠히코「위안부 사실을 직시하기 위하여」『주간문춘』2015 년 5 월 7 일, 14 호

겠다.

다른 하나는, 미소지니(여성혐오)와 식민지주의가 결탁한 역사수정주의이다. 이는 전술했듯 1997년에 일본에 본격적으로 등장해 세력을 늘려 가기 시작하여, 현재는 일본 정부나 일본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한국(이영훈『반일종족주의』, 2019년)이나 미국(램지어의 '위안부'론, 2020년)의 일부에서도 이 역사수정주의의 영향이 엿보인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소지니란, 가부장제에 저항하거나 일탈하는 여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제재나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에하라 유미코, 2020). 예를 들어 미소지니의 특징은, 가부장제를 거스르지 않고 성폭력을 용인하는 스기타 미오[4]와 같은 여성을 칭찬·우대하는 한편, 남성에 의한 여성 성폭력을 고발한 이토 시오리와 같은 여성들을 격렬히 공격해 성폭력 고발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미소지니가 식민지주의와 결탁하면서 성립된 역사수정주의가, 일본군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을 의심하며 격렬한 비난을 하는 것이다. 매춘 여성에 대한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감을 악용하여 '위안부'를 '매춘부'라 공격하는 것은 미소지니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그 전형이 바로 일본 군사 역사가인 하타 이쿠히코의 '위안부'론이다. 하타 이쿠히코의『위안부와 전쟁터의 성』(1999년)은 긴 시간동안 역사수정주의자의 경전이었는데, 최근 영어로 번역되었다(야마구치 도모미의 보고 참조). 역사수정주의의 특징은 역사 연구자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 그 때문에 하타 이쿠히코를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하타 이쿠히코에 의한 '위안부' 증언론과 김학순 증언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하타 이쿠히코의 '위안부' 증언론

하타 이쿠히코는 우선 "'위안부' 또는 '종군위안부' 체제는 전쟁 이전 시기 일본에 정착해 있던 공창제도의 전쟁터판(版)"(p.27)이라고 정의했다. 즉 하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전쟁터판 공창제'로 이해한 후, 그러한 인식 하에『위안부와 전쟁터의 성』에서 독자적인 역사적 해석을 전개하였다.

다음으로, 같은 책의 제6장 '위안부들의 신세 한탄'에서 하타는 생존자의 증언을 '신세 한탄'(p.177)로 규정하여 독자적으로 해석한다. 즉 '위안부'를 '창녀'에 빗대고, 생존자의 증언을 '손님을 끄는 속임수'로서의 '창녀의 신세 한탄'(상동)에 비유하여, 생존자의 증언을 애초부터 허구라고 단정지었다.

그에 더해 하타는 '현재까지 실명 증언을 한 위안부는 300명 전후'이며 그들의 공통

[4] [역주] 일본 자민당 소속 중의원(衆議員), 성폭력 피해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 것으로 유명하다.

된 패턴은 "(1) 위안부 생활이 평균보다 가혹했다고 한다, (2) 전후(戦後)의 생활도 풍족하지 못했다, (3) 실명 증언을 싫어하는 가족이 없다, (4) 지력(知力)이 낮고, 부추김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악조건은 "역으로 순진한 관객의 동정을 불러일으키기 쉽다"(p.178)라고 하였다. 이는 생존자의 증언에 대한 하타의 미소지니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듣는 이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캐낸다고 지적한 우에노(1998)를 하타가 인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부터, 전술한 우에노의 언설이 하타와 같은 우익에게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하타가 다룬 것은 '한국, 필리핀,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일본의 전 위안부' 중에서 고른 샘플과도 같은 '신세 한탄'(상동)이라고 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김학순, 문옥주, 가네다 기미코(가명), 강덕경 및『증언 1집』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면 관계상, 본 보고에서는 김학순의 증언을 다룰 것이다.

하타 이쿠히코의 김학순 증언 부정론을 검증한다

그렇다면, 하타 이쿠히코는 김학순의 증언을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하타는 A:『증언1집』(전술), B: 해방출판사 엮음『김학순 씨의 증언』(1993년 간행, 1991년 12월 일본 방문 시의 증언), C: 이토 다카시『증언 종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1992년 8월 간행, 청취 일시 불명)의 세 권, 또는 소송 소장(訴状)을 포함하는 네 개의 자료를 들어, 이 증언들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몇 가지의 차이가 보이는 것은 문제"(p.180)라고 하여, 아래와 같은 네 개의 차이점을 지적했다(하타는 A, B, C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여 책 181쪽에 실었다).

첫 번째는 '인신매매'설이다. 하타는 '재혼한 친엄마가 딸을 40엔에 판 사실'(밑줄은 인용자)에 관해, 이는 A에는 나오지만 소장이나 B, C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며 '전형적인 인신매매 사례'라고 말한다. 이 부분은 김학순이 다닌 기생 학교에 관한 서술인데, 하타는 본문에서는 기생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표에서만 기생을 언급하고 있다. 때문에, 본문만 보면 김학순이 '인신매매'로 인하여 '위안부'가 된 것처럼 읽히도록 쓴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A의 증언에는 엄마가 딸을 '팔았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언의 일본어 번역을 정확히 적으면 '엄마는 나를, 기생을 양성하는 집의 양녀로 보냈습니다. ... 엄마는 양부에게서 40엔을 받아, 몇 년 정도의 계약으로 나를 그 집에 두고 갔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일본어역 p.43)라고 말했을 뿐이다. 즉 하타가 이 번역문을 표기하지 않고, '팔았다'고만 요약해버린 것은 독자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바꿔 말하자면 이는 '인신매매'를 강조하기 위한 억측에 가깝다. 그리고 B에서는 '기생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집의 양녀가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텍스트의 성격 차이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위안소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이 사실이 소장이나 B, C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텍스트는 각각 증언을 들은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A는 식민지 조선이나 한국 사회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진 한국의 여성사 연구자들(당시 정신대 연구회)이 신중히 증언을 청취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다. 한편 B는 1991년 12월에 김학순 씨가 처음으로 일본에 왔을 때 통역을 거친 증언 기록이다. C도, 일본인 사진가인 이토 다카시의 통역을 거친 증언 기록이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장은, 일본군 위안소에서의 피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타 이쿠히코는 이 네 가지 텍스트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위안소로의 연행 방법에 관한 '전매(転売)'설이다. A, B, C 모두, 양아버지와 함께 중국에 가서 (북경의 식당에서) 일본 병사에 의해 위안소로 연행됐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타는 이 증언을 의심하여 '현지에서 전매된 것일지도 모른다'(상동)라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억측을 말하고 있다. 일본군에 의한 연행 사실을 너무나 부정하고 싶었던 나머지 하타가 '(양아버지에 의한) 전매'를 시사(示唆)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 '전매'설에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김학순의 출생년도에 관한 것이다. A, B, C가 '1924년'인데 반해 소장은 '1923년인 것도 신경 쓰인다'고 한다. 그 이유를 하타는, '한국은 호적제도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김학순 씨가 태어났을 당시 호적 제도가 '완비'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식민지기 조선에서는 1923년 조선민사령 개정 시에 '조선 호적령' 시행에 의해 일본과 같은 호적 제도가 도입 및 정비되기 시작했다. 김학순이 태어났을 당시는 그 도입기에 해당한다. 게다가 김학순은 '만주' 출생이다. 또한 당시는 유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영아를 호적에 올리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로 호적에 기재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에 더해 일본과 한국의 나이 세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도(일본은 만 나이지만, 한국은 연 나이) 주의를 요한다. 하타 이쿠히코는 공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네 번째는 '기생 출신'설에 관한 것이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이 가장 맹렬히 공격했던 것은 이 부분이다. 하지만 A, B, C에는 (평양의) 기생 학교에 갔던 경력이 당당히 쓰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책에서 하타 이쿠히코는 '한국에서 창부 예비군으로 여겨지는 기생 출신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건지 첫 보도에서는 이 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p.180)고 우에무라 다카시(당시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의 보도나 아사히 신문의 후

속 보도가 '기생 출신'을 의도적으로 숨기기라도 한 듯이 강조했다(p.180, 182). 하지만 이것은 비열한 사후적 공격이다[5].

또한 '기생'을 '창부 예비군'이라 하는 서술에서도, 하타가 역사적인 존재인 '기생'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일본인 남성 집단의 한국 기생 매춘 관광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하타 이쿠히코는 기생 매춘 관광으로부터 연상해 '기생'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A에서 김학순이 15살 때 "평양의 기생 권번에 (언니와 - 인용자) 함께 다녔습니다. 그 권번은 2층 건물로, ... 학생들도 3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2년정도 권번에 다니며, 춤과 판소리, 시조 등을 열심히 배웠습니다."(일본어 번역, p.43)라고 말한 것으로부터 김학순이 전통적인 가무음곡을 전문적으로 배웠음을 알 수 있다.

애초에 기생은 조선왕조시대에 관청에 소속되어 가무를 보여주며 접대하는 '관기(官妓)'였다. 후에 갑오개혁(1894)을 거쳐 관기 제도가 폐지되고, 식민지 시기에 기생은 일본식의 '예기(芸妓)'로 분류된 것이다(1916년).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기생은 교양을 쌓고 가무음곡에 집중하는 전통을 지키는 한편, 접대부 출신에 유행가를 알고 있는 정도에 술을 따르는 정도도 포함하여 그 양태가 크게 일탈・변화했다(김・김, 2018). 김학순의 경우에는 분명히 전통적인 전자에 속했다. 게다가 김학순은 기생 학교에 다닌 것뿐이므로 정확히는 '기생 학교 출신'이며, '기생 출신'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하타는 교묘하게 바꿔치기를 한 것이다. 물론, 그녀가 기생 출신자였다고 할지언정, 일본군 위안소에서의 성 피해의 경중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나가며

이상 검토했듯, 하타 이쿠히코는 김학순의 증언에 관하여 텍스트의 성격 차이를 무시하였고, 김학순의 증언을 비약하여 '인신매매'라고 단언했으며, 일본군에 의한 연행을 근거 없이 '전매'라고 억측하였고, 식민지 시기의 호적 제도나 기생에 대한 무지도 드러냈다. 일본군 위안소에서의 성 피해라는 중대한 사실보다 위안소에 가기 전의 전력을 캐내는 것은 전형적인 피해자 '과실'론이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기생 출신' 조차도, 최초의 보도를 사용하여 마치 그 사실을 숨긴 양 인상을 조작하고 있으나, 김학순은 A, B, C 모든 증언에서 '기생학교 출신'이라는 경력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타는 일본 사회에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없

[5] 첫번째 부분에서 말했듯이, 한정된 지면에서 김학순 씨의 증언을 '위안부' 피해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니시오카나 하타가 우에무라 씨의 특종 보도를 비판했기 때문에 역사수정주의자들로부터 비열한 공격을 받게 된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이다.

다는 점(그야말로 식민지주의의 지속)과 성폭력을 고발하는 여성이나 '매춘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미소지니가 존재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이에 편승하여, 김학순의 증언을 의심하기 위한 재료나 방법론(억측, 비약, 바꿔치기, 오독 유도 등)을 제공하고, 후에 이어지는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우에노, 박유하 등의 페미니즘을 가장한 역사수정주의와 하타 이쿠히코 등의 미소지니적 역사수정주의는 식민지주의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타 이쿠히코에 의한 김학순의 증언 부정론조차도, 일본군 위안소에서의 성 피해나 일본군의 모습에 관한 김학순의 증언을 부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上野千鶴子　1998 『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青土社

江原由美子 2020「「ミソジニー」って最近よく聞くけど、結局どういう意味ですか？」『現代ビジネス』2020.2.9付。https://gendai.ismedia.jp/articles/-/70296　2021/07/23閲覧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身隊研究会編、従軍慰安婦問題ウリヨソンネットワーク訳、1993　『証言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明石書店

金富子　2017「韓国の〈平和の少女像〉とポスト真実の政治学～日本の植民地主義 / 男性中心的な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を検討する～」(韓国語)『韓国女性学』33-3

―― 2020 「日本社会で「慰安婦」被害を「聴くこと」の不可能性と可能性」金富子/小野沢あかね『性暴力被害を聴く―「慰安婦」から現代の性搾取へ』岩波書店

金富子・金栄　2018『植民地遊廓―日本の軍隊と朝鮮半島』吉川弘文館

秦郁彦 1999『慰安婦と戦場の性』新潮社

朴裕河　2013=2014 『帝国の慰安婦』朝日新聞出版

일본 우익의 '역사 전쟁'과 램지어 사태

야마구치 도모미 | 미국 몬타나주립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 일본의 우익, 정부에 의한 '역사 전쟁'의 문맥에서 "램지어 사태"를 생각하다

- 2020년 12월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IRLE 전자판 공개)
- 2021년 1월 12일 "Recovering the Truth about the Comfort Women." *Japan Forward* (산케이신문 계열 영문 뉴스 사이트)

역사 전쟁과 대외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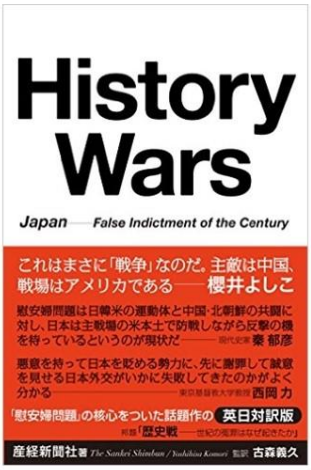
- **'역사 전쟁'**이란
  - 일본 우익의 "중국, 한국이 일본을 깎아 내리기 위해 '싸움'을 걸고 있으며, 그 '주전장(주된 싸움터)'은 미국이다"라는 인식에 근거한, 일본군과 정부의 전쟁 책임을 부정하려는 움직임
  - 2014년 4월에 시작된 산케이신문의 연재「역사전(戰)」
- 역사인식문제에 관해 우익과 정부, 자민당이 영어를 사용하여 대외발신
- 자민당의 2021년도 운동방침 "'역사 전쟁' 및 영토・주권에 관하여,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전략적 대외발신을 강화한다"

산케이신문사『역사전』/ History Wars
(초기의 신문연재를 모아 정리한 서적)

일본어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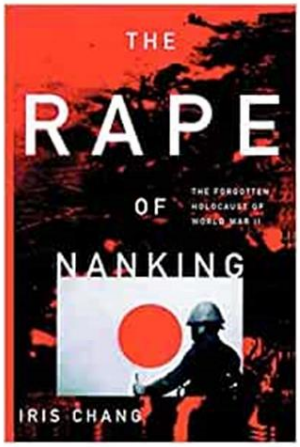
영일대역판 (2015)



역사수정주의운동과 영어발신

- 90년대 중반부터 역사수정주의 확산
  - 1995년 자유주의 사관 연구회
  - 1996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 1997년 일본회의
    -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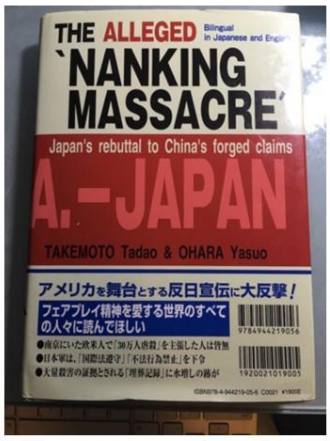
역사수정주의운동과 영어 발신
1. 아이리스 창의『난징의 강간』을 둘러싸고



Iris Chang, *The Rape of Nanking*, Basic Books, 1997

- 1997년　아이리스 창의『난징의 강간』이 출판. 미국에서 베스트 셀러로.
- 일본 우익에 의해, 난징사건에 관한 영어와 일본어의 바이링구얼 책이나 일본어 서적의 영어 번역본 출판

일본회의에 의한 영어 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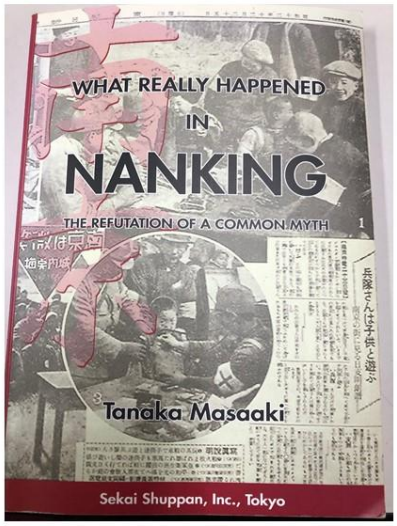




일본회의국제홍보위원회
다케모토 다다오・오하라 야스오
『재심・난징대학살
일영 바이링구얼
The Alleged Nanking Massacre: Japan's Rebuttal to China's Forged Claims 』
(메이세이샤 2000)

영어/일본어 바이링구얼 책

세카이출판에 의한 영어발신



- 일본어 학습지『만화인』(1990～1997) 발행
- Tanaka Masaaki, *What Really Happened in Nanking: The Refutation of a Common Myth* (세카이출판 2000)
  - 다나카 마사아키『「난징사건」의 총괄』(겐코샤, 1987년)의 영어번역본
  - **2001년、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AS, 아시아연구협회)의 회원에게 송부**
- Higashinakano Shūdō, *The Nanking Massacre, Fact versus Fiction* (세카이출판 2006)
  - 히가시나카노 슈도『난징학살의 철저검증』(덴덴샤, 1998년)의 영어번역본

역사수정주의운동과 영어발신
2. 미국 하원 결의 121호

- 2007년 7월 미국 하원 결의 121호
  -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공식사죄를 요구하는 결의
  - 6월,「역사사실위원회」(스기야마 고이치, 사쿠라이 요시코 등) 가 워싱턴포스트지에 의견 광고 "The Facts"를 게재
- 2008 '사실(史實)을 세계로 발신하는 모임' 일본어, 영어 메일 매거진, 사이트 제작. AAS의 회원들에게 영문 메일 매거진 송부



"The Facts"
***Washington Post*, June 14, 2008**

역사수정주의운동과 영어발신
3. '위안부' 기림비와 동상을 둘러싼 '역사 전쟁'



Palisades Park, NJ (2010)

- 현재 북미 (미국과 캐나다) 에 총 15개의 '위안부' 비와 동상
- 2012년 봄부터, 일본정부나 우익에 의한 철거 요구.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의 기림비가 그 시작.

팰리세이즈 파크의 기림비를 둘러싸고

- 재뉴욕일본총영사관에 의한 기림비 철거 압력, 후루야 게이지, 야마타니 에리코 등 자민당 의원 4명에 의한 동시 방문
- 2012년 11월 6일 '역사사실위원회' 의 의견광고 "Yes, we remember the facts"를 뉴저지 지역 신문 *The Star-Ledger*에 게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Yes, we remember the facts.

The purpose of this paid public comment is to present historical facts.

This is an objection advertisement of the "Do you remember?" ad which is currently being posted in Times square. (P.S. It was also posted on the New York Times in May this year as well)
We are here to convey the truth, based on actual historical facts and datas achieved as a result of years of research.

And before you move on, let us please introduce you a videoclip which we believe is indispensable to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is issue.

"Sex, Lies, and Comfort Women"
http://www.youtube.com/watch?v=iwv2qDJ57SY&

Fact 1

Fact 2

Fact 3

Unscrupulous Brokers Run Rampant
Abduction of Rural Women and Girls

Assentors

Shigeharu Aoyama | Yoshiko Sakurai | Koichi Sugiyama | Kohyo Nishimura | Nobuaktsu Fujioka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의 소녀상 (2013年7月)

글렌데일 소녀상과 '역사 전쟁'의 본격화

- 2013년 7월「'위안부'의 진실 국민운동」(사무국 새역모 내) 결성
- 10월 산케이의 LA지국 개설 (2018년 말에 폐쇄)
- 2014년 2월「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lobal Alliance for Historical Truth, GAHT)결성,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연방지법 (추후 캘리포니아주 지법에도) 에 소송
- 4월 산케이「역사전」연재 시작
- 2017년 2월, GAHT의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요구 소송에 관하여, 일본 정부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3월, GAHT는 미국 대법원에서 패소

일본 정부와 '전략적 대외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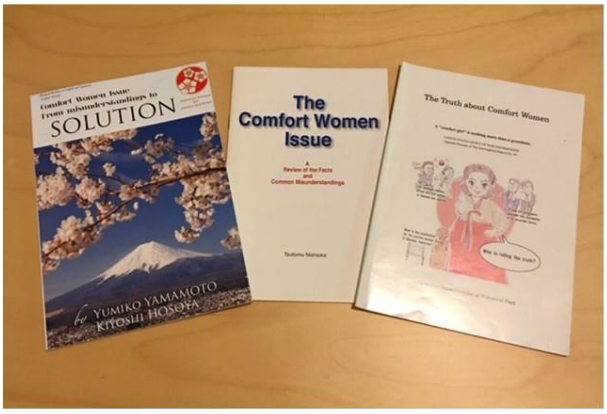
- 2015년부터 일본 정부의 '전략적 대외발신' 예산이 전년도 대비 500억엔 증가
  - 대외발신 거점으로서의 '재팬하우스' (로스앤젤레스, 런던, 상파울로)
    - 영토나 역사인식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발신
  - '친일파・지일파의 육성'

- 램지어 씨　2018년 "일본・미합중국의 대일 이해 촉진 및 미국에서의 일본 법・경제 연구의 발전 공헌에 기여했다"라는 이유로 욱일중수장(旭日中綬章)을 수여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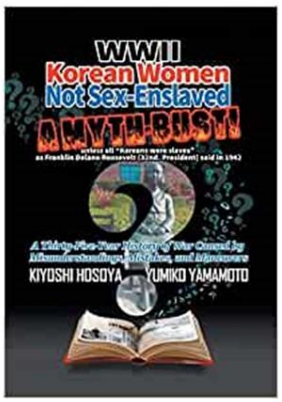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재팬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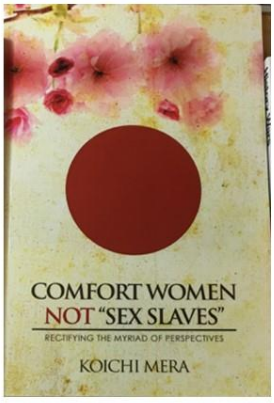
영문 팸플릿, 자비 출판 서적의 발송



왼쪽 : 야마모토 유미코・호소야 기요시의 팸플릿
중앙 : 니시오카 쓰토무 집필, 일본정책연구센터 발행 팸플릿
오른쪽 :「사실(史實)을 세계로 발신하는 모임」발행 팸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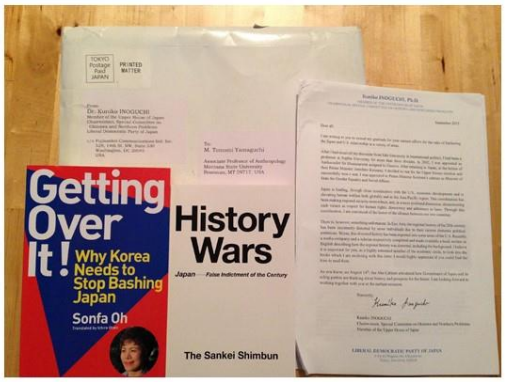


야마모토 유미코・
호소야 기요시
(자비 출판 서적)



메라 고이치
(자비 출판 서적)

이노구치 구니코 참의원 의원이 보낸 서적



- 2015년　이노구치 구니코 참의원 의원(자민당)으로부터 서적과 기사가 미국과 호주의 일본연구학자에게 송부됨
  - 산케이『역사전』책의 일영 바이링구얼 판
  - 오선화(고젠카)　*Getting Over It! Why Korea Needs To Stop Bashing Japan* (다치바나출판 2015)『왜 반일 한국에 미래는 없는가』(소학관신서, 2013) 의 영역본
    - 일반사단법인 이마이 미쓰오 문화도덕역사교육연구회 (후지주택 계열) 조성금 / 2015년도에 3000부를 '미국의 정치가, 연구가, 도서관 등에 송부'
- 가와이 가쓰유키 수상 보좌관(당시)이 미국의 중요 인사 등에게 역사 수정 책을 뿌림

대학생도 타깃으로

- 영화 상영회
  - 2015년 4월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에서 다니야마 유지로 감독의 *Scottsboro Girls*의 상영 심포지엄. 같은 대학 일본어 교원이 기획
  - 다니야마 감독 외에, GAHT 메라 고이치 씨와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Jason Morgan 씨 (현 레이타쿠대학 준교수)도 참가



촬영　고야마 에미 씨

대학생도 타깃으로

- 대학 수업
  - 2017년　GAHT는 Univ of California, Berkeley 학생과 도쿄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회를 여는 것을 기획했지만 중지됨
  - 2019년, '사실(史實)을 세계로 발신하는 모임'에서 Montana State University의 수업용으로 '위안부' 팸플릿 100부 송부

야마구치 앞으로 보내진 '사실(史實)을 세계로 발신하는 모임' 팸플릿 100권





우익 측의 문제 : 학술서, 논문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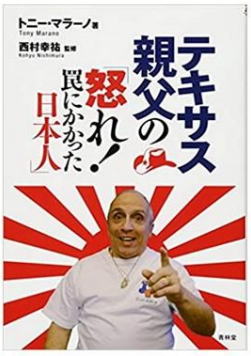
- 우익 측의 문제
  - 자신들의 입장에 선 영어로 된 학술서나 동료평가 논문의 부족
  - 자신들이 주장하는 메시지를 영어로, 특히 영어권을 향해 발신해 주는 학자가 없다

→자신들의 주장이 신뢰받지 못한다?

우익의 발신을 맡은 백인 남성

- Tony Marano(텍사스 아버지) Youtuber
- Michael Yon 라이터
- Kent Gilbert 탤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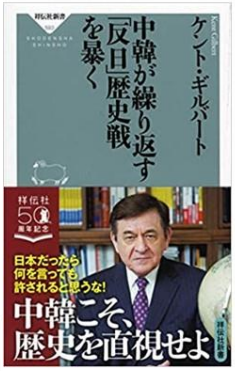
→일본 국내를 향한 발신, 일반 시민들을 향한 발신



Tony Marano

Michael Y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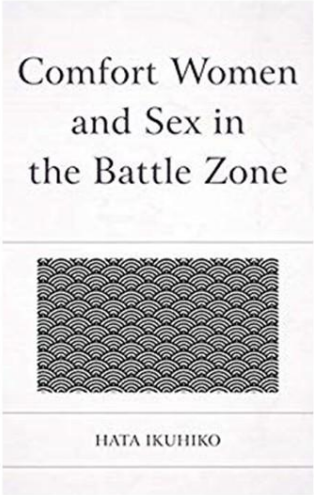
Kent Gilbert

해밀턴 북스로부터의 서적 출판

- Henry Scott Stokes나 메라 고이치 등의 서적
- Hata Ikuhiko. Trans. Jason Morgan. *Comfort Women and Sex in the Battle Zone*. 2018

（하타 이쿠히코『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性)』의 제이슨 모건 (현 레이타쿠대학 준교수)에 의한 번역서）

- '국가기본문제연구소' (2007년 설립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 2014년에「일본연구상」창설
  - 제6회「일본연구특별상」에 *Comfort Women and Sex in the Battle Zone*



산케이신문과『Japan Forward』

- 2017년 6월,『JAPAN Forward』가 산케이신문에 의해 창간.
「일본발 보수계 영어 미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집필자로서 학자들이 발신
  - **Kevin Doak**（Professor, Georgetown University）
  - **Earl Kinmonth**（Taisho University, Prof. Emeritus)
  - **Jason Morgan** (Associate Prof, Reitaku University)『JAPAN Forward』의 집필자
  - **Mark J. Ramseyer**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등

- 램지어 논문 관련 기사는 산케이 계열 미디어가 돌출
(『산케이신문』,『JAPAN Forward』,『석간후지』,『정론』등）

‘학술’로의 접근

- 2016년 9월 ‘역사인식문제연구회’ (다카하시 시로 회장) 설립.
  （2021년 6월 현재, 니시오카 쓰토무 회장, 다카하시 시로, 에자키 미치오, Jason Morgan 부회장）
  그 외, 레이타쿠대학을 베이스로 하는 연구단체로, 램지어 씨가 임원을 맡고 있는 ‘『일본문명』연구 포럼’ 등

- 2018년, ‘위안부’ 진실국민운동, 「국제역사론전연구소」(iRICH)（스기하라 세이시로 회장）발족. 사무국은「새역모」내

우익단체와 램지어 논문

- 「역사인식문제연구소」
  - 사이트에서 우익 학자나 니시오카 쓰토무에 의한 성명을 게재
- 「사실(史實)을 세계에 발신하는 모임」
  - 옹호 기사를 사이트에 게재하고, 메일 매거진으로 선전
-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CH은 램지어 논문의 해설 영상 램지어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다수 발신
- 「국제역사론전연구소 iRICH」
  - 4월 24일、긴급 심포지엄「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국제역사논쟁」개최 램지어 씨가 영상 메시지를 보냄.
  - 6월 3일 iRICH、일본학술회의에 대한 공개질문장
- 램지어 씨의 일본 우익세력과의 접근

우익 정치가와 정부의 반응

- 야마다 히로시, 아오야마 시게하루 등 자민당 우파 의원의 발신. 야마다, 아오야마는 외무성에 대한 공작까지 언급
- 아오야마 시게하루 의원은 3월 1일자 블로그 게시물에서, 램지어에 대한 응원 메일을 보낼 것을 사실상 촉구
- 아리무라 하루코 참의원 의원(자민당), 3월 22일 참의원 문교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질문 중 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경위에 대해 질문
  -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 : "동료평가를 거쳐 공표된 학술논문의 철회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움직임" "학문의 자유로부터의 염려 등도 표명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 **하기우다 문부과학대신** : "연구자가 외부로부터 간섭받는 일 없이,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연구활동을 하여 그 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역사 전쟁'과 램지어 문제

- 하버드대학 로스쿨의 권위를 가지는 램지어는, 우익에게 있어서 영어권을 향해 발신할 수 있는 아카데미아의 인재
- 우익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료평가' 논문
- 램지어 씨의 일은, 일본정부나 우익의 '역사 전쟁'의 문맥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넓혀진 것

앞으로의 전개는 ?

- IRLE의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 램지어 씨와 일본 우익의 관계 심화?
  - 아리마 데츠오『'위안부'는 모두 합의계약을 하고 있었다 하버드대학교수 램지어 논문의 충격』(WAC 2021년 7월)
  - 램지어 씨가 서문을 기고
    - 일방적으로 공격받았다고 하는 램지어 씨의 인식
    - 아리마 씨 "램지어의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이다. 우리들의 싸움은, 램지어의 싸움이다."
    - 발행한 출판사는 WAC (잡지『WiLL』등 우익 서적을 다수 발행하는 출판사)



세션 3. 역사부정의 백래시

‘램지어 사태’로 본 우파 역사부정주의-이데올로기, 수법, 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강성현 I 성공회대학교 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이데올로기: 우파 역사부정주의와 탈진실 반지성주의

3. 수법: 부정의 실증주의와 곡해, 그리고 찬탈

4. 우파 역사부정주의의 조직과 활동

I
들어가며

◈ '램지어 사태'의 시작

- 산케이 보도



– 2021년 1월 28일 「전세계로 확산되는 '위안부=성노예'설을 부정, 미 하버드대 J. 마크 램지어 교수가 학술논문 발표」 보도

– 1월 31일 램지어 논문 에 대한 후쿠이 요시타카(福井義高) 교수(아요야마가쿠인대학)의 해설 게재

– 램지어의 감사의 말에 등장하는 역사부정주의자

– 램지어 논문 요약 + 후쿠이 요시타카 해설 -> 하버드대의 권위로 ' 위안부=성노예'를 하나의 설로 각하하려는 산케이의 준비된 기획

◈ '램지어 사태'의 시작



ハーバード大　J・マーク・ラムザイヤー教授が学術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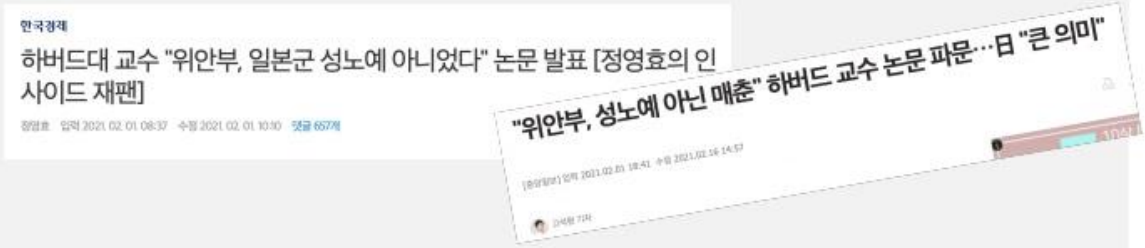
「慰安婦＝性奴隷」説否定

The 考

2021년 1월 31일 산케이

◈ '램지어 사태'의 시작

- 한국으로 사태 확산



– 2021년 2월 1일부터 한국 언론은 일제히 "하버드대 교수"와 "위안부는 성노예 아닌 매춘부"라는 표현이 부각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

◈ '램지어 사태'의 시작

- 사태의 확산과 공방



– 시민사회와 학계, '학문의 진실성'과 '연구의 성실성'에 입각한 램지어 비판 성명과 학술회의 개최

– 한미일 역사부정주의자, '학문의 자유'를 내세워 램지어 구하기. 국제학술지의 심사를 거쳐 게재 승인 -> 독창성 인정 받은 것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학술적 진전을 이룬 것이라 주장

– 국제법경제학리뷰(IRLE)의 오락가락하는 '우려 표명'(expression of concern) 행보

◈ '램지어 사태'의 시작

- 램지어는 왜?



– 2017년부터 갑자기 일본의 피차별 부락민, 재일조선인, 오키나와인, 일본군'위안부' 등에 대해 글을 많이 쓰기 시작. 이 주제들은 영미권 법경제학 분야에서도 매우 낯선 것인데, 램지어는 이런 소재들을 부정과 혐오의 시선으로 논의하는 글을. 쓰면서 학문적 성과로 둔갑시킴

– 미국(하버드대)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으니 인종 혐오는 "의도적으로, 그러나 마지못해" 피하지만, 미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부락민, 재일조선인, 오키나와인에 대한 차별 합리화에 대해서는 "더 자유로운 토론이 허락"되니 하겠다는 말

연구 질문들

- 램지어는 왜 2017년부터 역사부정주의자의 상투적 주장을 법경제학의 외양으로 '도발'하게 되었을까? 2017년 이후 부정과 혐오로 점철된 글에 도움을 주고 받은 인사, 참고문헌, 직접 관련 기금, 기타 관련 조직과 활동은 어떠한 양상을 하고 있는가?
- '램지어 사태'로 본 한미일 역사부정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수법은 어떤 내용이고, 그 조직과 활동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 확산되고 있는가?

II
이데올로기: 우파 역사부정주의와 반지성주의

◈ 램지어의 수상한 감사

▪ 제이슨 모건



– 2017년 후 쓴 7개 램지어 글에서 4, 5회 중복 언급되는 제이슨 모건 (Jason M. Morgan), 미와 요시로, 후쿠이 요시타카 교수

– 제이슨 모건은 대학원생일 때부터 **위안부의 진실 국민운동** 우파 역사부정주의 단체 지원을 받고 우파 역사전쟁의 홍보 역할을 함

– 2016년 위스콘신대에서 현대 일본법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기 전까지 일본과 미국을 넘나들며 벌인 역사부정 활동

– 2016년부터 반공·반미·혐한·혐중·친일 시각에서 일본 역사부정주의 입장을 완벽히 '빙의'한 책들을 출판

◈ 램지어의 수상한 감사

▪ 제이슨 모건



– 그에 따르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공산주의를 응징하기 위해 미국과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정의의 편

– 미국 학계는 좌파 과격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고, 객관적이지 못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포스트모더니즘 정서주의와 반지성주의에 사로잡혀 있음

◈ 램지어의 수상한 감사

▪ 제이슨 모건



– 일본 우파 싱크탱크 **일본전략연구포럼** 선임연구원

– 이 단체의 기금으로 하타 이쿠히코의『위안부와 전장의 성』(1999)을 Comfort Women Sex in the Battle Zone(2018)으로 번역 출판

– 현재 레이타쿠대 교수이고, 니시오카 쓰토무가 회장을 맡고 있는 역사인식문제연구회의 부회장임

– 램지어와 모건의 교류는 역사부정주의 네트워크의 한 부분. 램지어의 주장, 논리, 방법은 한미일 역사부정주의 네트워크의 산물

– 이 네트워크는 반일을 죄악시. 반일에 대해 공산주의자, 종북좌파 색깔을 씌움. 일본제국주의 역사 미화

◈ 정치적 의도의 역사적 부정주의

- 부정의 세 가지 유형(스탠리 코언, 2009:58-62)



- 문자적 부정(literal denial)은 사실 그 자체를 부정.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부정
- 해석적 부정(interpretive denial)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국가폭력 또는 인권침해임을 부정.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났지만, 그 사건은 이렇게(부정의 맥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부정
- 함축적 부정(implicatory denial)은 사건이 사람들에게 주는 정치적, 심리적, 도덕적 함의를 부정. 그 일은 일어났지만, 이를 가슴 아파하거나 시급히 조치해야할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것.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거나 남들도 그랬다거나 더 심한 일도 많다는 식으로 부정

◈ 정치적 의도의 역사적 부정주의

- 램지어 전후의 역사부정주의

- 램지어 전 한미일 역사부정주의자들이 정치적 의도로 추진했던 '수정주의' 시도는 유사-학술장에서 상호인용 방식으로 진행. 공식 학술장에서 학술적 진실성과 연구의 정직성을 기준으로 심사받지 않았음
- 부정과 혐오로 점철된 책 출판, 온라인 강의 컨텐츠 등을 진영화된 방식으로 유통하고, 말로만 토론을 내세우고 사실상 상대 진영을 향해 일방으로 '샤우팅'하는 선전
- 램지어 논문으로, 역사부정과 혐오 발화가 SSCI급 국제학술지에서 심사를 거쳐 학술적 주장으로 포장되는 사태.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형해화

◈ 탈진실 반지성주의

- 탈진실은 사실의 진위와 상관없이 신념이나 감정으로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현상. 우파 역사부정주의자들은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있다고 주장하지만, 진실을 상대화하거나 심지어 해체시킴
- 탈진실시대 우파 역사부정주의는 반지성주의 현상·경향·태도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 반지성주의란 지성, 지식, 전문에 적대하는 태도이자, "이성적·합리적 소통을 수용하지 않는 정신 상태나 태도"를 말함
- 우파 역사부정주의자들은 입만 떼면 팩트를 추구한다고 말하는데, 추구라기보다 집착하는 듯 보이며 갖가지 편향(행동 편향, 가용성 편향, 확증 편향, 부정성 편향, 이야기 편향)에 갇혀 있음(강준만, 2019:35, 40). 자기 진영(영역)을 중심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그 바깥에 대해서 알기를 거부하고 가짜라고 하며 적대하고 혐오

◈ 탈진실 반지성주의

- 탈진실과 반지성주의가 맞닿는 지점에 가서 아무리 "이건 거짓이야"라고 폭로하거나, 탈진실 반지성주의적 '태도'로 치닫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당신은 거짓말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탈진실 반지성주의 '현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향'에 더 휘말려 드는 것임
- 우파 역사부정주의자들은 역으로 일본군 '위안부' 연구자들과 학계, 이 문제에 공감하는 시민들을 향해 '반일'에 사로잡혀 거짓말하는 집단, 아예 한국은 거짓말 나라고 한국인은 거짓말 국민으로 몰아감. 우파 역사부정주의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실증적이고 모던하며 진실에 입각해 있는 반면, 상대가 감정적이고 포스트모던하며 거짓이고 심지어 반지성주의적이라 규정함. 거기에 공산주의로 덧씌움
-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이영훈, 2017:10)

◈ 탈진실 반지성주의

– 탈진실시대 반지성주의라는 시각은 2017년 이후 램지어의 글들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함. 일본군 '위안부'나 '징용' 관련 글뿐 아니라 일본 내 피차별 부락민, 재일조선인, 오키나와인 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계급적·인종주의적 혐오 인식을 드러내는 글이나 일본과 관련된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왜곡과 오류들은 바로 진영화된 사고와 편향, 적대의 심화의 원인이자 결과임

– 탈진실시대 뉴미디어 세계와 양분화된 진영의 한쪽에서 역사부정주의는 쉽게 불식되지 않을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이 흐름은 한미일 트랜스내셔널한 네트워킹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음. '학술적 진실성' 너머에서 아른거리는 한미일 역사부정과 혐오의 네트워크를 겨냥하지 않고서는 이 현상/사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힘들 것임

III
수법:
부정의 실증주의와 찬탈

◈ 부정의 실증주의



- 역사부정주의자들에게 "실증주의는 희생자들의 기억이 부정확하고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인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환시키는" 수법
- 역사부정주의자들은 논거로 각종 통계와 수치를 나열하면서 실증적 학문 모양새를 취하고 이게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자료는 누락하고 또 어떤 자료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을 왜곡함.
- 공문서 해석의 경우에도 문서가 나오는 전후 배경과 맥락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문서 속에서 자기 논거로 필요한 부분의 문장과 단어만 골라서 뽑아 먹는 수법을 구사함. 과잉 해석, 일반화 오류, 곡해

◈ 찬탈과 궤변

▪ 피해자 목소리의 절취와 찬탈

- 역사부정주의자들은 피해자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이 아니므로 역사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입맛에 맞는 증언은 일부 절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피해자에게 반하는 방식으로 '찬탈'하는 수법을 구사함

▪ 궤변, "목소리 큰 쪽이 이긴다"

- 역사부정주의자들은 사실을 증거하는 자료가 있는지 묻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 프레임 싸움. 100프로 증명할 수 없으니 모든 사실은 논증 문제가 아니라 설득력 문제라고 주장. "궤변일지라도 열심히, 목소리 높여, 나아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함

◈ 이 모든 수법을 구사하는 램지어



- 램지어의 핵심 주장(업자와 여성['위안부']은 '신뢰할 수 있는 약속'에 따른 '노역 계약'을 맺었고, 각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계산을 한 끝에 여성은 짧은 계약 기간 동안 고수익을 거두었고 자유 폐업해 귀환할 수 있었다.)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1차 자료를 의도에 맞게 선별 가공하고 곡해했으며, 인용 방식도 부정확하고 부정직하게 이루어졌다는 반박 비판이 쏟아졌음
- 구체적으로 공창이나 위안소로 끌려간 조선인 여성들에 대한 계약서를 견본으로도 제시하지 못한 점, 계약 내용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때 인용한 원 저자의 의도와 맥락에 반해서 선별 가공하고 왜곡해 서술한 점, 피해 여성의 증언을 왜곡한 점, 미군 문서로부터 일부 내용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선별 가공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점이 지적되었음

◈ 이 모든 수법을 구사하는 램지어



- 램지어는 논문에서 업자의 취업사기, 부모의 학대와 선불금 착취를 언급하면서 업자와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심지어 여성이 업자·업주의 거짓말과 사기도 알 수 있었고 "부모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음. 일본 정부와 군의 면책을 시도하는 셈
- 램지어는 문옥주 증언을 절취하고, 왜곡해, 그녀의 목소리를 찬탈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문옥주 증언집의 원본을 읽고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증언을 왜곡해 영어로 번역한 한국역사연구소(KIH)를 인용했는데, 이건 거창한 이름과 달리 역사부정과 혐오를 드러내는 글만 모아놓은 일베 성향의 익명 온라인 블로그임

요약

- 역사부정주의자의 이데올로기와 수법은 램지어 교수의 글에서도 전형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학술적 진실성의 문제로 제한하지 않고, 그 정치적 의도와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남. 이전과 달리 램지어가 하나의 변곡점이라면, 역사부정주의 주장이 미국 중위 SSCI급 학술논문에서 이루어졌고, 문제없이 심사를 통과해 온라인판에 일단 게재되었음. 이는 한일 우파 역사부정주의자들이 '램지어 구하기'에 나선 배경 및 이유와 직결됨

Ⅳ 조직과 활동: 역사전쟁과 램지어 구하기

◈ 일본 극우의 역사전쟁



▪ 위안부의진실국민운동



– 2013년 7월 29일 결성. 대표는 새역모 고문, '일본회의' 대표위원, 일본 극우 단체들의 배후로 지목되는 카세 히데아키加瀬英明(외교평론가)

– 고노담화 철회 촉구, '주전장' 미국에서 '소녀상' 설치 저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방해 활동 등을 목표로 하는 극우단체들의 네트워크 조직. 사무국은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새역모)에 설치

– 유튜버 토니 마라노, 변호사 켄트 길버트, 저널리스트 헨리 스톡스, 작가 마이클 욘, 그리고 제이슨 모건 등 일본 우익을 대변하는 미국인 스피커 지원

◈ 일본 극우의 역사전쟁

なでしこアクション Japanese Women for Justice and Peace

正しい歴史を次世代に繋ぐネットワーク 「慰安婦=性奴隷」のウソに終止符を！

▪ 관민 일체화된 역사전쟁











◈ 일본 극우의 역사전쟁



■ 역사인식문제연구회



- 2016년 10월 1일 설립
- 회장은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부회장은 다카하시 시로, 제이슨 모건,(이하 레이타쿠대학) 에자키 미치오(평론가)
- 국제사회의 반일세력에 맞서 조직적으로 연구, 자료 수집, 연구자 육성, 외국어 홍보, 정부 및 관계기관 정책 제언 등 활동
- 『역사인식문제연구』 연 2회 발행. 2017년 9월 창간호 – 2021년 3월 제8호 발간
- 일본에 『반일 종족주의』 주장과 저자 적극 소개

◈ 일본 극우의 역사전쟁

■ 니시오카 쓰토무



- 그의 책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한국에 이우연 번역과 미디어워치 출판으로 소개되었음
- 극우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에서 활발하게 투고 활동
-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 모랄로지(moralogy) 연구소 역사연구실(2021년 역사연구 프로젝트트로 변경)의 책임자
- 역사연구실의 활동과 역사인식문제연구의 활동이 연결되어 있음

◈ 일본 극우의 역사전쟁

■ 모랄로지연구소



– 연구소 역사연구실의 프로젝트 중 주목되는 건 일본문명연구포럼(대표는 니시오카 쓰토무)
– 램지어, 제이슨 모건, 그리고 케빈 도크(Kevin M. Doak) 교수가 이 포럼의 외국인 임원
– 케빈 도크는 조지타운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 학과장, 일본학 교수, 사사카와재단(Nippon Foundation) 석좌교수
– 이 포럼은 미일 우파 역사부정주의자 네트워크 조직. 2019년 7월 램지어와 도크 교수를 초청해 특별연구회 개최

◈ 일본 극우의 역사전쟁

– 일본의 관민 일체화된 역사전쟁은 주전장 미국과 유엔무대로 향했고, '소녀상' 설치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교과서 서술을 방해하기 위해 외교 압박과 사법 제소, '시민 여론'을 가장한 단체 동원, 역사부정주의 주장의 선전 및 확산에 조직적인 역량을 쏟았을 뿐 아니라 미국 대학과 학계에까지 침투했음
– 정부의 공공외교 예산이나 기업의 기부금뿐 안이라 모랄로지 재단과 연구소를 통한 학술연구와 교육 지원은 우파 역사부정주의의 주장과 수법을 재생산하고 확산시키는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했음. 반일을 죄악시하는 반공·혐한·혐중 성향의 역사부정주의자들의 국제적 교류와 활동에 기름을 친 것

◈ 일본 극우의 역사전쟁

– 미국인이지만 레이타구대학에서 교수로 발탁된 반미·친일 성향의 제이슨 모건과 하버드대 로스쿨 일본학 교수 램지어 관계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둘의 관계는 『산케이』 계열의 영자신문 재팬 포워드에서도 확인됨. 서로 띄워주고 끌어주면서 역사부정주의 시각을 신념화하고 그 신념에 맞는 자료들만 선별 가공하고 곡해를 강화했음

– 이런 상황에서 2021년 2월 '램지어 사태'가 터지자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 부회장 모두의 이름으로 IRLE 편집장에게 램지어 교수 지지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심지어 "놀랄만큼 광범위한 원자료에 근거한 탁월한 학술적 결과물"로 "칭찬받아 마땅한 위대한 성취물이지 검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음

◈ 한국의 역사부정과 혐오 확산

▪ '반일 종족주의' 현상의 확산



– 2019년 7월 『반일 종족주의』 출간, 한일 우파 역사부정주의 네트워크가 양질적으로 심화

– 2020년 5월 정의연, 윤미향, 이용수를 타겟으로 한 '역사부정과 혐오의 백래시' 사태. '5.16'(군사쿠데타)을 겨냥해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과 맞물려 전개된 한국 '뉴라이트'와 역사부정주의의 의도와 기획

– 뉴라이트 등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5.7, 5.25)을 '활용'해 '윤미향 사태', '정의연 사태'를 만들었고, 이에 대한 진영화된 반발은 '이용수 사태'로 이어졌음

◈ 한국의 역사부정과 혐오 확산

▪ '반일 종족주의' 현상의 확산



- 이 사태를 보도하는 극우 가짜뉴스 미디어들은 물론, 보수 일간지의 프레임과 숱하게 양산된 기사에서도 『반일 종족주의』의 언어, 논리, 수법이 그대로 재현
- "정대협은 그들의 공명심을 충족하기 위해, 그들의 직업적 일거리를 잇기 위해" "개인의 인생사 따윈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팽개치고" 위안부를 "민족의 성녀로" 앞세워 시위를 벌이면서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전체주의적 권력으로 군림하였다."(이영훈 외, 2019:337-338)

◈ 한국의 역사부정과 혐오 확산

▪ '반일 종족주의' 현상의 확산



- 한국 보수 언론(조중동)의 기사들이 일본어 온라인 판으로 동시에 일본에 출고되었음
- 이를 받아쓰는 일본의 극우 보수 언론은 이 사태를 윤미향,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 위안부 가짜", 일본군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사실 근거들로 삼아 보도했음
- 한국 보수 언론은 이를 다시 현지(일본) 특파원 칼럼 등으로 한국에 보도하면서 부정과 혐오를 진실로 포장했음



◈ 한국의 역사부정과 혐오 확산

▪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4차, 9차 위안부상 반대집회

– 2019년 12월 2일 조직.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주동식(제3의길 주필),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 김소연(대전시의원)이 '징용노동자상' 설치 작가인 김서경, 김운성 부부에 의해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소송에 피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 설립

– 2020년 1월 1일 수요시위가 진행되는 소녀상 옆에서 4차 위안부상 반대집회를 열고 "수요집회 중단" "소녀상 철거"를 주장

– 반문, 반북, 반중을 위해 친일, 친미를 커밍아웃한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부정주의 단체와 극우 뉴미디어(유튜버 등)

◈ 한국의 역사부정과 혐오 확산

▪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 2020년 5월 12일 23차 위안부상 반대집회. 한국 뉴라이트 역사부정주의자 입에서 "치욕스런 위안부 이력 속속들이 까발려 모욕 준 정대협과 여가부는 용서 못할 인권침해 집단"이라는 외침이 나왔음

–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그들의 입에서 피해생존자들의 '인권'이 거론. 이것이야말로 피해자들을 간악하게 이용해먹는 '복화술'임

– 매주 수요시위가 열리는 소녀상 옆에서 친일 애국론, 매국 문재인 등 주장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부정과 혐오 발화(denial and hate speech act)를 쏟아냄

◈ 한국의 역사부정과 혐오 확산

▪ 이승만학당&이승만TV



이승만TV
구독자 9.78만명

- 2021년 6월 7일 이승만학당 설립, 6월 15일 이승만TV 개설. **반일종족주의 타파** 강의 시리즈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강의 시리즈 등 역사부정과 혐오 컨텐츠의 산실
- 램지어 사태와 관련해선 2021년 2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8개 강의 편성
- 한국어 강의보다 일본어 자막 강의(일본인 대상) 조회수가 1.5-2배 높음
- 이승만TV는 한일 역사부정주의자들이 연대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



(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강의 시리즈
(왼쪽) **반일종족주의 타파** 강의 시리즈

◈ 한국의 역사부정과 혐오 확산



■ 국사교과서연구소



– 2018년 3월 12일 교과서 우파의 새로운 인물로 등장한 김병헌을 내세워 극우 인터넷언론 프리덤뉴스(대표 김기수 변호사) 부설로 설립

–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공동대표이기도 한 김병헌은 2020년 4월 28일 소녀상 앞에서 처음으로 위안부법 폐지 촉구 시위, 10월 4일 별도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일종의 자매단체 설립. 11월 2일부터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를 공격하는 집회를 연이어 개최 활동

◈ 한국의 역사부정과 혐오 확산







소녀상 앞 첫 위안부피해자법 폐지 촉구 시위(2020.4.28)
- 김병헌

◈ 램지어 구하기

▪ 램지어의 가치와 의미



- 부정(denial)의 목적과 부정(negative)의 실증주의 수법, 혐오의 시각으로 쓴 글들을 학술적으로 포장해 꽤 공인된 국제학술지에 투고하고 심사(peer review)를 통과할 수 있는 '하버드대' 교수
- 미국인 스피커 '택사스 대디' 토니 마라노(유튜버)나 캔트 길버트(변호사) 같은 일본 극우 역사부정주의자들의 재정 지원을 노골적으로 받는 '용병'들과 비교불가
- '소프트권력'의 지원을 받은 '장학생'으로서 역사부정주의 확산에 자신의 행보를 같이 해왔다는 것은 램지어의 작업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음

◈ 램지어 구하기

▪ 한일 역사부정주의자의 대응



- 2021년 2월 6일 니시오카 쓰토무 성명
- 2월 8일 일본 우익 교수 6명 IRLE 편집장에게 송부
- 2월 9일 정규재, 김대호, 주동식, 한민호, 이영훈, 류석춘, 정안기, 이우연, 김병헌, 최덕효, 황의원, 김기수, 이동환, 김소연이 연명한 공동성명. 한국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인사들, 반일 종족주의 저자 등임

◈ 램지어 구하기

- 한일 역사부정주의자들의 대응
  - 2021년 2월 9일 한국 역사부정주의자의 공동 성명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의 계기로 삼아야!"
  - 정대협/정의연 운동단체 음모론, 박유하, 이영훈, 류석춘 교수 등의 작업만 학술적이고, 이를 반일 종족주의에 충만한 언론과 운동단체, 이에 동조한 사법부가 자신들을 가해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램지어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투고돼 동료심사를 거쳐 게재 승인을 받았고 독창성을 인정받았는데, 학문과 무관한 외부 세력이 망언 운운하며 학술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이는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키는 반학문적 망동(이런 표현은 이영훈 레퍼토리)
  - 이런 구도의 싸움을 벌이려는 게 램지어 구하기의 본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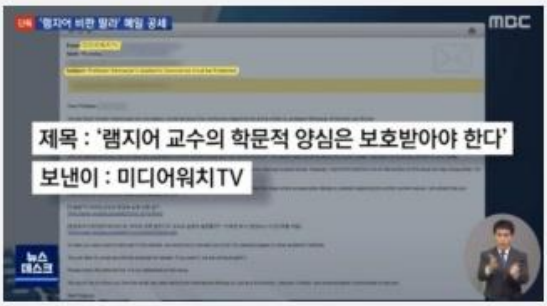
◈ 램지어 구하기

- 한일 역사부정주의자들의 대응
  - 이 때만 해도 국제 학계, 특히 일본사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비판이 나오기 전이라 램지어 논문이 국제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고, 차차 학술 토론을 거치며 램지어 교수 논문이 검증될 것이라고 과감하게 주장했음
  - 그러나 비판이 쏟아지자, 이승만TV 관련 강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 한국 역사부정주의자들의 당혹스러움이 엿보임

◈ 램지어 구하기

- 한일 역사부정주의자들의 대응





– 2월 14일 황의원(미디어워치 대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공동대표), 하버드대 교수들에게 이메일 발송

◈ 램지어 구하기

- 한일 역사부정주의자들의 대응











◈ 램지어 구하기



▪ 램지어의 반격과 강행 돌파



– 2021년 4월 24일 일본 우파 역사부정단체 국제역사논전연구소와 나데시코 액션이 개최한 심포지엄(주제: 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국제역사논쟁)에 보낸 램지어의 영상 메시지

– 자신을 향한 젊은 교수들의 비판은 "학문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학자에게 암살미수와 같은 행위를 한 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

– 램지어, 5월 5일 이진희 교수에게 "흉포한 공격"이자 "심각한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협박성 이메일 보냄

THANK YOU

독일 ‘소녀상’ 건립 난항 사례 분석과 ‘위안부’ 운동 방향을 위한 제언

나유신 I 독일 GPB 컬리지 강사

1. 들어가며

일본군 ‚위안부‘(이후 인용 부호 생략) 운동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여사가 피해자로서 첫번째 증언에 나서며 큰 추진력을 얻게 된다. 이후 이어진 피해자들의 육성 고발은 법적 규정, 정치적 관계, 학문적 이론으로 미처 다 풀어낼 수 없는 진실을 폭로했고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피해자들의 고발은 결국 국제 사회로까지 이어져 1996년 UN 인권위원회에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1998년 UN인권소위원회에서 맥두걸 보고서가 채택되기에 이른다. 이렇듯 국제 사회는 위안부 사건이 고발하는 인권 침해와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고 2018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에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을 권고하는 등 피해자의 인식과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 국제 사회에는 이와는 사뭇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해외에서의 평화의 소녀상(이후 소녀상) 건립을 둘러싼 마찰이다.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도시와 베를린 등 독일 도시에서는 소녀상이 건립될 때까지 해당 당국과의 긴 줄다리기가 있어야 했다. 적지 않은 경우 해당 당국에서 건립 자체를 승인해 주지 않거나 공공 장소에서 건립이 끝내 거부되었다. 소녀상이 국제 사회가 모두 공감하는 반전시 여성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표상하는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동상 건립이 환영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 사회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위안부 운동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이 글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평화의 소녀상 건립 난항 사례 - 프라이부르크와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국제 사회에서 환영 받지 못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의 반대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글렌데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 소녀상이 세워지는 지역마다 일본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해당 사회에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했고 이는 실제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일례로 샌프란시스코 시는 소녀상을

세우는 댓가로 오사카 시와의 60년 파트너쉽을 종결시키는 희생을 치뤄야 했다. 독일에서도 소녀상이 건립되려고 시도될 때마다 번번히 이런 난관에 부딪혀야 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권 의식이 발달하고 과거 청산에서 모범적 사례로 일컬어지는 독일측이 한국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일본에 손을 들어 주는 듯한 모습이 당황스럽기까지 할 정도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일본과 독일이 정치 경제 역사적으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양 국가는 „가치공유 파트너Wertepartner"로서 최근 인도 태평양 안보를 위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1] 이런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은 국가 및 민간 차원에서 소녀상 건립을 공격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저지라는 직접적 원인 외에 해당 지역에서 소녀상 건립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물음에 대한 탐구는 소녀상을 보는 국제 사회의 시각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 결과적으로 향후 해외 소녀상 건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와 베를린 두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2016년 프라이부르크 시와 수원 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며 녹생당 소속의 프라이부르크 시장 디터 잘로몬은 평화의 소녀상을 선물하겠다는 수원 시장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 하지만 얼마 후 이를 알게 된 일본측은 프라이부르크에 소녀상이 세워질 경우 프라이부르크 시와 마츠야마 시의 자매결연을 끊겠다고 나섰다. 프라이부르크 시장은 이에 소녀상을 거절했고 소녀상은 결국 프라이부르크 시를 밟지 못했다.

잘로몬 시장은 2016년 9월 소녀상 거절을 결정하며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고 문화를 잘못 이해했다고 („Kulturelles Missverständnis") 말했다. 그의 이 말은 소녀상의 의미를 몰랐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2016년 3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소녀상을 관람한 바 있고 수원 시에 보내는 친서에서 "자유의 상징이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자는 의미에서 수원시장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2] 독일 언론 보도에서도 잘로몬 시장이 소녀상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잘로몬 시장은 2015년 위안부 한일 협정과 일본이 사과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에 소녀상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특히 독일의 기억 문화를 생각할 때 전시 성폭력의 희생자를 기리는 것에 어떤 문제

[1] 「독일 연방 국방부 홈페이지」, 2021.4.13. „Japan: Wertepartner im indopazifischen Raum Veröffentlichungsdatum" https://www.bmvg.de/de/aktuelles/japan-wertepartner-indopazifik-5054598

[2] 「세계일보」, „자유의 상징 ‚소녀상' 독일에 세우겠다" 2016.9.6. https://www.sedaily.com/NewsVIew/1L1AU1LV1X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3]

그러면 그는 무슨 „실수"를 했다는 것일까? 그가 말하는 실수란 소녀상이 보편적 가치를 위한 상징이라고만 생각했지 거기에 다른 목적, 즉 일본을 대외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몰랐다는 것이다.[4] 그는 소녀상이 희생자를 기념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가해자를 고발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는 심지어 한국 측에 의해 „이용당한(instrumentalisiert")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5] 잘로몬 시장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각에서 보자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소녀상 건립에 찬성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일간의 갈등에 연루되어 본의 아니게 한국과 한 편이 되었고 일본으로부터 뒤늦게 경고를 받게 된 형국이다. 다시 말해 자신은 소녀상의 보편적 가치에 동의한 것이지 일본을 압박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일본을 압박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슈트트가르터 짜이퉁은 이와 관련해 염태영 시장이 „조금 술책을 부렸다(tricky)"고 분석했다. 신문은 염 시장이 소녀상이 „독인 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염 시장은 과거 인권운동가로서 2015년 한일 협정 후에 국제적으로 소녀상을 이용해 일본에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6]

독일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타쯔 또한 소녀상을 일본에 도덕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진단하면서 수원 시가 도시간 자매결연을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봤다.[7] 본(Bonn) 대학의 일본학과 교수인 쵤너는 프라이부르크 소녀상 건립에

---

[3] 「Badische Zeitung」, 2016.9.23. „Bronzefigur löst diplomatischen Ärger mit Japan aus" https://www.badische-zeitung.de/bronzefigur-loest-diplomatischen-aerger-mit-japan-aus--127585959.html

[4] 「Badische Zeitung」, 2016.9.24. „Salomon sieht Statuen-Streit als "kulturelles Missverständnis" https://www.badische-zeitung.de/freiburg/ob-salomon-ueber-den-wirbel-den-eine-statue-ausgeloest-hat

[5] 「Badische Zeitung」, 2016.9.23. „Bronzefigur löst diplomatischen Ärger mit Japan aus" https://www.badische-zeitung.de/bronzefigur-loest-diplomatischen-aerger-mit-japan-aus--127585959.html; 「taz」, 2016.10.5, „Keine Erinnerung an „Trostfrauen"", https://taz.de/Kriegsverbrechen-Denkmal-in-Freiburg/!5341049/
잘로몬 시장은 한 인터뷰에서는 „악용(missbraucht)"된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Badische Zeitung」, 2016.9.24. „Salomon sieht Statuen-Streit als "kulturelles Missverständnis" https://www.badische-zeitung.de/freiburg/ob-salomon-ueber-den-wirbel-den-eine-statue-ausgeloest-hat)

[6] 「Stuttgarter-zeitung」, 2016.10.3, „OB opfert Trostfrau für Japan",
https://www.stuttgarter-zeitung.de/inhalt.freiburger-partnerschaften-ob-opfert-trostfrau-fuer-japan.51c9a970-2c78-486d-beff-681ecc2ea086.html

[7] 「taz」, 2016.10.5, „Keine Erinnerung an „Trostfrauen"", https://taz.de/Kriegsverbrechen-Denkmal-in-Freiburg/!5341049/

반대하면서 소녀상은 일본에 대한 도덕적 유죄판결의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8]

요컨대 프라이부르크 시장은 소녀상으로 상징되는 위안부 문제가 두 나라에서 얼마나 논란이 되는 주제인지 모르고 독일의 과거 청산의 경우만 생각했다는 점에서 문화적인 오해를 했고 소녀상에 담긴 대일 압박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측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 소녀상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베를린 소녀상이 건립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베를린 소녀상은 2020년 9월 28일 베를린 미테구 한 골목 어귀에 설치되었다. 이를 위해 NGO 단체인 코리아 협의회는 관할 부서인 „도시 및 건축 예술 위원회(Kommission Kunst im Stadtraum/Kunst am Bau)"에 소녀상 건립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다음날인 9 월 29일, 일본측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10 월 7일 두 명의 구청직원이 코리아 협의회를 찾아와 동상 설립 허가 철회서를 전달하고 10월 14일까지 자비로 동상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타쯔 보도에 따르면 이 공문에는 „마치 코리아협의회가 구청을 속였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9] 공문에 따르면 코리아 협의회는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비문 내용을 관청에 고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독일과 일본의 외교적 관계에 심각한 부담을 줬다고 한다. 비문 내용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전시 성폭력은 독일에 의해서도 저질러졌고 현재까지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비문에서는 일본만 언급되어 있고 이는 „한국 입장에서 일본 정치를 겨냥"한 언급이라는 것이다. 비문이 „폭력적 분쟁이 일어난 시간, 장소, 동기와 무관하게" 서술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본에만 집중해서 일본에 반대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녀상이 공공장소를 일본에 반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도구화(Instrumentalisierung)"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베를린과 일본의 관계가 매우 돈독함을 강조했다. [10]

이에 대해 코리아 협의회 측은 해당 부서에 제출한 동상 건립 신청서에 일본이 소녀

---

[8] 「DW」, 2016,9,21, „Freiburg und die Trostfrau", https://www.dw.com/de/freiburg-und-die-trostfrau/a-19563885 최너는 하지만 일본에서 열렸던 소녀상 전시를 기점으로 소녀상 건립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마이니치 신문」, 2021.04.11
„少女像はドイツで受け入れられたのか 疑問の先に
見えてきたもの" https://mainichi.jp/premier/politics/articles/20210329/pol/00m/010/006000c)

[9] 「taz」, 2020.10.8, „Berlin-Mitte kuscht vor Tokio" https://taz.de/Gedenken-an-Trostfrauen/!5719024/

[10] Widerruf der Ausnahmegenehmigung vom 06.07.2020 zum Aufstellen von Gegenständen, hier: „Die Friedensstatue", in der Bremer Str./Ecke Birkenstr. in Berlin-Mitte (07.10.2020)

상 건립에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다며[11] 관청에 혼란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청에 비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사전에 비문을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 반문한다.[12] 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동상 건립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관청은 소녀상이 일본 제국 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구청의 비난에 반박했다.[13]

실제로 코리아 협의회의 동상 건립 신청서에는 소녀상이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들이 가해국에 보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비문이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 또한 기재되어 있다.[14] 또한 일본측의 예상되는 반대에 대해서도 별도의 항목을 할애해 설명해 놓고 있다. 결국 폰다셀 미테구 구청장은 2021년 3월 30일 코리아협의회에 서한을 보내 코리아 협의회의 동상 건립 신청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방식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이에 대해 사과했다.[15] 하지만 그럼에도 비문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될 것이다.

비문은 비젠트 소녀상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3월 레겐스부르크 외곽에 있는 마을인 비젠트의 네팔 히말라야 사립 공원에 소녀상이 세워졌다. 원래 이 소녀상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배경과 미래 방향, 소녀상 작품의 의미 등이 담긴 비문이 함께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일본측으로부터 강한 항의가 있은 후 비문 없이 소녀상만 세워지게 되었다.[16] 이렇게 해서 소녀상은 정치적 역사적 맥락이 결여된 채 맥락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이국적인 조각품의 하나로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장이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그의 느낌이 정당한 것인지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한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에게 일본이 소녀상 건립을 방해할 것이라는 것이 사전에 경고 되었고 이에 대해 잘로몬 시장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17] 또 시장으로서 사전에 한일간 역사적 배경에 대해 더 잘 알아봤어야 한다는 의

---

[11] 「Berliner Woche」, 2020.10.16, „Statue kann vorerst bleiben“ https://www.berliner-woche.de/moabit/c-politik/statue-kann-vorerst-bleiben_a290347

[12] 「taz」, 2020.10.8, „Berlin-Mitte kuscht vor Tokio“ https://taz.de/Gedenken-an-Trostfrauen/!5719024/

[13] 「Berliner Woche」, 2020.10.16, „Statue kann vorerst bleiben“ https://www.berliner-woche.de/moabit/c-politik/statue-kann-vorerst-bleiben_a290347

[14] 코리아 협의회 도시 예술 특별이용 신청서(Antrag auf Sondernutzung für Kunst im Stadtraum)

[15] 폰다셀 미테구 시장이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에게 보낸 서한, 2021.3.3

[16] 「연합뉴스」, 2018.4.20, „독일 여성박물관에 '평화의 소녀상' 세운다…유럽서 두번째“ https://www.yna.co.kr/view/AKR20180430063800371

[17] „염 시장은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둘러싸고 미국과 호주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일본측의 조직적인 방해활동이 있었다고 프라이부르크 시장에게 전하자, 프라이부르크 시장은

견도 존재한다. 베를린 소녀상 건립 과정에서도 코리아 협의회 측에서 일본의 반응에 대해 사전에 경고를 하고 동상 건립 신청서에 일본의 사죄를 요구한다는 목적이 들어있음에도 구청측이 안일하게 대응했던 점과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자 코리아협의회에서 마치 과정상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 인상을 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상기하다시피 독일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보다 소녀상을 둘러싸고 현지에서 어떤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에 더 집중하고자 한다.

3. 소녀상 건립을 둘러싼 논의들

먼저 위 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녀상의 목적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인식된다는 것이다. 하나는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의 재발 방지라는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력으로 인식 되는 목적이다. 한국측의 입장에서 볼 때 원리상 분리되지 않는 이 목적이 해외에서는 분리되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리는 일본의 개입과 더불어 발생하는 것으로,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소녀상이 가진 위의 두 목적이 굳이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특히 과거 청산에 비교적 성공적인 독일 사회에서는 2차 대전 시 있었던 범죄를 기념하는 동상을 세우고 거기서 특정 가해국이 드러나는 것에 별다른 문제 의식이 없었다. 이는 위의 경우를 포함해서 독일의 다른 지역들에서 있었던 동상 건립 시도나 전시회에서 일본측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었다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18] 하지만 일본의 반대와 더불어 소녀상은 명목적 목적과 실질적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생겨난다. 이때 소녀상이 전시 성폭력 반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만 간주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일본을 대외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함께 전개된다.

소녀상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물론 첫번째로 주어질 대답인 일본측의 항의는 여기서 잠시 괄호로 묶어 두도록 하고 독일측의 논리에 집중하도록 하자. 독일측에 일본군 위안부 자체가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니다. 잘로몬 시장은 „'위안부' 역사는 인터넷 음모이론 같은 것이 아니"라며 일본이 사과하고 배상 기금까지 설치한 점을 지적했다.[19] 즉 일본측도 잘못을 인

일본정부나 극우단체들의 반발이나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중앙일보」, 2016.9.5, „獨 프라이부르크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염태영 수원시장 제안" https://news.joins.com/article/205505511)

[18] Korea.net, 2019.8.16, „Die Friedensstatuen in Deutschland" https://german.korea.net/NewsFocus/HonoraryReporters/view?articleId=174302

[19] 「Stuttgarter-zeitung」, 2016.10.3, „OB opfert Trostfrau für Japan",

정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일로 일본 사회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는데 큰 진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도 한다. 그럼에도 그는 정작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는 방식에서 제 3국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본이 스스로 배워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베를린 미테구도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 여부를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미테구가 비문을 문제 삼는 것도 비문에 일본의 범죄사실(만)이 적혀 있기 때문이지 전시 성폭력 반대를 위한 동상 건립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일이 소녀상을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허용하는 경우 독일은 제 3국으로서 외교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에 대해 라이프찌히 대학 일본학과의 믈라데노바는 외교적으로 독일이 한일 „역사전"의 또 다른 결투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베를린 소녀상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중립성 유지라는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논리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 존중을 위해 국가 간의 관계는 당사자 국가들만 관여할 수 있고 따라서 한일 문제에 제 3국인 독일의 개입은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독일은 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입장은 소녀상과 같은 동상이 행정부 측근 거리에 세워지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을 „비방"하는 것이자 중립성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본다. [20]

쵤너도 최근까지 이런 입장에 서 있었다. 그는 프라이부르크에 소녀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을 때 소녀상 건립에 반대하면서 한일간의 화해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상을 세우는 것은 한국의 편을 들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1]

베를린 미테구 구청장도 시 공지사항을 통해 소녀상 건립 허가 철회를 밝히면서 „„소녀상"과 „소녀상" 비문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부담스럽고 복잡한 정치 역사적 갈등을 다루고 있고 이것은 독일의 과거 청산과는 맞는 주제가 아니"라며 두 나라의 역사적 갈등에서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2]

슈피겔紙 기자로 오랫동안 아시아 특파원을 지내고 일본에 관한 책을 출판하기도 한

---

https://www.stuttgarter-zeitung.de/inhalt.freiburger-partnerschaften-ob-opfert-trostfrau-fuer-japan.51c9a970-2c78-486d-beff-681ecc2ea086.html

[20] Mladenova, Dorothea (2020): Was bedeutet es eigentlich, dass in Berlin eine Friedensstatue in Form einer „Trostfrau" aufgestellt wurde? (https://japanologie.gko.uni-leipzig.de/news/was-bedeutet-es-eigentlich-dass-in-berlin-eine-friedensstatue-in-form-einer-trostfrau-aufgestellt-wurde/)

[21] 「DW」, 2016,9,21, „Freiburg und die Trostfrau", https://www.dw.com/de/freiburg-und-die-trostfrau/a-19563885

[22] Bezirksamt Mitte hebt Genehmigung für „Friedensstatue" auf. Pressemitteilung Nr. 363/2020 vom 08.10.2020(https://www.berlin.de/ba-mitte/aktuelles/pressemitteilungen/2020/pressemitteilung.1001656.php)

바그너는 다른 나라의 민감한 외교 정치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아 하는 당국의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고 한다.[23] 하지만 허가를 할 거였다면 처음부터 외교적으로 연루될 것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이제 와서 „귀찮은" 문제가 되었다고 소녀상을 철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쵤너는 소녀상이 일본에 대한 도덕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인식될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한다. 그는 호주의 스트라스필드에서 소녀상 건립 신청이 거부된 이유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소녀상은 „일본인들에 대한 민족적 비방"이며 이는 한 사회의 평화 유지를 위해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24] 폰다셀 베를린 미테 구청장 또한 소녀상의 존재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25]

이상 독일측의 소녀상 건립 반대 입장을 정리하면 독일이 정부 차원에서 소녀상을 허가하면 한일간의 갈등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편을 드는 것이 되고 이는 제 3국으로서의 중립성을 손상시키고 일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녀상 건립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요약된다. 또한 소녀상은 일본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다문화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해외 소녀상 건립을 통해 일본을 압박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독일측의 논리대로 하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외에 소녀상을 건립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는 글의 목적상 소녀상 건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과연 독일의 제 3국으로서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인지, 소녀상이 정말 다문화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에 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베를린 소녀상 건립 허가 철회의 막후 사정만을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베를린 소녀상 건립 철회 결정이 알려진 후 타게스슈피겔紙는 베를린 시에 미테구 동상 철거에 개입했는지 물었고 베를린시는 이에 대해 구청에서 결정할 일이며 시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타게스슈피겔 측은 베를린 시가 동상이 세워진 후 일본 대사관, 미테구와 함께 논의를 했다는 것을 알아

---

[23] 「Tagesspiegel」, 2020.10.31, „Deutschland ist die Erinnerung an Japans Sexsklavinnen nur lästig"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berlin-tokio-und-der-streit-ueber-das-trostfrauen-denkmal-deutschland-ist-die-erinnerung-an-japans-sexsklavinnen-nur-laestig/26575642.html

[24] 「DW」, 2016,9,21, „Freiburg und die Trostfrau", https://www.dw.com/de/freiburg-und-die-trostfrau/a-19563885

[25] Bezirksamt Mitte hebt Genehmigung für „Friedensstatue" auf. Pressemitteilung Nr. 363/2020 vom 08.10.2020(https://www.berlin.de/ba-mitte/aktuelles/pressemitteilungen/2020/pressemitteilung.1001656.php)

냈다.[26] 이 매체에 따르면 베를린시 의전담당관 찜머는 미테구청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미테구가 소녀상과 비문 설치 허가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이고 베를린과 도쿄, 나아가 일본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2015년 이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를 봤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독일의 가치 공유 파트너국가들이 부담스러운 과거 역사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역할을 하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와 독일 연방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독일 외무부도 같은 생각이라며 전시 성폭력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한편 소녀상은 일본에 사죄를 촉구한다는 의미 외에 전시 성폭력에 반대하는 보편적 의미 또한 가지고 있고 독일 내에도 이 시각에서 소녀상을 바라보는 입장도 다수 존재한다. 믈라데노바 또한 소녀상이 주제화하는 여성의 권리와 인권의 의미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27]

이런 점은 베를린 구의회에서도 확인된다. 구의회는 구민들의 대표하는 기관으로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구청에 의회의 의견을 권고할 수 있다. 미테구 소녀상 1년 존치에 관한 건은 처음 해적당의 건의로 의회에 상정되어 2020년 11월 찬성 27, 반대 9표로 1년 존치를 의결했다. 찬성은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 해적당에서 나왔고 기민당과 자민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의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근거로 „소녀상은 전시 여성 성폭력의 과거 청산과 토론에 생산적 기여"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사민당은 코리아협의회의 소녀상 건립 신청서에 비문의 내용이 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경우에 따라 소녀상 비문에 수정 또는 보충을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좌파당은 소녀상의 영구 존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좌파당 또한 일본의 범죄에 대해 비문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소녀상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간의 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민당 의원은 소녀상이 한일간의 두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에 반대한다면서 소녀상까지는 괜찮지만 비문을 없앨 것을 요구했다. 그래야 소녀상이 더 폭넓은 층에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베를린이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

[26] 「Tagesspiegel」, 2020.10.25, Senatskanzlei drängte auf Abbau der Berliner „Friedensstatue" https://www.tagesspiegel.de/berlin/verantwortung-fuer-die-sicherheitslage-in-ostasien-senatskanzlei-draengte-auf-abbau-der-berliner-friedensstatue/26305734.html

[27] Mladnova, Dorothea (2020), Was bedeutet es eigentlich, dass in Berlin eine Friedensstatue in Form einer „Trostfrau" aufgestellt wurde? In: https://japanologie.gko.uni-leipzig.de/news/was-bedeutet-es-eigentlich-dass-in-berlin-eine-friedensstatue-in-form-einer-trostfrau-aufgestellt-wurde/

황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자민당 의원도 동상의 뜻은 좋지만 타국과의 갈등에서 외교적 수단으로 쓰이는 도구라고 평가했다.[28]

소녀상은 12월 좌파당의 건의로 다시 한 번 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데 이번에는 영구 존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찬성24, 반대 5표로 안건이 통과되었다. 안건을 제안한 좌파당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소녀상은 전시 및 비전시 성폭력에 대한 토론을 위한 자극제가 되기에 베를린에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9] 이 안건에는 좌파당 외에 녹색당과 사민당이 찬성을 표했고 기민당은 동상에는 찬성했지만 비문에 반대해서 최종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전시 성폭력은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는 범죄인데 한국과 일본의 예에만 집중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기민당은 소녀상은 베를린과 아무 관련성이 없는 문제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자민당은 소녀상을 반대하는 대신 전시 여성 성폭력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동상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무소속의 한 의원은 소녀상에 찬성표를 던지며 독일과 일본이 2차 대전시 동맹국이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소녀상 영구 존치는 통과되었지만 찬성표를 던진 세 당은 코리아 협의회와 상의 하에 동상의 표현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이는 동상의 비문에 수정 또는 보충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여기서도 소녀상이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는 맥락과 한국과 일본의 역사와 관련된 맥락이라는 두 가지 맥락으로 분리되어 사고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어떤 쪽을 더 비중 있게 보느냐에 따라 소녀상 설립에 대한 찬반이 갈린다. 전자의 시각으로만 평가될 때는 대다수가 소녀상 설치에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일본만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유보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또 소녀상을 베를린과 무관하다고 보는 입장도 나타나는데 이는 소녀상을 한국과 일본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보기 때문이다.

4. 향후 위안부 운동을 위한 제언

소녀상 저지를 위한 일본의 공세는 민관의 차원을 막론하고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압박으로 인해 실제로 현지의 행정 결정이 하루 아침에 바뀌어 질 수 있다는 것은

---

[28] 「taz」, 2020.11.6, „BVV für Trostfrauenstatue"https://taz.de/Streit-um-Mahnmal-in-Berlin/!5723468/

[29] BVV 베를린 미테, 좌파당 건의서, 2020.10.26, „Friedensstatue bewahren – Gedenken an Opfer sexualisierter Gewalt ermöglichen" https://www.linksfraktion-berlin-mitte.de/drucksachen/detail/news/friedensstatue-bewahren-gedenken-an-opfer-sexualisierter-gewalt-ermoeglichen/

놀랍고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의 이런 항의와 압박이 소녀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의 위상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내용의 진위여부에 상관없이 일본의 항의는 소녀상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탈취하고 한일간의 정치, 역사 갈등의 맥락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소녀상이 보편적 가치를 앞에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는 시각이 생성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정의와 진실이라는 도덕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자존심에 관한 지역적 갈등의 문제라는 인식을 낳게 된다. 적지 않은 매체들이 부지불식간에 이런 프레임 속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일례로 진보적 성향의 타쯔紙 기자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이란의 이스파한의 관계에 비교한 바 있다.[30] 과거 식민지 지배국과 피지배국이라는 관계를 사상한 채 갈등 관계에 있다는 점만 고려된 것이다. 이런 시각 속에서는 소녀상은 과거 청산이라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의 맥락 속에만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왜 독일이 다른 나라 정치 문제에 개입해야 되는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기민당 의원은 소녀상은 베를린과 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고 적지 않은 독일인들이 그게 독일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문제제기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 한국측의 주된 „전략"은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며 독일 및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전시 성폭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녀상이 베를린에서도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위에서 본 것처럼 이 논리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논리만으로는 자민당이 제기한 것처럼 위안부 소녀상이 아닌 더 국제적 또는 보편적 맥락을 가진 다른 형태의 상을 만들자는 논리에 달리 반박할 말이 없게 된다.[31] 또 일본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비문을 제거하자는 논리에도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다. 폰다셀 시장은 한국과 일본에 국한되지 않는, 독일 역사 청산에도 기여하는 전시 성폭력

[30] 「taz」, 2016.10.5, „Keine Erinnerung an „Trostfrauen"", https://taz.de/Kriegsverbrechen-Denkmal-in-Freiburg/!5341049/ 이와 달리 Berthold Seliger 는 한일간의 갈등이라는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단순한 갈등이 아닌 전쟁범죄로 인한 갈등임을 강조한다. (Junge Welt, Nr. 241, 2020.10.15, 3 면.)

[31] 또 다른 예로 2018 년 본에 위치한 여성박물관에서 소녀상 전시 기획이 일본의 압박에 의해 좌초되면서 소녀상 대신 전시 성폭력 반대를 상징하는 다른 조형물로 대체되었다. (「Süddeutsche Zeitung」, 2019.8.13, „Japanische Reflexe" https://www.sueddeutsche.de/kultur/kriegsverbrechen-japanische-reflexe-1.4562767)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한다.[32] 이런 바람 앞에서 소녀상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소녀상이 지금의 이 모습대로 서 있으려고 할 때 어떻게 자신의 존재의 정당성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소녀상의 목적을 국제 사회의 시각에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의연 홈페이지에 명기되어 있는 소녀상의 목적은 전시 성폭력 중단 및 재발 방지이고 소녀상의 모습을 설명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에 맞서는 분노"라는 표현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소녀상의 주된 목적은 전시 성폭력 중단 및 재발 방지라는 보편적 가치 지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측에서 소녀상은 반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이 무색하게 한일 갈등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가 타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다 일본이 번번히 저지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소녀상의 목적이 보편적 가치 지향에만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런 주장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소녀상의 비문을 보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더 보편적인 맥락에 위치시키자는 의견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런 의견은 단지 일본의 압박에 영향을 받아 나온 의견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의회에서 이 의견을 낸 의원들은 모두 일본의 항의를 부당하게 생각하고 베를린시가 일본의 압력에 „무릎을 꿇은" 것을 비난하는 입장이다. 그런 이들이 소녀상 영구 존치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소녀상의 비문이 „다듬어져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는 것은 소녀상이 다른 문화권에서 더 잘 안착하기 위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번째로 소녀상이 갖고 있는 역사수정주의에 반대하는 맥락을 더 강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독일에도 이런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시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들이 존재한다. 전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은 일본만이 아니기 때문에 소녀상을 다른 조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에 녹생당 소속 베르터만 구의원은 소녀상은 전시 성폭력만이 아니라 역사 수정주의 비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독일 매체에서 이런 시각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녀상이 역사 수정주에 반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정론 등 역사수정주의의 도전에 응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사 수정주의적 시도에 이해가 용이할 것이다. 이조차 냉정한 힘의 논리 앞에서 빛을 잃을 수 있을지 몰라도 소녀상이 가지는 이 정당성 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

[32] News von Dassel -Dezember 2020, In: Newsletter des Bezirksbürgermeisters von Mitte. (https://www.berlin.de/ba-mitte/politik-und-verwaltung/bezirksamt/stephan-von-dassel/newsletter/newsletter.1029898.php)

마지막으로 소녀상을 탈식민주의 맥락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놀랍게도 많은 독일인들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알지만 식민지를 경영한 것은 모르고 있다. 비근한 예로 수요시위 1500회 기념 베를린 데모에 참석한 한 학생은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고백했다. 마침 독일에서는 탈식민지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8년 기민당/기사련과 사민당 연합정부는 식민지 과거를 청산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고 최근에는 훔볼트 포럼이라는 국립 박물관의 개장으로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에서 가져온 수집물 중 일부를 본국에 돌려주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사실 식민지를 경영했던 유럽 국가들 중 식민주의를 과거 청산의 대상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 출신 철학자 네이먼에 따르면 19퍼센트의 영국인만이 영국 제국주의에서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33] 하지만 독일은 서구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식민지에서 저질렀던 인종 학살에 대해 사죄와 더불어 보상을 약속했다. 올해 독일은 현재의 나미비아에 살고 있던 나마족과 헤레로족에 가한 인종 학살에 대해 나미비아 대표단과 함께 공동으로 6년간의 긴 조사를 매듭짓고 협정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이 협정은 많은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나마족과 헤레로족 피해자 일부가 협상에서 배제되고 독일측이 사과와 보상을 도덕적 정치적 책임에만 국한시키고 법적 책임은 없다고 선을 긋는 등 불완전한 협정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34] 하지만 전 사회적으로 식민주의에 관한 주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와 함께 학계에서는 홀로코스트와 식민주의를 비교할 수 있냐는 문제로 논쟁이 진행중이다. 홀로코스트는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식민주의 등 다른 역사적 사건과 비교가 불가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 비판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한다고 보는 입장[35]과 홀로코스트는 식민주의나 다른 지역의 제노사이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36] 그 전에 유럽이 식민주의를 경영하면서 타인종에게 가했던 폭력에서 이미 그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37] 후자는 독일에서 기억 문화가 홀로코스트 비판에만 편중되어 있지만 식민지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반인도적 행위들도 기억 문화의

---

[33] 「DIE ZEIT」, Nr. 22/2021, 2021.5.7, „Ignoranz aus Scham von Susan Neiman", https://www.zeit.de/2021/22/von-den-deutschen-lernen-susan-neiman-vergangenheitsaufarbeitung-antisemitismus

[34] 「DW」, 2021.5.28, „Deutschland erkennt Kolonialverbrechen in Namibia als Völkermord an" https://www.dw.com/de/deutschland-erkennt-kolonialverbrechen-in-namibia-als-v%C3%B6lkermord-an/a-57695319

[35]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로는 Götz Aly, Volkhard Knigge 등이 있다.

[36]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로는 Dirk Moses, Jürgen Zimmerer, Felix Axster 등이 있다.

[37] Michael Rothberg(2009): Multidirektionale Erinnerung: Holocaustgedenken im Zeitalter der Dekolonisierung, Berlin: Metropol, 2021.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배경 속에서 소녀상은 식민주의의 피해 여성이라는 맥락을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일간의 관계를 단순한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아닌 탈식민지주의라는 구조 속에서 보도록 시각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독일이 홀로코스트를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 범죄로 선언하고 과거 청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다시는 인류에 이런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반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역사 의식은 반유대주의 비판에서만이 아니라 반인종주의, 반식민주의라는 역사에도 확장돼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소녀상으로 상징되는 일본군 위안부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인식될 수 있다. 반인도적 과거를 청산하는 일은 해당 국가의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문제이기도 하며[38], 나아가 국제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독일만 역사가 올바로 세워져서 될 것이 아니라 반인도적 행위, 다른 민족과 인종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함께 바로 잡으려고 노력할 때 독일이 홀로코스트 비판을 통해 추구하는 정의가 달성될 것이며 한국의 위안부 운동도 궁극적으로 바로 이러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을 역설해야 한다.

[38] 사민당 2020.10.12 일자 언론보도자료 „SPD Mitte fordert den Erhalt und eine transparente Diskussion über die Friedenstatue in Moabit" https://www.spd-berlin-mitte.de/meldungen/wir-fordern-den-erhalt-und-eine-transparente-diskussion-ueber-die-friedensstatue-in-moabit/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법 동원(Legal Mobilization)의 과정에서 증언의 의미

백재예 I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 박사과정

지난 4월 21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하 2차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재판장 민성철)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는 불과 몇 개월 전인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 (이하 1차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다.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 국내 법원이 엇갈린 해석을 내어놓음으로 인해 국내의 사법적 제도 및 절차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법적 정의를 추구하고 확인하기 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실망을 안겨주었다.

1991년 김학순이 최초로 일본군 성노예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이후, 한국을 비롯한 세계 시민사회에서는 수요집회, 소녀상 및 평화비 설치, 그리고 생존자 복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운동 방식을 동원해 피해자-생존자 존엄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못했던 불처벌의 역사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자, 세계 각국의 관련 활동가들, 그리고 국제 법률가들이 힘을 합해 민간차원의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을 (이하 2000년 법정)을 개최했다.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2000년 법정 이외에도 여러차례 일본 법원에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죄 및 보상 청구 소송들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 사법 체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시민사회는 한국 사법 체계를 통해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2010년대에 들어 두 차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번 1, 2차 소송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그것을 증명해주는 자료를 발굴하여 일본정부의 책임을 규명해온 시민 사회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자 그 결과물이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1, 2차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은 사법 체계 및 절차를 활용하여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방식인 법 동원(Legal Mobilization)의 역할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 발표에서는 증언으로 재현되는 피해

자/생존자들의 경험이 법 동원의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법 동원을 통한 사회운동 과정 중 법 적용의 단계에서 특히 피해자/생존자들의 증언이 지니는 담론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양상을 지적하였다. 특히, 4월 21일 내려진 2차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일본군 성노예제가 수반한 범죄행위들의 불법성보다도 절차적 국제관습법의 적용을 우위에 둠으로써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불처벌을 용인하고 지속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생존자들의 정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임을 비판하였다.

사회운동으로서의 법 동원(legal mobilization)

법 동원 개념의 필요성

사회운동에서 법은 사회운동의 목적 그 자체이기도 하면서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운동 과정에서도 일본군 성노예제 창설 및 운영과 관련된 여러 행위들을 불법 행위로 명명하고 피해자-생존자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행복과 존엄성에 대해 회복되어야 할 법적 권리 규정하는 한편,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 대항하여 일본, 한국, 및 미국의 법적 제도를 활용해 왔다. 이처럼 법과 법적 절차는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기존 법적 권리 용어들을 통해 개념화하여 운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수정하기를 요구하는 운동의 목적 그 자체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 발표문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의 여러 방향 중 하나인 법적 정의 추구의 과정들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운동의 하나인 법 동원(Legal mobilization)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법적 정의 추구를 목표로 이루어진 다양한 실천들을 이해하는데 여러가지 이점을 지닌다. 먼저, 법 동원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운동에서 법이 목표(target) 그 자체이기도 하면서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다양해지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운동 과정에서도 주요 운동 방식으로서 정기 수요집회, 평화비 건립, 혹은 다방면의 연대사업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소송을 통해 국제법적 불법행위로서의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시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반세기 가량 불처벌이 만연했던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은 그 자체로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생존자들이 침해당한 권리를 표현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된 잔학행위들을 불법행위로서 규정하며,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법 동원이라는 개념은 소송으로 대

표되는 법을 통한 문제해결 시도들을 재판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 혹은 판결에 대한 평가들이 구축해 온 영역을 보다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법 동원이라는 개념은 법과 사회운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맥락에서 고안된 것으로 법적 정의 추구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행위들을 포착하는 것을 넘어서 그 관계를 유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 및 권리 내용 규정하기, 활용할 법적 장치의 선택, 법 전문가들의 참여, 그리고 사법기관의 판단 등 다양한 행위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이라는 사회운동이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나아가 그러한 법적 제도의 활용하는 것이 해당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법 동원이라는 운동 방식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생존자들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궁극적 목표의 맥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법 동원 개념은 법과 사회운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로서 현실적으로 사회운동이 운동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더 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법 동원은 법학 영역에서 놓치는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법과 법의 생산적 권력(productive power), 사회운동 연구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회운동을 가능하게(enable) 하고, 사회운동을 구성하는(shape) 기회구조로서의 법을 포괄하고자 등장한 개념으로서 법학과 사회운동연구 영역의 틈을 이어줄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의 맥락에서 추진된 소송들을 살펴봄으로써 운동 자원으로서의 법 체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운동의 여러 단계에서 이를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법 동원의 개념이 법과 사회운동의 영역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 다양한 개별 행위자들의 상이한 역할에는 여전히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기존 법학에서 판사, 변호사 등 법 엘리트들의 역할에만 집중하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법 동원 개념을 활용한 연구들은 사회운동 영역의 행위자들이 법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야를 넓히는 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이한 특성들까지는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운동 영역을 하나의 통합된 (unitary) 행위자로 보고 그 내부적 동학과 법 동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법 동원이라는 개념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정의

추구 활동을 살펴보는 것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생존자들의 증언이 지닌 의미를 포착해보고자 한다.

법 동원 개념의 등장과 발전

법과 사회운동의 관계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둘 사이의 역학관계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증가했다.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법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법학 연구들은 주로 재판 사례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판사, 변호사 등의 법 엘리트들의 사회 정의에 대한 규범적 열망, 실천, 그리고 그것이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었다. 이에 반해 사회과학적 토대에서 시작된 법 사회학적 연구들은 기존 법 규범이 사회적 위계를 정당화하는 경향에 대해 인식하고 그러한 위계에 저항하는 법적 주장과 전략들 사이의 역학관계가 주요 관심사였다. 이는 법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법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사회운동을 조명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러한 하향식(top-down), 또는 상향식 (bottom-up) 연구들은 점차 두 접근법을 융합하면서 법과 사회운동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로 이어졌다. 즉, 법과 사회운동의 관계적 특성이 법 체계에 내재해 있기 보다는 가변적인 사회적 맥락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을 가정하고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확대되었다 (Cummings 2017; McCann 2006, 2017; Zemans 1983)

이러한 관심은 곧 법 동원(Legal Mobilization)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활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회과학 영역에서, 특히 해석주의적 관점에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들에서는 법적 언어와 상징들이 사회 내에서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발휘하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법적 이름짓기(naming), 비난하기(blaming), 규정하기(framing) 등의 보다 다양한 실천행위들을 모두 법 동원이라는 개념에 포함시켜 분석에 활용했다 (McCann 1994, 2017). 이는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규칙 혹은 정책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행위들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판별 가능한 영향을 분석하는 실증주의적 접근 방식과 달리 법 동원의 주체와 행위의 영역을 보다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Boutcher and Chua (2018)는 법 동원에 대한 연구가 소송(litigation) 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로비 활동, 정책 입안,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의 법 활용 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 운동 관련 활동들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 최근에 Lehoucq and Taylor (2020)는 그동안 법 동원이 지칭하는 구체적인 행위, 목표, 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화와 이론화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명시적'이고 '의식적'으로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를 동원하여 법을 활용하는 행위"라는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제안하였

다 (168). 법 동원을 구성하는 행위와 목표의 측면에서 이 정의는 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과 유사 사법 절차들을 활용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예를 들어 권리 주장을 위해 국가 복지 행정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과 다양한 단위의 국가 기구에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민단체가 법정 의견서 제출하는 것 또한 법 동원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정의는 해당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식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명시적이거나 의식적이지 않은 *법 의식(legal consciousness)*과 명시적이고 의식적으로 해당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공식 제도적 장치는 활용하지 않는 *법적 규정하기(legal framing)*와는 구별한다. 이는 법 동원이라는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확실한 법 체계와의 교차점 위에서 법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 발표문에서는 Lehoucq and Taylor (2020)가 지적을 염두에 두면서 법 동원의 개념이 단순히 소송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법 동원 개념을 통해 사회운동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법 동원은 운동 설계와 개혁 방향 설정과 같은 운동의 초기단계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Boutcher and Chua 2018; McCann 1994). 특히 사회운동 영역에서 법적 언어와 상징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구성함으로써 관련된 행위자들의 법 의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법적 권리를 구성하고, 이후 다른 운동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법 집행과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것은 여전히 공식적 법조인들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합치된 것은 아니다. 사회운동과 관련된 변호사들의 존재를 사회운동의 맥락과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보면서 이들의 개입여부와 정도가 사회운동 결과의 주된 요인으로 보는 연구자들도 있지만 (Levitsky 2006), 반대로 이들 변호사들의 역할은 사회운동 설계의 단계에서 이미 내포되어 있으므로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못한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 (Cummings and NeJamie 2010). 마지막으로, 최근 법 동원 개념을 활용한 연구를 국내법 의 영역을 벗어나 국제법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국내의 지역적 사회운동의 활동가들이 단지 권리 논의의 수용자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정의를 요구하고, 정의 담론을 발전시키기고, 구성하는 행위자임을 보여줌으로써 초국적 사회운동의 다양한 층위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Lemaitre and Sandvik 2015; Vanhala 2011).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법 동원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별적 총체성에서 집합적 구체성으로: 법 동원을 통한 사회운동의 시작점으로서의 증언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은 반세기동안의 침묵을 깨뜨리는 신호탄이었다. 특히 해방 이후에도 한국, 일본 사회에서 짙게 드리워진 오랜 침묵의 장막을 피해자/생존자가 스스로 걷어 젖히고 나와, 자신의 삶과 고통을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피해자/생존자들은 증언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특수한 경험을 기점으로 형성된 자신의 삶의 총체를 드러내었다. 그들의 증언은 성노예제 운영 주체인 식민지배 국가의 남성들의 관점에서 작성된 공식 국가 문서들에는 나타나지 않는 인권유린의 현실을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물론, 증언의 과정이 경험의 정확한 재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김동식·한혜인 2017; 양수조 2009; 양현아 2001; 요시코노자키·김정분 2015). 양현아 (2001)가 지적하듯, 증언은 증언자들이 경험한 사실 그 자체이기보다는 사회적 규범과 증언 당시 그를 둘러싼 상황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구성된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은 일원화될 수 없는 개인들의 고유한 맥락과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재현함으로서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집합적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띄었는지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중요한 시작점이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에서 법을 동원하는 가장 첫 단계는 피해의 내용을 법 언어를 통해 명명(naming)하는 것이었다. 이는 고유한 경험들과 다양한 맥락들의 총체인 증언들로부터 일본군 성노예제의 창설과 운영은 구체적 범죄행위들을 구성해 내는 작업이었다. 예를 들어, "일본 가믄은, 비단 짜는 공장으로 가믄은 비단 짬시롱 겁-나게 돈도 잘 벌고 펜하고 좋고 귀경도 좋고, 돈도 많이 벌어서 집에다가 부모한테다 부쳐주믄 부모들이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그래 논닥 하고."[1]라는 증언자 공정엽의 경험이나,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믄은 그럴 듯 허거든. 인자 우리가 곤란하기나 하고 그란께 일본으로, 비단 짜는 공장에 가믄은 얼른 돈 쪼깐해서 부쳐주믄 부모들이 쪼깐 살것다"[2]라고 이야기한 김화자(가명)의 경험과 같은 사례들은 '취업 사기'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쪼끄만 게 뭐 남자들의 힘에 감당해? 턱 들어올려 노니까 그저 그대로 가는 게, 그래서 거기서 내려 놔 달라고 막 소리치며 야단하니까 입을 탈아 막아. 입을 탈아 막으니까 뭐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 치잖아. 기런데 그 [트럭] 우엣 사람, 우리 같은 여자들

[1]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iswj.d_0002_0010."

[2]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iswj.d_0003_0010."

있는데 멫이나 됐는지도 몰라요"[3]라고 이야기했던 이옥선의 경험과 유사한 사례들은 '유괴'로 명명하였다. 이처럼 증언자들의 다양한 생애사적 맥락과 일본군 성노예제 하에서의 각기 다른 경험들을 범죄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들로 명명하는 과정은, 특히 운동 초기 피해자/생존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었다 (Arrington 2016; McCann 1994, 2017). 이는 특히 Arrington(2016)이 강조한 것처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생존자들 또한 증언 이후에 벌어질 보복, 문화적 금기, 혹은 역사의 지배적 담론에 의한 억압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자신의 경험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였기 때문에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피해자/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자신의 탓이거나, 감추어야할 잘못이 아닌 범죄행위 피해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법 언어와 상징들은 이러한 일본군 성노예제를 가능하게 하고 이들의 고통을 침묵시켜온 사회적 조건과 맥락들은 기존의 법 언어로 의미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강간', '성폭력', '강제 매춘' 과 같은 기존의 법 언어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생존자들이 조선의 여성들이 식민지인으로서 동원의 대상이 되었던 맥락, 오랜 기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위안소 운영방식, 그리고 위안소 내의 일상적 폭력과 차별 등을 담아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증언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생존자들이 위안소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빼앗길 삶의 기회들과 사회로부터의 소외 등을 법 언어는 충분히 표현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법 언어를 통해 피해 내용을 명명하는 것은 피해자/생존자들에게 자신들의 기억을 집합적 경험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법 인식을 가지게 하는 의미가 있었다.

나아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에서는 이처럼 법 언어로 명명된 범죄 행위들은 당시 국제법은 물론이고 일본의 형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서 규정(framing)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군 성노예제 하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성폭력을 1907년 체결되고 1911년 일본이 비준한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에 대한 위반, 특히 제46조에서 정하는 "가족의 명예와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Family honour and rights, the lives of persons, and private property, as well as religious convictions and practice, must be respected)"는 규범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였다 (도시환 2008). 또한, 1994년 국제법률가협회(ICJ)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생존자 및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로서 규

[3]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iswj.d_0007_0010."

정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문영화 2019; 정진성 2001). 이처럼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구체적 불법행위로서 규정하는 법 동원의 과정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의 피해자/생존자들은 일본국에 대해 책임을 요구할 권리의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생존자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주장 또한 법적 효력을 지닌 주장이자 법적 처리의 대상으로서의 정당성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증언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의 맥락들을 법 언어와 상징을 통해 재현하고 피해자/생존자들이 지닌 권리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에 대해 부정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정당성을 구성할 수 있었다.

사회운동으로서의 법 동원과 법 적용의 괴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은 운동 초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생존자들의 경험을 법 언어로 재현하고, 이를 국제법적 불법행위로서 규정함으로써 재판을 하나의 중요한 운동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법원을 통해 일본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들을 하였지만, 일본 법원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생존자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 동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은 결국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진성 2001). 비록 공식적인 재판 절차는 아니었지만, 2000년 법정은 일본군 성노예제를 주도한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당시 최고지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생존자들의 경험과 권리를 인정하였다. 나아가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일본군 성노예제 담론에 있어서의 피해자/생존자들의 주체성을 드러내고 그들의 주도권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2000년 법정의 이러한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었다.

최근 일본 법원을 통한 법적 해결에 한계를 느끼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일부는 국내에서 재판을 시작하였다. 먼저, 2013년에 일본국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 조정 신청이 진행에 난항을 겪으면서 법원의 조정 취소 결정으로 결국 2016년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같은 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생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었다. 하지만 이 두 소송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1차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가 2021년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생존자 12명이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데 반해, 단 몇개월 뒤인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재판장 민성철)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

한 피해자/생존자와 유족 20여 명이 같은 취지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피해의 내용과 그것을 구성한 법적 논리 및 취지는 다를 것이 없는데 결과가 정반대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두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증언을 통해 재현되는 피해자들/생존자의 경험과 그 맥락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비롯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차 소송의 판결문에서는 '위안부' 동원 과정과 위안소 생활과 관련해서 모든 원고들의 경험을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이후의 생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생존자들의 삶과 피해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반면에, 각하 결정을 내린 2차 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생존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일본의 관점에서 전쟁 수행과정에서 위안소를 설치한 동기, 방식, 규모 등을 축약하여 기술할 뿐, 피해자/생존자들이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받은 고통들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다.[5] 2차 소송의 판결은 해당 안건에서 중심이 되는 피해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 피해자/생존자들의 경험이나 언어보다는 가해자들의 언어를 활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삶을 다시 한 번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면제(state immunity) 논쟁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법에 대한 고려의 차이가 이번과 같은 상반될 결과를 가지고 왔다. 국가면제론은 일본군 성노예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국제관습법적 사안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2차 소송의 판결문에서 지면의 대부분을 국가면제론에 입각하여 소송이 각하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파하는데 할애한 점은 특이할 만한 지점이다.[6] 국가면제론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본군 성노예제가 수많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국가면제론의 우위를 2차소송의 판결에서와 같이 손쉽게 인정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불처벌을 해소하고자하는 국제인권규범의 흐름에서도 반하는 것이다.

최근에 내려진 1, 2차 소송에 대한 상반된 판결은 법 동원을 통한 사회운동 과정에서의 이름 붙이기, 규정하기, 그리고 비난하기가 법 적용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법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과 일맥상통하다. 두 재판에서 피해자/생존자의 정의 구현을 위해 동원된 법 언어와 논리는 같지만, 재판부의 인식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법을 동원할 때의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4] 서울중앙지법, 2021. 1. 8., 2016 가합 505092 판결.
[5] 서울중앙지법, 2021. 4. 23., 2016 가합 580239 판결.
[6] 서울중앙지법, 2021. 4. 23., 2016 가합 580239 판결.

나오며

이 발표문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에서 법을 동원하는 다양한 양태와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운동의 단계에서는 법 언어와 상징을 통해 총체적이지만 개별적으로 흩어져있는 피해자/생존자들의 경험을 구체적인 집합적 기억으로 포착함으로써 피해자/생존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숨겨야 할 잘못이 아닌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의 경험으로 인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본군 성노예제가 기존의 법 체계의 어떤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위반했는지를 통해 불법성을 구성하여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1, 2차 소송의 상반된 판결을 통해 법 동원의 마지막 단계인 소송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법적 구성의 노력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기존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의 무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2000년 법정과 1차 소송을 제외하고 사법적 절차에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진 점이 없던 사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불처벌이 지속되는 이유에 국제법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 7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전 반군 지도자 보스코 은타간다(Bosco Ntaganda)에 대하여 2002~2003년 콩고 이투리 지역에서 발생한 강간 및 성노예 등으로 인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이혜영 2020). 이처럼 점차 확장, 발전되어가는 전시 성폭력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의 맥락들을 어떻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 발표를 위한 연구는 철저하게 선행 연구들의 성과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특히, 실제로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 없이 기존의 연구자들이 오랜 기간 노력하여 구축해 놓은 연구 자료들과 연구 결과물들을 법 동원이라는 개념의 맥락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했다. 하지만 법 동원을 통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의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증언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자/생존자들의 경험과 언어가 법 동원의 과정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구성되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피해자중심적 정의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서 법 동원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운동 영역에서 활동가들이 피해자/생존자들의 경험과 요구를 왜, 어떻게 법 동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 시민

단체 활동가, 학생, 학자, 법조인 등 다양한 주체들을 인터뷰하여 사회운동 내부의 역학을 이해할 수 있다면 사회운동으로서의 법 동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의 맥락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진행된 재판들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발표에서는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을 통해서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주체들의 실천들을 가늠해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재판부의 인식 및 판단을 유추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기소장, 속기록, 방청 자료 등 관련 재판 자료를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면, 법적 정의 추구 과정에서 소송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점들이 향후 연구들에서 다루어진다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법 동원의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Arrington, Celeste L. 2016. "Victimhood and Governmental Accountability." In *Accidental Activists : Victim Movements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in Japan and South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1–18.

Boutcher, Steven A., and Lynette J. Chua. 2018. "Introduction: Law, Social Movements, and Mobilization across Contexts." *Law and Policy* 40(1): 5–9.

Cummings, Scott L. 2017. "Law and Social Movements: An Interdisciplinary Analysis." In *Handbook of Social Movements Across Disciplines*, eds. Bert Klandermans and Conny Roggeband. Boston, MA: Springer, 233–70.

Cummings, Scott L., and Douglas NeJamie. 2010. "Lawyering for Marriage Equality." *UCLA Law Review* 57(5): 1235–1332.

Lemaitre, Julieta, and Kristin Bergtora Sandvik. 2015. "Shifting Frames, Vanishing Resources, and Dangerous Political Opportunities: Legal Mobilization among Displaced Women in Colombia." *Law and Society Review* 49(1): 5–38.

Levitsky, Sandra R. 2006. "To Lead with Law: Reassessing the Influence of Legal Advocacy Organizations in Social Movements." In *Cause Lawyers and Social Movements*, eds. Austin Sarat and Stuart A. Scheingol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45–63.

McCann, Michael. 1994. *Rights at Work: Pay Equity Reform and the Politics of Legal*

Mobiliza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6. "Law and Social Movements: Contemporary Perspectives."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2: 17–38.

———. 2017. "Law and Social Movements." In *The Blackwell Companion to Law and Society*, ed. Austin Sarat.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506–22.

Vanhala, Lisa. 2011. *Making Rights a Reality? Disability Rights Activists and Legal Mobi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Zemans, Frances Kahn. 1983. "Legal Mobilization : The Neglected Role of the Law in the Political System."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3): 690–703.

김동식, and 한혜인. 2017. "일본군 '위안부' 증언 역사고증의 확장적 의의." I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 40–50.

도시환. 2008.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53(3): 41–68.

문영화. 201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재판 행사." 저스티스 174: 114–44.

양수조. 2009. "증언을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 실태." 충청문화연구 2: 125–65.

양현아. 2001. "증언과 역사쓰-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 재현." 사회와 역사 60: 60–264.

요시코노자키, and 김정분. 2015. "'위안부' 논쟁: 역사와 증언." 역사와 역사교육 30: 135–63.

이혜영. 2020. "' 성범죄 . 성차별범죄 ' (Sexual and Gender-Based Crimes) 에 관한 국제형사법 발전의 배경 및 현황 *." 국제법평론 55: 25–59.

정진성. 2001.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배경과 의의." 여성과 사회 (12): 163–79.

여성 피해자와 피해가 국제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을 중심으로.

이재임 ㅣ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Ⅰ. 서론

1. 문제제기

2021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두 재판부는 원고 승소와 각하라는 갈리는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패소한 '곽예남 외 대 일본국 사건(2016가합580239)'에서는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이하 2015 위안부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구제되었고, 외교 관계에 있어 국가 위신이나 국가면제와 같은 국제법질서 때문에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되었다.[1] 이러한 법 담론은 젠더 기반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을 경유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주장해온 일본군'위안부' 운동이 새롭게 맞닥뜨리게 된 담론지형을 분석할 필요를 제시한다. 즉, 여성 피해자가 인권과 젠더 관점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을 때, 대항 담론은 피해자의 권리 행사와 한일외교 관계를 어떻게 엮어가면서 페미니스트들의 문제 제기를 저지하고자 하는가? 국제정치 및 '피해자'와 '피해'에 대한 어떤 전제가 그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본고는 2015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배경이자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가 논의된「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소송(2006헌마788, 이하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을 주목하고자 한다.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은 가해국 일본-피해국 한국이라는 이자 구도를 일본 정부-한국 정부-피해자라는 삼자 구도로 전환하는 기점(김선화, 2017:91)이라고 평가받은 바 있다. 본 위헌소송에서 그간 "식민지배의 피해국으로서의 피해자"이자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자"의 지위를 점하고 있던 한국 정부(김선화, 2017:91)에 대해 과거의 피

[1] 반면, 친킨과 요시다(Chinkin&Yoshida, 2021)는 본 소송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국가면제 논리가 적용된다면 인도에 반하는 죄인 성노예, 강간, 인신매매에 대한 불처벌과 면책의 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젠더 불평등을 심화하고, 지금까지 국가면제 사건에서 젠더 기반 폭력, 성폭력이 고려된 바 없기에 기존 선례들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젠더 및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면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고령의 피해 여성들의 권리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피해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아 그러할 의무가 시급하게 촉구된다는 것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주장되었다. 이후 2015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등장했고, 문재인 정권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선언했다(한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합의검토TF, 2017).[2] 2020년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갖가지 논쟁들은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격돌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피해'와 '피해자'를 통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응답을 요청되는 와중에 피해자는 어떤 존재로 우리 앞에 서고 있는가? 피해는 사회에 어떤 과제를 환기하고 있는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다.

2011년 위헌결정 이후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을 다룬 국제정치 연구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한일관계를 악화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과거사 문제로 분류했고, 대일외교 및 동북아 안보의 관점에서 그 해결을 모색했다(장기영, 2017; 나시지마 리에, 2018).[3] 한미일 3국 공조 혹은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과 같은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협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조경근, 2013; 최홍경, 2015; 남광규, 2017; 이민주, 2019). 이러한 연구 경향은 여성 문제와 여성운동에 대해 거의 사고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정치학 내 남성중심성과 현실의 성차별주의를 영속시킬 뿐 아니라, 현 상황을 만들어온 행위자의 절반만을 보면서 문제화된 전제를 유지한 채 현실을 진단하고 제언을 내놓고 있다는 데서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한편, 2015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 문제 해결 메커니즘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었다는 데 비판적인 연구들도 있었다(양현아, 2016; 백승덕, 2016; 신기영, 2016).[4] 또한, 2010년대

---

[2] 한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합의검토 TF(이하 합의 TF, 2017)에 따르면 '피해자 중심적 접근'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피해 여성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다는 관점이다. 피해 구제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정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입장을 수렴해 외교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합의 TF, 2017:2).

[3] 반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주목해볼 수 있다. 양기호(2015)는 한일 간 외교교섭이 본격화되기까지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일 시민사회, 한국 사법부, 국제사회 간 이뤄진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손열(2018)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복합적 성격은 무시되고 한일 간 고유의 역사문제로 취급되면서 안보-경제-국가 단위의 집합 정체성이 결합한 구조적 동학에서 문제 해결이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기영(2016)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 여성인권규범 문제이자 아시아라는 지역성을 갖게 되었기에 이 문제를 "가해국 정부의 책임을 협상과 타협의 대상으로 간주(285)"한 양국 간 전략적·기능적 합의는 시민사회와 글로벌 수준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288).

[4] 양현아(2016:34)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되물으면서 한국 정부가 합의의 대상자로 가정한, 현재 생존해있는 피해등록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권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자, 가족과 친지, 포스트 식민국가의 시민까지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피해자의 구제권과 배상권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이하 피해자권리 기본원칙)'[5]을 언급한 연구들은 이 원칙에 근거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과 구제의 권리를 위해 법적 해결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가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시현, 2011; 김관원, 2015; 김창록 외, 2018).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경향들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피해자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주목에 비해, 피해자 기표가 현 지형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것이 가져오는 과제가 무엇인지는 다룬 담론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고는 그 시론적 연구로서 주권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로 여겨지는 국제정치에서 여성 피해자의 경험이라는 특수성이 어떻게 다뤄지게 되는지를 법 담론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의 외교적 보호권, 외교적 해결, 한일외교 관계의 전망을 둘러싼 논의 속에 '피해자'와 '피해'가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되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피해자' 기표가 어떻게 부상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위헌결정의 결과 이뤄진 2015 위안부 합의를 간략히 다루면서 고통받는 고령의 여성 노인이라는 피해자 기표를 중심으로 한 대항 담론이 여성운동의 국제정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어떻게 굴절시키고 있는지 다룰 것이다.

2. 연구 자료와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된 분석자료는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의 심판 기록이다. 2006년 7월 5일 일본군'위안부' 생존피해자 109명은 외교통상부가 협정 제3조에 따라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7조 1항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6]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재판관 5인(위헌의견), 3인(반대의견), 1인(인용보충의견)으로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정 제2조 제1항[7]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에 관한 해석상

[5]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S/60/147. 인권조약과 국제인권문서에서 규정되어 있던 피해자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하면서 그간 이뤄진 일련의 성과들을 집대성한 선언이다(김창록 외, 2018:20).

[6] 문서 1. 심판청구서,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4.

[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 2 조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분쟁이 존재하고 한국 정부가 제3조에 명시된 절차[8]에 따라 이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2006년 심판청구서부터 2011년 결정문까지 소송 중 생산된 문서들을 담론분석했다.

결정문을 통해 법적 쟁점과 결정의 의의만을 다루는 법학 연구와 달리, 법정을 담론의 장으로 보고, 지배적 담론들이 현출되는 결정문을 포함한 심판 기록을 담론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양현아, 2010:227). 특히, 본 연구는 '피해'와 '피해자'에 부여되는 의미, 이것을 전제하고 양측이 갈등을 빚는 지점, 공유되는 관점 및 가정을 담론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이때 담론들이 생산된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재맥락화의 방식도 함께 살피고자 문헌연구를 수행했다. 한다. 관련 법령, 국회에서 생산된 의안·회의록·청원서, 정부의 보도자료 및 정책 보고서, 신문기사와 단행본을 문헌 자료로 삼아 검토했다.

3. 이론적 논의

1) 신자유주의와 '피해자 정치(politics of victimhood)'

"피해자가 있는 곳에 권력투쟁이 존재함을 이론화했던" 페미니즘 이론에서 '피해자'는 행위성을 소실한 자라기보다는 분노하고 저항하는 주체로 여겨져왔다(Eisenstein, 1997:40; Stringer, 2014:31 재인용). 동시에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피해자로 주장하는 정치학이 여성들을 수동적이고 무력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주체로 만드는 지점을 경계해 왔다(Stringer, 2014:5-6). 가령,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피해자'라는 위치성(positionality)을 얻기 위해서는 강간 문화와 남성 중심적인 법 해석, 가부장적인 섹슈얼리티 이데올로기에 맞서 사회적·법적·정치적 경합을 벌여야 했고 그것이 피해자 정치(politics of victimhood)였다(Buckley-Zistel & Zolkos, 2012; Druliolle & Brett, 2018).

그러나 불안정성과 유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액체 근대(Bauman, 2000; Pitch, 2010 재인용)에서 '피해'는 특정 시간대와 장소의 구체적 사건으로 이해되고 그러한 개별적인 경험이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든다고 여겨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집합적이고 제도적인 억압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해를 우연히 당한 자로 이해되면서 고통의 경쟁과 피해자 선별이 강화되었다(Pitch, 2010:28). 피해/자 의미의 신자유주의적 전회는 고통을 사회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것으로, '피해자'가 된다는 것(victimhood)을 사회적 힘과 권력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분노(ressentiment)가 가득한 해로운 마음 상태를 갖는 것으로, 긍정적인 '행위자'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바꿔놓았다(Stringer, 2014:2-3). Stringer(2014:6-7)

[8] 제 3 조 1 항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항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후략)

는 페미니스트들이 피해자 언어를 버리기보다는 해방의 정치학의 용어로 되찾음으로써 피해자 담론에 배어든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배척하고 보수 담론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Frazer(2017[2013]:104)는 후기 자본주의 복지국가에서 욕구 해석(need interpretation)의 정치가 욕구 만족의 정치로 변형되었다고 지적했다. 여성운동이 비정치적 영역에 있다고 여겨지던 욕구를 정치화하는 데 성공했을 때, 이 욕구가 국가의 개입과 지원의 대상, 즉, '사회서비스'로 재정의되면서 탈정치화되고 탈맥락화·재맥락화된다는 것이다(102). 피해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관련해 명시"되면서 욕구는 "계급·인종·젠더 특수성으로부터 추상화"되고 피해자는 "자신들의 생활조건을 만들어내는 데 참여하는 행위자라기보다...미리 정의된 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정의된다(102). 서비스의 '고객'들은 개별화되고 치유적인 행정 담론에 놓이게 되지만, 일부는 이 경향에 저항함으로써 정치로 회귀하고자 한다(107). Kapur(2005)도 서구 여성과 대비되는 제3세계 여성이라는 '진짜 피해자 주체(authentic victim subject)'가 페미니스트 법 정치학의 토대가 되었을 때 이것이 형사법의 개혁에만 소급되는 보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조치만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의 논의들은 피해/자 및 피해자 정치의 의미가 신자유주의와 함께 탈정치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일본군'위안부' 사례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맥락과 경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는 의의를 갖는다.

2) 페미니스트 이행기 정의

1990년대부터 무력분쟁 중의 성폭력 불처벌에 대한 사법 정의를 주장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이행기 정의의 메커니즘과 개념에 있어 단순히 여성을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주의적이고 '중립적'인 전제와 가정까지 완전히 뒤바꾸기를 요구했다(Buckley-Zistel & Zolkos, 2012:5).[9] 1993년에 설립된 구유고 국제형사법정(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과 1994년에 설립된 르완다 국제형사법정(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은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책임을 최초

[9] 이러한 논의에서 전시 성폭력은 군사 개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전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정립됐다(양현아, 2001:66). 가령, 1994 년 르완다 제노사이드(genocide)에서 가해진 집단 강간은 여성 개인에 대한 위협과 모욕을 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성이 속한 종족집단, 남성, 공동체를 모욕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Hudson, 2009).

로 물은 국제형사법정으로 그러한 변화의 기점으로 평가된다.[10]

페미니스트들은 이행기 정의의 해방/억압 혹은 평화/무력분쟁이라는 이분법은 여성의 삶에서의 공/사적 분쟁/들의 뒤얽힘, 분쟁 이후의 효과들까지 다루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Bell&Rourke, 2007). 이행기 정의가 공사 구분을 함축한 정치적 폭력, 특정 법을 위반한 개인의 가해와 피해에만 주목하면서 여성들을 향한 사적인 폭력과 사회경제적인 피해, 차별, 불평등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Aoláin, 2012). 그 결과 무력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이행기 사회에서도 젠더 기반 폭력은 신자유주의로 재구조화된, 젠더 불평등한 구조에서 패턴과 형태를 바꿔 나타난다(Bell & Rourke, 2007; Gready & Robins, 2014).[11] 따라서 변혁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와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 이행기 정의는 무력분쟁의 시기에만 한정되지 않는, 여성억압에 일조해온 구조 및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여성의 살아진 경험들(lived experiences)을 기반으로 이행기 정의를 재개념화해야 하며 그 메커니즘에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해서 이들의 목소리와 젠더 관점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Buckley-Zistel, & Zolkos, 2012). 특히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 1325호'는 분쟁의 예방, 관리, 해결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젠더 관점의 채택을 권고한 바 있다(강윤희, 2013:70-74).[12] 따라서 현재, 비공식적이고 풀뿌리 차원에 있는 여성운동의 노력이 엘리트 수준에서 소모되지 않고, SCR 1325와 같은 국제적 틀이 수사로 그치지 않고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진단되고 있다(Hudson, 2009:294, 301).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행기 정의 분야에서도 '피해자-전회(victims-turn)'가 일어났다고 진단된다(Gracía-Godos, 2016). Druliolle & Brett(2018)은 이행기 정의 연구에서 첫째로, '피해자'와 피해자됨(victimhood)이 정의되고 획득되는 방식(5), 둘째로, 피해자의 정치적 동원과 피해자됨의 정치화(9), 셋째로,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에서 갖는 위치와 역할, 국가와 사회가 평화, 정의, 기억을 이해하는 바를 변화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

---

[10] 이 법정들의 헌장과 ICC 의 로마 규정(Rome Statute)은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로서 강간 등을 명시했다. 로마 규정은 강간, 성노예제, 강제된 매춘, 강제된 임신, 젠더 기반 박해, 강제된 불임, 기타 형태의 성폭력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로 규정했다(Franke, 2006:817).

[11] 이행기 정의의 메커니즘과 여성의 권리 제도화에 있어서 큰 성취를 이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아파르트헤이트로부터의 이행기에 백래쉬와 가부장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해졌다는 연구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Sigsworth & Valiji, 2011:121-126).

[1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S/RES/1325.

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11-12).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이행기 정의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일본군'위안부' 문제화 과정: '피해자'의 부상

1. 일본군'위안부' 운동: 정치적 주체로서의 '피해자' 호명

1990년 5월 25일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은 강제동원 피해자, 원폭 피해자, 사할린 한인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 정신대문제 운동을 조직 차원에서 시작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하 한교여연)도 그 일렬에 서서 한국 정부에는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청산하고 일본 정부에는 진상규명 및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한교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1990). 1990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결성됐고, 1991년 12월 6일 김학순을 비롯한 일본군'위안부'와 군인·군속 피해자가 함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소했다(정대협 20년사 편찬위, 2014:394).

즉, 강제동원·태평양전쟁 피해자들은 이전 시기와 달리 자신들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집합행동에 나섰으며 한일 양국 정부에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 정의, 평화라는 언어로 국가책임과 인권침해, 일본의 재군사화 문제를 제기했다. 냉전의 붕괴가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2차 세계대전의 '전후'가 시작되도록 한 것으로, 이와 함께 분출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역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 지구적인 이행기 정의의 흐름과 탈식민화에 대한 열망과도 연결되어 있었다(김부자, 2008; 나카노, 2008).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 언론은 1990년부터 정신대, 즉, 일본군'위안부'를 징용·징병·원폭 피해자와 함께 '전쟁 피해자'로, 피해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1991년부터는 이들을 '정신대 피해자'로 호명하기 시작했다.[13]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의 기자회견이 열렸고, 그는 "정신대 자체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를 고발하려 증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신의 형태로 일본군'위안부'가 문제화되는 동시에 피해자 존재가 증거로, 피해자의 발화가 증언으로 변모하게 되는 계기였다. 이어 신고 전화를 통해 등장한 피해자들의 증언 구술작업과 요시미 요시아키의 자료 발굴 등 민간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진척되었다. 1992년에는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가 시작되었고 윤정옥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더 많은 지금과 달리 그때는 "할머니들이 쏟아져 나"왔다(정진성 외, 2015:52). 피해자들은 피해를 역사적이고

[13] 그 외에도 원폭 피해와 삼청교육대, 광주민주화운동의 과거사청산 작업 및 운동과 관련해서 '피해자' 용어가 언론에서 자주 등장했다.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수요시위와 증언집회 활동에 나서며 운동의 주체가 됐다(황은진, 1998).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초기부터 일본 정부에 ①조선인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②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 ③만행의 전모를 스스로 밝힐 것, ④희생자들을 위하여 위령비를 세울 것, ⑤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할 것, ⑥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역사교육 속에서 이 사실을 가르칠 것을 요구했다(한교여연 외 38개 여성단체, 1990). 운동이 지속되면서 이 요구사항은 ①진상규명, ②범죄인정, ③공식사죄, ④법적 배상, ⑤책임자 처벌, ⑥역사 교과서 기록, ⑦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으로 다듬어졌다.[14] 또한, 피해 여성들 간의 국가의 경계와 여성 간의 권력 관계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넘어 전지구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초국적 연대(이나영, 2018)가 이뤄진 가운데 식민지배, 침략전쟁,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주의, 가부장제가 "여성의 성적 노예화와 인간 존엄성 말살"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고 정신대문제의 해결이 "전쟁범죄의 재발" 방지와 평화구축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되었다(제1차정신대문제아시아연대회의, 1992).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이하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지속시킨 법적·사회적 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책임자 처벌에 한정되지 않는 과제를 제시했다. 즉,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과거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했던 사회 조건의 변화를 꾀하는 변혁적 정의의 실현까지 주장하는 것이 되었다.

더불어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국제 여성인권운동으로서 피해자 중심 관점을 강화해 온 국제법적 발전 방향과 함께 호흡하고 있었고 '피해'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만들고자 했다. 운동은 성노예를 포함한 전시 성폭력을 국제 인권규범에 기입하는데 일조했고(이나영, 2018), 유엔을 비롯한 국제 가버넌스에서 성노예제라는 법적 개념을 통해 피해의 성격을 밝히면서 문제 제기했다(정진성, 2019). 이러한 운동의 흐름에서 '피해자'는 폭력으로 점철된 근현대를 살아낸 생존자이자 정치적 요구를 하는 시민으로, '피해'는 젠더 위계와 젠더 폭력에 대한 변혁적 정의의 시발점으로 위치되었다.

2. 위안부 지원법과 국내정책: 인도주의적 지원대상으로서의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운동 초기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종결된 전후 보상문제

[14] 1993 년 '제 2 차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책임자 처벌'이 추가된 것은 일본 정부의 사실인정과 법적 책임 촉구를 위해 전쟁범죄란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주는 '돈'의 문제로 전도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서였다(정대협 20 년사 편찬위, 2014:86-87).

로 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김수아, 2000:40). 1990년 한교여연의 민원에 대해 외무부는 보상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되어 정부 차원에서는 제기할 수 없으며 민간 차원의 것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외무부, 1990). 1991년 12월 6일 보상청구 소송 제소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 현안 과제"가 되면서(국회사무처, 1993) 한국 정부는 12월 7일 한일 아주국장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1992년 1월 3일 일본 정부가 가토 관방장관 담화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1월 17일 노태우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을 지시했고, 정부는 1월 22일 "선 진상규명과 보상 또는 배상" 방침과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을 구성하는 자체 진상규명 대책을 발표했다(김수아, 2000:41).[15] 피해의 배보상에 있어서 노태우 정권은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 듯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소멸했다는 쪽에 가까웠다(김수아, 2000:43, 45).

1993년 김영삼 정권이 출범했고, 같은 해 3월 13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안」(이후 위안부 지원법)[16] 이 정부 의안으로 제출되어 1993년 제정됐다. 정부 의안은 이 법안이 "도덕적 우위를 갖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법적 배상은 요구하지 않지만, 생존피해자를 돕기 위해 "우리 정부 스스로" 조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대한민국 정부, 1993). 위안부 지원법의 법문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 생활을 한 자" 중 "생존자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생활안정지원금, 임대주택 우선임대를 명시했다. 정대협은 대통령이 발표한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이 언론보도와 같이 일본 정부를 대신한 "물질적 보상"인지, "민족 수난의 희생자에 대한 동포적 차원의 위로와 생활지원"인지 질의하면서 국제법 규범을 위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17]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의 판단과 상관없이 배상의 권리를 갖는 주체이며 정부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대협, 1993a). 이 시기 일본군'위안

[15] 피해자들의 참담한 생활상이 드러나면서 정대협은 1992 년 1 월 22 일 "피해 여성에 대한 응급생활보호조치"(한교여연, 1992:96)를 요구했지만,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16] 법률 제 4565 호, 1993.6.11. 제정, 시행 1993.6.11. 정식 약칭은 위안부피해자법이지만, 이후의 개정법과 구분하기 위해, 그리고 제명과 조항에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고려해 이 글에서는 위안부 지원법으로 약칭한다.

[17] 중대한 인권침해란 피해자 숫자가 대규모이고 피해가 막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를 말한다(송에스더, 2020:84). 중대한 인권침해의 "배상은 일반 사법상의 불법행위 배상과는 그 결이 다르며, 단순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정의 실현을 넘어, 해당 사회의 핵심규범 체계를 재수립하고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UN OHCHR, 2008:10; 송에스더, 2020:84 재인용)"을 요구한다.

부' 운동은 물질적 보상(compensation)에서 나아가 국제법에 따른 총체적 배상(reparation)을 요구하고 있었다(이효재, 1999:203).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가 2차 진상조사 발표와 함께 '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유병우 외무부 아주국장은 이 문제를 더는 한일 간의 외교 현안으로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밝혔다(김수아, 2000). 8월 9일 정대협은 한국 정부가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배상문제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지만(정대협, 1993b), 이후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다(김수아, 2000). 1995년 6월 무라야마 정권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의 창설과 의료, 복지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국민기금을 강행 지급했다. 운동이 거센 저항을 한 것은 '피해자'는 정당한 배상의 대상으로서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수사는 피해자들을 시혜적인 금전적 보상의 대상으로 만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정대협·한여연·일본군'위안부' 한국인 생존자 외 21개 단체, 1995).[18]

일본 정부의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던 정부는 국내외 여론이 좋지 않자 입장을 번복했다. 1998년 2월 23일 외무부는 "고령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유혹에 넘어가" 국민기금을 수용하지 않도록 보상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고(김수아, 2000:50), 4월 15일 외교통상부는 '도덕적 우위'와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들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대신 일본 정부에 개인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외교통상부 보도자료, 1998).[19]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당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이 납득해야 한다고 발표안을 보류시켰다(1998.04.15. 한국일보). "피해자의 고통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는 있으나 책임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야" 하고 "우리 정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향후 배상요구·책임추궁 등의 대책에 문제를 낳을 수 있"기에 "피해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고 지시했다(1998.04.15. 중앙일보). 반면, 외교통상부는 "한일관계가 더이상 군대위안부 배상 문제를 둘러싼 法理 싸움으로 경색돼서는 안된다"면서 이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1998.4.15. 동아일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인권 문제로 보는 시각을 처음으로 드러낸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4월 21일 "민간단체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계속 요구하는 것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지만, 공식 방

[18] 또한, 정대협은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위안부' 후유증으로 인한 지병을 구제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이효재·윤정옥·성봉희(정대협), 1996).

[19] 임동원 외교안보 수석은 "한일 간에 얽힌 최대 장애 요인을 피해자가 먼저 푸는 대담한 정책(조선일보, 1998.4.15.; 김수아, 2000:50 재인용)"이라고 밝혔다. 문맥상 후자의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의미한다.

침상 배상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수아, 2000:49-50). 피해자에게는 5월에 위안부 지원법 시행 초기에 지급된 1차 지원금에 이어 2차 지원금이 지급되었다(정대협 20년사 편찬위, 2014:221).

즉, 1990년대 내내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과 사죄에 주력하며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우호적인 한일외교 관계를 위해 피해자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피해자는 가부장적인 국가의 보호 대상로서 이들의 구제는 '국내' 문제로, 피해는 한일 과거사 문제이자 한일외교 관계의 장애물로서만 인식되었다.

3. 위안부 피해자법과 과거사청산 작업: 인권침해 당사자로서의 피해자

노무현 정권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포함하는 대대적 과거사청산 작업이 진행됐다. 2003년 11월「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됐고, 이것에 근거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20]이 2005년 12월 시행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법을 언급하면서 청산의 과정에서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 비서실, 2006:306). 2004년 3월 제정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21]에 따라 11월 국무총리 소속 하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피해자 본인 혹은 친족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진상규명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안부 지원법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2002년「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 피해자법)[22]으로 일부 개정되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명명을 제도화했다.[23]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제명과 조항에 '피해자'라는 어휘를 추가한 것이다(이미경 의원 등 29인, 2001). 또한, 법 목적에서 "국가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다는 어구가 삭제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뿐 아니라 기념사업을 수행해 "국민의 올바른 역

---

[20] 법률 제 7542 호, 2005.5.31. 제정. 2005.12.1. 시행.

[21] 법률 제 7174 호, 2004.3.5. 제정. 2004.9.6. 시행. 이 법의 제 2 조(정의)에 따르면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2] 법률 제 6771 호, 2002.12.11. 일부개정, 2003.6.12. 시행.

[23] 2004 년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부고 기사도 일본군'위안부'에 '피해자'를 붙여 이들을 호명하기 시작했다(김소형, 2019:9).

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어 법안이 2005년 일부 개정되면서[24]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까지 그 목적에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제2조의 2(국가의 의무)를 추가해 진상규명, 역사교육, 그리고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과 피해자의 생활 안정까지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 이러한 법문의 변화는 아래 [표 2]에서 정리해두고 있다.

[표 1] 위안부 지원법과 위안부 피해자법의 비교

법안	위안부 지원법	위안부 피해자법	
시기	1993년 제정	2002년 일부개정	2005년 일부개정
정의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좌동
대상	일군위안부 중 생존자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 국민	좌동
담당부처	보건사회부	여성부	여성가족부
목적	국가가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을 보호·지원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
지원내용	생활보호, 의료보호, 생활안정지원금, 임대주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임대주택 우선임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임대주택 우선임대, 간병인 지원, 국적

[24] 법률 제 7637 호, 2005.7.29. 일부개정, 2006.1.30. 시행.

	택 우선임대		회복 및 고국방문
사업 내용	X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국가의 의무	X	X	진상규명·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 노력, 피해자 적극 발굴하고 생활안정 위해 조치 강구

이러한 법 개정은 2000년대 과거사청산의 흐름과 인권 담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진상규명, 역사교육, 기념사업과 같은 기억/기념 조치의 법제화는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피해자 개인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전받으면 끝나는 문제로 보는 대신, 새로운 역사서술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할, 인권이라는 중대한 가치와 연관된 문제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5년 의안이 발의되었을 당시 국가의 의무 조항에 포함되어 있던 "배상(에 대한 적극적 노력)"은 법 목적이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다는 사유로 삭제되었다(국회 여성위원회, 2005).

대일 과거사청산 흐름에서 2005년 8월 26일 한국 정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공개명령[25]이 없었던 부분까지 포함,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전면공개했다(호리야마, 2008:5).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외교통상부와 청와대는 큰 이견을 보였다. 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외교상의 이유와 공개할 경우 국제관계에서 국가적 신뢰가 실추될 수 있다는 중대한 국익을 들어 문서공개를 거부해왔고, 2004년 3월 4일 판결에 항소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면서 문서를 공개하게 되었고, 9월에는 문서공개 TF가 발족했다(호리야마, 2008:17).

[25] 2002 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근로정신대, 군인, 군속, 노무자, 원폭 피해자와 그 유족 등이 외교통상부가 한일회담 회의록 등의 문서를 공개 거부한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고, 2004 년 법원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비공개결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일협정문서공개를위한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26]는 2005년 8월 26일 문서공개의 후속대책으로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다른 강제동원 피해와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분리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 책임추궁과 유엔 인권위 등 국제기구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2005).[27]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과거사를 한일 간 외교적 쟁점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일전의 방침을 버리고, 2005년 3월 17일 "개인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호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 틀 "밖의 사안"은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는 변화한 대일 기조방침에서 나온 것이었다(호리야마, 200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5).

즉, 2000년대 '피해자'는 인권침해 당사자로서 부상하게 되었고, '피해'와 피해자들의 고통은 사회공동체의 기억과 인권이라는 가치와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전환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2006년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다.

Ⅲ.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정치: 위헌소송 법담론 분석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에서는 국가의 작위의무 근거와 그 이행 여부,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이것이 초래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주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 외교적 해결, 피해의 의미, 한일관계의 전망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었다.[28]

---

[26] 민관공동위는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9 명의 정부위원과 10 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7]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 조에 근거해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에 따라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국무조정실, 2005).

[28] 본 헌법소송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첫째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 판례상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된다. 둘째로, 역시 적법 요건과 관련해 공권력의 불행사가 이뤄졌는지의 여부이다. 셋째로, 일반적으로 폭넓은 재량을 허용받는 외교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렇다면 넷째로, 그 재량에 따른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바가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다. 다섯째로, 기존 선례,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소송(98 헌마 206, 2000.3.30.)과의 구별 여부이다. 법적 쟁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저자의 석사 논문 3 장 1 절 및 위헌소송 결정 관련 법학 논문들을 참고하라.

1. 외교적 보호권: 권리주체 혹은 보호 대상으로서의 피해자

양측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의무였다.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민이 타국의 국제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들의 보호를 위해 자국 정부가 타국에 대하여 평화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개념이다.

청구인 측은 '피해자'는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로서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로 국가는 이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에서 피해자는 권리의 주체로서 중심에, 국가는 외교 절차를 통해 이들의 권리 회복을 돕는 대리인으로 서게 된다. 피해자의 권리를 말하는 인권의 언어와 전시 성폭력에 대한 사법 정의를 요청해온 여성운동의 언어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권리 및 이해관계를 대리할 수 있다는, 또 그것을 교환 가능한 외교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전제에 대항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평화협상에 있어 인권, 피해자의 권리, 전시 성폭력의 불처벌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주장을 함축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은 국민으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는 게 아닌, 국가에 속한 권리이며 그 행사 여부나 방식은 국가의 재량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외교 행위의 대상으로 위상을 격하한 것이다. 피청구인 측은 "개인은 본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외교통상부 장관, 2007).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논하는 사안을 보편화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특정 외교 행위 또는 외교정책을 국가가 취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받는다면 외교정책의 수립, 외국 정부와의 교섭, 국제사회에서의 통일된 의견 제출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외교통상부 장관, 2006a). 피청구인 측에 따르면 피해자를 위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역시 "원활한 외교"와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불가능하다(정인섭, 2009). 즉, 국가의 외교적 이해관계 및 편의를 추상화해 제시하면서 이것이 피해자 개인의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가 같이 갈 수 없으며 전자를 위해 후자가 희생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 측과 헌법재판소는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조문 초안」(이하 외교보호 초안)[29]의 19조를 들어 외교적 보호권이 실정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

[29]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GA A/CN.4/L.684 19 May 2006). 제 2 조에 따르면 "국가는 이 초안 규정에 따라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국제법상 이를 행사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제 19 조에서 그러한 권리를 갖는 국가는 "(a) 특히 중요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외교적 보호 행사 가능성에 대해 정당하게 고려해야 하고; (b) 외교적 보호의 호소와 청구될 배상에 관한 피해자들의 견해를 가능한 한 고려해야 하며; (c) 책임이 인정된

라고 해도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가능성 및 이 권리의 호소와 청구될 배상에 있어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외교적 보호권을 피해의 구제 수단으로 만들고자 했다. 반면, 외교통상부는 외교보호 초안 2조의 해설, '국가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It is under no duty or obligation to do so)'를 강조하면서 19조가 권고적 성격에 머물고 있고 초안이 정식 채택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외교통상부 장관, 2007).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해서도 양측이 갈등을 빚었다. 청구인 측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협정에 따라 전시 성노예제라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되물었다(청구인 대리인, 2006a). 본 헌법소원 법정 의견은 징용·징병과 달리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30]이나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협정 요강 8개 항'[31], 협정 체결 후 입법 조치에 의한 보상대상[32]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짚었다(헌법재판소, 2011). 또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진 정부의 외교 행위가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별개의 것인 이들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청구인 대리인, 2006a; 2006e).

피청구인 측은 국가는 정치적 고려에서 "개인의 피해보상 요구"를 충분히 참작하지 않고 외교적 타결을 할 수 있고, 이때는 국가가 해당 국민의 손해 전보(塡補)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하는 국내적 성격의 문제만이 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정인섭, 2009). 한국 정부는 협정 체결 뒤 보상을 충실히 해왔으며, 그런데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피해자"가 외교적 보호권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정인섭, 2009).[33] 일부 헌법재판관의 반대의견도 "청구인들이 만족할 만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외교적 해결의무를 불이

국가로부터 획득한 손해배상금을 합리적으로 공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청구인 대리인, 2006e).

30 한일회담이 진행되던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보관금과 관련해서만 문제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다(정재민, 2016).

31 우리 정부가 제 1 차 한일회담(1952 년)에서 제시해서 5 차 한일회담(1960~1961 년)에서 논의되었다. 8 개 항목 청구권 중 5 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 및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 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그 외 한국인의 청구권을 변제할 것.'(헌법재판소, 2011).

32 1966 년 2 월 19 일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1982.12.31. 법률 제 3613 호로 폐지)로 무상자금 중 민간보상의 법률적 근거 마련하고, 1971 년 1 월 19 일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1982.12.31. 법률 제 3614 호로 폐지)로 보상신청을 받았으나, 그 대상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용·징병된 사람 중 사망자 등이었다.

33 애초에 협정이 "결과에 대한 개개인들의 만족이나 평가와는 별개로...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사에서 유래하는 부담을 모두 떨쳐버리고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새 출발을 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되었다는 것이다(정인섭, 2009).

행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 2011).[34]

피청구인 측과 반대의견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대한 요구를 '보상 결과'에 대한 개인의 '불만족' 혹은 '평가'로 이야기함으로써 인권 담론을 무력화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주권 국가 간의 외교협상 테이블에 올릴 국제 문제와는 먼, 사소한 국내문제일 따름이라고 축소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의 경우 여성의 성적 피해로서 그러한 '국내문제' 가운데서도 더욱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피해자를 평화교섭의 절차상으로나 협정 결과의 내용상으로 소외시킨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은 외교 절차에서 피해자의 견해와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2000년 유엔 안보리 결의가 선언했듯 분쟁 종식 후 평화구축 과정에서 "무력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이고 특별한 영향력(강윤희, 2013:71)"에 대한 고려, 여성 피해당사자의 동등한 참여와 전적인 개입, 분쟁 방지와 갈등 해결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확대와 젠더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35] 그러나 이처럼 피해 및 피해 구제를 소수 '엘리트' 남성들 간 외교의 잔여물로 취급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형해화하고, 인권은 '국가의 이해관계'를 위해 뒷전으로 미루는 논리는 문제가 된 협정 체결에서부터 본 소송에서의 피청구인 측의 발언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2. 외교적 해결: 피해 구제를 위한 작위의무 행사

1) 피해의 성격: 특수성 혹은 보편성

청구인 측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헌법의 근간이 되는 가치와 관계된 기본적 인권침해이자 인간 존엄과 가치가 부정된 중대한 인권침해이기에 그 구제의 필요성, 즉, 작위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다(청구인 대리인, 2006a; 헌법재판소, 2011).[36] 그렇기에 피해의 성격에 맞는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법적 책임의 이행이 필요하

[34] "'외교적 해결을 할 의무'란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의 사실확정이 곤란한 고도의 정치 행위 영역"이라면서 제시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3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 호 8 항은 다음과 같다. "평화 협정을 협상하고 실행할 때 관련된 모든 행위자는, 무엇보다도, 다음을 포함한 젠더 관점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a)본국 송환 및 재정착 기간, 그리고 사회 복귀, 재통합, 분쟁 후 재건을 위한,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한 필요; (b)현지 여성들의 평화 주도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토착적 과정들을 지원하는 조치들과 모든 평화 협정의 실행 메커니즘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조치들; (c)여성 및 소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들, 특히 이것들이 헌법, 선거체제, 경찰과 사법부에 관련될 때;" 강윤희(2013:74)의 [표 2] 참고.

[36]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국제강행법규(jus cogens)와 각종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언급하는 한편, 1998 년 일본 야마구치지방재판소도 중대한 인권침해인 피해에 일본 국회가 사죄와 배상을 할 입법 의무가 있으며, 그 부작위는 국가배상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들면서 국내법상으로도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제기했다(청구인 대리인, 2006a).

고 주장했다(김창록, 2009; 헌법재판소, 2011). 반면, 피청구인 측은 강제동원 피해가 모두 똑같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특별히 외교적으로 조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자보다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해줬다는 주장이 반복되었고 그 지원 기간과 금액까지 제시되었다(피청구인 대리인, 2009a). 이에 청구인 측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2005년 민관공동위가 밝힌 대로 다른 강제동원 피해와 달리 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기에 특수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그러할 의무가 강화된다고 주장했다(김창록, 2009). 또한, 한국 정부가 여타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지원(안)을 내놓았던 것과 달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추궁을 위한 어떠한 작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청구인 대리인, 2006e).

이러한 양측의 경합은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사건[37]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드러났다. 피청구인 측은 일본군 군인·군속이었던 재일조선인 피해자가 청구한 이 사건에서도 재산권, 평등권,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주장되었으나 각하된 것과 같이 본 위헌청구도 그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피청구인 대리인, 2009a). 반면, 청구인 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헌법의 근간이 되는 인권침해라는 특수성이 있어 통상의 전쟁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문제, 즉, 전상병자·전몰자 유족의 원호 적용 여부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 위헌소송 청구는 중재위 구성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제3조에 규정된 일체의 행위, 외교적 경로와 중재위 구성 모두를 하지 않은 부작위를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청구인 측은 피해의 잔혹성과 한국인 피해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규모, 그 유례를 달리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특수한 피해임을 주장했다. 이러한 피해의 특수성은 미국 하원의 결의안, 유엔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1996)와 맥두걸(1998)의 보고서, 일본 재판소의 판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확인되었다고 보았다(청구인 대리인, 2007a; 김창록, 2009).[38] 즉, 청구인 측은 전시 성노예제라는 국제인권 담론을 통해 이 피해에는 전쟁 수행을 위해 식민지인이 전장의 한가운데까지 강제 동원되었다는 측면으로는 모두

---

[37] 일본 정부가 일본군 군인·군속이었던 재일조선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협정 제 3 조에 규정된 중재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제기된 헌법소원이다.

[38] 미 하원 결의안에서 일본군'위안부'는 "20 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이며, 집단 강간, 강제 낙태, 정신적 모욕, 성적 학대 등으로 신체적 장애, 학살 또는 자살이 포함된 전례없이 잔인하고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되었다(청구인 대리인, 2007a). 유엔 특별보고관인 쿠와라스와미(1996)는 피해를 "군사적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로 맥두걸(1998)은 피해를 성노예제이자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위안소를 강간 센터(rape center, rape camp)로 설명했고, 일본 사법부는 피해가 "나치의 만행에 준"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철저한 여성차별·민족차별 사상의 표현이며, 여성의 인격의 존엄을 근저에서부터 침해하고, 민족의 긍지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김창록, 2009; 헌법재판소, 2011).

설명될 수 없는 특이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 피해의 광범위성, 조직성과 지속성, 강제동원, 감시와 강요라는 특성을 언급한 법정 의견 역시 헌법재판소가 '피해'를 성노예제이자 체계적인 강간(systemic rape)으로 명명하면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초국적 페미니스트 운동의 담론을 수용했음을 보여준다.[39] 헌법재판소와 청구인 측은 일본 사법부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피해를 가능하게 했던 "여성차별·민족차별 사상"과 피해가 "여성의 인격의 존엄을 근저에서부터 침해"했음을 짚고 있다(김창록, 2009; 헌법재판소, 2011).

이에 맞서 피청구인 측은 피해가 크든 작든 모두 같은 피해라고 주장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매우 특별한 피해"라고 언급하지만, "거의 전 한민족 구성원들이 크든 작든 일제하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들의 전쟁피해를 현실적으로 국가가 전부 구제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정인섭, 2009).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다고만 설명되었다(정인섭, 2009; 헌법재판소, 2009a). 즉, '피해'가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었던 경험, 남성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보편화된 '전쟁피해'로 이야기되면서 이것의 젠더 차원은 소거되었다. 청구인 측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장 극악한 인권유린"(헌법재판소, 2009c)라고 주장한 것처럼 법정의 양측에서 피해는 그 경중을 중심으로 이견을 빚는 양상을 보였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강제동원 피해 혹은 식민지인의 피해와 어떻게 다른지 논의되지 않았다.

2) 피해와 현재: 지속 혹은 종결

청구인 측은 미 하원 결의안이 2007년 통과될 정도로 피해가 "현재의 인권문제로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청구인 대리인, 2006e). 피해자에게 "현재 심각한 기본권이 침해되어 있고, 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위험이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발생"해있다는 것이다(청구인 대리인, 2007b). 청구인 측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일본 국내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밟았으나 민사소송이 모두 기각되면서 한국 정부를 통해서가 아니면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청구인 대리인, 2009a). 피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가해국이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본국이 상대국과의 외교 행위 및 정책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문제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에서 '피해'는 단순히 과거의 피해 사실뿐 아니라 현재의 권리 회복의 지연까지 포함하는 것이

[39] 피해는 체계적 강간으로서, "강간 행위가 '대규모'로 행해졌으며, '체계적 강간 정책'이 존재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관여했음'(양현아, 2009:178)"으로 설명될 수 있고, 성노예제로서 여성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강간 내지 매춘 강요 상태(양현아, 2009:191)"에 놓였다고 설명된다.

된다.

귀국 후의 피해자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청구인 대리인의 변론은 국가의 방치와 무관심 속에 이들의 인권침해 상황이 가중되었고, 현재도 피해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 2009c). 피해자의 청원서는 징용, 징병 피해자와 달리 고국에 귀환했을 때 "내가 죄를 지은 것만 같아 부모, 형제자매 앞에 당당히 나타날 수가 없었"고, "그런 일을 겪었다고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청구인 강일출, 2009)"다고 밝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단순 "추상적인 인권이나 과거사 정리"가 아니며, "피해의 지속성"과 현재성을 이야기 하면서(청구인 대리인 2006e; 2009a) 남성중심적인 성 규범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은 수치심과 낙인까지 문제화했던 것이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외국의 외교적 보호권 관련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같이 "먼 과거의 일"이자 현재 "급박한 신체적 위협이 없는" 것에 대해선 청구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소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를 과거의 문제로 환원하고자 했다(외교통상부 장관, 2007).[40]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 가해 사실에 따른 것이며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외교통상부 장관, 2006a).[41] 한국 정부를 일본 정부와 동등한 가해자 위치나 책임 주체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정부의 부작위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전적으로 국가의 재량인 외교 행위의 부작위에 따른 상황이나 결과를 말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외교통상부 장관, 2006a). 피해를 과거의 문제로 만들면서 2000년대 초반 피해 구제를 위해 나아간 일련의 조치를 현재로부터 단절시키고, 피해가 사회공동체의 기억과 인권이라는 가치와 연관되는 문제라는 시각을 저버리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에 맞서 청구인 측과 헌법재판소는 첫째로,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둘째로, 민관공동위 발표 이후에도 부작위로 일관해왔음을 짚었다. 먼저, 배상청구권이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만 실현되더라도 여전히 청구인들의 재산적 이익이며, 협정의 해석 문제가 청구권 행사의 결정적 장애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청구인 대리인,

---

[40] 외국의 3 건의 판례에서 "청구인이 구금 혹은 투옥되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청구 기각 판결이 나온 점으로 볼 때" 그러하다고 주장했다(외교통상부 장관, 2007).

[41] "...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게 가해자인 일본 정부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위안부 피해의 책임을 놓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동일한 반열에 두는 것은 그릇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이라는 행위로 청구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가해자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외교통상부 장관, 2006a).

2009a). 2000년대 일본에서의 연이은 패소가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는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창록, 2009). 헌법재판소 역시 한국 정부가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해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배상청구권 및 인간 존엄과 가치의 회복에 대한 장애 상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2011). 또한, 청구인 측과 헌법재판소는 민관공동위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작위의무의 구체성이 증대된 뒤에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김창록, 2009; 헌법재판소, 2011).[42]

반면, 피청구인 측은 2005년 밝힌 "법적 책임은 금전적 보상(민사적 배상책임)은 배제하는 것"(피청구인 대리인, 2009d)이었다거나 제3조 상의 중재 회부를 통한 분쟁 해결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으며(피청구인 대리인, 2009a) "국제법상 국가책임 추궁방식"을 따르겠다는 "일반적 의미"였다고 주장했다(피청구인 대리인, 2009c). 민관공동위 발표는 기존의 정책을 확인한 것이며 별도로 새로운 방식의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약속한 것이 아니고, 그간 정부의 조치들은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채택되는 방법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인섭, 2009). 피청구인 측은 위안부 지원법을 통해 기본권침해를 어느 정도 구제 및 전보해왔기에 대일 배상은 필요 없고, "보다 중요한 문제"인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 해왔다고 맞섰다(피청구인 대리인, 2009a). 양국 정부의 해석상 분쟁을 협정 3조 1항에 명시된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고도 주장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외교통상부 장관, 2006a).[43]

청구인 측과 헌법재판소는 외교통상부가 일본 정부에 민관공동위의 입장을 전하는 것 외에는 2005년 이후에도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과 배상을 촉구했던 바가 없기에 작위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창록, 2009; 헌법재판소, 2011). 법정 의견은 2006년 외교통상부의 회신이나 위헌소송 중 서면에서도 협정 해석상 분쟁을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음을 지적했다(헌법재판소, 2011). 즉, 한국 정부의 외교적 조치는 '피해'를 한일 과거사로 명명할 때는 충분했지만, 여성의 피해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여성 피해자가 권리주체로 부상하면서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적이고 신속하고 적합한' 배상이 요구되고, 정부의 부작위 속에 이들이 겪어야 했던 이중의 고통이 문제화된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과거사청산의 흐름에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들

---

[42] 이때 한국 정부가 이전과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양 정부 간의 해석상 분쟁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김창록, 2009).

[43] 피청구인 측은 '유엔 인권위 및 유엔 총회에서의 발언 요지', '군대 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 노력(2005.8. 이후) 등의 문서를 제출했지만, 문제가 된 작위의무의 이행을 입증하지 못했다.

은 피청구인 측에서 거부되었고, 이전에 비해 퇴보했다고 할 수 있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은 2015년 한일합의가 보여주듯 현실주의 외교와 안보 정책 속에 다시 등장했다.

3. 한(미)일 외교관계의 전망: 여성 인권 혹은 '국익'

양측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이 피해 구제 가능성과 '국익'에 비추어 적절한지 갈등을 빚었고, 그것은 어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졌다. 청구인 측은 한국 정부가 협정에 명시된 분쟁 해결절차를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위해 취해야 하며 그것이 피청구인 측이 말하는 '외교적 신뢰'와 같은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청구인 대리인, 2006a; 2009a).[44] 청구인 측은 협정 해석상의 다툼과 같은 문제를 "회피하여서는 한일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갈 뿐"이고 절차를 따르는 건 "평화적이고 외교적 해결"이라고 주장했다(청구인 대리인, 2006e). 정부가 협정에 예정된 조치를 밟는 것이니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국가외교의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청구인 대리인, 2006d).

반면, 피청구인 측은 국가의 작위의무 도출과 관련하여 "국내문제와는 다른 국제관계의 특수성"을 들면서 "전체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외교통상부 장관, 2007). 협정에 명시된 외교적 경로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혹은 중재 회부,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소하는 것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서 '국익'은 "국가의 명예" 혹은 외교적 편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앞세워 여성 피해자의 경험을 소외시키고 배척하는 것임이 드러난다.[45] 반면, 청구인 측은 이러한 주장은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그간의 국제기구들의 법적 권고들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청구인 대리인, 2006a). 헌법재판소 역시 협정 체결 경위 및 전후 상황,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국내외의 움직임[46]을 볼 때 기본권의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

---

[44] 한편, 청구인 측은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문을 인용해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 다소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이는 국가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제시했다(청구인 대리인, 2006b; 청구인 대리인, 2006e).

[45] 중재재판은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 "소모적 법적 논쟁의 가능성", "문제 해결의 효율성" 등 때문에 국제적으로 거의 회부되지 않았으며(피청구인 대리인, 2009d), 패소 가능성이 있기에 "국가의 명예와 관련된 것"으로서 우려되고(헌법재판소, 2009a), 패소할 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청구인 대리인, 2006c).

[46] 1998 년 입법 작위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따라 2001 년 민주당·공산당·사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법적 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다(헌법재판소, 2011). 또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도 피청구인 측이 든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또는 '외교 관계의 불편'은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를 외면할 사유나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협정 제3조에 따른 조치가 "진정한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2011). 이때 '국익'은 여성 인권,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정의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측과 헌법재판소는 문제의 해결이 한일 과거사와 관련하여 정의, 평화와 인권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청구인 측은 작위의무의 이행은 "청구인들에게 법적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냉전 공조에서 평화 공조로 한일관계를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청구인 대리인, 2006d). 이것은 "양국의 장기적인 미래"에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은 "미래지향적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청구인 대리인, 2006d).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피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다지는 방향", 즉, 재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이라는 과제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헌법재판소, 2011).

반면, 외교통상부는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에 대해 재협상을 체결하자는 주장은 "한일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며 국제사회가 한국에 갖는 "외교적 신뢰"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청구인 대리인, 2006c).[47] 즉, 피청구인 측의 논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를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잊고(피청구인 대리인, 2009b) 경제적·군사적으로 협력하자는 '현실주의적'인 외교 노선에 가까웠다.[48] 반대의견을 낸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야 하는 한일 간의 미묘한 외교 관계"를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놓으면서 비교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1).

한국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해 협정 3조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라는 위헌결정은 한일협정과 같이 정책 결정기구를 중심으로 국가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뤄져 왔던 외교교섭

[47] 일부 청구인들과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외교통상부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던 것의 회신 내용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48] 외무부의 위안부 지원법 관련 1993 년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가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피청구인 대리인, 2009b)".

과 평화협상 체결의 관행과 가치, 지향점을 전환하길 꾀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49] 이러한 위헌결정의 의의에 비추어보면 2015 한일합의는 여성 인권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젠더 관점을 갖는 평화구축 메커니즘으로 진행되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기존의 국제정치에서 주권 국가 및 민족 범주를 호명함으로써 여성들과 그들의 피해 역시 다뤄지길 요구하는 것을 넘어선다. 주권 국가 간 힘겨루기라는 기존의 국제정치의 실행방식, 그것을 기반으로 정의되어온 '평화'와 '안보', '국익'을 여성의 경험이 갖는 차이와 국경을 넘나드는 연대를 통해 재정의하고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V. 여성 피해자와 젠더화된 평화구축

1.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해석

청구인 측은 외교 행위의 재량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고령의 여성 노인들의 고통과 상처, 한을 부각했다. 피해자들이 고문 및 가혹행위, 강간 등의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로 인하여(청구인 대리인, 2009a)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의학적 후유증"을 앓고 있고 현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함을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할 의학 논문들을 첨부했다(청구인 대리인, 2006d). 그러나 청구인 측의 주장에서 '피해자'는 고통에 무력화된 존재라기보다는 부정의에 분노하고 억압에 저항하는 주체(Stringer, 2014:31)였다. '피해자'는 한국 정부가 작위의무를 이행하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길 요구하는 권리주체이자 투쟁가로 이야기되었다. 청구인 측은 피해자가 노령임에도 "존엄과 가치를 되찾기 위해...수요시위에 참석하는 등" 싸워왔음을 언급하며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대일외교정책을 요구했던 700차 수요시위를 보도한 기사들을 첨부했다(청구인 대리인, 2006a). 또한, 일본과 미국, 한국에서 피해자들이 해온 사법 소송들은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피해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었고(청구인 대리인, 2006d), 그 결과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현재화되기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청구인 대리인, 2009b).

피청구인 측 역시 피해자를 우선시하고 이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수사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50]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종전 60년도 더 지난 오늘날까지 충분히 치유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정인섭, 2009) 다른 강제동원 피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피해라고 말하며 일제 식민지기 모두가 "불가항력적"으로 '고통'을 앓아야

[49] 이러한 결정이 협정의 법적 구조를 받아들이면서 협정이 내포하고 있는 식민주의 및 양국 정부가 짊어져야 했을 식민지배 책임을 추궁하기에는 부족했다(김선화, 2017:102)는 평가도 있다.

[50] 문서 말미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애석함을 표시"(외교통상부 장관, 2007)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폄하하려는 의도"(피청구인 대리인, 2009a)는 전혀 없다고 밝히는 식이다.

했다고 주장했다(정인섭, 2009; 헌법재판소, 2009a). 식민지인이라면 누구라도 겪을 수 있었던 불운한 사건으로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국제정치 영역을 '침범'하여 국가에 의무를 강제할 외교적 사안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 측에게 '피해자'는 위안부 지원법의 목적에 맞는, "인도주의적"인 "보호·지원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외교통상부는 1990년대부터 '인도주의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접근과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어왔으며 정부가 피해자에게 갖는 작위의무는 "도덕적"인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51] 이러한 피청구인 측의 논리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입장표명[52]을 비롯해 1990년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전제하고 있던 바를 답습했다. 피해자의 배상과 구제에 대한 요구를 인도주의적 수혜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문제'로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측은 문서 곳곳에서 인권의 수사를 사용했지만[53], 외교통상부가 언급한 조치는 해결을 개인 욕구 충족의 차원으로 환원하는 맥락에 있으며 '피해자'를 복지제도의 '고객'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다(Frazer, 2017[2013]). 이러한 논리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개인의 아픔으로 환원되었고, 그 역사적이고 집합적인 차원을 여성의 피해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소실하도록 했다.

또한, 청구인 측은 피해자가 고령이기에 법적인 피해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호소했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외교통상부의 태도는 "피해자들의 사망을 통해 이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되었다(청구인 대리인, 2006a; 2009a).[54]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받아들여 권리주체인 피해자들의 사망 이후에는 역사적 정의의 정립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회복을 위한 배상청구권 실현이 불가능해진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2011). 반면, 피청구인 측은 정부의 그간 정책은 고령인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피청구

---

[51]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에 있어 "국가의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 있다"는 것이다(외교통상부 장관, 2007). 외교통상부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해온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 국내 피해자신고접수결과 및 해외 피해자 실태조사 자료, 1993 년의 위안부 지원법 등을 제시했다(외교통상부 장관, 2006b).

[52] 피청구인 측(2009a)은 위안부 지원법 관련 청와대 보도자료(1993)를 첨부 및 직접 인용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측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물질적 보상문제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런 점에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에 접근할 수 있을 것".

[53] "반인륜적인 인권침해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외교통상부 장관, 2006a), 복지와 함께 "피해 회복"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 이것의 "부당성과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알리겠다(외교통상부 장관, 2007; 피청구인 대리인, 2009a)고 서술하고 있다.

[54]피해자들의 자필 탄원서 역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싸"워왔지만, 고통과 한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6).

인 대리인, 2009c). 그러나 금전적 보상으로 충분히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복지 지원대상으로 피해자를 보는 피청구인 측의 관점은 피해자 사후에는 문제가 종결된다는 이해와 맞닿아있다.

즉, 양측은 '고통받은 고령의 여성 노인'이라는 피해자 상을 둘러싸고 논의하고 있지만, 청구인 측과 헌법재판소의 주장에서 이야기된 '피해자'는 피해자 위치를 기반으로 젠더 정의와 군사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시민으로 변모할 수 있지만, 피청구인 측의 경우는 '피해자'를 불쌍하고 도와줘야 할 존재로 고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청구인 측의 피해/자 의미구성은 페미니스트 이행기 정의의 실현 대신 피해자 개인의 트라우마 치유만을 과제로 삼게 되는 전조를 보여줬다.

2. 2015 한일합의: 피해/자 담론의 지속과 지연된 평화구축

2011년 위헌결정에 따라 합일청구권협정 제3조 상의 외교상의 경로를 밟는 것으로 이뤄진 2015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다.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선언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국가 간 공식합의이기에 2015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2015 위안부 합의는 위헌결정의 취지 대신 위헌소송에서 나타난 피청구인 측의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문제적인 전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기존 국제정치의 관행대로 이뤄진 합의에서 피해자들은 내용에서는 타자화되었고 절차에서는 배제되었다(양현아, 2016).[55]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합의 직후부터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은 아니라고 밝혔다(합의 TF, 2017:15). 합의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이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여성 인권과 평화, 정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계기 대신 "더 이상 한일관계가 경색되지 않고(정윤섭, 2015)" 한미일 협력의 동북아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추상적인 국익을 내세워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역사적 정의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회복을 위해 배상청구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달리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전시 성폭력의 근절과 평화구축 과정에의 여성 피해자의 참여 및 젠더 관점의 반영에 대한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6]

---

[55] 양국 협의가 이뤄진 후에서야 외교부 관계자가 국가에 등록된 피해생존자나 그 가족과 접촉해 내용을 설득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도 직접 청취가 이뤄진 것은 3 건뿐으로 나머지는 법적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와의 면담으로 이뤄졌다(양현아, 2016:35).

[56] 그러나 피해자들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Brett(2018)은 2015 년 콜롬비아 정부와 저항군 사이에서 열린 평화회담에 피해자들이 대표자(delegate)로 참여하고 이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첫째로, 피해자들이 평화구축의 주체로

협상 타결 후 불거진 논란들에 청와대는 "평균 나이 89세"인 고령의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조속한 해결에 전력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정윤섭, 2015). 여전히 '피해자'를 '한 많은 여성 노인'이라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수혜자로 전제하면서 이들의 피해 구제와 권리 회복을 개인화하고 탈정치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고통받은 피해자 개인의 위무와 지원을 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Ⅴ. 결론

피해자의 고통을 개인적 차원의 것으로 격하시키고 피해자들을 잔여적 복지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담론의 이면에는 권리를 주장하며 복지정책을 넘어선 인권회복 조치를 요구하고, 보호받는 위치에 머물지 않고 국제정치에서 남성들이 점해온 권력에 도전하는 목소리를 제약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경험을 역사화함으로써 한일관계에서의 평화구축과 군사주의로 인한 젠더 폭력의 재발 방지를 꾀한 여성운동의 페미니스트 문제의식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를 가능하게 했고 현재도 잔존하는 신/식민주의와 제국주의, 군사주의와 무력분쟁, 젠더 권력관계와 여성의 섹슈얼리티 착취와 연결되어 있으며, 변혁적 정의 및 페미니스트 이행기 정의를 요구한다.

따라서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전회에 맞서 이것들에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로, 현 상황을 타개하고 피해자들을 권리 주체로 만들어 온 피해자 언어를 되찾기 위해서, 둘째로, 정의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발화와 여성의 경험이 국제정치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셋째로, 개인의 고통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억압의 요인들을 식별하고 사회 구조를 변혁하기 위해서다. '피해자'는 피해자 위치를 기반으로 젠더 정의, 반식민, 평화를 요구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피해'는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현재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과정에 놓인 것으로,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이행은 현재의 외교와 안보에 대한 상과 그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는 기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정받으면서 큰 효능감을 얻게 되었고, 둘째로, 평화 협정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 내용과 성격이 전환되었고, 셋째로, 갈등과 폭력의 수준을 낮추자는 합의가 이뤄져 지속가능한 평화가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1차 자료

국무조정실(2005),『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국회 여성위원회(2005),『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사무처(1993),『제161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창록(2009),『참고인 의견서』.

____·박배근·양현아·이상희·조시현·이제수·이원규·백시진(2018),『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책임: 전시 성폭력 실태기록, 학술행사 홍보 및 국제협력활동 사업 최종 보고서』, 여성가족부, 11-13830000-000910-01.

대통령비서실편집부(2006),『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정부(1993),『의안 140239: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

외교통상부 장관(2006a),『답변서』.

_____(2006b),『답변서 첨부문서: 일본군 군대 위안부 지원현황』.

_____(2007),『보충답변서』.

외교통상부(1998),『보도자료: 생존 구 군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즈음한 대변인 성명』.

외무부(1990),『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민원 회신』.

이미경 의원 등 29인(2001),『의안 1393: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효재·윤정옥·성봉희(정대협)(1996),『청원 150040: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금증액』.

정윤섭(2015), "靑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연합뉴스」.

정인섭(2009),『참고인 의견서』.

정진성·박정애·한혜인·김은경·박정미(2015),「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운동 초기 활동가·연구자에 대한 구술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5-101.

청구인 김일출(2009),『청원서』.

청구인 대리인(2006a),『심판청구서』.

_____(2006b),『심판청구서 입증방법: 2002구합 33943 정보공개거부처부취소 판결문』.

_____(2006c),『심판청구서 입증방법: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외교통상부 입장』.

_____(2006d),『심판청구이유보충서』.

_____(2006e),『준비서면』.

_____(2007a),『준비서면』.

_____(2007b),『준비서면』.

_____(2009a),『변론요지서』.

_____(2009b),『심판 보충이유서』.

피청구인 대리인(2009a),『변론요지서』.

_____(2009b),『변론요지서 입증방법: 외무부의 보도자료, 군대위안부 피해자 구호조치』.

_____(2009c),『공개변론 진행에 관한 의견서』.

_____(2009d),『참고서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 38개 여성단체(1990),『공개서한: 내각총리대신 가이후 도시키 귀하』.

_____·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1990),『노태우 대통령 방일에 즈음한 여성계의 입장: 5월 24일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하여 여성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3a).『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3월 13일자 지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

_____(1993b),『'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외교 현안으로서의 종결'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한 질의』.

_____(2006),『재판의 공개심리를 요청하는 탄원서』.

_____·한국교회여성연합회·일본군'위안부' 한국인 생존자 외 21개 단체(1995).『한국 외무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즉각 중단하라!』.

헌법재판소(2009a),『참고인 진술 및 신문조서』.

_____(2009b),『참고인 진술 및 신문조서』.

_____(2009c),『변론조서』.

_____(2011),『2006헌마788 결정문』.

논문 및 단행본

Aoláin, F. N(2012), "Advancing Feminist Positioning in the Field of Transitional Jus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6(2), pp.205–228.

Bell, C. & Rourke, C. O(2007), "Does Feminism Need a Theory of Transitional Justice? An Introductory Essay",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1(1), pp.23–44.

Brett, R(2018), "The Role of the Victims' Delegations in the Santos-FARC Peace Talks", *The Politics of Victimhood in Post-conflict Societies-Comparative and Analytical Perspectives*, Druliolle, V. & Brett, R(ed.), Palgrave Macmillan, pp.267-300.

Buckley-Zistel, S. & Zolkos, M(2012), "Gender in Transitional Justice". *Gender in Transitional Justice,* Buckley-Zistel, S. & Stanley, R(ed.). Palgrave Macmillan. pp.1-36.

Druliolle, V. & Brett, R(2018), "Understanding the Construction of Victimhood and the Evolving Role of Victims in Transitional Justice and Peacebuilding", T*he Politics of Victimhood in Post-conflict Societies-Comparative and Analytical Perspectives*, Druliolle, V. & Brett, R(ed), Palgrave Macmillan, pp.1-22.

Franke, K. M(2006), "Gendered Subjects of Transitional Justice". *Columbia Journal of Gender and Law*, 15(3), pp.813-828.

Gracía-Godos, J(2016), "Review Essay: Victims in Focu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10, pp.350-358.

Gready, P. & Robins, S(2014), "From Transitional to Transformative Justice-A New Agenda for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8(3), pp.339–361.

Hudson, H(2009), "Peacebuilding Through a Gender Lens and the Challenges of Implementation in Rwanda and Côte d'Ivoire", *Security Studies*, 18(2), pp.287-318.

Sigsworth, R. & Valji, N(2011), "Continutie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Limitations of Transitional Justice: The Case of South Africa", *Gender in Transitional Justice*. Buckley-Zistel, S. & Stanley, R(ed.), Palgrave Macmillan, pp.115-135.

Stringer, R(2014), *Knowing victims: Feminism, Agency and Victim Politics in Neoliberal Times*, Routledge.

강윤희(2013), "제2장: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 형성과 확산-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한 1325호를 중심으로",『젠더와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편), 55-96쪽.

김부자(2008), "'위안부' 문제와 탈식민주의",『역사와 책임: '위안부' 문제와 1990년대』, 나카노 도시오·김부자(편), 이애숙·오미정(역), 선인, 119-146쪽.

김선화(2017),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와 일본군'위안부' 문제-관련 재판과 '2015년 한일합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소형(2019),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부고기사와 집단 기억의 형성", 『인문사회21』, 제10권 4호, 1-14쪽.

김수아(2000),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담론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나카노 도시오(2008),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역사에 대한 책임", 『역사와 책임: '위안부' 문제와 1990년대』, 나카노 도시오·김부자(편), 이애숙·오미정(역), 선인, 119-146쪽.

남광규(2017), "제2장 신정부의 대일정책 방향과 과제", 『통일전략』, 제17권 3호, 45-77쪽.

백승덕(2016), "무엇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을 대표하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63권, 13-23쪽.

손열(2018), "위안부 합의의 국제정치: 정체성-안보-경제 넥서스와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국제정치논집』, 제58권 2호, 145-177쪽.

송에스더(2020), "중대한 인권침해시의 배상 정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2호, 79-127쪽.

신기영(2016), "글로벌 인권 문제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합의 이후의 과제", 『Jpi 정책포럼』, 제183권, 1-12쪽.

양기호(2015), "한일갈등에서 국제쟁점으로: 위안부문제 확산과정의 분석과 함의", 『일본연구논총』, 제42권, 5-30쪽.

양현아(2001), "증언과 역사쓰기-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 역사』, 제60권, 60-98쪽.

_____(2009), "2000년법정을 통해 본 피해자 증언과 법 언어의 만남-체계적 강간과 성노예제를 중심으로", 『한일 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김부자 외 10인, 동북아역사재단, 154-216쪽.

_____(2010),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성차별 판단의 논증", 『경제와 사회』, 215-255쪽.

_____(2016),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그 내용과 절차", 『민주법학』, 제60권, 13-44쪽.

이나영(2018), "경계에서 출발해 경계를 넘어: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초국적 연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제9권 2호, 191-230쪽.

이효재(1999),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편), 181-238쪽.

장기영(2017), "안보위협이 과거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관한

국내여론 분석", 『국제정치논집』, 제57권 4호, 45-73쪽.
정재민(2016), "일본군 '위안부' 관련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의 관계",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1호, 189-219쪽.
정진성(2019), 『유엔과 인권규범의 형성』, 나남.
조경근(2013), "제5장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 『통일전략』, 제13권 2호, 149-182쪽.
조시현(201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민주법학』, 제46권, 81-112쪽.
프레이저, 낸시(2017), "욕구를 둘러싼 투쟁: 후기자본주의 정치문화에 대한 사회주의 페미니즘 비판이론의 개괄", 『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역), 돌베개(Frazer, N(2013), "Struggle over Needs: Outline of a Socialist-Feminist Critical Theory of Late-Capitalist Political Culture", *Fortunes of Feminism*, Verso Books, pp.53-8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편)(20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아카데미.
호리야마 아키꼬(2008), "노무현정권의 한일 과거사 처리-한일협정 문서공개와 피해자구제의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동북아국제지역전공 석사학위 논문.
황은진(199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의식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협동과정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

김학순 공개증언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Friday, August 13, 2021, 10:00~19:00 KST

Youth Culture Place JU Dongkyodong
(International participants can join via Zoom)

Simultaneous interpretations available
in Korean, English, and Japanese

Organizer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Co-hosts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Deput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Kim Sanghee, Chair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Jung Chounsook,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oo Wonshik, Kim Minki, Hong Ihkpyo, Lee Jaejung, Kim Woni, Min Hyungbae, Han Junho, and Jang Hyeyoung

Table of Contents

Program 188

Opening speech 192

Congratulatory Messages 194

Session 1. The Implications of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216

CHUNG Chin-sung I Member,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Former Co-chair,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216

YANG Ching-ja I Co-chair, Japan Nationwide Ac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Japan 221

UEMURA Takashi I Publisher and President of Weekly Friday, Japan & Former *Asahi Shimbun* Reporter 230

Session 2. The Waves and Echoes of Kim Hak-soon's Testimony 246

YANG Hyunah I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246

Alexis Dudden I Professor, University of Connecticut, USA 259

Elizabeth W. Son I Professor, Northwestern University, USA 261

Kathryn Bathgate I Master Student, University of Münster, Germany 269

Session 3. Backlash of Historical Denialism 300

KIM Pu-ja I Professor,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pan 300

Tomomi Yamaguchi I Associate Professor, Montana State University, USA 309

KANG Sung-hyun I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324

RA Yu-shin I Lecturer, GPB College & Member, the Korea Verband, Germany 349

Session 4. Future Directions and Agenda for the Resolu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366

BAEK Jae-ye I PhD Stud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USA 366

LEE Jae-im I PhD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380

Program

Time	Program
10:00~10:15	**Opening Remarks** Moderator: CHOI Kwang-kee (Board member,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0:15~10:30	**Message of Solidarity (Video)** LEE Ok-seon (Human Rights Ativist &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urvivor) LEE Yong-soo (Human Rights Ativist &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urvivor) Theo van Boven (Professor, Maastricht University, Netherlands & Former UN's Special Rapporteur) Gay McDougall (Professor, Fordham University, USA & Former UN's Special Rapporteur) Ustinia Dolgopol (Professor, Flinders University, Australia & Former Prosecutor,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Patricia Viseur Sellers (Professor,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UK & Former Prosecutor,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dai Sajor (Adviser, The Norwegian Refugee Council, Norway & Former Co-chair,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WATANABE Mina (Director,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Japan) **Video <We are Kim Hak-soon>**
10:30~12:00	**<Session 1> The Implications of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Moderator: LEE Na-Young (Chair of board,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Keynote Speech. CHUNG Chin-sung (Member,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Former Co-chair,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 YANG Ching-ja (Co-chair, Japan Nationwide Ac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Japan) 2) UEMURA Takashi (Publisher and President of *Weekly Friday*, Japan & Former *Asahi Shimbun* Reporter)
12:00~13:30	**Lunch**
13:30~15:10	**<Session 2> The Waves and Echoes of Kim Hak-soon's Testimony** Moderator: BAE Eun-kyung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 YANG Hyuna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2) Alexis Dudden (Professor, University of Connecticut, USA) 3) Elizabeth W. Son (Professor, Northwestern University, USA) 4) Kathryn Bathgate (Master Student, University of Münster, Germany)
15:10~15:20	**Break**
15:20~17:00	**<Session 3> Backlash of Historical Denialism** Moderator: KIM Deug-joong (Director, Office of Research on Historical Materials,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 KIM Pu-ja (Professor,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pan) " 2) Tomomi Yamaguchi (Associate Professor, Montana State University, USA) 3) KANG Sung-hyun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4) RA Yu-shin (Lecturer, GPB College & Member, the Korea Verband, Germany)
17:00~17:15	**Break**
17:15~18:00	**<Session 4> Future Directions and Agenda for the Resolu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Moderator: KIM Soo-jin (Senior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1) BAEK Jae-ye (PhD Stud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USA) 2) LEE Jae-im (PhD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18:00~19:00	**Discussion and Q&A** Moderator: KIM Soo-jin (Senior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Opening speech



Chair of Board,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Lee Na-Young

(Sociology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August 14th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urvivor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It is an honor to be able to hol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celebrating the day.

Kim Hak-soon's courageous testimony contributed to restoring the honor and dignity of the victims by informing the world of the historical truth and inspiring victims around the world to come forward. It also urged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recognize wartime sexual violence as a universal women's rights issue and inspired civic movements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the transnational civic movement propelled by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created new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rewritten global human rights history from the perspectives of women.

30 years from then,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void legal responsibility and systematically remove Statues of Peace. The expansion of historical denialism is also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a just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Given these circumstances,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discuss how to remember and record the testimonies of victims and spread and inherit their meanings toda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oday has been organized to reflect on the legacy of Kim Hak-soon and discuss the meaning of victim-survivor activism, which has raised awareness of and fought for truth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e four panels include not only international experts such as Professor Chung Chin-sung, Yang Ching-ja of Japan, reporter Uemura Takashi, Professor Kim Pu-ja, Professors Yang Hyun-ah and Kang Sung-

hyun of Korea, Professors Alexis Dudden, Tomomi Yamaguchi, and Elizabeth Son of the U.S., but also young researchers who have joined us through the call for papers. These speakers will create a space for discussion beyond the walls of sex, ethnicity, generation, and language.

I thank all researchers who are here today for the conference. I also would like to extend special thanks to the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Deput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Sanghee, Chair of National Assembly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Jung Chounsook, abnd National Assembly members Hong Ihkpyo, Lee Jaejung, Woo Wonshik, Kim Minki, Kim Woni, Min Hyungbae, Jang Hyeyoung and Han Junho who have co-planned and co-organized the conference with us.

Human rights activist and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urvivor Lee Yong-soo, UN special rapporteur Professor Theo Van Boven, Professor Gay McDougall of Fordham University, U.S., Professor Ustina Dolgopol of Flinders University, Australia and Professor Patricia Viseur Sellers of London School of Economics who had both been former prosecutors of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dai Sajor, advisor at the Norwegian Refugee Council and former co-chair of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and Watanabe Mina of Japan's WAM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have sent us video messages of solidarity even though they could not join us physical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 also thank people who have played pivotal roles in the movement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enable us to share the meaning of Kim Hak-soon's testimony and create meaningful discussions.

Congratulatory Messages



Head Researcher, The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Kim Deok-joong

(Director, Office of Research on Historical Materials,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30 years ago on August 14th, 1991, a woman raised her voice. To Kim Hak-soon halmoni, who came forward with her experiences as a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an," the testimony might have been painful in resurfacing the trauma from 50 years ago.

Her courageous testimony, which stood upon such pain, allowed us to recognize our lack of interest and knowledge. Decades have passed since the liberation, but we lacked knowledge about our own history, the fact that many women were mobilized and suffered in the war under colonialism. This began to change with the courageous testimony Kim Hak-soon made.

On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testimony, I would like to reflect on the impact of Kim Hak-soon's testimony. The historical truth that was revealed through Kim's testimony inspired many other victims to come forward. Civil activism and scholarship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ve grown in volume and depth, discussing women's rights, colonialism, war, and peace.

The small footstep that began with Kim Hak-soon halmoni's testimony has now developed into an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nd peace movement that is sketching the world we should strive for.

Reflecting on Kim Hak-soon 30 years ag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held today will be significant in its examinations of the status quo and discussions of the world we should live in.

I thank the panelists who are presenting their valuable research, discussants, and moderators. I also thank the organizers for their hard work in making this conference possible. The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ill always keep in

mind the meaning of Kim-Hak soon's testimony and try our best to investigate the truth abou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ank you.

Congratulatory Messages



Head of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Lee Hye-sook

(Sociology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n August 14th, 1991, Kim Hak-soon testified publicly for the first time and filed a lawsuit against Japan. Kim Hak-soon's testimony inspired not only Korean victims but also victims from the Philippines, the Netherlands, and around the world to come forward. Kim Hak-soon's testimony revealed the silenced historical truth to the world and contributed to redress for victims. In December 2017, August 14, International Memorial Day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holiday. Nevertheles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denying the historical truth of coercion and its involvement. It has been evading legal responsibility and neglecting and distorting the history.

In this context, we are here today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Professionals and young researchers from each country will present and discuss the significance of the 30-year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the waves and resonance created by Kim's testimony, backlash from history denialism,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directions and tasks for a just resolution of the issue.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have researched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or a long time through academic activities. Through this conference with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The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e hope that academia, civil society, and the government would find interest in not only the meaning of victims' testimonies but also in specific contents of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 hope that today's conference will enable us to understand the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and propose va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measures as discourse and movement converge.

I would like to thank the speakers and discussants, moderators, those who are sending video messages of solidarity, those who have worked hard to organize the event, and all participants. Hopefully, this conference will be a meaningful time for all. Thank you.



Deput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Sanghee

(Gyeonggi Bucheon-si Byeong, Democratic Party of Korea)

Greetings to distinguished participants. I am Kim Sanghee, Deput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It was August 14 1991 when Kim Hak-soon halmoni publicly testified abou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for the first time. Thanks to the courage of one victim, the "comfort women" issue that was hidden for more than 50 years was brought above the water. The public testimony on that day was the beginning of restoring the honor and dignity of victims, human rights movement and international research on wartime sexual violence. It was the motive fo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in 2000.

Since 2018, August 14 has been established as the Memorial Day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in Korea. Wednesday Demonstration for resolu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s continued for more than 1500 times. It is a worldwide record made by the solidarity of victims and citizens.

But we still have a long way ahead of us. The Japanese government still denies the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The attempts to erase and distort history continue. The lawsuit victims filed against Japan is still in progress. In the meantime, two victims passed away this year. There are only 14 victims left out of the 240 registered to the Korean government.

At this point in time,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o discuss a righteous resolution and reframe the meaning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is truly meaningful. I thank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The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for making this event possible. I hope this conference would allow us to discuss ways to continue and

expand the victims' activism and to resolv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at remains a core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Thank you.

Congratulatory Messages



National Assembly Member

Jung Chounsook

Chair of National Assembly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Gyeonggi Yongin-si Byeong, Democratic Party of Korea)

Greetings to distinguished participants. I am Jung Chounsook, Chair of National Assembly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and Member representing Gyeonggi-do (Yongin-si Byeong) from Democratic Party of Korea.

It has been 30 years since late Kim Hak-soon halmoni testified abou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o the world on August 14 1991. I come to look back to the long and difficult figh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had to go through.

It is an honor for me to participate in this event, with the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and peer lawmakers including Deputy Speaker Kim Sanghee.

I hope to reflect on the past achievement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and discuss a rightful way of resolving the issue throughout today's event. I thank all the activists and professionals who have taken the time to share valued opinions. I express my special gratitude to the international panelists who are raising awarenes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round the world.

Kim Hak-soon halmoni's courageous testimony brought out countless victims who had swallowed their anger in silence. It was able to inform the world of the historical truth, call for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and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estore the honor and dignity of the victims. Furthermore, it became the basis for raising awareness on the grave crimes of wartime sexual violence and expanding the values of peace and human right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was able to become a global movement beyond Korea because there were citizens around the world who have raised the issue and called for a resolution. The Wednesday Demonstration held every Wednesday in front of the former Japanese Embassy recently marked its 1,500 times. It is the longest, saddest yet the proudest record in the world.

Despite these efforts, the Japanese government is still evading its responsibilities. Distorting and denying history, or systematically campaigning for the removal of the Statue of Peace continue.

There are only 14 victim-survivors now. With a heavy heart, I feel sorry and regretful. We will unite and work together so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makes legal reparations and sincere apologies as soon as possible.

As the Chair of National Assembly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I will monitor laws and systems to contribute to restoration of human rights and dignity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Congratulatory Messages



National Assembly Member

Woo Wonshik

(Seoul Nowon-gu Eul, Democratic Party of Korea)

Dear all,

I am Woo Wonshik, Democratic Party National Assembly member.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hurtful truth of history was revealed by Kim Hak-soon halmoni's testimony. I send my respect and gratitude to Lee Na-young, chair of board at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all related personnels who played a part in restoring the victims' honor and women's rights.

30 years have passed since Kim's testimony. The small cry of Kim Hak-soon halmoni 30 years ago led to 1500th Wednesday demonstrations and civil voices to spread the truth. Last January, the court made a historical decisio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compensa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76 years after liberation. This is the first decision that recognized the deliberate and systematic act of anti-humanitarian acts done to 'comfort women' victims. Nevertheless, Japan denies the brutal atrocities of imperialism and still distorts history. However, the stream of history cannot be deflected.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a matter of truth, not historical controversy, and Japan's apology is also a matter of justice, not a matter of agre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recognize the history and show responsibility in solv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Only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acknowledge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a grave crime against humanity will the honor of victims be restored and their human rights guaranteed.

Only 14 victims remain with us. The future generation must never forget the history of pain, where human rights were bashed and labour was exploited. Research and education to set history right should be promoted so that more students and citizens

can join forces in a sad history together. Just as your research has been a lamp to reveal the truth of history, please stay with us until the day when halmonis' honor is restored. As an heir of independence fighter and chairman of the board for Hong Bum-do memorial organization, I will take the lead with a sense of mission i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On one side of my office is the Statue of Peace, which I received from the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when I was a party leader. Looking at the statue of peace, I have been determined to remember the horrors of that day and to do my best to answer the voices of the victim halmonis. I will do my best until the pain and wounds of halmonis who have lived with pain all their lives, like the fist of the Statue of Peace, heal. Thank you.



National Assembly Member

Kim Minki

(Gyeonggi Yongin-si Eul, Democratic Party of Korea)

Hello,

I am National Assembly member Kim Minki.

It has been 30 years since Kim Hak-soon halmoni courageously testified about the painful history, statiing "I am the living evidence." The history that was silenced for more than 50 years after liberation started being revealed with the testimony of Kim Hak-soon halmoni.

After the first testimony, victims' testimony continued endlessly at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on the streets and in court. Rather than hiding, victims chose to come forward and testify their experiences and continued their activism hoping that the brutal history would never be repeated again.

Throughout such processes, the young girls who were victims of a crime were reborn as strong human rights activists. They spoke about wartime sexual violence in Korea and abroad and continuously called for the value of universal human rights and peace.

However, despite the persistent struggle of the halmoni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still not fully resolved. The Japanese government is still avoiding responsibility and refusing to make official apologies and reparations, and papers that distort facts are being published to academia without screen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has been organized to raise awareness of the truth about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discuss the meaning of victims' fight, while looking back on the 30 years after Kim Hak-soon halmoni's testimony. Regardless of whether the Japanese government apologizes responsibly, the conference will be a meaningful space to look back on the history of the 30-year struggle that has left a meaningful mark in the history of human rights in the world.

I send my deep respect and gratitude to the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who organized the events. I also thank the panelists and speakers.
May the halmonis rest in peace.
Thank you.



National Assembly Member

Hong Ihkpyo

(Seoul Jung-gu Seongdong-gu Gap,

Democratic Party of Korea)

Greetings to distinguished participants. I am lawmaker Hong Ihkpyo.

It is meaningful th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is held. I thank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and peer lawmakers including Deputy Speaker Kim Sanghee.

August 14 1991 is the day that the late Kim Hak soon, testified publicly as a "comfort women" victim for the first time. The government honored the day of Kim Hak-soon's testimony as the Memorial Day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The courage of the public testimony drew testimonies of other victims, revealed the forced mobilization,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bove the surface, and raised the wartime sexual violence and human rights issue internationally.

One solemn decision and courage to reveal the historical truth to the world led the conscientious citizens of both Korea and Japan, as well as the world, to join forces on the wartime sexual violence issue. Ye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still face many challenges for restoring the honor of victims.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apologize and make reasonable reparations to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s soon as possible. The world, including Korea and Japan, has an obligation to educate on history that should not be repeated agai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not only a dispute between Korea-Japan, but also a record of war crimes that the world has to remember.

On January 27, the Israeli Embassy in Korea and the German Embassy in Korea jointly held a memorial ceremony for the Holocaust Memorial Day. The day when Korea and Japan hold such a ceremony in a third country as perpetrator and victim of war crimes seems distant, but I think this is the future we should aim for. For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face history with responsibility and fulfill its duty. We must continue on to promote the truth of the "comfort women" issue.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is a space for us to look back on the 30 years after the testimony and discuss the victims' activism to promote the "comfort women" in multiple perspectives. Civil society activists and researchers who have worked for the issue for a long time gathered together, overcoming the boundaries of country, language, and generation. I will carefully listen to the various discussions that take place today and strive to fulfill my own responsibility in the tasks of the National Assembly.

Once again, I express my gratitude to all staff and participants at today's conference.

Congratulatory Messages



National Assembly Member

Lee Jaejung

Executive Secretary of National Assembly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Gyeonggi Anyang-si Dongan-gu Eul,
Democratic Party of Korea)

Greetings to all,

I am Lee Jaejung Executive Secretary of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and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t is very meaningful to hold an academic conference to tell the truth of history and discuss future directions on the International Memorial Day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hich sheds light on Kim Hak-soon halmoni's courageous testimony 30 years ago.

"No. This needs to be set right". The truth she revealed with a trembling voice still lives with us, echoing that truth cannot be hidden.

Despite Japan's systematic removal of the Statue of Peace and denial of history, I hope that the courageous voice of August 14 will lead to discussions on peace today.

Remembering her words, "This history must be known," I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civil society for redress of the victims who fought and raised awarenes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 thank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who have organized the event and thank all who have participanted as presenters and discussants.

I will listen to the discussion made today and think and act on what the National Assembly can do to achieve women's rights and peace.

Thank you.

Congratulatory Messages



National Assembly Member

Kim Woni

(Jeollanam-do Mokpo-si, Democratic Party of Korea)

Dear all,

I am Kim Won-ie, Democratic Party National Assembly member representing Mokpo-si.

Congratulations from my deepest heart on hold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I thank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and peer lawmakers including Deputy Speaker Kim Sanghee.

August 14 marks the 30th-year anniversary of the late Kim Hak-soon halmoni's public testimony, where she spoke abou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for the first time. Kim Hak-soon halmoni's testimony awakened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around the world. Thanks to their courageous testimonies and appeal,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now recognized as a crime against humanit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Even after 30 year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t apologized wholeheartedly abou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 strongly demands the removal of the Statue of Peace, and right-wing groups are persistently threatening the Nagoya exhibition of the Statue of Peace as well as exhibitions in Osaka and Munich.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start reflecting and apologize to the to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They must officially acknowledge the testimony of the victims and join us in making history right.

We still have tasks to do. We need a long-term plan to investigate the truth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seek redress, prepare measures to stop distortion of history, and solve the issue with a victim-centered approach. I hope that today's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seek resolution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 will also put in my efforts to advocate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continuation of the movement. In this age of Covid-19 and extreme heat, I pray for the well-being of 14 alive halmonis.

Thank you.

Congratulatory Messages



National Assembly Member Min Hyungbae

(Gwangju Gwangsan-gu Eul, Democratic Party of Korea)

Dear all,

I am Min Hyungbae, a National Assembly member.

On August 14, 1991,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 late Kim Hak-soon's testimoy moved the world. The truth that had been buried for decades was finally brought to light. Japan's ugly crimes were widely known. Numerous victims around the world who have been living with scars of the past started courageously coming forward.

No one had dared to speak out. Thanks to the courageous decision of the late Kim Hak-soon, the terrible truth was revealed. It became the foundation for the restoration of the victims' honor and dignity. I send my gratitude and respect.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and many others have worked tirelessly to organize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Thank you.

I also thank peer lawmakers who have joined this effort. I will also be a lamp of hope that sheds light on truth.

I am ashamed and sorry.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s not been properly resolved. There are still questions to be answered. 29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testimony. The Wednesday Demonstration has reached its 1500th demonstration. Only 14 out of 240 victims are alive. We need to speed up the process.

I look forward to today's conference a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courageous testimony and set history right. Small drops of water can cut through large rocks. There is nothing we cannot do in our unity. I will also work on supplementing the law and system

in the National Assembly.

I wish for the health and peace of all. Thank you.

National Assembly Member

Han Junho

(Gyeonggi Goyang-si Eul, Democratic Party of Korea)



Dear all, I am National Assembly member Han Junho.

It is great news th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is being held.

I send my gratitude towards fellow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other organizers, and all participants.

It was recently revealed that the composer of the entrance song at the Tokyo Olympics opening ceremony was a right-wing who denied the atrocities committed toward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is is against the Olympic ideology of contributing to world peace.

30 years have passed since Kim Hak-soon halmoni courageously came forward, but Japan has not yet made a sincere apology for the past or promised to prevent recurrence. Rather,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cently demanded the removal of the Statue of Peace exhibition in Munich, southern Germany.

UN has also been recommending apology and educa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but the Japanese government is continuing to repeat its past stance, denying the forced nature of the "comfort women" system.

The painful history of the forcible mobilization of young girls as sex slaves and the denial of their human rights under Japanese imperialism and totalitarian system is truth that must be remebered.

No country can exist without its citizens. We must continue to put in effort to resolv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ith a victim-centered approach. I promise to do my best in the National Assembly to share the value of human rights and peace and to ensure that the true recovery of damage can be achieved.

May halmonis who passed away rest in peace.

Once again, I thank all participants for joining us today.

Congratulatory Messages



National Assembly Member

Jang Hyeyou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Justice Party)

I am Jang Hyeyoung, Justice Party National Assembly member.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mfort women" movement began with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It is very meaningful to hos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o commemorate this and reflect on the meaning of victims' activism with many people.

"I am the victim." The testimony made 30 years ago did not leave the horrors that could not even be spoken as an individual memory, but powerfully changed them into everyone's history. August 14th was designated as the International Memorial Day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other memories were lit like candles. This history is in line with the #MeToo movement, through which people come forward stating "I am also a victim."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respect for the courage of Kim Hak-soon for her first testimony.

During the 30 years of the movement, we learned that history does not make itself but is made by those who are courageous. On the other hand, I realized that history can retreat at any time unless we face the past properly, as seen in the 2015 Korea-Japan agreement and demands to remove the Statue of Peace in various places. That is why we have to continue remembering and speaking.

In light of the 30 year anniversary of the movement. I am determined to not ignore this world without apologies. I will not leave the world the way it is, helplessly praying for the victims that passed away and counting the remaining survivors. I will continue to raise my voice and stand in solidarity for an official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so that we can move onto a world of healing.

I thank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and others who made this event possible.

Session 1. The Implications of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Keynote Speeches: The Present of Historicity, Testimony Paves the Way for Human Rights and Peace!

CHUNG Chin-sung I Member,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Former Co-chair,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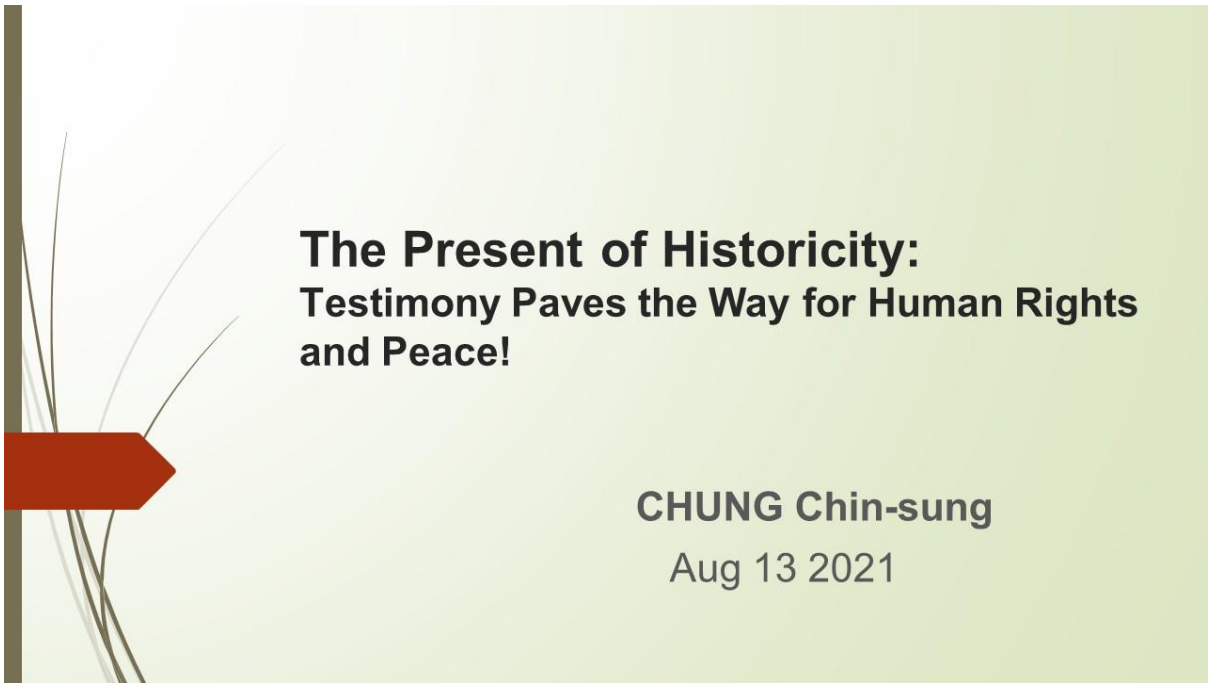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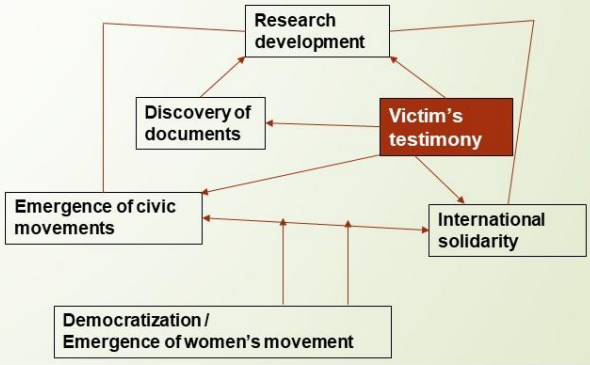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 (1) "Social" discover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emergence of Kim Hak-soon
- (2) Specific process of Kim Hak-soon's testimony
- (3) After Kim Hak-soon's testimony I: Explosion of social awareness, movement, and research
- (4) Afer Kim Hak-soon's testimony II: From victim to activist
- (5) Meaning and significance of Kim Hak-soon's testimony in the post-victim era





(1) "Social" discover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emergence of Kim Hak-soon



The long-term concealment: Factors: patriarchy, post-liber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authoritarian government, economic difficulties, etc.
Continued discovery of resources, research, novels and movies

July 1991: Testimony
Aug 14 1991: Press Conference. Public testimony
December 16 1997: Passed Away
2012: Aug 14 proclaimed as the International Memorial Day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t the Asian Solidarity Conference
2018: Aug 14 proclaimed as national holiday by the Korean government







(2) Specific process of Kim Hak-soon's testimony

- 1. Denial of historical facts by the Japanese government
- 2. Emergence of post-war reparations movement
- 3. Activities of the Korea Church Women United (KCWU)
- 4. Development of the Korean Council







(3) After Kim Hak-soon's testimony I: Explosion of social awareness, movement, and research

- 1. Spread of Me Too Movement: Moon Ok-ju… South Korea, North Korea, Japan, victimized countries in Asia, the Netherlands
- 2. Explosion of Movement: Wednesday Demonstration (Jan 8 1992), testimonies overseas, memorial monument…
- 3. Pursuit of Legal Justice: Litigation (Japan, U.S., South Korea, etc.)
- 4. Breakthrough in Research: Discovery of documents(Nov 1991), investigation of the truth
- 5. Changes in the Japanese Government's Attitude: 1st and 2nd investigation reports, inclusion in history textbooks, Asian Women's Fund…
- 6. Enactment of Special Law by the Korean government (Jun 1993)
  ACT ON LIVELIHOOD STABILITY AND MEMORIAL SERVICES, ETC. FOR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 7. Inter-Korean Solidarity/Overseas Korean Solidarity/International Solidarity
- 8. Formation of a New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Issue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s



(4) After Kim Hak-soon's testimony II: From victim to activist

- 1. Changing Victims' Consciousness: From Victim to Activist
  Most importantly, healing and restoration of honor.
  Butterfly Fund, Kim Bok-dong Center, Vietnam solidarity activities, Chosen-gakko (Korean schools in Japan) scholarships, etc.
- 2. Remaining tasks: Reconciliation of historical specificities and universality/ research on post-colonialism
- 3. Suggestion on the practical direction of the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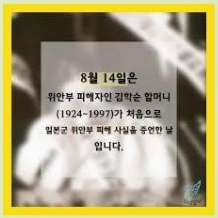
(5) Meaning and significance of Kim Hak-soon's testimony in the post-victims era



1997.12.16

- 1. The present significance of Kim Hak-soon's testimony
  - Universal values of women's rights and peace
  - Beyond Korea-Japan relations to Asia and the world
- 2. The practicality of Kim Hak-soon's testimony
  - Just as Kim Hak-soon changed from a victim to activist, the movement also expanded beyond damage compensation to an organization that promotes universal values and contributed to women's rights and peace in Asia





Building on the 30-year movement, preparing for the next phase

1. Continuation of investigation and research.
   - Aggregation of data. Systematization. Archiving and preservation.
   - Discovering unpublished testimony.
   - Producing novels, films, documentary, etc.
2. Education and remembrance
3. Demand Japan's legal responsibility and criticize revisionism

*Adhere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However, at the same time:

4. Become an organization that leads post-colonialism and peace, in Asia that suffered from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 Systematic research and data collection.
   - Leadership in International solidarity.
   - Hub for women's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in Asia

*Creating synergy in movement for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Session 1. The Implications of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Kim Hak-soon's Testimony and History of Movement in Japan

YANG Ching-ja I Co-chair, Japan Nationwide Ac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Japan

1. The Beginning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in Japan

Similar to how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in Korea was sparked by the devotion of an individual, Yun Chung-ok,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in Japan was led by Takahashi Kikue. Born in 1933, Takahashi became a member of the Japanese Christian Women's Organization (Kyofukai) in 1957. Later, as the director of the Anti-Prostitution Association[1] formed in 1973, she became a pioneer in the movement against sex tourism an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In July 1973, the Korea Church Women United (KCWU) submitted a statement condemning sex tourism at the first Korea-Japan Church Council held in Seoul. When a Japanese representative who attended the council returned with the statement, it shocked Takahashi who responded, "This is a serious issue. As a Japanese Christian woman, I cannot let down Korean Christian women." [2] Takahashi visited Korea and conducted research with Yamaguchi Akiko from 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NCC) in November 1973.[3] And as a part of the movement against sex tourism, Takahashi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Women and Tourism Culture" (held at Jeju YMCA Campsite with 130 people from 10 different countries), which was hosted by the KCWU in April 1988, where she first learned about Yun Chung-ok's investigation report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

[1] The Anti-Prostitution Association was first formed by the consolidation of National Council on Prostitution Prevention (formed in 1953), which was formed by 22 civic groups, and Okinawa Anti-Prostitution Association in order to support the Prostitution Prevention Law (promulgated in 1956, enacted in April 1957). The organization was later renamed to Anti-Sexual Violence Association and dismissed in 2018.

[2] Takahashi Kikue, Baibaishun mondai ni torikumu (売買春問題ととりくむ), Akashi Shoten, 2004.

[3] Born in 1935, Yamaguchi Akiko participated in the anti-sex tourism movement with Takahashi and she has been an active participant of the "comfort women" issue movement to this day.

After her meeting with Yun Chung-ok at this seminar, Takahashi strongly felt the need to address the "comfort women" issue and sent her three books about "comfort women," including Military Comfort Women by Senda Kakou, and a Kanita Newsletter magazine with a picture of the stone memorial to "Military Comfort Women," erected at Kanita Women's Village upon the request of a "comfort women" victim named Shirota Suzuko. In the following summer, Yun Chung-ok visited Japan for her investigation and visited the Kanita Women's Village in Chiba with Takahasi. At the same time, Takahashi and Yoon held a meeting with female politicians, journalists, and civic groups at the National Diet Building in Japan.

2. The Historic Assembly (1) - December, 1990

On December 1, 1990, a crucial moment fo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in Japan was took place as the Anti-Prostitution Association held the Assembly on Human Rights and War. Here, Yun Chung-ok gave a speech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300 people attended this assembly held at Tokyo YMCA, including myself, and this became the moment when I decided to become a part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At this assembly, Yun Chung-ok proudly announced the creation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hereinafter the Korean Council), which was created a month before the event.

At this tim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as rarely known in Japan. However, this assembly demonstrated the increasing awareness on the issue at the time, as 300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including men and women and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attended the event. Moreover, a number of women who later became a part of the "comfort women" movement were present at the meeting. Shiba Yoko later noted that "though I cannot remember all of the details of Yun Chung-ok's speech, I can still recall her flame and the day so vivid after all these years."[4] Personally, I also still remember the assembly like it was yesterday myself. Perhaps, this is because Yun Chung-ok's incredible passion for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 heat of the assembly were

[4] Born in 1947, Shiba Yoko became a founding member of the Group Thinking about Sex and Japanese Monarchy and became the center of the support for a group of Taiwanese "comfort women" victims'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Currently, she is the co-director of Nationwide Ac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o impressive that they became ingrained in my mind.

In addition, there was a moment when a number of participants announced the creation of the Association for th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during the event. Kawada Fumiko, the author of Red Tile House, a book depicting the life of "comfort women" victims in Okinawa including Bae Bong-gi, was one of the people who created this group.[5][6] Also, another group named Group Thinking about Sex and Japanese Monarchy was created due to the influence of this assembly. Furthermore, the Nationwide Network for Resolution of Japan's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ereinafter Nationwide Network), which I was a part of, was created after this event and a meeting between Yun Chung-ok and a group of Korean-Japanese women on the following day.[7] As the event's host, Anti-Prostitution Association's Takahashi later remarked, "the movement gained momentum after the assembly…" [8] and this assembly, which was first held before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of December 1990, was significant in that it became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the "comfort women" movement in Japan as it began to accept and utilize "comfort women" victims' testimony in confronting the Japanese government for its responsibility on the issue in the following year.

3. The Historic Assembly (2) - December, 1991

After the assembly in December 1990 enabled the "comfort women" movement in Japan, various events for Kim Hak-soon's testimony were held in Tokyo and Kansai region in December of 1991 to further expand the movement's capacity and raise the Japanese public's awareness on the "comfort women" issue. Kim Hak-soon, who entered Japan on December 5 and filed the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in Tokyo District Court as one of the plaintiffs from the Association of Pacific War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the following day, participated in her first testimonial assembly in Osaka on December 7.

---

[5] Born in 1943, Kawada Fumiko published *Red Tile House*, in which she depicts the life of Bae Bong-gi, in 1987. Since then, she has been a pioneer of the "comfort women" movement and supported Song Sin-do's lawsuit.

[6] Kawada Fumiko's *Red Tile House* was translated as『빨간 기와집: 일본군 위안부가 된 한국 여성 이야기』(translated by Oh Keun-young, 꿈교출판사, 2014) in Korea.

[7] The 17 Korean-Japanese women who attended the meeting in the following day formed the Nationwide Network for Resolution of Japan's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on November 3, 1991.

[8] Takahashi Kikue, Baibaishun mondai ni torikumu (売買春問題ととりくむ), Akashi Shoten, 2004.

On December 9, she participated in the testimonial assembly in Tokyo, which was hosted by the Nationwide Network where I was a part of.

In fact, Kim Hak-soon's participation in these events in December was planned before she decided to file the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refore, originally, she was scheduled to enter Japan in Kansai, visit Tokyo for an assembly, and go back to Kansai to leave the country there. However, as she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lawsuit, and as the lawsuit was scheduled to be filed the day before her Kansai assembly, Kim Hak-soon had to enter Japan in Tokyo, attend the assembly in Osaka, and move back to Tokyo for another assembly, and then visit Kansai again. And as Kim Hak-soon became one of the plaintiffs that filed the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he media began to cover her story, and therefore a lot of people became interested in her testimony and visited the assembly in Tokyo. At the time, my organization reserved a place for 100-200 people, but more than 450 people came for the event.[9] Our anxiety of not having enough people had now turned into a scream to let people know that we cannot accept any more people to enter the room.

The assembly in Tokyo was divided into two parts. In the first half of the assembly, Kim Hye-won from the Korean Council shared information about the "comfort women" movement in Korea, followed by Kim Hak-soon's testimony and questions regarding the testimony. In the second half, 11 speakers gave speeches in order to express Japanese people's effort and support. In addition, 65 letters were sent to Kim Hak-soon to express their support.

During the assembly, Kim Hak-soon told us that she could hardly breathe during her flight to Japan because seeing the Japanese flag on the wing of her Japan Airlines (JAL) airplane stressed her, and that the traditional Japanese tatami room of her hotel brings her traumatic memories. And she remarked,

"I believe most younger people in Japan do not know the history. I do not mean to disrespect them, but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incidents like this do not happen again. Do younger generations in Korea and Japan know about the incident? They do not. So we

[9] More than 600 people showed up for the assembly. However, the official number of attendees is recorded as 450 in Nationwide Network Notification (the Nationwide Network's bulletin) and *To Resolve the Resentment* (the report for the assembly) as no more than 400 people were allowed to enter.

need to teach them to make sure things like this never happen again. And I do not want the Japanese government to keep asserting that thi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never existed. I am alive and I exist right here. I may have been a 'comfort woman' for only 4-5 months, but still, my body was destroyed and now I cannot have a woman's life because of Japanese people and Japanese soldiers. I want the Japanese government to consider these facts and sympathize with us. I strongly believe they should acknowledge and say 'we were wrong and we apologize' for what they did."

In this event, various Japanese women who were already a part of the "comfort women" movement, such as Kawada Fumiko, Nishino Rumiko, Suzuki Yuko, and Shimizu Sumiko,[10] as well as a number of women who later became a part of the movement were present. Shibasaki Haruko,[11] who later devoted her life to supporting Filipino "comfort women" victims, later commented "I attended the event because I learned that I could listen to Kim Hak-soon's story. Before her, only male victims of the war were vocal about their atrocities. I stayed after the assembly to shake her hands. That was the moment I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movement."

4. Kim Hak-soon's Impact on Japan's Society and the Government

Kim Hak-soon's appearance had a profound impact on Japanese society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e time of the lawsuit in December 1991,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even acknowledge the government and its military's involvement in the "comfort women" system, claiming that the system was operated by civilian contractors. This claim eventually led to Japanese historian Yoshimi Yoshiaki's action. Yoshimi later explained the situation like the following.

"Right before Kim Hak-soon's visit to Japan, she had an interview with NHK where she stated 'I wanted the world to know what the Japanese military had done to me. They destroyed my entire life. I want the younger generations in Japan and Korea to know what

[10] Shimizu Sumiko (March 1928 - January 2013) was a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ors for the Japanese Socialist Party and Social Democratic Party, and was a pioneer in the "comfort women" movement who brought the issue to the National Diet even before the "comfort women" issue was largely known in Japan.

[11] Shibasaki Haruko (born in 1937) was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supporting Filipina "comfort women" victims' lawsuit and Song Sin-do's lawsuit and still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comfort women" at the age of 85.

Japan did in the past (News 21, November 28).' I was really impressed by this interview and began my research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Soon, it became apparen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s statement (that the Japanese military had no involvement with the system) is false. Before I left the country to study abroad, I visited the library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where I found official documents for the Japanese Army's orders to install 'comfort women' stations. After Kim Hak-soon's speech, I went to the same library and began looking for related documents. And fortunately, I found six documents that survived the military's effort to destroy related evidence (Asahi Shimbun, January 11 1992). How did these documents survive the destruction? These were documents that contained information on 'comfort women' up until 1942, and they were stored in an underground facility in Hachioji in order to avoid air raids and the Japanese military could not destroy them before the Allies arrived".[12]

As official documents ordering the installation of "comfort women" stations were exposed by the Asahi Shimbun on January 11, 1992, Chief Cabinet Secretary Kato stated that the government "cannot deny the military's involvement" and became the first government official to acknowledge and apologize for the issue. Prime Minister Miyazawa who visited Korea from January 16 to 18, followed suit and acknowledged the Japanese military's involvement and mentioned "apology and reflection" to President Roh Tae-woo at the 1992 Korea-Japan Summit.

As the media increasingly covered the "comfort women" issue, various "comfort women" movement groups[13] operated a hotline, known as the "Comfort Women 110," for three days from January 14 to January 16 of 1992. And through this hotline, we learned about Song Shin-do who lived in Miyagi. The person who reported Song Shin-do's case did not reveal his/her name.

5. Voices Gone, Voices Heard

When Kawada Fumiko first visited Song Shin-do based on the information she learned

[12] Yoshimi Yoshiaki. *Comfort* Women (従軍慰安婦). **Iwanami Shoten**. 1995. In parentheses is the author's inclusion of related articles.

[13] "Comfort Women 110" organizers were Association Thinking about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Our Women Network for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Group Clarifying Japan's Post-War Responsibility, and Korea Democratic Women's Association.

through "Comfort Women 110," Song asked a lot of questions regarding Kim Hak-soon's lawsuit. And when she saw Kim Hak-soon on TV, she mentioned "we are the same." Since then, Song Shin-do continuously asked Kawada about Kim Hak-soon when Kawada visited her a few times to learn about her "comfort woman" experience. From these visits, Kawada had an impression that Song Shin-do wanted to file a lawsuit herself and she asked Song if she wanted to pursue legal actions. However, Song never gave a clear answer. Then, a lawyer and a Korean-Japanese woman visited Song Shin-do in order to explain information about the lawsuit to her in order to help her decide and in order to understand her demand. And that Korean-Japanese woman who visited Song Shin-do in August of 1992 was me. However, even after our visit, we still could not clearly understand what she demanded. Therefore, we invited Song to Tokyo so that she could discuss with leaders of the "Comfort Women 110" committee and kept in communication with her over the phone. These eventually led to Song Shin-do's lawsuit in April of 1993. To Song Shin-do, who became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after the lawsuit, the Kim Hak-soon held a special meaning. Whenever Song Shin-do mentioned Kim Hak-soon, it was apparent that she had a unique feeling, a mix of respect, admiration, and sympathy, for Kim Hak-soon.

Ever since we first contacted Song Shin-do, she constantly claimed that "(because she was ashamed, she) never told anyone" that she was a comfort woman. Then how did the anonymous caller who reported Song Shin-do's case to us know about her story?

Later, we learned that the anonymous caller was someone from the Republic of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Mindan) in Sendai. Song Shin-do was forced by a Japanese soldier to move to Japan from China after the war. After she was abandoned by the soldier, she started living with a Japanese-Korean man in Miyagi. In order to support her sick partner, she had various jobs such as selling water, working at construction sites, and working at a fish producing factory. However, as her partner's health issues prolonged, she applied for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tressed by the strict process of living security application, Song Shin-do caused a scene at a public office yelling "I am a great woman who served this country in China!" The public office could not calm her even after police officers were called to the scene, so they contacted Mindan for help. And the Mindan official who heard Song Shin-do's rage correctly guessed her situation.

This was not the first time she used the phrase "I am a great woman who served this

country in China!" Every time someone scorned her as a poor Korean woman, she raged and started screaming the phrase. When people finally recognized her "shameful experience she could not tell anybody" through a movement addressing the experience, Song Shin-do's "scream" became her "voice."

And this is not just Song Shin-do's case. Throughout Asia, women "comfort women" victims were struggling and in agony. In Shanxi, China, Hou Qiaolian would "sometimes go insane, beat children until they were bruised, and run out of her house naked making weird noise" while Moon Pil-gi would have nightmare every night and strangle her sibling, yelling "Miosaki!," a Japanese soldier's name. These women's expression of pain was regarded as "noise" and defined as "insanity." These victims were screaming and crying, fighting their own war until someone recognized their "voices."

And Kim Hak-soon's case was no different. Her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ouncil was only made possible because she told her atrocity to a Korean-Japanese atomic bombing victim Lee Mang-hee. The women victims were never "silent." The truth is, their "voices" were simply ignored until some people started listening to them.

In Kim Hak-soon's first testimonial assembly in Tokyo on December 9, 1991, someone asked her "why did you decide to speak half a century after the war?" This kind of question was omnipresent in the early day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in Japan. Why? Why 50 years later? Japanese society of the time did not have the maturity to envision the fact that the victims have been vocal for the past 50 years. And the society unconsciously and continuously questioned the victims without knowing that their voices had been silenced. And the women who started the "comfort women" movement in Japan, too, only came to recognize the issue after their counterparts in Korea started questioning the past criminal ac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 day, August 14, was a miraculous moment which was enabled by a courageous victim who came forward and Korean women who made an effort to find and listen to the "invisible" victims. Without each other, that special moment would have never been realized.

Yun Chung-ok's passion that allowed her to continue to investigat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on her own, Lee Hyo-jae's leadership that connected Yoon's passion with the Korean feminist movement, Kim Hye-won and Kim Shin-sil who

helped Yoon's investigation and selflessly supported "comfort women" victims, Yoon Young-ae who first recognized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Lee Mi-kyun and Chi Eun-hee who became the backbone of the Korean Council's movement, Chung Chin-sung who guided the Korean Council's investigation, Shin Hei-soo who started international activities for the movement, and Yoon Mee-hyang who gave up studying abroad and returned to Korea to devote the rest of her life for the "comfort women" movement; mark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day when Kim Hak-soon, through her encounter with women who were willing to convey her voice to the world, showed her remarkable courage, I would like to remember her and countless women who supported Kim Hak-soon's incredible bravery.

Session 1. The Implications of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What Kim Hak-soon Wanted to Tell: The Report from the Journalist Who First Reported

UEMURA Takashi I Publisher and President of Weekly Friday, Japan &
Former *Asahi Shimbun* Reporter

In the Summer of 1990, I Could Not Hear a Single Testimony of a Former 'Comfort Woman'

In 1990, as a reporter at the Osaka headquarters of the Asahi Shimbun, I wanted to introduce the testimony of forme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an article on the Summer Peace Project. At that time, I was the "ethnicity person" in charge of Koreans and Korean issues in Japan. I rented an apartment in Ikuno-ku, Osaka City, where a lot of Zainichi Koreans and ethnic Koreans live, and was covering the issues of human rights of Zainichi Koreans, Koreans and political prisoners. As a foreign language student for Asahi, I studied at the Yonsei University Korean Language Institute in Seoul for one year, starting from the summer of 1987. Therefore, I was able to use Korean for the coverage, and I often went on business trips to Korea.

In June of 1990, Rep. Motooka Shōji (Socialist Party, JSP), at the Budget Committee of the House of Councilors,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investigate the comfort women issue. In response to this, the head of the Ministry of Labor's Job Security Bureau at the time responded by saying that "Private contractors were carrying them along with the military," inciting protests in Korea. I wanted to convey the voices of the victims. I consulted my friend, a Korean female journalist, asking, "Is it possible to listen to the story of a former comfort woman?" "There's a woman I've interviewed before," she responded. Thinking that I would be able to interview her, I headed to Korea.

However, the woman had already passed away. There was no trace to follow. In January of that year, I also heard a story from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Yun Chung-ok, who published a series called "Report following the footsteps of Chongshindae Victims" in

the Hankyoreh. I met with other officials and traveled around the country based on various sources of information, but there were no victims who could testify. In a village in Gyeonggi-do, I even met a woman referred to as "Manchurian Grandma" by locals, but she remained silent saying, "I have never been to a place like Manchuria." The two weeks of coverage in Korea ended in vain. One of my reporter collaborators said to me, "Former comfort women will never talk about it. It's as painful as dying."

After I returned from Korea, I met a Zainichi woman who owned a meat restaurant in Osaka. I went to the restaurant, after hearing information that "she was in the chongshindae (a comfort woman)." I've been there several times but haven't heard any testimony from her. She said to me, "Even if I was who you think I am, I wouldn't tell you. Don't spend any unnecessary money."

Ultimately, in the summer of 1990, I did not hear any testimonies from a single comfort woman. I was 32 at the time, and no matter how much I could speak Korean, I was a kid from Japan that plundered the Korean Peninsula as a colony in the past. There was no way for victims to speak of such painful story to me, who is Japanese and also a man.

During the two-week coverage period of that summer, I came to know a woman who was working at the "Association for the Pacific War Victims" in Korea and started dating her. She was the daughter of female director (at the time) Yang Soon-im. Her mother objected, but we got married anyway.

A Scoop Called "Kim Hak-soon's First Testimony"

The following year, in the summer of 1991, things changed significantly. When I made an international call to the Seoul bureau of Asahi, Mr. Odagawa Ko, the bureau chief at the time, told me this.

"It is said that former Korea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Seoul has begun to testify. Uemura-kun, how about coming here for an interview?" Mr. Odagawa knew that I had interviewed in Korea for two weeks in the summer of the previous year and ended up not receiving any testimony from former comfort women. So he gave this information as a potential scoop for me. Mr. Odagawa's news source was Yun Chung-ok, co-representative of the Korean Council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now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s mentioned earlier, I was already acquainted with Yun from my previous year's coverage attempts. When asked to interview Yun by phone from Osaka, she said the following about a former comfort woman, "I can't give you her name because she is refusing to respond to the interview. But I can let you listen to the tapes." Even if I couldn't meet her in person, I thought it was great news that the former comfort woman was still alive in Seoul and that she was being taken care of by the Korean Council. I headed straight from Osaka to Korea.

On August 9, 1991, I visited Yun's home in Seoul. Regarding the woman, Yun said of the woman, "She testified under her real name... She was angr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oesn't admit that there was chongshindae (comfort women)." And on the next day, on the 10th, she played the tape at the Korean Council office and taught me generally about the main points from the interview. The voice in the tape said, "I want to forget somehow, but I can't. When I think about that time, I get angry and the tears don't stop." "When I think of it again, the hairs all over her body stand upright." She was recalling her past. According to their description, the woman was born in northeast China and when she was 17, she was tricked into becoming a comfort woman. She was taken to a comfort station in China, where she was forced to service three or four people every day. For several months, she was forced to work, but she managed to escape. It was not until after the war that she returned to Seoul. Although she was married, her husband and child died, and she was living under her basic livelihood protection.

After the interview, I hurriedly went to the Seoul branch to complete the manuscript. The next day, my article appeared on the front page of the Osaka head office edition on August 11th = Photo ①=. The title of the article was "I still cry when I think about it / Former Korea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an / Half a century after the war / Opened her heavy lips / Hearing of Korean group," and the full text of the article read, "They were taken to the battlefield under the name of female chongshindae (volunteer labour corps) and forced into prostitution to Japanese soldiers. One of the victims of Korean comfort women is still alive in downtown Seoul." In the main text, as told by Yun and others read, "When she was 17, she was deceived into becoming a comfort woman." At that time, in Korea, the comfort women were called "chongshindae" or "female volunteer labour corps," and the Korean and Japanese media also used the term to mean "comfort women." At the

time, I never thought that this article would be attacked, as it did later, for reasons such criticizing it as a "fabrication" and spreading false information to the world that she became a comfort woman by forcible mobilization.

My article was heavily edited, but it was also published on the second page of the social section of the Tokyo head office on the following day, the 12th. However, despite the scoop of the testimony of former comfort woman, the media in South Korea and Japan did not publish any follow-up reports.

I found out in Osaka that this woman revealed her real name, "Kim Hak-soon," and that she held a press conference in Seoul on the 14th. I remember getting to know about the news through my contact from the Seoul branch. On the 15th, an article about Kim Hak-soon's testimony was published in the morning of every Korean newspaper. I regretted returning to Osaka, thinking prior to that, "She says she won't see a reporter, so I can't help it." "If I had been in Seoul a little longer, I could have written some breaking news piece." I was very upset to think this way.

The headlines of the Korean newspapers at the time were as follows. "I will definitely receive reparations for sufferings of chongshinda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Dong-A Ilbo)," "I was a chongshinda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 (JoongAng Ilbo)," and "I will testify as a living victim of chongshinda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ankook Ilbo)"[1]

I called Yun. Yun said something like this: "As a result of the second interview on the 14th, Kim said, 'I feel so angr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oes not recognize the existence of comfort women' and said she would testify to her experience. In the meantime, we had been listening to her testimony privately, but suddenly her words became public to Korean reporters."

I wrote a breaking news article about Kim Hak-soon's real name testimony in the evening of the 15th in the Osaka main branch edition. However, the Japanese media's correspondents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reveal of Kim Hak-soon, and the main newspapers, the Yomiuri Shimbun and the Mainichi Shimbun, did not report this press conferences. However, I found out later that Kita Yoshinori, the head of the Seoul bureau

[1] Japanese-Korean translator's note: 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Korean title of the article at the time.

of the Hokkaido Shimbun, had an exclusive interview with Kim Hak-soon on the 14th. Mr. Kita also used the word chongshindae as the preamble in my article, and wrote:

"Before the war, a Korean woman who was humiliated by Japanese soldiers on the battlefield as a comfort woman in the war under the alias of chongshindae responded to an exclusive interview with the Hokkaido Shimbun on the 14th (abbreviated)"

After receiving courage from Kim Hak-soon's press conference, former comfort women from all over the world began to testify about their experiences, one after another. Kim Hak-soon's courageous testimony became a major opportunity for the world to recognize the comfort women issue as an issue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

I, myself, could not attend Kim Hak-soon's press conference on August 14th. However, later, I was able to see the scene. A news video from KBS, announcing this press conference, was introduced in Japanese subtitles for the documentary film 63 Years on (2008) produced by Korean film director Kim Dong-won. The title "I was a chongshindae" was written on the first screen, and a male anchor explained the caption. "One halmoni, who was dragged into the Japanese military 50 years ago and forced to live as a comfort woman, overcame her shame and accused the Japanese of their atrocities." There was also a scene where Kim Hak-soon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reporters. Kim Hak-soon appealed this way. "If you drag someone a little over 16 years old and force her, I cried out and tried to avoid it, but they won't let you go. I want to vent my anger before I close my eyes." Kim Hak-soon's anger was expressed eloquently.

The documentary also featured a Dutch victim, Jan Ruff O'Herne. It is known that O'Herne was inspired by Kim Hak-soon's testimony and decided to testify about her sufferings herself. "What is really surprising is that the 'comfort women', who had been silent for 50 years, opened their mouths at the same time and very suddenly." O'Herne described this as "boom."[2] This testimony shows how strong the impact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was. (Note: The Japanese subtitles for this 63 Years on are on loan from the Kansai Network fo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Details of Kim Hak-soon's Appeal

Kim Hak-soon later decided to become a plaintiff in a trial demanding an apology

[2] Japanese-Korean translator's note: Explosive sound

and compens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head of the lawsuit (December 6, 1991), she joined the Association of Pacific War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and was interviewed by the Japanese defense counsel on November 25, 1991. After receiving permission to attend and hear about the whole story, I recorded Kim Hak-soon's story on tape. And, in the morning series "Pacific War for Women," which was published in Osaka main branch edition on December 25 of the same year, I wrote an article titled "The Youth that Never Returned, Half of Lifetime in Agony" = Photo ② =. In the preamble, I wrote, "Reenacting the testimony tape."

Kim said at the end of the interview said, "No matter how much money you receive, you can't return this forsaken body.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acknowledge the historical facts and apologize. I want young people to know about this. There are many victims. I want you to erect a tombstone. I hope this never happens again." That was what Kim wanted to say the most.

After the trial of Kim Hak-soon and others, the Japanese government conducted a hearing investigation on former comfort women, and in August 1993, Chief Cabinet Secretary Kono Yohei published a government statement ("Kono Statement"). He acknowledged and apologized for military involvement and coercion. Furthermore, he stated that he would not repeat his mistakes by including the issue in education of history. And so, the descrip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was published in Japanese middle school textbooks. However, from 1997, history revisionists including Abe Shinzo (later Prime Minister) started a movement to remove the comfort women issue from textbooks. After that, the comfort women account and representation disappeared from many textbooks. Abe also insisted on a re-examination of the "Kono Statement," and in reality, only the shell of the "Kono Statement" remains.

In 2014, Malicious Attacks on Uemura Begins

In 2014, 23 years after Kim Hak-soon's testimony was released, I was severely bashed. The February 6 issue of the conservative Japanese magazine Weekly Bunchun, possessing the title "Comfort Women Fabrication," the Asahi Shimbun Reporter Became a Professor at a Women's University Attended by the Daughters of Wealthy Families, falsifying my August 11, 1991 article. A comment from Nishioka Tsutomu, a professor at Tokyo Christian

University, ignited the spark. Nishioka commented: "Reporter Uemura's article says, 'I was taken to the battlefield in the name of the Labour Corps,' but the Labour Corps is an organization that mobilizes labor in places like military factories and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mfort women. Moreover, the woman who testified in her real name at this time was sold by her parents and made into a comfort woman, as written in her complaint, and as she responds to the coverage of the Korean newspaper. Uemura did not mention this fact, and he wrote an article as if there had been a forced mobilization, so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is fake news."

In the August 11, 1991 article, I wrote "I was deceived into becoming a comfort woman when I was 17" and did not write "forcible mobilization." However, Nishioka did not mention it.

Nishioka, in the April 1992 issue of Bungeishunjū, called my article "a serious misrepresentation of facts," but began to criticize it later as "fabricated" from around 1998. It was clear that the article in Weekly Bunchun that used Nishioka's comments was an attack that was targeted only at me. This article even criticized the "Kono statement."

Immediately after the publication of this Weekly Bunchun, violent bashings against me began. E-mails, faxes, and phone calls protesting the "professor inauguration" flooded into Kobe Women's University, where the appointment of my full-time professorship was granted. Eventually, the employment contract was canceled. The censure on Hokusei Gakuen University in Sapporo, where I was a part-time lecturer, continued.

Sakurai Yoshiko, chairman of the conservative Japan Institute for National Fundamentals, also started bashing me. Sakurai attacked me with several articles, the representative of which was an article in the April 2014 issue of WiLL, a magazine published by WAC.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propaganda by those who seriously damage the honor of Japan and the Japanese, however, had a starting point of the fake article on "military comfort women" written by a Japanese. What was that fake article written by a Japanese national that resented and hated Japan?" After writing that, she criticized my August 11 article saying, "The legal complaint (of the trial in which Kim Hak-soon sued the Japanese government), describes how she became a comfort women. It says that she was sold for 40 yen by her stepfather at the age of 14, taken to Tiepizhen (鉄壁鎮)[3] in Beizhi

[3] Japanese-Korean translator's note: 'Zhen (鎮)' is a name equivalent to 'village'

(北支)[4] three years later, again by her stepfather at the age of 17, and became a comfort woman. Not only did Uemura not report on the important point that she was trafficked by her stepfather, but also he reported it in connection with the 'female labour corps' 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e comfort women."

The two people's remarks spread across the Internet. Asahi denied that my article was a "fabrication" in the "Comfort Women Report" verification feature on August 5 and 6, 2014. However, due to the cancellation of 16 articles (overall 18) about the late Yoshida Seiji, who testified that he forcibly took women and made them into comfort women in Jeju Island, the attacks exacerbated. Even though I didn't write an article about Mr. Yoshida, the attacks against me grew stronger.

My daughter, who was in high school at the time, was also taken as a "target," and her face and name were exposed on the Internet. One blog wrote, "How many Japanese people suffered because of this girl's father. (Omitted) There is no choice but to keep pushing him until he commits suicide." Even a threatening letter saying "I'm going to kill your daughter" = photo ③ = came. When my daughter was going to and from school, a patrol car had to stand by and guard her.

In early 2015, I sued Nishioka and Sakurai for defamation in the district courts of Tokyo and Sapporo, respectively. It was also to keep my family safe.

After the complaint was filed, in August 2015, I was invited to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in Seoul. On August 15, the day after the symposium ended, I visited the tomb of Kim Hak-soon, who was resting at the National Cemetery for Overseas Koreans in Cheonan-si,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Photo ④=. I put my laptop next to the tombstone and played the news from Kim Hak-soon's real-name press conference on August 14, 1991. This video was introduced in the documentary film 63 Years on. Kim Hak-soon's voice echoed in the graveyard. I told my companion: "Ms. Kim Hak-soon is being slandered as a 'liar' and a 'prostitute' in Japan. I cannot forgive that." And for my own "weakness," I apologized to Kim Hak-soon from the bottom of my heart. On December 16, 1997, when Kim Hak-soon passed away, I was a correspondent in Seoul and wrote an obituary article calmly, and after that, I did not

[4] Japanese-Korean translator's note: In the past, it was used as a name for the northern provinces of China and corresponds to the present-day Hubei (華北).

diligently report on the comfort women issue. Despite the fact that I published the first article that Kim Hak-soon began to testify, I distanced myself from the comfort women issue because my mother-in-law was a core member of the Association of Pacific War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However, after I was severely attacked, I reflected on myself until then and decided to properly address the comfort women issue. And I kept in mind that my trial was also a struggle to restore Kim Hak-soon's honor. There is a phrase in the statement that Kim Hak-soon submitted to the court for her case (June 6, 1994). "I was taken away by the Japanese military and became a 'comfort woman' and my life itself was taken away." I wrote about this bitter feeling on a piece of paper with black marker and put it in front of my desk. And sometimes I went to court with it in my suit pocket.

Unfair Judgment and Intervention of Abe Shinzo

Nishioka and Sakurai, neither of the defendants had ever interviewed Kim Hak-soon. Without even confirming with her, they continued to claim that she was sold by her parents and became a comfort woman, not forcibly taken by the Japanese military. The two defendants said that because I wrote that it was a forced mobilization, misunderstandings spread around the world, and Japan was defamed. In addition, Nishioka even argued that Kim Hak-soon attended a gisaeng school in Pyongyang, and since I did not include it in the article, the article was a "fabrication (Note: Kim Hak-soon did not talk about gisaeng school when the Japanese lawyers interview her.)." These are victims who have been sexually abused by Japanese soldiers against their will, whether forcibly detained or trafficked. Yet these defendants believe that the Japanese military is not responsible if the victims had been "trafficked."

Nishioka's Weekly Bunchun discourse is symbolic. Nishioka wrote, "The woman who testified under her real name wrote in the complaint that she was sold by her parents and became a comfort woman, and that's how she responded to Korean newspaper coverage." However, during the witness interrogation process of the Tokyo District Court, it was already confirmed that there was no men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neither the complaint nor the Korean newspaper articles. The premise of criticizing my article as a "fabrication" was false. In addition, Nishioka cited the Hankyoreh as a basis for criticizing Uemura in his book The Comfort Women Issue in Easy to Understand, but he himself

arbitrarily wrote a part that was not included in the original article: "I was sold for 40 yen, took gisaeng classes for a few years, and then went to a place where the Japanese military is." Then he introduced the entire article as an article in the Hankyoreh. This was a manipulation to emphasize that Kim Hak-soon was "trafficked."

On the other hand, Sakurai made similar arguments as Nishioka. ① Kim Hak-soon became a "comfort woman" through human trafficking. ②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the comfort women and the "female labour corps." Under this premise, my article was slandered as "fabricated." However, in Kim Hak-soon's complaint, there were no phrases such as "I was sold for 40 yen by my stepfather" or "I became a comfort woman again by my stepfather…" There is no sentence to conclude that Kim was a "victim of human trafficking." Sakurai also admitted the mistake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and eventually corrected it.

Both the defendants, Nishioka and Sakurai, had weak grounds to criticize me. In addition, both of them did not even communicate with me and decided that it was a "fabrication."[5] However, in the Tokyo and Sapporo trials, the two defendants were exonerated by significantly breaking down the wall of "relevance of truth." Moreover, the Tokyo trial even admitted the "truth" of some of Nishioka's statements. It was a truly unusual judgment. In a normal trial, I think I would have won.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e defeat.

First, I think the courts' shift to rightwing and consideration of the intentions of the Abe administration (at the time) played a role. It was unspeakable that the Tokyo District Court ruling described the "military comfort women" as "women who were engaged in prostitution on the battlefield under the state prostitution system." There was no awareness of the comfort women as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 I think it's an evidence that the judge himself is rightwing. Nishioka wrote in the Rondan of the Japan Institute for National Fundamentals (May 23, 2016), "I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debate on the comfort women issue since 1991. The present Prime Minister Abe Shinzo and the head of the Institute, Sakurai Yoshiko, and other are long-time comrades." Sakurai is like Abe's tool of "propaganda [advertisement tower]" and is also a central figure in the constitutional

[5] Japanese-Korean translator's note: Even if the truth of the stated facts cannot be proved, it is a jurisprudence that judges that there is no illegality if there is a good reason to believe that it is true, otherwise, known as innocence until proven guilty.

reform that he is promoting. I fought with the two of them, but there was always Abe behind them I think.

Second, I think the prevalence of historical revisionism in Japanese society is also a big reason. I think that the judge's misjudgment was allowed because this wrong perception of history is widespread in society. Third, the Asahi Shimbun itself announced that my article was not "fabricated," but it was severely criticized for cancellation of Yoshida Seiji's testimony, and was not able to fight alongside me.

Shortly after my defeat in the lawsuit against Sakurai was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former Prime Minister Abe Shinzo posted on his Facebook page on November 21, 2020, "It means that the fabrication of reporter Uemura and the Asahi Shimbun has been confirmed as a fact." He was spreading "fake confirmation" with my name. I thought it was a strange obsession and interest. However, in the lawsuit against Sakurai, none of the "truths" were recognized, and it was a clear error to say that "the fabrication was confirmed as fact." I sent Abe a proof of content requesting that the post be deleted through my agent. Abe secretly deleted his post without even apologizing to me. Even from this fact, I think it is clear that Prime Minister Abe was watching Sakurai's case.

However, in both Tokyo and Sapporo, more than 100 lawyers were organized and fought in the six-year Uemura trial. It is also true that the threat to my family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In addition, many citizens and researchers also contributed to the trial. The systematic support of the Japan Newspaper Trade Union Federation, the Japan Journalists Conference (JCJ), and the devoted support of my former colleagues from Asahi were great support. Kita of the Hokkaido Shimbun, who interviewed Kim Hak-soon and wrote the same kind of article as me, stood as a witness in the Sapporo lawsuit. He claimed in support that Sakurai's criticism of Uemura was just a "nitpicking": "When one person is slandered as a fabricator, I felt like I'm not being reprimanded from the criticizer's point of view. I strongly believed that I should speak up as a human being and a journalist."

Three female reporters from Korea's Hankyoreh, the Kyunghyang Shinmun, and the Dong-A Ilbo, who covered Kim Hak-soon, also wrote a statement proving that my article was not a falsification and submitted it to the court. The voices of these journalists were completely ignored in the verdict. However, I am accepting that each one of journalists' contributions counts as a "victorious judgment."

Also, at the end of September 2018, while the trial was in progress, it was a great achievement for me to be able to return to the Japanese journalism world by being invited as the publisher and president of the Japanese progressive magazine Weekly Friday. Even at a time when the Japanese media shrank and did not report in detail about the vicious attacks on Uemura, Weekly Friday boldly reported on them. That coverage alone was enough to create a single "separate edition (2016, created by Citizens' Association to Support Uemura Takashi's Lawsuits)" = photo ⑤ =. As I held respect for the journalist spirit of the magazine, I took the position of head of the magazine in the face of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 midst of these criticisms, I was invited t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nd worked as a visiting professor from 2016 to 2020. Although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made it difficult for me to travel and I ultimately gave up my professorship, my five years in Korea were invaluable. I received the "Kim Young-geun National Education Award" (2018) and "Rhee Yeung-hui Award" (2019) for my special report on the beginning of the testimony of Kim Hak Soon. I was able to interact deeply with "dismissed reporters'' such as Lee Bu-yeong, a former Dong-a Ilbo reporter who was unfairly dismissed from a news agency for fighting for the democratization of the Korean press, and Im Jae-kyung, the founding vice-president of the Hankyoreh. With such people at the nexus, my trial support organization was formed, and the Uemura bashing gave birth to a new exchange of reporters between Korea and Japan.

Daughter Involved in Attacks against Uemura

My daughter also got caught up in the public criticisms against me and was subjected to several slanderous slanders on the Internet. Lawyers concerned about my daughter became her lawyers in finding and suing a man in his 40s who posted her name and photo on Twitter. The man wrote:

"The daughter of Uemura Takashi, a member of the Asahi Shimbun military comfort women hoax, was chosen as the high school peace ambassador. An extreme anti-Japanese noble family raised by a fraudster maternal grandmother, an anti-Japanese Korean mother, and an anti-Japanese forgery agent father. They will surely become enemies of Japan in the future."

In August 2016, the Tokyo District Court made a judgment, and the presiding judge ordered the man behind the slander to compensate for damages of 1.7 million yen as requested by the plaintiff. After the verdict, the defense counsel read her daughter's comments at a press conference. "I thought it was absolutely unacceptable to attack someone and expose their privacy due to their selfish desires," she said. "What happened to me can happen to others. We hope that this ruling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stop these unjust attacks," she appealed. Initially, the presiding judge recommended a settlement process, but my daughter refused and demanded her court verdict. The defendant did not appeal, and the judgment was confirmed. I am proud that my daughter stood by her resolute attitude.

30 Years Since the Testimony, "Question" Posed by Kim Hak-soon

Thirty years after I reported on Kim Hak-soon's appearance, I reflected again after re-reading the article that Kim Hak-soon appealed to. It is surprising that the three wishes Kim Hak-soon appealed to the Japanese lawyers prior to the trial: ① the Japanese government's official apology, ② the succession of memories to the younger generations, and ③ the erection of the monument — had hardly been realize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t made a sincere apology that touches the hearts of former comfort women. There was also a time when the descrip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was published in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through the "Kono Statement." However, most of this has disappeared due to the movement of Abe Shinzo and others. In 2016, a large number of protest postcards were sent to Nada Junior High School in Hyogo Prefecture, etc. There are various interferences to the acts of properly conveying the memory of the comfort women issue. Even erecting a monument is inconceivable in mainland Japan. The mere display of a replica of a Peace Statue in Seoul in Japan is causing harassment and disturbance. It is also a big problem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t tried to stop the attacks and threats on the succession of such memories.

As a Japanese and as a journalist who covered the testimony of Kim Hak-soon 30 years ago, I am so ashamed of the current situation. I want to do my best to make Kim Hak-soon's wishes come true.

This year, the 30th anniversary of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the documentary

film Target = Photo ⑥ = made by Nishijima Shinji, a former reporter of RKB Mainichi Broadcasting, will be released. This film depicts the flow of historical revisionism in Japan with the theme of "Uemura Bashing." Nishijima was the head of the Seoul bureau of the same broadcasting station in the summer of 1991, when Kim Hak-soon testified. Before the trial of Kim Hak-soon, he also had experience of covering the issue and broadcasting nationwide in the form of news. Nishijima began to shoot the film, questioning why I was the only "target" of the right wing. At first, he tried to produce it as a program for RKB Mainichi Broadcasting, where he was working at the time. However, when his proposal was not approved, he resigned and set up an office by himself and started production. There are also interviews with Kita from Hokkaido Shimbun, who interviewed Kim Hak-soon, and former NHK director Eriko Ikeda (currently the honorary director at The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The voice of the then Minister Kono Yohei can also be heard in the film.

Another theme of this film is the testimonies of former comfort women victims, such as Kim Hak-soon = Photo ⑦ = etc. The private broadcasting station with the copyright did not give permission to use the video of Kim Hak-soon, which was filmed by Mr. Nishijima himself. For this reason, he used the video filmed by MBC's PD Note in Korea. In the film, Kim Hak-soon criticizes the Japanese government for not recognizing the comfort women issue. There is also a video showing former comfort woman Lee Ok-seon, who lives in the House of Sharing, criticizing the Japanese government for denying the forced mobilization of victims. This is the scene where Lee talks about her experiences of suffering to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who visited the House of Sharing as the first project of the "Korea-Japan Aspiring Journalists Student Forum" established in 2017 by me and fellow journalists.

Director Nishijima said the following in an interview with Weekly Friday on July 23rd, 2021. "In Japan, the media does not cover the comfort women issue very much, but people also think it is strange for 'comfort women' to sue Japan over the claim that 'comfort women' are prostitutes. However, I want people to think about that after watching the videos of Kim [Hak-soon] and others. So, I included interview videos of Kim Hak-soon and Lee Ok-seon. I think this is a valuable scene because we rarely ever hear the voices of the 'comfort women' victims directly."

I also want to carry the DVD of this documentary film, hold its screenings in various places, and carry on the work that former comfort women victims such as Kim Hak-soon wanted to convey.

References

Books

The Truth (February 26, 2016, Uemura Takashi, Iwanami Bookstore) (『真実』(2016年2月26日、植村隆、岩波書店))

I am not a fake reporter (October 9, 2016, Writer = Uemura Takashi, Translator = Gil Yun-hyeong, Blue History)

Newspapers, magazines

Asahi Shimbun Osaka Head Office Edition, article dated from August 11, 1991 (「朝日新聞」大阪本社版1991年8月11日付記事)

Asahi Shimbun Osaka Main Edition December 25, 1991 article (「朝日新聞」大阪本社版1991年12月25日付記事)

MILE November 1991 issue (『MILE』1991年11月号)

President Hira is Going 131 Accomplish the 30-year old appeal from the testimony of Kim Hak-soon! (Uemura Takashi, Weekly Friday July 30, 2021 issue, Friday, Inc.) (「ヒラ社長が行く」131「金学順証言から30年　その訴えを実現せよ！」(植村隆、『週刊金曜日』2021年7月30日号、(株)金曜日))

"Ask the director Nishijima Shinji of the movie The Target" / "I wanted to hear your daughter's story somehow" (Moon Seong-hee, Weekly Friday July 23, 2021 issue, Friday, Inc.) (「映画『標的』の西嶋真司監督に聞く /「娘さんの話はどうしても聞きたかった」」(文聖姫、『週刊金曜日』2021年7月23日号、(株)金曜日))

Videos

Documentary film Target (2021, Director: Nishijima Shinji, Distributor: Group Hyundai) (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標的」(２０２１年、監督＝西嶋真司、配給＝グループ現代))

Documentary film 63 Years On with Japanese subtitles (2008, Director: Kim Dong-won) (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終わらない戦争」日本字幕版(２００８年、監督＝金東元))

A Panoramic View on the Significance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urvivors' Testimony

YANG Hyunah I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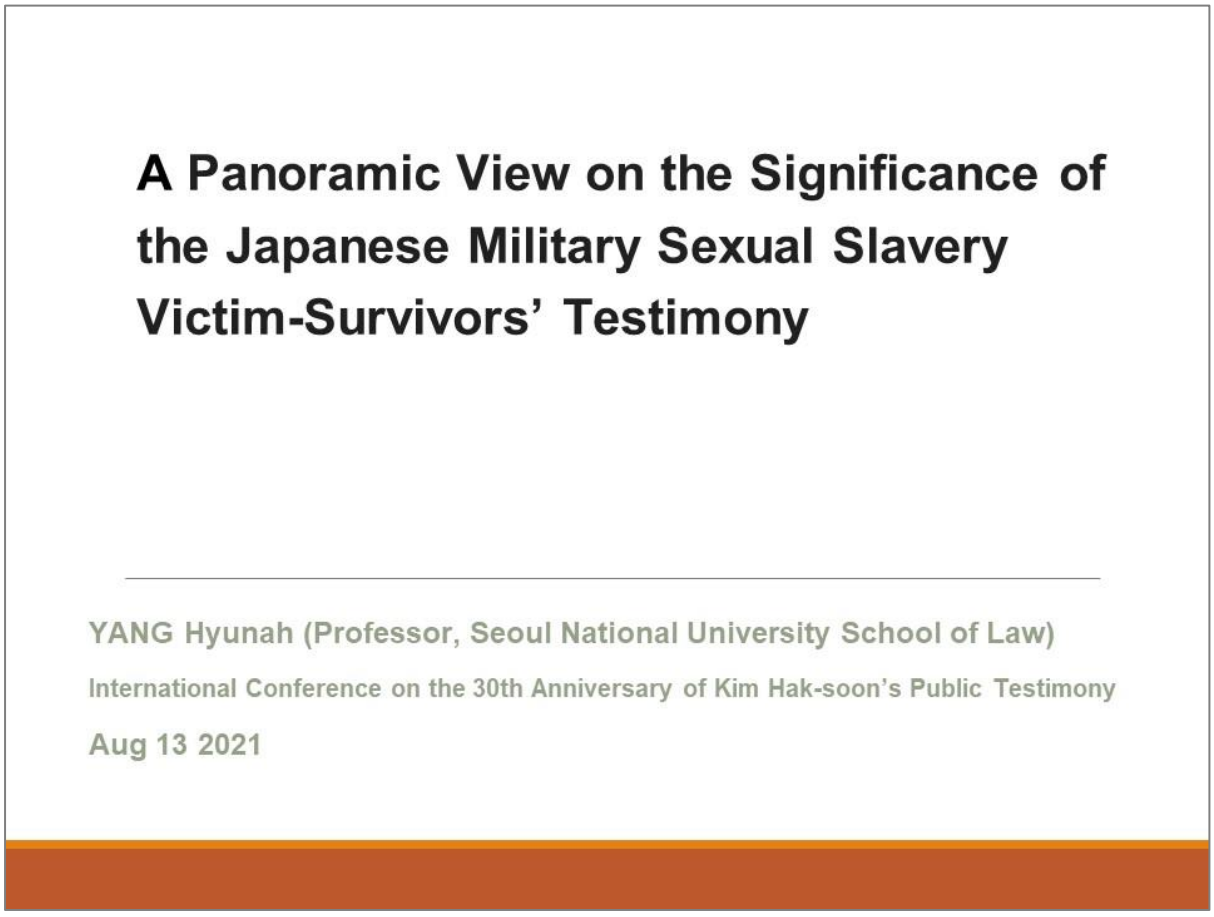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I. Victim testimony studies in Korea

II. The meaning: Basis of Truth, Justice, and Restoration

III. Implications of testimony studies

IV. Clo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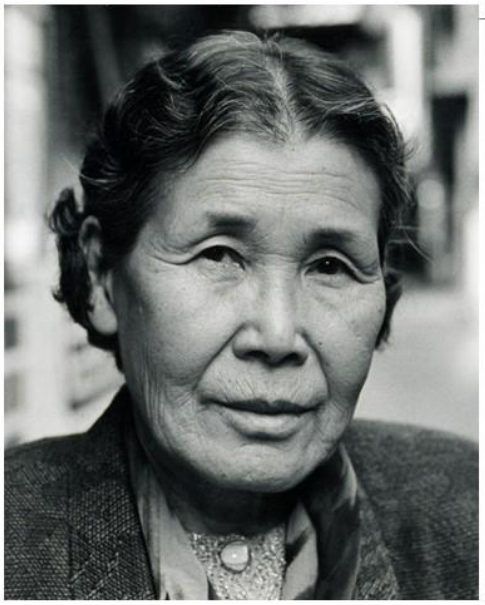
I. Victim testimony studies in Korea

* In the early 1990s, the context of testimony hearing was formed by democratization and the feminist's movement.

* When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Aug 14 1991) was mad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other survivors started to come forward.

(Note: victim-survivor Bae Bong-gi in Okinawa testified beforehand.)

Kim Hak-soon (1924-1997): First Testimony of Victims in Korea (1991)



Testimony of Kim Hak-so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urvivor was made for the first time on August 14, 1991.

"I am not ashamed. I have waited for this moment my entire life."

A powerless, nameless citizen broke the silence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Comfort women" victims' testimonials released in Korea

* Vol.1 (1993) :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Chongshindae Research Group (19 testimonies)

* Vol.2 (1997) :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Chongshindae Research Group (15 testimonies)

* Vol.3 (1999) : Korea Chongshindae's Institute &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4 testimonies)

* Vol.4 (2001):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Korean Committee Testimony Team (9 testimon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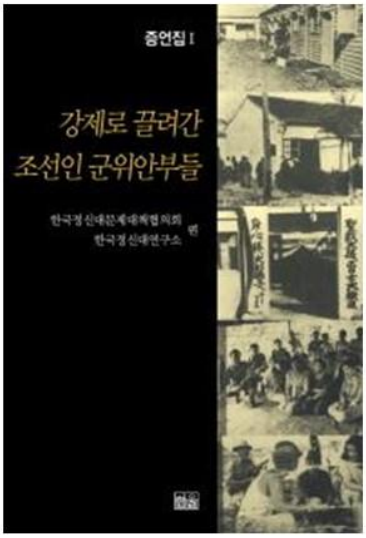
* Vol.5 (2001) :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Korean Committee Testimony Team & Korea Chongshindae's Institute (10 testimonies)

* Vol.6 (2004) : The Research Team of the War & Women's Human Rights Center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2 testimonies)

* Forcefully Dragged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to China 1 (1995): Korea Chongshindae's Institute &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0 ppl)

* Forcefully Dragged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to China 2 (2003): Korea Chongshindae's Institute (17p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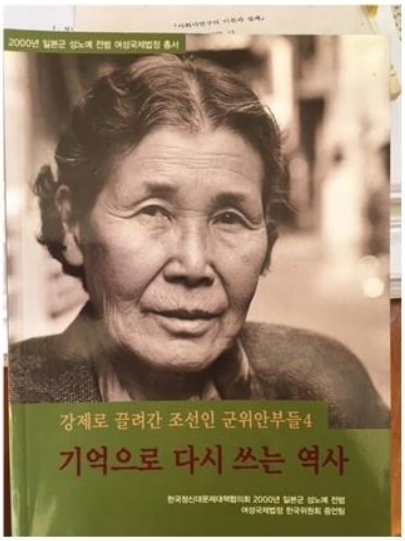
Testimonial vol.1 (1993) and vol.2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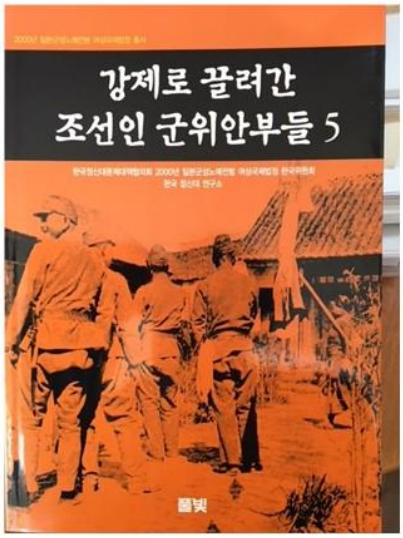


Testimonial vol.3 (1999) and vol.4 (2001)





Testimonial vol.5(2001) and vol.6(2004)





* Testimonials include more than 100 victim-survivor's testimonies.

* Including publications from other organizations, 17 publications in total were published (Park, Jung-Ae, 2019. May overlap with previous.)

* The most continuous, multiple, in-depth, and consistent testimonies are published in the testimonials compared to research of other state violence victims in Korea.

* Model case of oral history studies for victims of state violence, women, and citizens in Korea

* During the research process of 10 years, evolvement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and epistemic and methodological changes in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ubjects were observed.

II. The meaning: Basis of Truth, Justice, and Restoration

*** Victim testimonies have "panoramic effect" on truth, justice, and restoration.**

* Coming out of victims: The issue became an "international women's human rights" issue as not only Korean but also Asian and Dutch victims came forward.

* Momentum for social movement : Formation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inspiring a global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movement.

* Legal actions: Legal actions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by the victims
[Note: The victims won the first trial at the Shimonoseki branch of the Yamaguchi District Court in Japan (1998), but lost at the Supreme Court (2003).]

*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bodies: ICJ,ILO, human rights committe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arious reports.

* Inspiration for research: inspired related research from the early 90's

1. Critical contribution to the fact-finding

*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fraud and enforced-ness of Japanese authority; cooperation from companies

* Colonized situation of Joseon formed a condition vulnerable to fraud and enforced-ness +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All-rou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comfort stations: surveillance, starvation, beating, torture, disease, drugs, etc.

* Sexual violence: testimony of long-term, systematic rape + Reproductive Violence: damage to reproductive organs, STD infection, infertility

* Left in enemy position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Witnesses of starvation, murder, bombing, etc.

* Postcolonial damages after return. Long-standing prejudice, alienation, and poverty.

2. Critical contribution to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vesti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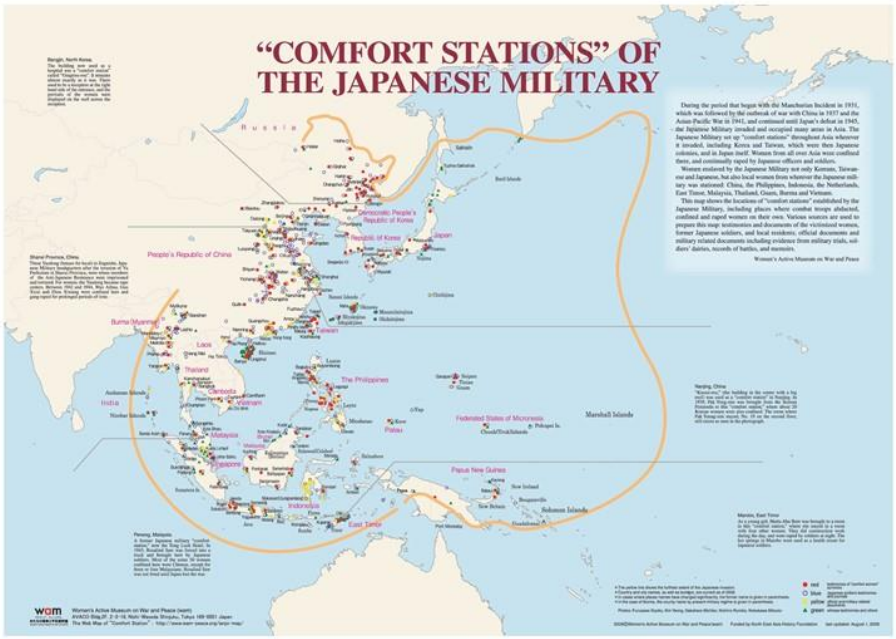
* Contribution to investiga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bilization method, timing of mobilization, route of mobilization; type, location, operation method of comfort stations; illegal aspects of comfort stations.

* Contribution to the ethnic composition of victims and their differences: Victim-survivors are scattered across South and North Korea, China, Taiwan, Japan, Indonesia, the Netherlands, the Philippines, East Timor, etc. The experiences and damages depend on the region's "relationship with Japan" at the time: colonized, Japanese, in conflict, occupied, etc.

* New approaches to cross-analyzing Allied Forces documents and photographic data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e.g.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Chung Chin-sung Research Team, Taken away, Abandoned and Stood in Front of Us, 2018)

[Case]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 map:

Based on victim testimonies, Japanese soldier testimonies, other testimonies, and documentation.



3. Restoration of subjectivity and identity of victim-survivor: Restorative justice

* As Korea's experience in testimony research and researchers accumulated, changes in research methodology also emerged.

* Victim represented as "Halmoni" and "Survivor" identity

* Labeled as "Victim-survivor": Represented as a victim of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 and a survivor who "survived"

* Furthermore, "Witnesses" speaking for "victims" of Korea and Asia.

* Positioning themselves as human rights activists in the dynamics of movement: Restoration of victim's dignity and spirit

* Restorative function of testimony for victims: As testimony research continued, testifiers testify in greater detail and power [and became a "Hearable Story", Kim Seong-rye (2002)]

* As such, testimonies evolved beyond the narrative of damage to the narrative of survival, beyond the narrative of the people to the narrative of the individual, beyond the narrative of the individual to the narrative of the community.

* Community of testimony researchers: The role of a "witness" to witnesses beyond researchers and a mediator/supporter to mediate testimony into "public memory"

* Forming the sympathetic audience community (Kim Soo-jin, 2006): Rebuilding community of "victims" in the broadest category

III. Implications of testimony studies

1. Truth and Fact

* More than 50 years ago, the survivors suffered massive sexual violence and human rights abuses. The memories and testimonies of victims who survived the neglect of Korean society and the state are in a much more complicated "struggle for seeking the words" than "truth or not."

* Testimony in a state of "captives," in which information about where they were mobilized, the process of mobilization, the subjects of mobilization was completely blocked: Shows that there is a lack of records of the state and military, which needs to be solved by the responsibility of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police and prosecutors, and efforts of researchers.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denial are the key issues.

* Most victims lived nearly half a century "without knowing how to call what they were subjected to (Military prostitution-forced prostitution-systematic rape-sexual slavery)."

2. "Victim" experience: how to interpret

* Sexual violence: The hardest experience for victim-survivors to talk about

* How to record and interpret the experience of "receiving [Japanese soldier]" or "receiving [customer]" is a task of historical, feminist, and legal research.

* The broken "mother tongue" of colonial women who were born in the 1920s and 30s, had little formal education and lived in isolation: mix of Korean, Japanese and Chinese.

* The "damage" caused by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does not end in the "comfort stations," but continues throughout life in areas such as health (STD aftereffects), family (unable to get married) and so on.

* Relationships with Japanese soldiers that are "difficult to label":
Love? Rape? It goes beyond the boundaries of "nationalism" history in the reenactment of victim-survivor's testimony. But this "love" also leads to continuous victimization (kids, life-long secret)

HAN Ok-seon (1919-2009)

"When I was in Taiyuan, I was forced to, well, I had to. How many? Well my body was stolen from me, I was beaten and I received [the soldiers]... I don't know how many, it's not in my head."

"(Bursting into tears) and then, sometime after, I was on the train for a while. Then I was in a village called Osuijing..My body was already spoiled, so I dealt with the soldiers there... (crying)



3. Encounter of victim-centered testimony reenactment and testifier subjectivity

* In multiple (more than three) in-depth interviews, specific events are said very consistently and repeatedly: the "undoubtable" truth of testimony

* Specific memories exist such as childhood memory of mother, poverty, ship's wreckage and risk of death while being taken away, relationships with men, children, work, etc. after the war.

* Reenacting testimony based on the "structure of memory" is not to provide "raw" testimonies, but to help the readers enter the victim's memory or affect circuit, rather than the ready-made structure of memory – When and where the victim was born, how she was taken, and how she suffered.



AHN Beop-soon (1925-2003)

(In Tokyo for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t's weird how people who came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s" are not in court. At the time the soldiers were around the same age as we were..If we are alive here, they should be too."

KIM Hwa-seon (1926-2012)

"Sometimes, I think to myself, how should I shred those Japanese bastards into pieces"

"The most evil, the one on the top, I should kill him. I want my revenge and it just comes to my mind naturally"

"An apology? Nothing will count even for what I went through"
"I wasn't given money. I couldn't get married because I'm poor. I'm just getting old"



IV. Closing

1. History writing from the below and public memory

* Korea'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estimony research
  - rewrote the history of Joseon's colonization with experience and language of victim-survivors, not those of elite-men
  - rewrote the world history with the experience of World War II as colonized Koreans
  - has panoramic implications as "post-colonial" history that criticized Korean government and Koreans of not yet being freed from colonization (in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silence of Korean conspirators, in prejudice against women victims, etc.)

*** Through testimony, victims became subjects of history writing, not just victims who should be compensated.**

2. Preservation of testimony records and production of secondary records

* Systematic conservation and reproduction efforts are needed for current records.

* The preservation and methodology of secondary productions such as video, exhibition, and translation are also necessary.

* The history of Korea's testimony research is also the history of researchers: The importance of researcher communities and fostering researchers

3. The age of "post," testimony and memory became more important

Spread of public memory; for the commemoration of victim-survivors

CHOI Gap-soon (1919-2012)

"When I think of my life back then, I can't sleep at night or day."

"Is anyone coming? And If no one comes, I sleep for a moment and then at night it all comes back to me. It all comes back."

"How I survived from my mum, what other people have done to me. When I was selling tofu as I got out of Manchuria, and just buying and selling things to make money, and almost drowning in the Dumangang River."



Kim Hak-soon Told the Truth: What That Means Then and Now

Alexis Dudden I Professor, University of Connecticut, USA

Hello. It is an honor, a deeply humbling honor to be with you today. I wish I were physically present, I am not. And that brings me to framing this 30th anniversary during the pandemic which is defining all of our lives in new ways. For the halmoni, if we think about it, the current discomforts that we are enduring are nothing. What how many Kim Hak-soon and all other victims of Japan's history of militarized sexual slavery endured was what the United Nations defined as a crime against humanity. The inconveniences we are enduring and for those who have actually lost people to the current pandemic, my condolences, the inconveniences we are enduring because of the pandemic are nothing when we think about what, halmoni Kim Hak-soon said in her testimony in August 1991.

She was visited regularly 3 to 4 people a day. Sometimes 7 to 8 men a day would rape her. That is criminal behavior and from which no human can be expected to endure. I begin with this memory of learning from Kim Hak-soon. I was a student. What in Korean is still known as a girl student at the time in Tokyo, and my Japanese language instructor had us read in the *Asahi Shimbun* halmoni Kim Hak-soon's testimony. I frame my memory, my personal memory of Kim Hak-soon this way, because what she said, the truth of her life and the truth of hundreds of thousands of similar victims and survivors, is not an anti-Japanese statement, as many of us are portrayed when we raise this history. Instead, it is the truth, and I learned from her truth through a Japanese language instructor at one of Japan's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paid for by the government of Japan.

Fast forward 30 years today we have a current administration in Japan which would have the world believe that all of these women are liars. Here in the United States about 100 miles from where I am sitting, a professor at one of the world's most prestigious university law schools Harvard, Professor J. Mark Ramseyer this year caused a great controversy and called into question the validity of all testimony. What halmoni Kim Hak-

soon did through her courageous bravery 30 years ago was explained to legal communities, the world's judicial communities, the value of human testimony. Especially the value of testimony of those not privileged, those not accredited by prestige, by a certain university status. And I think it's an important moment during a pandemic to consider the voices we are not hearing and place those in conjunction with what halmoni Kim Hak-soon did for world history for forever. s

She stood up decades after the crime that had been committed against her body and said this was horrible, this ruined my life, but I am still here. And I'm still here for a reason, I'm still here to tell the truth. I was a girl student in Tokyo at the time and my male teacher had the bravery to say, "This is the language I want you to learn Japanese in." And I frame Kim Hak-soon's testimony of this way because Kim Hak-soon herself wanted the world to learn from her history, her truth and not as something to blame on a nation but on a system.

The state-sponsored system of militarized sexual slavery perpetuated by the government of Japan in the 1930s and 40s remains history's largest example of human trafficking, and human trafficking for the purposes of rape. And we need to think about the value of her individual testimony representing hundreds of thousands of victims and survivors, and continue to measure it against denial, against ignorance, and against people who simply don't care. She remains one of the bravest people of the 20th century and it is incumbent on all of us to carry her legacy into the 21st to end forever the horror perpetuated on her body. Thank you again so much for including me today and I wish you just a very successful conference.

Living Justice: The Power of Survivors' Voices

Elizabeth W. Son I Professor, Northwestern University, USA

I want to thank Professor Lee and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Korean Council hereafter) for this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oday's conference. It is an honor to be in this space with so many scholars and activists whom I admire. In my presentation today, I'll discuss the concept of "living justice" and how Kim Hak-soon halmeoni's public testimony and the voices of other survivors have echoed across time and space to sustain the global social movement for "comfort women" justice.

Introduction

Fourteen years ago, when I began my research on women's art and activism surrounding the history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 asked survivors why they attended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One survivor, Gil Won-ok halmeoni, explained that it was for the future. As a living witness, she believed that it was her responsibility to tell the world about her experiences during the war and to fight for justice. Her sentiment echoed the words and actions of another living witness—Kim Hak-soon halmeoni who gave the first public testimony as a survivor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on August 14, 1991.

Kim Hak-soon halmeoni inspired generations of women to come forward with their stories of sexual victimhood. Survivors like Jan Ruff O'Herne watched Kim Hak-soon halmeoni's testimony on television and decided to share her testimony publicly in 1992. In the 1990s a group of survivors of militarized sexual violence during the Bosnian civil war were moved by the public testimony of "comfort women" survivors and decided to testify at the U.N. The 2010 Tribunal of Conscience for Women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during the Armed Conflict in Guatemala was directly inspired by the survivors who testified at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Women's

Tribunal hereafter) held in Tokyo in 2000. The list goes on and on.

Living Justice

Survivors like Kim Hak-soon halmeoni who have spoken out, activists who have gathered weekly for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artists who have created art in remembrance of survivors, and supporters who have taken care of the Statue of Peace—all illuminate the ongoing expansion of the landscape of justice. While advocating for official redress, they emphasize the necessity of cultivating relationships with survivors, leading educational campaigns and workshops, supporting memorialization projects, and building solidarity. In other words, they call for an expansive view of redress that is political, legal, social, and cultural.

The expansion of what constitutes redress demonstrates that justice does not belong solely in the hands of governments or courts. It is also in our hands. Justice is brought to life through embodied actions and through community. It is a living justice that we sustain. In my book Embodied Reckonings: "Comfort Women," Performance, and Transpacific Redress, I write about this living justice and argue that embodied practices like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public testimony, tribunals, art such as theatre, and memorials play a central role in how activists, survivors, and their supporters have advocated for official redress while expanding the contours of redress. The history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 history that centered on the violation of women's bodies, calls for re-presenting and mobilizing those bodies with meaning through redressive acts such as protests, tribunals, theatre, and memorial building.

For example, as I write about in my book, my interest in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began as an exploration into the making of claims for official redress through protests. However, when I started participating in the protests in 2007 and spoke with participants, I realized that something more profound was happening in that public space.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are the very site of a living justice. Even as supporters demand official redress as they face the Japanese Embassy, they also turn towards each other, placing the survivors and their supporters as the center of attention. This physical turn of the body from the embassy towards each other signals the expansion of who has agency to bring about change. These gatherings "have transformed the public

space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to a redressive arena, where protesters imagine and practice social redress through education on the street about history and the cultivation of reparative communities through intergenerational and transnational coalition building."[1] One of the most beautiful illustrations of this living justice is reflected in how Gil Won-ok halmeoni has described the supporters who come to the protests as her "descendants." When I interviewed her, she explained, "Sometimes whe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ome, they go, 'Halmeoni, halmeoni, cheer up and have strength! We're here. Cheer up, and my heart just suddenly opens up."[2] She expressed the social bond she feels with these young supporters. Her love for them was palpable. They have become part of her family—a meaningful form of social redress.

For the rest of my presentation, I will talk briefly about different echoes of Kim Hak-soon halmeoni's testimony in other survivors' public testimony, artistic work like theatre, and remembrance-based actions—all helping to sustain a living justice.

Echoes: Jan Ruff O'Herne, Connections with Bosnia, and Korean Trojan Women

In 1992, after watching Kim Hak-soon halmeoni and other survivors give their testimony and make a plea for justice on television, Jan Ruff O'Herne, a Dutch survivor of military sexual slavery during Japan's occupation of the Dutch East Indies (now Indonesia), decided to come forward publicly and support Korean survivors. Sh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in Australia and traveled the world giving her testimony, speaking, for example, at an international public hearing on Japanese war crimes in 1992, at the Women's Tribunal in 2000, and at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 2007.

During her testimony in front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s part of the effort to pass HR 121, O'Herne explained why she broke her silence:

In 1992, the war in Bosnia had broken out, and I could see that women were again being raped in an organized way, and then after that, that same year, I saw the Korean comfort women on television. They broke their silence, and Ms. Kim Hak Sun was the first comfort woman to speak out. I watched them on television as they pleaded for justice, for an apology and compens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

[1] Elizabeth W. Son, *Embodied Reckonings: "Comfort Women," Performance, and Transpacific Redres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2018), 23.

[2] Interview with Gil Won-ok, July 27, 2007, Seoul.

I decided to back them up especially as I realized that in Bosnia women again were being raped on an organized scale.[3]

Kim Hak-soon halmeoni's testimony not only helped launch the "comfort women" movement for justice in the early 1990s, but it also helped accentuate the importance of accountability for crimes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against women during other armed conflicts such as the Bosnian war. In advocating for rape to be considered a war crime, survivo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their supporters joined European activists and Bosnian survivors of mass rapes at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Vienna in 1993 and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in 1995.[4] At these international gatherings, activists pointed to contemporary wartime sexual violence in places like Bosnia as ramifications of the impunity granted to perpetrators of mass sexual violence such a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5] Survivors at these gatherings poignantly expressed that they inspired each other to come forward with their painful pasts. Fadila Mesmiservic, who testified on the systematic rape of women in the former Yugoslavia at the Vienna Conference, said "When I heard Bok Dong Kim, I felt a terrible void in my soul because what happened to the Korean comfort women during World War II is still happening to women today."[6] As I already noted, the experience of Bosnian women helped encourage survivors like Jan Ruff O'Herne to come forward. She shared at the Women's Tribunal in 2000: "[…] I feel I have to speak up, because I heard the same horrible thing was happening in Bosnia."[7]

Artists have also drawn these connections betwee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3]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Comfort Women,"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the Global Environment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Serial No. 110-16, February 16, 2007, 25-26.

[4] Charlotte Bunch and Susana Fried, "Beijing '95: Moving Women's Human Rights from Margin to Center," *Signs* 22.1 (Autumn 1996): 200-204.

[5] Activists in support of survivo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ave also pointed to the Bosnian case as a legal precedent.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Women's Tribunal hereafter) referenced the conviction against eight Bosnian Serb military and police officers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n 1996; this was the first conviction by an international court to classify rape as a crime against humanity. See Marlise Simons, "U.N. Court, for First Time, Defines Rape as War Crime," *The New York Times*, June 28, 1996.

[6] Gertrude Fester,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Agenda* 20 (1994): 77.

[7] Yayori Matsui,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Memory, Identity, and Society,"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19.4 (December 2001), 124.

and the Bosnian war. Inspired by survivors' testimony, Bosnian-born director Aida Karic conceived of and directed The Trojan Women: An Asian Story, building upon Euripides' tragedy about the enslavement of Trojan women after the fall of their city to situate the history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he explained, "This play is the story of the Trojan women and the Korean 'comfort women' as well as the story of my country."[8] What happened to thousands of Japanese military sex slaves resonated with Karic, who lived through the beginning of the Bosnian war, where an estimated 20,000 to 50,000 Muslim women and girls were raped by Bosnian Serb armed forces. Traveling between South Korea and Austria—Karic spent two years working on The Trojan Women with a Korean choreographer, composer, pansori singer, and theatre company. After its Austrian run at the Schauspielhaus Wien in 2007, The Trojan Women toured to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longside the work of activists, artists like Karic have been using various cultural forms, from poetry and documentary films to theatre, to address the history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the last two and half decades, there has been a proliferation of theatrical productions about the experiences of Japanese military sex slaves. Theatre provides the space for re-embodying the presence of survivors and giving audiences the chance to hear their testimony through affective means. The dramatization of the experiences of survivo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can also illuminate topics not discussed at public activist events, such as the intimate struggles of living with trauma for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In the case of Karic's The Trojan Women, the production fostered a critical space for the audience to confront the long history and brutality of wartime sexual violence. The production accomplished this through aural, visual, and movement-based oscillation between themes of the specific (experiences of Korean military sex slaves) and the transhistorical (Trojan women in Euripides' Greece), and between violation (testimony by Kang Duk-kyung halmeoni and Ahm Jeom-soon halmeoni) and healing (shamanic ritual movements). The production also moves between multiple temporalities (Trojan War and WWII), positioning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not as an isolated incident, but as part of a longer history of wartime sexual violence. The production's centerpiece is the moral

[8] Hyun Noh, "*Geuleeseo Bigukgua Mannan Wianbudul*" [The 'Comfort Women' Meet Greek Tragedy], *Maeil Kyungjae* [The Daily Economics], October 22, 2007, A35.

question of how to impede the centuries-long cycle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times of conflict and how to deal with the devastation on women and their communities. As part of the tapestry of living justice, theatre like The Trojan Women allows audiences to join a global community of remembrance and witnessing.

Echoes: Kim Bok-dong, Statue of Peace, and KAN-WIN's #ComeSitWithHer

Along with the echoes of Kim Hak-soon halmeoni's testimony in Jan Ruff O'Herne activism and in theatrical works like Aida Karic's, I want to follow another echo of her testimony in the activism of Kim Bok-dong halmeoni and in memorial projects. Not too long after Kim Hak-soon halmeoni's public testimony, Kim Bok-dong halmeoni decided to come forward with her testimony in 1992. She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and traveled the world to give her testimony and to demand justice.

As part of their activism, Gil Won Ok and Kim Bok Dong halmeonidul started the Nabigigeum [Butterfly Fund] in 2012 to help female victims of sexual violence during armed conflicts. During protests and on trips abroad to give their testimony, they encouraged supporters to make donations to the Butterfly Fund and for supportive organizations to hold fund-raising events. In 2013, Kim and Gil halmeonidul donated the money they had raised to rape victims in the Congo and to the Vietnamese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by Korean soldiers during the Vietnam War. As survivor-leaders, they crafted new identities for themselves as advocates for justice, not just for themselves, but also for other women who had been traumatized by sexual violence. Through their activism, they were helping to grow a global living justice.

During one of her trips abroad, in 2013, at the dedication ceremony for the installation of the Statue of Peace in Glendale, California, I had a chance to witness Kim Bok-dong halmeoni invite others to join her in sustaining this living justice. Here is an excerpt from my book about this moment:

Kim Bok Dong's speech was the most powerful performance of the day. Dressed in a hanbok with a white jeogori and black chima, Kim was the living embodiment of the [Statue of Peace]. Her outfit was both a reminder of her age when she was forced to become a sex slave and a powerful gesture of reclamation of that lost time. Elegantly clad and speaking in clear, steady words, Kim declared, "As I've been traveling, I have been

saying that if Japan does not come forward and apologize, then I will go around the world and build memorials. But I am really happy that the city of Glendale is installing this memorial." Building a memorial is a call for redress and an act of redress itself. "The memorial is a representation of the past history, so I ask you to try to protect and maintain the peace memorial here," said Kim. "I urge you to join me in the effort to pressure Japan to stop making senseless remarks but instead to make a straightforward apology, an official apology for us, and to also help us make this world war-free, because if there is war, there will be victims like us, and that inevitably happens. I hope our descendants can live in a peaceful world." Kim invoked the language of protection for the memorial and for the future of her descendants, echoing the use of the term by Lee Yong Soo and Gil Won Ok. In inviting others to join her in her fight for justice, she also articulated a broad horizon of peace for future generations.[9]

A couple of years later, Kim Bok-dong halmeoni traveled to Chicago in 2015 to give her public testimony. The organization that sponsored her visit was KAN-WIN, a Chicago-based organization founded in 1991 that supports Asian American and immigrant survivors of domestic abuse and sexual violence. KAN-WIN runs a twenty-four-hour support hotline and provides transitional housing, counseling, job skills training, financial management training, legal workshops, support groups, children's programming, and social gatherings for survivors of domestic abuse and sexual violence. They are the main organization in Chicago that supports the global social movement in support of survivo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ince the 1990s, KAN-WIN has organized testimonial events with survivors, solidarity protests, educational workshops, and art exhibits, among others. As they explain in their vision statement: "As advocates for victims and survivors of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we at KAN-WIN are dedicated to 'comfort women' advocacy. Our vision for a better world aligns with the spirit of the 'comfort women' survivor-activists, who in demanding their own justice, cry for the justice that is due to anyone who has experienced sexual violence."[10]

---

[9] Son, *Embodied Reckonings*, 171-172.

[10] KAN-WIN "Comfort Women" Justice Advocacy, "KAN-WIN Statement on 'Comfort Women' Advocacy," accessed on August 2, 2021, https://www.comfortwomen-justice.com/uploads/5/1/4/6/51462959/kw_cwadvocacystatement.pdf.

KAN-WIN not only joins the larger call for official redress, but they also help expand the landscape of justice by actualizing social and cultural redress through education, remembrance, and solidarity building.

For example, on Global Action Day, KAN-WIN organizes #ComeSitWithHer performances, whereby they bring the Statue of Peace to downtown Chicago and encourage participants to sit next to the statue in solidarity. In asking passersby "will you #comesitwithher," KAN-WIN invites participants to remember the history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to reflect on what it means individually to become an ally. Whenever I sit in the chair or watch others sit next to the statue, I know that we are answering Kim Bok-dong halmeoni and Kim Hak-soon halmeoni's invitation to continue their fight for justice.

Conclusion

As survivors, activists, and supporters continue to advocate for the full actualization of official redress, we further help enlarge the horizons of justice by continuing the work of remembering and honoring survivors' experiences, teaching others to honor the dignity of all survivors of gender-based violence, and working towards a world free from gender-based oppression and violence. Feeling the echoes of Kim Hak-soon halmeoni's testimony from thirty years ago, we all sustain a living justice.

The Role of Autobiographies in Activism: How Former Comfort Women Used Testimonies to Fight for Their Rights

Kathryn Bathgate I Master Student, University of Münster, Germany

Introduction

Imagine you are in a room of women. Everyone comes from a different culture and background. At first glance, you might be inclined to think that these women have nothing in common. However, if you were to ask the women how many of them had experienced some form of sexual harassment in their lifetimes, 81% of them would raise their hands (Chatterjee). One in five women will also be raped in their lifetimes (Statistics). Sex, and more specifically sexual violence, define the female experience. Female sexuality has always been centered around and dictated by men, their desires, and their sexual urges. As Rebecca Solnit describes it, "sex is an arena of power" (108). Sex is one of the most basic parts of human existence, and to exert control over someone's sexuality is to take away their most basic freedom and their sense of security.

Because of this power dynamic, which prioritizes male sexual desires, sex evolved into a tool of war used as a means of instilling fear in and exerting dominance over a population. O'Herne states, sex is nothing more than "a power game" in war (Ch. 6). One does not have to delve deep into the history books to find examples of this violence: the Rape of Nanking during the Sino-Japanese War in which at least 20,000 women were raped (Nanking); the Red Army after the fall of the Third Reich in Germany, when an estimated two million women were raped by Russian soldiers (Westervelt); and the more modern-day example of the Bosnian War, where rape became a tool for the ethnic cleansing of an entire group of people, and an estimated 12,000 – 50,000 women were raped over the course of the three-year war (Crowe 343). The examples are the tip of the iceberg.

This tactic of war works well, because women are shamed into silence (Henson, O'Herne, and Solnit). Women have long been held to a higher standard in regards to their

sexuality. Through an emphasis on female virginity, women and their bodies were controlled and regulated (Jung, Soh, and Solnit). Men defined when, with whom,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women were allowed to have sex (Jung, Soh, and Solnit). Sex has long been a way to shame, control, and own women. Because of the shame victims feel, these experiences are frequently shut away, never to be discussed again. The women fear judgment and retaliation against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for something that was ultimately out of their control. This silence allows the perpetrators to continue their heinous crimes. However, beginning in the 1980s, attitudes towards sexuality, especially sexual assault, were challenged and began to change, particularly in South Korea (Jung 261). On August 14, 1991, a woman named Kim Hak-soon told her story of sexual assault at the hands of the Japanese Imperial Army during the Asian-Pacific War. Kim revealed she was a former comfort woman, and a victim of forced prostitution within the comfort system Japan implemented in the war. Under this system, between 50,000-200,000 East and Southeast Asian women, with a large portion being of Korean, Chinese, Taiwanese, Filipino, and Indonesian decent, were procured to work as prostitutes during the war and offer 'comfort' to the soldiers (Yoshimi 21)[1]. In many instances, the women were coerced into these positions by recruiters who promised them good jobs and opportunities for a better life. Instead, the women, many of them still young girls, were forced to have intercourse with anywhere from a few men up to sixty men a day (Yoshimi 139). More than forty-five year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Kim Hak-soon overcame the stigma placed on her by a patriarchal society that traditionally shamed her for her experiences by choosing to speak up. This action challenged society's attitudes towards sex and sex crimes, Japan and Asia's memory of the war,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region's history.

Kim Hak-soon's courage made it possible for other women to come forward and tell their stories, too. By breaking her silence and shattering society's expectations for women, she empowered hundreds of other former comfort women to take a stand against Japan's utter denial of the military comfort system and demand both a formal apology and retribu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the few remaining survivors are still

[1] According to the UN Special Report on the comfort system, countries known to have had comfort stations include: China, Taiwan, Borneo, the Philippines, many of the Pacific Islands, Singapore, Malaya, Burma and Indonesia (6). Therefore, it can be argued that local women from these places became victims of the comfort system as well.

waiting and fighting for to this day. Over the last thirty years, the women have told their stories in multiple formats. These include interviews, speeches at protests, testimonies, and autobiographies. Each interview, speech, testimony, and autobiography gave and continues to give the women a platform to raise their voices and fight for the justice they rightly deserve. Generally, one considers these stories to be just that- someone talking about a particular event or series of events in their life. However, these testimonies and autobiographies go beyond that. They are a form of activism. Their stories transcend a mere account of the events to reveal their trauma and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rough this act, the women challenge the memory of the comfort system and the patriarchy.

Over the course of this paper, the role of testimonies and autobiographies in activism will be analyzed through the autobiographies of two former comfort women. Although few women have come forward about their experiences due to a multitude of reasons including shame, the stigma surrounding sexuality, fear of retaliation from or against their families, poor health, and age, some women have taken to advocating for their rights and dignity and have been very vocal on what happened to them. One such woman is Maria Rosa Henson, the first Filipina former comfort woman to come forward and the first Filipina comfort woman to write an autobiography about her experiences. Another is Jan Ruff O'Herne, a Dutch woman who was born and grew up in the Dutch East Indies, the present-day Indonesia. As the first European former comfort woman to come forward, she presents another take on the comfort women issue, which deserves further attention. These two autobiographies will be the basis of the textual analysis.

Their accounts increased awareness on the comfort women issue, but they also supported the goals of the feminist movement. This classifies them as acts of activism. Prior to the analysis of the autobiographies, the impacts of language, as well as information on the feminist movement in East and Southeast Asia, will be presented and discussed. Although the autobiographies from the comfort women will be the main focus, it is critical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se other related topics in order to fully comprehend the topic at ha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autobiographies, particularly within the scope of the feminist movemen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how these accounts are a form of

activism. That these autobiographies exist is an act of resistance, and their content sheds light on a topic frequently overlooked in English-language literature and the Western feminist movement. As examples of literature as activism and resistance, their contributions are a valuable source to literary studies and deserve greater attention.

The Significance of Language

Since the beginning of Japan's installation of comfort stations in the 1930s, there have been many names used to refer to the women who provided sexual services to the soldiers, including 'comfort women', 'comfort girls', 'military comfort women', 'sex slaves', and more recently 'halmŏni', or grandmother. All of these, except for the more recent terms 'sex slaves' and 'halmŏni', which is used to show respect to the women, stem from the original Japanese term for the women, ianfu, and reflect "the views of a paternalistic state" (Soh 67). Ianfu, or wianbu in Korean, refers to "an adult female (fu/bu) who provided services to 'comfort and entertain' (ian/wian) the warrior" (69). The term 'comfort' comes from the original Japanese word, but it represents a more problematic issue, which is how women are, or were, viewed in Japanese society and what duties they are meant to fulfill as females. At the time, soldiers were seen as "equals of the gods" because they were fighting on behalf of the Emperor, who was revered as a god (136). The comfort women were "gifts" to the soldiers and meant to provide "rest and relaxation and thereby [boost] his morale, which in turn enable[d] him to fight fiercely in order to win the 'sacred war'" (69). This mentality embodies the objectification of women. Women are only seen as something that can provide pleasure to a man, as well as an essential object key to winning the war. The military referred to them and treated them as "war supplies", further objectifying the women (Hicks 17). They were stripped of their dignity and humanity, because they were only appraised by what they could provide for men.

The use of the term 'comfort women'co acknowledges and affirms "men's customary sex-right to seek and enjoy heterosexual entertainment and coitus outside matrimony" (Soh 133), while condemning the women who provide such services as whores, or in much more degrading terms such as "pi", which would be translated as "cunt", or "kyōdō benjo", which translates to "public toilet" (39-40). This metaphor turns women into "receptacles" for male genitalia and their semen, and further degrades and objectifies the women (40).

This idea of women as receptacles for men's genitalia and semen was a common component in many patriarchal societies, not just Japan, but it played a critical role in how men viewed women in Japanese culture and explains why the comfort stations could be established with little afterthought.

Additionally, all of these terms define the women in relation to what purpose they can serve men sexually or whether a man has had sex with them or not. They are virgins because men have not used their bodies for pleasure or taken control over their sexuality. They are comfort women because the soldiers' suffering was eased and their sexual desires were fulfilled. The women and their sexual desires are excluded from the discourse, and the names used to label them and define the ordeal they went through are still entwined in a patriarchal society that continues to prioritize male desire and sexuality over women and their rights.

Feminism and Sexuality in East and Southeast Asia

Although the feminist movement in East and Southeast Asia began in the late 1800s, as in the West, the movement developed differently than in the Western world due in part to politics, religion, and culture. These factors hindered the growth of the movement in many Eastern and Southeastern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It was not until the 1980s that the movement asserted its independence and gained traction. Because the development differed so greatly, it is important to contextualize it. That the movement did not take shape until the 1980s had a direct impact on the comfort women coming forward, and it reveals the political and societal factors that led to their nearly fifty years of silence. Since the comfort women issue came to light in South Korea, understanding the movement establishes why Kim Hak-soon first came forward in 1991. The Philippines, as Henson's home, offers a logical comparison to the South Korean context and further explains why Henson did not come forward sooner. Because O'Herne self-identifies as a European, Indonesia will not be discussed in greater detail.

The political unrest of the 20th Century arguably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feminist movement in East and Southeast Asia. For much of the 1900s, many countries dealt with colonization, wars, and dictatorships, which halted the progress of the women's rights movement. South Korea, for example, experienced annexation from Japan, war, and

dictatorial rule that prevented much development or focus on the feminist movement. The movement took on a new form in 1987, when the military rule in South Korea was overthrown. A focus on the women's movement was not possible before that point in time. "The Korean women's movement rejected separation from the broader political struggle and identified itself as a part of the Democracy Movement. Rather than emphasizing its autonomy and independence, the women's movement gave priority to the issues of democracy and nationalism" (Jung 265). The activists recognized that attaining women's rights would not be possible until democracy was restored, and women could not be guaranteed their freedoms until political stability was secured. Once the activists no longer had to fight for their political system, "they began to realize that women's issues and gender equality could only be effectively achieved by women's autonomous and united organizational efforts" (266). Similarly, the Philippines also struggled with colonial rule, war, and martial law that hindered the movement's ability to grow and expand. In 1986, as "democratic institutions were restored," the women's movement could finally become independent and focus solely on women's rights (Roces 37).

In both countries, activists were aware that political upheaval would not benefit the movement, particularly under dictatorial rule. Independent, democratic governments were a requirement for women to attain their rights. The constant changes in political rule prohibited this for decades, particularly because the women had to devote much of their attention to the political movements.

Religion and culture have also had an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movement. The role of women in society has always been heavily dictated by various beliefs, and i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it is no different. At the beginning of the feminist movement in Korea, the lives of women, their roles in society, and the attitudes towards issues like sexuality were dictated by Confucianism, which had been the predominant religion in Korea for centuries. Due to Confucianism, "women were confined inside the home and assigned to domestic work" (Jung 274). This separation from men "ensure[d] that female chastity was preserved" (274). It is clear that virginity was viewed of the utmost importance for women, and protecting it became a top priority for women and their families. Remaining a virgin until marriage was so important to Korean women that they "were taught that if they were raped, suicide was the only way to restore family honor"

(274). This has impacted women and their ability to talk about sex, and particularly acts of sexual violence. To do so meant to bring dishonor to their families and would have other repercussions, such as stigmatization from the community. For the women themselves, they would "blame themselves for having had sexual relations and [losing] their virginity" (275).

Confucianism 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xes, but it also defined the relationships and hierarchies established in Korean society. As a result, Korean society is very collectivist, which influenced how the women's movement unfolded and why it did not exist in its own right until the late 1980s. While the Confucian mentality towards sexuality is still common to this day, sexual violence has continued to be discussed more openly and has been framed as a form of sexual autonomy that breaks the chain of both silence and patriarchal structures that exercise control over women, their bodies, and their sexuality (277). Women do not have to feel ashamed for something they had no control over, and they can stand up for their rights.

Religion also had a similar impact on Filipinas. Before the Spanish colonized the Philippines, women had greater freedoms, particularly sexually. "Unmarried girls were usually free to engage in sex" and "extra-marital liaisons were condoned" (Andaya). Once Spain took power, they converted the country to Catholicism and alte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gender roles, and morals to match those of the Catholic Church. The change in attitude towards sexuality alone had a detrimental impact. This placed women below men, made them submissive, and objectified them as their virginity suddenly increased in importance. These changed women's lives for centuries to come. Much like South Korea, sex became a taboo topic. The female identity in the Philippines was defined by Catholic values, and by deconstructing and redefining the 'Filipina,' women could be revered for their experiences instead of being stigmatized.

Before the 1980s in both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it was unthinkable that a woman could come forward and tell her story of sexual assault without the fear of stigmatization and backlash. The women still faced that to an extent, but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topic was changing, and their stories were received differently because of that. This change in society and a willingness to discuss the issue had to happen before women could even think of coming forward, especially since that was the first time that

topics like sexuality and sexual violence were being thematized.

Discussing the development of the movement also helps contextualize the form of and attitudes towards patriarchy and sexual violence in these countries. The patriarchy is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of feminism, but also the comfort women issue. The patriarchy is a "comprehensive set of relationships and norms characterized by a gender-based allocation of set roles and a distribution of power that places men in a superior position" (Sechiyama 19). This system encompasses long-established thoughts, behaviors, and gender roles that create an accepted hierarchy with men dominating women. Through this domination, they are able to dictate what women are allowed to do and the roles they fulfill in society. If men dominate every other aspect of life, they are also able to dictate sexuality. "Men are predicted to be more likely to dominate, monopolize, and control the sexuality of women" (Malamuth 277). This is the direct result of the patriarchy and ties into the concept of virginity, which dictates female sexuality. Women must remain pure for their husbands, and this reduces them to objects for male sexual pleasure and continues to put them below men in the gender hierarchy. A society that places male sexual gratification above women's safety creates the problematic mindset that men are able to have intercourse whenever it suits them. This jeopardizes female safety and leads to sexual exploit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Sexual violence includes "sexual assault, sexual harassment, wife battery, incest, marital rape and forced prostitution" (Mahoney 757). Every aspect of the comfort women issue relates to this. The founding of the system, the procurement, and the abuse are all tied into this relationship towards sex and power. The patriarchal society led to the in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which allowed the comfort system to flourish and continues to guarantee the silence of women who were so deeply affected by it.

The Role of Autobiographies in Activism

As the climate began to change around topics of sexuality, the first former comfort woman came forward. Kim Hak-soon paved the way for the surviving comfort women to publicly share their stories when she gave her testimony in 1991. Many women followed in her footsteps and gave their testimony publicly. Others, like Maria Rosa Henson and Jan Ruff O'Herne, went one step further and wrote autobiographies on their experiences in

addition to giving testimony. Although testimonies and auto-biographies are similar in many ways, they have some important differences that impact their reception.

One thing that testimonies and autobiographie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provide a counter-history. As Smith and Watson state, "How people remember, what they remember, and who does the remembering are historically specific" (23). Those in power, those with affluence, the winners, they write history and choose what is remembered. In the past, this meant an exclusion of certain voices, stories, and events. A counter-history involves a "reinterpretation of the past" (22), and

> "through acts of remember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narrate alternative or counter-histories coming from the margins, voiced by other kinds of subjects- the tortured, the displaced and overlooked, the silenced and unacknowledged among them" (Smith and Schaffer 4).

The account challenges the history that had long been accepted and demands a reevaluation of the event. The event is considered in a new light through a different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While both testimonies and autobiographies offer a counter-history, they also have many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Merriam-Webster Dictionary, testimony can be defined as "a solemn declaration usually made orally by a witness under oath in response to interrogation by a lawyer or authorized public officer" or a "firsthand authentication of a fact," i.e. evidence (Testimony). The key aspects of testimony are its format, the context it is given in, and the scope of the content. Testimony is generally given orally and focuses solely on a specific event. In the case of the comfort women, testimony could be given at a military tribunal and focus explicitly on a woman's experience at a comfort station, which is how many women have provided testimony. Testimonies serve as factual accounts from those who witnessed or were themselves victims of the crimes committed. This form, however, has limitations. Oral testimony can be taxing due to the emotional strain of recalling traumatic events, which means that witnesses may have difficulty in conveying important details or may leave them out altogether. Within the scope of the comfort women issue, many experiences the women had were very private, so sharing intimate details about sexual exploitation may be difficult. The scope of testimony has limitations, too. The focus is only on the particular event in question, which inhibits contextualization

and limits what details a witness can provide. It also frames the witness as a victim and labels them, in this case, as nothing more than a comfort woman. While it is without question that these experiences altered their lives forever, the women are more than comfort women and their sexual assaults.

Autobiographies have a similar function as testimonies: they are firsthand accounts on an experience. Conversely, they are written narratives. The catalyst, like in testimony, is a particular event in a person's life. However, autobiographies move beyond the limitations of testimonies through an expansion on a witness's account by going into greater, more accurate detail and providing corroborating evidence such as historical documents, photos, drawings, etc. Victims of sexual assault are acutely aware of the tendency to not be believed, so providing a consistent account with more evidence is always in their favor. By situating the account within the story of their lives, they are also able to contextualize their story and show how it altered their life trajectories. The expanded account gives victims the power to reshape their identity beyond that of their traumatic experiences. They can choose the framework of their account, for example by utilizing a particular form of narrative or the framework of a specific movement. Finally, this format allows their accounts to spread farther, particularly in the Western world. In the case of the comfort women, international pressure on Japan was and remains a central factor in the women receiving justice and achieving systematic change. The majority of the testimonies given by former comfort women were in the women's native languages- Korean, Chinese, Tagalog, etc.- which meant that without translated versions, they could not be shared on a wider scale. Both Henson and O'Herne wrote their autobiographies in English, despite their native languages being Tagalog and Dutch, respectively. As two of the few autobiographies produced by former comfort women, and perhaps the only accounts written in English, their decision speaks volumes. This choice, which eliminates the need for translation, reflects their desire to reach a greater audience and enlist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cause.

Defining Autobiography as Activism

Perkins and Phelps state "there is perhaps no literary form more conducive than autobiography to activists' efforts to emphatically link the personal to the political" (41). A

narrator can show how political or social structures and political decisions impact an individual. Combining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reveals the problems with these structures. The use of this format is a form of activism, which can be defined as:

> "The action that movements undertake in order to challenge some existing element of the social or political system and so help fulfill movements' aims. Thus, activism includes a wide range of different actions, from participating in a forum to sabotaging property" (Saunders 9).

The primary goal of activism is to create systematic change, which is accomplished through movements' efforts. These efforts are based on firsthand accounts like the ones from the comfort women that expose the atrocities long ignored or hidden away. Movements and survivors are dependent on one another: organizations need the stories from survivors to support their claims and their movements, but the victims also need the support of the organizations in order to be heard.

Within the feminist movement, all goals focus on the dismantlement of the patriarchy, its societal structures, and resulting attitudes that continue to oppress women and prevent equality of the sexes. The movements in East and Southeast Asia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were focused on challenging the structures of this system that related to sexuality. These goals included changing long-held attitudes towards female sexuality and eliminating the hierarchy that places male sexual gratification above female safety, rights, and bodily autonomy, as these factors enable a system of forced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to thrive. The firsthand accounts from the comfort women work as a way to challenge these systems. Unless someone speaks out against the system, it remains unchallenged and intact. The perpetrators are not reprimanded for their crimes and the institutions that exploit women are upheld. Autobiographies, therefore, can be a useful tool for activism.

Although Henson and O'Herne had different motivations for coming forward and writing their autobiographies, both had certain common goals that they shared with the movements they represented, namely the feminist and human rights movements. Breaking the nearly fifty-year silence was the critical first goal, but the desire to seek justice came shortly thereafter. Both parties wanted an official apology from Japan and to see legislative change in relation to rape as a war crime. Raising awareness on the comfort women issue

and rape in war were also key goals, as well as educating on the cruelties of war in general. Another important goal, and perhaps the most significant one of all, was expressing solidarity with other comfort women and encouraging them to come forward. Each woman, each story, was a blow to the patriarchy and everything it stands for that pushed them into silence. Their courage chipped away at the stigma surrounding sexuality and sexual assault. Beyond that, the women knew the pain of keeping this secret for so long, and they wanted the other women to be able to begin healing as they had.

As previously mentioned, the two autobiographies that will be presented are by Maria Rosa Henson and Jan Ruff O'Herne. These are two very different women with very different backgrounds and life trajectories. However, they are united by their experiences as comfort women and their goals pertaining to activism. Their autobiographies are also as distinct as the women themselves and show the variety of experiences comfort women faced, but both express the women's desires to finally tell their stories and fight for their rights, those of other comfort women and women as a whole through preventing sexual exploitation and war crimes. The following sections will focus on their autobiographies, their classification as a form of activism, and how their content supported their goals and those of the movement.

Truth in Autobiography

"When a woman says something that impugns a man … especially if it has to do with sex, the response will question not just the facts of her assertion but her capacity to speak and her right to do so" (Solnit 104). Victims of sex crimes are familiar with this scenario, and this is no different with the comfort women. Their accounts have been challenged since the beginning, particularly because the events happened so long ago. The truth in these accounts "can be neither fully verified nor fully discredited" (Smith and Schaffer 16). The recalled memories are subjective and only available through the lens of the individual writing. While minor details like the dialogue within an autobiography may not be relayed with 100% accuracy, that does not invalidate the memory. The audience must "look to the ethos of a narrator" to decide whether they believe the accusations or not (Smith and Watson 18). There are hoaxes in literature, as there are false accusations in real life. However, when one recognizes the number of stories corroborating these experiences and

the risk women took by sharing these stories publicly, one has to believe in the validity of their memories.

Maria Rosa Henson- Comfort Woman: A Filipina's Story of Prostitution and Slavery under the Japanese Military

Maria Rosa Henson was the first Filipina comfort woman to share her story publicly following Kim Hak-soon's testimony. Henson grew up very poor, as the product of her mother's rape, but was bright, courageous, and always able to stand up for herself. When the war broke out, she was no longer able to go to school and instead had to work to help support her mother. Eventually, she became involved in the resistance movement, Hukbalahap, which ultimately led to her abduction and involvement in the comfort system. Henson spent nine months in a comfort station before she was rescued by the resistance group. Henson was left both physically and emotionally scarred. Upon waking up from a two-month coma induced by her torture shortly before being rescued, she was left unable to speak for months or write for several years. Although she partially regained both abilities, she was left impaired until the end of her life. The emotional scars followed her throughout her life as well. She overcame her trauma enough to get married, raise three children, and lead her life as normally as possible. She came forward in 1992 and became heavily involved in the cause. Henson believed she had a "responsibility" to fight for those who could not come forward or were too ashamed to (Henson 86). She demonstrated, spoke at tribunals, filed a lawsuit against Japan demanding compensation, and wrote this book. Her efforts inspired 169 Filipinas to come forward (Tanaka xviii). Her strength and bravery defined the cause and changed the movement in the Philippines. Although Henson died in 1997, her story continues to inspire women to this day.

Her autobiography focuses on her experiences as a comfort woman. As she chronicles the phases and events of her life into the story, she weaves in the impacts of this traumatic period of her life, reflecting the role of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her, as well as the hardships she overcame. Henson explores the role of rape and sexual violence in her life as both the victim of rape and the product of her mother's rape; her complex relationships with the men she encounters over the course of her life; and the effects her experience and trauma had on her life. Henson's autobiograph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scribes her

sexual exploitation in great detail. The focus on her experiences as a comfort woman presents a counter-history to the one long accepted, and through this she challenges the role of the patriarchy in this system.

Henson's autobiography can be classified as a hybrid between a survivor narrative and political autobiography. In survivor narratives, the writer tells "stories of abuse through which narrators turn themselves from victims to survivors through acts of speaking out that shift attention to systemic causes of violation" (Smith and Schaffer 15). In this type, the narrator redefines their identity, while drawing attention to a problematic political or social system. This identity represents how they view themselves, but also how they would like others to view them. Political autobiography, on the other hand, unites the political and the personal and frames the narrative within a particular political or social context. This subgenre emphasizes particular movements or causes within the text. In order to be classified as such, the text must meet the following criteria:

> "(1) that the autobiographer will emphasize the story of the struggle over her own personal ordeals; (2) that she will use her own story both to document a history of the struggle and to further its political agenda; (3) that she will provide a voice for the voiceless; (4) that she will honor strategic silence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struggle as well as the welfare of other activists; (5) that she will expose oppressive conditions and the repressive tactics of the state; and (6) that she will use the autobiography as a form of political intervention, to educate as broad an audience" (Perkins and Phelps 20).

In her autobiography, Henson entwines her life story with the events that shaped and defined her life, combining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She provides a record of the atrocities committed against women in the comfort system, with the goal of educating and raising awareness to create change in the system, exerting pressure on Japan to apologize, and demanding accountability for what has happened to comfort women. By telling their stories, the women want to see structural change that will prevent crimes like these from ever happening again. This constitutes an act of activism and results in an active fight for their rights and justice. While doing this, she is also able to transform her identity from that of a victim to a survivor, as she is emboldened to continue her pursuits of justice and change.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existence of Henson's auto-

biography as a published text accessible around the globe is an act of resistance and emphasizes the ability of literature to be a form of activism.

Henson originally gave her testimony in 1992, but by writing her story down, she utilizes the aspects of autobiographical form to expand upon that account. The additional space allotted to an autobiography meant that Henson could go into greater detail of what happened to her during the war and at the comfort stations. The written format allowed the inclusion of various materials and evidence to support her claims, including an introduction from Yuki Tanaka, one of the leading experts on the comfort women issue, to provide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comfort system and work as an authority figure; photographs of Henson and the important figures in her life; and illustrations of many of the memories she brings up in the book. These all help to bolster Henson's claims and give her account validity. The extended length of autobiography also enables Henson to show the short and long-term effects her experiences had on her. Everything from exceptional moments to daily life were impacted by her trauma. Through telling her story on the other events of her life and the inclusion of particular events and memories, Henson is able to frame her story within the feminist movement and reevaluate her identity. By utilizing the many aspects of a political autobiography and the space the format allots, Henson is able to support the goals of the movement while fighting for justice for herself, other comfort women, and other victims of sex crimes.

In her account, she does not shy away from telling the gruesome details of her experiences during the war at the hands of the Japanese. This begins with her sharing her first interaction with the Japanese military, when she was a mere fourteen years old:

> "One day in February 1942, at about eleven a.m., as I was preparing to bundle some dry branches that I had gathered, I was surprised by two Japanese soldiers who grabbed each of my arms. I cried out but they refused to let me go…another Japanese soldier… approached us and slapped the two soldiers who held me. He looked like an officer… I thought he would save me, but he grabbed me from the soldiers and raped me. When he was done, he passed me on to the two soldiers, who took turns raping me. Then they just walked away. It was a very painful experience. My genitals bled and ached so much. I could not even stand… my dress was full of blood, and I could not hide what had happened to me" (23-24).

Henson rested for two weeks before joining her family again to collect firewood and make money:

> "'I will not get out of the sight of my uncles and neighbors,' I told myself. But as we reached the place where we usually went, we saw Japanese soldiers. One of them was the same officer who had raped me. He grabbed me in full view of my uncles and neighbors. They could not do anything because they could get killed. My uncles just cried because they could not help me. After raping me, the officer just walked away" (25).

These two incidents were Henson's first encounters with the Japanese military, and they set a precedent: the Japanese are in control and are to be feared. Whether alone or with men, women were never safe. The inhumane tactics exhibited here were used to instill fear in the Filipinos and exercise control over the population, with the goal being to prevent resistance. As Tanaka states in the introductions, Japan only had control over approximately 30% of the Philippines due to the resistance campaigns (xv). According to Kaufman and Williams, "violating women sexually is one way to assert domination over the 'other' in the most humiliating way possible" (37). Through these actions, a power structure is established between men and women, but also the Japanese and the locals. These two examples are more about control than sexual gratification and reveal the effects of the patriarchy on the use of rape as a means of controlling women and the general population. The attitudes towards virginity exacerbated the stigma around rape, making its use that much more damaging and virtually assuring that the solider would get away with it.

Henson further reveals the cruelties women faced under Japanese rule through her experiences at the comfort station. She was abducted at age fifteen while transporting goods for Hukbalahap. A group of Japanese soldiers stopped them, and Henson was taken to the town hospital, which had been turned into the Japanese headquarters for the area. "I saw six other women there. I was given a small room with a bamboo bed. The room had no door, only a curtain. Japanese soldiers kept watch in the hall outside" (Henson 35). The next day, her life changed forever:

> "Without warning a Japanese soldier entered my room and pointed his bayonet at my chest. I thought he was going to kill me, but he used his bayonet to slash my dress and tear it open. I was too frightened to scream. And then he raped me.

> When he was done, other soldiers came into my room, and they took turns raping me. Twelve soldiers raped me in quick succession, after which I was given half an hour to rest. Then twelve more soldiers followed. They all lined up outside the room waiting for their turn. I bled so much and was in so much pain, I could not even stand up… I could not eat, I felt much pain, and my vagina was swollen. I cried and cried, calling my mother. I could not resist the soldiers because they might kill me. So what else could I do? Every day from two in the afternoon to ten in the evening, the soldiers lined up outside my room and the rooms of the six other women there" (36-37).

Including the details of her abduction incriminates the Japanese. She was kidnapped and did not volunteer to go to the comfort station, even if she did not resist. Her previous interactions with the soldiers show that resistance was futile and would only have resulted in torture or death. The same is true at the comfort station. She could not fight back for fear of being killed. These details express the horrors the women faced and the severity of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is was a daily experience and something that haunted them forever. For the men, this represented just a few minutes of sexual gratification, although a feeling of control likely accompanied the act. As confirmed by the soldiers themselves, those who went to the comfort station did not regard these interactions as rape, but rather saw the women as prostitutes meant to have intercourse with them (Yoshimi 142). Even if they knew how the women got there, no one ever expressed concern about whether they wanted to be there or that the women had to have intercourse with dozens of soldiers per day. This exposes the deep-running roots of the patriarchy in the comfort system. The internalized sexual hierarchy created a sense of entitlement to sex with the women, and that their needs were prioritized ove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women. This lack of disregard reflects how the men viewed them as objects, there only for male gratification. This assertion is confirmed by Henson's account on violence she regularly faced at the comfort station:

> "Some soldiers punched my legs and belly after they had ejaculated prematurely, staining their pants with their semen. One soldier raped me, and when he was finished, ordered me to fondle his genitals. He wanted to rape me a second time but could not get an erection. So he bumped my head and legs against the wall.

> It was so painful… Every day there were incidents of violence and humiliation. These happened not only to me, but also to the other women there. Sometimes I heard crying and the sound of someone being beaten up as there was only a partition made of woven bamboo that divided my room from those of the others" (40).

Henson was dehumanized and reduced to an object, or, as Soh stated, a receptacle for semen (40). The soldiers turned violent when Henson did not fulfill this role, which further emphasizes that this is how the men viewed the women and solidifies the argument that the men felt sex was their right. Because of the power the men wielded over the women, there was little they could do.

This was Henson's reality for nine months until she was rescued from the comfort station. Although this physically spared her from the rapes, she relived them constantly in her nightmares (64) and every time she had intercourse with her husband (62). Her experiences at the comfort station left physical and psychological scars, and including these details reveals their lasting effects and the life-long suffering she endured. Her suffering did not end with leaving the comfort station.

The moment Henson decided to tell her story, she regained control. No longer was she oppressed by her captors. After nearly fifty years of silence, Henson chose to come forward in 1992. After hearing a radio announcement "talking about women who were raped and enslaved by Japanese troop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which pleaded the women "Don't be ashamed, being a sex slave is not your faul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Imperial Army. Stand up and fight for your rights," Henson was suddenly confronted with the past she had long kept hidden and had to decide what to do (83). Despite her fears of what her family would think of her, she was emboldened to come forward.

Her motivations were many, as are the influences of her story on the movement. Part of her motivation was personal. She had been carrying the weight of her secret for nearly fifty years. Her decision to come forward meant she could deal with her trauma. "It was a great relief. I felt like a heavy weight had been removed from my shoulders, as if thorns had been pulled out of my grieving heart. I felt I had recovered my long-lost strength and self-esteem" (85). In this healing, her personal transformation from victim to survivor occurs.

She was able to find her voice and use it to tell her story, which in turn was used to identify issues in society and work to change them. By telling her story, the world began to view her as a survivor as well. As soon as she spoke, Henson started fighting for her rights and seeking justice for what happened to her and the other comfort women.

However, many of her reasons for sharing her story on a wider scale relate explicitly to the movement. After initially sharing her story with the Task Force on Filipino Comfort Women, the organizers asked Henson to share her story publicly. "Maybe there are other women like you who are still alive. If they hear your appeal, they would also come out in public" (85). Telling her story publicly was both an act of solidarity and a means of giving a voice to the voiceless. The Task Force was aware that this could inspire others to come forward, boosting the case against the comfort system and supporting the movement's fight against sexual exploitation. It was in this vain that Henson believed she "had a responsibility to come out with [her] story" (86). This sense of responsibility developed out of a desire to seek justice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her and the other comfort women, but also to inspire others and to educate people "about the evils of war" (86). "I have to come out so they will know and understand" (87). She acknowledged that few were aware of the crimes that had occurred, but informing the public of the issue was critical to gaining attention and creating change. Her story provided a counter-history to the one long accepted and exposed the realities of war and the comfort system to the world. Her desire to educate and raise awareness is noticeable in the content she includes, as well as the language she wrote the book in. The book was written by Henson in English, which she learned in school before the war, when the Philippines was an American colony. The choice to write the book in English signals her wish to educate as many people as possible. Her testimony was already given in Tagalog, which allowed her to reach the population of the Philippines. Writing her book in English meant she could educate people around the world and increase support for the cause and the feminist movement.

She also wanted to "serve as an example to other survivors of wartime sex slavery who may still be ashamed to come out with their experience" (87). Her coming forward was an expression of solidarity with all the women who had already told their stories and those who were not yet ready, thereby giving a voice to the voiceless. Her bravery in speaking out meant that she could inspire others to share their stories. It signaled a change in the

times; attitudes towards female sexuality were changing, and the comfort women had the ability to be a part of that and instigate said change.

Through speaking up, Henson alters the memory of the comfort station from a place of pleasure to one of pain. Henson, albeit subtly, highlights the role of the patriarchy within the comfort system. She openly condemns the Japanese and their actions, but the influence of the feminist movement on her intentions is only acknowledged through her mentioning of the Task Force and their role in her coming forward. By seeking justice for her and the other women, she challenges the established structures of the patriarchy that forced her into silence, shamed her for her experiences, and allowed the men to get away with it for so long.

Jan Ruff O'Herne- Fifty Years of Silence- The Extraordinary Memoir of a War Rape Survivor

Jan Ruff O'Herne was the first Dutch woman to come forward about her experiences as a comfort woman. She was born in Indonesia, at the time known as the Dutch East Indies after being colonized by the Dutch some three centuries prior. O'Herne led a very different life than Henson when she was growing up. As Dutch citizens, the O'Hernes were an upper-class, well-respected family in their community, had access to education, and were a complete, loving family. This changed with the war. After Pearl Harbor, it did not take long for Japan to invade and conquer the Dutch East Indies. Following the occupation in 1942, Dutch citizens were placed into prisoner-of-war camps with deplorable conditions and remained there for three and a half years, until the end of the war. This marks a very different experienc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aken over by Japan.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O'Herne was taken to a comfort station. She would spend three months at the House of the Seven Seas before the Japanese abruptly closed the comfort station and brought the girls to an isolated prisoner-of-war camp. Although O'Herne was able to share her experiences with the other girls while they were in the comfort station, once they left, the topic virtually remained a secret until 1992, when O'Herne told her story publicly. The remainder of her life was devoted to the cause and fighting for justice, increasing awareness on the comfort woman issue, and working for change in human rights laws to prevent sexual violence in war from ever happening again. She passed away in August

2019, having devoted nearly thirty years of her life to the cause. Her efforts inspired many Dutch women to come forward and helped pass a resolution in the United Nations against wartime rape (Ch. 6).

The title of her book signals that her story is one of overcoming hardship, particularly her time in the comfort system. Like Henson's autobiography, the catalyst for writing the autobiography is her experience as a comfort woman. However, O'Herne's autobiography takes on a slightly different framework and tone. Because her time in the prisoner-of-war camp was such a defining part of her wartime experience, this becomes a central topic in her autobiography. Through the autobiographical form, she is able to address these experiences along with those from the comfort station. Both were traumatic periods of her life caused by the Japanese, which left lasting scars on her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That the war years had a large impact on her life is reflected in the amount of attention they receive in the book. O'Herne almost exclusively discusses her wartime experiences, except for one chapter on her childhood and a brief section about the time between the end of the war and coming forward with her story. With the focus on the wartime experiences, her autobiography has a more historical feel and infers that her goal is to provide a counter-history on not just the military comfort system, but also the prisoner-of-war camps.

Another leitmotif of O'Herne's autobiography is religion. O'Herne grew up in a Catholic household, and it was a defining part of her life. She states that "my faith was my most precious gift from God; it was my support and my strength in the suffering that lay far in the future" (Ch. 1). Here she is referencing her experiences in the camp and at the comfort station, where she frequently turned to prayer to help cope with the situation. Throughout her autobiography, she references her faith and prayer multiple times, and even invokes several Bible passages and prayers within the text. The emphasis on religion is poignant and influences the tone of the text. As a critical part of her identity, her faith was what helped her overcome her time at the comfort station, but it was also an important part of her ability to forgive the Japanese for what happened to her after fifty years of quietly suffering. However, her emphasis on her faith also has another impact on the text, namely that of her identity. By evoking this Catholic identity, she is defining the type of person she is- one of morals, one of faith, and most importantly one of purity. "I grew up… part

of an innocent generation in which girls were still virgins on their wedding day" (Ch. 1). Her religion defined her morals and lifestyle. Through an emphasis on religion, she conveys that she would never have willingly joined the comfort system.

The tone, leitmotifs, and focus influence how the autobiography is categorized. O'Herne's autobiography still fulfills some aspects of the political autobiography. She uses her book as a space to record the history of the military comfort system and to provide a voice for the voiceless, but she also shares her story with the hope of educating people on the topic and creating change in the legal system. Her account fulfills many criteria of a political autobiography, but because of the title and style, it reads more like a survivor narrative. The connections to politics are more subtle than in Henson's autobiography. As previously mentioned, she focuses almost exclusively on her wartime experiences, and within these recollections, she continuously weaves in stories of resistance and overcoming. This occurs in the chapters on her time in the prisoner-of-war camp, but this portrayal as a fighter increases within the section on the comfort station. O'Herne utilizes the autobiographical form to convey that she is a survivor, regardless of what the Japanese did to her. She resisted fiercely and overcame her suffering. She was then able to turn that suffering into a purpose by speaking out and becoming an emboldened survivor.

O'Herne begins her wartime record with the transfer of her and her family to the prisoner-of-war camp Ambawara Number 6, a camp for women and children. The camps were utilized to control the Dutch population and wear them down. Every aspect of their lives in the camps reflected this, beginning daily with rollcall:

> "Rollcall was Nippon's opportunity to let us know how inferior we were and who was in command. Orders were given. Women and children were counted, beaten, humiliated, and kept hours in the sun… women were to work hard and be obedient. If not, they would be punished, beaten or even killed. And we would have to bow to Nippon" (Ch.2)[2].

Rollcall served as their daily reminder of who was in control and established a hierarchy. The soldiers had the ability to humiliate and suppress, and none of the women could do anything about it. The constant threat of violence also quelled any attempts at resistance on a larger scale. While O'Herne revealed that they resisted the Japanese in smaller, quieter

[2] Here, Nippon is referring to the transliteration of the name of Japan in Japanese.

ways such as through stealing chicken eggs, singing Dutch songs while working, or smuggling in wine in order to hold mass, a large uprising would never have been possible. The Japanese were able to do whatever they wanted because they knew the women would never rise up and risk death or losing their loved ones. This level of control and power set the whee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mfort station into motion.

The girls, despite their protests, could not stop the Japanese from taking them to the comfort station. The girls did not know what awaited them when they were selected, nor did they find out for several days after arriving at the station:

> "Somehow they made us understand that we were only in the house for one purpose. We were here for the sexual pleasure of the Japanese officers…[W]e were to obey at all times…[W]e had become military sex slaves…Then we started protesting loudly… [W]e made it clear to them that we would never allow this to happen to us- it was against all human rights… and we would rather die than allow it. They stood there laughing at us and made us understand that we were their prisoners and they could do what they like with us" (Ch. 3).

O'Herne's account makes it clear that the Japanese took these girls from the camp with a specific intent, one that they knew was against international law, and incriminates them. Their reactions to the girls' protests, however, reveal how little that mattered. They were in control and could manipulate the girls and their bodies however they saw fit. The sex was about more than gratification. It was about control.

O'Herne's recollections on opening night reveal the link between gratification and control for the soldiers. On opening night, all the girls resisted as long as possible, including O'Herne. Eventually, she could not resist any longer:

> "A large, repulsive, fat, baldheaded Jap stood in front of me, looking down at me, grinning at me. I kicked him in the shin. He just stood there, laughing. He pulled me roughly by the arm. I tried to free myself from his grip, but I could not. My fighting, kicking, crying, protesting, made no difference. 'Don't! Don't!' I screamed… He pulled me towards him and dragged me into the bedroom. I was fighting him all the time…He threw me on the bed and tore at my clothes, ripping them off. I lay there naked on the bed as he ran his sword slowly up and down, over my body…I was aware of the shame of my naked body. He played with me

as a cat does with a helpless mouse…but he was too strong. The tears were streaming down my face as he brutally raped me. It seemed as if he would never stop" (Ch. 3).

The rape was all about control and overpowering her. The events leading up to the actual rape reveal this, particularly through O'Herne's resistance. Resistance is a key component of her autobiography, but particularly in this memory, where she emphasizes how much she fought back. While it expresses the patriarchal mindset that men and their sexual desires are above women and their bodily autonomy, it also raises the topic of consent. Consent is frequently addressed in rape cases to decide whether the encounter truly was an assault or not. For many, it would only be considered rape if no "permission-giving" occurred and physical resistance did not ensue (Kazan 29). This would mean O'Herne's encounter was, legally, non-consensual, because she repeatedly says no and fights back. It is also classified as rape because she was coerced. "No consent is obtained where agreement is express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mplainant" or "where the complainant is induced… to consent through an abuse of a position of trust, power, or authority" (27). O'Herne likely includes these details because it clearly defines her experience as a rape. This incriminates the Japanese and supports her claims.

Like Henson's account, O'Herne's story gives insight into what the girls faced at the comfort station and reveals the attitudes the soldiers had towards the encounters. What is different is that O'Herne's account almost emphasizes the patriarchal structures and attitudes more than in Henson's account. Through her emphasis on consent and resistance, she reveals the attitudes the men had towards the girls. They were objects to control and use for their own sexual purposes. Despite hiding, fighting, saying no, the soldiers still did everything in their power, including the use of violence, to get their way. If the women had been anything beyond objects for sexual gratification that they felt entitled to, they would have stopped.

The girls were released from the comfort station after three months. In a situation that is unique to the history of the comfort system, the comfort stations utilizing Dutch girls were shut down due to protests from a Dutch leader at the Ambarawa Camp Number 9 (Yoshimi 171). The girls were moved to an isolated prisoner-of-war camp. As Yoshimi states, the Japanese "feared that these cases would become an international problem after the

war," which reveals the Japanese knew what they were doing was illegal (175). The officer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and running of these comfort stations were also the only ones taken to trial after the war and punished for what they did, however it was only in relation to the Dutch girls, not the Indonesians that suffered the same fate (175). This certainly raises the issue of privilege, because the girls were only spared due to their ethnicity and European citizenship.

Upon returning, "the Japanese told us that we were never to tell anybody, ever, of what happened to us. If we did, we would be killed, along with our families. The silence began then and there" (O'Herne Ch. 4). Along with the lost virginity, the stigma surrounding sexuality, the sheer weight of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to them, and the threat of death, the girls were forced into silence. The threat of death combined with the reason for the girls' release shows that Japan knew what they did was wrong. However, by utilizing the patriarchal structures that created an imbalance in sexuality, they were able to silence the women and avoid detection, as they knew European voices were more likely to grasp international attention.

O'Herne, like Henson, suffered deeply from her experiences at the comfort station:

> "Fifty years of nightmares, of sleepless nights, fear of the dark because of what darkness had entailed. Fifty years of shame and pain that could never go away, horrific memories embedded in my mind, always there to be triggered" (Ch. 5)

Her time at the comfort station had an impact on her entire life, not just the few months she was there. For the soldiers' few minutes of pleasure, she was scarred for life. They robbed her of her sense of security, and the trauma of her experiences infiltrated her everyday life. Including this detail in her autobiography helps to unite the political with the personal, as she makes clear how the comfort system personally impacted the women and their livelihood.

In 1992, O'Herne saw Kim Hak-soon and other Korean women on television and was inspired to come forward. "I've got to be with those women. I've got to back them up. And suddenly, I felt that the story I had carried for all those years in my heart, could now be told. The courage of those Korean women gave me courage" (Ch. 6). It was an act of solidarity that inspired her for years to come. Much like Henson, she felt she had a responsibility to come forward, particularly as a European woman. She wanted to use her

position to support the women who had already shared their stories publicly and increase awareness on the issue. "I could see that the Asian 'comfort women' needed the support of European women. This had happened to Dutch girls too. Perhaps when a European woman came forward, Japan would take notice" (Ch. 6). O'Herne was able to garner international attention for the cause, but her statement highlights the predominantly Western focus of the feminist movement. Transnational feminism seeks to expand the movement beyond white, Western experiences, and prioritizing O'Herne's European voice over the many other Asian ones goes against this ideology. However, this does not change the fact that her account is significant and deserves to be heard. Sharing her story played a critical role in raising awareness for the comfort women issue and wartime sex crimes. As she states: "I had to tell my story so that in some way it might help to stop these atrocities from continuing. Rape in war must be recognized as a war crime" (Ch. 6). The moment O'Herne stepped forward, she transformed herself from a victim to a survivor and used her newfound voice and identity to educate people, seek justice, and make structural change, thereby supporting her personal goals and those of the movement.

Through her account, O'Herne provides a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comfort system. As a Dutch prisoner-of-war, her experience differed greatly from other comfort women. Her autobiography presents a counter-history on the comfort system, but also on the Dutch prisoner-of-war camps. O'Herne criticizes the system and the actions of the Japanese, but she continually emphasizes that forgiveness is important for healing and creating change. Her ability to forgive helped expand her efforts, educate a wider audience, become a voice for those who were unable to go public, and change the dialogue on sexual violence. Her autobiography fulfills the goals of the feminist movement and helped O'Herne reach her own goals for change.

Conclusion

For nearly fifty years, the comfort women remained silent. At the time the crimes were committed, the stigma around sexuality made it nearly impossible for the women to come forward. However, when the time was right to share their experiences, they created waves. Due to political unrest, amongst other things, the development of the feminist movement in East and Southeast Asia was hindered, and the societal changes necessary for sexuality

to be openly discussed occurred much later. It was not until the 1980s when the feminist movement could truly take shape that the stigma surrounding sexuality began to lessen. With these developments, victims of sexual violence were finally heard and believed. When Kim Hak-soon made the first step towards justice, other former comfort women realized attitudes were evolving, and now was the time to break their silence. It was still a risk to reveal their pasts, but by sharing their experiences they could help create change and seek justice. Their solidarity, along with the support of activists involved in the feminist movement, helped the women raise their voices, and the women, transforming from victims to survivors, became activists themselves. With their stories, they changed the face of the movement and the fight against sexual violence in war. They saw many successes, including raising awareness on the comfort women issue and sex crimes, and changing attitudes towards the use of rape in war. Their efforts accomplished, amongst other things, the passing of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war in 2008, a change that had a global impact. Additionally, they changed the discourse around sexuality, enabling women to more easily discuss their own experiences with sexual violence in the future.

Henson and O'Herne's autobiographies helped to make this change a reality, classifying their stories as acts of activism. Their bravery in coming forward and sharing their experiences publicly was an act of resistance against the binds of the patriarchy that had long kept them silent. Their written accounts, however, took their activism one step further. Due to their publication and accessibility, the women had a greater authority and platform than their testimonies alone afforded them. Both women were able to educate a wider audience and challenge the patriarchy with their autobiographies. Through their classification as survivor narratives and political autobiographies based on Perkin and Phelps' criteria, their role as works of activism is reinforced. Both accounts provided a counter-history on the comfort system, gave a voice to other victims, and inspired other women to come forward, all while challenging patriarchal structures and raising awareness on the comfort women issue. These goals aligned with those of the feminist movement and helped advance the discussion on sexual violence in war. This format has many strengths, but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the association with a particular movement could be viewed as a bias in the literature. However, this does not diminish

their contributions and their significance whatsoever.

Classifying autobiographies from former comfort women as works of activism offers many opportunities to expand the research on both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 role of autobiographies in activism, and the testimonies and autobiographies from the comfort women are a valuable contribution to literary studies. Not only do their narratives add to the study of autobiographies, they also expand the scope of feminist literature. Additionally, continuing to research this topic works to achieve one of the goals of the literature. The women told their stories so others could learn and their memories would remain alive. Researching and remembering their stories ensures they are not forgotten and that the activism they began continues long after they are gone. It is only through such efforts that crimes like these can hope to be prevented from happening again.

Works Cited

"Activism." The Wiley-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Clare Saunders, 2013, pp. 9-11.

Andaya, Barbara Watson. Rev. of Holy Confrontation: Religion, Gender and Sexuality in the Philippines, 1521-1685, Carolyn Brewer, Intersections: Gender, History and Culture in the Asian Context, vol. 8, Oct. 2020.

Chatterjee, Rhitu. "A New Survey Finds 81 Percent of Women Have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NPR, 15 June 2020.

Crowe, David. War Crimes, Genocide, and Justice: A Global History. Palgrave Macmillan, 2013.

Henson, Maria Rosa. Comfort Woman: A Filipina's Story of Prostitution and Slavery Under the Japanese Militar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9.

Hicks, George.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orld War. W.W. Norton & Company, 1997.

Jung, Kyungja. "Practicing Feminism in South Korea: The Issue of Sexual Violence and the Women's Movement." Hectate, vol. 29, no. 2, 2003, pp. 261-284.

Kaufman, Joyce P., and Kristen P. Williams. Women and War: Gender Identity and Activism in Times of Conflict. Lynne Rienner Publishers, 2010.

Kazan, Patricia. "Sexual Assault and the Problem of Consent." Violence against Women: Philosophical Perspectives, edited by Stanley G. French, Wanda Teays, and Laura M. Purdy, Cornell UP, 1998, pp. 27-42.

Mahoney, Kathleen. "Destruction of Women's Rights through Mass Media Proliferation of Pornography." Human Righ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Global Challenge, edited by Kathleen Mahoney and Paul Mahone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pp. 757-776.

Malamuth, Neil M.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Feminist and Evolutionary Perspectives." Sex, Power, Conflict: Evolutionary and Feminist Perspectives, edited by David M. Buss and Neil M. Malamuth, Oxford UP, 1996, pp. 269-295.

"Nanking Massacre." History, 15 June 2020.

O'Herne, Jan Ruff. Fifty Years of Silence: The Extraordinary Memoir of a War Rape Survivor. Kindle ed., Random House Australia, 2008.

Perkins, Margo V., and Carmen L Phelps. Autobiography as Activism: Three Black Women of the Sixties. UP of Mississippi, 2000.

Roces, Mina. "Rethinking 'the Filipino Woman': A Century of Women's Activism in the Philippines, 1905-2006." Women's Movements in Asia: Feminisms and Transnational Activism, edited by Mina Roces and Louise Edwards, Taylor & Francis Group, 2010, pp. 34-52.

Sechiyama, Kaku. Patriarchy in East Asia: A Comparative Sociology of Gender. Brill, 2013.

Schaffer, Kay and Sidonie Smith. "Conjunctions: Life Narrativ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Biography, vol. 27, no. 1, 2004, pp. 1-24.

Smith, Sidonie, and Julia Watson. Reading Autobiography: A Guide for Interpreting Life Narratives. E-book. 2nd ed., U of Minnesota P, 2010.

Soh, Sarah.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U of Chicago P, 2008.

Solnit, Rebecca. Men Explain Things to Me. Haymarket Books, 2014.

"Statistics." NSVRC, 15 June 2020.

Tanaka, Yuki. Introduction. Comfort Woman: A Filipina's Story of Prostitution and Slavery Under the Japanese Military, by Maria Rosa Hens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9, pp. ix-xxi.

"Testimony." Def. 1. Merriam-Webster.com. Merriam Webster, 06 July 2020. Web. 10 July 2020.

United Nations, Economic Security Council.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E/CN.4/1996/53/Add.1, 1996. http://www.awf.or.jp/pdf/h0004.pdf.

Westervelt, Eric. "Silence Broken on Red Army Rapes in Germany." NPR, 16 June 2020.

Yoshimi, Yoshiaki.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in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Translated by Suzanne O' Brien. Columbia UP, 2000.

Session 3. Backlash of Historical Denialism

Japan's Historical Revisionism and Denial of Survivor Testimony

KIM Pu-ja I Professor,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pan

Preface

I still remember 30 years ago, in December 1991, when Ms. Kim Hak-soon (hereinafter, abbreviated title) arrived in Japan to testify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he situation was widely reported on Japanese TV news, and a documentary broadcast was made. About 450 Japanese citizens flocked to the "Meeting to Listen to the Testimony of Ms. Kim Hak-soon (hosted by the Korean Women's Network on th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1] Tokyo YMCA)" held for the first time in the Kanto region, and they listened to the testimony in a heated atmosphere. Kim Hak-soon's visit to Japan and her testimony had a great impact on Japanese society, which served as a decisive opportunity for research and civic movements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truth and resolution of the issue. Subsequently, visits and trials of "comfort women" and wartime sexual violence survivors from Asian countries continued, and civic groups were formed in various parts of Japan to support their trials and to support survivors. The testimonies of the survivors wer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movement. The Kono Statement (1993), which acknowledged the Japanese military's involvement and coercion in the "comfort women" system, and the Murayama Statement (1995), which apologized for colonial rule and aggression, were achievements, even if there were limitations.

However, as is well known, history revisionism began in full-scale in Japan in 1997 with the formation of the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and the "Japan Conference." What they emphasized was to doubt and deny the testimony of survivors, by stating that "comfort women's testimony is false" and "comfort women are liars." Some

[1] A women's civic group consisting of Korean women from the Kanto region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Japanese feminists also doubted the survivors' testimonies in other ways.

Today's report will first examine two patterns of historical revisionism that deny the testimony of survivors, and then critically examine how Hata Ikuhiko, who is often used as an argument for Japanese history revisionists, denied the testimony of Kim Hak-soon.

Two Patterns of Historical Revisionism that Deny the Testimony of Survivors

Needless to say,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a complex product of the patriarchy and colonialism by the Empire of Japan. Based on this context and considering the historical revisionism that doubts the testimony of survivors, it can be demonstrated that the following two patterns exist.

One is historical revisionism that perpetuates colonialism under the guise of criticism of patriarchy (feminism). This is difficult to notice because the phenomenon is accompanied by criticism of the patriarchy, but it can be observed among feminists and progressive intellectuals in Japan and Korea. Ueno Chizuko's "model victim theory" and Park Yu-ha's Comfort Women of the Empire are typical examples.

Let us take a look at these works in detail. In Nationalism and Gender (1998), Ueno argued that an image of "innocent" and "chaste" "model victim" was created with the Korean "comfort women" in mind, but "the problem lies with the ones who want to hear what they want to hear rather than the speaker." In other words, she argues that the chaste "model victim" has been created by the "listener" who only hears "the story they want to hear," and doubts the survivor's testimony in the form of questioning the methodology of the "listener." In addition, Ueno gives the impression that the Korean women's movement (notably the Korean Council), which advocates for victims of "military sexual slavery" as a "listener" has created a "model victim" image, and denies the coercion or sexual slavery of the "comfort women" through connecting it to "discrimination against prostitutes" or "Korea's anti-Japanese nationalism." However, Ueno did not specifically explain who the "listener" was, and "various" victims who did not fit in the "model victim" image were published in the important Testimony 1 (Compiled by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Military Sexual Slavery, translated by the Korean Women's Network on th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1993) (Kim Pu-ja, 2020).

It is Park Yu-ha's Comfort Women of the Empire (2013=2014[2]) that put Ueno's theory of "model victim" into practice. Park Yu-ha, taking the "Statue of Peace" as an example, argues that the image of "comfort women = girl" was created in the 1990s from "misunderstanding chongsindae (labor corps) as a comfort woman itself," and was "a product of the unconscious because it was effective in raising and maintaining Korea's victimization consciousness." One of the grounds provided was the survivor's Testimonies. Park Yu-ha cherry-picked the "testimonies" of three survivors who were "20 years old" or older and used them as evidence that there were no minors among the Korean "comfort women." However, it is contradictory that the Testimonies, which is the basis of the three "testimonies," were published under the name of the Korean Council that Park Yu-ha wants to deny. In addition, a close examination of these six volumes of Testimonies reveals that 73 out of 78 were minors (Kim Pu-ja, 2017). In other words, the survivors' Testimonies on which Park Yu-ha's evidence is based tears apart Park Yu-ha's own argument. Furthermore, I will add the fact that Hata Ikuhiko, who will be described later, highly appreciated Park Yu-ha's Comfort Women of the Empire as "a similar understanding"[3] to his own work and ideas after understanding that Comfort Women of the Empire "rejected the theory of coercion or sexual slavery."

The other is historical revisionism as a combination of misogyny and colonialism. As mentioned above, it appeared in Japan in full-scale in 1997 and began to increase its power and now is still prevalent i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society. Recently, the influence of this historical revisionism can also be seen in some areas of Korea (Lee Young-hoon's Anti-Japanese Tribalism, 2019) and the United States (Ramseyer's theory on "comfort women," 2020). Misogyny here refers to the forcing of negative penance or punishment on women who resist or deviate from the patriarchal system (Ehara Yumiko, 2020). For example, the characteristic of misogyny is that it praises and gives

[2] [Japanese-Korean translator's note] Park Yu-ha, *Comfort Women of the Empire: Colonial Domination and the Struggle of Memory* [1st Edition], 2014 박유하『제국의 위안부 : 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제 1 판]』(뿌리와이파리, 2013) = 朴裕河『帝国の慰安婦 植民地支配と記憶の闘い』(朝日新聞出版, 2014

[3] Hata Ikuhiko "To face the facts of the comfort women," *Weekly Bunshun*, May 7, 2015, No. 14.

preference to women such as Sugita Mio,[4] who tolerates sexual violence and does not break the patriarchy, while violently chastising women such as Ito Shiori, who accuse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y men, suppressing accusations of sexual violence. History revisionism, which was established as such processes of misogyny colluded with colonialism, is a violent denunciation of the testimony of survivors of "comfort women" who accuse Japanese military of sexual violence. Denouncing "comfort women" as "prostitutes" as a means of exploiting society's deep-seated sense of discrimination against prostitutes is a clichéd means of misogyny.

A typical example of this phenomenon is the theory of "comfort women" by Japanese military historian Hata Ikuhiko. Hata Ikuhiko's Comfort Women and Sex in the Battle Zone (1999) was a historical revisionist scripture for a long time but has recently been translated into English (refer to Tomomi Yamaguchi's report). The characteristic of historical revisionism is that there are few historical researchers, and for this reason, it is inevitable to use Hata Ikuhiko as the canonical basis. Hereinafter, Hata Ikuhiko's theory on "comfort women" testimony and the testimony of Kim Hak-soon will be examined.

Hata Ikuhiko's Theory on "Comfort Woman" Testimony

First of all, Hata Ikuhiko defined the "comfort women" or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as the battle zone version of the state prostitution system that had been established in Japan prior to the war (p. 27). In other words, Hata understoo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to be a "state prostitution system in the battle zone" and developed an independent historical interpretation in Comfort Women and Sex in the Battle Zone under such understanding.

Next, in Chapter 6 of the same book, "The Complaints of the Comfort Women," Hata interprets the survivor's testimony independently by defining it as "complaints for the circumstances (p.177)." In other words, by likening "comfort women" to "prostitutes" and comparing the survivors' testimonies to "a prostitute's complaint" as "a trick to attract guests (as above)," he decided from the start that the survivors' testimonies were fiction.

In addition, Hata stated, "There are around 300 comfort women who have testified in

[4] [Japanese-Korean translator's note]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衆議員) is famous for slander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LGBTQ.

their real names so far," and their common pattern of narrative is that, "(1) the lives of comfort women were harsher than average, (2) life after the war was not affluent, (3) there is no family who do not like real-name testimonies, (4) she has low intelligence and is susceptible to deceit and enticement," which are all unfavorable conditions that are "easy to call for sympathy from the innocent public (p.178)." This is the part where Hata's misogyny about the testimonies of the survivors is revealed. Furthermore, from the fact that Hata quoted and agreed with Ueno (1998), who pointed out that listeners actively search for "the story they want to hear," it can be demonstrated that Ueno's above-mentioned remarks also influenced right-wingers like Hata. Hata's work described "complaints (as above)" from a sample selected from "ex-comfort women in Korea, the Philippines, China, Taiwan, Indonesia, the Netherlands, and Japan." In case of Korea, Kim Hak-soon, Mun Ok-ju, Kaneda Kimiko (pseudonym) Kang Deok-kyeong and Testimony Vol. 1 were targeted in his work.

For length reasons, this report will focus on Kim Hak-soon's testimony.

Examining Hata Ikuhiko's Denial of Kim Hak-soon's Testimony

Then how did Hata Ikuhiko interpret Kim Hak-soon's testimony? Hata quoted three or four sources of testimonies including A: Testimony Vol. 1 (above-mentioned), B: Testimony of Ms. Kim Hak-soon (published in 1993, Testimony during a visit to Japan in December 1991), compiled by Kaihou Publishing Company, C: Ito Takashi's Testimony of Military Comfort Women and Labor Corps (published in August 1992, hearing date unknown); legal complaint. He argued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key points is the problem (p.180)" and pointed to the following four differences (Hata puts the differences among A, B, and C in a table on page 181 of the book).

The first is the theory of "trafficking of persons." Regarding "the fact that her remarried mother sold her daughter for 40 yen (underlined by the quoting person)," Hata says that it appears in A, but not in the legal complaint, B and C, and argues that it is "a typical case of human trafficking." This part is a description of the gisaeng school that Kim Hak-soon attended, but Hata mentions gisaeng not in the main text, but rather in the table. For this reason, the text was written in such a way that it reads as though Kim Hak-soon became a "comfort woman" through "trafficking of persons" which is inaccurate.

However, what is important to note is that testimony in A does not at all say that the mother "sold" her daughter. If you write the Japanese translation of the testimony accurately, it would say, "My mother sent me away as the adopted daughter of a house that trains gisaengs... I just remember that my mom received 40 yen from stepfather, and she left me there with a contract lasting few years or so (Japanese translation, p. 43)." In other words, Hata's description of the process as being "sold" without providing the translated text only serves as an independent 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this is more of a conjecture to emphasize "trafficking of persons." Furthermore, in B, it says that she became the "adoptive daughter of the house that provides gisaeng classes."

It is also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the text. For example, it is not at all strange if this fact,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omfort stations, does not appear in the legal complaint, B and C. This is because each of these four texts differed in its listening methods of the testimony. A is the most reliable testimonial, carefully heard by Korean women's history researchers with background knowledge of Colonial Joseon and Korean society. On the other hand, B is a translated record of the testimony that Kim Hak-soon gave when she first came to Japan in December 1991. C is also a record of testimon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Japanese photographer Ito Takashi. The legal complain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focused on the damage 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s. Hata Ikuhiko ignores the aforementioned differences among these four texts.

The second is the theory of "resale" in mobilization to the comfort stations. Although A, B, and C all claim that she went to China with her stepfather (at a restaurant in Beijing) and was taken to a comfort station by Japanese soldiers, Hata expresses doubt on this testimony and stated that she "may have been resold locally," making assumptions without providing any evidence. It seems that Hata so wanted to deny the fact that the victim was taken away by the Japanese military, that he suggested a "resale (by her stepfather)," but the problem is that this "resale" theory has no evidential basis.

The third relates to Kim Hak-soon's birth year. Hata says that he is "concerned that the birth year is 1923 in the legal complaint, while A, B, and C state the birth year as 1924." Hata says the reason is because "Korea has a complete family register system."

But can it be said that the family register system was "complete" when Kim Hak-soon

was born? In Colonial Joseon, when the Joseon Civil Ordinance was revised in 1923, the "Joseon Family Register Ordinance" was enforced to introduce and maintain the family register system to be similar to that of Japan. The time when Kim Hak-soon was born corresponds to this period of revised ordinance. Besides, Kim Hak-soon was born in Manchuria. In addition, since infant mortality was high at that time, the births were often not registered or recorded in the family register with a date that was accurate to the actual date of birth.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method of counting ages between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western age counting in Japan, but Korean age counting in Korea). Perhaps Hata Ikuhiko lacked research into this factor.

The fourth relates to the theory of "gisaeng background." This is the facet in which the historical revisionists attacked the most fiercely. However, in A, B, and C, the history of going to a gisaeng school (in Pyongyang) is clearly written.

Nevertheless, in the same book, Hata Ikuhiko emphasized, "It is said that this was not revealed in the first report, probably because it was thought not good to reveal being a gisaeng who is considered a prostitute in reserve in Korea (p.180)," as if reports of Uemura Takashi (Asahi Shimbun Seoul correspondent at the time) and follow-up reports by the Asahi Shimbun intentionally hid the "gisaeng background (p.180, 182)." However, this claim is a baseless posthumous attack.[5]

Also, in the description of "gisaeng" as "prostitutes in reserve," it can be seen that Hata is ignorant of the historical existence of "gisaeng." Since the 1970s, prostitution tourism to Korea by Japanese male groups has become known as an international problem. Hata Ikuhiko seems to understand "gisaeng" as he associates it with prostitution tourism.

However, as A demonstrates, Kim Hak-soon learned traditional singing and dancing professionally since she was 15: "I went to kwon-beon, a gisaeng school, in Pyongyang (with [her] sister) together. It was a two-story building… There were about 300 students. I went to there for about two years, and I studied dance, pansori, and poetry diligently (Japanese translation, p.43)."

In the beginning, a gisaeng was a "gwangi" who belonged to the government office

[5] As already mentioned in the beginning, it is not surprising that Kim Hak-soon's testimony in a limited space focuses on the sufferings as a "comfort women" victim. However, it is already known that base attacks from historical revisionists started after Nishioka and Hata criticized Mr. Uemura's report.

and entertained clients by performing songs and dances during the Joseon Dynasty. Later, through the Gabo Reform (1894), the government system was abolished, and during the colonial period (1916), gisaeng was classified as a Japanese-style "geigi." During the colonial period, while maintaining the tradition of cultivating culture and concentrating on singing and dancing, the aspects of gisaeng deviated and changed significantly, to including ones who had hostess-background and knew popular songs and poured alcohol (Kim & Kim, 2018). In the case of Kim Hak-soon, she clearly belonged to the traditional former. Moreover, since Kim Hak-soon only attended a gisaeng school, it is not accurate to say that Kim Hak-soon was from a "gisaeng background." In other words, Hata cleverly changed the semantics. Of course, even if she said she was a gisaeng, it doesn't make a difference in the severity of her sexual assault 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

Conclusion

As reviewed above, Hata Ikuhiko ignored the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the text regarding Kim Hak-soon's testimony, declared "trafficking" by misrepresenting Kim Hak-soon's testimony, and assumed that the arrest by the Japanese military was a "resale" without any basis. He also revealed his ignorance of the family register system and gisaengs of the colonial period. It is a typical instance of victim's "negligence" theory to dig up the personal history of a victim prior to her experiences at the comfort station rather than confronting the serious fact of sexual damage 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 Even gisaeng background, which was problematized the most, Hata uses the first report to fabricate the impression as if she was hiding the fact, but Kim Hak-soon proudly speaks of her experiences at the gisaeng school in all the testimonies A, B, and C.

Nevertheless, Hata abused the fact that Japanese society had no historical knowledge of colonial rule in Joseon (which shows continuation of colonialism) and that there was a deep-rooted misogyny against women who speak of sexual violence and "prostitutes." Taking the lead, he provided materials and methodologies (guessing, leapfrogging, substitution, misinterpreting, etc.) to cast doubt on Kim Hak-soon's testimony and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ubsequent historical revisionists. In addition, historical revisionism disguised as feminism such as Ueno and Park Yu-ha and misogynistic historical revisionism such as Hata Ikuhiko are common in the continuation of colonialism, and the

fact that they influence each other cannot be overlooked.

Lastly but not least, even the denial theory of Kim Hak-soon's testimony by Hata Ikuhiko could not deny Kim Hak-soon's testimony about the reality and degree of sexual assault in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s or the appearance and role of the Japanese military.

References

上野千鶴子　1998 『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青土社

江原由美子 2020「「ミソジニー」って最近よく聞くけど、結局どういう意味ですか？」『現代ビジネス』2020.2.9付。https://gendai.ismedia.jp/articles/-/70296　2021/07/23閲覧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身隊研究会編、従軍慰安婦問題ウリヨソンネットワーク訳、1993　『証言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明石書店

金富子　2017「韓国の〈平和の少女像〉とポスト真実の政治学～日本の植民地主義 / 男性中心的な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を検討する～」(韓国語)『韓国女性学』33-3

―― 2020 「日本社会で「慰安婦」被害を「聴くこと」の不可能性と可能性」金富子/小野沢あかね『性暴力被害を聴く―「慰安婦」から現代の性搾取へ』岩波書店

金富子・金栄　2018『植民地遊廓―日本の軍隊と朝鮮半島』吉川弘文館

秦郁彦 1999『慰安婦と戦場の性』新潮社

朴裕河　2013=2014 『帝国の慰安婦』朝日新聞出版

The ‘History Wars’ by the Japanese Right-wing and the Ramseyer Issue

Tomomi Yamaguchi I Associate Professor, Montana State University, USA

The ‘History Wars’ by the Japanese Right-wing and the Ramseyer Issue

Tomomi Yamaguchi
Department of Sociology & Anthropology
Montana State University

Preface

- Looking at the "Ramseyer Incident" in relation to the right-wing in contemporary Japan and government-led "History Wars"
- December, 2020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IRLE, made available online)
- January 12, 2021 "Recovering the Truth about the Comfort Women." *Japan Forward* (English-language news and opinion site by *Sankei Shimbun*)

"History Wars" and its International messa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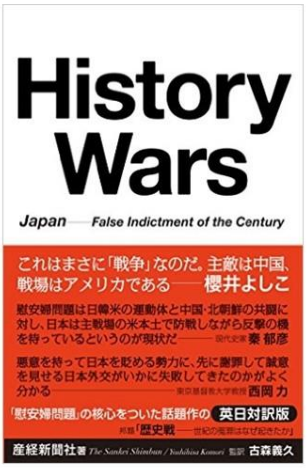
- **What is "History Wars"?**
  - Right wing Japanese movement denying its responsibility to address historical events pertaining to Japan's colonial history and war crime based on the claim that Japan is a victim of such "false indictment" by South Korea and China
  - The movement targeting the U.S., which the Japanese right-wing considers the "main battlefield"
- April 2014, the beginning of *Sankei Shimbun*'s new series entitled "The History Wars"
- Right wing groups and government, LDP use English to influ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its nationalist views around historical awareness and denials
- LDP's 2021 campaign policy focus on "strengthening strategic messaging through various means regarding History Wars and Territorial Sovereignty".

Sankei Shimbun's "The History Wars" (Collection of previous newspaper series)

Japanese Version (2014)



Bilingual version in English and Japanes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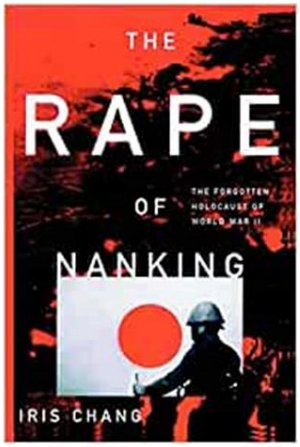
Revisionist History Movement and its expansion/emergence in English

Expansion of Revisionist Arguments

- 1995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Unbiased View of History (Jiyuu-Shugi-Shikan Kenkyuu-Kai)
- 1996 The establishment of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Atarashii Rekishi Kyōkasho o Tsukurukai)
- 1997 Japan Conference (Nippon Kaigi)
  - Merge between "Nihon wo mamoru Kokumin Kaigi" (National Conference to Defend Japan or National Conference to Protect Japan & "Nihon wo mamoru Kai"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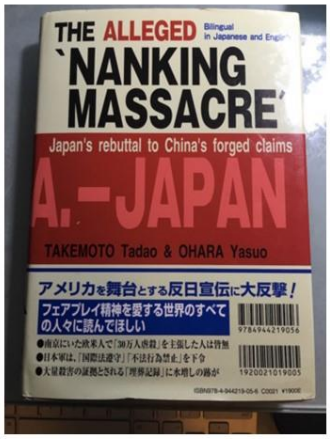
Revisionist History Movement and expansion/emergence in English
1. On Iris Chang's *The Rape of Nanking*,

- 1997 Chang, Iris's *The Rape of Nanking* published as a bestselling non-fiction book.
- Right-wing Japanese publish books and publications around the topic of Nanjing Massacre in English and English/Japanese bilingual versions.



Iris Chang, *The Rape of Nanking*, Basic Books, 1997

Expansion/emergence in English by the Japan Conference (Nippon Kai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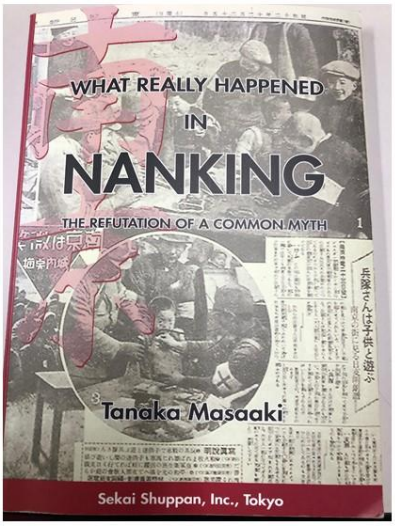


Japan Conference (Nippon Kaigi)
Takemoto Tadao, Ohara Yasuo

"The Alleged Nanking Massacre: Japan's Rebuttal to China's Forged Claims"
(Meisei-sha 2000)

Bilingual in English & Japanese

Expansion/emergence in English by Sekai Shuppan publications



- Japanese Homeschool material "Mangain" (1990～1997) published
- Tanaka Masaaki, *What Really Happened in Nanking: The Refutation of a Common Myth* (Sekai Shuppan, 2000)
  - English Version of Tanaka Masaaki's "What Really Happened in Nanking" (Kenkosha, 1987)
  - **2001, sent to a member of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AS)**
- Higashinakano Shūdō, *The Nanking Massacre, Fact versus Fiction* (Sekai Shuppan 2006)
  - English Version of *An Exhaustive Study of "Nanking Massacre"* (Tendensha, 1998)

Revisionist History Movement and expansion/emergence in English

2.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House Resolution 121

- July, 2007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House Resolution 121
  - A resolution which asks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formally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e "Comfort Women" issue
  - June,「Committee for Hisotiral Facts」(Koichi Sugiyama, Yoshiko Sakurai e.t.c.), publishes "The Facts", a paid advertisement in the Washington Post
- 2008, "Society for Dissemination of Historical Fact" established to publish English translations of Japanese revisionist materials online to "share the truth with the international audience"

  Online Mail sent to members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SS)


THE FACTS

FACT 1 FACT 2 FACT 3 FACT 4 FACT 5

Assertions

"The Facts"
***Washington Post*, June 14, 2008**

Revisionist History Movement and expansion/emergence in English
3. "History Wars" around "Comfort Women" Monuments and Statues



Palisades Park, NJ (2010)

- Currently 15 "comfort Women" memorials in North America (U.S., Canada)
- Since Spring, 2012, the Japanese government and right-wing groups demands for the removal of monument (First being the one in Palisades Park, New Jersey).

The Controversy over the "Comfort Women" Memorial in Palisades Park, NJ

- Pressure from the Japanese Consulate in New York and a visit from four Diet representatives from the LDP (Furuya Keiji, Yamatani Eriko, Takemoto Naokazu etc.) asking for the removal of the monument
- November 6, 2012 "Yes, we remember the facts", a paid advertisement published in *The Star-Ledger* (daily newspaper in NJ)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Yes, we remember the facts.

The purpose of this paid public comment is to present historical facts.

This is an objection advertisement of the "Do you remember?" ad which is currently being posted in Times square. (P.S. It was also posted on the New York Times in May this year as well)
We are here to convey the truth, based on actual historical facts and datas achieved as a result of years of research.

And before you move on, let us please introduce you a videoclip which we believe is indispensable to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is issue.

"Sex, Lies, and Comfort Women"
http://www.youtube.com/watch?v=iwv2qDJ57SY&

Fact 1

Fact 2

Unscrupulous Brokers Run Rampant

Abduction of Rural Women and Girls

Fact 3

Sadly, many women were made to suffered severe hardships during the wretched era during World War II, and it is with profound regret that we contemplate this tragic historical reality. At the same time, we must say that it is wrong to allow deliberate distortion of reality to conceal that the Japanese army was guilty of "coercing young women into sexual slavery" in "one of the largest cases of human trafficking in the 20th century," as the Japan-hosting 30,000 tanks during the war were Japanese women, as detailed in an academic paper by historian Yoshiko Hata.

We are interested, foremost, in sharing the truth with the American public. Criticism for events that actually occurred must be humbly and sincerely accepted, and we believe that any attempt at denial or fabrication of history will not only harm the fair and a balanced justice within the society, but also destabilize the Japan-U.S ties and friendship. We ask only that the Facts be objectively regarded so that we may share a correct perception of history.

Assentors

Shigeharu Aoyama | Yoshiko Sakurai | Koichi Sugiyama | Kohyo Yoshimura | Nobuaktsu Fujioka



The Statue of Peace in Glendale Central Park, Glendale, California
July, 2013

The Glendale Statue of Peace and stride in the "History Wars"

- July, 2013 *Ianfu no Shinjitsu Kokumin Undō* (the People's Campaign for the Truth about Comfort Women) founded
- October, *Sankei*'s LA branch established (closes in 2018)
- February, 2014 Global Alliance for Historical Truth (GAHT) established and files a lawsuit in federal court against the City of Glendale (later in the California state court)
- April, *Sankei Shimbun*'s series, "The History Wars" start
- February, 2017 the Government of Japan files an amicus curiae brief to the U.S. Supreme Court in February 2017 in support of GAHT's petition. March, GAHT's petition to the U.S. Supreme Court is denied.

The Japanese Government's "Strategic Messaging Overs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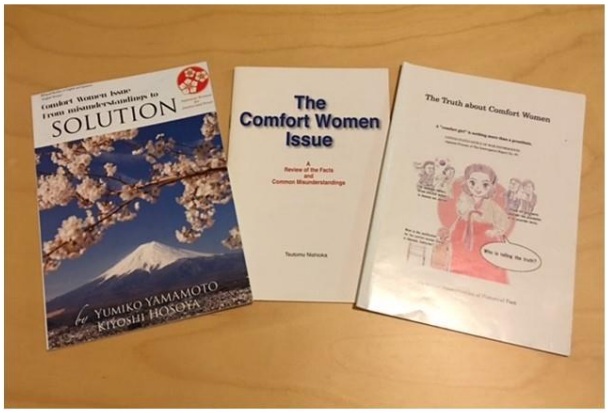
- Since 2015, the Japanese Government's "Strategic Messaging Overseas" budget increases by 50 billion ye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 "Japan House" established as the base for international messaging (compromised as 3 hubs: Los Angeles, London and Sao Paulo)
    - Seeks to "foster awareness for Japan's position on territorial and historical awareness"
  - Promotion of "Pro-Japanese Group" & Japan-gurus

- 2018, Government of Japan awards the Order of the Rising Sun to Ramseyer to recognize his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Japanese studies in the U.S. and the promotion of understanding of Japanese society and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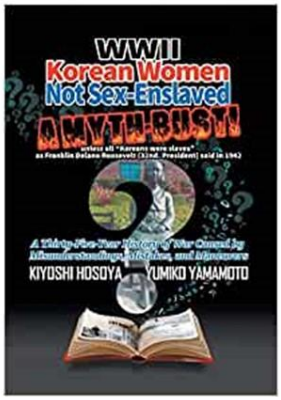


Japan House, Los Ange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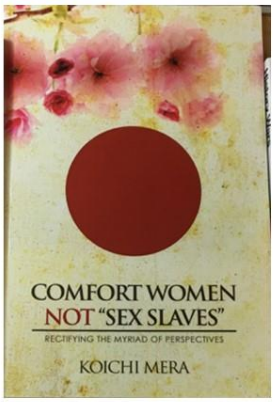
Mailing of English Pamphlets and Self-published Books



Left : Pamphlet by Yamamoto Yumiko, Hosoya Kiyoshi
Middle: Article by Nishioka Tsutomu, pamphlet published by the Japan Policy Institute
Right: Pamphlet published by the "Society for the Dissemination of Historical Fact"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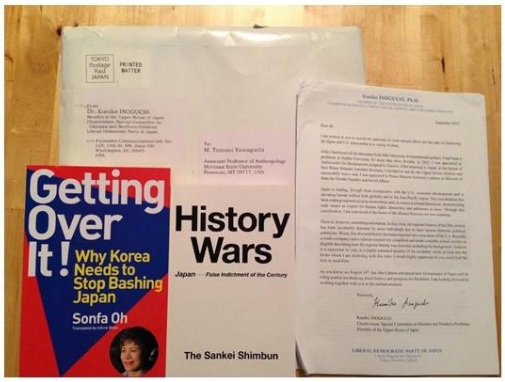


Yamamoto Yumiko, Hosoya Kiyoshi self-published book



Mera Koichi Self-published Book

Publications mailed by MP Inoguchi Kuniko



- 2015, MP Inoguchi Kuniko (LDP) mails revisionist books and articles to scholars in the U.S. and Australia
  - Eng/JP Bilingual version of *Sankei*'s "The History Wars" series
  - Oh Seon-hwa (Gojenka) *Getting Over It! Why Korea Needs To Stop Bashing Japan* (Tachibana Publishing, 2015), English Version of "Why There is No Future for Anti-Japanese Korea" (Shogakukan, 2013)
    - Imai Mitsuo, Chairman at Cultural, Moral, History and Education Research Society (subsidiary of Fuji Corp. Ltd.) sends grant/ in 2015, sends 3,000 copies to American politicians, researchers, libraires, etc.
- Minister of Justice Kawai Katsuyuki (then) circulates historical revisionist books to key important figures/VIPs in the U.S.

Event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Film Screening

- April, 2015, screening of Taniyama Yujiro's film, "Scottsboro Girls" at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organized by the university's Japanese teacher.
- GAHT's Mera Koichi etc. and Jason Morgan (current associate professor at Reitaku University) who was at the time a university student, joins director, Taniyama for the screening



Photographed by Emi Koyama

Event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Lectures

- 2017, GAHT plans to hold an exchange meeting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in Tokyo with students from Univ of California, Berkeley but is suspended.
- 2019, “Society for the Dissemination of Historical Facts” sends 100 copies of “Comfort Women” pamphlets as educational/class material to Montana State University

100 copies mailed to Yamaguchi by the “Society for the Dissemination of Historical Facts”





Prbolem for the Right-Wing : Lack of Academic Books & Pap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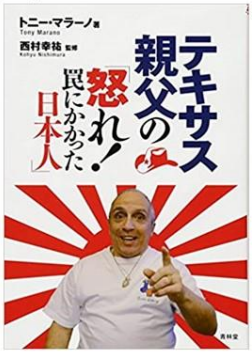
- Problem for the Right Wing
  - Lack of academic papers or peer-reviewed papers in favour of their perspective/stance
  - No scholars who can send across their message in English, especially to the English-speaking world

→Therefore their claims are not credible?

White men as mouthpiece for right-wing Japan's messaging

- Tony Marano ("Texas Daddy") Youtuber
- Michael Yon Writer
- Kent Gilbert Comment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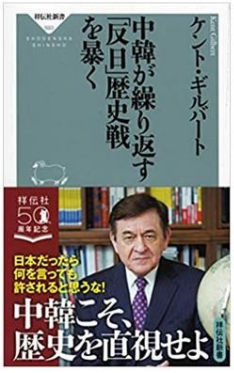
→ Influencing within Japan and the general public



Tony Marano

Michael Y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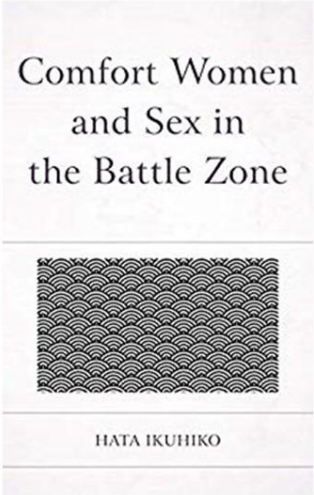
Kent Gilbert

Publication by Hamilton Books

- Books by Henry Scott Stokes or Mera Koichi
- Hata Ikuhiko. Trans. Jason Morgan. *Comfort Women and Sex in the Battle Zone*. 2018

(translated by Jason Morgan, associate professor at Reitaku University)

- "Japan Institute for National Fundamentals" (founded by President Sakurai Yoshiko in 2007) 2014, "Japan Study Award" established
  - 6th "Special Japan Study Award" given to *Comfort Women and Sex in the Battle Zone*



Sankei Shimbun & Japan Forward

- 2017, June, *JAPAN Forward* established by *Sankei Shimbun*.
  「A need to provide a space for sensible Japan-focused commentary on a host of issues」
- Messaging sent by scholars as authors
  - **Kevin Doak** (Professor, Georgetown University)
  - **Earl Kinmonth** (Taisho University, Prof. Emeritus)
  - **Jason Morgan** (Associate Prof, Reitaku University) author of『JAPAN Forward』
  - **Mark J. Ramseyer**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e.t.c.
- Articles related to Ramseyer's thesis are prominent in *Sankei*-affiliated media

(*Sankei Shimbun, JAPAN Forward, Yukan Fuji, Seiron* e.t.c.)

Approach through "Scholarship"

- September, 2016 "Historical Awareness Research Committee" founded (Shiro Takahashi as President).
  (June, 2021, present, Tsutomu Nishioka as President and Shiro Takahashi, Michio Esaki, Jason Morgan as Vice President)
  Others such as "Japanese Civilization" Research Forum, a research group based at Reitaku University led by Ramseyer is established

- 2018, Alliance for Truth about "Comfort Women" established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ontroversial Histories" (iRICH) (Seishiro Sugihara as President) executive office in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Right-wing groups and Ramseyer's Academic Paper

- 「Historical Awareness Research Committee」
  - statements published by right-wing scholars like Tsutomu Nishioka
- 「Society for Dissemination of Historical Fact」
  - Advocacy articles are posted online and advertised through electronic magazines
-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CH sends out a large number of animated videos commentating Ramseyer's paper featuring Ramseyer as an animated character.
-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ontroversial Histories iRICH」
  - April 24th, hosts an urgent symposium「International history debate around Ramseyer's paper」in defense of the "comfort women" denial paper written by Ramseyer. Ramseyer sends a pre-recorded video.
  - June 3rd, iRICH hosts an open Q&A for the Japan Academic Conference
- Ramseyer approaches Japanese right-wing groups.

Reaction of Right-Wing Politicians and Governments

- Messaging from right-wing members of the LDP including Yamada Hiroshi and Aoyama Shigeharu. Yamada and Aoyama even mention the work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In his March 1st blog post, Aoyama urges people to send support messages to Ramseyer.
- March 22nd, Arimura Haruko,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lors in the Diet of Japan (LDP) asks for details/update regarding the Ramseyer paper among questions on the "Comfort Women" issue at the Education Committee of the House of Councilors
  - Foreign Ministry's Asian and Oceanian Affairs Office Councilor : "Unilateral demand to withdraw academic papers published after peer-evalution" and "I am aware of the concerns being raised about academic freedom."
  - Hagiuda Koichi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ers conducting research at its own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and expressing/sharing their results freely should be respected."

"History Wars" and the Ramseyer issue

- Ramseyer, who has the credibility/authority as a Harvard professor is an academic who can become the spokesman/ frontman for the international audience for the right-wing
- The "peer-reviewed" paper that the right-wing has been waiting for
- Ramseyer incident was only possible and expanded due to the pre-existing "History Wars"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right wing

Now What? What can we exp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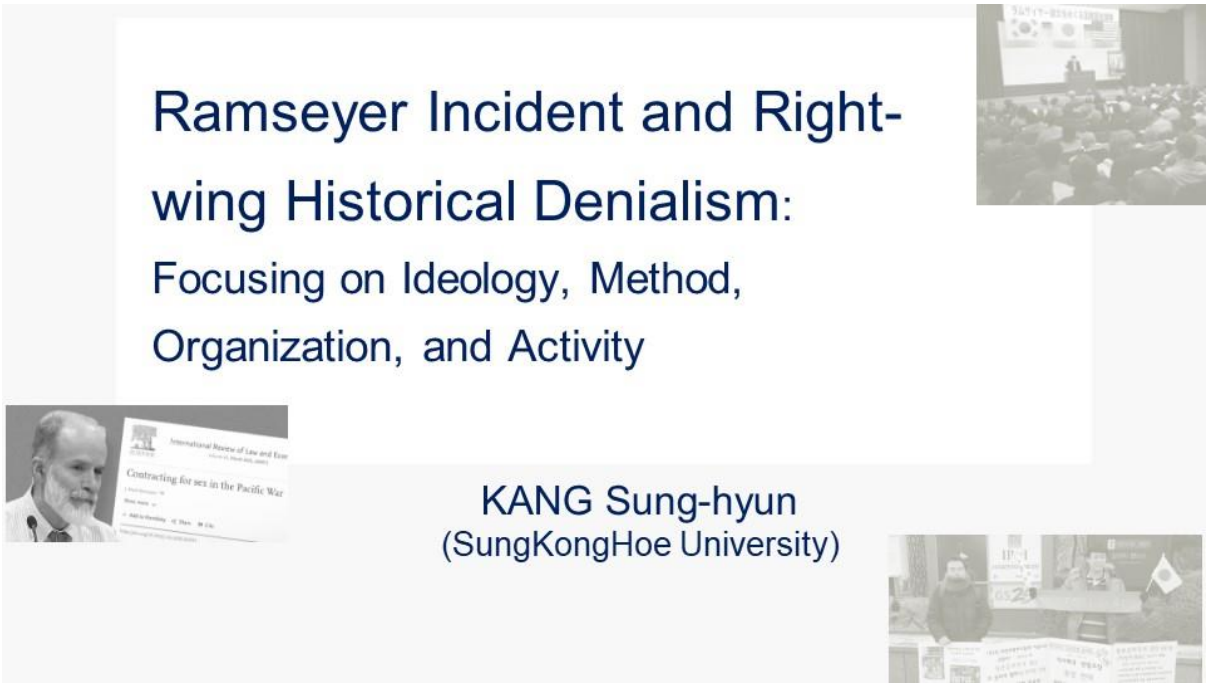
- What will be the conclusion/result of IRLE?
- Improved/Deepening relationship between Ramseyer and the Japanese Right-wing?
  - Arima Tetsuo『'All of the "comfort women" had a consensual contract - the shock of Harvard Professor RAmseyer's thesis』(WAC July, 2021)
  - Ramseyer writes a Foreword to Arima's Book
    - Ramseyer's claim that he was attacked unilaterally
    - Arima-san: "Ramseyer's fight is ours. Our fight is Ramseyer's."
    - The publishing company is WAC (a publication that publishes many right-wing books such as magazine『WiLL』)



Session 3. Backlash of Historical Denialism

‘Ramseyer Incident’ and Right-Wing Historical Denialism: Focusing on Ideology, Method, Organization, and Activity

KANG Sung-hyun I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Table

1. Introduction
2. Ideology: Right-wing historical denialism and post-truth anti-intellectualism
3. Method: positivism, distortion, and misappropriation by denialism
4. Right-wing historical denialist organization and activities

I Introduction

◈ Beginning of “Ramseyer crisis”

- Sankei report



– 2021.1.28 Sankei reported「Denying the ‘comfort women’=sexual slave’ theory widely known to the world, Professor J. Mark Ramseyer of Havard University published a journal article」
– 2021.1.31 Sankei published Professor FUKUI Yoshitaka (Aoyama Gakuin Univ.)’s commentary on Ramseyer’s article.
– Historical denialists appear in Ramseyer’s acknowledgments.
– Ramseyer’s article summary + FUKUI Yoshitaka commentary -> Sankei’s ready-made plan to downgrade “comfort women=sexual slave” into one of many theories using authority of Harvard University

◈ Beginning of “Ramseyer crisis”


オピニオン
ハーバード大 J・マーク・ラムザイヤー教授が学術論文
「慰安婦＝性奴隷」説否定
The 考
女性と売春宿の思惑一致
「太平洋戦争における性サービスの契約」
問題は朝鮮の募集業者に

2021.1. 31 Sankei

◈ Beginning of “Ramseyer crisis”

- Crisis spreads to Korea



– From 2021.2.1. Korean press spilled out reports that highlighted “Havard University professor” and “‘comfort women’ were not sex slaves but prostitutes.”

◈ Beginning of “Ramseyer crisis”

- Spread and battle of crisis



– The civil society and academia held academic conference and released critical statements on Ramseyer based on “academic integrity” and “sincerity of research.”

– KOR-USA-JPN historical denialists put forward “academic freedom” to save Ramseyer. They argued that the article was reviewed by an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and approved for publication -> which is a recognition of originality. They claimed that the paper achieved academic progress in the “comfort women” issue.

– IRLE changed its stance multiple times with release of ‘expression of concern’

◈ Beginning of "Ramseyer crisis"

- Why did Ramseyer?



  - Ramseyer suddenly started writing about burakumin, ethnic Koreans in Japan, Okinawans, and Japanese "comfort women" since 2017. Such topics are very rare in the English-speaking Law and Economics field, yet Ramseyer disguises neglect and hatred as academic progress.
  - Ramseyer says he "intentionally, but unwillingly" avoids racism because he is a professor in the U.S. (Harvard University), but rationaliz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burakumin, ethnic Koreans in Japan, Okinawans has more "room for free speech".

Research questions

- Why did Ramseyer disguise and provoke historical denialists' conventional arguments in the field of Law and Economics since 2017? Which personnel, references, fund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have been supporting denialist and hatred-based articles?
- What are the ideologies and methods,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KOR-USA-JPN's historical denialism as seen through the "Ramseyer crisis"?

II

Ideology: Right-wing historical denialism and post-truth anti-intellectualism

◈ Ramseyer's suspicious acknowledgment

- Jason Morgan



- Jason Morgan, MIWA Yoshiro, and FUKUI Yoshitaka are mentioned continuously 4,5 times in Ramseyer's 7 publications after 2017.
- Jason Morgan was supported by **Japan Alliance for Truth about Comfort Women,** a right-wing historical denialist group since graduate school and promoted right-wing history wars.
- Before receiving his Ph.D in 2016 a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in modern Japanese law history, he was involved in historical denialism in Japan and USA.
- Morgan published books that align with Japanese historical denialist perspectives since 2016.

◈ Ramseyer's suspicious acknowledgment

- Jason Morgan



– According to him,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was a communist and Japan is on the side of justice because it fought a war with the United States to punish communism during World War II.

– He believes U.S. academia is being handled by extreme leftists, is not objective, is seized in post-modernism emotivism and anti-intellectualism about Japanese 'comfort women' issue.

◈ Ramseyer's suspicious acknowledgment

- Jason Morgan



– Morgan is a senior researcher at **Japan Forum for Strategic Studies (JFSS)**, a right-wing think tank in Japan

– He translated HATA Ikuhiko's 1999 book to "Comfort Women Sex in the Battle Zone(2018)" with funding from JFSS

– He is a professor at Reitaku University and vice president of the Historical Awareness Research Committee, headed by NISHIOKA Tsutomu.

– Ramseyer-Morgan's exchange is part of historical denialism network. Ramseyer's argument, logic, and method are the products of the Korea-U.S.-Japan historical denialism network.

– This network views anti-Japan as a sinful act. It frames anti-Japan as communist, pro-North Korean leftists and glorifies Japanese imperialist history.

◈ Historical denialism with political intentions

- Three forms of denial(Stanley Cohen, 2009:58-62)



– Literal denial: denies the truth itself, as if the truth never happened.
– Interpretive denial: denies state violence or human rights violations by interpreting events in different ways. Acknowledges that the event happened, but argues that it must be interpreted in specific negative context.
– Implicatory denial: denies the political, psychological, and moral implications of events to people. Acknowledges that the event happened, but argues that it is not something to be cried over or is an urgent issue to be dealt with.

◈ Historical denialism with political intentions

- Historical denialism before/after Ramseyer

– Before Ramseyer, KOR-US-JPN historical denialists' political revisionism took place in pseudo-academic fields where they quoted each other. Such attempts were not reviewed based on academic integrity and sincerity research in a formal academic journal.
– Denialists published books and online lecture contents, which are marked by denial and hatred and distributed within their side. They spoke of discussion but were actually "shouting" one-sidedly to the other camp.
– Because of the Ramseyer article, historical denialism and hate speech are wrapped as an academic argument and published through SSCI-class international journals. Academic freedom and freedom of speech are disintegrating.

◈ Post-truth anti-intellectualism

– Post-truth is a phenomenon that drives public opinion with faith or emotion, regardless of the truth. Right-wing historical denialists claim to be based on facts and truth, but actually relativize or even dismantle the truth.

– In the era of post-truth, right-wing historical denialists become extremely anti-intellectualist. Anti-intellectualism is an attitude that is hostile to intelligence, knowledge, and expertise, and "a mental state or attitude that does not accept rational communication."

– Right-wing historical denialists claim that they aim for facts, but their aim is more of an obsession through which they are trapped in bias (Kang, 2019:35, 40). He thinks dichotomously based on his side, refuses to know about the outside, calls it fake, antagonizes and detests it.

◈ Post-truth anti-intellectualism

– Exposing fake ideas at the convergence of post-truth and anti-intellectualism or telling post-truth anti-intellectualist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they are “liars” does not enable one to swim out of the post-truth anti-intellectualist phenomenon, but rather catches them up deeper in such tendency.

– Right-wing historical denialists in reverse point their fingers at Japanese “comfort women” researchers, academia, and citizens who empathize with this issue as liars who are trapped in “anti-Japanese” sentiments, arguing that Koreans are liars and Korea has a lying culture. Right-wing historical denialists believe that they are empirical, modern, and truth-based, while depicting those who disagree with them as emotional, postmodern, false, and even anti-intellectualist. They further frame those who disagree with them as communists.

– “Korea's culture of lying is well known internationally..”(Lee, 2017:10)

◈ Post-truth anti-intellectualism

– The perspective of anti-intellectualism in a post-truth era leads us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for Ramseyer's publications since 2017. His writings abou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as well as his articles that demonstrate classist, racist hate towards marginalized groups such as burakumin, ethnic Koreans in Japan, Okinawans etc., and his distortions and errors on modern Korean history related with Japan are the cause and consequence of the intensified binary thought, bias, and hostility.
– Historical denialism is becoming a trend that will not be easily dispelled in the new media world of post-truth era and binary side-taking. This trend is expanding due to transnational networks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It would be difficult to fundamentally respond to this phenomenon/situation without targeting the network of historical denialism and hatred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that is looming beyond "academic integrity."

Ⅲ

Method: positivism, distortion, and misappropriation by denialism

◈ Positivism of denialism



- To historical denialists, "positivism is a method of summoning victims to artificially create the impression that their memories are inaccurate and politically distorted or manipulated."
- Historical denialists list statistics and figures in the shape of empirical scholarship and claim that their work is true, but omit data and distort facts through arbitrary distortion.
- In interpreting official documents, denialists do not critically analyze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the documents, but appropriate sentences and words needed for their own reasoning. They employ over-interpretation, generalization errors, and distortions.

◈ Misappropriation and distortion

- Extortion and misappropriation of victims' voices
  - Historical denialists do not recognize victims' testimonies as objective facts, but they appropriate some of the testimonies that suits their taste and interpret it arbitrarily, using the method of "misappropriating" victims' voices.
- "The louder voice wins"
  - Historical denialists ask if evidence exists, but that is not the central issue - it is a battle of framing. They cannot entirely prove their arguments, so they claim that facts are not about proving but about persuading. They argue that "it is advantageous to speak up, even if the words are sophistry, to speak up, and to assert oneself in a more convincing way."

◈ Ramseyer employs all of these methods



- Critics poured in pointing out that Ramseyer's key argument (Brothel owners and women[“comfort women”] signed "indentured contracts" based on “credible commitment," and after reasonable calculations to maximize their own interests, women were able to gain high profits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and could freely leave) lacked supporting evidence, the primary data was misappropriated and distorted to fit his intentions, and citation methods were inaccurate and dishonest.
- Specifically, critics pointed out that he was not able to present any sample contracts for Korean women who were taken to licensed prostitution or comfort stations, that he had misappropriated and distorted works that tried to indirectly prove contracts against the context and intentions of the original author, distorted victims’ testimonies, misappropriated and misinterpreted select parts of U.S. military documents.

◈ Ramseyer employs all of these methods



- In his paper, Ramseyer puts the blame on the brothel owners and victims’ parents, citing job fraud, parental abuse and exploitation of prepayments. He even claimed that women could know that recruiters and brothel owners could lie, and “did not defer quietly to abusive parents.” In doing so, he is shifting the blame to the victims and evading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military.
- Ramseyer misappropriated and distorted Moon Ok-joo's testimony, extorting her voice. Above all, he did not read the book on her testimony, but rather cited the Korea Institute of History (KIH), which, unlike its grand name, is an anonymous online blog filled with historical denialism and hatred.

Summary

- Historical denialists' ideology and methods are represented in Ramseyer's publications in their typical format and content.
- The reason for examining underlying political intentions and backgrounds, rather than limiting the incident to an issue of academic integrity, is clear. Unlike before, if Ramseyer is an inflection point, the claim of historical denialism was made in a SSCI-class academic paper in the U.S., passed the peer review without problem and was published in the online edition. This is directly related to the background and reasons for Korean and Japanese right-wing historical denialists' campaign to "save Ramseyer."

IV

Organization and activities: History wars and saving Ramseyer

◈ Japan ultra-right's history war



▪ Japan Alliance for Truth about Comfort Women



– Japan Alliance for Truth about Comfort Women was established in July 29, 2013. The president is KASE Hideaki (diplomatic critic) who is advisor of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and a representative member of the "Japan Conference," and is known to be a key figure in Japanese far-right groups.

– Japan Alliance for Truth about Comfort Women is a network organization of ultra-right groups that call for retraction of Kono statement, campaigns against establishment of 'Statue of Peace' in the U.S., which has become a battlefield, interferes with the registra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aterials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 It supports English speakers who speak on behalf of Japanese right-wing, such as YouTuber Tony Marano, lawyer Kent Gilbert, journalist Henry Stokes, writer Michael Yon, and Jason Morgan.

◈ Japan ultra-right's history war

なでしこアクション Japanese Women for Justice and Peace
正しい歴史を次世代に繋ぐネットワーク 「慰安婦＝性奴隷」のウソに終止符を！

▪ History war waged in collaboration with government and civic groups









◈ Japan ultra-right's history war



- Historical Awareness Research Committee



- HARC was established on October 1, 2016
- President NISHIOKA Tsutomu, Vice President TAKAHASHI Shiro, Jason Morgan (all from Reitaku University), EZAKI Michio (critic)
- HARC systematically conducts research, collects data, fosters researchers, promotes foreign languages, suggests policies for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against anti-Japanese for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HARC issues『Historical Awareness Studies』twice a year. The inaugural issue was released on September 2017 and volume 8 was issued on March 2021
- It introduced the author and claims of『Anti-Japanese Tribalism』.

◈ Japan ultra-right's history war

- NISHIOKA Tsutomu



- His books『Faked, Forced Labor Issue without Forced Laborers』,『Behind the Comfort Women Controversy: How Lies Became Truth』has been introduced in Korea, translated by LEE Woo-yeon and Mediawatch publishing.
- He actively contributes to Media Watch, a far-right online press
-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Reitaku University and head of The Institute of Moralogy's history research lab (changed to history research project in 2021)
- His activities at the history research lab and the activities of the historical awareness research committee are interconnected.

◈ Japan ultra-right's history war

- The Institute of Moralogy



– One notable project of the Institute's history lab is the Japanese Civilization Research Forum (CEO NISHIOKA Tsutomu)
– Ramseyer, Jason Morgan, and Kevin M. Doak are foreign executives of the forum.
– Kevin Doak is professor of Japanese and Nippon Foundation Endowed Chair at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at Georgetown University.
– This forum organizes right-wing historical denialists in the U.S. and Japan. It held a special research meeting in July 2019 with Ramseyer and Doak.

◈ Japan ultra-right's history war

– The history war, wag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civic groups in collaboration, headed to the main battlefields, U.S. and UN. Diplomatic pressure and judicial complaints were inflicted to interfere with the installation of Statues of Peace and textbook description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Groups were mobilized under the pretense of "citizens' public opinion." Systematic organizing has been put into propagating and spreading historical denialist claims and such arguments also infiltrated American universities and academia.
– Academic research and educational support through Moralogy Foundation and Institute of Moralogy, as well as government public diplomacy budgets and corporate donations, encouraged the reproduction and expansion of right-wing history denialist claims and methods. It fueled international exchanges and activities of anti-communist, anti-Korean, and anti-American historical denialists who thinks anti-Japan is a sin.

◈ Japan ultra-right's history war

– The relationship between Jason Morgan, an American who shows anti-U.S. and pro-Japanese sentiments and a professor at Reitaku University, and Ramseyer,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 symbolically shows this.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also confirmed in Sankei's English newspaper 'Japan Forward'. They idolize historical denialist views and appropriate and distort data that fits their beliefs.
–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was fully predicted that after the "Ramseyer crisis" on February 2021,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HARC would send an open letter in support of Ramseyer to the editors of IRLE. The letter even remarked that Ramseyer's article is "an eminently scholarly effort rooted in a remarkable breadth of source material—a great achievement deserving of praise, not censure."

◈ Korean historical denialism and spread of hatred

▪ Spread of "Anti-Japanese tribalism"





– In July 2019, 『Anti-Japanese tribalism』 was published. Right-wing historical denialist network between Korea and Japan intensified in quality and volume.
– In May 2020, the backlash of historical denial and hatred took place, targeting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YOON Mee-hyang, and LEE Yong-soo. The Korean "New Light" and history denialism organized in light of 『Fight with Anti-Japanese tribalism』 which was published aiming at May 16 (Military coup d'état by Park Chung-hee).
– New Light and others "used" LEE Yong-soo's press conference (5.7, 5.25) to create "YOON Mee-hyang incident" and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ncident," and the divisive backlash against this led to "LEE Yong-soo incident."

◈ Korean historical denialism and spread of hatred

▪ Spread of “Anti-Japanese tribalism”



– The language, logic, and methods of "anti-Japanese tribalism" are reproduced in far-right fake news media reporting this situation as well as in the frames and numerous mass-produced articles of conservative daily newspapers.

– " In order to satisfy their sense of fairness and keep their jobs,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had abandoned their for professional work,” held demonstrations and framed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s “saint of the nation.” They became a “totalitarian power that no one could stand against.”(Lee, 2019:337-338)

◈ Korean historical denialism and spread of hatred

▪ Spread of ‘Anti-Japanese tribalism’



– Korean conservative media articles were released simultaneously in Japan via online in Japanese.

– Japan's far-right conservative media did not limit the situation to the problems of YOON Mee-hyang,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LEE Yong-soo. They used the situation as factual resource to deny the 30 year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 The Korean conservative media reported such stance through international correspondents, disguising denial and hatred into truth



◈ Korean historical denialism and spread of hatred

- Anti-Japan Statue Investigation Committee



4th, 9th 'comfort women' statue anti-protest

- Organized on December 2, 2019. Author of Anti-Japanese tribalism LEE Woo-yeon, JOO dong-sik (Editor of The third road), CHOI Duk-hyo (Korea human rights news rep.), KIM So-yeon (Dae-jeon city councilor) established the organization to react to charges for libel and damages by artists of 'forced-labor statue', Kim Seo-gyeong and Kim Woon-seong.
- 2020.1.1, right next to the Statue of Peace, where the Wednesday protests are held, they held the 4th 'comfort women' statue anti-protest and argued to "stop the Wednesday protests" and "rip down the Statue of Peace".
- Right-wing New Media (YouTuber, etc.) and New Light Right-wing historical denialist group, which has come out pro-Japanese and pro-American in their pursuits of anti-Moon, anti-North Korea, and anti-China.

◈ Korean historical denialism and spread of hatred

- Anti-Japan Statue Investigation Committee



- 2020.5.12 23rd anti-'comfort women' statue protest. Korean new light historical revisionists said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are unforgivable organizations that revealed the humiliation of 'comfort women' history."
- They mention 'human rights' of the survivors while ridiculing and insulting the victims. This is ventriloquism, which is a vicious use of the victims.
- In front of the Statue of Peace where Wednesday demonstrations happen, they pour out denial and hate speech acts about 'comfort women' victims as well as arguments about pro-Japanese patriotism, country selling Moon jae-in.

◈ Korean historical denialism and spread of hatred

▪ Rhee Syngman school & Rhee Syngman TV





– 2021.6.7. Rhee Syngman school was established, 6.15 Rhee Syngman TV started its activities. **Against anti-Japan tribalism** lecture series and **truth about Japanese 'comfort women'** lecture series, which promote historical denial and hate content, have been uploaded.

– 8 lectures from 2021.2.10 - 4.7 about Ramseyer incident

– Japanese subtitled lectures(for Japanese people) have 1.5-2 times more viewers than those in Korean.

– Rhee Syngman TV is one of the main channels through which Korea-Japan historical denialists stand in solidarity.



(above) truth about Japanese 'comfort women' lecture series
(left) Against anti-Japan tribalism lecture series

◈ Korean historical denialism and spread of hatred



▪ Research Institute on History Textbook



– On March 12, 2018, Research Institute on History Textbook was established as an adjunct institution to Freedom News (CEO KIM Ki-soo) with KIM Byung-hun, who appeared as a new figure in right-wing textbook movement, as the leader

– KIM Byung-hun, co-representative of Anti-Japan Statue Truth Finding Organization, was the first to hold a 'comfort women' law abolition protest on April 28, 2020 and found a sister-organization called Civic Action for 'Comfort Women' Law Abolition on October 4. From November 2, he held consecutive rallies against Professor HOSAKA Yuji (Sejong University).

◈ Korean historical denialism and spread of hat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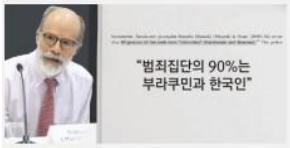


"Comfort women" victim law abolition protest in front of Statue of Peace(2020.4.28) - KIM Byeong-hyun

◈ Saving Ramseyer

- The value and meaning of Ramseyer.





– He is a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who can pass peer reviews in international journals by framing articles that were written for denials, denialist positivism, and hatred-oriented perspectives as scholarship.

– He cannot be cmpared with mercenaries who are explicitly funded by Japanese far-right historical denialists such as American speakers "Texas Daddy" Tony Marano (YouTuber) and Kent Gilbert (Lawyer).

– Ramseyer's work demonstration that he has been involved in the spread of historical denialism as a "scholarship student" supported by "Soft Power."

◈ Saving Ramseyer

- KOR-JPN historical denialists' reaction



– On February 6, 2021, NISHIOKA Tsutomu released statement

– On February 8, six Japanese right-wing professors sent an open letter to editor-in-chief of IRLE.

– On Februrary 9, Jung Jung-jae, Kim Dae-ho, Joo Dong-sik, Han Min-ho, Lee Young-hoon, Ryu Seok-chun, Jung An-ki, Lee Woo-yeon, Kim Byung-hun, Choi Deok-hyo, Hwang Won-won, Kim Ki-soo, Lee Dong-hwan and Kim So-yeon issued a statement. These are people involved in Anti-Japan Statue Truth Finding Organization and author of Anti-Japanese Tribalism.

◈ Saving Ramseyer

▪ KOR-JPN historical denialists' reaction

– Korean historical denialists wrote a joint statement on February 9, 2021 titled "Harvard University professor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papers as opportunity of a full-fledged debate on the issue!"

– They only deem conspiracy theory on The Korean Council, and works of PARK Yoo-ha, LEE Young-hoon, and LEW Seok-choon as academic. They also claim that the media and activist groups, which are full of anti-Japanese tribalism, and the judiciary, who are sympathetic to it, are inflicting harm to them. They argue that above all, Ramseyer's paper was published in an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approved for publication after peer review, and recognized for its originality, but outside forces unrelated to academia are interfering with academic discussions. This is a counter-academic absurdity reminiscent of the Cultural Revolution (Lee Young-hoon's repertoire)

– Thee essence of Ramseyer saving is staging this kind of fight.

◈ Saving Ramseyer

▪ KOR-JPN historical denialists' re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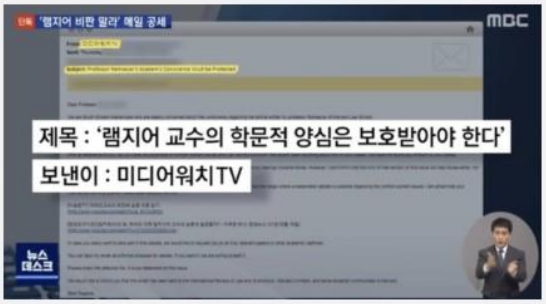
– At this time, history denialists boldly argued that Ramseyer's article has been recognized by international scholars and experts and will be validated through academic discussions over time, as criticism from international scholars, especially Japanese history researchers, had not surfaced yet.

– However, with the massive criticism, Korean historical denialists are disconcerted as seen in Rhee Syngman TV video.

◈ Saving Ramseyer

- KOR-JPN historical denialists' reaction





– On February 14, HWANG Wi-won (CEO of Media Watch, co-president of Anti-Japan Statue Investigation Committee), sent an e-mail to Harvard University professors.

◈ Saving Ramseyer

- KOR-JPN historical denialists' reaction











◈ Saving Ramseyer

- Ramseyer's counter-attack





– Ramseyer sent a message to a symposium held on April 24, 2021 by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ontroversial Histories and Nadesiko Action, right-wing historical corranization in Japan.(Topic: The international historical conroversy over professor Ramseyer's article)
– He claimed that "with total disregard for the concept of academic freedom, they [young scholars] act like would-be scholar-assassins, and seem to take pride in doing so"
– Ramseyer sent a threatening e-mail to Professor Lee Jin-hee on May 5 mentioning "violent attack" and "serious defamation."

THANK YOU

Analysis of Difficulties in Statue of Peace Establishment in Germany and Proposal for Futur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RA Yu-shin I Lecturer, GPB College & Member, the Korea Verband, Germany

Introduction

After Kim Hak-soon's testimony on August 14 1991,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gains a huge momentum. The subsequent testimonies by the victims revealed the truth that could not be resolved by legal regulations, political relations, and academic theories, and gained public sympathy. The victims' accusations eventually led to the adoption of the Coomaraswamy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in 1996 and the McDougall report by the UN Human Rights Subcommittee in 1998. As observed from such cas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ared a common viewpoint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 and sexual violence in armed conflict against women that the "comfort women" case revealed, and in 2018, the 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ecommended Japan to take a victim-centered approach, taking steps in line with the victim's perception.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exists a very different real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is the conflict ov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of Peace abroad. In many citie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Washington, and in Germany, such as Berlin, there had to be a long tug-of-war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until the statue was established. In not a few cases, the authorities did not approve the establishment itself or it was finally rejected in public places. Why is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not welcomed even though it is a symbol of the universal values of fighting against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l sympathizes with? In such reality, what strategies should the "comfort women" movement take? This paper aims to answer such question.

Difficulties in Statue of Peace Establishment – Freiburg and Berlin

There is no doubt that Japan's opposition is the biggest reason why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of Peace is not welcom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each area where the Statue of Peace is established, such as Glendale, San Francisco, and Washington, Japan has actively challenged the community at both government and private levels, which has actually exerted considerable influence. For example, the city of San Francisco had to make sacrifices to end its 60-year partnership with the city of Osaka in exchange for the establishment of Statue of Peace. Every time there were attempts to establish the Statue of Peace in Germany, there were challenges. It is surprising to see that Germany, which has developed a sense of human rights and is referred to as an exemplary example in liquidating the past, seems to be supporting Japan at a distance from Korea. Above all, the fact that Japan and Germany have close friendship in political, economic and historical aspects is largely responsible for this. Both countries are increasing their co-op as "Value-partner (Wertepartner)" for security in Indian-Pacific.[1] Based on this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Japan is aggressively preven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of Peace at the state and private level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find out if there are any other reasons to oppose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of Peace in the region other than the direct cause of Japan's deterrence. The exploration of this question will help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tter judge the view of the Statue of Peace, which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of Peace in the future. Below, we will focus on the two cases of Freiburg and Berlin in Germany.

In 2016, Freiburg City and Suwon City signed a sisterhood relationship, and Mayor Dieter Salomon of Freiburg, a member of the Green Party, readily accepted Suwon Mayor's proposal to present the Statue of Peace. However, Japan found out later and said that if the Statue of Peace was established in Freiburg, they would end the sisterhood relationship between Freiburg and Matsuyama. The Mayor of Freiburg rejected the Statue of Peace, which eventually failed to step on the city of Freiburg.

Mayor Salomon decided to reject the statue in September 2016, saying he had made

[1] German Foreign Office website, April 13 2021. "Japan: Wertepartner im indopazifischen Raum Veröffentlichungsdatum" https://www.bmvg.de/de/aktuelles/japan-wertepartner-indopazifik-5054598

mistakes and misunderstood the culture ("Kulturelles Missverständnis"). This doesn't mean he didn't know what the Statue of Peace meant. He saw the statue when he visited Korea in March 2016, and said in a personal letter to Suwon City that he is "willing to accept the proposal to establish the Statue of Peace, a symbol of freedom and especially for eradic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2] German media reports also confirm that Mayor Salomon knew about the meaning of the Statue of Peace. Mayor Salomon thought it would be fine to establish the Statue of Pease in Freiburg because he knew about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and understood it as an apology from Japan. He didn't think there would be any problem honoring the victims of wartime sexual violence, especially given the German memory culture.[3]

Then what "mistake" did he make? The mistake he referred to was that he thought the Statue of Peace was a symbol of universal value, but did not know that there was another purpose, namely, to pressure Japan externally.[4] He said he thought the Statue of Peace was only a memorial to the victim, but he didn't think it had an aspect that accused the perpetrator. Because of this, he even felt as if he had been used by (instrumentalisiert) Korea.[5]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Mayor's position, he was in favor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of Peace from a humanitarian point of view, but unintentionally became one with Korea and was involved in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and was belatedly warned by Japan. In other words, he agreed to the universal value of the Statue of Peace, not to press Japan, but found himself in a position to press Japan without

---

[2] Segye Ilbo, "자유의 상징 ,소녀상' 독일에 세우겠다" September 6 2016. https://www.sedaily.com/NewsVIew/1L1AU1LV1X

[3] *Badische Zeitung*, September 23 2016. "Bronzefigur löst diplomatischen Ärger mit Japan aus" https://www.badische-zeitung.de/bronzefigur-loest-diplomatischen-aerger-mit-japan-aus--127585959.html

[4] *Badische Zeitung*, September 24 2016. "Salomon sieht Statuen-Streit als "kulturelles Missverständnis" https://www.badische-zeitung.de/freiburg/ob-salomon-ueber-den-wirbel-den-eine-statue-ausgeloest-hat

[5] *Badische Zeitung*, September 23 2016. "Bronzefigur löst diplomatischen Ärger mit Japan aus" https://www.badische-zeitung.de/bronzefigur-loest-diplomatischen-aerger-mit-japan-aus--127585959.html; *taz*, October 5 2016, "Keine Erinnerung an "Trostfrauen"," https://taz.de/Kriegsverbrechen-Denkmal-in-Freiburg/!5341049/

In an interview, Mayor Salomon described that it was "misused (missbraucht)" (*Badische Zeitung*, September 24 2016"Salomon sieht Statuen-Streit als "kulturelles Missverständnis" https://www.badische-zeitung.de/freiburg/ob-salomon-ueber-den-wirbel-den-eine-statue-ausgeloest-hat)

even realizing it. Stuttgarter Zeitung analyzed that Mayor Yeom Tae-young was a little "tricky." The paper assumed that Mayer Yeom was aware of the fact that the Statue of Peace was a "double-sided coin" since the Mayor worked previously as a human rights activist, and knew that there was a movement after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to pressure Japan on an international level.[6]

Taz, one of Germany's leading daily newspapers, also diagnosed the Statue of Peace as a means of putting moral pressure on Japan, saying that Suwon City used the sisterhood relationship as a means of putting pressure on Japan.[7] Zöllner, a professor of Japanese studies at Bonn University, op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Freiburg Statue of Peace, saying that it had the meaning of a moral conviction against Japan.[8]

In short, the Mayor of Freiburg's view was that he was unaware of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comfort women" issue, symbolized as the Statue of Peace, in two countries and only thought of liquidation of Germany's past, which led to a cultural misunderstanding and made a mistake in being unaware of the pressure Statue of Peace has on Japan. On top of that, Korea presented the Statue of Peace that clearly would lead to controversies.

Similar situations were initially developed du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Berlin Statue of Peace. The Berlin Statue of Peace was installed at the entrance of an alley in Mitte, Berlin on September 28, 2020. The Korea Verband, an NGO group,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to the related Commission on City, Architecture, and Arts (Kommission Kunst im Stadtraum/Kunst am Bau).The next day, on September 29, Japan demanded the removal of the Statue of Peace at the federal and state levels. On October 7, two district officials visited the Korea Verband to deliver a letter of withdrawal of the permission to establish the Statue of Peace and ordered it to be

---

[6] *Stuttgarter-zeitung*, October 3 2016, "OB opfert Trostfrau für Japan," https://www.stuttgarter-zeitung.de/inhalt.freiburger-partnerschaften-ob-opfert-trostfrau-fuer-japan.51c9a970-2c78-486d-beff-681ecc2ea086.html

[7] *taz*, October 5 2016, "Keine Erinnerung an "Trostfrauen"," https://taz.de/Kriegsverbrechen-Denkmal-in-Freiburg/!5341049/

[8] *DW*, September 21 2016, "Freiburg und die Trostfrau," https://www.dw.com/de/freiburg-und-die-trostfrau/a-19563885 Zöllner changed his position to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Statue of Peace, after the Satue of Peace exhibition in Japan. (*Mainichi*, April 11 2021, "少女像はドイツで受け入れられたのか 疑問の先に 見えてきたもの" https://mainichi.jp/premier/politics/articles/20210329/pol/00m/010/006000c)

removed at their own expense by October 14. According to the Taz report, the official letter contains an expression that gives the impression that the "Korea Verband deceived the district office."[9] According to the official letter, the Korea Verband did not notify the government of the inscription, which is likely to be a problem, and as a result put a serious strain on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Germany and Japan. The problem raised was that wartime sexual violence was committed by Germany and has been practiced in various regions to date, but only Japan was mentioned in the inscription of Statue of Peace, which was "aiming at Japanese politics from a South Korean perspective." The argument is that contrary to the expectation that the Statue of Peace inscription will describe "violent conflict regardless of the time, place, and motive," it focused solely on Japan and opposed Japan. They also refused to unilaterally "instrumentalize (Instrumentalisierung)" public places to oppose Japan using the Statue of Pease, stressing that Berlin-Japan relations are very tight.[10]

In response, the Korea Verband claimed that it has never caused confusion to the government office, saying it clearly stated that Japan would oppose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in the application form submitted to the relevant department.[11] Also, if the inscription is so important to the district office, the Korea Verband asked them why they did not want to see it in advance.[12] The Korea Verband countered the district office's criticism that they should have been aware of the Statue of Peace is about crimes committed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as the same inscription was in the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13]

In fact, the Korea Verband's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of Peace stated that the statue is aimed at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wartime sexual violence

---

[9] *taz*, October 8 2020, "Berlin-Mitte kuscht vor Tokio" https://taz.de/Gedenken-an-Trostfrauen/!5719024/

[10] Widerruf der Ausnahmegenehmigung vom 06.07.2020 zum Aufstellen von Gegenständen, hier: "Die Friedensstatue," in der Bremer Str./Ecke Birkenstr. in Berlin-Mitte (07.10.2020)

[11] *Berliner Woche*, October 16 2020, "Statue kann vorerst bleiben" https://www.berliner-woche.de/moabit/c-politik/statue-kann-vorerst-bleiben_a290347

[12] *taz*, October 8 2020, "Berlin-Mitte kuscht vor Tokio" https://taz.de/Gedenken-an-Trostfrauen/!5719024/

[13] *Berliner Woche*, October 16 2020, "Statue kann vorerst bleiben" https://www.berliner-woche.de/moabit/c-politik/statue-kann-vorerst-bleiben_a290347

and promoting victims' demands for reparations and apology from the perpetrators.[14] It also devoted a separate explanation to the expected opposition from Japan. In the end, Mitte District Mayor von Dassel apologized by sending a letter to the Korea Verband on March 30 2021, that he did not intend to give any impression that there was non-transparency during the Korea Verband's application for the statue.[15] However, the issue of inscription remains open to controversy. This will be explained again below.

The inscription was also problematized with the Wiesent Statue of Peace. In March 2017, the Statue of Peace was erected in a Nepal Himalaya Pavillon in Wiesent, a town outside Regensburg. Originally, the Statue of Peace was to be accompanied by an inscription contain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future direction, and meaning of the statue. However, after strong protests from the Japanese side, only the Statue of Peace was erected without an inscription.[16] In this way, the Statue of Peace remains only one of the exotic sculptures for those who lack political and historical context and who do not know the context.

There is room for debate whether the Mayor of Freiburg is telling the truth and whether his feeling is justified. According to Korean media reports, he was warned in advance that Japan would interfer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and Salomon replied that he would sternly deal with it.[17] There are also opinions that as a Mayor, he should have learned more about Korea and Japan's historical background in advanc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erlin Statue of Peace, it can be pointed out that even though the Korea Verband warned of Japan's response in advance and included its aim to demand Japan's apology in the application, the district office responded with complacency and even proceeded to give an implication that the Korea Verband went through non-

[14] Korea Verband application for special use for art in urban space (Antrag auf Sondernutzung für Kunst im Stadtraum)

[15] Letter from Mitte District Mayor von Dassel to Korea Verband representative Han Jung-hwa, March 3 2021

[16] Yonhap News, April 20 2018, "독일 여성박물관에 '평화의 소녀상' 세운다…유럽서 두번째" https://www.yna.co.kr/view/AKR20180430063800371

[17] "Mayor Yeom delivered that 'there were organized interference from Japan against establishment of Statue of Peace across the world including U.S. and Australia' to the Mayor of Freiburg. The Freiburg Mayor showed his firm determination not to be afraid of opposition or pressure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or rightwing organizations." (JoongAng Daily, September 5 2016, "獨 프라이부르크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염태영 수원시장 제안" https://news.joins.com/article/205505511)

transparent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But as discussed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ocus more on looking at what logic is being developed locally around the Statue of Peace than criticism of Germany's way of responding.

Discussions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of Peace.

First, what can be seen in the two cases above is that the purpose of the Statue of Peace is recognized separately into two. One i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wartim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other is to urge Japan to apologize and make reparations, which is recognized as diplomatic pressure on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this purpose, which is not separated in principle, is recognized separately overseas. However, this separation occurred with Japan's involvement, and until Japan raised the issue, the above two purposes of the statue were not recognized as separate. Especially in German society, which was relatively successful in liquidating the past, there was no sense of problem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tatue commemorating the crimes committed during World War II and the particular perpetrator being revealed there. This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including the above cases, attempts to establish the Statue of Peace and to hold exhibitions in other parts of Germany did not encounter opposition until the Japanese side raised the issue.[18] However, with Japan's opposition, the perception that the Statue of Peace is an object that does not match its nominal and practical purpose is born. And a certain logic unfolds: when the Statue of Peace is considered to represent the universal value of opposition to wartime sexual violence, there is no problem; if it intends to pressure Japan externally, it becomes not acceptable.

What is the problem when the Statue of Peace is a means of pressuring Japan? The first answer to this question, of course, – Japan's perspective – should be put in parentheses here and focus on the logic of the German perspectiv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tself is not a problem for the Germans. The Mayor Salomon pointed out that "'comfort women" history is not "such as Internet conspiracy theories," and that Japan apologized

[18] *Korea.net*, August 16 2019, "Die Friedensstatuen in Deutschland" https://german.korea.net/NewsFocus/HonoraryReporters/view?articleId=174302

and constructed a compensation fund.[19] In short, in his point of view, Japan has admitted their wrongdoings. He also concluded throughout the incident that little progress in clearing up the dark past of Japanese society was made. Nevertheless, he believes that Germany cannot intervene as a third country in the way Japan liquidates its past. This is a matter that Japan must learn on its own. Berlin Mitte district does not question the historical facts of "comfort women." The reason why Mitte district takes issue with the inscription is because the inscription contains Japan's criminal facts (only). They are not necessarily in opposi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tatue to oppose wartime sexual violence. However, if Germany recognizes the Statue of Peace as a means of pressuring Japan, but allows it, it will be in a position to consider the issue of diplomatic neutrality as a third country. In response, Mladenova of the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at Leipzig University pointed out that Germany is diplomatically becoming another battleground for the "history war" between Korea and Japan, and notice the logic of maintaining neutrality in opposi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Berlin statue. According to this logic, relations between countries can only involve the parties in order to respect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so the intervention of a third-party Germany in the Korea-Japan issue is diplomatically undesirable, and Germany must abide by the non-intervention principle. In this regard, the fact that statues such as the Statue of Peace are placed on the streets close to the administration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eutrality and opposing Japan at the national level.[20]

Zöllner was also in this position until recently. He op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when controversy arose over the Statue of Peace in Freiburg, arguing that building the Statue of Peace would be standing by South Korea's side at a time when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has not ended.[21] The Berlin Mitte District Mayor also said in a city notice that the inscriptions on "Statue of Peace" and "Statue of Peace" deal with

---

[19] *Stuttgarter-zeitung*, October 3 2016, "OB opfert Trostfrau für Japan," https://www.stuttgarter-zeitung.de/inhalt.freiburger-partnerschaften-ob-opfert-trostfrau-fuer-japan.51c9a970-2c78-486d-beff-681ecc2ea086.html

[20] Mladenova, Dorothea (2020): Was bedeutet es eigentlich, dass in Berlin eine Friedensstatue in Form einer "Trostfrau" aufgestellt wurde? (https://japanologie.gko.uni-leipzig.de/news/was-bedeutet-es-eigentlich-dass-in-berlin-eine-friedensstatue-in-form-einer-trostfrau-aufgestellt-wurde/)

[21] *DW*, September 21 2016, "Freiburg und die Trostfrau," https://www.dw.com/de/freiburg-und-die-trostfrau/a-19563885

burdensome and complex political and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is is not a good topic for Germany's past liquidation, and will not be taking a specific side on this issue.[22]

Wagner, who has long served as an Asian correspondent at Spiegel and published books on Japan, says he understands the German authorities' position that they do not want to get involved in sensitive diplomatic and political issues in other countries.[23] However, he points out that when authorities gave permission, they should have kept in mind that they would be involved diplomatically from the beginning. He argues that we shouldn't try to solve the problem by removing the Statue of Peace, because it became "troublesome."

Zöllner points out another problem that arises when the Statue of Peace is perceived as a means of putting moral pressure on Japan. He called attention to why the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was rejected in Strathfield, Australia, and said that the Statue of Peace was a "national slur on the Japanese people," which is unacceptable for a society to maintain peace.[24] Von Dassel, Berlin Mitte District Mayor, also made remarks to the effect that the presence of the Statue of Peace could jeopardize the peaceful coexistence of people of various nationalities.[25]

It can be summarized that if Germany approves the Statue of Peace at the government level, it will officially side with Korea in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will undermine neutrality as a third country and support its critical stance on Japan, which is why it is opposed to the Statue of Peace. Also, the Statue of Peace includes the criticism of Japan, which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eaceful coexistence of multicultural communities. Korea has been working on constructing overseas Statue of Peace to

---

[22] Bezirksamt Mitte hebt Genehmigung für "Friedensstatue" auf. Pressemitteilung Nr. 363/2020 vom 08.10.2020(https://www.berlin.de/ba-mitte/aktuelles/pressemitteilungen/2020/pressemitteilung.1001656.php)

[23] *Tagesspiegel*, October 31 2020, "Deutschland ist die Erinnerung an Japans Sexsklavinnen nur lästig"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berlin-tokio-und-der-streit-ueber-das-trostfrauen-denkmal-deutschland-ist-die-erinnerung-an-japans-sexsklavinnen-nur-laestig/26575642.html

[24] *DW*, September 21 2016, "Freiburg und die Trostfrau," https://www.dw.com/de/freiburg-und-die-trostfrau/a-19563885

[25] Bezirksamt Mitte hebt Genehmigung für "Friedensstatue" auf. Pressemitteilung Nr. 363/2020 vom 08.10.2020 (https://www.berlin.de/ba-mitte/aktuelles/pressemitteilungen/2020/pressemitteilung.1001656.php)

pressure Japan in resolving the "comfort women" issue. However, following Germany's logic, the "comfort women" issue must be resolved before Statue of Peace can be established overseas.

In this paper, we will not discuss whether not authoriz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of Peace for is to preserve Germany's neutrality as a third country or whether the Statue of Peace really harms the peaceful coexistence of multicultural communities. However, I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the behind-the-scenes situation of withdrawing the establishment permit for the Berlin Statue of Peace. After the decision to remove the Statue of Peace was made public in Berlin, the Tagesspiegel asked if the Berlin City government had been involved in the removal of the statue in Mitte District, and the city said it was up to the district office. However, Tagesspiegel found out that after the statue was erected in Berlin, the Berlin City, Japanese Embassy and Mitte District had discussed it.[26] According to the media, Zimmer, a protocol officer in Berlin, thanked Mitte in a letter to the Mayor of Mitte District that "welcomed" Mitte District's decision to withdraw the permission to install the Statue of Peace and inscription. He noted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is very sensitive in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and Berlin and Tokyo, furthermore Berlin and Japan's relationship is likely to be endangered by this issue." Pointing out that South Korea and Japan reached a "final and irreversible" agreement on the issue in 2015, he also commented that it is crucial for East Asian Security and the German Federation to play a role in the East Asian region despite its burdensome past history. He said German Foreign Office feels the same way, adding, "We will be able to find another way to deal with the important issue of wartime sexual violence in an appropriate way."

On the other hand, in addition to urging Japan to apologize, the Statue of Peace also has a universal meaning against wartime sexual violence, and there are many positions in Germany that view the statue from this perspective. Mladenova also points out that more and more people are paying attention to the rights of women and the meaning of human

[26] *Tagesspiegel*, October 25 2020, Senatskanzlei drängte auf Abbau der Berliner "Friedensstatue" https://www.tagesspiegel.de/berlin/verantwortung-fuer-die-sicherheitslage-in-ostasien-senatskanzlei-draengte-auf-abbau-der-berliner-friedensstatue/26305734.html

rights that the Statue of Peace is about.[27]

This is also confirmed by the Berlin District Council. The District Council i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district residents and may give recommendations to the District Office, although it is not a voting institution. The resolution to maintain the Mitte District Statue of Peace for 1 year was first proposed by the Pirate Party and voted in November 2020 with 27 votes in favor and 9 votes against it. The approval came from the Social Democratic Party, the Left Party, the Green Party and the Pirate Party, while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Party an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voted against it. Council cited the fact that the "Statue of Peace contributes productively to the past liquidation and debate of wartime sexual violence" as the reason for its resolution. However,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aid it voted in favor of the Korea Verband's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of Peace because the contents of the inscription were not fixed. The Left Party demanded the permanent retention of the Statue of Peace. However, the Left Party also saw the need to supplement the inscription on Japan's crimes, as the Statue of Peace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Party said it opposes the installation of the Statue of Peace because it is a matter of two countrie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called for the removal of the inscription, although the Statue of Peace is fine. It also argued that only then the Statue of Peace can be accepted by the wider public. There were also objections to Berlin's possible involvement in diplomatic difficulties. A Liberal Democratic Party lawmaker also said the Statue of Peace has a good meaning, but it is a tool used as a diplomatic tool in conflict with other countries.[28]

The Statue of Peace was once again put on the agenda in the District Council by the motion of the Left Party in December, this time to decide on its permanent retention. At the meeting, the resolution was passed by a vote of 24 in favor and 5 against. The Left Party, who suggested the agenda, argued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is a historical fact that Japan admitted themselves, and will function as a catalyst for discussion on

---

[27] Mladnova, Dorothea (2020), Was bedeutet es eigentlich, dass in Berlin eine Friedensstatue in Form einer "Trostfrau" aufgestellt wurde? In: https://japanologie.gko.uni-leipzig.de/news/was-bedeutet-es-eigentlich-dass-in-berlin-eine-friedensstatue-in-form-einer-trostfrau-aufgestellt-wurde/

[28] *taz*, November 6 2020, "BVV für Trostfrauenstatue"https://taz.de/Streit-um-Mahnmal-in-Berlin/!5723468/

wartime and daily sexual violence, and thus must remain in Berlin.[29] In addition to the Left Party, the Green Party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y voted in favor of the statue.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Party finally voted against the inscription, arguing that wartime sexual violence is a crime in many countries, and it is not right to focus only on the examples of Korea and Japan. In addition,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Party also expressed its opinion that the Statue of Peace has nothing to do with Berlin. Instead of opposing the Statue of Peac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proposed to build a new statue on the theme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time. An independent lawmaker voted in favor of the Statue of Peace, pointing out that Germany and Japan were allies during World War II. As a result, the three parties, who voted in favor of the Statue of Peace, agreed that the statue should be refined under consultation with the Korea Verband. It is interpreted that the inscription of the statue can be modified or supplemented.

Considering the above, it can be seen that the Statue of Peace is thought separately in two contexts: a context that symbolizes universal value and a context related to the history of Korea and Japan. The proposition and opposi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e of Peace differ depending on which side is seen as more important. It is confirmed that the majority do not disagree with the installation of the Statue of Peace when evaluated only by the former perspective. In addition, some show reserved attitudes appear when pointing to Japan as the perpetrator. Some also view the statue as irrelevant to Berlin, as they limit the Statue of Peace to Korean and Japanese issue.

Suggestion fo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movement in the future.

Japan's acts to stop the Statue of Peace continues regardles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surprising and worrisome that such pressure from Japan could actually change local administrative decisions overnight. What is more worrisome, however, is that Japan's protests and pressures result in shaking the status of universal values held by the Statue of Peace. Regardless of the authenticity of the content, Japan's protest has the effect of

[29] BVV proposal from the Left Party in Berlin Mitte, October 26 2020, "Friedensstatue bewahren – Gedenken an Opfer sexualisierter Gewalt ermöglichen" https://www.linksfraktion-berlin-mitte.de/drucksachen/detail/news/friedensstatue-bewahren-gedenken-an-opfer-sexualisierter-gewalt-ermoeglichen/

stealing the universality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from the Statue of Peace and highlighting the context of political and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result, a perception is formed that the Statue of Peace may appear to promote universal value, but in fact is a means to win the fight against Japan, and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is no longer an issue of justice, truth, and moral values, but a regional conflict based on national pride. Not a small amount of media are unwittingly using thi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such frame. For example, a reporter from a liberal media Taz also compar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o that of Israel Tel Aviv and Iran's Isfahan.[30] It only considered the conflict, not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In this light, the Statue of Peace is not a moral issue on liquidation of the past, but only in the context of political issues. It is natural that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y Germany should intervene in other countries' political affairs. This is why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Party considered that the Statue of Peace had nothing to do with Berlin, and not a few Germans questioned what it had to do with Germany.

How should we respond to this? So far, Korea's main "strategy" has emphasized the universal value of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sexual violence in wartime, and it is true that the Statue of Peace needs to be established in Berlin because of the sexual violence in Germany and other countries. But this logic on its own does not respond to the suggestion to make a statue with more universal and global context], which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suggested.[31] In addition, there is no justification to oppose the logic of removing inscription so that Japan does not appear on the surface. Mayor von Dassel said that he expects a monument commemorating the victims of wartime sexual violence that

[30] *taz* October 5 2016, "Keine Erinnerung an "Trostfrauen"," https://taz.de/Kriegsverbrechen-Denkmal-in-Freiburg/!5341049/ Meanwhile, Berthold Seliger criticized that the expression "conflict between Korean and Japan" itself is problematic, and emphasized that it is not a mere conflict but a conflict rising from war crimes (Junge Welt, Nr. 241, October 15 2020, p.3).

[31] Another example is in 2018, when a women's museum in Bonn's plans to exhibit Statue of Peace was interfered by pressure from Japan and another statue against wartime sexual violence was exhibited instead of Statue of Peace. (Süddeutsche Zeitung, August 13 2019, "Japanische Reflexe" https://www.sueddeutsche.de/kultur/kriegsverbrechen-japanische-reflexe-1.4562767)

contributes to the liquidation of German history, not limited to Korea and Japan.[32] In the face of such wish, what kind of answer should the Statue of Peace give? How can the Statue of Peace persuade the legitimacy of its existence when it tries to stand the way it is?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urpose of the Statue of Pea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currently stated on the Korea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website, the purpose of the Statue of Peace is to stop sexual violence and prevent recurrence, and its imagery expresses "anger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s avoidance of responsibility." In this regard, the main purpose of the Statue of Peace is the universal value of stopping sexual violence and preventing recurrence in wartime. Nevertheless, it is true tha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overshadowed by the shadow of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despite the Korean side's emphasis that the Statue of Peace is not anti-Japanese. Above all, the "comfort women" issue is yet to be resolved and Japan repeatedly interferes with the movement. Thus the claim that the purpose of Statue of Peace is to promote universal value cannot be accepted plainly.

In this regard, it is worth considering the idea of placing the inscription on the Statue of Peace in a more general context by supplementing it. This is because it is not just an opinion that came out under pressure from Japan. All the lawmakers who expressed their opinion in the District Council are in a position to criticize the city of Berlin for "kneeling down to Japan's pressure." Such people agreed to maintain the Statue of Peace permanently but also agreed that inscription needs to be "refined." This can be interpreted as suggesting that the statue can be better settled in other cultures with such a supplemen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highlight more strongly the Statue of Peace's context against the historical revisionism. Fortunately, there are critical positions in Germany that note and criticize Japan's historical revisionist attempts. Some argue that Japan is not the only country that committed wartime sexual violence and thus the Statue of Peace can be replaced with another statue. According to Werthmann, a district lawmaker of the Green Party, the Statue of Peace contains a message that it is not only wartime sexual violence

[32] News von Dassel -Dezember 2020, In: Newsletter des Bezirksbürgermeisters von Mitte. (https://www.berlin.de/ba-mitte/politik-und-verwaltung/bezirksamt/stephan-von-dassel/newsletter/newsletter.1029898.php)

but also a criticism of historical revisionism. However, this view is not often seen in German medi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form that the Statue of Peace has a meaning against historical revisionism. Germany has experience in responding to historical revisionist challenges such as Holocaust negativity, so it will be easy to understand historical revisionist attempts. Even this may lose its light in the face of the cold logic of power, but no one will be able to deny the legitimacy of the Statue of Peace.

Finally, it is necessary to place the statue in the context of post-colonialism. Surprisingly, many Germans know that Japan initiated the war, but don't know that it also had colonies. For instance, a student who attended a demonstration in Berlin to mark the 1,500th Wednesday Demonstration confessed that s/he had never known such a fact before. Interest in post-colonialism is growing in Germany. In 2018, the coalition government of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Party/Christian Social Union Party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igned an agreement to liquidate the colonial past, and recently decided to return some of the collections from the colonial past to their homeland with the opening of the national museum, Humboldt Forum. In fact, not many European countries have seriously considered colonialism as an object of past liquidation. According to American philosopher Neiman, only 19 percent of the British think there is something to apologize for in British imperialism.[33] Germany, however, has promised to apologize and compensate for the genocide in its colonies, and became the first to do so from the Western society. This year, Germany and the Namibian delegation concluded a six-year long investigation into the genocide on the Namibian and Herero tribes living in Namibia. But this agreement exposes many limitations. It turns out that some of the victims of the Namas and Hereros were excluded from the negotiations and that Germany limited its apologies and compensation to mor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drawing a line that it was not legally responsible.[34]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topic of colonialism is drawing public attention across all societies.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ongoing debate in academia over whether the Holocaust

[33] DIE ZEIT, Nr. 22/2021, May 7 2021, "Ignoranz aus Scham von Susan Neiman," https://www.zeit.de/2021/22/von-den-deutschen-lernen-susan-neiman-vergangenheitsaufarbeitung-antisemitismus

[34] DW, May 28 2021, "Deutschland erkennt Kolonialverbrechen in Namibia als Völkermord an" https://www.dw.com/de/deutschland-erkennt-kolonialverbrechen-in-namibia-als-v%C3%B6lkermord-an/a-57695319

can be compared to colonialism. There are conflicting views that the Holocaust is a unique event that cannot be compared to other historical events, such as colonialism,[35] and that it is in line with colonialism and Genocide in other regions,[36] and that violence that Europe has committed to other races before that.[37] The latter believes that memory culture in Germany is only focused on Holocaust criticism, but brutal anti-humanitarian acts in the colonies should also be subject to memory culture.

In such backgrounds, the Statue of Peace needs to highlight the context of women victims of colonialism. It should induce a change of perspective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 a structure called post-colonialism, not just a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ultimately to protect life, human rights, and peace that Germany declares the Holocaust as a crime against humanity that cannot be compared to anything else and introduces the concept of liquidation of the past so that such crimes do not occur again. This historical consciousness should be extended and applied not only to anti-Semitism criticism but also to the history of anti-racism and anti-colonialism. With the Statue of Peace, symboliz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can also be recognized from that point of view. Liquidating the anti-humanitarian past is a matter of civil society members as well as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concerned,[38] and furthermore, it is a matter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ay attention to. Germany's definition of Holocaust criticism will be achieved when it tries to correct its anti-humanitarian activities, oppression and exploitation of other peoples and races, not just because history only in Germany is set right. Moreover, the Korea'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should appeal that it aims for such goals as well.

---

[35] There are researchers such as Götz Aly, Volkhard Knigge, and more who hold such view.

[36] There are researchers such as Dirk Moses, Jürgen Zimmerer, Felix Axster, and more who hold such view.

[37] Michael Rothberg (2009): Multidirektionale Erinnerung: Holocaustgedenken im Zeitalter der Dekolonisierung, Berlin: Metropol, 2021.

[38] Social Democratic Party press release on October 12 2020, "SPD Mitte fordert den Erhalt und eine transparente Diskussion über die Friedenstatue in Moabit" https://www.spd-berlin-mitte.de/meldungen/wir-fordern-den-erhalt-und-eine-transparente-diskussion-ueber-die-friedensstatue-in-moabit/

Session 4. Future Directions and Agenda for the Resolu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estimony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urvivors in the Processes of Legal Mobilization

BAEK Jae-ye I PhD Stud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USA

On April 21, the 15th Civil Chamber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Min Seong-cheol) dismissed the second damages lawsu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ond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brought by a group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is decision is contradictory to a similar case ruled by the 34th Civil Chamber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rst lawsuit) on January 8, in which the court order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compensate the plaintiffs, 12 "comfort women" victims including late Bae Chun-hee who passed away since filing the suit. As domestic courts give mixed rulings on these cases, Korean judiciary systems and procedures have disappointed victims once again and failed to seek legal justice in resolv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fter Kim Hak-soon's first exposur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1991, civic groups from around the world have acted to restore the right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through various social movements including Wednesday Demonstration, building statues and peace monuments, and social welfare projects. In particular,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hereinafter the 2000 Tribunal) was made possible through a joint effort from the victims, activist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international legal experts in order to establish responsibility for criminal acts related to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to put an end to the history of impunity that failed to punish responsible individuals. In addition to the global level of support, several lawsuits were filed in Japan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demanding for its apology and reparation for the victims. Unfortunately, these attempts have been largely neglected. And after their disappointing experiences with the limitations of the Japanese judicial system,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civil societies, decided to file two

lawsuits in Korea in the 2010s in order to realize legal justice through the Korean judicial system. These two lawsuits were a part of, and the result of, various efforts by civil activists who aimed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comfort women" issue through the discovery of the victims' testimonies and supporting documents.

And the mixed rulings from the Korean judicial system on the first and the second lawsuits demonstrate both the role and the limitations of legal mobilization, which is a means for social movements in utilizing judicial systems and procedures to address social issues. And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examine how the victims' testimonies are utilized in the process of legal mobilization. In particular, we will analyze the phenomenon of how the testimonies' dominance in discourse contexts is weakened during the process of legal implementation. Especially, this presentation will critically examine the ruling on the second lawsuit as the decision prioritizes implementing procedural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ver crimes committed by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leading to acquiescence and continuation of impunity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further obstructing restoring justice for the victims of the sexual slavery.

Legal Mobilization as a Social Movement

The Need for Legal Mobilization

The role of law as an instrument for social movements, while also serving as the goal itself,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For instance, in the case of social movement regarding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e involvement of law helped such movements in declaring the Japanese military's creation and operation of sexual slavery system as criminal activities while legally defining the victims' right to pursuit happiness and dignity. In addition, various legal systems of Japa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utilized to challenge the Japanese government's denial on its responsibility on the sexual slavery issue. Therefore, law and legal procedures act as means to justify a social movement through the conceptualization of demands in legal terms while also serving as a goal of a social movement that demands legal changes.

This presentation aims to utilize the concept of legal mobiliz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seeking legal justice, which is a part of the social movement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particular, this approach provides a number

of advantages in understanding various actions that emphasize the realization of legal justice. Firstly, the idea of legal mobilization can help us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diversifying roles of law, as a target and as a means, in various social movements. For instance, the social movement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s now beyond the point of holding regular Wednesday Demonstration, building peace monuments, and utilizing multilateral projects as it is now seeking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hrough legal actions on its military's international crimes. In this process,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which passively enabled the impunity on wartime sexual crimes for decades because they lacked statutes on such crimes, are often the target of reform themselves while being utilized as a means to express the victims' violated rights and in defining the Japanese military's atrocious acts as illegal acts to challenge the Japanese government's denial of its responsibility on the matter. Therefore, the concept of legal mobilizat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expand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issues through legal means, which traditionally depended on legal interpretations and decisions on the validity of lawsuits.

In addition, the concept of legal mobilization was created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ocial movements, and therefore it can effectively provide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yond simply capturing various actions involved in pursuit of legal justice. For example, the concept of legal mobilization will help us understand how various actions such as defining crimes and rights, selecting legal tools, participation of legal experts, and decisions of judicial authorities affect the course of the social movement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urthermore, legal mobilization allows us to better understand how the utilization of such legal system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ntext of fulfilling justice for the victims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Lastly, the idea of legal mobilization is a conceptual tool that allows us to more comprehensively view law and social movements, while also helping us understand how social movements can more effectively utilize law and what its limitations are. Legal mobilization is a concept developed to bridge the gap between legal studies and social studies. Specifically, it helps us understand law as a strategic means and as a productive power, which are concepts often neglected by legal studies, as well as an opportunity

structure that enables and shapes social movements, which is often neglected by social studies. Therefore, examining lawsuits regarding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these contexts will allows us to more comprehensively understand law as a social resource for social movements and, moreover, help us to establish plans to more efficiently and strategically utilize law in various stages of social movements.

And although the concept of legal mobilization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encompasses law and social movements, it often fails to give proper attention to various roles of different individual entities. In traditional legal studies. In response to traditional legal studies which emphasized the role of legal elites such as judges and lawyers, legal mobilization studies helped us broaden our understanding on how different actors of social movements are actively utilizing law, rather than being passive subjects of legal changes. However, they were unsuccessful at examin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various social movement entities in depth. In the case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movement, for instance, such studies view the movement itself as a unitary actor and thus, fails to grab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vement's internal dynamics and legal mobilization. Therefore,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take a step further from simply analyzing justice-seeking actions in resolv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rough the concept of legal mobilization and capture the significance of the victims' testimonies in the process of such actions.

The Birth of Legal Mobilization and Its Development

Academic interest in the dynamics between law and social movements has been increasing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ecame more complex and diverse. Early studies on such dynamics were largely from the field of legal studies. These studies mainly focused on trial cases and examined how legal elites, such as judges and lawyers, and their normative desire for social justice and their legal practices, as well as how they impact social changes. In contrast, socio-legal studies acknowledged how conventional legal norms tend to justify social hierarchy and focused on the dynamics between legal opinions and strategies that resist such hierarchy. This meant the beginning of the idea of social movement as an opportunity to actively utilize law, rather than as a passive subject of law's influence. Such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gradually converged into studies

that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ocial movements. In other words, more studies began to assume that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law and social movements are mutually influenced by each other and variable social contexts, rather than implicitly existing within legal systems (Cummings 2017; McCann 2006, 2017; Zemans 1983).

Such academic interest soon became an opportunity for the birth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legal mobilization. More social studies, particularly interpretivist studies, utilized the concept of legal mobilization in analyzing various practices, such as legal naming, blaming, and framing, as they began to focus on how language and symbols impact the formation of meanings in society (McCann 1994, 2017). This meant an expansion of the meaning behind entities and practices of legal mobilization, as opposed to positivist approaches that only examined the direct and immediate influence of individual and/or explicit rules or policies. In this context, Boutcher and Chua argued that the study of legal mobilization should include various activities related to social movements as well as legal utilization in lobbying, policy making, and legal enforcement processes, rather than solely focusing on legal litigations (Boutcher & Chua, 2018). More recently, Lehoucq and Taylor criticized traditional legal mobilization studies' lack of concrete conceptualization and theorization on specific actions, goals, and means referred in legal mobilization, and proposed a more specific definition of legal mobilization as "an act of utilizing the law through the use of 'explicit' and 'conscious' utilization of formal institutional tools (Lehoucq & Taylor, 2000, 168)." This definition, in the context of actions and objectives that constitute legal mobilization, includes not only litigations but also the use of administrative and related judicial processes. For instance, this approach views the use of national welfare/administrative systems to claim one's rights, as well as filing civil complaints at various levels of national institutions through the use of ombudsman, and civic groups' submission of legal opinions as acts of legal mobiliz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such definition is distinctive from unconscious or implicit legal consciousness, which allows the provision of significance to an event or the utilization of established institutional tools, or legal framing that provides explicit and conscious significance to an event without utilizing established institutional tools. Therefore, this definition can be viewed as a demand to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ocial movements with more defined legal systems and commonalities when implementing the concept of legal

mobilization. Hence, this presentation aims to analyze the two lawsuits in the context of social movement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ith Lehocuq and Taylor's perspective that the concept legal mobilization does not only pertain to lawsuits in mind.

Three main points can be found in general when examining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ocial movements through the concept of legal mobilization. First, legal mobilization can positively influence the early stages of a social movement, such as planning the movement and setting the direction of reform (Boutcher and Chua 2018; McCann 1994). In particular, some studies emphasize that legal mobilization allows the change of legal consciousness of related entities through the use of legal language and symbol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legal rights, and through future cooperation with other social movements. However, they acknowledge legal mobilization's limitations in legal enforcement and implementation, which demonstrate the power of established legal entities. This is a controversial topic as there are researchers who view the existence of social movement lawyers as a major contributor to the result of a social movement based on the view that such lawyers are related to the social movement's context and independency (Levitsky 2006), while some believe that their existence is not a decisive factor as their roles are already included in the planning stage of a social movement (Cummings and NeJamie 2010). Lastly, recent studies began to expand the idea of utilizing legal mobilization into international law. These studies focus on various layers of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demonstrated by social activists who do not simply accept discussions on rights but are active entities who demand justice from bottom-up, develop discourses on justice, and construct such discourses (Lemaitre and Sandvik 2015; Vanhala 2011). With the help of these studies, this presentation aims to analyze the role and the limitations of utilizing legal mobilization in resolv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rom Individual Totality to Collective Specificity: Testimony as a Starting Point of Social Movements through Legal Mobilization

Kim Hak-soon's testimony in 1991 signaled the end of a half-a-century-old silence. In particular, it was significant in that the victim-survivor broke the long silence herself, which had long stained both Korean and Japanese society even after Korea's independence, to

tell the world about her life and suffering in her own voice. The victim-survivors revealed the totality of their lives, formed by the abnormal experience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rough their testimonies. And their testimonies allow u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fficial documents,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ese men who operated the sexual slavery, fail to capture though. Obviously, the process of testimony cannot be regarded as an accurate reenactment of actual experience (Kim Dong-shik, Han Hye-in 2017; Yang Su-jo 2009; Yang Hyunah 2001; Yoshiko Nozaki & Kim Jeong-bun 2015). As Yang (2001) points out, the victims' testimony should not be regarded as completely identical to what the victims actually experienced, but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duct of the influence of social norms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m at the time of the testimony. Nevertheless, the victims' testimonies becam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movement as they revealed specifics of the collective experienc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rough reproduction of unique individual contexts and experiences that cannot be unified.

The first step of legal mobilization in the social movement for resolv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was legal naming of its damage through legal language. This was a process of defining concrete criminal activities in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rough testimonies, which are the sum of various experiences and contexts. For instance, the case of Gong Jeong-yeop[39] who testified "They told us if we go to Japan, if we go to a silk factory there, silk weaving easily makes a lot of money and that we could live comfortably and travel, and if we sent our money to our parents back in Korea, they could buy land for farming," and the case of Kim Hwa-ja[40] (pseudonym) who testified "What they told us sounded legitimate. Because we were poor, we thought that working at a silk factory and sending money to our parents would be nice," were identified as employment frauds. The case of Lee Oak-sun,[41] who testified "We were so small we could not overpower the men. They took us to a truck and abducted us, and we tried to scream and run away but they forced us to stop. They covered my mouth

[39]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iswj.d_0002_0010."

[40]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iswj.d_0003_0010."

[41]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iswj.d_0007_0010."

with their hands so I could not scream. And there were several women like us in the truck already," and other similar cases were legally named as kidnapping. Legal naming of individual experiences like these, in the context of various life experience and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ere significant in helping the victims understand what they experienced were illegal acts, especially in the early days of the movement (Arrington 2016; McCann 1994, 2017). Especially, as Arrington emphasizes, thi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ovement as many of the victims feared the repercussions based on dominant historical discourse and cultural taboos or did not recognize what they experienced as damages (Arrington 2016). In other words, this meant that the victims now had legal language that allowed them to explain what they experienced as crimes rather than as mistakes they had to keep in secret or blame themselves.

Obviously, legal languages and symbols are not adequate enough to signify the social conditions and contexts that enabled the suffering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have silenced the victims. For instance, in the case of utilizing existing legal language, such as "rape," "sexual violence," and "forced prostitution," cannot convey the context of how colonial Korean were forced to mobilize, the organized operations of "comfort women" systems, and everyday violence and inequality the victims had to live through. In addition, the legal language cannot adequately express the lost opportunities of the victims and the society's marginalization. However, legally naming the damage of the victims through the use of legal language was meaningful in that it allowed the victims to recognize their memories in the context of collective experience.

Furthermore, in the movement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ese legally named criminal acts were framed as crimes that violated the international law and Japanese domestic law of the time. For instance, the sexual violence done to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as defined as a crime that violated the 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which was ratified by Japan in 1907, especially as a violation of Article 46 of the Convention that states "Family honour and rights, the lives of persons, and private property, as well as religious convictions and practice, must be respected (도시환 2008)." In addition,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investigated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related personnel in 1994, and concluded it was a war crime and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for its actions (Moon Young-hwa 2019; Chung Chin-sung 2001). As demonstrated above, the process of legal mobilization in defining the sexual slavery as a specific crime enabled the victims of the crime to become entities that can demand the Japanese government for its responsibility. In addition, it provided validity for the victims' demand for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ibility, as the demand became legally effective and the Japanese government became a target of legal procedur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legal mobilization helped to construct the validity in criticizing the Japanese government's denial of responsibility through the reenactment of complex and various contexts of sexual slavery damages with the use of legal language and symbols, as well as defining the victims' rights.

The Gap between Legal Mobilization as a Social Movement and Legal Implementation

The social movement for resolv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especially in its early days, began to utilize legal trials as an important means for the movement in reproducing the victims' experiences in legal language and in defining what they experienced as illegal acts under international law. In line with the change, lawsuits regarding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ibility were filed in Japanese courts though it was difficult to have the victims' legal rights recognized and seek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ibility in Japanese courts. However, these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legal mobilization resulted in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in 2000 (Chung Chin-sung 2001). Although it was not an official legal process, the 2000 Tribunal recognized the victims' experiences and rights by convicting the Japanese leadership of the time. Furthermore, by citing the victims' testimonies in the decision, the tribunal revealed the victims' agency in the discours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urged for their initiative. However, despite the remarkable achievement of the 2000 Tribunal, no legal judgment stating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had been made since then.

Recently, som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began filing lawsuits in Korea as they faced the limitations of seeking legal resolution in Japanese courts. In 2013, a number of victims filed a meditation procedure against Japan, demanding the Japanese

government to pay its compensation and fine on delay. The lawsuit faced various challenges and was later developed into a formal lawsuit in 2016. In the same year, another group of surviving victims of the Japanese "comfort women" system filed a second compensation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he decisions on these lawsuits were dramatically different. In the first lawsuit, the 34th Civil Chamber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Kim Joeng-gon) order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compensate the twelve victims including late Bae Chun-hee. Only a few months later, the very similar second lawsuit filed by twenty "comfort women" victim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late Kwak Ye-nam and Kim Bok-dong was dismissed by the 15th Civil Chamber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Min Seong-cheol).

Why were these two lawsuits ruled differently when they utilized virtually identical legal logics and shared the same purpose? If we examine the decisions on these cases, it is apparent that they were ruled based on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context and the experiences of the victims, reproduced by their testimonies. The decision on the first lawsuit includes not only the experiences of all the plaintiffs in relation to the "comfort women" mobilization process and their life as "comfort women," but also the context of the lives and damages of the victims including their post-war lives.[42] However, the decision on the second lawsuit completely neglects the victims' voices. Rather, it includes a summary of the motive, methods, and scale of the sexual slavery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defendant Japan, and does not mention the suffering of the victims.[43] The decision on the lawsuit once again marginalized the lives of the victims by using the language of the perpetrator rather than that of the victim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damage, which is the center of the case.

In another aspect, different understandings of procedural law, represented by the state immunity debate, also contributed to these decisions. Indeed, the theory of state immunity is an issu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hich must be seriously considered in lawsuits against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it is

---

[42]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dgment 2016 GAHAP 505092 on January 8 2021, English translation: https://womenandwar.net/kr/wp-content/uploads/2021/07/ENG-2016_Ga_Hap_505092_30Jun2021.pdf
서울중앙지법, 2021. 1. 8., 2016 가합 505092 판결.

[43]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dgment 2016 GAHAP 580239 on April 23 2021 서울중앙지법, 2021. 4. 23., 2016 가합 580239 판결.

still notable that most of the second lawsuit's ruling is devoted to explaining why the lawsuit should be dismissed based on the theory of state immunity.[44] Aside from the discussion on the validity of applying state immunity in this case, acknowledging the superiority of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state immunity without a question is against the trend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at seek to put an end to impun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 widely recognized as a criminal act that violated various international law.

The contradicting decisions on the first and the second lawsuits closely resemble legal and social studies that claim the influence of legal naming, defining, and criticizing is limited in legal implementation. Therefore, given that the two cases utilized the same legal language and logic, there is a need for a discussion on how to utilize legal mobilization in resolv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given how the two courts gave contradictory decisions based on the court's interpretation and perception,

Conclusion

In this presentation, we have explored various practices and meanings behind the Japanese sexual slavery resolution movement's utilization of legal mobilization. Firstly, in various stages of social movements, legal mobilizat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captures collective, and yet distinctive, memories of victims and in that it allows the victims to recognize their experiences as damage of criminal acts rather than the consequence of their own faults that must be kept in secret. In addition, it constructs the illegality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on how what specific law was violated, and therefore provides validity to the criticism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lastly, we could confirm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on how the last stage of legal mobilization, the legal construction of damages, does not play a critical role in legal decisions based on the two lawsuits ruled by Korean courts.

However, these decisions do not mean that the effort of seeking legal resolution is ineffective. Rather, they allow us to observe the reality of how there has been no acknowledgement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other than the 2000 Tribunal and

[44]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dgment 2016 GAHAP 580239 on April 23 2021 서울중앙지법, 2021. 4. 23., 2016 가합 580239 판결.

the first lawsuit, and suggest the need for an observ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s centered on international law on the reality. In addition, there is a legal case from July of 2019, in which Bosco Ntaganda, the ex-leader of a militia group i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was convicted for the rape and sexual slavery in the Ituri region from 2002 to 2003 (Lee Hye-young 2020).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he expanding contex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on wartime sexual violence can be utilized in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is presentation was completely enabled by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In particular, this presentation focused on the reconstruction of past studies and research results from established researchers to reconstruct them in the context of the concept of legal mobilization. However, in order to plan more effective ways to resolve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rough legal mobilization, the following efforts are necessary. Firstly, there is a need for more in-depth research on testimonial documents to study how the victims' experiences and language are constructed and reinterpreted. This will help us understand the role and the significance of legal mobilization in realizing the ultimate goal of victim-centered justic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a detailed study on why and how various social activists decided to resolve the victim's demand and experience through legal mobilization, and how their choices affected the social movement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f we can understand the internal dynamic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resolution movement through studying various related actors, such as local activists, students, scholars, and legal experts,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how legal mobilization as a social movement functions in the context of resolv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finally, there is a need to collect and analyze various data related to the trials related to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this presentation, we only examined a few legal decisions and a very limited range of practices from a number of actors related to such decisions. In particular, the analysis was limited to estimating the court's perception and decisions through its rulings. However, if we utilize more trial related materials, such as indictments, court records, and hearing records, it will be possible to more accurately understand the meaning, and the limitations, of lawsuits in the process of pursuing legal justice. If these points are addressed in future studies, we will be able to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of legal mobilization in resolv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more importantly, further utilize it to address the issue.

References

Arrington, Celeste L. 2016. "Victimhood and Governmental Accountability." In Accidental Activists : Victim Movements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in Japan and South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1–18.

Boutcher, Steven A., and Lynette J. Chua. 2018. "Introduction: Law, Social Movements, and Mobilization across Contexts." Law and Policy 40(1): 5–9.

Cummings, Scott L. 2017. "Law and Social Movements: An Interdisciplinary Analysis." In Handbook of Social Movements Across Disciplines, eds. Bert Klandermans and Conny Roggeband. Boston, MA: Springer, 233–70.

Cummings, Scott L., and Douglas NeJamie. 2010. "Lawyering for Marriage Equality." UCLA Law Review 57(5): 1235–1332.

Lemaitre, Julieta, and Kristin Bergtora Sandvik. 2015. "Shifting Frames, Vanishing Resources, and Dangerous Political Opportunities: Legal Mobilization among Displaced Women in Colombia." Law and Society Review 49(1): 5–38.

Levitsky, Sandra R. 2006. "To Lead with Law: Reassessing the Influence of Legal Advocacy Organizations in Social Movements." In Cause Lawyers and Social Movements, eds. Austin Sarat and Stuart A. Scheingol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45–63.

McCann, Michael. 1994. Rights at Work: Pay Equity Reform and the Politics of Legal Mobiliza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6. "Law and Social Movements: Contemporary Perspectives."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2: 17–38.

———. 2017. "Law and Social Movements." In The Blackwell Companion to Law and Society, ed. Austin Sarat.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506–22.

Vanhala, Lisa. 2011. Making Rights a Reality? Disability Rights Activists and Legal Mobi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Zemans, Frances Kahn. 1983. "Legal Mobilization : The Neglected Role of the Law in the Political System."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3): 690–703.

김동식, and 한혜인. 2017. "일본군 '위안부' 증언 역사고증의 확장적 의의." I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 40–50.

도시환. 2008.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53(3): 41–68.

문영화. 201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재판 행사." 저스티스 174: 114–44.

양수조. 2009. "증언을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 실태." 충청문화연구 2: 125–65.

양현아. 2001. "증언과 역사쓰-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 재현." 사회와 역사 60: 60–264.

요시코노자키, and 김정분. 2015. "'위안부' 논쟁: 역사와 증언." 역사와 역사교육 30: 135–63.

이혜영. 2020. "' 성범죄 . 성차별범죄 ' (Sexual and Gender-Based Crimes) 에 관한 국제형사법 발전의 배경 및 현황 *." 국제법평론 55: 25–59.

정진성. 2001.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배경과 의의." 여성과 사회 (12): 163–79.

Session 4. Future Directions and Agenda for the Resolu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When the Women Victims and their Harm Entered the Realm of International Politics

LEE Jae-im I PhD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Raising the Issue

In 2021, two South Korean courts made contradicting rulings on lawsuits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In the dismissed case of Kwak v. Japan (2016 Ga-Hap 580239),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2015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hereinafter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has already restored the victims' rights and determined that it is impracticable for the victims to demand compensation from Japan, given the national prestige and norm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state immunity.[1] Such legal discourse suggests the need for an analysis of the nature of emerging legal discourses challeng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as the movement demands for the Japanese government's acceptance of its legal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on gender-based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In other words, such legal discourse invites the following questions: how does the counter-discourse against victims aim to entwine the "comfort women" victims' rights and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when the women victims are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on resolving the issue through human rights and gender perspectives? And what premises on international politics, victims, and damages support such discourse? This paper focuses on the case of Confirmation of the

[1] Chinkin and Yoshida, on the other hand, pointed out that the implementation of state immunity should be considered from a gender and human rights perspectives given that cases involving state immunity have not involved gender-based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s well as the fact that applying state immunity on the "comfort women" issue may result in impunity on crimes against humanity, such as sexual slavery, rape, and human trafficking, which leads to intensified gender inequality (Chinkin & Yoshida).

Unconstitutionality of Omission of Action on Article 3 of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2006 Hun-Ma 788, hereinafter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1965 Agreement),"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s duty to act was discussed and later became the legal basis for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The case of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1965 Agreement is considered as a tipping point which marked the "comfort women" issue's shift away from a bilateral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Korean government) relations to a multilateral (including the Japanese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victims) one (Kim Seon-hwa, 2017:91). In addition, this lawsuit surfaced the claim that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d long been considered as a victim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itself and a financial support provider for the "comfort women" victims, has neglected its obligation to restore the rights and dignity of the aging survivors, of whom many have already passed away (Kim Seon-hwa, 2017:91). And later,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the necessity for a victim-centered approach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s emerged and the Moon administration declared "victim-centered approach" as a core principle in resolving the "comfort women" issue (Task Force on the Review of the Korea-Japan Agreement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Victims, 2017).[2] More recently, various debates surroun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in 2020 at its essence, showed different perspectives on what approach may be ideal for the victims. These debates surrounding the movement aim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does Korean society aim to project through the victims and their damages?, 2) what have we accomplished regarding the victims' demand for a remedy?, 3) what tasks are suggested by the damage done to the victims?, and 4) what does it really mean to take a "victim-centered approach?"

Since the ruling on the case of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f the Unconstitutionality

[2] According to the Task Force on the Review of the Korea-Japan Agreement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Victims (hereinafter Agreement TF), a "victim-centered approach" is a perspective that the resolution of "comfort women" issue is based on restoring the victims' rights and dignity, as well as remedying the damages done to them. In this approach, the victims'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redressing the damages and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diplomatically negotiate in accordance with the victims' demands (Agreement TF, 2017:2).

of 1965 Agreement in 2011, various international politics researches categorize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a past historic one, which needs to be resolved in order to alleviate the tens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refore the key to its resolution was found from the perspectives of Korea-Japa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in East Asia (Chang Ki-young, 2017; Nashijima Rie, 2018).[3] And thus, it was argued that Korea and Japan should take steps to seek cooperation rather than to escalate conflicts in order to pursue national interests and to promote international security systems, such as a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ast Asian security system (Cho Gyeong-geun, 2013; Choi Hong-kyung, 2015; Nam Gwang-gyu, 2017; Lee Min-ju, 2019). Such researches do not only perpetuate androcentrism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sexism in our society by neglecting women's issues and movements, but also lack validity as they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comfort women" issue through flawed premises which are, in turn, based on examining only a half of the 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studies which criticize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s negligence on the victims as the agreement solely relies on a mechanism that focuses on resolving international issues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states (Yang Hyunah, 2016; Peak Seung-deok, 2016; Shin Ki-young, 2016).[4] In addition, a number of studies that referred to the 2010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ereinafter the Basic Principles and

[3] The following researches are in contrary to this view:
Yang analyzed not only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Kore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but also the interaction between both countries' civic groups, the Korean judiciary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Yang Ki-ho, 2015). Son criticized that the "comfort women" issue's complex characteristics are neglected and it is now considered as a historic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resulting in the issue's resolution being dependent on a combined dynamics of complicated national security, economics, and national identity Sohn Yeol (2018). Shin pointed out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consider Japan's responsibility as a subject of negotiation and compromise cannot be recognized as the issue has become an international women's rights issue as well as its expanded scope as an issue for the bigger Asian region Shin Ki-young (2016: 285, 288).

[4]Yang questioned the lack of involvement of the victims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asserting that not only registered victims but also the victims, their families, and post-colonial countries' citizen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for an agreement,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Victims' Rights Yang Hyun-ah (2016:34).

Guidelines on Victims' Rights)" argued that legal resolutions should be achieved to redress and restore the right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and that the state has to assure such legal resolutions (Cho Si-hyun, 2011; Kim Kwan-won, 2015; Kim Chang-rok et al., 2018).[5] However, in contrast to the level of social attention on the victims and their rights, which often largely influences such research trends, no discourse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signifier of the victims in the current research landscape and what tasks it may call for. Therefore, this paper, as a preliminary research, intends to be a discourse analysis on how the distinctive nature of the women victims' experiences is handled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which sovereign states are regarded as the only entities.

Before examining how the "victims" and their "damages" were signified in the case of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1965 Agreement, and the case's discussions surrounding the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diplomatic resolution, and prospects on Korea-Japan relations, we will explore how the signifier of the "victims" has emerged. In addition, we will briefly explore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to analyze how the counter-discourse, based on the signifier of the victims as agonizing elderly women, distorts the feminist movement's concerns on international politics.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s largely based on court records of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1965 Agreement. On July 5, 2006, 109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urvivor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foreign affairs minister on violations of the Article 23 (right to property), Article 10 (right to dignity and pursuit of happiness), and Section 1 of Article 37 (the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Constitution, which were allegedly caused by the Korean's government's omission of action regarding the resolution of conflicts on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Article 3 of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ereinafter the 1965

[5]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S/60/147.
This is a compilation of past achievements on materializing and organizing victims' rights stated in multiple human rights treati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documents (Kim Chang-rok et al., 2018:20).

Agreement).[6] The Constitutional Court's 5-3 decision (1 concurring opinion) on August 30, 2011 stated that a dispute over the interpretation regarding whether the victim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was extinguished based on Section 1 of Article 2 of the 1965 Agreement is present[7] 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resolution of such dispu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greement, and determine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omission of action infringed the victims' basic rights.[8] In this paper, discourse analyses were conducted on documents produced between the request to trial in 2006 and the ruling of 2011.

To shift away from legal studies that only focus on the significance of legal issues and legal decisions, this paper does not only focus on the ruling where dominant discourses are present but also targets court records for discourse analyses (Yang Hyunah, 2010:227).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analyze meanings given to the "damage" and the "victims," as well as points of conflict based on such premises and similarities and assumptions of both sides of the case. In addition, literature review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in which discourses were produced and recontextualized. In order to do so,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congressional bills, conference logs, petitions produced by the National Assembly; government press releases and policy reports; news articles and books were used and reviewed.

Theoretical Discussions

Neoliberalism and Politics of Victimhood

---

[6] Document 1. Written demand for trial, Lawyer of plaintiff, 2006.07.05., 4.

[7]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
1. The Contracting Parties confirm that [the] problem concerning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nationals (including juridical persons) and concerning claim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nationals, including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IV, paragraph (a)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signed at the city of San Francisco on September 8, 1951, is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8] Article III
1. Any disput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settled, first of all,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 Any dispute which fails to be settled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shall be referred for decision to an arbitration board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abbreviated).

In feminist theories, which "theorized the existence of power struggle at the presence of a victim," a victims is regarded as an entity who rages and resists rather than someone who lacks sovereign actions (Eisenstein, 1997:40; Stringer, 2014:31 re-cited). At the same time, feminists have been expressing concerns on political scientists' view in which women are categorized as passive and powerless subjects that need to be protected (Stringer, 2014:5-6). In order for a sexually assaulted woman to achieve positionality as a "victim," the person had to engage in various social, legal, and political struggles against the rape culture, androcentric interpretation of law, and patriarchal sexuality ideologies, and this struggle resembles the politics of victimhood (Buckley-Zistel & Zolkos, 2012; Druliolle & Brett, 2018).

However, in liquid modernity, which is characterized by its instability and liquidity, a "damage" is understood as a specific event at a specific time and a place, and because such individual experience concludes a victim, "victims" are not interpreted as subjects of collective and institutional oppression but are understood as those who suffered from harmful incidents that anyone could experience, resulting competitive struggles and more strict criteria of who qualifies as a victim (Bauman, 2000 as quoted in Pitch, 2010; Pitch, 2010:28). The neoliberal shift in the meaning of the term "victim" changed the meaning of suffering as something psychological rather than social, and "victimhood" as having a detrimental state of mind filled with ressentiment rather than something caused by social forces and power, and therefore transformed the meaning behind the term "victim" as something opposite of an "actor," a term with more positive nuance (Stringer, 2014:2-3). Stringer, in particular, argued that feminists should reclaim the language of "victim" as a term for the politics of liberalization, rather than abandoning it, in order to fight conservative discourses and to eliminate neoliberal values undermining the discourse on victims (Stringer, 2014:6-7).

In her work, Fraser pointed out that the politics of "need interpretation" has turned into the politics of need satisfaction in late capitalist welfare states (Fraser, 2017[2013]:104). In other words, when feminist movements successfully politicize a "need" that was traditionally considered non-political, such need is turned into an object for national interventions and support, and therefore transforms into a social service to become depoliticized, decontextualized, and recontextualized (Fraser, 102). Because damage is

"defined as … something that can happen to anybody," demands are "abstracted from class, race, and gender disparities" and victims are defined as "passive beneficiaries of pre-defined services … rather than entities who participate in the creation of their living environment" (Fraser, 102). The "clients" of such services are individualized and objectified by remedial administrative discourses; however, some intend to return to politics by resisting this trend (Fraser, 107). Kapur also pointed out that when women in Third World, in contrary to women in the West, became authentic victim subjects for the basis of feminist legal politics, the transition has led to only protective and conservative policies confined by the boundaries of criminal laws.

The above discussions demonstrate the trend of how the meaning behind victims and politics of victimhood tend to be depoliticized under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is phenomenon appears in the context and history of Korea through the cas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Feminist Transitional Justice

Since the 1990s, criticisms from feminists who advocated for judicial justice on impunity of sexual violence in armed conflicts have demanded a complete reform of liberal and "neutral" premises and assumptions, as well as the inclusion of women in the mechanism and concept of transitional justice (Buckley-Zistel & Zolkos, 2012:5).[9] The 1993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d the 1994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are regarded as cornerstones of such changes as they became the first international tribunals that punished gender-based violence.[10]

Feminists have been critical about the dichotomous approach of liberation/oppression or peace/conflict in transitional justice, as it is insufficient to deal with the complicated entanglement of public and personal conflicts and their consequences in women's lives

[9] In these discussions, wartime sexual violence was defined as a tool in achieving strategic targets rather than an individual's impulsive behavior (Yang Hyun-ah, 2001:66). For instance, a series of organized rape during 1994 genocide in Rwanda was not only to threaten and insult individual woman but also to insult their race groups, men, and communities (Hudson, 2009).

[10] These courts' charters and the ICC Rome Statute define rape as a crime against humanity. The Rome Statute defines rape, sexual slavery, forced prostitution, unwanted pregnancy, gender-based oppression, forced sterilization,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as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Franke, 2006:817).

(Bell & Rourke, 2007). That is, the transitional justice, with its focus on political violence with an abstraction of public and personal distinction and damages caused by violations of certain laws, has failed to capture individual violence against women, socio-economic damages caused by such violence, and inequalities against women (Aoláin, 2012). As a result, even in a peaceful transitional society where there is no armed conflict, gender-based violence is present with new patterns and forms within gender-unequal systems that are reconstructed based on neoliberalism (Bell & Rourke, 2007; Gready & Robins, 2014).[11] Therefore, as it is the case for transformative justice, feminist transitional justice requires a complete reform of policies and systems that have contributed to oppression against women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an armed conflict.

This is why there is a demand for a reconceptualization of transitional justice based on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the inclusion of gender-based perspectives in its mechanism through ensuring women's participation (Buckley-Zistel, & Zolkos, 2012). In particula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SCR 1325) has recommended the inclusion of women's participation and gender perspectives in every decision-making and peace-building steps in order to prevent, control, and relief conflicts (Kang Yoon-hee, 2013:70-74).[12]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eminist movement efforts, which are often informal and grassroots-level, should not be wasted at the elite level and that international frameworks such as the SCR 1325 must not end up as a rhetoric but should become a leading force in making actual changes (Hudson, 2009:294, 301).

Often, the mid-2000s is regarded as when the "victims-turn" took place in the field of transitional justice as international awareness on protecting and improv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s victims increased (Gracía-Godos, 2016). Druliolle and Brett, in their study of transitional justice, argued that influences on 1) how "victim" and victimhood are defined and obtained, 2)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victims and the politicization of victimization, and 3) the role of victims and their support groups in transitional justice mechanisms, as

[11] This is demonstrated in studies of South Africa, which achieved notable successes in its mechanism of transitional justi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women's rights, where backlashes and continue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not only continued but intensified during its transitional period from Apartheid (Sigsworth & Valiji, 2011:121-126).

[1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S/RES/1325.

well as their effect on changing how nations and societies understand peace, justice and history should studied (Druliolle & Brett, 2018:5,9,11-12). In this context, this paper can be considered as an attempt to examine the transitional justice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Process of Rais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Emergence of the "Victims"

The "Comfort Women" Movement: Calling on "Victims" as Political Entities

President Roh Tae-woo's visit to Japan on May 25, 1990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organizations representing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and atomic bombing and Sakhalin Koreans to voice their demands. Korea Church Women United (KCWU), which started a "comfort women" movement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n 1988, also issued a statement calling for a reform on humiliat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and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investigate the truth on, to apologize, and to compensate the victims (KCWU,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Association, 1990). On November 16, 1990,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hereinafter The Korean Council) was formed and on November 16, 1991, a group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forced mobilization victims including Kim Hak-soon filed a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calling for Japan's sincere apology and compensation (20 Years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Committee, 2014:394).

Unlike in the past, th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and the Pacific War began to define themselves as "victims" and took collective actions demanding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Korea to acknowledge and compensate for the atrocities done to them. They raised awareness on state responsibility, human rights violation, and Japan's remilitarization through the language of human rights, justice, and peace. It was only the 1990s, with the end of Cold War, when the "post-World War II" era finally found the victims and their voices echoed the global demand for responsibility on historical 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transitional justice and decolonization of the time (Kim Pu-ja, 2008; Nakano, 2008). In response to this movement, the Korean media started labell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s "victims of war" since the 1990s, along with

other groups of victims including those of forced labor, forced conscription, and atomic bombing. As mor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began to come forward, the media started calling them as "chongshindae ('comfort women' victims" since 1991.[13]

On August 14, 1991, Kim Hak-soon held her historic press conference, in which she stated "I have come forward to testify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denies the very existence of 'comfort women' entirely." This press conference signaled the personific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which the victims became evidence themselves and their speech turned into testimonies. Then, investigations in the civic sector made significant progresses following the documentation of victims' phone call testimonies and Yoshimi Yoshiaki's discovery of historical documents on sexual slavery. In 1992, the Wednesday Demonstration at the Japanese embassy began in response to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visit to Korea. According to Yun Chung-ok, the protest crowd mostly consisted of "comfort women" victims at the time compared to today's protest demographics that has more citizens, as many of the victims became aged and passed away (Chung Chin-sung et al., 2015:52). The victims began to recognize the atrocities done to them as historical and social issues and hence, they became a major entity of the movement themselves through their involvement in Wednesday Demonstration and testimony campaigns (Hwang Eun-jin, 1998).

In its early day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largely demand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1) admit the Japanese government's forceful mobilization of Korean women as wartime "comfort women," 2) issue a sincere official apology on the matter, 3) reveal the detail of the "comfort women" system, 4) build a memorial for the victims, 5) compensate the surviving victims and the families of deceased ones, and 6) teach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at schools in order to prevent similar crimes from happening again (KCUW and 38 women's organizations, 1990). As the movement progressed, these demands were refined into: 1) truth-finding, 2) acknowledgment of crimes, 3) official apology, 4) legal reparation, 5)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6) education of the issue in history textbooks, and 7) construction of memorial museums.[14]

[13] In addition, the term "victim" appeared frequently in the media in relation to issues on the victims of atomic bombing, Samchung detention camp, the Gwangju democratic movement.

[14] According to the discussion that took place in the Second Asian Conference on "Comfort Women" Issue in 1993, the inclusion of punishment of responsible individuals was to emphasize

In addition, while a transnational solidarity was formed to achieve global justice despite being aware of national boundaries and power relations among women, (Lee Na Young, 2018),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colonialism, war of aggression, Japan's imperialist fascism, militarism, and patriarchy were the base of "sexual enslavement against women and extermination of human dignity" and identified as important tasks for resolution of "comfort women" issue, "preventing recurrence of war crimes" and building peace (The 1st Asian Solidarity Conference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1992).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hereinafter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Tribunal) viewed legal and social systems that contributed to the feelings of humiliation and guilt of the victims as the core of the issue, suggesting a task beyond the punishment of responsible individuals. In other word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now called for the realization of transformative justice which aims to reform social conditions that enabled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In additi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as an international women's rights movement, was in compliance with the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law on reinforcing victim-centered perspectives and aimed to define the "victims" as entities and their "damages" a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movement contributed to the introduction of wartime sexual violence, including sexual slavery, in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Lee Na Young, 2018), and raised awareness on such crimes through proving the nature of atrocities incurred by them with the use of a legal concept of sexual slavery in international governance,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hung Chin-sung, 2019). Through this movement, the "victims" obtained the position as survivors of the violent modern era of Korean history and as citizens with political demands. And their "agonies" became the tipping point of transformative justice on gender hierarchy and gender violence.

The "Comfort Women" Support Act and Domestic Policies: "Victims" as Recipients of Humanitarian Support

In the early day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the Korean

---

the issue's war crimes aspect, in order to encourage the Japanese government to acknowledge the truth and accept its responsibilities and to prevent the issue from becoming largely focused on financial aspects of compensation (*20 Years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Committee, 2014:86-87).

government did not take an active role as it viewed the "comfort women" issue as a post-war compensation related issue which, in its perspective, had already been resolved (Kim Soo-ah, 2000:40). In 1990,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d that the issue of compensation was finalized with the 1965 Claims Agreement, and hence it cannot be pursued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at the government will not engage with matters of private secto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90). However, a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became a "diplomatic task between Korea and Japan" following the compensation lawsuit of December 6, 1991,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ly request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investigate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on December 7, 1991 (Secretariat of the National Assembly, 1993). Following the Kato Statement and the first investigation report by the Japanese government on January 3, 1992, President Roh Tae-woo ordered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policy planning" on January 17 and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own basic principles and investigative plans on January 22 (Kim Soo-ah, 2000:41).[15] However, though it may appear that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was in favor of compensation, it is most likely that the administration regarded the victims' right to compensation have expired with the 1965 Claims Agreement (Kim Soo-ah, 2000:43, 45).

With the arrival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 1993, the Act on the Support of Livelihood Stability for Former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hereinafter the "Comfort Women" Support Act) was enacted with the president's support.[16] The government noted that the bill does not intend to demand legal compens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s a part an effort of "establishing a new Korea-Japan relationship with a moral superiority," but it was intended to take measures "on our own" to help the surviving victims (Korean government, 1993). The "Comfort Women" Support Act stated that it aims to address "those who qualify and register as survivors" among "those who were forced to mobiliz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ffered as 'comfort women' for the Japanese military," and that these

[15] After the exposure of the victims' economic hardships, Korean Council demanded an urgent protection on the victims on January 22, 1992 but the government never responded (KCWU, 1992:96).

[16] Act No.4565, enacted June 11 1993, enforced June 11 1993. Though its official synonym is "Comfort Women" Victims Act, we will refer to it as "Comfort Women" Support Act as it does not include the word "victim" in its clauses and to distinguish it from its amendments.

measures are based on the goal "of the nation to protect and support such persons based on humanitarianism values." The law specified the benefits as basic living security, medical benefits, grants-in-aid, and preferential rental of government housing. In reaction, the Korean Council questioned whether the policy of "livelihood support for victims" announced by the president meant "materialistic compensation" on behalf of the Japanese government or "national support for victims of historical events," claiming that victim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ve the right to compensation regardless of the state's decision (Korean Council, 1993a).[17] At this tim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demanded thorough reparation beyond financial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Lee Hyo-jae, 1999:203).

The Korean government comprehended Japan's second investigation report, and the Kono Statement on August 4, 1993, as positive gestures and Yoo Byung-woo, Asian-Pacific region director at the Foreign Affairs Ministry, stated that the government's does not intend to escalate the issue (Kim Soo-ah, 2000). On August 9, Korean Council dema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only focus on the investigation but also strive for an effort on the reparation issue, but the government refrained from further actions (Korean Council, 1993b; Kim Soo-ah, 2000). In June of 1995, the Murayama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n Women's Fund as well as plans of medical and welfare projects. The Japanese government forcibly distributed the Asian Women's Fund despite the objection from the victims and the "comfort women" movement. The "comfort women" movement, in particular, objected the fund for the cre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the fund may lead to a view that the victims are simply objects of financial compensation rather than people who demand the restoration of their dignity and rights (Korean Council, Korean Church Women United, Korean survivor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17]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refer to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ffect a large number of victims and their damages are detrimental and long-lasting (Song Esther, 2020:84).
Compensation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re different from compensating illegal acts in magnitude, and require the society's core legal systems and increase in legal influence beyond seeking justice for individual victims (UN OHCHR, 2008:10; Song Esther, 2020:84 recited)"

and 21 organizations, 1995).[18]

As the public became enraged, the Korean government quickly reversed its stance on the matter. On February 23, 1998,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nounced that the ministry was considering its own compensation so that the victims, "who are aging and suffering economic hardships," would not "be tempted" to accept the Asian Women's Fund (Kim Soo-ah, 2000:50). On April 15, the ministry announced that it would not demand personal compens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once again citing "moral superiority" and "new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ess release, 1998).[19] In response, President Kim Dae-jung opposed the announcement at the cabinet meeting on the same day, asserting that the public and the victims had to be convinced before a decision is made (1998.04.15. Hankook Ilbo). In detail, he stated that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victims' suffering with urgency, but the issue of responsibility must be dealt with separately" and that "the compensation may cause problems on future compensation demands and responsibilities," and therefore demanded "adequate discussions with the victims" (1998.04.15. JoongAng Ilbo). On the other h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mphasized that the "Korea-Japan relations should no longer be strained by legal conflicts over the "comfort women" compensation issue" and that this issue was "already resolved" through the 1965 Claims Agreement (1998.4.15. DongA Ilbo). Later, President Kim Dae-jung, who was the first president to approach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a human rights issue, stated on April 21 that "the government will not intervene in civil groups' demand for compens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at the government will not comment further on the compensation issue (Kim Soo-ah, 2000:49-50). In May, the victims received a second grant from the government following the first one, which was disbursed soon after the enactment of the "Comfort Women" Support Act (20 Years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Committee, 2014:221).

In other words, throughout the 1990s, the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18] I n addition, Korean Council demanded increase in living security subsidy in order to address the victims' economic hardships and health issues caused by "comfort women" slavery (Lee Hyo-jae, Yun Chung-ok, Seong Bong-hee (Korean Council), 1996).

[19] National Security Advisor Lim Dong-won referred to this as "a bold policy where the victim (meaning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context) tries to resolve the biggest hurdle in Korea-Japan relations" (*Chosun Ilbo*, 1998.4.15.; Kim Soo-ah, 2000:50 recited)"

investigating the truth and demanded Japan's apology, while providing "humanitarian" financial support itself for the victims to protect "national pride" while maintaining good relations with Japan. During this period, the victims were recognized as subjects of patriarchal protection from the state, and their reparation was viewed as a "domestic" issue while their suffering was viewed as a historical issue of the past and as an obstacle to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Comfort Women" Victims Act and the Process of Settling the Past: "Victims" as Subj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major "history settlement" projects on the Japanese military forced mobilization victims began. In November of 2003, the Resolution on the Format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was passed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Settlement of Histor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hereinafter the Settlement Framework Act) was enacted in the following month based on the resolution.[20] In his Independence Day speech in 2005, Prescient Roh remarked that this law is necessary to "heal the victims in order to achieve true reparation and reconciliation" and that "thorough investigation on truth,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dignity" must precede (Presidential Secretariat, 2006:306).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enacted in March of 2004, a special committee was formed by the prime minister to investigate reports from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21]

Though the "Comfort Women" Support Act had been revised a number of times at this time, the term "sexual slavery victim" was first formally recognized through the 2002 amendment of Act on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ve Projects for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hereinafter the "Comfort Women" Victims Act).[22]

[20] Act No.7542, enacted May 31 2005, enforced December 1 2005.

[21] Act No.7174, enacted March 5 2004, enforced September 6 2004. According to Article 2 of this act, the "damage caused by forced mobilization" refers to the physical and property damages done to victims of forced conscription, forced mobilization, forced labor, and forced sexual slavery.

[22] Act No.6771, revised December 11 2002, enforced June 12 2003.

[23] Here, the term "victim" was included in order to "represent the victims' psychological and physical torment" (Lee Mi-kyung and 29 lawmakers, 2001). In addition, the phrase "the nation ... based on humanitarian values" has been removed from the language of the law, and instead it was replaced with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roper historical views and to promote human rights" through commemorative projects. The act was revised once again in 2005, to include "the restoration of the victims' dignity and investigation of the truth" in its purpose.[24] In addition, a section was added to Article 2, to state investigation of the truth, history education, and finding the victims and supporting their lives as the nation's responsibility.

Revisions and amendments are represented in the following table.

[Table 1] "Comfort Women" Support Act vs. "Comfort Women" Victims Act

Law	"Comfort Women" Support Act	"Comfort Women" Victims Act	
Year	Enacted in 1993	Amended in 2002	Amended in 2005
Victims	Those who were forced to mobilize and live as a "comfort wom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Victims who were forced to mobilize and suffered from sexual violence to live as a "comfort wom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Recipients	Those who qualify and register among surviving "comfort women" victims	"Comfort women" victims (including those in need of national support), any Korean citizen	
Ministry in Charge	Ministry of Health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3] Since 2004, commemorative articles regarding the "comfort women" victims began to use the word "victim" when referring to them (Kim So-hyung, 2019:9).

[24] Act No. 7637, revised July 29 2005, enforced January 30 2006.

	Welfare		
Purpose	To protects those who qualify, based on humanitarian value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roper historical views and to promote human rights through commemorative projects as well as to protect and to support the victims	To protect and to support the lives and welfare of the victims a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roper historical views and to promote human rights through commemorative projects to restore the victims' dignity and to investigate the truth
Support Detail	Basic living security, medical benefits, grants-in-aid, preferential rental of government housing	Living security benefits, medical benefits, grants-in-aid, preferential rental of government housing	Living security benefits, medical benefits, grants-in-aid, preferential rental of government housing, medical care, restoration of citizenship
Project Detail	X	Commemorative projects, collection, preservation, and exhibition of historical documents, academic activities	Commemorative projects, collection, preservation, and exhibition of historical documents, international efforts and joint investigation
The Nation's Duty	X	X	To investigate the truth, to foster proper history education, to find the victims and to implement policies for their living security

These legal revisions were influenced by the trend of past settlement in Korea and the human rights discourse of the 2000s. The enactment of memorial/commemorative measures such as truth-finding investigation, history education, and commemorative projects demonstrates a perspective shift on the "comfort women" issue as an issue related to crucial human rights values which the reinterprets and reconstructs the society's past, present, and future, rather than an issue that resolves when the victims are financially compensated. However, the clause on "effort for compensation" as the nation's duty, which was included when the 2005 amendment was first introduced, was removed from the law in order to focus on issues related to the victims' welfare and living security (National Assembly Gender Equality Committee, 2005).

In addition, as a part of the past settlement effort, the Korean government fully released documents related to Korea and Japan negotiations on August 26, 2005 (Horiyama, 2008:5).[25] In reaching this decision, the Blue Hous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d multiple conflicts. The ministry refused to disclose the document citing diplomatic reason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requested non-disclosure of the document and that the state's reliability may be damaged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ppealed the decision on March 4, 2004. However, President Roh strongly pushed the document's release and a taskforce on document disclosure was formed in September (Horiyama, 2008:17).

On August 26, 2005, the Joint Public-Private Committee on Disclosure of Documents of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hereinafter the Joint Public-Private Committee) introduced the Act on Assistance for Victims of Forced Overseas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26] In addition, the Joint Public-Private committee revealed its policy of distinguish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that it will pursue seeking responsibility and bring the issue 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Office

[25] In 2002, a group of forced mobilization and atomic bombing victim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cision to not release documents regarding past Korea and Japan negotiations, in which the court ruled that the ministry's decision was unconstitutional as the release of such documents is not likely to result in serious harm to na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6] The Prime Minister was the head of the Committee and the committee was consisted of 9 government officials and 10 experts from private sectors.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005).[27] The Korean government's shift away from its previous policy, of separating history issues from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was based on the new Korea-Japan relations principle announced on March 17, 2005, stating that the government will "urge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solve the issue from human rights perspective" for issues not covered by the 1965 Agreement, as it is the Korean government's view that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victims is a universal human rights issue which the state cannot deny" (Horiyama, 2008; Republic of Korea Policy Briefing, 2005).

In other words, in the 2000s, the "victims" emerged as people directly involved 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damage" and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were now linked with values like human rights and collective community memory. However, as the Korean government failed to pursue special measures to seek Japan's legal responsibility on the "comfort women" issue, the 2006 lawsuit of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1965 Agreement began.

The "Comfort Women" Issue and International Politics: Legal Discourse Analysis on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1965 Agreement

In the case of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1965 Agreement, major legal issues included the legal basis for the state's duty to act, the state's actual actions, and allowed level for the state's discretion, as well as their role in the causation of the plaintiffs' damage. In addition, discussions regarding the victims' rights and protection, diplomatic resolution, definition of damage, and the Korea-Japan relationship took place at the court.[28]

---

[27] This wa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that the 1965 Agreement did not resolve crimes against humanity as it was intended "not to compensate the Japanese colonial rule" but to "resolve the two countries' financial obligations based on Article 4 of Treaty of San Francisco"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005).

[28] Main legal conflicts in this case are the following: 1) the existence of the defendant's duty to act, as previous rulings stated that such duty only exists if "the entity of the public force has specified duty to act based on the constitution," 2) whether, regarding the existence of the duty to act, if the duty act was neglected, 3) whether diplomatic actions, which are traditionally granted a significant amount of discretion, must be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and if so, 4) if the omission of action based on such discretion is violating proper realm of national institutions' constitutional boundaries, and 5) if the case is distinctive

Diplomatic Protection: Victims as Subjects of Rights vs. Victims as Objects of Protection

This case's center of the legal discussion was the Korean government's duty to diplomatic protection, which refers to the international legal norm that allows a state to take diplomatic, and other, actions against another state if its nationals are damaged by that state's international law violations.

The plaintiffs argued that the "victims" suffered from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at the state has the obligation to diplomatically protect them to ensure their rights to diplomatic protection, and that their basic rights have been violated due to the state's inaction. In this perspective, victims are main entities of their rights and the state is a representative for the victims in restoring their rights through diplomatic procedures. This view enabled the resistance against the premise that a state can objectify its citizens' human rights as commodities of diplomatic actions on behalf of them through the language of human rights that addresses victims' rights and through the language of women's rights movement that demands justice for wartime sexual violence. Also, this perspective implies that international peace negotiations should heavily address human rights, victims' rights, and impunity of wartime sexual violence.

In respons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rgued that the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is a right that belongs to the state rather than a right that was endowed by its people, and therefore the state can exercise the right at its discretion. This approach degrades "victims" as someone who must accept the result of diplomatic actions. The defendant argued that "if the state decides to exercise its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individuals may benefit," but that the state has no obligation to exercise the right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07). In addition, the ministry argued that there will be great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foreign policies, diplomatic negotiations, and representing Korea in international community if every individual is granted the right to "demand certain diplomatic action or polic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06a). Hence, according to the defendant, the Korean government's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cannot be exercised on this issue, in order to protect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s

from a previous ruling (98 Hun-ma 206). For further information, refer to the third article of the author's master's thesis and legal studies regarding unconstitutionality lawsuits

diplomatic policies" and "smoother diplomatic activities" (Chung In-seob, 2009). In other words, the ministry suggested an abstract representation of the state's diplomatic relations and accommodations and assumed that they cannot coexist with policies and actions that pursue the restoration of the victims' rights and that national interests can be prioritized over individuals' human rights.

Furthermore, the plaintiff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ited Article 19 of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to claim that even if the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belongs to the state per the international legal norms,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the right must be considered with the victim, whose presence is important in claiming rights and compensation.[29] Howev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mphasized the Article 2 of the draft, which states that the state "is under no duty or obligation to exercise the right,"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Article 19 is a mere recommendation and that the draft itself is not formally recognized internationall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07).

The two sides had different views on the 1965 Agreement as well. The plaintiffs questioned if the agreement, which does not address the "comfort women" issue at all, can be seen as a final and irreversible resolution of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f wartime sexual slavery (Lawyer of plaintiff, 2006a). Regarding this matter, the court pointed out that the issue of "comfort women" was not included in the negotiation process for the 1965 Agreement, in the 8 clauses of the agreement's Article 2, and in the agreement's list of compensational targets, unlike other forced mobilization and forced conscription victims

[29]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GA A/CN.4/L.684 19 May 2006). According to Article 3 of this draft, "A State has the right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draft articles." but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to exercise the right. And in Article 19, it is defined that a state entitled to such right is to a)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diplomatic protection, especially when a significant injury has occurred; b) take into account, wherever feasible, the views of injured persons with regard to resort to diplomatic protection and the reparation to be sought; and c) transfer to the injured person any compensation obtained for the injury from the responsible State subject to any reasonable deductions (Lawyer of plaintiff, 2006e).

(Constitutional Court, 2011).[30] [31] In addition, the court viewed that the government's diplomatic actions, which did not represent the victim's will, could not extinguish the rights of the victims (Lawyer of plaintiff, 2006a; 2006e).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state can make diplomatic settlements without thoroughly considering an "individual compensation claim," and insisted that only domestic issues of compensation and its magnitude are left after reaching such settlements (Chung In-seob, 2009). In other words, they argu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faithfully compensating the victims and yet, there are "victims who are unsatisfied with the compensation" and therefore, the state refuses to recognize their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Chung In-seob, 2009).[32] Some judges also voiced similar messages with the defendant, stating that "even if the defendant fails to make satisfactory efforts in the plaintiffs," it does not mean that the state omitted its duty to act (Constitutional Court, 2011).[33]

In this sense, the defendant and a number of judges ignored the human rights discourse on the issue as they denounced the victims' demand for restoration of rights as behavior of "dissatisfaction" on "compensation." And through this, they downplayed the issue as a minor domestic one, which cannot become an international issue between two sovereign states. In the case of the "comfort women" issue in particular, they were treated as a more trivial one as the issue pertains to sexual damages against women. The 1965 Agreement, which marginalized the victims in both its negotiation and result, does not only demonstrate that there should be more consideration of victims' rights and opinion in the process of diplomatic negotiations, but also that there is a need for more thorough

---

[30] The 8 clauses were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first talk in 1952, and was discussed in the fifth talk in 1960-1961. The fifth clause includes "(5)Repay the national bonds, public bonds, and banking notes of Korean juridical or natural persons purchased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its people, receivable accounts of drafted Koreans, and other claims of Koreans" (Constitutional Court, 2011).

[31] On February 19, 1966,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Compensation (abolished on 1982.12.31 created a legal basis for the compensation, and the Act on Filing Private Compensation against Japan (abolished 1982.12.31) allowed requests for compensation on Jan 19, 1971, but most of the recipients were casualties of forced labor and forced conscription.

[32] Meaning that the agreement was intended to "mark a new beginning beyond the two countries' unfortunate past...regardless of the public's satisfaction and criticism" in the first place (Chung In-seob, 2009).

[33] This was suggested on the basis that "the duty to diplomatically resolve" cannot be correctly decided (Constitutional Court, 2011).

examination on "the unfair and particular influence of armed conflicts on women, " direct and active involvement of female victims, and the introduction of more women and gender perspectiv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of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Kang Yun-hee, 2013:71).[34] However, the ministry's logic which is based on the view that the victims and their agonies are residual products of "elite" men, and which prioritizes "national interest" over human rights, was consistently used throughout this case and in the process of reaching the 1965 Agreement.

Diplomatic Resolution: Exercising the Duty to Act to Relieve the Damage

The damage's Characteristics: Specificity or Generality

The plaintiff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viewed that the need for a remedy, that is, the Korean government's duty to act, is urgent a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violated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denied human dignity and values that are the building blocks of the constitution (Lawyer of plaintiff, 2006a; Constitutional Court, 2011).[35] Therefore, it was argu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legal responsibilities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damage was necessary (Kim Chang-rok, 2009; Constitutional Court, 2011).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 argued that other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experienced equally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s the "comfort women" victims, arguing that the government had no obligation to take special diplomatic measures for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t the same time, the defendant repeatedly claim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received more financial support than other

[34]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S/RES/1325 (2000) Article 8 is the following:
8. Calls on all actors involved, when negotiating and implementing peace agreements, to adopt a gender perspective, including, inter alia: (a) The special needs of women and girls during repatriation and resettlement and for rehabilitation, reintegration and post-conflict reconstruction; (b) Measures that support local women's peace initiatives and indigenous processes for conflict resolution, and that involve women in all of the implementation mechanisms of the peace agreements; (c) Measures that ensure the protection of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particularly as they relate to the constitution, the electoral system, the police and the judiciary

[35] It was mentioned that the damages incurred by the "comfort women" are serious violations of various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jus cogens*. In addition, Yamaguchi Regional Court ruled in 1998 that the Japanese Congress has the obligation to apologize and make legal efforts to addres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Based on these, it was argu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the duty to act (Lawyer of plaintiff, 2006a).

types of victims, even providing specific duration and amount of such financial support to the court (Lawyer of defendant, 2009a). In response, the plaintiffs argued that special measures are necessary in the case of "comfort women" as the damage done to them were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heightens the Korean government's duty to act as the damage had not been resolved by the agreement unlike other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as concluded by the Joint Public-Private committee in 2005 (Kim Chang-rok, 2009). Also, it was pointed out that unlike the support (plans)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other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the government failed to perform its duties to seek legal responsibilitie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Lawyer of plaintiff, 2006e).

The two sides also clashed in discussions surrounding the "Confirmation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bitration Request Noncompliance" incident.[36] The defendant argued tha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rights to property, to equality, and to publicity were done to the victim of the dismissed case filed by a Korean Japanese victim, who forcibly served in the Japanese military, and that the very case of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1965 Agreement should be dismissed as well (Lawyer of defendant, 2009a). On the other hand, the plaintiffs argu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had the peculiarity regarding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that are the basi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at this issue is distinctive from more common problems regarding victims of war, and assistance for war casualties and their families. In addition, it was argued that the unconstitutionality lawsuit is not a request for the formation of an arbitration committee, but is rather concerning the omission of action, diplomatic efforts, and failure of forming an arbitration committee stipulated in Article 3.

In other words, the plaintiffs argued that the case of "comfort women" is a special and unprecedented one, given the cruelty of the damage and the huge number of victims amounting to hundreds of thousands. And the plaintiffs believed that the peculiarity of this incident has been confirm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resolution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reports of the UN Special Rapporteurs Coomaraswamy

[36] This lawsuit was filed as the Japanese government refused to compensate the Korean Japanes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and as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try to resolve through the procedure defined in Article 3.

(1996) and McDougall (1998), and a number of Japanese court rulings (Lawyer of plaintiff, 2007a; Kim Chang-rok, 2009).[37] In other words, throug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course on wartime sexual slavery, the plaintiffs demonstrated that the special case of "comfort women" cannot not be explained in the context of other types of forced mobilization of civilians in wartime. The court's opinion citing the variety of damage, systemization and continuity, forceful mobilization, surveillance, and coercion, also demonstrates that it acknowledges the transnational feminist movement's discourse which define the "comfort women" system as a sexual slavery, a systemic rape, and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38]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laintiffs, referring to a Japanese court's decision, pointed out that the "discriminatory sexist and racist ideologies" and the damage of the "comfort women" system "infringed the very essence of the dignity of women's rights" (Kim Chang-rok, 2009; Constitutional Court, 2011).

In response, the defendant again claimed that every damage should be treated equally regardless of its magnitude and that, although they acknowledge that damages done to the "comfort women" were "very special damages," "virtually every Korean suffered to some extent" and that it is impractical to expect the government to redress every individual's suffering in a war (Chung In-seob, 2009). In other words, as the victims' "damages" were regarded as "war damages," which were communalized based on the experiences of men as experiences that any Korean could have suffer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gender perspective of this matter was eliminated. As the defendant asserted that the victims' atrocities were "the most cruel human rights violation Koreans experienced under the Japanese rule," the damage done to the victims was viewed on its magnitude rather

[37] U.S. House of Representatives' resolution stated that the "comfort women" case was "the biggest human trafficking case of the 20th century, and unprecedented level of cruel and serious crime that included mass rape, mass abortion, psychological harassment, sexual exploitation that caused physical disabilities, massacre and/or suicide (Lawyer of plaintiff, 2007a). U.N Special Rapporteur Coomaraswamy described the damage as "military sexual slave," and Special Rapporteur McDougal described it as sexual slavery as well a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comfort women" stations as rape centers and rape camps. The Japanese judiciary ruled that the damage caused human rights violations as the same level as "that of the Nazis," and that it was "a definite expression of sexism and racism, which violated women's rights at its essence" (Kim Chang-rok, 2009; Constitutional Court, 2011).

[38] The damage was systemic rape where "mass rape" occurred, where "systemic rape policy" existed and "national institution" was involved (Yang Hyun-ah, 2009:178). Also, it was explained that the women were placed at "a condition of repeated and continued condition of forced rape and prostitution" (Yang Hyun-ah, 2009:191).

than how it is different from other forms of forced mobilization (Constitutional Court, 2009c).

The Damage and Today: Continuation or Resolution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damage is "important because it is an on-going and modern human rights violations issue," as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a resolution regarding the matter in 2007 (Lawyer of plaintiff, 2006e). In other words, they argued that "there is a serious basic rights violation and a real and imminent threat which could not be relieved by trials in other countries" (Lawyer of plaintiff, 2007b). According to the plaintiffs, the Korean government's involvement is the last and only means to relieve the victims' rights as all of their legal efforts in Japan were dismissed (Lawyer of plaintiff, 2009a). The assertion that the damage is an ongoing issue does not only condemn the Japanese government's denial of responsibility but also the Korean government's lack of action in its diplomatic actions and policies. In this sense, the "damage" does not only pertain to what happened in the past but also today's delay on rights restoration.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argued that the state's lack of action allowed and amplified the continued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the victims (Constitutional Court, 2009c). One of the victims' petition stated that they could not even "tell their family what happened" and "felt guilty to see their family" unlike other victims of forced labor and forced conscription (Plaintiff Kang Il-chul, 2009). In other words, they argued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is not just an "abstract human rights or past settlement issue," stating that the "continuity of the damage" which also problematizes the male-dominated sexual norms in Korean society that made the victims to suffer from taboos and further embarrassment (Lawyer of plaintiff 2006e; 2009a).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 argued that, based on foreign legal precedents related to the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it is unlikely that a decision can be made for a case based on "actions of distant past" such a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that there is no imminent physical threat, in an effort to devalue the issue as a

problem of the past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07).[39] In addition,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damage done to the victims were solely done by the Japanese government's past actions and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of the issue also completely belongs to the Japanese government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06a).[40]

In other words, this view claims that the Korean government must not be held at the same level of responsibility as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lack of action cannot be the cause of the victims' rights violation.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victims failed to explain how the Korean government is infringing the victims' rights and that constitutional rights do not guarantee the victims a protection from the consequence of diplomatic action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06a). This was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 to eradicate its responsibility on the issue through alienating the achievements made in the early 2000s from the current situation and through abandoning the view that the damage done to the victims are related to values of human rights and collective community memory.

In response, the plaintiff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pointed out that the Korean government was an entity in the process of the 1965 Agreement, as well as the fact that it continuously neglected the issue since the creation of the Joint Public-Private Committee in 2005. In addition, they pointed out that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still pertains to the plaintiffs' property even if the compensation has to be done through diplomatic measures, and that the 1965 Agreement and its interpretation issue became a major hurdle in exercising the victims' right to claim (Lawyer of plaintiff, 2009a). In other words, they argued that continued dismissal of lawsuits in Japanese courts were based on the interpretation that the 1965 Agreement extinguished the victim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Kim Chang-rok, 2009).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no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comprehensive inclusion of "every right to claim" in the 1965 Agreement"

---

[39] It was argued based on three foreign legal precedents, where "the plaintiffs were under serious conditions of incarceratio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07).

[40]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mfort women" damage strictly belongs the attacker, the Japanese government, and it is wrong to place the Korean government at the same level as the Japanese government. Based on the fact that the entity that gave the incredible agony of forced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is not the Korean government, it cannot be argu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violating the plaintiffs' right to property or right to pursuit happines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06a).

contributed to the current state of the victims' inability to exercise their right to compensation and restoring human rights and dignity (Constitutional Court, 2011). In addition, the plaintiff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viewed it problematic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d continuously failed to act even after it had specified its own duty to act by declaring the government's will to pursue the Japanese government's legal responsibility (Kim Chang-rok, 2009; Constitutional Court, 2011).[41]

However,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government's statement on "legal responsibility" excluded "economic compensation" and did not mean the resolution of the issue through the procedures of Article 3 of the 1965 Agreement but rather, the statement was a "general expression" meaning "seeking state responsibility based on international law"(Lawyer of defendant, 2009a; 2009c; 2009d). In addition, it was argued that the Joint Public-Private Committee's announcement was an affirmation of previous policies, not a promise of pursuing new measures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past measures were taken "based on measures traditionally u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hung In-seob, 2009). The plaintiffs countered this argument stating that further economic compensation is unnecessary as the "Comfort Women" Victims Act have relieved some damages, and that they have been demanding the Japanese government's sincere apology to resolve of "a more important issue" of past settlement rather than economic compensation (Lawyer of defendant, 2009a). The defendant also argu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faithfully tried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regarding different interpretations on the issue through the diplomatic means specified in Section 1, Article 3 of the 1965 Agreement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06a).[42]

In response, the plaintiffs and the court pointed out th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not taken any measure other than conveying the Joint Public-Private Committee's stance to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refore the ministry cannot be viewed as to

[41] It was argued that due to the Korean government's change in interpretation, there is now a more room for interpretation conflicts (Kim Chang-rok, 2009).

[42] The defendant provided various documents including Main points from oral statement at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and General Assembly 유엔 인권위 및 유엔 총회에서의 발언 요지, Efforts to demand legal responsibility to the Japanese government regarding the military 'comfort women (after August 2005)' 군대 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 노력(2005.8. 이후), but failed to demonstrate its will to resolve the issue.

have fulfilled its duty to act (Kim Chang-rok, 2009; Constitutional Court, 2011). Court opinion also pointed out that the ministry's documents provided for the lawsuit does not demonstrate the ministry's will to resolve the issue (Constitutional Court, 2011). In other words, the Korean government's diplomatic measures may have seemed adequate when the victims' "damages" were regarded as a matter of the past, but became problematic as "proper, urgent,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was demanded as the women's atrocities started to become recognized a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s the victims became active entities in the issue. And various attempts to set a new direction in Korea-Japan relations through the context of history settlement were denied by the defendant, and the ministry's regression to past foreign policies became apparent with the 2015 Korea-Japan Agreement.

Projections on Korea-U.S.-Japan Relations: Women's Rights or "National Interest"

The two sides had conflicts over whether a legal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is appropriate considering its probability of relieving the damage done to them as well as considering "national interests," and different views depended on what kind of "future Korea-Japan relations" they anticipated. The plaintiffs argu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must take the conflict resolving procedures specified in the 1965 Agreement in order to exercise its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and emphasized that doing so is not against national interests like "diplomatic reliability" (Lawyer of plaintiff, 2006a; 2009a).[43] The plaintiffs also argued that "avoiding such issue can only worsen Korea-Japan relations," and that following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is "a peaceful and diplomatic resolution" (Lawyer of plaintiff, 2006e). This is because in doing so, the government is pursuing measures specified in the agreement and thus not denying the agreement's validity while exercising diplomatic protection which is "not against international diplomacy customs" (Lawyer of plaintiff, 2006d).

However, the defendant claimed that implementing the state's duty to act is "not appropriate in the aspect of national interests," citing the "difference between international

[43] However, the plaintiffs, citing the ruling ordering the release of the 1965 Agreement negotiations documents, asserted that "there may be some inconvenience in Korea-Japan relations but this should be acceptable given the two countries' peculiar history" (Lawyer of plaintiff, 2006b; Lawyer of plaintiff, 2006e).

politics and domestic issue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07). This is based on the anticipation that resolving the issue through diplomatic measures or through the use of international intervention,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may fail and to prevent such failure in the first place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state.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 "national interest" the defendant argues prioritizes "national prestige," diplomatic convenience, "effectiveness," and rationality over the experience of the female victims.[44] And in response, the plaintiffs argued that the ministry's stance resulted from its lack of understanding in recent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recommendations from international institutions (Lawyer of plaintiff, 2006a).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decid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for the victims to restore their basic rights, given the circumstances at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movements urging for the Japanese government's legal compensation (Constitutional Court, 2011). Also, the court added that even wh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plomatic actions that require strategic choices based on international situation," the defendant's claim of "the issue's potential to become a never-ending legal debate" or "inconvenience in diplomatic relations" cannot be viewed as "serious national interests" and therefore, measures based on Article 3 of the 1965 Agreement are "will not be against true national interest" (Constitutional Court, 2011). Through this ruling, "national interest" became redefined based on the ideas of women's rights and reparation of damage.

Therefore, the plaintiff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viewed that the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is the starting point for establishing future Korea-Japan relations centered on justice, peace, and human rights. The plaintiffs argue that the fulfillment of duty to act is not only for "the restoration of legal justice for the plaintiffs" but also for "an advanced Korea-Japan relations based on peaceful cooperation" (Lawyer of plaintiff, 2006d). They emphasized that the resolution of the issue will eventually benefit both countries "in the long run" as restoring human dignity and values imply the future of universal values (Lawyer of plaintiff, 2006d). In other words, the pursuit of legal

[44] Arbitrations are rarely held due to the possibility of "diplomatic conflicts," "unending legal debate," "ineffectiveness in resolving the issue," and it is concerning as it is related to "national prestige," and in case of loss it is "predicted to cause major hurdles in diplomatic activities with Japan" (Lawyer of defendant, 2009d; Constitutional Court, 2009a; Lawyer of plaintiff, 2006c).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t only to protect the victims' rights, but also to build a new Korea-Japan relationship based on tasks suggested by the issue, such as "preventing future atrocities from happening through the history's lesson," as well as building sustainable peace (Constitutional Court, 2011).

On the other h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rgued that the demand for renegotiating a legal international agreement will "damage the legal stability of Korea-Japan relations" and that "international society's diplomatic trust" in Korea must be considered (Lawyer of plaintiff, 2006c).[45] In other words, the defendant's perspective on future Korea-Japan relations was a "practical" one where Korea and Japan cooperate in economic and military aspects, and where historical issues like the "comfort women" issue do not "hurdle" the relationship anymore (Lawyer of defendant, 2009b).[46] Some constitutional judges who objected to the plaintiffs also viewed the "subtl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require continued cooperation" as a separate matter from "the severity of the issue" (Constitutional Court,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measures specified in Article 3 of the 1965 Agreement to relieve the victims can be viewed as an attempt to change the practice, value, and goal of diplomatic negotiations which traditionally have been made by political decision-making institutions in pursuit of national interest.[47]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he meaning behind the decision,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should have been a mechanism for women's rights and restoration of the victims' rights with a gender perspective. And therefor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beyond the point of simply addressing women and their atrocities in sovereign states and conventional international politics, as it calls for an international solidarity that redefines and reforms "peace,"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 which conventional international politics have been defining based on political struggles

[45] These were excerpted from some of the responses the ministry gave to some plaintiffs and a civic group when they demanded diplomatic protection against Japan.

[46] The Foreign Ministry's 1993 press release reads the following: "...we will have to overcome historical issues so that they will not become obstacles of future Korea-Japan relations required by the new era" (Lawyer of defendant, 2009b).

[47] There are some criticisms that as the decision accepted the agreement's legal structure, and therefore was not adequate enough to address colonialism and the responsibilities of both governments (Kim Seon-hwa, 2017:102).

among sovereign states.

Women Victims and Building Gender-Based Peace

Understanding the Victims' Agony

The plaintiffs emphasized the elderly women victims' agony in order to assert that the ministry's diplomatic discretion should be limited. They asserted that the victims are still suffering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aused by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torture, cruelty, and rape, and included supporting medical documents (Lawyer of plaintiff, 2006a; 2006d). However, in the plaintiffs' argument, the victims were viewed as active entities that rage and resist suppression rather than helpless beings defeated by their agony (Stringer, 2014:31). In their view, the "victims" were regarded as rightful entities and activists that demand the Korean government to fulfill its duty to ac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 accomplish its legal responsibilities. The plaintiffs cited news articles depicting the 700th Wednesday Demonstration, where the elderly victims "attended Wednesday Demonstration … to protect their dignity and values" (Lawyer of plaintiff, 2006a). Also, they explained that the lawsuits the victims had filed in Japa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re to demand the resolu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at such lawsuits led to the current state of discussions on the 1965 Agreement and its implementation. (Lawyer of plaintiff, 2006d; 2009b).

The defendant also stated that they prioritize the victims and they empathize with their agony.[48] However, while they acknowledge that the victim's atrocities are not fully recovered even after over 60 years, the defendant asserted that everyon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were "forced" to experience the agony (Chung In-seob, 2009; Constitutional Court, 2009a). By addressing the issue as an unfortunate event that any Korean who lived during the Japanese rule could have experienced,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issue cannot "trespass" the realm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obligate the state to perform certain duties. Also, the defendant viewed the "victims" as recipients of "humanitarian support and car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laime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stance to "humanely" support the victims has been consistent since the

[48] The defendant stated that "they are…very regretful of the "comfort women" victims agony" and that they do not intend to "degrade the victims' pain and agony" at the end of document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07; Lawyer of defendant, 2009a).

1990s and that the only obligation it has to the victims are of "ethical" ones.[49]

The defendant's logic is a repeti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ies in the 1990s, represented by President Kim Young-sam's announcement, meaning that they view the victims' demand for relief and compensation as a domestic "materialistic compensation issue." Therefore, despite their use of expressions regarding human rights, the Foreign Ministry's context regarding the resolution degrades the "victims" as "clients" of the national welfare system (Fraser, 2017[2013]). In this sense, the victims' atrocities are turned into personal suffering which results in the loss of the effort to understand their historical and collective aspects.

In addition the plaintiffs argued the matter's urgency citing the elderly victims, and condemn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at the ministry's behavior has "the same level of irresponsibility as simply waiting until all of the victims decease to naturally solve the issue" (Lawyer of plaintiff, 2006a; 2009a).[50] In agreement with the plaintiff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construction of historical justice and realization of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the restora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s become impossible after the victims pass away (Constitutional Court, 2011). In response,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government's past policies were "the best approach" to address "the urgency of the issue of restoring the rights" of the elderly victims (Lawyer of defendant, 2009c). However, the ministry's perspective that the victims' damages can be adequately compensated with economic compensations represents the ministry's perspective that the issue is resolved once the victims' decease.

In other words, although both sides address the victims through the image of elderly female citizens in agony, the plaintiffs position the "victims" as active citizens who demand the society's reflection on gender justice, militarism, and colonialism while the defendant views the "victims" as pitiful begins that need help. The defendant's construction

---

[49] This refers to the need for a differentiation between the state's "legal obligation" and "moral obligatio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07). The ministry, in order to demonstrate its effort to address the victims, provided various documents including Results of domestic victims' report and survey data of overseas victims 국내 피해자신고접수결과 및 해외 피해자 실태조사 자료, and the 1993 "Comfort Women" Support Act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06b).

[50] The victims' petition also stated that "though we have been fighting to restore our dignity," they live under agony 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waiting for the victims to disease rather than resolving the issue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Korean Council, 2006).

of the meaning of victims foreshadow later policies that focus on the treatment for the victims' trauma rather than the realization of justice in feminist transitional period.

The 2015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The Continued Discourse on Victims and Delayed Establishment of Peace

Based on the 2011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1965 Agreement, the Korean government followed procedures specified in Article 3 of the 1965 Agreement, which resulted in the 2015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that declared "finalized and irreversible resolution" of the issue. Even in the Moon administration, which stated "victim-centered approaches" as its core principle, the re-negotiation of the 2015 Agreement is regarded as virtually impossible as it was an official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embodied problematic premises on the damage and the victim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1965 Agreement case, rather than conveying the purpose of the case's decision.

Following the norms of traditional international politics, the victims were alienated in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and excluded from its process (Yang Hyun-ah, 2016).[51] Shortly after announcing the agre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stated that the compensation included in the agreement is not based on the Japanese government's legal responsibility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TF, 2017:15). The agreement became a stepping stone for the establishment of a Korea-Japan-United States security system in East Asia, rather than a basis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lieve the victims and building a new Korea-Japan relationship based on women's rights, peace, and justice (Chung Yun-seob, 2015). This is largely remote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the victims' right to compensation should be realized in order to restore their human rights and values 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cannot stop the victims' restoration of rights based on abstract national interests. Again, the issue of including female victims and gender perspective was ignored in the process of preventing wartime sexual violence and

[51] It seems that the Foreign Ministry contacted registered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after the agreement was reached, and they were directly contacted by the ministry in only three cases (Yang Hyun-ah, 2016:35).

peace building.[52]

Addressing the controversy regarding the agreement, the Blue House announced that the government sought for a timely resolution in order to "relieve as many agonizing victims as possible while they are alive" considering "their average age of 89" (Chung Yun-seob, 2015). The Korean government still labels the "victims" as "agonizing elderly women" who should be recipients of humanitarian support, in order to depoliticize the issue of rights restoration and damage relief, while still failing to address what tasks the "comfort women" issue suggests beyond individual support.

Conclusion

Behind the discourse downplaying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as personal matters and making victims as passive recipients of residual welfare, there is an intention to limit the voices that demand human rights restoration beyond social welfare policies which challenge the established power, of men, in international politics. This is hinders the expansion of the feminist movement's goal of preventing gender-based violence and building peace in Korea-Japan relations through historicizing women's experiences. Howeve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still deeply linked with colonialism, neo-colonialism, imperialism, militarism, armed conflicts, gender hierarchy, and exploitation of women's sexuality and the issue calls for a transformative and feminist transitional justice. Therefore, there are tasks needed to be done in order to challenge the neoliberalist turn on "damage" and "victims." These are necessary as 1) in order to recover the language of victims that have made victims as rightful entities, 2) in order to assert women's experiences and voices of victims that demand justice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3) in order to reform social structures to recognize points of suppression beyond acknowledging individual suffering. "Victims" must be identified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who demand gender justice, anti-colonialism, and peace based on their position as victims. And the "damage" that incurred to them should be understood as a starting point for reinterpreting the

[52] The inclusion of the victims could have brought the following result (Brett, 2018). Brett noted that in a 2015 peace negotiation between the Columbian government and militia, victims attended as delegates and as their demand was largely accepted 1) the victims were recognized as a major entity in building peace, 2) the validity of the negotiation increased, and 3) peace was reached through an agreement to bring the level of violence down.

current state and for planning the future for changes in conventional diplomatic and security landscapes, rather than a fixed state of agony.

References

Primary sources

국무조정실(2005),『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국회 여성위원회(2005),『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사무처(1993),『제161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창록(2009),『참고인 의견서』.

____·박배근·양현아·이상희·조시현·이제수·이원규·백시진(2018),『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책임: 전시 성폭력 실태기록, 학술행사 홍보 및 국제협력활동 사업 최종 보고서』, 여성가족부, 11-13830000-000910-01.

대통령비서실편집부(2006),『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정부(1993),『의안 140239: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

외교통상부 장관(2006a),『답변서』.

_____(2006b),『답변서 첨부문서: 일본군 군대 위안부 지원현황』.

_____(2007),『보충답변서』.

외교통상부(1998),『보도자료: 생존 구 군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즈음한 대변인 성명』.

외무부(1990),『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민원 회신』.

이미경 의원 등 29인(2001),『의안 1393: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효재·윤정옥·성봉희(정대협)(1996),『청원 150040: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금증액』.

정윤섭(2015), "靑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연합뉴스」.

정인섭(2009),『참고인 의견서』.

정진성·박정애·한혜인·김은경·박정미(2015),「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운동 초기 활동가·연구자에 대한 구술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5-101.

청구인 강일출(2009),『청원서』.

청구인 대리인 (2006a),『심판청구서』.

_____(2006b),『심판청구서 입증방법: 2002구합 33943 정보공개거부처부취소 판결문』.

_____(2006c),『심판청구서 입증방법: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외교통상부 입장』.

_____(2006d),『심판청구이유보충서』.

_____(2006e),『준비서면』.

_____(2007a),『준비서면』.

_____(2007b),『준비서면』.

_____(2009a),『변론요지서』.

_____(2009b),『심판 보충이유서』.

피청구인 대리인(2009a),『변론요지서』.

_____(2009b),『변론요지서 입증방법: 외무부의 보도자료, 군대위안부 피해자 구호조치』.

_____(2009c),『공개변론 진행에 관한 의견서』.

_____(2009d),『참고서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 38개 여성단체(1990),『공개서한: 내각총리대신 가이후 도시키 귀하』.

_____·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1990),『노태우 대통령 방일에 즈음한 여성계의 입장: 5월 24일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하여 여성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3a).『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3월 13일자 지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

_____(1993b),『'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외교 현안으로서의 종결'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한 질의』.

_____(2006),『재판의 공개심리를 요청하는 탄원서』.

_____·한국교회여성연합회·일본군'위안부' 한국인 생존자 외 21개 단체 (1995).『한국 외무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즉각 중단하라!』.

헌법재판소(2009a),『참고인 진술 및 신문조서』.

_____(2009b),『참고인 진술 및 신문조서』.

_____(2009c),『변론조서』.

_____(2011),『2006헌마788 결정문』.

Academic papers and publications

Aoláin, F. N(2012), "Advancing Feminist Positioning in the Field of Transitional Jus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6(2), pp.205–228.

Bell, C. & Rourke, C. O(2007), "Does Feminism Need a Theory of Transitional Justice? An Introductory Essay",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1(1), pp.23–44.

Brett, R(2018), "The Role of the Victims' Delegations in the Santos-FARC Peace Talks", The Politics of Victimhood in Post-conflict Societies-Comparative and Analytical Perspectives, Druliolle, V. & Brett, R(ed.), Palgrave Macmillan, pp.267-300.

Buckley-Zistel, S. & Zolkos, M(2012), "Gender in Transitional Justice". Gender in Transitional Justice, Buckley-Zistel, S. & Stanley, R(ed.). Palgrave Macmillan. pp.1-36.

Druliolle, V. & Brett, R(2018), "Understanding the Construction of Victimhood and the Evolving Role of Victims in Transitional Justice and Peacebuilding", The Politics of Victimhood in Post-conflict Societies-Comparative and Analytical Perspectives, Druliolle, V. & Brett, R(ed), Palgrave Macmillan, pp.1-22.

Franke, K. M(2006), "Gendered Subjects of Transitional Justice". Columbia Journal of Gender and Law, 15(3), pp.813-828.

Gracía-Godos, J(2016), "Review Essay: Victims in Focu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10, pp.350-358.

Gready, P. & Robins, S(2014), "From Transitional to Transformative Justice-A New Agenda for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8(3), pp.339–361.

Hudson, H(2009), "Peacebuilding Through a Gender Lens and the Challenges of Implementation in Rwanda and Côte d'Ivoire", Security Studies, 18(2), pp.287-318.

Sigsworth, R. & Valji, N(2011), "Continutie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Limitations of Transitional Justice: The Case of South Africa", Gender in Transitional Justice. Buckley-Zistel, S. & Stanley, R(ed.), Palgrave Macmillan, pp.115-135.

Stringer, R(2014), Knowing victims: Feminism, Agency and Victim Politics in Neoliberal Times, Routledge.

강윤희(2013), "제2장: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 형성과 확산-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한 1325호를 중심으로",『젠더와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편), 55-96쪽.

김부자(2008), "'위안부' 문제와 탈식민주의",『역사와 책임: '위안부' 문제와 1990년대』, 나카노 도시오·김부자(편), 이애숙·오미정(역), 선인, 119-146쪽.

김선화(2017),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와 일본군'위안부' 문제-관련 재판과 '2015년 한일합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소형(2019),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부고기사와 집단 기억의 형성", 『인문사회21』, 제10권 4호, 1-14쪽.

김수아(2000),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담론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나카노 도시오(2008),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역사에 대한 책임", 『역사와 책임: '위안부' 문제와 1990년대』, 나카노 도시오·김부자(편), 이애숙·오미정(역), 선인, 119-146쪽.

남광규(2017), "제2장 신정부의 대일정책 방향과 과제", 『통일전략』, 제17권 3호, 45-77쪽.

백승덕(2016), "무엇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을 대표하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63권, 13-23쪽.

손열(2018), "위안부 합의의 국제정치: 정체성-안보-경제 넥서스와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국제정치논집』, 제58권 2호, 145-177쪽.

송에스더(2020), "중대한 인권침해시의 배상 정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2호, 79-127쪽.

신기영(2016), "글로벌 인권 문제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합의 이후의 과제", 『Jpi 정책포럼』, 제183권, 1-12쪽.

양기호(2015), "한일갈등에서 국제쟁점으로: 위안부문제 확산과정의 분석과 함의", 『일본연구논총』, 제42권, 5-30쪽.

양현아(2001), "증언과 역사쓰기-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 역사』, 제60권, 60-98쪽.

_____(2009), "2000년법정을 통해 본 피해자 증언과 법 언어의 만남-체계적 강간과 성노예제를 중심으로", 『한일 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김부자 외 10인, 동북아역사재단, 154-216쪽.

_____(2010),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성차별 판단의 논증", 『경제와 사회』, 215-255쪽.

_____(2016),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그 내용과 절차", 『민주법학』, 제60권, 13-44쪽.

이나영(2018), "경계에서 출발해 경계를 넘어: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초국적 연

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제9권 2호, 191-230쪽.
이효재(1999),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편), 181-238쪽.
장기영(2017), "안보위협이 과거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관한 국내여론 분석", 『국제정치논집』, 제57권 4호, 45-73쪽.
정재민(2016), "일본군 '위안부' 관련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의 관계",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1호, 189-219쪽.
정진성(2019), 『유엔과 인권규범의 형성』, 나남.
조경근(2013), "제5장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 『통일전략』, 제13권 2호, 149-182쪽.
조시현(201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민주법학』, 제46권, 81-112쪽.
프레이저, 낸시(2017), "욕구를 둘러싼 투쟁: 후기자본주의 정치문화에 대한 사회주의 페미니즘 비판이론의 개괄", 『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역), 돌베개(Fraser, N(2013), "Struggle over Needs: Outline of a Socialist-Feminist Critical Theory of Late-Capitalist Political Culture", Fortunes of Feminism, Verso Books, pp.53-8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편)(20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아카데미.
호리야마 아키꼬(2008), "노무현정권의 한일 과거사 처리-한일협정 문서공개와 피해자구제의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동북아국제지역전공 석사학위논문.
황은진(199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의식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협동과정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

김학순 공개증언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金学順公開証言
30周年記念
国際学術大会

2021年8月13日(金) 10:00〜19:00

青年文化空間JU東橋洞・ZOOM

日·韓·英 同時通訳

主管 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

主催 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日本軍「慰安婦」研究会、韓国女性学会、
国会副議長 キム·サンヒ(金相姫)、国会女性家族委員会委員長 ジョン·チュンスク(鄭春淑)、国会議員
ウ·ウォンシク(禹元植)、キム·ミンギ(金敏基)、ホン·イクピョ(洪翼杓)、 イ·ジェジョン(李在禎)
キム·ウォンイ(金元二)、ミン·ヒョンベ(閔馨培)、ハン·ジュノ(韓俊鎬)、チャン·ヘヨン(張惠英)

目 次

プログラム.....424

ご挨拶.....427

祝辞.....429

第 1 セッション. 金学順公開証言 30 周年の意味.....446

チョン・ジンソン(鄭鎭星) I 国連人種差別撤廃委員会委員、元挺隊協共同代表.....446

梁澄子 I 日本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共同代表.....451

植村隆 I 日本 「週刊金曜日」発行人兼社長、元朝日新聞記者.....458

第 2 セッション. 金学順証言の波紋と共鳴.....470

梁鉉娥(ヤン・ヒョンア) I ソウル大学教授.....470

アレクシス·ダッデン(Alexis Dudden) I アメリカ コネチカット大学教授.....483

エリザベス·W·ソン(Elizabeth W. Son) I アメリカ ノースウェスタン大学教授.....485

キャスリン·バスゲート(Kathryn Bathgate) I ドイツ ミュンスター大学修士課程.....492

第 3 セッション. 歴史否定のバックラッシュ.....498

金富子 I 日本 東京外国語大学教授.....498

山口智美 I アメリカ モンタナ州立大学准教授.....504

カン・ソンヒョン(康誠賢) I 聖公会大学教授.....519

ナ・ユシン(羅宥信) I ドイツ GPB カレッジ講師、コリア協議会会員.....544

第 4 セッション. 日本軍性奴隷制問題、正義ある解決のための課題及び方向性.....550

ペク・ジェイエ(白在礼) I アメリカ マサチューセッツ大学博士課程.....550

イ・ジェイム(李在任) I ソウル大学博士課程.....561

プログラム

時間	内容
10:00～10:15	**祝辞および開会の辞** 司会:　チェ･グァンギ(崔光基)（正義記憶連帯理事)
10:15～10:30	**国内外のお祝い映像メッセージ** イ・オクソン(李玉善) (人権活動家 / 日本軍「慰安婦」被害生存者) イ・ヨンス(李容洙) (人権活動家 / 日本軍「慰安婦」被害生存者) テオ・ファン・ボーヴェン(Theo van Boven) (オランダ マーストリヒト大学教授 / 元国連賠償問題特別報告者) ゲイ・マクドゥーガル(Gay McDougall) (アメリカ フォーダム大学教授 / 元国連 戦時下の組織的強姦・性奴隷制および奴隷制類似慣行に関する特別報告者) ウスティニア・ドルゴポル(Ustinia Dolgopol) (オーストラリア フリンダース大学教授 / 元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検事) パトリシア・ビサー・セラーズ(Patricia Viseur Sellers) (イギリス ロンドン・スクール・オブ・エコノミクス・アンド・ポリティカル・サイエンス教授 / 元 2000 年女性国際戦犯法廷検事) インダイ・サホール(Indai Sajor) (ノルウェー ノルウェー難民評議会顧問 / 元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共同代表) 渡辺美奈 (日本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館長) **記念映像 「我々が金学順である」**
10:30～12:00	**<第1セッション> 金学順公開証言30周年の意味** 司会: イ・ナヨン(李娜榮) (正義記憶連帯理事長･中央大学教授) 基調発題. チョン・ジンソン(鄭鎭星) (国連人種差別撤廃委員会委員、元挺隊協共同代表) 発表 1. 梁澄子 (日本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共同代表)

	発表 2. 植村隆 (日本 「週刊金曜日」発行人兼社長、元朝日新聞記者)
12:00～13:30	**昼休み**
13:30～15:10	**<第2セッション> 金学順証言の波紋と共鳴** 司会: ペ・ウンギョン(裵恩慶) (ソウル大学教授) 発表 1. ヤン・ヒョンア(梁鉉娥) (ソウル大学教授) 発表 2. アレクシス·ダッデン(Alexis Dudden) (アメリカ コネチカット大学教授) 発表 3. エリザベス·W·ソン(Elizabeth W. Son) (アメリカ ノースウェスタン大学教授) 発表 4. キャスリン·バスゲート(Kathryn Bathgate) (ドイツ ミュンスター大学修士課程)
15:10～15:20	**休憩**
15:20～17:00	**<第3セッション> 歴史否定のバックラッシュ** 司会: キム・ドゥクチュン（金得中）(国史編纂委員会史料調査室長) 発表 1. 金富子 (日本 東京外国語大学教授) 発表 2. 山口智美 (アメリカ モンタナ州立大学准教授) 発表 3. カン・ソンヒョン(康誠賢) (聖公会大学教授) 発表 4. ナ・ユシン(羅宥信) (ドイツ GPBカレッジ講師、コリア協議会会員)
16:45～17:00	**休憩**
17:15～18:00	**<第4セッション> 日本軍性奴隷制問題、正義ある解決のための課題及び方向性** 司会: キム・スジン(金秀珍) (大韓民国歴史博物館学芸研究官) 発表 1. ペク・ジェイエ(白在礼) (アメリカ マサチューセッツ大学博士課程) 発表 2. イ・ジェイム(李在任) (ソウル大学博士課程)
18:00～19:00	**質疑応答&総合討論** 司会: キム・スジン(金秀珍) (大韓民国歴史博物館学芸研究官)

ご挨拶



正義記憶連帯理事長

李娜栄(イ・ナヨン)

(中央大学社会学科教授)

8 月 14 日(土)は日本軍性奴隷制の被害生存者であった金学順公開証言 30 周年となる日です。この意義深い日を迎え、国際シンポジウムを開催することができ光栄です。

1991 年 8 月 14 日、金学順の勇気ある証言は歴史的な真実を世にさらけ出し、全世界の被害者を呼び覚ますことで、被害者の名誉と尊厳の回復に貢献しました。さらに、戦時性暴力を普遍的な女性の人権問題として国際社会に提起し、その解決に向けた市民社会運動の場を開きました。金学順の公開証言に触発された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市民運動の結果、国際社会は人権規範を更新し、女性の視点からグローバル人権史を新たに書き綴ってきました。

それから 30 年が過ぎた今、日本政府による法的責任の回避や組織的な少女像撤去は継続されており、歴史否定勢力の拡張は日本軍性奴隷制問題の正義なる解決をさらに厳しく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今日の被害者たちの証言をどのように記憶し、その意味を拡散・継承していくべきかという課題が私たちの前に残されています。

今日の国際学術大会は、金学順の残したものを振り返り、日本軍性奴隷制問題の真実を知らせ闘った被害生存者活動の意味を多角的に議論しながら、依然として残されている課題と新たに台頭した問題を考えるためにつくられました。4 部構成となっているパネルでは、鄭鎭星(チョン・ジンソン)教授、日本の梁澄子(ヤン・チンジャ)代表、上村隆記者、金富子(キム・プジャ)教授、韓国の梁鉉娥(ヤン・ヒョナ)、康誠賢(カン・ソンヒョン)教授、アメリカのアレクシス・ダデン、山口智美、エリザベス・ソン教授など韓国内外の専門家のほか、発表文の公募に応じて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国内外の新進研究者が参加し、性別と民族、世代と言語の壁を越え、真摯な討論を繰り広げます。

来臨をたまわり、ご出席くださる国内外の研究者の皆さま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企画段階からご一緒してくださり快く共催に応じてくださった日本軍「慰安婦」研究会と韓国女性学会、金相姫(キム・サンヒ)国会副議長、鄭春淑(チョン・チュンスク)国会女性家族委員会委員長、ならびにウ･ウォンシク(禹元植)、キム･ミンギ(金敏基)、ホン･イクピョ(洪翼杓)、イ･ジェジョン(李在禎)、キム･ウォンイ(金元二)、ミン･ヒョンベ(閔馨培)、ハン･ジュノ(韓俊鎬)、チャン･ヘヨン(張惠英)国会議員ら皆さまに特別に感謝いたします。

コロナ感染症のパンデミックのため現場参加はままなりませんが、映像により合流してくださる日本軍「慰安婦」生存者の李容洙(イ・ヨンス)人権運動家、国連特別報告官テオ・ファン・ボーベン教授、ゲイ・マクドゥーガル米国フォードハム大学教授、2000 年女性国際戦犯法廷で検事を努めたオーストラリアのフリーダース大学のウスティナ・ドルゴポール教授と、英国ロンドン政経大学パトリシア・セラーズ教授、2000 年法廷の共同代表だったインダイ・サホール・ノルウェー難民協議会顧問、そして、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渡辺美奈館長など、日本軍性奴隷問題解決運動の中で決定的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国内外の皆さまにも心から感謝の気持ちを伝えます。

どうか今回の学術行事が金学順さんの証言の意味を分かち合い、継承する意義深い場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祝辞



日本軍「慰安婦」研究会会長

金得中(キム・ドゥクチュン)

(国史編纂委員会史料調査室長)

今から 30 年前の 1991 年 8 月 14 日、一人の女性の叫びがありました。日本軍「慰安婦」の経験を吐露した金学順ハルモニにとって、この証言は 50 年前の傷を再びむし返すような苦痛であったことでしょう。

しかし、その苦痛を踏み越えて立ち上がった金学順ハルモニの大胆な証言は、私たちの無関心と無知に気づかせてくれました。植民地から解放されて数十年が経ったというのに、自分たちの歴史についてまともに知らなかったという無知、植民地・反植民の下で多くの女性が戦場に連れていかれ苦痛を受けた実情さえまともに知らなかったという無関心は、金学順の勇敢な公開証言により初めて破られはじめました。

金学順の公開証言から 30 周年となる本日、金学順の証言がどのような結果をもたらしたのかについて思いを巡らせます。金学順の証言によって顕になった歴史的真実は、他の多くの日本軍「慰安婦」被害者らが証言をする始発となりました。日本軍「慰安婦」市民運動と学術研究はその幅と深さにおいて多くの成長を重ね、女性人権や植民地問題、さらに戦争と平和の問題を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金学順の証言から始まった小さな歩みは、今や全世界の女性運動と平和運動レベルの連帯へと発展し、私たちがつくっていくべき未来の世界の青写真を描いてくれています。

30 年前の金学順の心を振り返りながら開催する「金学順公開証言 30 周年記念国際学術大会」には、いまの現状を確認し、私たちが今後どのような世界をつくっていくべきかを議論するという貴重な意味があると考えます。

本日貴重な論文を発表してくださる発表者と討論者、司会者の皆さま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また、本学術会議の準備にあたってくださった関係者の方々のご尽力にも感謝いたします。

日本軍「慰安婦」研究会は、金学順証言の意味を心に刻み、日本軍「慰安婦」の歴史的真実を究明するため最善を尽く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祝辞



韓国女性学会 会長

李恵淑(イ・ヘスク)

(慶尚国立大学社会学科)

1991 年 8 月 14 日、金学順は日本軍性奴隷制の被害者として、初めて被害事実を公開の場で証言し、日本を相手に訴訟を提起しました。金学順の証言以降、国内の被害者だけでなく、フィリピン、オランダなど世界各地の日本軍性奴隷制の被害者が相次いで証言しました。金学順の証言は、埋もれていた歴史の真実を世に知らせ、被害者の尊厳の回復に貢献したという点で意味があります。その後、2017 年 12 月には、彼女が初めて証言をした 8 月 14 日が「日本軍『慰安婦』メモリアルデー」という国家記念日として指定されました。それでも日本政府は、強制動員と介入により行われ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否定し、法的責任の回避や無視、歪曲を続けてきています。

このような流れを踏まえ、本日「金学順公開証言 30 周年記念国際学術大会」を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各国からこの分野の専門家や新進研究者の方々が、金学順公開証言 30 周年の意味、金学順証言の波長と共鳴、歴史否定のバックラッシュ、日本軍性奴隷制問題、正義の解決に向けた課題および方向について発表と討論が行われる予定です。

韓国女性学会は、学会活動を通じて日本軍性奴隷制の関連研究に長らく取り組んできました。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日本軍「慰安婦」研究会と共催する今日の学術大会を機に、被害者の証言の意味だけでなく、日本軍性奴隷制に関連した具体的な内容と争点、今後の課題などについて、学界と市民社会と政府のいずれも、より多くの関心を持てるよう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今日のこの場を通して、関連の争点や今後の課題を理解し、言説と運動が出会い、理論的・実践的に良い様々な方策が出てくるよう願っています。

学術大会に参加してくださった発表者と討論者、司会者の皆さま、映像で祝賀メッセージを送ってくださった方々、また準備のために尽力された皆さま、ご参加いただいたすべての方々に感謝申し上げます。私たち皆にとって今日の学術大会が有意義で有益な時間に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祝辞



国会副議長

金相姫(キム・サンヒ)

(京畿道富川市丙、共に民主党)

こんにちは。国会副議長の金相姫(キム・サンヒ)です。

1991 年 8 月 14 日、金学順ハルモニが日本軍「慰安婦」の被害事実について初めての公開証言を行いました。被害者お一人の勇気ある第一歩のおかげで、半世紀近く隠されていた「慰安婦」問題が国内外で公論化さ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日の公開証言は、被害者の尊厳と名誉回復のための至難な道のりの始まりとなり、戦時下での性暴力問題に関する人権運動と国際的研究の出発点となりました。2000 年「女性・平和・安全保障に関する国連安保理決議 1325 号」が採択されるきっかけにもなりました。

わが国は、2018 年から 8 月 14 日を国家記念日「日本軍慰安婦被害者メモリアルデー」に指定して、ともに記念しています。日本軍性奴隷問題の解決を促す水曜集会も 1,500 回以上続いています。被害者と市民の連帯によってつくり出された、世界に類を見ない珍記録であります。

しかし、先はまだまだ遠いです。日本政府は依然として戦争犯罪の責任を回避しています。歴史を消し歪曲しようとする動きもまた繰り返されています。被害者の方々が日本国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訴訟でも、裁判部ごとに異なる判断が出されており、もどかしく感じられます。そうしている間に、今年に入ってお二人の被害者が亡くなられました。政府に登録された被害者 240 人のうち、いまや生存しておられる方は 14 人に過ぎません。

このような時期に、金学順さんの公開証言の意味に改めて光を当て、日本軍性奴隷制問題の正義ある解決のあり方を議論する国際学術大会を開催することは大変意義深いことです。行事の準備にあたってくださった正義記憶連帯と日本軍「慰安婦」研究会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発表してくださる国内外の専門家の方々のご高見をしっかりと拝聴させていただきます。被害者の方々の活動の意味をどのように拡散し継承して進むべきか、韓日関係の懸案の核心である「慰安婦」問題をどう紐解いてゆくのか、その知恵を得られる時間になります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祝辞



国会議員

鄭春淑(チョン・チュンスク)

国会女性家族委員長

(京畿道龍仁市丙、共に民主党)

こんにちは。国会女性家族委員長で京畿道龍仁市丙選出の国会議員、共に民主党の鄭春淑(チョン・チュンスク)です。

1991 年 8 月 14 日、故金学順ハルモニが日本軍「慰安婦」問題を世に知らせてから、すでに 30 年が過ぎました。改めまして、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方々がどれほど長く至難な闘いを続けてこられたのかを振り返らずにはいられません。

故金学順ハルモニの公開証言から 30 周年を迎え、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日本軍「慰安婦」研究会、韓国女性学会、そして尊敬する金相姫(キム・サンヒ)副議長をはじめとする先輩・同僚議員の皆さまとともに国際学術大会を開催する運びとなり、大変意義深く思います。

本日の学術大会を通じて、日本軍「慰安婦」運動の成果を振り返り、正義なる問題解決に向けた方向を共に話し合っ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より良い意見を交わすために時間を割いてくださった活動家、専門家の皆様に感謝申し上げます。特に世界各地で日本軍「慰安婦」問題を積極的に知らせてこられた海外パネルの皆さまに深い感謝の気持ちを伝えます。

金学順ハルモニの勇気ある証言は、息をひそめ鬱憤を呑み込むようにしていた多くの被害者を世の中に連れ出してくれました。全世界に歴史の真実を伝え、日本政府の責任を問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少しなりとも被害者の名誉と尊厳を回復するためのきっかけとなりました。さらに、戦時中の性犯罪の深刻さを訴え、平和と人権の価値を拡張させる基盤となりました。

日本軍「慰安婦」問題が韓国を越えて世界的運動へと広がり得たのは、世界各地で問題を伝え、解決を促してきた市民の方々がおられたからです。毎週水曜日、旧日本大使館前で開かれている水曜デモは、つい先日 1500 回目を越えました。世界で最も長く経った、悲しくも誇らしい記録です。

このような努力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未だに責任逃れをしています。歴史を歪曲・否定し、組織的に少女像の撤去運動を繰り広げるようなことも起こっています。

被害生存者の方々が 14 名しか残っておられません。心が重く、申し訳ない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一日も早く日本政府が法的賠償と心からの謝罪ができるよう、共に連帯し、力を合わせてまいります。

国会女性家族委員長として、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人権保護と被害回復にお役立てしていただけますよう、法や制度に注意を払いますことをお約束いたします。

祝辞



国会議員

禹元植(ウ・ウォンシク)

(ソウル蘆原區乙、共に民主党)

こんにちは。共に民主党の国会議員、禹元植(ウ・ウォンシク)です。

真実のための金学順ハルモニの証言によって辛い歴史の真実が明らかになってから、30年もの時が流れました。これまで被害者の名誉と女性の人権回復の歴史を共に書き下ろしてきた、正義記憶連帯の李娜栄(イ・ナヨン)理事長ならびに関係者の皆さまに尊敬と感謝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

金学順ハルモニの証言から、今年でちょうど 30 周年です。30 年前の金学順ハルモニの小さな叫びは、1500 回の水曜集会と市民の声へと引き継がれ、真実を伝えるこだまとなりました。

今年 1 月、韓国の裁判所は、日本に「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賠償責任があるとして、光復 76 年ぶりに歴史的な判決を下しました。「慰安婦」被害者たちに対する計画的かつ組織的に行われた反人道的行為を認めた初の判決であります。それでも日本は帝国主義の残忍な蛮行を否定し、依然として歴史を歪曲しています。しかし、滔々とした歴史の流れに逆らうことはできません。

「慰安婦」問題はもはや歴史的論争の対象ではない真実の問題であり、日本の謝罪もまた賛否の問題ではない正義の問題です。日本政府は「慰安婦」問題の解決に責任ある当事者として、普遍的基準に相応する形で過去を認め、「慰安婦」問題の解決に向けた意志を示すべきであります。日本政府が「慰安婦」を重大な反人道的犯罪として認め、法的責任をまっとうして初めて被害者たちの名誉が回復され人権が保障されるのです。

いま、14 人の方がいらっしゃいます。人権を侵奪され、労働が収奪されたこのような苦痛の歴史を、未来世代は決して忘れてはなりません。歴史を正すための研究と教育を進め、より多くの学生や市民が悲しい歴史の痛みをともに分かちながら連帯できるようにするべきでしょう。これまで皆さまの研究が歴史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ための灯りになったように、ハルモニたちの名誉が回復する日までともに歩み続けてください。

私も独立運動家の子孫として、洪範図(ホン・ボムド)記念事業会理事長として、「慰安婦」問題の解決に使命感を持って先頭に立ちたいと思います。私の事務室の一角には、党の院内代表を努めていた時に「正義記憶連帯」からいただいた「平和の少女像」が置かれています。少女像を見ながら過去の惨状を記憶し、被害者のハルモニたちの声に最善を尽くして応えたいと誓ってきました。 ぎゅっと握られた少女像の拳のように思いを引き締め、一生痛みを抱えて生きてこられたハルモニたちの痛みと傷が癒やされるまで、最善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祝辞



国会議員

金敏基(キム・ミンギ)

(京畿道龍仁市乙、共に民主党)

こんにちは。

国会議員の金敏基(キム・ミンギ)です。

「私が生きている証拠です」と金学順ハルモニが勇気を持って辛い歴史を証言されてから 30 年が過ぎました。光復から半世紀近く沈黙を守っていた痛恨の歴史は、金学順ハルモニの証言を皮切りに、その姿を現しはじめました。

最初の証言以降、国連人権委員会の現場で、街かどや法廷で、ハルモニたちの証言は絶えることなく続きました。ハルモニたちは後ろに身をひそめず前に出て被害事実を証言する道を選び、二度と残酷な歴史が繰り返されないことを願って活動を続けました。

その至難な過程を経る中で、犯罪の被害者であった幼い少女は、強靭な人権運動家へと生まれ変わりました。国内外を駆けめぐりながら戦時下での女性への性暴力問題について語り、普遍的人権と平和の価値を絶えず訴えつづけました。

しかし、ハルモニたちの弛みない闘いにもかかわらず、日本軍「慰安婦」問題は未だ解決に至っていません。日本政府は依然として責任を回避し、公式謝罪と賠償を拒否しており、事実を歪曲する論文はそのまま学界に発表されています。

金学順公開証言 30 周年記念国際学術大会は、金学順ハルモニの証言以降の 30 年を振り返り、日本軍性奴隷制問題の真実を伝え、被害者の闘いの意味について議論するべく用意された場です。日本政府の責任ある謝罪の有無とは別に、世界の人権史に意味ある足跡を残してきた 30 年間の闘争の歴史を振り返る意味深い場となるでしょう。

行事の準備のためご尽力された正義記憶連帯、日本軍「慰安婦」研究会、韓国女性学会の関係者の方々に深い尊敬と感謝の気持ちをお伝えいたします。報告と討論を担当してくださった参加者の皆さまにも、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ハルモニの安息を祈願いた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祝辞



国会議員

洪翼杓(ホン·イクピョ)

(ソウル中區城東區甲、共に民主党)

こんにちは。国会議員の洪翼杓(ホン·イクピョ)です。

「金学順公開証言 30 周年記念国際学術大会」が開かれますことを意味深く思います。本日の行事を一緒に催してくださった正義記憶連帯と日本軍「慰安婦」研究会、韓国女性学会、そして金相姫(キム・サンヒ)副議長をはじめとする同僚議員の皆さま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1991 年 8 月 14 日は、故金学順ハルモニが「慰安婦」被害者であったことを初めて公開証言で明らかにした日です。政府は金学順ハルモニの証言が行われた日を「世界慰安婦メモリアルデー」に指定し記念しています。公開証言の勇気は他の被害者の証言を引き出すことになり、隠されたままになっていたかもしれない「慰安婦」の強制動員、人身売買、性搾取の悲劇を表に出し、戦時性暴力と人権問題を国際的に公論化させました。

歴史的真実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一人の人間の尊厳ある決定と勇気に、韓日両国の良心ある市民はもちろん、世界が連帯し、戦時性暴力問題に力を合わせ始めました。しかしながら未だに、「慰安婦」被害者の名誉回復のため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は多く残されています。日本政府は「慰安婦」被害者に誠意ある謝罪と妥当な賠償を早急に果たすべきであり、韓日両国をはじめ世界には、再び繰り返されてはならない歴史について教育するべき義務があります。「慰安婦」問題は韓日両国間の問題を超えて、世界が記憶しなければならない戦争犯罪の記録であるからです。

去る 1 月 27 日にホロコースト追悼日を迎え、在韓イスラエル大使館と在韓ドイツ大使館が共同で追悼記念式を開きました。わが国と日本が戦争犯罪の加害国と被害国として第 3 国でこのような記念式を開く日はまだ遠い先のようにも見えますが、私たちがこれからつくり出すべき未来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そのために日本政府は責任ある態度で歴史に向き合い義務を果たすべきでしょうし、私たちは引き続き「慰安婦」問題の真実を伝えることに努めるべきでありましょう。

本日、金学順ハルモニの証言 30 周年を迎えて開かれる国際学術大会は、証言以降の 30 年を振り返り、「慰安婦」問題の真実を知らせ闘った被害者の活動の意味を多角的に議論する場です。この問題を長いあいだ掘り下げてきた市民活動家と研究者の方々が、国や言語、世代を

超えて一堂に会しました。本日行われる多彩な議論に私も耳を傾け、国会として取り組むべき課題について、より責任をもって担っていくようにいたします。

重ねまして、本日の討論会を設けてくださった関係者の皆さまと参加者の皆さまに感謝申し上げます。

祝辞



国会議員

李在禎(イ･ジェジョン)

国会外交統一委員会幹事

(京畿道安養市東安區乙、共に民主党)

こんにちは。

国会外交統一委員会幹事を務める共に民主党議員、李在汀(イ・ジェジョン)です。

30 年前、金学順ハルモニが勇気を出して証言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記念する「世界日本軍『慰安婦』メモリアルデー」を迎え、過ぎし日の真実を知らしめ、来たる日の課題を考える学術大会を開催されますことを意味深く思います。

「ちがう。これは正すべきだ」。 震える声で叫んだその証言は、真実は隠され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響きとして、私たちの中に今でも残っています。

日本の組織的な少女像撤去や歴史を否定しようとする動きの中にあっても、あの日の勇気ある声が平和に向けた議論につながる今日の場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必ずこのことを知るべきだ」と声を上げた彼女の叫びを記憶しながら、市民社会とともに日本軍性奴隷制問題を伝え闘った被害者の方々の名誉を回復する歩みに私もご一緒させていただくことをお約束いたします。

学術大会を準備してくださった、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日本軍「慰安婦」研究会と韓国女性学会のスタッフの皆さま、そして報告と討論に参加されるすべての皆さま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今日の議論に私も耳を傾け、女性の人権と平和のために国会としてできることを考え、トライしてまいり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祝辞



国会議員

金元二(キム・ウォニ)

(全羅南道木浦市、共に民主党)

こんにちは。

共に民主党の木浦(モクポ)市選出の国会議員、金元二(キム・ウォニ)です。

「金学順公開証言 30 周年記念国際学術大会」の開催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ご一緒されました金相姫副議長や先輩・同僚議員の皆さま、国際学術大会を主催してくださった正義記憶連帯、日本軍「慰安婦」研究会、韓国女性学会をはじめとする専門家の皆さまに感謝申し上げます。

今年の 8 月 14 日は故金学順ハルモニが 30 年前に日本軍「慰安婦」被害事実を初めて世の中に証言された日です。金学順ハルモニの証言は、全世界の日本軍「慰安婦」被害者を目覚めさせました。被害者の方々の勇気ある証言と訴えにより、日本軍「慰安婦」問題は国際社会において非人道的犯罪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30 年が経っても、「慰安婦」問題に対する日本の心のこもった謝罪はありません。日本政府は平和の少女像の撤去を強く求めて、極右勢力は平和の少女像の名古屋での展示会をはじめ、大阪とミュンヘンの展示会側にも脅迫と威嚇を執拗に繰り広げています。

日本政府は反省なき行動を中断し、「慰安婦」被害者に誠意ある謝罪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被害者たちの証言を公式に認めて歴史を正す流れにに一日も早く参加するよう願います。

私たちには取り組むべき課題が今も残されています。日本軍「慰安婦」の真相究明、名誉回復、歴史歪曲対策づくりと、被害者中心の問題解決に向けた断固とした長期的な代案が必要です。本日の国際学術大会が、日本軍「慰安婦」被害者をたたえ、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を模索する意味深い場になりますことを願います。

私もまた「慰安婦」被害者運動の持続的な活動と被害者問題の解決に向け、多角的に努力してまいります。コロナ禍と記録的な暑さの中、14 名の生存被害者のハルモニたちのご健康をお祈り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祝辞



国会議員

閔馨培(ミン･ヒョンベ)

(光州光山區乙、共に民主党)

こんにちは。国会議員の閔炯培(ミン・ヒョンベ)です。

1991 年 8 月 14 日、日本軍性奴隷制の被害者である故金学順先生の証言が世の中を動かしました。数十年間、地中に埋もれていた真実が、ついに頭をもたげました。日帝の醜悪な悪行が広く知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世界のいたるところで相次いで、過去の傷を抱えて生きてきた数多くの被害者が勇気を出すことができました。

誰も口に出すことができずにいました。故金学順先生の勇気ある決断があったからこそ、残酷な真実が知ら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被害者の名誉と尊厳回復のための第一歩となりました。感謝し、尊敬しております。

＜金学順公開証言 30 周年記念国際学術大会＞を開催するため、「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日本軍『慰安婦』研究会」、「韓国女性学会」をはじめ、多くの方々が大変ご尽力されました。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ご一緒された同僚議員の皆さまにもお礼を申し上げます。私もともに真実を照らす希望の灯になります。

恥ずかしく申し訳ない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慰安婦」問題の完全な解決をなす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相変らず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が残っています。最初の証言から 29 年が流れました。「水曜集会」はいつの間にか 1500 回を超えました。240 人の被害者の中で、14 人の方だけが生存しておられます。私たちがもう少しスピード感を持って解決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本日の討論会が勇気ある証言を反すうし、歴史を正すきっかけ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小さな水滴は大きな岩を突きぬけます。私たちの思いが一つになれば、できないことはありません。私も国会で、法と制度の補完などに一層の努力を傾けます。

ご参加されました多くの皆さまのご健康と平和を祈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祝辞



国会議員

韓俊鎬(ハン･ジュノ)

(京畿道高陽市乙、共に民主党)

こんにちは。国会議員の韓俊鎬(ハン・ジュンホ)です。

被害者の名誉と人権の回復に向けた「第 9 回世界日本軍『慰安婦』メモリアルデー」の記念行事が開かれましたことを大変嬉しく思います。

意義深いこの場をともにつくってくださった先輩・同僚議員の皆さま、正義記憶連帯をはじめとする関係者の皆さま、そして参加してくださった方々にも、感謝の気持ちをお伝えいたします。

先日の東京オリンピック開会式で選手団入場の際に使われた入場曲の作曲者が、日本軍「慰安婦」の蛮行を否定する動きの先頭に立ってきた、日本の代表的な極右人物だという事実が知らされました。世界平和に貢献するというオリンピック理念に真っ向から反することです。

金学順ハルモニが勇気を出してから 30 年が経ちましたが、今でも日本は過去事について心からの謝罪や再発防止の約束を示していません。むしろ日本政府は最近、ドイツ南部のミュンヘンで開かれた「平和の少女像」展示の撤去まで要求しました。

国連もやはり日本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誠意ある謝罪と正しい教育を勧告してきましたが、日本政府は「慰安婦」の強制性を否定する従来の立場を繰り返すばかりです。

日本帝国主義と全体主義体制の下で、誰からも侵害されてはならない人権を蹂躙されながら、幼い少女たちが性奴隷として戦争に強制動員された胸の痛む歴史は、永遠に記憶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真実であります。

国民を抜きに存在する国家などありません。私たちは被害者中心の原則にしたがって、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の解決方向の模索に向けて努力し続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人権と平和」の価値を共有し、真の被害回復が実現するよう、国会において最善を尽くすことをお約束いたします。

永眠された被害者の方々の永遠の安息を祈り、遺族の皆さまにも深くお見舞い申し上げます。

ご多忙な中でもご出席くださった関係者の皆さまをはじめ、参加されました皆さまに心からの感謝を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祝辞



国会議員

張恵栄(チャン・ヘヨン)

(比例代表、正義党)

正義党の国会議員、張恵栄(チャン・ヘヨン)です。

金学順先生の公開証言とともに「慰安婦」運動が始まってから、30 年が経ちました。これを記念し、被害者の闘いの意味を多くの方々とともに考えるための国際学術大会を主催することができ、とても意義深く思います。

「私が被害者です」。30 年前の証言は、痛いという言葉でも十分言い尽くせなかった残酷さを、個人の記憶として残しておくのではなく、皆の歴史へとつくり変えた力でありました。8 月 14 日は世界日本軍「慰安婦」メモリアルデーに指定し、その後もまた別の記憶がろうそくを一緒に灯すように後に続きました。この歴史は「私も被害者」であることを社会に告発する今日のミートゥー(＃MeeToo)運動とも結びついています。最初に証言を始められた金学順先生の勇気に、改めて敬意を表します。

30 年の闘いの間、歴史はおのずと進むものではなく、勇気が歴史を導くのだという点を学ぶことができました。そして一方、事実の認定と公式謝罪という手続きを無視して一方的に進められた 2015 年の韓日合意と、今でも至るところで起きている少女像撤去の要求からも見られるように、過去にしっかり向き合わない限り、歴史はいつでも後退しかねないという事実にも気づかされました。私たちが立ち止まることなく、記憶し、語り続けねばならないのは、そのためです。

私も「慰安婦」運動 30 周年を迎えて、謝罪のない世の中に背を向けはしまいと、決意を新たにしています。残念な訃報に接するたびに、残りの生存者を数えるだけの無力な世の中を、そのままほ放っておくだけにはいたしません。日本政府の真の謝罪がなされるよう、それによって皆が回復できる世の中へと進むよう、私もまた不断に語り、ともに歩みます。

本日の学術大会を主催・主管された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共催された日本軍「慰安婦」研究会ならびに韓国女性学会、そして尽力されたすべての方々に感謝申し上げます。

第 1 セッション. 金学順公開証言 30 周年の意味

基調発題: 歴史的証言の現在性、人権と平和の道をつくる！

チョン・ジンソン(鄭鎭星) I 国連人種差別撤廃委員会委員、元挺隊協共同代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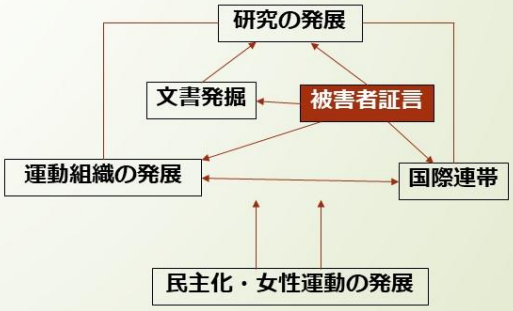
内容

(1)日本軍「慰安婦」問題の「社会的」発見と金学順の登場
(2)金学順の証言の具体的過程
(3)金学順の証言以降 I：社会的関心、運動と研究の爆発
(4)金学順の証言以降 II：被害者から活動家に
(5)ポスト被害者の時期における金学順の証言の意味と課題





(1) 日本軍「慰安婦」問題の「社会的」発見と金学順の登場



長年の隠蔽：要因：家父長制、解放後の国際関係、権威主義政府、経済的難関など。
それでも地道に、資料発掘、研究、小説、映画などが続く。

1991.7　　証言
1991.8.14　記者会見、公開証言
1997.12.16 逝去
2012.　　アジア連帯会議にて
8.14を世界日本軍慰安婦メモリアルデーに
2018.　　韓国政府、国家記念日に指定





(2) 金学順の公開証言の具体的背景と過程

1. 日本政府による歴史的事実の否定
2. 戦後補償運動の展開
3. 韓国教会女性連合会の活動
4. 挺対協組織の発展







(3) 金学順の証言以降 I：社会的関心、運動と研究の爆発

1. Me Tooの拡散： 文玉珠(ムン・オクチュ)… 韓国、北朝鮮、日本、アジアの被害国、オランダ
2. 運動の爆発：水曜デモ(1992.1.8)、海外での証言集会、追悼碑…
3. 法的正義の追求：訴訟（日本、米国、韓国など）
4. 研究の画期的発展：文書発掘（1991.11）、真相究明
5. 日本政府の態度変化：1、2次調査報告書、歴史教科書への記載、国民基金…
6. 韓国政府の特別法制定（1993.6）
   「日帝下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生活安定支援および記念事業などに関する法律」
7. 南北連帯・海外同胞連帯・アジア連帯・国際連帯
8. 新しい国際人権規範の形成：戦時性暴力問題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s.



(4) 金学順の証言以降 II：被害者から活動家に

1. 被害者の意識変化：被害者から活動家へ
   最も重要な癒し、名誉回復
   ナビ(蝶々) 基金、金福童(キム・ボクトン)センター、ベトナム連帯活動、
   朝鮮学校への奨学金など
2. 歴史的特殊性と普遍性の和解・脱植民地主義研究課題が残る
3. 運動の実践方向を提示







(5) ポストハルモニの時期における金学順の意味と課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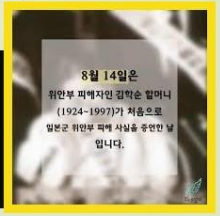
1. 金学順の証言の現在性
   女性人権と平和という普遍的価値
   韓日関係を越え、アジアへ、世界へ



1997.12.16

2. 金学順の証言の実践性
   金学順が被害者から活動家に変わったのと同様に、
   運動も被害補償から普遍的価値を先導する組織へと拡張
   アジアの女性人権と平和への貢献





30年の運動を基礎に、新たな段階を準備:

1. 絶え間ない資料発掘と研究、資料の総合・体系化・アーカイビング、保存
   出版されていない証言の発掘 、小説・映画・ドキュメンタリーなどの製作
2. 教育と記憶
3. 日本の法的責任、歴史否定の追及
   *ブレずに原則を守る

しかし同時に、他方では
4. 日本軍「慰安婦」問題が起きたアジアでの脱植民地主義と、
   平和を導く組織、体系的研究と資料の発掘、国際連帯、
   アジアの武力紛争下での女性人権のための中心に。



金学順の証言と日本の運動の歴史

梁澄子 I 日本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共同代表

1. 日本における日本軍「慰安婦」運動の始まり

韓国における運動が尹貞玉という一人の人物の強い思いに触発されて始まったように、日本における日本軍「慰安婦」運動にも、大きなきっかけをつくった人物がいる。高橋喜久江である。1933 年生まれの高橋は、1957 年に日本基督教婦人矯風会に入り、矯風会で活動するかたわら、1973 年結成の「売春問題ととりくむ会（以下、とりくむ会）」[1]の事務局長として、日本におけるキーセン観光反対運動、日本軍「慰安婦」運動に取り組んだ先駆者である。

1973 年 7 月、ソウルで開催された第 1 回日韓教会協議会に対し、韓国教会女性連合会（以下、韓教女連）」はキーセン観光に反対する声明を提出した。この会議に参加していた日本代表が持ち帰ったその声明を見て、高橋は驚いた。「これは大変だ。韓国のキリスト者女性の要望に、なんらかのかたちで日本のキリスト者女性として応えねばならない」[2]と思った高橋は、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以下、NCC）の山口明子[3]と共に同年 11 月に渡韓し実態調査をおこなった。そして日本においてキーセン観光に反対する運動を展開する中で、1988 年 4 月、韓教女連主催の「女性と観光文化国際セミナー」（済州島 YMCA キャンプ場、10 ヵ国から 130 人が参加）に参加し、ここで尹貞玉の日本軍「慰安婦」に関する調査報告を聞くことになるのである。

このセミナーで尹貞玉と出会い、尹の調査報告を聞いて「慰安婦」問題への取組の必要を強く感じた高橋は帰国後、千田夏光著『従軍慰安婦』等、日本で出版されていた「慰安婦」関連書籍 3 冊と、日本人の「慰安婦」被害者・城田すず子の願いで「かにた婦人の村」に建立された石碑「ああ、従軍慰安婦」の写真が掲載された「かにた便り」を尹貞玉に送る。尹貞玉は

[1]そもそもは売春防止法（1956 年公布、1957 年 4 月施行）制定のため 22 の民間団体で結成した「売春対策国民協議会」（1953 年結成）と「沖縄の売春問題ととりくむ会」が合併する形で 1973 年に「売春問題ととりくむ会」が結成された。その後、1986 年に「売買春問題ととりくむ会」と名称を変え、さらに「性搾取問題ととりくむ会」と名称変更した後、2018 年に解散した。

[2] 高橋喜久江『売買春問題ととりくむ』明石書店、2004 年。

[3]1935 年生まれの山口明子は、高橋と共にキーセン観光反対運動に取り組み、その後現在に至るまで日本軍「慰安婦」運動に関わり続けている。。

同年夏に調査のため来日し、高橋の案内でかにた婦人の村を訪れている。また、この時に高橋は国会議員会館で女性議員、記者、女性団体を集めて尹貞玉との交流会を開催した。

2. 歴史的な集会（1）――1990 年 12 月

1990 年 12 月 1 日、日本における日本軍「慰安婦」運動を考える上で非常に重要な集会が、高橋が事務局長をつとめるとりくむ会主催で開催された。「人権と戦争を考える集い」。この集会で、尹貞玉が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講演をおこなったのである。東京 YWCA で開催された同集いには 300 人が集まり、私自身もこの集会に参加したことから日本軍「慰安婦」運動に飛び込むことになった。挺対協結成の翌月のことである。初代代表として来日した尹貞玉は、顔を紅潮させて挺対協の結成についても誇らしく語っていた。

まだ日本で日本軍「慰安婦」問題が一般的にはあまり認知されておらず、メディアにもほとんど取り上げられていない時のことである。しかし、その会場には女性を中心に 300 人もの人々が集まり、私自身を含めキリスト教信者ではない人々も多く参加していたことから、高橋らがすでに各界各層に日本軍「慰安婦」問題に対する問題意識を広め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る。後に日本軍「慰安婦」運動を共に闘うことになる女性たちの多くがその場に来ていた。柴洋子[4]は「尹貞玉さんの講演の内容はもう覚えていないけど、あのムンムンとした熱気、当時の集会の様子は今も目の前に浮かぶ」と語る。筆者自身も、当時の会場の光景がありありと目の前に浮かぶ。そこに集まっていた人々の熱気、日本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非常な情熱で語り伝える尹貞玉の思いがひしひしと伝わって、脳裏に焼き付く光景としてのこっているのだと思う。

その会場では、参加者が立ち上がって「従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会」が結成されたことを伝える場面などもあった。沖縄の裴奉奇の生涯をまとめた『赤瓦の家』の著者である川田文子[5]らがつくったグループである。また、早くから「慰安婦」問題の研究をおこなっていた研究者の鈴木裕子を中心とする「グループ・性と天皇制を考える」が結成されたのも、この集会が契機だったという。さらに、私自身が参加する在日同胞女性らによる「従軍慰安婦問題ウリヨソンネットワーク（以下、ヨソンネット）」も、この集会と、集会翌日に開かれた尹貞玉と在日同胞女性たちとの懇談会を機に結成された[6]。主催者であるとりくむ会の高橋が「集会開催のあ

[4]1947 年生まれの柴洋子はこの集会の後「グループ・性と天皇制を考える」の結成に参加し、台湾人被害者らが日本政府を相手に起こした訴訟の支援運動を中心で担った。現在、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共同代表。

[5]1943 年生まれの川田文子は 1987 年に裴奉奇の生涯を追った『赤瓦の家』を上梓。その後も「慰安婦」問題にこだわり続けた先駆けの一人で、宋神道の裁判支援をおこなうなど、現在に至るまで日本軍「慰安婦」運動に関わり続けてきた。

[6]同集会翌日の懇談会に参加した在日同胞女性 17 人は議論を重ねた末、1991 年 11 月 3 日に「従軍慰安婦問題ウリヨソンネットワーク」を正式に発足させた。

とから運動は盛り上がり裁判などもおこされて…」と述懐[7]しているとおり、金学順がまだ名乗り出る前の 1990 年 12 月に開催されたこの集会は、翌年から始まることになる被害者たちの名乗り出を受け止め、日本政府の責任を追求する日本の運動の立ち上げと拡散を促した歴史的な集会だったといえる。

3. 歴史的な集会（2）――1991 年 12 月

1990 年 12 月の集会が運動の力量を生み出す契機となった集会だったとしたら、1991 年 12 月に東京と関西各地で開催された金学順の証言を聴く集いは、運動の力量をさらに拡大すると共に、日本の市民に幅広く日本軍「慰安婦」問題を知らしめた取り組みだった。12 月 5 日に来日し、6 日に韓国太平洋戦争犠牲者遺族会訴訟の原告として東京地裁に提訴した金学順は、翌 7 日に大阪で初の証言集会、そして 9 日には東京で証言集会を開催した。この東京集会を主催したのが、私が属するヨソンネットだった。

実は、12 月に金学順を日本に招いて証言集会を開くことは、金学順の提訴が決定する前から決まっていた。そこで、関西に入って関西から帰る予定で、途中に一度東京に来て証言集会をおこなうスケジュールが組まれていたが、東京地裁への提訴日程が関西証言集会の前日に入ったため、金学順は原告団と共に東京に入り、提訴翌日に大阪で集会をした後、再び東京に戻って集会、そして再度関西に行くという、行ったり来たりのハードスケジュールになってしまった。また、金学順が遺族会訴訟の原告団に加わったことで、同訴訟に対する報道が非常に大きなものとなり、たちまち日本軍「慰安婦」問題への関心が高まったため、予想をはるかに超える人々が集会に集まることになった。私たちヨソンネットが用意していた会場は通常は 100 人～200 人規模の会場だったが、当日、会場を訪れた人々の数は 450 人に達した[8]。計画した当初は人があまり集まらなかったらどうしようかと心配していた私たちは、これ以上、人を入れることは不可能だと悲鳴を上げることになった。

集会は 2 部構成で、1 部で挺対協の金恵媛が韓国での運動について報告し、続いて金学順の証言とそれに対する質問が続いた。2 部は日本の市民の取り組みと思いを金学順に伝えるため会場から 11 人が発言した。また、事前に 65 通の手紙が金学順宛に寄せられた。

金学順は集会の中で、日本に来る時に乗った JAL 機の翼に日の丸が見えて息苦しくなった、日本に着いて宿舎に行くとタタミ部屋で当時を思い出して辛かったと語った。そして、「日本の若い人たちは過去を知らない。若い人たちを責めているわけではなく、今後こういうことがあってはいけないので、歴史を知って欲しい。韓国の青年や、日本の青年がこういうこ

---

[7] 明石書店前掲書

[8]実際に会場に訪れた人の数は 600 人超。しかし、400 人を超えた時点で帰ってもらうしかなく、ヨソンネットの会報「ヨソンネットアルリム」および同集会の報告集「この『恨』を解くために」に掲載された公式発表人数は 450 人となっている。

とを知っていますか？　知らないでしょう？　二度とこのようなことが起き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は、日本政府が（そんなことは）なかったとばかり言わずに、こうして私が生きているんだから、挺身隊に引っ張られて女としての人生をめちゃくちゃにされた私がこうしているんだから、そういうことを考えて日本政府は『悪かった』と一言でも、私たちのことを考えて言ってほしい」と訴えた。

この集会には、川田文子や西野留美子、鈴木裕子、清水澄子[9]など既に「慰安婦」問題に取り組んでいた多くの日本人女性たちが参加していたばかりでなく、この集会への参加を契機に新たに運動に加わった人も多かった。後にフィリピン人被害者支援に生涯をかけることになる柴﨑温子[10]は、「男性の被害ばかりが聞こえてきていた中で、金学順さんが現れて、直接話が聞けると分かって会場に出掛けた。集会終了後、最後まで残って学順さんと握手した。その時、私はこの問題をやろうと決意した」と語っている。

4．日本政府・社会を動かした金学順の登場

金学順の登場は日本社会を揺さぶり、日本政府をも動かすことになった。1991 年 12 月に金学順が提訴した時点ではまだ、日本政府は「民間業者が連れ歩いたものだ」として政府と軍の「関与」すら認めていなかった。このような状況が、歴史家の吉見義明を突き動かした。当時の状況を吉見は次のように記す。

「金学順さんが来日直前に NHK のインタビューに答えて、『日本軍に踏みつけられ、一生を惨めに過ごしたことを訴えたかったのです。日本や韓国の若者たちに、日本が過去にやったことを知ってほしい』（11 月 28 日、「ニュース 21」）と述べたことに、心うたれ、従軍慰安婦問題の研究をはじめることにした。（中略）（軍は関与していないという）政府答弁の虚妄はあきらかであった。実際、わたし自身、留学まえに、日本軍が軍慰安所設置を指示した公文書を防衛庁防衛研究所図書館で確認していた。金学順の発言を聞いて、あらためて私は同図書館に通い、関連文書を探した。そして、湮滅を免れた 6 点の証拠を発見し、新聞に発表することができた（『朝日新聞』92 年 1 月 11 日付）。なぜ湮滅されたはずの資料がのこっていたのだろうか。これらは、敗戦直前、空襲を避けるために八王子の地下倉庫に避難させておいたため、連合国軍到着までに焼却がまにあわなかった 42 年までの資料群であった。」[11]

日本軍が慰安所設置を指示したことを示す公文書が『朝日新聞』1 月 11 日付に掲載されると、1 月 13 日、加藤官房長官は「軍の関与は否定できない」とし、政府として初めて「お詫び

---

[9]1928 年 3 月～ 2013 年 1 月。社会党、社民党で参議院議員。「慰安婦」問題が日本社会で広く知られる前から国会で取り上げ質問を繰り返していた、運動の先駆者の一人だ。

[10]1937 年生まれ。フィリピン人被害者の裁判支援、宋神道の裁判支援など幅広く活動。85 歳になった現在もその活動は続いている。

[11]吉見義明『従軍慰安婦』岩波新書、1995 年。（　）内は筆者。

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した。また、1 月 16 日～18 日に訪韓した宮沢首相も、日韓首脳会談の場で盧泰愚大統領に対し「軍の関与」を認め「お詫びと反省」を述べたとされる。

連日、日本軍「慰安婦」問題が報道される中で、運動団体[12]は日本軍「慰安婦」に関する情報を収集するためホットライン「慰安婦 110 番」を 1 月 14 日～16 日の 3 日間にわたって開催した。ここに、宮城県在住の宋神道の情報が寄せられるのである。その情報を伝えた電話の主は、自分の名前は語らなかった。

5. かき消された声、聞き届けられた声

「慰安婦 110 番」に寄せられた情報を基に川田文子がはじめて宋神道を訪ねた時、宋神道は金学順の裁判についてしきりに聞いてきたと言う。そして、テレビに映る金学順を見て「オレと同じだ」と言った。その後も、「慰安婦」にされた経験を聞くため訪れる川田に、宋神道は「金学順」を問い続けた。もしかしたら宋も裁判をしたいのではないかと思った川田は、たびたび宋に裁判への意向を尋ねるがはっきりしない。そこで、弁護士 1 名と在日朝鮮人女性 1 名が川田と共に宋の家を訪ねることになった。弁護士は裁判について説明し宋の意向を把握するためであり、在日朝鮮人女性は、つかみどころのない宋の気持ちを理解する助けになるためだった。その在日朝鮮人女性として筆者がこの時、宋の家に同行した。1992 年 8 月のことだ。結局、この時も宋の意中をはかり知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その後、宋を東京に招いて「慰安婦 110 番」実行委員会で話を聞いたり、電話でやりとりをしたりしながら宋の気持ちを確認して、翌年の 1993 年 4 月の提訴に至ることになる。提訴後、様々な活動を展開した宋神道にとって「金学順」は常に特別な存在だった。宋が「金学順」の名を口にする時、そこには尊敬と憧憬、憐憫などがないまぜになった独特な感情が表情と語感に浮かんだ。

もう一つ、宋がはじめて出会った時から一貫して主張していたことがある。それは「（『慰安婦』にされたことを）恥ずかしくて誰にも言った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だ。では、「慰安婦 110 番」に宋神道の情報を寄せてきた匿名の電話の主は、「誰にも話したことがない」という宋の「秘密」をどのように知ったのだろうか。

その後、私たちが尋ね当てた電話の主は、仙台の在日居留民団（民団）関係者だった。戦後、日本軍人に連れられて中国から日本に渡って来たが、日本に着くなりその軍人に捨てられた宋は、宮城県在住の在日朝鮮人男性と知り合って生活を共にした。そして水商売や道路工事現場、魚の加工工場などで働いたが、男性の闘病生活が長くなるにつれ生活が立ち行かなくなり、生活保護の受給申請をおこなった。生活保護受給のための厳しい審査の過程で業を煮やした宋は「オレは中国まで行ってお国のために立派に戦ってきたオナゴだぞ！」と叫び、役所で

[12]「慰安婦 110 番」を主催したのは、従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会、従軍慰安婦問題ウリヨソンネットワーク、日本の戦後責任をハッキリさせる会、韓国民主女性会の 4 団体であった。

大暴れをした。警察まで出動する騒ぎになったが、宋の怒りを抑えることはできず、役所は民団に助けを求めたという。そこで駆けつけた民団関係者が宋の発する言葉から事情を察知したのだった。

「オレは中国でお国のために立派に戦ってきたオナゴだぞ！」という叫びは、この時に初めて叫ばれたものではなかった。貧しい朝鮮人の女に侮蔑的な言葉や視線が投げかけられる度、宋は悔しさのあまり、この台詞をわめきちらしていた。「恥ずかしくて誰にも言えない」経験は結局、周りの人々の知るところとなり、これに耳を傾けようとする運動が立ち上がった時にやっと、宋の「わめき」が「声」となって伝わったのである。

宋神道だけではない。アジア各地で、被害女性たちは泣き叫び、身もだえしていた。侯巧蓮は中国山西省の山奥で「ときどき発作を起こして暴れ、子どもたちをアザができるほど殴り、裸で家を飛び出して奇声を上げながら走って」いたし、文必琪は韓国で毎晩のようにうなされ「ミオサキ！」と軍人の名らしきものを叫んで傍らに寝ていた妹の首を絞めた。女たちが発する苦しみの表現は、聞く耳を持たない人々の間で「雑音」として処理され、「奇行」と決めつけられた。それを「声」として聞き入れる「受け皿」が出来るまで、被害女性たちはアジア各地で、取り乱し、わめき散らし、泣き叫びながら、一人一人が孤独な闘いを繰り広げていたのである。

金学順にしても同じだ。在韓被爆者である李孟姫に対し自らの被害事実を語っていたからこそ、挺対協と繋がることができた。被害女性たちは決して「沈黙」していたわけではなかったのだ。それを聴こうとする人々が現れるまで、その「声」がかき消されていたにすぎない。

1991 年 12 月 9 日、東京ではじめて開催された金学順の証言集会で、「なぜ戦後半世紀が経った今、語ることを決意したのか」という質問が出た。それは、日本軍「慰安婦」問題が日本社会に問われた当初、あまりにも多く発せられた問いだった。なぜ、50 年も経った今、と。当時の日本社会は、彼女たちがその 50 年間、実は声を上げ続けていたことに対する想像力を持ち得ていなかった。そして、彼女たちの声が黙殺されてきたことに対する責任意識のない問いを発し続けた。運動に立ち上がった女性たちですら、韓国の運動からの問いかけがあってはじめて、私たちが見過ごしてきた日本の過去の罪悪に正面から向き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必要性に気付いたのである。

8 月 14 日は、未だ姿の見えない被害女性たちの声に耳を傾けようとした韓国女性たちの運動と、一人の勇気ある被害者の出会いが生んだ奇跡のような瞬間だったのだ。どちらか一つが欠けていても、その瞬間が生まれることはなかった。

自身の体験から日本軍「慰安婦」問題にこだわり続け独りコツコツと調査を続けた尹貞玉の強い思い、その思いを韓国女性運動につなげた李効再のリーダーシップ、尹貞玉の調査活動に加わり被害女性たちを献身的にサポートした金恵媛、金信実、金学順の名乗り出を最初に受

け止めた尹英愛、挺対協運動の骨格を支えた李美卿、池銀姫、研究活動を支えた鄭鎭星、国際活動を展開した申蕙秀、そして金学順の報道を見て留学生活を切り上げて韓国に戻り生涯をこの運動に捧げた尹美香……。金学順が、自身の声に耳を傾けその声をより広く社会に届けようとする女性たちと出会って、その大きな勇気をふるうことができた日から 30 年の今日、金学順を記憶すると共に、彼女の勇気を支えた数多くの女性たちの存在を心に刻みたい。

金学順さんが伝えたかったこと-最初に報じた記者からの報告

植村隆 I 日本 「週刊金曜日」発行人兼社長、元朝日新聞記者

１９９０年夏、１人の元慰安婦の証言も聞けなかった

１９９０年、『朝日新聞』大阪本社記者だった私は夏の平和企画の記事として、元日本軍慰安婦の証言を紹介したいと思った。当時、私は在日韓国・朝鮮人問題を担当する「民族担当」だった。在日韓国・朝鮮人が多数住んでいる大阪市生野区にアパートを借りて住み、在日の人権問題や在日韓国人政治犯問題などを取材していた。『朝日』の語学留学生として、１９８７年夏から１年間、ソウルの延世大学校韓国語学堂へ留学したことから、韓国語を使って取材することもできるようになり、しばしば、韓国にも出張していた。

９０年６月、参議院予算委員会で本岡昭次議員（社会党）が慰安婦問題で、日本政府に実態調査を求めた。これに対し、当時の労働省職業安定局長は「民間の業者が軍とともに連れ歩いている」と答弁し、韓国内で反発が高まっていた。私は被害者の声を伝えたいと思った。友人の韓国人女性ジャーナリストに「元慰安婦のハルモニに話を聞けないだろうか」と相談した。彼女は「自分が以前取材した女性がいる」と話してくれた。その女性に会えば取材ができると、韓国に向かった。

ところが、その女性はすでに死亡していた。全く手がかり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その年の１月に韓国の新聞『ハンギョレ』に「挺身隊「怨念の足跡」取材記」を連載した梨花女子大学校教授の尹貞玉さんにも話を聞いた。その他の関係者にもあたり、様々な情報を基に各地を回ったが、証言者は一人も見つからなかった。京畿道のある村で、「満州ハルモニ」と呼ばれる女性に会ったが、私に対しては、「満州などには行ったこともない」として、何も答えてくれなかった。韓国での２週間の取材は徒労に終わった。取材協力者の一人に、「元慰安婦は絶対にしゃべらない。それは死ぬほど、つらいことなのだから」と言われた。

韓国から戻った後、大阪で焼き肉屋をやっている在日の女性に会った。「挺身隊（慰安婦のこと）にいたらしい」という韓国で得た情報で、その店を訪ねたのだ。何度か通ったが、証言は聞けなかった。彼女からは、「たとえそうだったとしても、話すわけがないよ。無駄なお金を使いなさんな」と言われた。

結局、１９９０年の夏は一人の元慰安婦の証言も聞けなかった。当時、私は３２歳、いくら韓国語が話せると言っても、朝鮮半島をかつて植民地として収奪した日本の若造なのだ、被害者であっても、そんなつらい話を日本人、それも男性にするはずがなかったのだ。

この夏の２週間の取材期間中、「韓国太平洋戦争犠牲者遺族会」（遺族会）で働いていた女性と知り合い、交際を始めた。女性理事（当時）の梁順任の娘だった。母親は反対したが、私たちは結婚した。

「金学順さん証言開始」のスクープ

翌年の１９９１年夏、事態が大きく動いた。『朝日』ソウル支局に国際電話をしたところ、当時の支局長の小田川興（おだがわ・こう）さんが、こんな話をしてくれた。

「ソウルにいる元朝鮮人従軍慰安婦が語りはじめたらしい。植村君、取材に来たらどうかね」。小田川さんは、私が前年の夏に２週間の韓国取材をし、元慰安婦の証言を全く得られなかったことを知っていた。それで、私への特ダネとして、情報を提供してくれたのだった。小田川さんのニュースソースは、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現・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共同代表の尹貞玉さんだった。前述のように、尹さんとはその前年の取材で面識があった。大阪から電話で尹さんに取材を申し込むと、尹さんはその元慰安婦について、「取材を受けることを拒否しており、名前も教えられない。しかし、聞き取りのテープを聞かせることはできる」という内容の話をしてくれた。本人に直接会えなくても、元慰安婦がソウルに生存していて、「挺対協」の聞き取り調査を受けている、ということは大きなニュースだと思った。さっそく、大阪から韓国に向かった。

９１年8月9日、尹さんのソウルの自宅を訪ねた。尹さんは、その女性について、「『日本政府が挺身隊があったことを認めないことに腹が立ってたまらない』と名乗り出た」と話していた。そして翌１０日、「挺対協」の事務所で、テープを聴かせてもらい、主な聞き取り調査の内容も教えてもらった。テープの声は、「何とか忘れて過ごしたいが忘れられない。あの時のことを考えると腹が立って涙が止まらない」「思い出すと今でも身の毛がよだつ」などと過去を振り返っていた。尹さんらの説明によると、この女性は、中国東北部で生まれ、１７歳の時に、だまされて慰安婦にされたという。中国の慰安所に連れていかれ、毎日３、４人の相手をさせられたという。数か月働かされたが、逃げることができ、戦後になってソウルへ戻った。結婚したが、夫や子供もなくなり、生活保護を受けながら暮ら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った。

私は取材を終えて、いそいでソウル支局に行き、原稿を書き上げた。翌8月１１日付の大阪本社版社会面トップに私の記事が出た＝写真①＝。見出しは、「思い出すと今も涙　元朝鮮人従軍慰安婦　戦後半世紀　重い口開く　韓国の団体聞き取り」で、記事前文には、「女子挺身隊の名で戦場に連行され、日本軍人相手に売春行為を強いられた『朝鮮人慰安婦』のうち一人が、ソウル市内に生存している」と書いた。本文では、尹さんらに聞いた通り、「十七歳の時、だまされて慰安婦にされた」と書いた。当時、韓国では慰安婦のことを「挺身隊」とか「女子挺身隊」と呼んでおり、日韓のメディアもこの言葉を「慰安婦」の意味で使っていた。

この記事がその後、「捏造」と批判され、強制連行で慰安婦にしたという間違った情報を世界に広めたなどと攻撃されるとは当時、全く思いもしなかった。

私の記事は大幅に削られたものの、翌１２日付で、東京本社版第２社会面にも掲載された。しかし、元慰安婦の証言開始という特ダネ記事だったにもかかわらず、日韓のメディアはどこも後追い報道をしなかった。

この女性が「金学順（キム・ハクスン）」という実名を名乗って、１４日にソウルで記者会見をしたことは、大阪で知った。ソウル支局からの連絡だったと思う。１５日の韓国各紙の朝刊には、金学順さんの証言記事が出ていた。「記者には会わないと言っているのだから、仕方がない」と思って、大阪に戻ったことを後悔した。＜あのまま、ソウルにいれば、続報が書けたのに＞。そう思うと、とても悔しかった。

当時の韓国の新聞報道の見出しは、以下の通りだった。「挺身隊慰安婦として苦痛を受けた私」（『東亜日報』）「私は挺身隊だった」（『中央日報』）「挺身隊の生き証人として堂々と」（『韓国日報』）。

尹貞玉さんに電話した。尹さんはこういう内容の話をしていた。「１４日、二回目の聞き取りをしたところ、金さんは、『日本政府は挺身隊の存在を認めない。怒りを感じる』と、自分の体験を公表すると申し出た。それまで非公開で聞き取りをしていたが、急遽韓国の報道陣に公開することになった」。

私は、大阪本社版の１５日の夕刊に、金学順さん名乗り出の続報記事を書いた。しかし、日本のマスメディアの特派員たちは、金学順さんの登場にあまり関心を払わなかったようで、大手紙の『読売新聞』や『毎日新聞』には、この会見内容は報道されなかった。ただ、後で知ったのだが、『北海道新聞』のソウル支局長だった喜多義憲（きた・よしのり）さんが、１４日に金学順さんの単独インタビューをしていた。喜多さんも私の記事の前文と同じように、挺身隊という言葉を使って、こう書いていた。

「戦前、女子挺身隊の美名のもとに従軍慰安婦として戦地で日本軍将兵たちに凌辱された韓国人女性が１４日、（中略）北海道新聞の単独インタビューに応じた」

この金学順さんの記者会見で、勇気をもらった各地の元慰安婦たちが、次々と被害証言をはじめた。金学順さんの勇気ある証言は、慰安婦問題が戦時性暴力として、世界に認知される大きな契機となった。

私自身は、８月１４日の金学順さんの記者会見には出られなかった。しかし、のちに、そのシーンを見ることができた。韓国の映画監督の金東元（キム・ドンウォン）さんが制作した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終わらない戦争』（２００８年）の日本語字幕版中で、この会見を伝えるＫＢＳのニュース映像が紹介されていたのだ。最初の画面には「私は挺身隊だった」という題名が書かれ、男性キャスターがこう説明した。「５０年前、日本軍に連行されて『慰安婦』生活を強要された一人のハルモニが羞恥心を克服して、日本の蛮行を告発しました」。そ

して、記者たちを前に金学順さんが会見しているシーンが映った。金学順さんは、こう訴えていた。「１６歳になったばかりの娘が強制的に連行されて、必死に逃げても捕まえて話してくれない。目を閉じる前に話して怨みを晴らしたいんです」。金学順さんの怒りが、ひしひしと伝わってくる。

このドキュメンタリーでは、オランダ人の被害者ジャン・ラフ・オハーンさんも登場している。オハーンさんは、金学順さんの証言に勇気を得て、自らも被害証言をすることにしたのだという。「本当に驚くべき事実は５０年間沈黙していた私たち『慰安婦』女性が同時に、突然、口を開いたことです」。オハーンさんはそのことを「バーン」と表現していた。金学順公開証言のインパクトがいかに強かったかが、よくわかる証言である。（注、この『終わらない戦争』日本語字幕版は、日本軍「慰安婦」問題関西ネットワークが上映用 DVD 貸出をしている）

金学順さんが訴えたこと

金学順さんはその後、日本政府を相手に謝罪と補償を求める裁判の原告になることを決めた。提訴（９１年１２月６日）の前に、「太平洋戦争犠牲者遺族会」に入会し、９１年１１月２５日、日本の弁護団の聞き取り調査を受けた。同席を許された私はその一部始終を見て、金学順さんの話をテープに録音した。そして同年１２月２５日付の大阪本社版朝刊のシリーズ「女たちの太平洋戦争」で「かえらぬ青春　恨の半生」という見出しの記事を書いた＝写真②＝。前文では「証言テープを再現する」と書いた。

金さんは聞き取りの最後で、こう話していた。「いくらお金をもらっても、捨てられてしまったこのからだ、取り返しがつきません。日本政府は歴史的な事実を認めて、謝罪すべきです。若い人がこの問題をわかるようにして欲しい。たくさんの犠牲者が出ています。碑を建ててもらいたい。二度とこんなことは繰り返して欲しくない」。それが金さんの一番言いたかったことだったのだ。

金学順さんらの裁判を受けて、日本政府は元慰安婦らに聞き取りをするなどの調査をし、１９９３年8月、河野洋平官房長官が政府談話（「河野談話」）を発表した。軍の関与や強制性を認め、謝罪した。さらに歴史教育などで記憶にとどめ、過ちは繰り返さないと言明したのだ。そして、日本の中学校の教科書に、慰安婦問題の記述が掲載され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１９９７年から、安倍晋三氏（のち首相）を始めとする歴史修正（改竄）主義者らが、教科書から慰安婦問題を削除する運動を始めた。そして、多くの教科書から慰安婦の記述が無くなった。安倍氏は「河野談話」の見直しも主張し、事実上、「河野談話」は骨抜きにされた形になっている。

２０１４年、植村バッシングが始まった

金学順さん証言開始の記事の２３年後の２０１４年、私は激しいバッシングに見舞われた。日本の保守的な雑誌『週刊文春』２月６日号が「“慰安婦捏造”朝日新聞記者がお嬢様女子大教授に」という見出しで、私の９１年８月１１日の記事を捏造と決めつけたのだ。東京基督教大学教授の西岡力（にしおか・つとむ）氏の談話が元になっていた。西岡氏はこうコメントしていた。「植村記者の記事には『挺身隊の名で戦場に連行され』とありますが、挺身隊とは軍需工場などに勤労動員する組織で慰安婦とは全く関係ありません。しかも、このとき名乗り出た女性は親に身売りされて慰安婦になったと訴状に書き、韓国紙の取材にもそう答えている。植村氏はそうした事実に触れずに強制連行があったかのように記事を書いており、捏造記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

私は、９１年８月１１日の記事では、「十七歳の時、だまされて慰安婦にされた」と書き、「強制連行」とは書いていないのだが、西岡氏はそれには言及していなかった。

西岡氏は９２年４月号の「文藝春秋」では私のこの記事について、「重大な事実誤認」としていたが、９８年頃から「捏造」と批判し始めた。そんな西岡氏のコメントを使った『週刊文春』の記事が、私だけを「標的」にした攻撃であるのは明らかだった。さらに、この記事は「河野談話」についても批判していた。

この『週刊文春』が発行された直後から、私への激しいバッシングが始まった。専任教授への就任が決まっていた神戸の女子大学へ「教授就任」に抗議するメールやファックス、電話が殺到した。結局、雇用契約は取り消された。私が非常勤講師をしていた札幌の北星学園大学への攻撃も続いた。

保守団体「国家基本問題研究所」理事長の櫻井よしこ氏も、植村バッシングに参入した。櫻井氏はいくつかの文章で私を攻撃したが、その代表的なものが、ワック発行の雑誌「ＷｉＬＬ」１４年４月号の記事だ。「過去、現在、未来にわたって日本国と日本人の名誉を著しく傷つける彼らの宣伝はしかし、日本人による『従軍慰安婦』捏造記事がそもそもの出発点となっている。日本を怨み、憎んでいるかのような、日本人によるその捏造記事はどんなものだったのか」。そう書いた上で、私の８月１１日の記事を批判し、（金学順氏が日本政府を訴えた裁判の）「訴状には、十四歳のとき、継父によって四十円で売られたこと、三年後、十七歳のとき、再び継父によって北支の鉄壁鎮というところに連れて行かれて慰安婦にさせられた経緯などが書かれている。植村氏は、彼女が継父によって人身売買されたという重要な点を報じなかっただけでなく、慰安婦とは何の関係もない『女子挺身隊』と結びつけて報じた」と書いていた。

この二人の言説が、ネットなどでも広がった。『朝日』は１４年８月５、６日の「慰安婦報道」検証特集で、私の記事の「捏造」を否定した。しかし、済州島で女性を強制連行して慰安婦にしたなどと証言していた故吉田清治氏についての記事１６本（最終的には１８本）を取

り消したために、『朝日』へのバッシングが激しくなった。私は、吉田氏の記事を書いていないにも関わらず、私へのバッシングはさらに強まった。

当時、高校生だった娘も「標的」にされ、ネットに顔写真や名前がさらされた。あるブログには、「こいつの父親のせいでどれだけの日本人が苦労したことか。（中略）自殺するまで追い込むしかない」と書かれた。さらに、「娘を殺す」という脅迫状＝写真③＝まで送られてきた。娘の登下校の際には、パトカーが警備するような状況にまでなった。

私は、２０１５年初めに、西岡氏や櫻井氏を名誉棄損でそれぞれ東京、札幌の各裁判所に訴えた。家族の安全を守るためでもあった。

提訴後の１５年８月、ソウルでの慰安婦問題の国際シンポジウムに招かれた。シンポ終了翌日の８月１５日、韓国忠清南道・天安市の国立墓地「望郷の丘」に眠る金学順さんの墓を訪れた＝写真④＝。私は墓碑の横に、持参のノートパソコンを置いて、９１年８月１４日の金学順さんの実名での記者会見のニュースを映し出した。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終わらない戦争』の中で紹介されていた映像である。金学順さんの声が墓地に流れた。私は同行者にこう言った。「金学順さんは、日本で『うそつき』『売春婦』と名誉を傷つけられている。許せない」。そして、私自身の「弱さ」を金学順さんに心の中で詫びた。金学順さんが亡くなった１９９７年１２月１６日、私はソウル特派員だったが、死亡記事を淡々と書いただけで、その後は慰安婦問題を熱心には報じなかった。金学順さんが証言を始めたという記事を最初に書いたにもかかわらず、義母が太平洋戦争犠牲者遺族会の幹部だということで、理不尽な誹謗中傷が続き、慰安婦問題に距離を置いていたからだ。しかし、自分自身が激しくバッシングを受けたことがきっかけとなり、それまでの自分を反省し、きちんと、慰安婦問題に取り組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誓った。そして、私の裁判は金学順さんの名誉を回復する闘いでもあると肝に銘じた。金学順さんが自らの訴訟で、裁判所に提出した陳述書（１９９４年6月6日付）の中にこんな言葉がある。「私は日本軍により連行され、『慰安婦』にされ人生そのものを奪われたのです」。この無念の思いを、私は紙に黒マジックで書いて、机の前に貼っていた。そして時折、背広のポケットの中に入れて、法廷に臨んだ。

不当判決と安倍晋三氏の介入

西岡と櫻井の両被告とも、金学順さんには取材をしていない。本人に確認もしないで、親に身売りされて慰安婦になっており、日本軍による強制連行ではないという主張を続けている。両被告は、それを私が強制連行と書いたため、誤解が世界に広がった、日本の名誉を傷つけたなどという立場である。さらに西岡氏は、金学順さんが平壌時代に妓生学校に通ったことを私が記事に書いていないとして、書かなかったから「捏造」という主張までしていた。（注、日本の弁護団の聞き取りの際には、金学順さんは妓生学校の話をしなかった）。強制連

行でも身売りでも、意に反して日本軍人の性の相手をさせられた被害者なのだが、彼らは「身売り」なら、日本軍の責任はないと考えているのだ。

西岡氏の『週刊文春』の談話が、その象徴である。西岡氏は「名乗り出た女性は親に身売りされて慰安婦になったと訴状に書き、韓国紙の取材にもそう答えている」と書いていた。しかし、東京地裁の証人尋問で、訴状にも、韓国紙の記事にも、「身売りされ」たとの記述はなかったことが確認された。私の記事を「捏造」と批判する前提自体が、ウソだったのだ。さらに、西岡氏は著書　『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の中で、植村批判の根拠として『ハンギョレ』を引用したが、本来の記事にない部分「私は四〇円で売られて、キーセンの修業を何年かして、その後、日本の軍隊のあるところに行きました」を自分で加筆した上で、全体を『ハンギョレ』の記事として、紹介していたことも確認された。金学順さんの「身売り」を強調するための、改竄である。

一方、櫻井氏も、西岡氏と同様の主張をしていた。①金学順氏が人身売買されて慰安婦になった②慰安婦と「女子挺身隊」は何の関係もない――という前提のもとに私の記事を「捏造」と誹謗中傷していたのだ。しかし、金学順氏の訴状には「継父によって四十円で売られた」とか、「再び継父によって・・・・慰安婦にさせられた」という記述はなかった。金氏が「人身売買の犠牲者である」と断定するような文章もない。櫻井氏は、証人尋問でもその誤りを認め、訂正に追い込まれた。

西岡、櫻井両被告とも私を批判する根拠が杜撰なものだったのだ。しかも、二人とも私に取材もせず、「捏造」と決めつけていた。しかし、東京、札幌の裁判では、「真実相当性」のハードルを大きく下げて、両被告を免責した。さらに、東京の裁判では一部で西岡氏の言説の「真実性」まで、認めていた。異常な判決だった。通常の裁判では私が勝っていたと思う。敗訴の理由は３つあると思う。

一つ目は、裁判所の右傾化や安倍政権（当時）への忖度もあったと思う。東京地裁判決で、「従軍慰安婦」の説明として、「公娼制度の下で戦地において売春に従事していた女性」と書いていたのには、唖然とした。慰安婦が戦時性暴力の被害者であるという認識が全くないのだ。裁判官自身がネトウヨ化している証左ではないかと思う。　西岡氏は「国家基本問題研究所」の「ろんだん」（２０１６年5月２３日付）で、「私は１９９１年以来、慰安婦問題での論争に加わって来た。安倍晋三現総理大臣や櫻井よしこ本研究所理事長らも古くからの同志だ」と書いている。櫻井氏は安倍氏の「広告塔」のような存在で、安倍氏の進める憲法改悪の旗振り役でもある。私は二人と闘ったが、その背後には常に安倍氏の存在があったと考えている。

二つ目は、日本社会に広がっている、歴史修正（改竄）主義の蔓延も大きいと思う。こうした誤った歴史認識が社会に広がっているため、裁判官の誤った判断を許し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三つ目は、『朝日新聞』自体、私の記事が「捏造」ではないと発表しておきながら、吉

田清治証言の取り消し問題などで激しいバッシングを受け、萎縮し、私と共に闘わなかったことも大きな理由だと思う。

対櫻井訴訟での私の敗訴が最高裁で確定した直後、こんな出来事があった。安倍晋三前首相が２０２０年１１月２１日に、自分のフェイスブックに「植村記者と朝日新聞の捏造が事実として確定したという事ですね」と書き込んだのだ。私の名前を挙げて「捏造確定」を喧伝しているのだ。異常な執念と関心だと思った。しかし、対櫻井訴訟では一つも「真実性」が認定されておらず、「捏造が事実として確定した」というのは明らかな間違いだった。私は代理人を通じて安倍氏に書き込みの削除を求める内容証明を送った。安倍氏は私に対する謝罪もなく、こっそりと書き込みを削除した。この事実をとっても、安倍氏が櫻井氏を見守っていることが明白だと思う。

しかし、東京でも札幌でも１００人以上の弁護団が組織され、６年間の植村裁判を闘った。それによって、私の家族への脅威がかなり低下したのも事実だ。さらに多数の市民や研究者たちも裁判支援に立ち上がってくれた。新聞労連、日本ジャーナリスト会議（JCJ）などの組織的な支援、『朝日』のかつての仲間たちの献身的な応援も大きかった。金学順さんを取材し、私と同種の記事を書いた『北海道新聞』の喜多さんは札幌訴訟で証人に立ち、櫻井氏の植村批判について、「言い掛かり」との認識を示し、こう証言した。「片方は捏造したと言われ、私は捏造記者と非難する人から見れば不問に付されているような、そういう気持ちで、やっぱりそういう状況を見れば、違うよと言うのが人間であり、ジャーナリストであるという思いが強くいたしました」。

金学順さんを取材した韓国の『ハンギョレ』『京郷新聞』『東亜日報』の女性記者３人も、私の記事が「捏造でない」ことを証明する陳述書を作成し、裁判所に出してくれた。それらのジャーナリストたちの声は、判決では一切黙殺された。しかし、私はそれらの一つ一つが、言論人からの「勝訴判決」だと受け取っている。

また裁判期間中の２０１８年９月末、日本のリベラルな雑誌『週刊金曜日』の発行人兼社長に招かれ、日本の言論界に復帰できたことも、大きな成果だった。日本のマスコミが萎縮し、植村バッシングを詳しく伝えない時期でも、『週刊金曜日』は植村バッシングを果敢に報じた。その記事だけで、一冊の「抜き刷り版」（２０１６年、植村裁判を支援する市民の会作成）＝写真⑤＝ができた位だ。同誌のジャーナリズム精神に敬意を持っており、経営難に直面している同誌の責任者を引き受けた。

植村バッシングのさなか、私は韓国カトリック大学校に招かれ、２０１６年から２０２０年まで招聘教授を務めた。コロナ禍の広がりで、日韓往来が難しくなり、教授職の継続を断念したが、韓国での５年間は非常に貴重な時間だった。金学順さんの証言開始をスクープしたことや、その後のバッシングとの闘いを評価されて、『キム・ヨングン民族教育賞』（２０１８年）や『李泳禧賞』（２０１９年）を受賞した。韓国の言論民主化のために闘って報道機関を

不当解雇された元『東亜日報』記者の李富栄さんや『ハンギョレ』創刊副社長の任在慶さんら「解職記者」の方々との深い交流をすることができた。そうした人々が中心となって私の裁判支援組織を結成するなど、植村バッシングは日韓の新たな記者交流を生むことになった。

植村バッシングに巻き込まれた娘

私の娘も、植村バッシングに巻き込まれ、ネットでは様々な誹謗中傷を受けた。娘のことを心配する弁護士たちが、娘の弁護団を組織し、ツイッターに娘の名前や写真を載せた４０代の男性を割り出して、提訴した。男性は、こう書いていた。「朝日新聞従軍慰安婦捏造の植村隆の娘が、高校生平和大使に選ばれた。詐欺師の祖母、反日韓国人の母親、反日捏造工作員の父親に育てられた超反日サラブレッド。将来必ず日本に仇なす存在になるだろう」。２０１６年８月に東京地裁で判決があり、裁判長は投稿者に原告の請求通りの１７０万円の損害賠償命令を下した。判決後、弁護団は記者会見で、娘のコメントを代読した。娘は「利己的な欲求のために誰かを攻撃し、プライバシーをさらすようなことは絶対に許されないことだと考えたのです。私に対して起きたことは、他の人にも起こり得るものです。今回の判決が、こうした不当な攻撃をやめさせるための契機にな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と訴えていた。当初裁判長は、和解を勧めたが、娘はそれを拒否し、判決を求めた。被告は控訴せず、判決は確定した。毅然とした態度を貫いた娘を誇らしく思っている。

証言から３０年、金学順さんの投げかけた「問い」

私が金学順さんの登場を報じてから３０年、改めていま、金学順さんが訴えた記事を読み直して思う。金学順さんが裁判前に日本の弁護団に訴えた三つの願い①日本政府の謝罪②若い世代への記憶の継承③碑の建立――が殆ど実現されていないことに愕然とする。

日本政府は、元慰安婦被害者の心に届く真の謝罪をしていない。「河野談話」を受けて、中学校の歴史教科書に慰安婦問題の記述が載るようになった時期もあった。しかし、安倍氏らの運動によって、ほとんどが消えた。慰安婦問題記述のある「学び舎」の「ともに生きる人間の歴史」をめぐっては、２０１６年、それを使っている兵庫県の灘中学校などに抗議のはがきが大量に送られてくるなどの妨害事件も起きた。慰安婦問題の記憶を伝えようとする行為には、様々な妨害がある。碑を建てる、ということすら日本の本土内では想像できない状況だ。ソウルの少女像のレプリカが日本国内で展示されるだけで、様々な嫌がらせや妨害が起きている。そうした記憶の継承への攻撃を日本政府が止めない、ということも大きな問題だ。

３０年前に金学順さんの証言を伝えた私は、日本人として、また言論人として、こうした状況をとても恥ずかしく思う。そして、金学順さんの願いが実現するように力を尽くしたいと思う。

金学順さんの公開証言３０年の今年、元ＲＫＢ毎日放送記者の西嶋真司さんがつくった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標的』＝写真⑥＝が公開される予定だ。この映画は、「植村バッシング」をテーマにしており、日本での歴史修正主義の流れを描写している。西嶋さんは金学順さんが証言をした１９９１年夏当時、同放送のソウル支局長だった。金学順さんの裁判前に取材し、ニュースとして日本で全国放送した経験もある。西嶋さんは、私だけが右派の「標的」になったことに疑問を抱き、映画を撮り始めた。最初は、当時在籍していたＲＫＢ毎日放送の番組として制作しようとしたが、企画が通らず、退社して、自分で事務所を作り、制作に着手した。金学順さんを取材した『北海道新聞』の喜多さんや、元ＮＨＫディレクタ―の池田恵理子さん（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ｗａｍ）名誉館長現在）らのインタビューも出てくるし、河野洋平官房長官（当時）の談話の音声も流れる。

この映画のもう一つのテーマは、金学順さん＝写真⑦＝ら元慰安婦被害者の証言でもある。西嶋さん自身が撮影した金学順さんの映像は、著作権をもつ民間放送局が使用許可を出さなかった。このため、韓国ＭＢＣの「ＰＤ手帳」が撮影した映像を使っている。その中で、金学順さんは慰安婦問題を認めない日本政府を批判している。また、ナヌムの家に住む元慰安婦の李玉善（イ・オクソン）さんが、強制連行を否定する日本政府を批判する映像も流れる。私と仲間のジャーリストたちが２０１７年に立ち上げた「ジャーナリストを目指す日韓学生フォーラム」の第１回の企画で、ナヌムの家を訪問した日韓の学生たちに、李さんが被害体験を語ったシーンである。

西嶋監督は『週刊金曜日』２０２１年７月２３日号のインタビューでこう話している。「日本ではメディアが慰安婦問題をあまり扱わなくなったせいもありますが、『慰安婦』は売春婦だから日本を訴えるのはおかしいという考えがあると思うんです。しかし、そうではないことを、金さんらの映像を見て考えてみてほしいと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それで金学順さんや李玉善さんのインタビューの映像を入れました。今は『慰安婦』被害者の生の声を聞くことがないと思うので貴重なシーンだと思います」

私もこの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の DVD を持ち歩き、各地で上映活動を展開し、金学順さんら元慰安婦被害者が伝えたかったことを継承する作業を進めて行きたい。

参考文献

書籍

『真実』（2016 年 2 月 26 日、植村隆、岩波書店）

『나는 날조기자가 아니다』（2016 년 10 월 9 일, 글쓴이＝우에무라 다카시, 옮긴이＝길윤형, 푸른역사 ）

新聞、雑誌

「朝日新聞」大阪本社版 1991 年 8 月 11 日付記事

「朝日新聞」大阪本社版 1991 年 12 月 25 日付記事

『MILE』1991 年 11 月号

「ヒラ社長が行く」131「金学順証言から 30 年　その訴えを実現せよ！」（植村隆、『週刊金曜日』2021 年 7 月 30 日号、（株）金曜日）

「映画『標的』の西嶋真司監督に聞く／「娘さんの話はどうしても聞きたかった」」（文聖姫、『週刊金曜日』2021 年 7 月 23 日号、（株）金曜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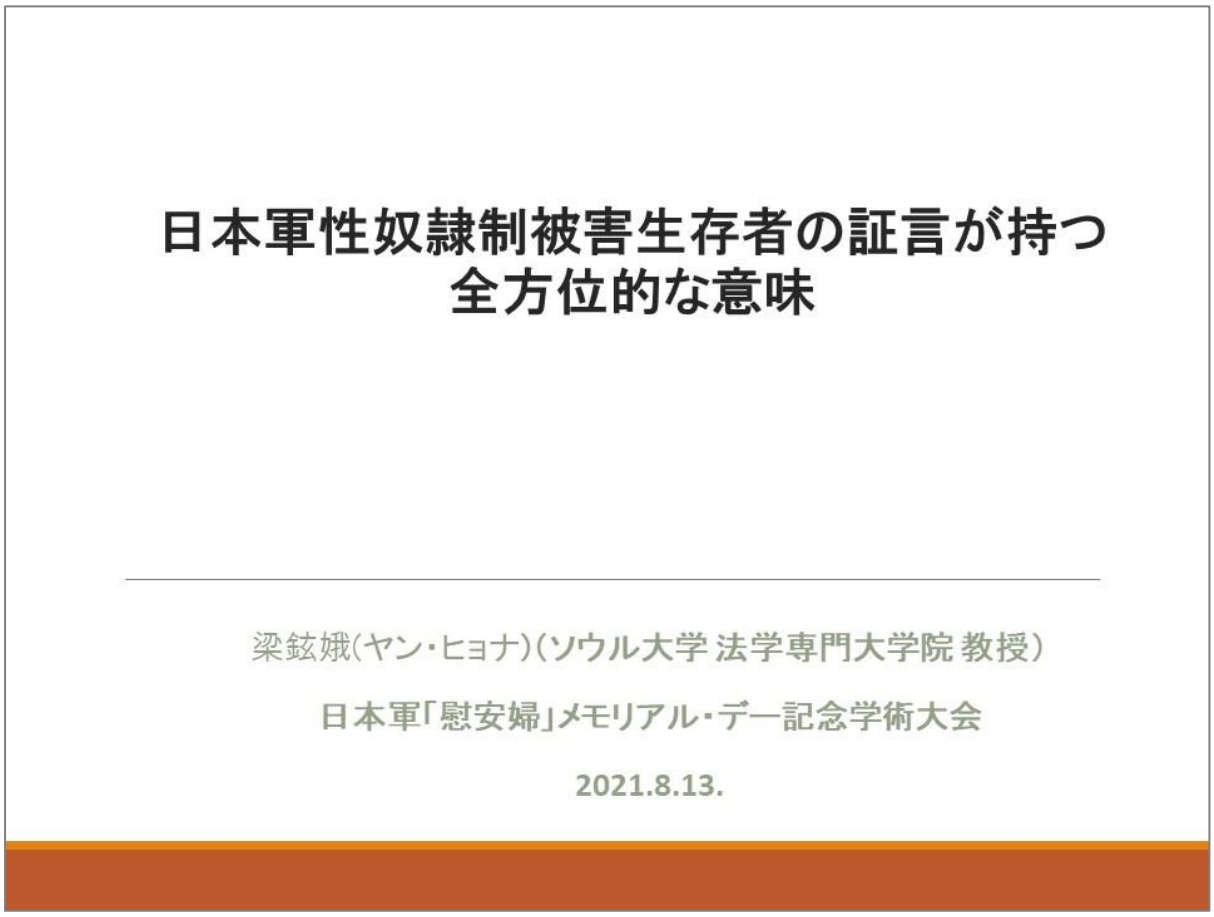
動画

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標的」（２０２１年、監督＝西嶋真司、配給＝グループ現代）

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終わらない戦争」日本字幕版（２００８年、監督＝金東元）

日本軍性奴隷制被害生存者の証言が持つ全方位的な意味

梁鉉娥(ヤン・ヒョンア) I ソウル大学教授



目次

I. 韓国における被害者証言研究

II. その意義：真実と正義、回復の基礎

III. 証言研究の示唆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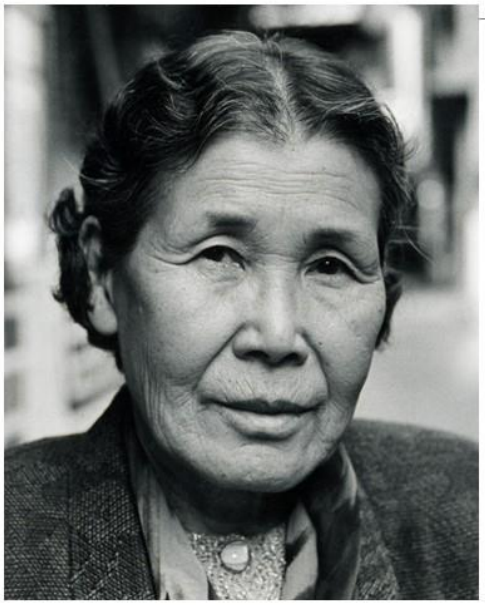
IV. 結び

I. 韓国における被害者証言研究

* 1990年代初めに民主化と女性運動という、
証言の聴き取りの脈絡が形成

* 韓国では、金学順による最初の公開証言(1991.8.14)が
行われると、他のサバイバーらも相次いで名乗りを上げた。
(ちなみに、沖縄の裵奉奇[ペ・ポンギ]被害生存者が
先立って証言している。)

故・金学順(1924-1998)による韓国在住被害者の最初の証言(1991)



1991年8月14日、韓国では初めて日本軍「慰安婦」被害生存者・金学順の証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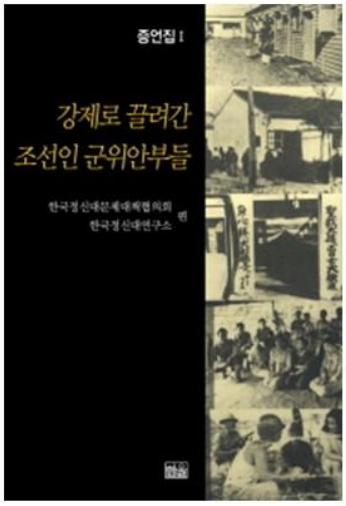
「私は恥ずかしくない。
この瞬間を一生待っていた」。

力もなく名もない、地域の基層民によって、日本軍「慰安婦」問題に対する韓国、アジア、そして世界の深い沈黙がやぶられた契機

韓国の「慰安婦」被害者の証言集の刊行

* 第1巻(1993):挺対協(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身隊研究会出版 (19人の証言)
* 第2巻(1997):挺対協&韓国挺身隊研究会(15人)
* 第3巻(1999):韓国挺身隊研究所&挺対協(14人)
* 第4巻(2001):挺対協 2000年日本軍性奴隷戦犯女性国際法廷 韓国委員会 証言チーム(9人)
* 第5巻(2001):挺対協 2000年日本軍性奴隷戦犯女性国際法廷 韓国委員会 韓国挺身隊研究所(10人)
* 第6巻(2004):挺隊協付設 戦争と女性人権センター 研究チーム (12人)
* 中国に連行された軍慰安婦たち証言集1(1995):韓国挺身隊研究所&挺対協(10人)
* 中国に連行された軍慰安婦たち証言集2(2003):韓国挺身隊研究所(17人)

証言集1(1993)と証言集2(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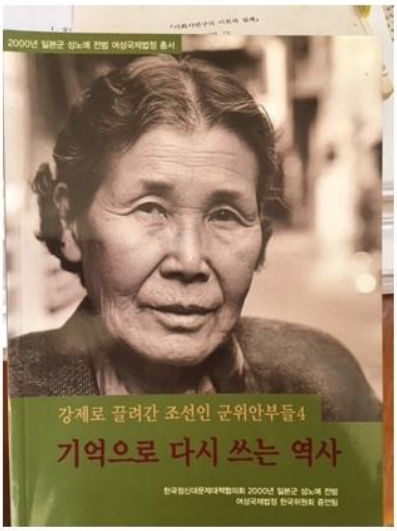




『証言集—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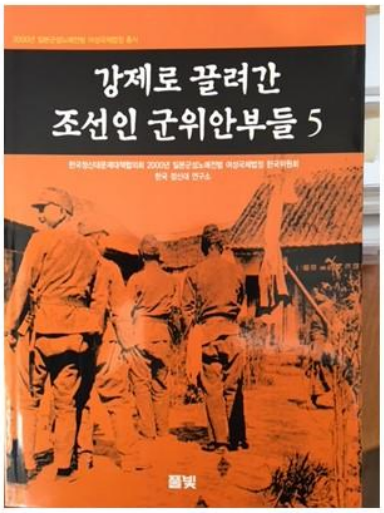
証言集3(1999)と証言集4(2001)





『証言集—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

証言集5(2001)と証言集6



『証言集―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



『歴史をつくる話―日本軍「慰安婦」女性たちの経験と記憶』

＊ 以上の証言集シリーズには、100人余りの被害生存者の証言を収録。

＊ 他にも、地域の諸団体によって出版された証言集を合わせると、17冊(朴貞愛[パク･･ジョンエ]、2019)。上記の証言集シリーズに収録された証言との重複性は不詳。

＊ 韓国の他の公権力被害者の証言研究と比較すると、最も持続的で大規模な取り組み、複数面接、深層面接、一貫した証言が証言集として出版された。

＊韓国の公権力被害者、女性、基層民衆など、口述史研究の師表

＊10年間の調査研究過程で、「慰安婦」運動の進化、多様な主体が参加する中、方法論的･認識論的変化が現れた。

II. その意義：真実と正義、回復の基礎

＊被害者の証言は、真実と正義、回復に「全方位的(panoramic)な影響」

＊ 被害者の出現(coming out)：韓国に限らず、アジアの被害者、オランダの被害者などを出現させたことで、「国際的な女性人権」イシューとして浮上させた。

＊ 社会運動の動力：「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の結成、

さらには世界的レベルでの日本軍「性奴隷制」運動を触発

＊ 裁判の提起につながった：被害者たちが日本政府を相手取って提訴(legal actions)。
（参考：「関釜裁判、日本山口地方裁判所下関支部での一審で原告が一部勝訴(1998)したが、最高審で敗訴(2003)）

＊ 人権機関の調査：国際法律家委員会(ICJ)、国際労働機関(ILO)、国連人権委員会など国際機関による調査・報告書作成を引き出した。

＊ 研究へのインスピレーション：1990年代初めから関連研究に大きな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与えた。

1. 被害事実の究明に決定的に貢献

*「慰安婦」動員：日本の公権力による詐欺と強圧(enforced-ness)；業者の公募

＊ 朝鮮の被植民地状況が、強圧と詐欺に脆弱な条件を形成＋女性差別

＊ 慰安所での全方位的人権蹂躙：監視、飢餓、殴打、拷問、疾病、麻薬など

＊ 性暴力：前代未聞の長期的で体系的な強かん＋再生産的暴力(Reproductive Violence：生殖器の毀損、性病感染、不妊など)の証言

＊ 第2次世界大戦の終戦後、敵陣に放置：飢餓、殺人、爆撃などに関する目撃証言

*帰国後、韓国社会で長い間、偏見や疎外、貧困が持続(postcolonial da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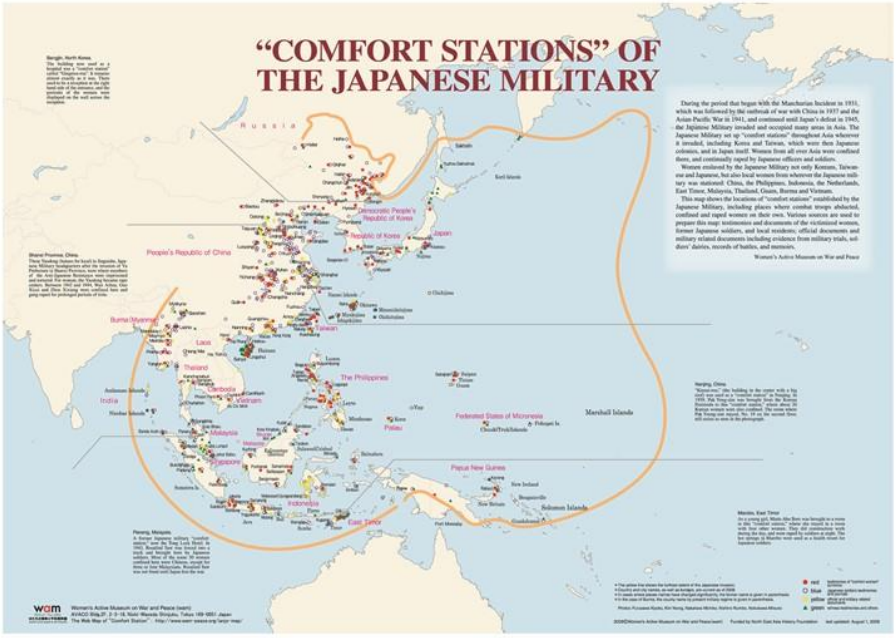
2. 日本軍性奴隷制の解明に貢献

*日本軍「慰安婦」の動員の仕方、動員時期、動員の経路、慰安所の種類、位置、運営方式、不法行為の様相などの解明に、大きく貢献した。

*被害者の民族的構成やそれによる違いの解明にも貢献：被害女性は南北朝鮮、中国、台湾、日本、インドネシア、オランダ、フィリピン、東ティモールなどに散在するが、植民地人、日本人、交戦地、占領地など、当時の「日本との関係性」によって、その経験と被害の様相に差がある）

＊アメリカ、イギリスなどで連合軍の文書資料、写真資料などを発掘し、これらの資料と被害者の証言を交差分析する新しいアプローチ（例：ソウル大学人権センターの鄭鎭星[チョン・ジンソン]研究チーム、『連れて行かれ、捨てられ、私たちの前に立つ』2018）

＜事例＞日本軍「慰安所」マップ：
被害者の証言、軍人の証言、その他の文書資料に基づいて作成



3. 被害生存者の主体性とアイデンティティの回復：回復的正義 (restorative justice)

＊ 韓国の証言研究の経験と研究者が蓄積されるにつれ、研究方法論にも変化が現れた。

＊ 被害者は、「ハルモニ」と同時に「生存者」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で表象

→「被害／生存者」という呼称：激しい人権蹂躙の被害者であり、その被害を「生き抜いた」生存者として表象

＊ さらに、他の人と韓国とアジアの「被害者」を代弁する「証人（witness）」

＊ 日本軍性奴隷制運動のダイナミズムの中で人権運動家として位置づけられた被害者たち　：被害者の尊厳性と魂(spirit)の回復

＊ 証言活動が被害生存者にもたらす回復機能: 証言研究が続くにつれ、証言者はより詳しく力強く証言する[「聞くに値する話」になる, キム・ソンレ(2002)]

＊ このように、証言は被害の叙事を超えて生存の叙事に、民族の叙事を超えて個人の叙事に、個人の叙事を超えて共同体の叙事に進化する

＊ 証言研究者共同体：研究者を超えて証言者たちに対する「証人」となり、証言を「公共の記憶」へと媒介する媒介者・支持者の役割

＊ 共感する聴衆共同体(キム・スジン、2006)をつくること：最も広い範囲の「被害者」共同体の回復作業

III. 証言研究の示唆点

1.真実と事実の問題

＊約50年前に凄まじい性暴力と人権蹂躙を受け、韓国社会と国家に放置され生きてきた被害者の記憶と証言は、「事実かどうか」よりもはるかに複雑な「言葉を求める闘い（struggle for seeking the words）」の状況に置かれていた。

＊自分たちが動員された場所、動員の過程、動員した主体などに関する情報から完全に遮断された人質（captives）のような状態での証言の聞き取り：このような「事実」は、国家や軍隊など公権力の記録物の不足、警察や検察など捜査機関の責任、研究者の努力によって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柄。日本政府の責任と責任否定が核心である。

＊ほとんどの被害者は、「自分が遭ったことを何と呼ぶべきかを知らない状態」でほぼ半世紀を生きた（軍隊性売買ー強制性売買ー体系的強かん、性奴隷制）

2.「被害」経験：どう解釈するのか

＊被害生存者にとって最も話しにくい体験、性暴力

＊辛うじて口にした言葉、（日本の軍人を）「取った」、或いは（客を）「取った」という経験を記録し、同時に、それをどう解釈するかは、歴史的、女性主義的、法的研究などの課題である。

＊1920、30年代に生まれ、正規の教育をほぼ受けられなかった植民地女性の分節された(broken)「母国語」であり、孤立の中で生きてきた女性の言語：韓国語とともに、日本語、中国語が混ざって出てくる。

＊日本軍性奴隷制による「被害」は、日本軍「慰安所」で終わるのではなく、健康(性病の後遺症、子どもの代への継承など)、家族(正規の婚姻ままならず)、周りの評判など生涯全体の中で持続的に発生する。

＊日本の軍人との「名づけ難い」関係：愛？ 強かん？など被害生存者の証言再現において「ナショナリズム」的な歴史記述の境界を越える。しかし、このような「愛」にも持続的な被害が現れている。（子ども、一生の秘密）

故ハン・オクソン
(한옥선、1919-2009)

「太原にいた頃はもう…無理やり本当にもう、仕方なく本当にもう、ウチがあんなとこに行ったあれのせいで…、何人…体はだからその…奪われたんだから、殴られながら受け入れたけど、何人かっていうのは、数は…頭に入れなかった。

「それから、(泣き出して)それから、またしばらくすると、そこから汽車に乗ってかなり移動した。行って「*オスイジング*」という町に今度は到着した。そこではもう…、どうせ体は捨て物になったんだと思って、軍人の相手をして(泣きながら)…



3. 被害者中心の証言再現と証言者主体性との出会い

* 複数(3回以上)の深層インタビューの中で、極めて一貫して、繰り返し語られた事件が発見されている:証言の「揺るぎない」真実

* 幼い頃の母に対する記憶、貧しさ、連行される途中の破船と生死の境、終戦後の帰国以降の男性との関係、子ども、仕事など固有の記憶がある

*「記憶の構造」に基づいて証言を再現することは、「生々しい(raw)」証言を報告するためではなく、証言の読者が予め決められた記憶の枠組みー被害者はいつどこで生まれ、どのように連れていかれ、どんな苦痛を受けたというようなーではない、証言者の記憶回路または情動(affect)回路に入って行かせようというとする方法



故 アン・ボプスン(安法順、1925-2003)

「(2000年に女性国際法廷への参加のため東京に来て)ここ日本の、日本軍「慰安所」に来ていた人らが、誰も法廷に来ないのはおかしい。当時、兵士たちは私たちとほぼ同じ年だったから…、ここに私たちが生きているんだから、その人たちも生きているはず」

故キム・ファソン(金華善、1926-2012)

「ある日は、日本の奴らをどう引き裂いて殺せるか…。一人で考えても無駄だよ。」

「一番偉い悪どい奴を殺しちまって…という気持ちまで湧いてくるんだよ、自然に。仇討ちをしようとね。」

「謝られてこの胸に刺さった傷が癒やされるかい、癒やされやしないよ…。」

「金もくれないし、私が貧しくて嫁にも行けず、こんなふうに老いちまったんだから。」



IV. 結び

1. 下から書く歴史であり公共の記憶(public memory)

* 韓国の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かかる証言研究は、朝鮮の植民地の歴史を男性エリートではなく、被害生存者の体験や言葉により書き直した歴史;

* 第2次世界大戦の体験を、植民地朝鮮人の記憶により書き直した世界史;

* 韓国政府と韓国人が植民地主義から解放さ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日本政府との外交関係、韓国人附逆者たちの沈黙、女性被害者たちに対する偏見などから)を告発する「ポスト植民の」歴史という全方位的意味を持つ。

*** 被害者たちは証言により、賠償の対象ではなく、歴史を書く主体となる。**

2. 証言記録物の保存および二次的記録物の生産

* 現在の記録に対する体系的な保存と再現の努力が必要
* 映像、展示、翻訳物など、二次的生産物の保存および方法論に対する議論も必要
* 韓国の証言研究の歴史はすなわち研究者の歴史でもある
  : 研究者共同体と研究者育成の重要性

3.「ポスト」の時代、証言と記憶の重要性が一層深まる

公共記憶の拡散;
そして、被害生存者たちへの記念(commemoration)のために

故 チェ・ガプスン (崔甲順,1919-2012

「自分がそんな生き方をしたんだって思うと、眠れなくて、昼もこんなふうに横になってね、」

「誰か一人でも来ないかなって。誰も来なかったりすると、なんとなく眠気がさしてきたりして一眠りするんだけど、今度は夕方には眠れなくなってね、そういうことを全部思い出しちゃうんだ。」

「うちの母ちゃんのとこ[から]生きて出てきたこととか思い出すし、その、一般の人にやられたこと、満州から出てくるときに豆腐売りをしたり、あれこれ仕入れて売ったり、金をつくるために豆満江で溺れて死にしそうになったこと…。」



真実を話した金学順: 当時と現在の意味

アレクシス·ダッデン(Alexis Dudden) I アメリカ コネチカット大学教授

こんにちは、今日こうしてご一緒することができて光栄に思います。実際に出席したいのですが、そう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残念です。これはパンデミックにおいて新たに規定されつつある私たちの生き方を示しているようにも思えます。ハルモニたちのことを思えば、私たちがいま感じている不便さなど何でもありません。金学順(キム・ハクスン)ハルモニを含む多くの被害者の方々が経験した性奴隷制の犯罪は、国連で反人類的な犯罪と規定されています。コロナ感染症で家族や親類を失った方々には遺憾の意を表します。しかし、現在、私たちが耐えなければならない不便などは、1991 年の金学順ハルモニの証言を想起すれば 何でもありません。

金学順さんは毎日 3—4 人、またある日には 7—8 人の男性から性暴力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このことは犯罪行為であり、人間が耐えられる範囲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今日は、金学順ハルモニから学んだ記憶からはじめたいと思います。私が学生として東京で過ごしていた時、私の日本語の先生が朝日新聞に載った金学順さんの証言を読ませました。金学順ハルモニに対する私の個人的な記憶はこうです。金学順が語った自分の人生に関する真実の証言は、単なる反日証言ではなく、数百、数千人の類似した被害生存者に対する真実でした。私は不思議なことに、日本政府の支援を受けて日本の最も著名な大学の一つといえるところで、日本語教師から彼女の真実を学ぶことができました。

30 年もの歳月が流れた今日、日本の現在の政権は、このすべての女性たちを嘘つきだと信じさせています。私がいるここ米国で、今年、世界で最も権威のあるハーバード・ロースクールの教授であるジョン・マーク・ラムザイヤーは大きな物議を醸しだしながら、すべての証言の妥当性に疑問を提起しました。30 年前の金学順ハルモニの勇気ある証言は、全世界の法曹界に人間の証言の価値について説明してくれました。特に、特権層ではなく、特定の大学の地位によって認められることのなかった人たちの証言の重要性を証明しました。パンデミックの時代、聞こえない場所にある声に耳を傾けることは、世界史のために金学順ハルモニが発した証言と一致する流れにあることだろうと思われます。

金学順は、自分の身に加えられた犯罪以降の数十年を堪え抜いた末に、あれは酷い体験だったし、私の人生を台無しにしたと言いながらも、私は相変らずここにいると言いました。ま

た、自分には理由があって、ここにいるのだ、真実を語るためにいるのだ、と証言しています。私は当時東京の女子学生でしたし、私の男性教師は「私はあなたたちに日本語でこういう内容を学んでほしい」と話す勇気のある方でした。そして、私が金学順ハルモニの証言をこういうふうに 話している理由は、自分の歴史や真実を世界が学んでほしいと彼女が願い、特定の国を非難するよりはシステムを問題視することを望んだからです。

1930~40 年代に日本政府によって行われた軍事化された性奴隷制度は、人身売買や強かんを目的とした人身売買の歴史上最も大きな例として残っています。そして私たちは、数十万人の被害者と生存者を代弁する彼女個人の証言の価値について考え、また、否定したり、無知だったり、まったく気にしない人々に対応し続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金学順は 20 世紀の最も勇敢な人々の中の一人であり続け、彼女の身体に刻まれた恐怖を永遠に終わらせるために、彼女の遺産を 21 世紀に継承し続けることは、私たちみんなの義務です。

本日わたしを招待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会の成功を祈っています。

生きている正義: 生存者の声の力

エリザベス·W·ソン(Elizabeth W. Son) I アメリカ ノースウェスタン大学教授

先ず、今日の学術大会に参加する機会をくださった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正義記憶連帯(以下、正義連)と李娜栄先生に感謝いたします。個人的には、尊敬する多くの研究者、活動家の方々と一緒にこの場に立つことができ、光栄に思います。今日の私の発表文では生きている正義の概念、そして金学順ハルモニの公開証言と他の生存者の方々の声が、どのように時空間を越えて「「慰安婦」」正義のための国際運動を支える響きを持ってきたのかについてお話してみようと思います。

はじめに

14 年前に私が日本軍「慰安婦」の歴史に関する女性芸術やアクティビズムについて研究を開始した際、当時の生存者のハルモニたちに、なぜ水曜集会に参加しておられるのかお伺い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そのうちの一人だった吉元玉(キル・ウォンオク)ハルモニは、未来のためだと答えました。ハルモニは生き証人として世の中に自身の戦争体験を伝え、正義のために闘うことがご自分に与えられた義務だと考えていたのです。吉元玉ハルモニの考えは、別の生存者として 1991 年 8 月 14 日に公開証言をした金学順さんの言動とも似ています。

金学順ハルモニは、世界中の様々な世代の女性が、自分たちの性暴力被害の経験を共有できるきっかけをつくってくださいました。例えば、ジャン・ラフ・オハーンさんのような生存者たちは、金学順ハルモニの公開証言をテレビで視聴し、自分も 1992 年に公開席上で証言しています。また、1990 年代のボスニア内戦当時の軍による性的暴力の生存者たちも、「慰安婦」被害者のハルモニたちの公開証言に支えられ、国連で証言することを決心したことがあり、2010 年の「グアテマラ武力紛争での性暴力女性生存者のための良心法廷」は、2000 年に東京で開かれた日本軍性奴隷制を裁く女性国際戦犯法廷(以下、女性法廷)に直接的な影響を受けたものでした。この他にも、金学順ハルモニの公開証言に影響を受けた例は、数え切れないほど多いです。

生きている正義

金学順ハルモニのように声を上げた生存者の方々、毎週水曜集会に参加する活動家たち、生存者をたたえる作品をつくる芸術家、そして少女像を守ってきた支持者まで、これらすべて

の人々が、現在進行中の正義の領域拡張を端的に示す存在です。彼らは公式賠償のほかにも、生存者との関係づくり、教育キャンペーンおよびワークショップの主導、追悼作業への支援、連帯構築の必要性などを強調しています。つまり政治的、法的、社会的、文化的に拡がった観点の賠償を求めているのです。

このような賠償の概念の拡張は、正義が完全に政府や裁判所の決定に左右されるのではなく、私たちの手にかかっているものでもあ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す。正義は、具体化された行為と共同体を通じて実現でき、そのように実現された正義こそが私たちの支持する生きた正義なのです。私の著書である *Embodied Reckonings: "Comfort Women, " Performance, and Transpacific Redress* の中で、私はまさにこの生きた正義について述べ、水曜デモ、公開証言、法廷、演劇および芸術、追悼碑の建立のような具体的な行為が、活動家、生存者の方々、支持者が公式賠償を求めるあり方と賠償の領域の拡張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のだと書きました。女性の身体に対する侵害を重点とした日本軍性奴隷制の歴史は、デモ、法廷、演劇、追悼碑の建立などの行為を通して、そのような身体を意味をもって再現して動員することを注文しています。

一つの例を挙げますと、私の本にもあるように、水曜集会に対する私の関心は、デモを通じた公式賠償要求がつくられる過程についての探求から始まりました。しかし、私が 2007 年にデモに参加して、その参加者と対話しながら気づいたことは、それよりももっと意味深いことがそこで起こ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した。水曜集会は、それ自体がまさに正義の現場だったのです。支持者たちが日本大使館に向かって公式賠償を要求する時も、彼女たちは生存者の方々や支持者たちに関心を注ぐように、向かい合ったままで集会をします。このように日本大使館から反対向きになって、互いに向かい合うという一連の物理的行為を通じて、私たちは変化をもたらす主体が誰なのかに対する意味的な拡張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ます。このように水曜集会は「日本大使館前の公共の場所を、賠償を要求する場所へと変え、デモの参加者はここで歴史教育と治癒的共同体の具現を経て、全世代的・超国家的な連合の構築による社会的救済を想像し、実践しています」[1]。このような生きた正義を描写する最も美しい事例の一つは、吉元玉ハルモニがデモ参加者を「我が子」と捉えていることから見出すことができます。私とのインタビューの中でハルモニは、「たまに小学生が来て、『ハルモニ、ハルモニ、頑張ってください！　私たちがいるじゃないですか』と言うと、自然と心が開かれる」と、ハルモニとこの幼い支持者たちの間の特別な絆を表現しました[2]。インタビューをしながら、私はこの子どもたちに対するハルモニの愛をはっきりと感じることができました。子どもたちはハルモニの家族になって、とても意味のある社会的賠償を果たして差し上げたのです。

---

[1] Elizabeth W. Son, Embodied Reckonings: "Comfort Women," Performance, and Transpacific Redres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2018), 23.

[2] 吉元玉さんとのインタビュー

今日の発表文で私は簡略ではありますが、生きている正義を支える源である性暴力生存者の方々の証言、演劇をはじめとする芸術作品、そして追悼関連の行為に対し、金学順ハルモニの公開証言が持つ響きについて見ていこうと思います。

数々の響き：ジャン・ラフ・オハーン、ボスニアとの関連性、そして韓国のトロイの女性たち

金学順ハルモニと他の生存者による公開証言や正義に対する嘆願をテレビで見た後、オランダ領東インド(現在のインドネシア)に対する日本の統治当時、性奴隷生存者であるジャン・ラフ・オハーンさんは、1992 年に自分もまた公開席上に出て、韓国の生存者に対する支持を表明することを決心しました。彼女はオーストラリアで「慰安婦」問題運動に積極的に参加し、日本で開かれた 1992 年の戦後賠償国際公聴会、2000 年の女性法廷、2007 年の米国下院での公聴会など、世界各地で証言活動をしました。

米国連邦議会で日本軍「慰安婦」謝罪決議案(HR 121)を可決させるために米下院で証言した時、彼女は沈黙を破った理由を次のように説明しました。

> 「1992 年にボスニアで戦争が起こり、私は女性たちが再び組織的に強かんされるのを目撃しました。そして、同じ年にテレビで韓国の「慰安婦」被害者たちも見ました。その女性たちは、自分の長い沈黙をやぶり、金学順女子は最初に口火を切った「慰安婦」被害者でした。私はテレビで、彼女たちが正義を訴え日本政府の謝罪と賠償を求めている姿を見ました。特にボスニアで女性が再び組織的な強かんの被害者にされているのを見て、私は「慰安婦」被害者らを助けたいと決心しました」[3]。

金学順ハルモニの公開証言は、1990 年代に「慰安婦」の正義に関する運動を触発させただけでなく、ボスニア戦争のような武力紛争下での女性への性暴力犯罪の責任の重要性を強調することにも一助しました。強かんが戦争犯罪とみ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を貫徹させるため、「慰安婦」生存者のハルモニと支持者たちは、1993 年にウィーンで開かれた国連世界人権会議と 1995 年北京で開かれた第 4 回世界女性大会で、欧州の活動家やボスニア集団レープの生存者たちと出会いを重ねました[4]。このような国際舞台において、活動家らは日本軍性奴隷制のような集団性暴力の加害者に対する免責と不処罰が、ボスニアのようなところで現代の戦時性暴力につながったのだと指摘しました[5]。また、この集いに参加した生存者たちは、お

---

[3]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Comfort Women,"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the Global Environment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Serial No. 110-16, February 16, 2007, 25-26.

[4] Charlotte Bunch and Susana Fried, "Beijing '95: Moving Women's Human Rights from Margin to Center," Signs 22.1 (Autumn 1996): 200-204.

[5] 日本軍「慰安婦」被害者を支持する活動家たちも、ボスニア事件を法的な先例として指摘しました。日本軍性奴隷戦犯女性国際法廷(以下、女性法廷)は、1996 年、旧ユーゴスラビア国際刑事裁判所で

互いに辛い過去を世間にさらけ出す勇気を与えられたとし、胸の痛む感情を表現したりもしました。ウィーン会議で、旧ユーゴスラビアの組織的女性強かんについて証言したパディラ・メスミセルビッチさんは、「金福童(キム・ボクトン)さんについて聞いた時、自分の魂にひどく虚しいものが感じられました。なぜなら、第 2 次世界大戦当時に韓国の女性に起こった出来事が、今日の女性にも変わりなく起こっているからです」と語りました[6]。先に述べたように、ボスニア女性たちの経験は、ジャン・ラフ・オハーンのような生存者たちにとって、前に出るきっかけになりました。ジャン・ラフ。オハーンさんは、2000 年の女性法廷で次のように語っています。「…自分が声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気がしています。なぜならボスニアでもこんなひどいことが同じく起こっていると聞いたからです」[7]。

芸術家たちも、日本軍性奴隷制とボスニア戦争の間のこのような関連性を描いたりしました。ボスニア生まれの演出家のアイダ・カリックは、生存者らの証言から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日本軍性奴隷制の歴史を扱うために、トロイ陥落後にトロイの女性たちが奴隷になる内容のエウリピデスの悲劇を発展させ、<トロイの女性たち>という作品を構想して演出しました。アイダは「この作品は、トロイの女性たちの話でもあり、韓国の「慰安婦」女性の話でもあり、私の祖国の話でもある」と話しました[8]。数千人の日本軍性奴隷の犠牲者に起きたおぞましいことが、約 2 万から 5 万人と推算されるイスラム女性と少女たちが強かんされたボスニア戦争初期を生き抜いた彼女に大きな反響を与えたのです。カリックは韓国とオーストリアを行き来しながら韓国の振り付け師や作曲家、パンソリ役者、劇団と共に、2 年間<トロイの女たち>を制作しました。2007 年、ウィーンのシャウスフィルハウスで公演を終えた後、<トロイの女性たち> はアメリカと韓国で上演されました。

活動家たちの努力に加え、カリックのような芸術家たちは日本軍性奴隷制の歴史を扱うために詩やドキュメンタリーから演劇にいたるまで、様々な文化的方法を使いました。日本軍性奴隷制に対する記憶を素材にしている演劇の製作は、この 25 年間増え続けました。演劇は生存者の存在を具体化する空間を提供すると同時に、観客に情緒的な手段を通じて生存者の証言を聞ける機会を提供します。日本軍性奴隷制の生存者の経験を劇化することはまた、トラウマを

下された在ボスニア・セルビア人軍人や警察官 8 人に対する有罪判決を言及したりしました。これは国際裁判所が強かんを人道に対する罪として分類した最初の判決でした。より詳しくは Marlise Simons の 1996 年 6 月 28 日付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の記事"U.N. Court, for First Time, Defines Rape as War Crime"を参照。 "U.N. Court, for First Time, Defines Rape as War Crime," The New York Times, June 28, 1996.

[6] Gertrude Fester,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Agenda 20 (1994): 77.

[7] Yayori Matsui,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Memory, Identity, and Society,"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19.4 (December 2001), 124.

[8] Hyun Noh, "Geuleeseo Bigukgua Mannan Wianbudul" [The 'Comfort Women' Meet Greek Tragedy], Maeil Kyungjae [The Daily Economics], October 22, 2007, A35.

抱え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生存者や遺族の個人的な痛みのように、公式活動で議論されないテーマを考える機会になったりもします。

カリックの＜トロイの女性たち＞の場合、観客が戦時性暴力の長い歴史と残酷さに向き合える重要な空間ともなりました。<トロイの女性たち>は、特定のテーマ(韓国人「慰安婦」被害者たちの経験)と超歴史的なテーマ(エウリピデスの悲劇に登場するトロイの女性たち)、そして侵害(姜徳景[カン・ドッキョン]ハルモニと安点順[アン・ジョムスン]ハルモニの証言)と治癒(巫女儀式運動)のようなテーマの間の聴覚的、視覚的、動きに基盤した変化を通じてこのような成果を成し遂げました。劇はまた、複数の時代像(トロイ戦争と第 2 次世界大戦)の間を移動し、日本軍性奴隷制を孤立した事件ではなく、長くて長い戦時性的暴力の歴史の一部に位置づけました。この作品の核心は、女性に対する数世紀にわたる戦時性暴力の悪循環を断ち切る方法と、女性と共同体に行われた破壊を修復する方法についての道徳的問題にあります。生きた正義というより大きな枠を構成する一部分として、＜トロイの女性たち＞のような演劇は、観客を追悼し証言する国際共同体の一員にしてくれます。

数々の響き：金福童ハルモニ、平和の少女像、KAN-WIN の#ComeSitWithHer 運動

ジャン・ラフ・オハーンさんの行動とアイダ・カリックの演劇に見られる金学順ハルモニの証言の響きのように、金福童(キム・ボクトン)ハルモニの行動と追悼プロジェクトからも、金学順ハルモニの証言の響きが見られます。金学順ハルモニの公開証言があってからまもなく、金福童さんも 1992 年に証言を決心しました。また、金福童ハルモニは「慰安婦」運動に積極的に参加し、世界を回って証言し、正義を求めました。

その活動の一環として、吉元玉ハルモニと金福童ハルモニは、武力紛争下での性暴力被害女性を助けるために、2012 年にナビ(蝶々)基金を設立されました。お二人はデモと海外証言活動の中で出会った人々に寄付することを訴え、後援団体に対して基金づくりの行事の開催を勧めました。2013 年にお二人はコンゴの強かん被害者とベトナム戦争当時の韓国軍による性暴力生存者に基金を寄付しました。性暴力被害生存者の年長者として、お二人は本人だけでなく、他の性暴力被害者を助ける後援者という新しいアイデンティティをつくりました。そして、そのような活動を通じて、二人のハルモニは世界の生きた正義を育んでおられたのです。

金福童ハルモニが 2013 年、アメリカ・カリフォルニアのグレンデールでの平和の少女像除幕式に参加された時、私はハルモニが他の人々に対しても生きている正義を維持することに参加するよう促しているのを直接目にする機会を得ました。以下は、私の本から抜粋した当時の状況です。

> 金福童ハルモニの演説は、その日の行事の中で最も強烈な瞬間だった。白いチョゴリと黒いチマを着たハルモニの姿は平和の少女像そのものだった。ハルモニの服は、強制的に性奴隷になったその時の年齢を想起させるものであると同時に、失われた時間

を取り戻すのだという強力なジェスチャーだった。優雅に着飾ったハルモニは端正できっぱりとした口調で「これまで多くの国を訪れながら、日本が謝罪しなければ世界を回って記念碑を建立する」と話してきました。でも、グレンデール市にこの記念碑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嬉しいです」。 記念碑の建立は、それ自体が賠償であると同時に、賠償の要求でもあった。ハルモニは「この記念碑は過去事を代表するものだから、この平和の少女像をここで必ず守ってくださるようお願いします」と言った。「日本が妄言をしないよう圧力を加える努力に加わってください。日本政府が妄言の代わりに、私たちに直接公式的な謝罪をし、戦争のない世界をつくるよう助けてください。なぜなら戦争は必然的に私たちのような被害者を生み出すからです。私たちの子孫が平和な世界で暮らすことを願っています」。金福童ハルモニは、李容洙(イ・ヨンス)ハルモニや吉元玉ハルモニがそうであったように、記念碑と子孫の保護についてお話された。ハルモニは正義のための闘争に人々が参加することを望み、また未来世代のための平和の広い地平を明確にされた[9]。

数年後の 2015 年、金福童ハルモニは公開証言のために、シカゴを訪問されました。ハルモニの訪問は、1991 年に設立され、シカゴを拠点に活動するアジア系アメリカ人と家庭内暴力や性暴力の対象となった移民者に対する支援団体 KAN-WIN の後援により実現しました。KAN-WIN は、24 時電話相談をはじめ、家庭内暴力や性暴力の生存者のための一時滞在、相談、職業技術教育、財政管理教育、法律ワークショップ、支援団体、子どもプログラムや社交の集まりを提供する団体でもあります。ほかにも KAN-WIN はシカゴで、日本軍性奴隷制の生存者を支援する国際運動を支持する最も大きな団体でもあります。

1990 年代から KAN-WIN は、生存者の証言集会、連帯デモ、教育ワークショップ、芸術展示会などを組織してきました。団体のビジョン宣言文が説明するように、KAN-WIN は「家庭および性暴力被害者と生存者の支持者として」慰安婦擁護に専念しています。より良い世の中のための私たちのビジョンは、自分たちの正義を求めると同時に性暴力を経験したすべての人のための正義を叫ぶ「慰安婦」生存者や活動家たちの精神とも一致します[10]。KAN-WIN は、公式賠償のための世界的要求に思いを重ねるだけでなく、教育、追悼、連帯の構築を通じて社会的、文化的賠償を実現することにより、正義の地平を広げるのに一助しています。

---

[9]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Comfort Women,"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the Global Environment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Serial No. 110-16, February 16, 2007, 25-26.

[10] KAN-WIN "Comfort Women" Justice Advocacy, "KAN-WIN Statement on 'Comfort Women' Advocacy," accessed on August 2, 2021, https://www.comfortwomen-justice.com/uploads/5/1/4/6/51462959/kw_cwadvocacystatement.pdf.

端的な例として、KAN-WIN は「慰安婦」メモリアルデーに#Come Sit With Her という行事、つまりシカゴ市内に平和の少女像を持ってきて、連帯の印として参加者たちが少女像の隣の空いた席に座るよう勧める行事を実施しています。KAN-WIN は道行く人々に「#Come Sit With Her」と声をかける過程で、この行事の参加者に日本軍性奴隷制の歴史を記憶し一員になることがどのような意味かを振り返ってみるよう訴えています。個人的に私は、自分がその少女像の隣の席に座るときや、他の人が座る姿を見るたびに、私たちが金福童ハルモニや金学順ハルモニの正義のための闘いに応答しているのだと思えたりします。

最後に

生存者の方々、活動家たち、そして「慰安婦」運動の支持者らが公式賠償の完全な実現を引き続き支持する中で、私たちは引き続きサバイバーであるハルモニたちの経験を記憶し尊重する取り組みと、ジェンダー基盤暴力の生存者の尊厳性を教えながら、ジェンダー基盤の抑圧と暴力のない世の中のための一連の努力を傾けることで正義の地平を広げることに役立ちたいと思います。30 年前の金学順さんの公開証言の響きを感じ、生きている正義を支持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運動における自叙伝の役割:日本軍「慰安婦」被害者は権利のための闘争に証言をどう活用したか

キャスリン·バスゲート(Kathryn Bathgate) I ドイツ ミュンスター大学修士課程

はじめに

30 年前に金学順(キム・ハクスン)ハルモニが名乗り出て、アジア太平洋戦争当時、日本帝国の軍隊により性暴力を受けた話を打ち明けた時、彼女は家父長制社会において自分に貼られた烙印を克服し、性犯罪に対する社会の態度と、日本とアジアの戦争記憶や歴史に対する理解に挑戦した。彼女が破った沈黙は、数百人の元「慰安婦」たちが勇気を出して日本政府による軍「慰安婦」制度否定に反駁できる環境をつくってくれた。これまでの 30 年間、女性たちは多様な形で、特に証言と自己記述を通じて、話を聞かせてくれた。一般に証言や自己記述は、ある人の人生の特定の出来事や一連の出来事に関する情報を提供する。「慰安婦」たちは、そこからさらにもう一段階を進んでいる。女性たちは言葉を通じて「慰安婦」制度と家父長制に対する記憶に挑戦する。そのような理由から、これは一種の運動として分類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ことを裏づけるために、運動における証言の役割を、二人の元「慰安婦」、マリア・ロサ・ヘンソン Maria Rosa Henson とジャン・ラフ・オハーン Jan Ruff-O'Herne の自己記述誌(autobiography)を通じて分析を試みる。フィリピンとオランダでそれぞれ最初に名乗り出た「慰安婦」証言者として、彼女らの運動への貢献は大きい。彼女らはフェミニスト運動の目指すところを応援するとともに、「慰安婦」問題に対する関心を高めた。このような自己記述誌を運動的行為と分類するために、政治的自己記述誌に関するマーゴ・パーキンス Margo Perkins とカルメン・フェルプス Carmen Phelps の文章、また、シドニー・スミス Sidonie Smith、ケイ・シャファーKay Schaffer、ジュリア・ワトソン Julia Watson の自己記述誌に関する文章も活用した。このよう作業により、自己記述や証言が一種の運動であるという主張を確認し、強化する。

運動としての自己記述誌

パーキンスとフェルプスは、「個人的なことと政治的なことの関係を強調しようとする活動家たちの努力に、自己記述ほど役に立つ文章の形はないだろう」と述べた(41)。記述者は,政治的または社会的構造や政治的決定が、個人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かを示すことができ

る。個人的なことと政治的なことを結合することにより、このような構造の問題点を露にできる。自己記述の形式を用いることは、運動の一つの形態であり、以下のように定義できる。：

> 「運動が、社会的または政治的制度の一部の既存要素に挑戦するために行う行動は、運動の目的を達成する上で役立つ。したがって、運動にはフォーラムへの参加から財産の破壊に至るまで、多様な行動を含まれる」(Saunders 9)

運動の第１の目標は，努力を通じて体系的な変化をつくることだ。このような努力は長い間無視され、隠されてきた「慰安婦」らの歴史と同じく、一次的な史料 firsthand accounts に基盤する。運動と生存者は互いに支え合う：団体にとっては自らの主張と運動を裏づけるために生存者の話が必要で、被害者にとっては自身の話を知らせるために団体の支援が必要である。

フェミニスト運動の中ですべての目標は、家父長制と家父長制から派生する社会的構造、女性を持続的に抑圧し、ジェンダー平等を防ぐ結果的態度の解体に焦点を置いている。1980 年代後半と 1990 年代初めに東アジアと東南アジアで起こった運動は、セクシュアリティに関わるこの制度の仕組みに挑戦することに集中した。このような目標は、女性のセクシュアリティに対する長年の視点の変化、女性の安全、権利、身体の自律性よりも男性の性的満足を優先するヒエラルキー秩序をなくすことを含んでいたが、これらの要素が強制売春や性搾取システムを繁盛させるからだ。「慰安婦」たちの一次史料は、このような制度に対する対抗として機能する。

スミスとワトソンの言葉通り、「人々がどのように記憶し、何を記憶し、誰が記憶するかは歴史的に特定されている」(23)。権力者、影響力を持つ者、勝利者が歴史を書き、何を記憶するのかを選別する。過去には，これは、特定の声，物語、 事件の排除を意味していた。対抗歴史 counter-history には、「過去の再解釈」が含まれる。 (22)

> 「記憶する行為により、個人と共同体は異なる種類の主体、すなわち社会の片隅で拷問を受け、追い出され、見落とされ、沈黙され、認められない主体が、声を出す代案または対抗歴史を叙述する。」(Smith and Schaffer 4) 。

自己記述誌は証人の陳述を拡大することで、証言の限界を越えて、より詳細で正確な内容と歴史的文書、写真、絵などの確証的証拠を提供する。さらに、自己記述誌は、被害者らが自分の物語を文脈化し、事件がその人の人生の軌跡をどのように変化させたのかを示し、被害者らに衝撃的な経験を超えてアイデンティティを再構成する力を与える。

1992 年に初めて自分の経験を公開したマリア・ヘンソンは、自叙伝<Comfort Woman : A Filipina's Story of Prostitution and Slavery Under the Japanese Military　慰安婦： フィリピン女性の日本軍性奴隷制物語>でこの形式を借りて、自分の人生の事件と経験を記述した。彼女は日本軍に拉致された後、慰安所で 9 ヵ月間過ごした。ヘンソンの自己記述誌は、彼女への性的搾取を非常に詳細に描写している点で意味がある。「慰安婦」としての彼女の経験に集

中することは、長い間受け入れられてきた歴史に対抗する歴史を提案し、この制度の中の家父長制に挑戦する。彼女の自叙伝は、生存者のナラティブと政治的自己技術の混合に分類することができる。生存者のナラティブでは、著者が「自分自身を被害者から生存者へと変化させる虐待の経験を共有することで、制度的な原因に注目する」(Smith and Schaffer 15)。この類型で、記述者は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再定義すると同時に、問題となる政治や社会制度に注目させる。このようなアイデンティティは、彼らが自らを見る視点を表すと同時に、他人にどのように見られたいのかを表す。反面、政治的自己記述誌は政治と個人を統合し、特定の政治的または社会的文脈の中で叙述の枠組みをつくる。この下位のジャンルは、テキストの中の特定の運動または原因を強調する。このように分類されるには、テキストは次の基準を満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

> 「(1)記述者が自分の個人的な苦痛よりは自身をめぐる闘争の話を強調する；(2)記述者が闘争の歴史を記録し、政治的議題を進展させるために、自分の話を使う；(3)記述者が声を持たぬ者に声を与える；(4)記述者が闘争の真実性や他の運動家の安寧を保護するために、戦略的沈黙を守る；(5)記述者が抑圧的な状況と国家の抑圧的な戦略を暴露する；(6)記述者が自己記述誌を政治的介入の一つの形態として、幅広い聴衆を教育するために使用する。」 (Perkins and Phelps 20)。

自己記述誌の中でヘンソンは個人的経験と政治を結合させており、自分の人生の物語とそれを形成し規定している事件を組み合わせている。その形式がつむぎ出す空間と政治的な自己記述誌の様々な側面を活用することにより、ヘンソンは自分、他の「慰安婦」たち、他の性犯罪被害者たちのために正義なる闘いを展開すると同時に、運動の目指すところを支持することができる。彼女は慰安所で女性に加えられた過酷な行為の記録を提供する。これは制度的変化を起こすために、教育し、知らせ、日本軍「慰安婦」の経験に対する日本政府の責任ある謝罪を引き出すためである。女性たちは自分たちの話をすることで、このような犯罪が二度と起こらせない構造的変化がつくられることを望んでいる。これは運動となり、彼女らの権利と正義のための積極的な闘いに帰結する。これを通じてヘンソンは、正義と変化を追求し続ける勇気を得て、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被害者から生存者(サバイバー)に変化させることができる。

ヘンソンは、微妙なところではあるが、「慰安婦」制度内での家父長制の役割を強調している。彼女は日本人と彼らの行動を公然と非難した。しかし、フェミニズム運動が彼女に与えた影響は、フィリピン「慰安婦」タスクフォースについての言及、彼女が前面に出られるよう補助したその役割の中でのみ言及される。彼女は自分と他の女性のために正義を追求することで、彼女を沈黙に追い込み、経験に対して羞恥心を持たせ、男性にそれを長い間容認させた家父長制の確立された構造に挑戦する。

もう一人の元「慰安婦」であるジャン・ラフ・オハーンは、自叙伝<Fifty Years of Silence： The Extraordinary Memoir of a War Rape Survivor　五十年間の沈黙：戦時性的

暴力の生存者の自叙伝>で、インドネシアでの「慰安婦」であり戦争捕虜であった経験について記述した。1992 年、彼女は金学順や他の韓国人女性たちをテレビで見て、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て名乗り出た。「私は彼女たちと一緒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私は彼女らと連帯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た。そして突然、それまで胸の内に秘めていた話をようやく伝えることができると思えた。その韓国女性たちの勇気が、私に勇気をくれた」と述べている。(O'Herne Ch.6) 彼女は日本人が突然慰安所を閉鎖するまで、「七海亭」慰安所で 3 カ月を過ごした。オハーンの自叙伝は、ヘンソンのものとは若干異なる枠組みと語り口で書かれている。戦争捕虜収容所で過ごした時間が彼女の戦時中の経験において決定的なものだったため、それが彼女の自叙伝の中心テーマとなっている。戦時体験に重点を置いた自叙伝は歴史性がより色濃くなっており、「慰安婦」だけでなく、捕虜収容所についての歴史を提供することが目標であることがうかがえる。

オハーンは自分の本を、日本軍「慰安婦」システムの歴史を記録し、声を出すための空間として活用するとともに、人々にこのテーマを教育し、司法体系に変化を起こすことを望む気持ちで自分の話を共有する。彼女の話は、政治的自己記述の多くの基準を満たすが、タイトルと文体のため生存者のナラティブとして読める。政治との関連性は、ヘンソンの自叙伝よりもっと微妙である。彼女はほぼ全面的に戦時中の経験に焦点を当てており、そのような記憶の中で抵抗と克服の話を絶えず綴っている。オハーンは自己記述の形式を活用して、日本人が自分にどんなことをしたとしても、自分は生存者だということを伝える。彼女は自分が激しく抵抗し苦痛を克服したのだと強調する。自分の経験を語り、勇気ある生存者(サバイバー)になることで、苦痛を意義ある行動へと変えることができた。オハーンは自分が被害者から生存者へと変化することで、自分の新しい声とアイデンティティを活用して人々を教育し、正義を追求し、構造的な変化を起こしつつ、個人的な目標と運動の目標を支持した。

ヘンソンの説明のように、オハーンの話は、少女たちが慰安所で経験したことに対する洞察と、軍人たちの態度を見せてくれる。しかし、オハーンの説明はヘンソンの説明より家父長的な構造と態度をもっと強調している。オハーンは同意と抵抗を強調することで、男性が少女たちにどのように接したかを明らかにする。少女たちは軍人の性的欲望のためにコントロールされ使用されるモノであった。隠れ、戦い、拒絶したにもかかわらず、軍人たちは自分たちの思い通りにするため、暴力を含め、自分たちにできるあらゆることを犯した。もしも彼らが少女を自分の性的欲望の手段以上のものと見なしていたなら，彼らは止めたはずだ。

結論

ほぼ 50 年もの間、元「慰安婦」女性らは沈黙した。犯罪が起こった当時、セクシュアリティをめぐる社会的烙印は被害者の語りを不可能にした。しかし、経験を分かち合える時期に来たとき、彼女らは波を起こした。政治不安により東アジアと東南アジアのフェミニスト運動の

発展は阻害され、セクシュアリティに対する公的な対話が可能になるには、かなり長い時間がかかった。フェミニスト運動の真の具体化が可能になった 1980 年代になって、ようやくセクシュアリティに対する烙印が減りはじめた。このような発展により、社会は性暴力被害者の声をついに聞き、信じるようになった。金学順が正義に向けた第一歩を踏み出したとき、他の元「慰安婦」たちはセクシュアリティに対する社会の態度が変化し、今こそ沈黙をやぶるべき時だと気づいた。過去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よるリスクが完全に解消されたとは言えなくとも、経験を共有することで彼女らは変化を起こし、正義の追求に貢献することができた。彼女たちの連帯は、フェミニスト運動に参加した活動家たちの支持の中で女性たちの声を高める力となり、被害者から生存者に変貌した女性たちは自ら活動家となった。物語により、彼女たちは戦時下性暴力に対抗する運動のあり方を変えたのだ。

ヘンソンとオハーンの自叙伝は、このような変化の実現を手助けし、彼女らの話は運動になった。経験を公開して共有して名乗り出た彼女らの勇気は、長い間沈黙を強いて拘束してきた家父長制に対する抵抗の行為であった。さらに、彼女らの文章は、運動をもう一段階発展させた。出版と接近性によって、証言だけで得られるもの以上に大きな権威と言説の場をつくることができた。2 人とも自叙伝によって、もっと多くの聴衆を教育し、家父長制に挑戦することができた。パーキンとフェルプスの基準による生存者ナラティブと政治的自己記述を通じて、運動としての役割が強化された。両ケースとも慰安所システムに対する対抗の歴史を提供し、他の被害者たちに声を与え、他の女性たちが前に出てこられる勇気をもたらしたのであり、家父長的体系に挑戦して「慰安婦」問題に対する警鐘を鳴らした。このような目標は、フェミニスト運動の目標と一致し、戦時性暴力をめぐる議論の進展に貢献した。

元「慰安婦」女性の自叙伝を運動的取り組みとして分類することは、「慰安婦」問題と運動における自己記述誌に対する研究を拡張する機会を提供する。元「慰安婦」たちの証言と自叙伝は、文献研究に重要な寄与をしている。彼女らのナラティブは自己記述として研究に役立つだけでなく、フェミニスト文献の領域を広げてくれる。また、このテーマを研究し続ければ、文献の目標の一つも達成できる。女性たちは話をすることで、他人に学びを与え、自分たちの記憶が生きた記録になるようにした。被害者の話を研究し記憶することは、彼女たちが始めた運動が、彼女らが去った後も長く持続されることを保障する。そのような努力によってのみ，これらの犯罪が再び起こらないように予防することができる。

参考文献

"Activism." *The Wiley-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Clare Saunders, 2013, pp. 9-11.

Henson, Maria Rosa. *Comfort Woman: A Filipina's Story of Prostitution and Slavery Under the Japanese Militar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9.

O'Herne, Jan Ruff. *Fifty Years of Silence: The Extraordinary Memoir of a War Rape Survivor.* Kindle ed., Random House Australia, 2008.

Perkins, Margo V., and Carmen L Phelps. *Autobiography as Activism: Three Black Women of the Sixties*. UP of Mississippi, 2000.

Schaffer, Kay and Sidonie Smith. "Conjunctions: Life Narrativ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Biography*, vol. 27, no. 1, 2004, pp. 1-24.

Smith, Sidonie, and Julia Watson. *Reading Autobiography: A Guide for Interpreting Life Narratives*. E-book. 2nd ed., U of Minnesota P, 2010.

日本の歴史修正主義とサバイバー証言の否定

金富子 I 日本 東京外国語大学教授

はじめに

30 年前の 1991 年 12 月、金学順さん（以下、敬称略）が日本政府を提訴するため来日した時のことを今でも覚えている。その様子は日本のテレビ・ニュースで大きく扱われ、ドキュメンタリー番組が組まれた。関東圏ではじめて開かれた「金学順さんの証言を聞く集い」（従軍慰安婦問題ウリヨソンネットワーク[1]主催、東京 YMCA）には日本の市民約 450 人が押し寄せ、熱気のなかで証言に耳を傾けた。金学順の来日と証言は日本社会に大きな衝撃を与え、真相究明と問題解決を求める研究や市民運動が行われる決定的なきっかけとなった。その後、アジア各国の「慰安婦」・戦時性暴力サバイバーの来日や裁判が続き、日本各地に裁判支援やサバイバー支援の市民団体が結成された。サバイバーの証言は、運動の原動力だった。「慰安婦」制度への日本軍の関与と強制性を認めた「河野談話」（1993 年）、植民地支配と侵略を謝罪した「村山首相談話」（1995 年）は、限界はあるとはいえ、その成果だった。

しかし、周知の通り、日本では 1997 年に「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や「日本会議」が結成され、歴史修正主義が本格的に始まっていく。彼らが強調したのが「慰安婦の証言はうそ」「慰安婦は嘘つき」などとサバイバーの証言を疑い、否定することだった。日本のフェミニストの一部も、異なるやり方でサバイバーの証言を疑ったのだ。

今日の報告では、まず、サバイバー証言を否定する歴史修正主義の２つのパターンをみたうえで、次に、日本の歴史修正主義者の論拠となった秦郁彦がどのように金学順の証言を否定したのかを批判的に検討したい。

サバイバー証言を否定する歴史修正主義の２つのパターン

日本軍「慰安婦」問題は、言うまでもなく、帝国日本による家父長制と植民地主義の複合的な産物である。このことを土台にサバイバーの証言を疑う歴史修正主義を考察すると、次の２つのパターンがあることに気づく。

一つは、家父長制批判（フェミニズム）を装いつつ植民地主義が継続する歴史修正主義である。これは、家父長制批判を伴っているためわかりにくいが、日本や韓国のフェミニスト

[1] 日本軍「慰安婦」問題に取り組むため、関東圏の同胞女性で結成された女性団体。

やリベラル系知識人にみられるものだ。その典型が上野千鶴子「モデル被害者論」や朴裕河『帝国の慰安婦』である。

具体的にみよう。上野は『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1998）において、朝鮮人「慰安婦」を念頭に「無垢」「純潔」な「モデル被害者」像が作り出されたが、「問題は語り手よりも、自分の聞きたい物語しか聞こうとしない聞き手の側」と主張した。つまり、純潔主義的な「モデル被害者」像は、「自分の聞きたい物語」しか聞かない「聞き手」の聞き方によって作り出されたものだとして、その「聞き手」の聞き方を問題視する形でサバイバーの証言を疑ったのだ。しかも上野は、「軍隊性奴隷」を主張する韓国女性運動（挺対協）がその「聞き手」となって「モデル被害者」像を作り出したように印象づけ、これを「娼婦差別」や「韓国の反日ナショナリズム」への動員に結びつけ、「慰安婦」への強制性や性奴隷制を否定した。しかし、上野は「聞き手」が誰なのか具体的に示さず、肝心の『証言１集』（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身隊研究会編、従軍慰安婦問題ウリヨソンネットワーク訳、1993）には「モデル被害者」像から逸脱した「多様な」被害者ばかりだった（金富子 2020）。

上野の「モデル被害者」論を実践したのが、朴裕河『帝国の慰安婦』（2013=2014）である。朴裕河は〈少女像〉を例に、〈慰安婦＝少女〉イメージは 1990 年代に「挺身隊を慰安婦そのものと誤解したことから作られたもの」「韓国の被害意識を育て維持するのに効果的だったための、無意識の産物」だと主張して、その根拠の一つにしたのがサバイバーの『証言集』だった。朴裕河は、「20 歳」以上のサバイバー３人の「証言」を切り取って、朝鮮人「慰安婦」に未成年がいない証拠だとしたのだ。しかし、矛盾しているのは、その３人の「証言」の根拠となった『証言集』こそ、朴裕河が否定しようとした韓国挺対協の名前で出されたものだからだ。また、これら『証言集』６冊を精査すると、78 名中 73 名が未成年だった（金富子 2017）。つまり、朴裕河が根拠としたサバイバー『証言集』こそが、彼女の主張を破綻させたことになる。なお、後述する秦郁彦は、朴裕河の同著が「強制連行や性奴隷説を否定し」たと理解し、それを自分と「似た理解」[2]だと高く評価したことを付け加えておこう。

もう一つは、ミソジニーと植民地主義が結託した歴史修正主義である。これは、先述のように 1997 年に日本に本格的に登場して勢力を増していき、現在では日本政府や日本社会で蔓延するようになった。最近では、韓国（李栄薫『反日種族主義』、2019 年）や米国（ラムザイヤー「慰安婦」論、2020 年）の一部にも、その影響をみることができる。ここでいうミソジニーとは、家父長制に抵抗・逸脱したりする女性に対して、ネガティブな制裁や処罰をすることだ（江原由美子 2020）。たとえば、ミソジニーの特徴は、家父長制に逆らわず性暴力を容認する杉田水脈のような女性は称賛・優遇される一方で、男性による女性への性暴力を告発した伊藤詩織のような女性たちを激しく攻撃して、性暴力告発を抑止しようとする。こうしたミソジ

[2] 秦郁彦「慰安婦　事実を見据えるために」『週刊文春』2015 年 5 月 7 日・14 号

ニーが植民地主義と結託して成立した歴史修正主義が、日本軍の性暴力を告発する「慰安婦」サバイバーの証言を疑い、激しくバッシングをするのだ。社会に根強い売春女性への差別感を悪用して、「慰安婦」を「売春婦」として攻撃するのはミソジニーの常套手段である。

その典型が日本軍事史家の秦郁彦の「慰安婦」論だ。秦郁彦『慰安婦と戦場の性』（1999年）は長らく歴史修正主義者の正典となったが、最近英訳された（山口智美報告参照）。歴史修正主義の特徴は歴史研究者がほとんどいないことだが、そのため秦郁彦に依拠せざるをえないのだ。以下では、秦郁彦による「慰安婦」証言論と金学順証言論を検討したい。

秦郁彦の「慰安婦」証言論

秦郁彦は、まず、「『慰安婦』または『従軍慰安婦』のシステムは、戦前期の日本に定着していた公娼制の戦地版」（27 頁）と定義した。つまり秦は、日本軍「慰安婦」制度を「戦地版公娼制」ととらえ、その認識のもとで、同書で独自の歴史的解釈を展開した。

次に、同書の第６章「慰安婦たちの身の上話」では、秦はサバイバーの証言を「身の上話」（177 頁）と位置づけ、独自の解釈をする。つまり、「慰安婦」を「女郎」になぞらえ、サバイバーの証言を「客を引き留める手練手管」しての「女郎の身の上話」（同）にたとえて、サバイバー証言をそもそも虚構だと決めつけた。

そのうえで秦は、「現在まで名乗り出た慰安婦は三百人前後」でその共通したパターンは「1 慰安婦生活が平均よりも過酷だったらしい。2 戦後の生活に恵まれていない。 3 名のりを嫌う家族を持っていない。4 知力が低く、おだてにのりやすい」が、こうしたマイナスの条件は「逆に素朴な観客の同情を呼びやすい」（178 頁）とした。秦のサバイバー証言へのミソジニーが滲み出ている。また、秦は、聞き手が「自分の聞きたい物語」を聞き出すと指摘した上野（1998）を引用・同調したことから、前述した上野の言説が秦のような右派にも影響を与えたことがわかる。秦が取り上げたのは、「韓国、フィリピン、中国、台湾、インドネシア、オランダ、日本の元慰安婦」から選んだサンプル的な「身の上話」（同）だとし、韓国からは金学順、文玉珠、金田きみ子（仮名）、姜徳景および『証言１集』を対象にした。

紙面の関係上、本報告では金学順の証言をとりあげる。

秦郁彦による金学順証言の否定論を検証する

では、秦郁彦は、金学順の証言をどう解釈したのか。秦は同書で、A：『証言１集』（前述）、B：解放出版社編『金学順さんの証言』（1993 年刊行、1991 年 12 月来日時の証言）、C：伊藤孝司『証言 従軍慰安婦女子勤労挺身隊』(1992 年 8 月刊行、ヒヤリング日時不明)の３冊、または訴状を含む４冊を取り上げ、これらの証言に「重要なポイントでいくつかの差異がみられるのは問題」（180 頁）として、以下のように４つの相違点を指摘した（秦はA、B、C の異同を表にして 181 頁に掲載した）。

一つ目は、「身売り」説だ。秦は、「再婚した実母が娘を 40 円で売った事実」（下線引用者）に関して、A に出てくるが、訴状や B・C に出てこないとし、「典型的な身売りケース」だと述べる。この部分は金学順が通った妓生学校に関する記述だが、秦は本文ではキーセンを出さず、表にのみキーセンを出している。そのため、本文だけを読めば、「身売り」によって「慰安婦」になったかのようにも読める書き方になっている。

しかし、重要なことは、A の証言には母が娘を「売った」という言葉は全く出てこないことだ。証言の日本語訳を正確に書くと、「母は私を、妓生を養成する家の養女に出しました。……母は養父から 40 円をもらい、何年かの契約で私をその家に置いていったと記憶しています」（日本語訳 43 頁）と述べただけである。つまり、秦はこの訳文を示さず、「売った」とだけ要約したのは独自の解釈にすぎない。換言すれば、「身売り」を強調するための憶測に近い。なお、B では「キーセンの修業のできる家の養女になった」と述べている。

また、テキストの性格の違いにも注意が必要だ。たとえば、慰安所に直接関わらないこの事実が訴状や B・C に出てこなくても、なんら不思議ではない。なぜなら、この 4 つのテキストには聞き方に違いがあるからだ。A は、植民地朝鮮や韓国社会についての背景知識をもつ韓国の女性史研究者たち（当時、挺身隊研究会）によって丁寧な聞き取りがなされた最も信頼できる証言だ。一方、B は、1991 年 12 月に金学順さんが初来日したときに通訳を介して行われた証言記録だ。C も、日本人写真家・伊藤孝司による通訳を介した証言記録である。日本政府を相手にした訴状は、日本軍慰安所での被害に焦点をあてたものだからだ。秦郁彦は、この 4 つのテキストの違いを無視している。

二つ目は、慰安所への連行方法における「転売」説である。A、B、C とも、養父とともに中国に行き（北京の食堂で）日本兵によって慰安所に連行されたと述べ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秦はこの証言を疑い、「現地で転売されたのかもしれない」（同）と根拠を示さず憶測を述べている。日本軍による連行の事実をどうしても否定したいため、秦は「（養父による）転売」を示唆したと考えられるが、問題は「転売」説に根拠がないことだ。

三つ目は、金学順の生年についてである。A、B、C が「1924 年」なのに、訴状が「1923 年としているのも、気になる」とする。その理由を秦は「韓国は戸籍制度が完備して」いるためだとする。

しかし、金学順さんが生まれた当時、戸籍制度が「完備」したと言えるだろうか。植民地期朝鮮では、1923 年の朝鮮民事令改正時に「朝鮮戸籍令」施行により日本と同様の戸籍制度が導入・整備されていったのであり、金学順の生年時はその導入期にあたる。しかも、金学順は「満洲」生まれなのだ。また、当時は乳児死亡率が高かったため、戸籍に届けなかったり、実際と異なる生年月日を届けたことはよくあった。さらに、日本と韓国では年齢の数え方に違いがあった（日本では満だが、韓国では数え年）ことも注意が必要だ。秦郁彦は、不勉強でないだろうか。

四つ目は、「キーセン出身」説に関してである。歴史修正主義者たちが最も攻撃したのは、この部分だ。しかしながら、A、B、C では（平壌の）妓生学校に行った経歴を堂々と書いているのである。

にもかかわらず、同書で秦郁彦は「韓国で娼婦予備軍と見られているキーセン出身はまずいと思ったのか、最初の報道ではこの点を伏せていたらしい」（180 頁）と植村隆（当時、朝日新聞ソウル特派員）による報道や朝日新聞の後続報道が「キーセン出身」を意図的に隠したかのように強調した(180 頁、182 頁)。しかし、これは卑劣な事後的攻撃である[3]。

また、「キーセン」を「娼婦予備軍」とする記述からも、秦が歴史的な存在としての「妓生」への無知ぶりがわかる。1970 年代以降、日本人男性集団が韓国にキーセン買春観光ツアーに行き、国際的に問題になっていた。秦郁彦はその連想から「キーセン」を
を理解したと思われる。

しかし、A で金学順は、15 歳の頃「平壌の妓生券番に（お姉さんと一引用者）一緒に通いました。その券番は二階建てで、……生徒も三百人ほどおりました。私は 2 年ぐらい券番に通って、踊り、パンソリ、詩調などを熱心に学びました。」（日本語訳 43 頁）と述べていることから、伝統的な歌舞音曲を専門的に学んだことがわかる。

そもそも妓生は朝鮮王朝時代に官庁に所属し歌舞を演じ接待する「官妓」だったが、甲午改革（1894）後に官妓制度が廃止され、植民地期には妓生は日本式の「芸妓」にカテゴライズされるようになった（1916 年）。植民地期を通じて、妓生は教養をつみ歌舞音曲を専らとする伝統を守る一方で、女給出身で流行歌を知っている程度で酒のお酌をする程度も含めて様態が大きく逸脱・変化した（金・金 2018）。金学順の場合は、明らかに伝統的な前者に属したのであり、しかも妓生学校に通っただけなので正確には「妓生学校出身」であり、「キーセン出身」だったとは言えない。つまり秦は、巧妙なすり替えを行なったのだ。もちろん、彼女が妓生出身者であったとしても、日本軍慰安所における性被害に軽重の違いはない。

おわりに

以上で検討したように、秦郁彦は、金学順の証言に関して、テキストの性格の違いを無視し、金学順の証言から飛躍して「身売り」だと決めつけ、日本軍のよる連行を根拠なく「転売」だと憶測し、植民地期の戸籍制度や妓生に対する不勉強を露呈した。日本軍慰安所での性被害という重大な事実よりも、慰安所に行く前の前歴を粗探しするのは、典型的な被害者「落ち度」論である。もっとも問題にされた「キーセン出身」でさえも、初発の報道を使ってそれ

3 第 1 点目でも述べたように、限られた紙面で金学順さんの証言を「慰安婦」被害に焦点化するなら何ら不思議ではない。しかし、西岡や秦が植村氏のスクープ報道を批判したために歴史修正主義者たちから卑劣な攻撃をうけることになったのは周知の通りである。

を隠したかのように印象操作をしているが、金学順はA、B、Cのどの証言でも「妓生学校出身」の経歴を堂々と述べているのだ。

にもかかわらず、秦は、日本社会の朝鮮植民地支配に対する歴史的知識がないこと（まさに植民地主義の継続）と性暴力を告発する女性や「売春女性」に対する根強いミソジニーを悪用・便乗して、金学順の証言を疑うための材料や方法論（憶測、飛躍、すり替え、誤読への誘導など）を提供し、あとに続く歴史修正主義者たち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また、上野・朴裕河らのフェミニズムを装った歴史修正主義と秦郁彦らのミソジニー的歴史修正主義が植民地主義という点で共通しており、違いに影響を与えあっていることも見逃せない。

最後に重要なことは、このような秦郁彦による金学順の証言否定論でさえ、日本軍慰安所での性被害や日本軍の様子に関する金学順の証言を否定できなかったことである。

参考文献

上野千鶴子　1998　『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青土社

江原由美子 2020 「「ミソジニー」って最近よく聞くけど、結局どういう意味ですか？」『現代ビジネス』2020.2.9 付。https://gendai.ismedia.jp/articles/-/70296　2021/07/23 閲覧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身隊研究会編、従軍慰安婦問題ウリヨソンネットワーク訳、1993　『証言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明石書店

金富子　2017 「韓国の〈平和の少女像〉とポスト真実の政治学～日本の植民地主義／男性中心的な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を検討する～」（韓国語）『韓国女性学』33-3

――　2020　「日本社会で「慰安婦」被害を「聴くこと」の不可能性と可能性」金富子/小野沢あかね『性暴力被害を聴くー「慰安婦」から現代の性搾取へ』岩波書店

金富子・金栄　2018 『植民地遊廓―日本の軍隊と朝鮮半島』吉川弘文館

秦郁彦 1999 『慰安婦と戦場の性』新潮社

朴裕河　2013=2014　『帝国の慰安婦』朝日新聞出版

日本の右派による「歴史戦」とラムザイヤー問題

山口智美 I アメリカ モンタナ州立大学准教授

日本の右派による「歴史戦」とラムザイヤー問題

山口智美
モンタナ州立大学　社会学・人類学部
Tomomi Yamaguchi
Montana State University

はじめに

- 日本の右派、政府による「歴史戦」の文脈における「ラムザイヤー問題」を考える

- 2020年12月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IRLE 電子版公開）
- 2021年1月12日 ”Recovering the Truth about the Comfort Women.” *Japan Forward* （産経新聞系の英文ニュースサイト）

歴史戦と対外発信

- **「歴史戦」**とは
  - 日本の右派による「中国、韓国が日本を貶めるために「戦い」を仕掛けており、その「主戦場」はアメリカである」という認識に基づいた、日本軍や政府の戦争責任を否定する動き
  - 2014年4月に開始された産経新聞の連載「歴史戦」

- 歴史認識問題に関する右派や政府、自民党の英語での対外発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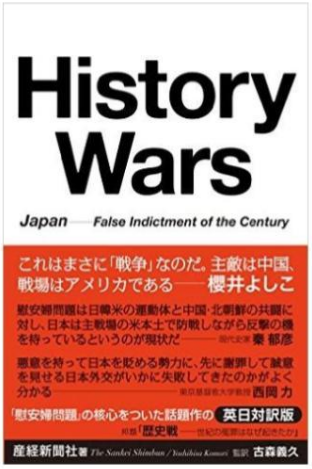
- 自民党2021年度運動方針「『歴史戦』および領土・主権に関して、多様な手段での戦略的対外発信を強化する」

産経新聞社『歴史戦』/ History Wars
（初期の新聞連載をまとめた書籍）

日本語版　（2014）



英日対訳版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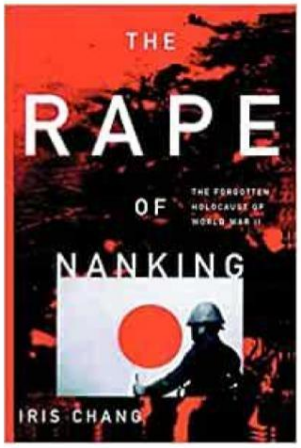


歴史修正主義運動と英語発信

- 90年代なかばからの歴史修正主義の広がり
  - 1995年　自由主義史観研究会
  - 1996年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つくる会）
  - 1997年　日本会議
    - 「日本を守る国民会議」と「日本を守る会」が合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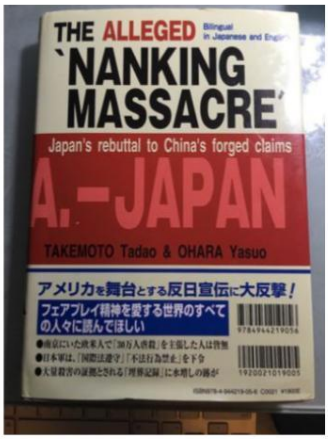
歴史修正主義運動と英語発信
1. アイリス・チャン『ザ・レイプ・オブ・南京』をめぐって

- 1997年　アイリス・チャン『ザ・レイプ・オブ・南京』出版。アメリカでベストセラーに。
- 日本の右派による、南京事件に関する英語と日本語のバイリンガル書籍や、日本語書籍の英訳の出版



Iris Chang, *The Rape of Nanking*, Basic Books, 1997

日本会議による英語発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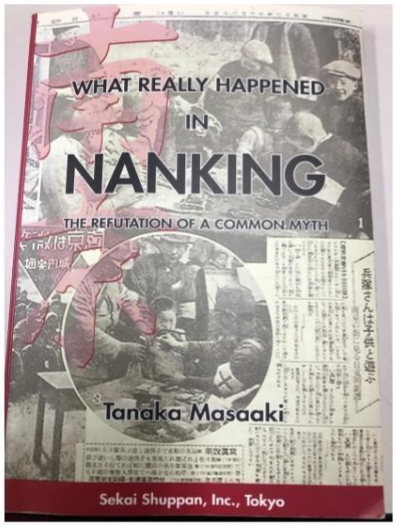




日本会議国際広報委員会・竹本忠雄・大原康男『再審・南京大虐殺 日英バイリンガル *The Alleged Nanking Massacre: Japan's Rebuttal to China's Forged Claims*』（明成社 2000）

英語と日本語のバイリンガル書籍

世界出版による英語発信



- 日本語学習誌『漫画人』（1990～1997）発行
- Tanaka Masaaki, *What Really Happened in Nanking: The Refutation of a Common Myth*（世界出版2000）
  - 田中正明『「南京事件」の総括』（謙光社1987年）の英訳本
  - **2001年、Association for Asian Studies（AAS, アジア研究協会）の会員に送付**
- Higashinakano Shūdō, *The Nanking Massacre, Fact versus Fiction*（世界出版2006）
  - 東中野修道　『南京虐殺の徹底検証』（展転社1998年）の英訳本

歴史修正主義運動と英語発信
2. 米国下院決議121号

- 2007年7月 米国下院決議121号
  - 「慰安婦」問題について、日本に公式謝罪を求める決議
  - 6月、「歴史事実委員会」（すぎやまこういち、櫻井よしこら）がワシントンポスト紙に意見広告“The Facts”を掲載
- 2008 「史実を世界に発信する会」日本語、英語のメルマガ、サイト作成。AASの会員に英文メルマガを送付



“The Facts”
Washington Post, June 14, 2007

歴史修正主義運動と英語発信
3. 「慰安婦」碑や像をめぐる「歴史戦」



Palisades Park, NJ (2010)

- 現在北米（アメリカとカナダ）で合わせて１５の「慰安婦」の碑や像
- 2012年春から、日本政府や右派による撤去要求。ニュージャージー州パリセイズパークの碑が皮切り

パリセイズパークの碑をめぐって

- 在ニューヨーク日本総領事館による碑の撤去圧力、古屋圭司、山谷えり子ら自民党議員4人による同市訪問
- 2012年11月6日「歴史事実委員会」の意見広告“Yes, we remember the facts”をニュージャージー地元紙*The Star-Ledger* に掲載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Yes, we remember the facts.

The purpose of this paid public comment is to present historical facts.

This is an objection advertisement of the "Do you remember?" ad which is currently being posted in Times square. (P.S. It was also posted on the New York Times in May this year as well)
We are here to convey the truth, based on actual historical facts and dates achieved as a result of years of research.

And before you move on, let us please introduce you a videoclip which we believe is indispensable to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is issue.

"Sex, Lies, and Comfort Women"
http://www.youtube.com/watch?v=-iwv2qDJ57Y&

Fact 1

Fact 2

Fact 3

Uncapulpeet Brokers Run Rampant
Abduction of Rural Women and Girls

Assentors



カリフォルニア州グレンデール市の少女像　（2013年7月）

グレンデール少女像と「歴史戦」の本格化

- 2013年7月「『慰安婦』の真実国民運動」（事務局　つくる会内）結成。
- 10月、産経のLA支局開設（2018年末に閉鎖）
- 2014年2月「歴史の真実を求める世界連合会」(Global Alliance for Historical Truth, GAHT)結成、グレンデール市を相手取り連邦地裁（のちにカリフォルニア州地裁も）に訴訟。
- 4月、産経「歴史戦」連載開始
- 2017年2月、GAHTのグレンデール少女像の撤去要求の訴訟に関し、日本政府が米連邦最高裁に意見書提出。3月、GAHT米国最高裁で敗訴

日本政府と「戦略的対外発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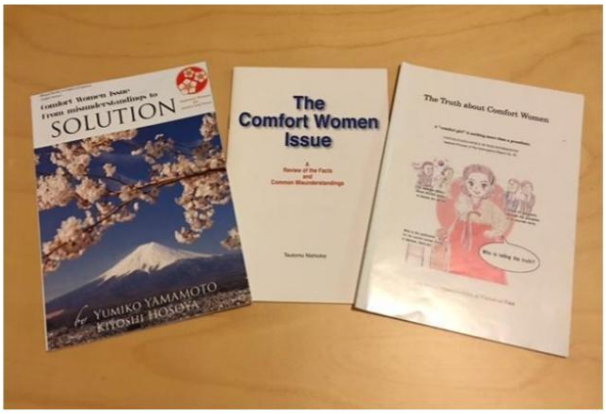
- 2015年から日本政府が「戦略的対外発信」予算を前年度比で500億円増加
  - 対外発信拠点としての「ジャパンハウス」（ロサンゼルス、ロンドン、サンパウロ）
    - 領土や歴史認識についての日本の立場の発信
  - 「親日派・知日派の育成」

- ラムザイヤー氏　2018年「日本・アメリカ合衆国間の対日理解促進及び米国における日本の法・経済研究の発展への貢献に寄与した」として旭日中綬章を授与さ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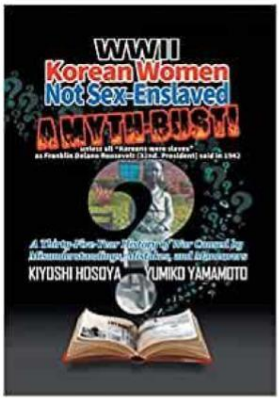


ロサンゼルス・ハリウッドのジャパンハウ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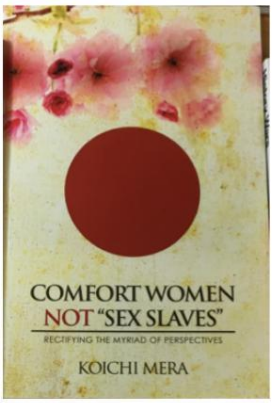
英文パンフ、自費出版書籍の送付



左：山本優美子・細谷清のパンフ
中央：西岡力執筆、日本政策研究センター発行のパンフ
右：「史実を世界に発信する会」発行のパン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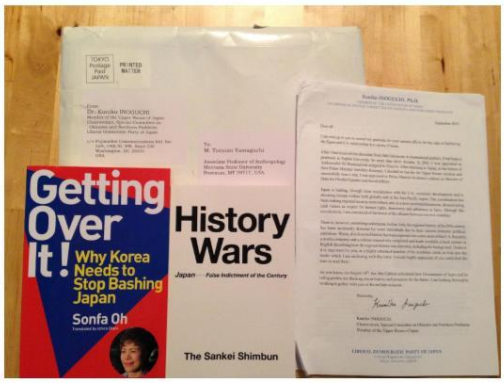


山本優美子・細谷清
自費出版書籍



目良浩一　自費出版書籍

猪口邦子参議院議員から送られた書籍



- 2015年　猪口邦子参議院議員（自民党）から書籍や記事がアメリカやオーストラリアの日本研究学者に送付される
  - 産経『歴史戦』本の日英バイリンガル版
  - 呉善花　*Getting Over It! Why Korea Needs To Stop Bashing Japan*（たちばな出版2015）『なぜ反日韓国に未来はないのか』（小学館新書2013）の英訳版
    - 一般社団法人今井光郎文化道徳歴史教育研究会（フジ住宅系）助成金　2015年度3000部を「アメリカの政治家、研究家、図書館などに送付」
- 河井克行首相補佐官（当時）による米国の要人などへの歴史修正本のバラマキ

大学生もターゲットに

- 映画の上映会
  - 2015年4月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での谷山雄二朗監督*Scottsboro Girls*の上映シンポジウム。同大学日本語教員が企画。
  - 谷山監督の他、GAHT目良浩一氏や当時大学院生のJason Morgan氏（現麗澤大学准教授）も参加



撮影　小山エミさん

大学生もターゲットに

- 大学の授業
  - 2017年　GAHT、Univ of California, Berkeley 学生と、東京での「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意見交換会を企画したが中止
  - 2019年、「史実を世界に発信する会」からMontana State Universityでの授業用として「慰安婦」パンフ100部送付

山口宛に送られた「史実を世界に発信する会」パンフ100冊





右派にとっての問題：学術書、論文の不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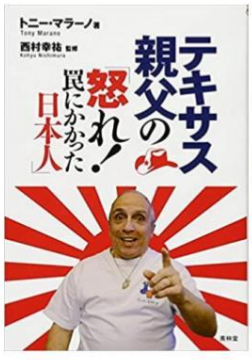
- 右派にとっての問題
  - 英語での自分たちの立場に立った学術書や査読論文の欠落
  - 自分たちが主張するメッセージを英語で、特に英語圏に向けて発信してくれる学者がいない

  →自分たちの主張を信頼してもらえない？

右派の発信を担う白人男性

- Tony Marano（テキサス親父）Youtuber
- Michael Yon ライター
- Kent Gilbert タレン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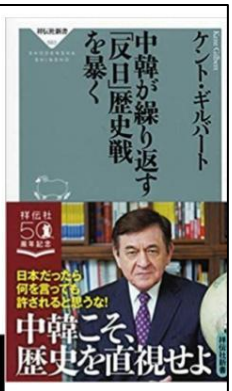
→日本国内向けの発信、
一般市民向けの発信



Tony Marano

Michael Y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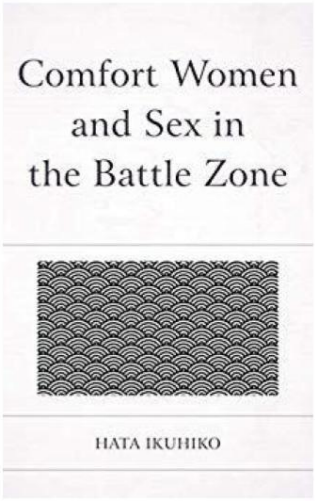
Kent Gilbert

ハミルトンブックスからの書籍出版

- Henry Scott Stokesや目良浩一らの書籍
- Hata Ikuhiko. Trans. Jason Morgan. *Comfort Women and Sex in the Battle Zone*. 2018

（秦郁彦『慰安婦と戦場の性』のジェイソン・モーガン（現麗澤大学准教授）による翻訳書）

- 「国家基本問題研究所」（2007年設立　櫻井よしこ理事長）、2014年に「日本研究賞」創設
  - 第６回　「日本研究特別賞」に*Comfort Women and Sex in the Battle Zone*



産経新聞と『Japan Forward』

- 2017年6月、『JAPAN Forward』が産経新聞により創刊。「日本発の保守系英語メディアをつくる必要がある」
- 執筆者として学者らが発信
  - **Kevin Doak**　(Professor, Georgetown University)
  - **Earl Kinmonth**　(Taisho University, Prof. Emeritus)
  - **Jason Morgan** (Associate Prof, Reitaku University)
    『JAPAN Forward』の執筆者
  - **Mark J. Ramseyer**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など
- ラムザイヤー論文関連記事は産経系メディアが突出　（『産経新聞』、『JAPAN Forward』、『夕刊フジ』、『正論』など）

「学術」への接近

- 2016年9月「歴史認識問題研究会」（高橋史朗会長）設立。
  （2021年6月現在、西岡力会長、高橋史朗、江崎道朗、Jason Morgan副会長）
  他、麗澤大学ベースの研究団体として、ラムザイヤー氏が役員を務める「『日本文明』研究フォーラム」 など

- 2018年、「慰安婦」の真実国民運動、「国際歴史論戦研究所」（iRICH）（杉原誠四郎会長）発足。事務局は「つくる会」内。

右派団体とラムザイヤー論文

- 「歴史認識問題研究会」
  - サイトで右派の学者や西岡力による声明を掲載
- 「史実を世界に発信する会」
  - 擁護記事をサイトに掲載し、メルマガで宣伝。
-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つくる会CHはラムザイヤー論文の解説動画　ラムザイヤー氏のキャラが登場するアニメ動画を複数発信。
- 「国際歴史論戦研究所　iRICH」
  - 4月24日、緊急シンポジウム「ラムザイヤー論文をめぐる国際歴史論争」開催。ラムザイヤーがビデオメッセージを寄せる。
  - 6月3日　iRICH、日本学術会議への公開質問状
- ラムザイヤー氏の日本の右派勢力との接近

右派政治家や政府の反応

- 山田宏、青山繁晴など自民党右派議員の発信。山田、青山は外務省への働きかけに言及
- 青山繁晴議員は3月1日付ブログ記事で、ラムザイヤーへの応援メールを送ることを事実上促す
- 有村治子参議院議員（自民党）、3月22日の参院文教委員会における「慰安婦」問題に関する質問の中で、ラムザイヤー論文をめぐる経緯について質問。
  - 外務省アジア大洋州局参事官：「査読を経て公表された学術論文の撤回を一方的に求める動き」「学問の自由からの懸念等も表明されていると承知」
  - 萩生田文科大臣：「研究者が外部から干渉されることなく、自発的かつ自由に研究活動を行い、その成果を自由に発表することは尊重されるべき」

「歴史戦」とラムザイヤー問題

- ハーバード大学ロースクールの権威を持つラムザイヤーは、右派にとって、英語圏に向けて発信できるアカデミアの人材
- 右派が待ちに待った「査読」論文

- ラムザイヤー氏の仕事は、日本政府や右派の「歴史戦」の文脈があってこそ生み出され、広げられたもの

今後の展開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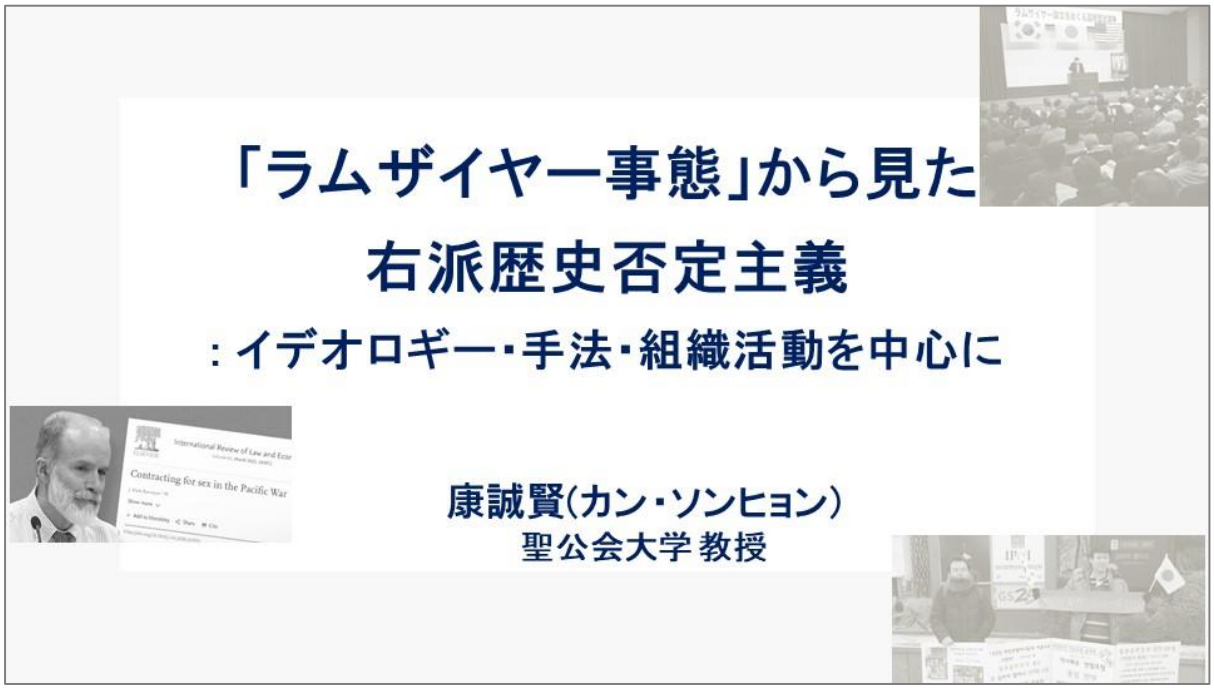
- IRLEの結論がどうなるか
- ラムザイヤー氏と日本の右派の関係の深化？
  - 有馬哲夫『「慰安婦」はみな合意契約をしていた　ハーバード大学教授ラムザイヤー論文の衝撃』（WAC 2021年7月）
  - ラムザイヤー氏が序文を寄稿
    - 一方的に攻撃を受けたというラムザイヤー氏の認識
    - 有馬氏「ラムザイヤーの戦いは私たちの戦いだ。私たちの戦いは、ラムザイヤーの戦いだ。」
    - 発行の出版社はWAC（雑誌『WiLL』など右派書籍を多く発行する出版社）



第３セッション. 歴史否定のバックラッシュ

「ラムザイヤー事態」からみる右派の歴史否定主義-
イデオロギー、手法、組織、活動を中心に

カン・ソンヒョン(康誠賢) I 聖公会大学教授



目次

1. はじめに
2. イデオロギー：右派歴史否定主義と脱真実反知性主義
3. 手法：否定の実証主義と曲解、そして簒奪
4. 右派歴史否定主義の組織と活動

I
はじめに

◈「ラムザイヤー事態」の始まり

- 産経の報道



– 2021年1月28日、「世界に広まる『慰安婦＝性奴隷』説を否定、米ハーバード大J.マーク・ラムザイヤー教授が学術論文発表」と報道

– 1月31日、ラムザイヤー論文に対する福井義高教授(青山学院大学)の解説を掲載

– ラムザイヤーの感謝の言葉に登場する歴史否定主義者

– ラムザイヤー論文要約 + 福井義隆解説→ハーバード大の権威で「慰安婦=性奴隷」を一つの説として却下しようとする産経の準備された企画

◈「ラムザイヤー事態」の始まり


オピニオン

ハーバード大　J・マーク・ラムザイヤー教授が学術論文

「慰安婦＝性奴隷」説否定

The 考

女性と売春宿の思惑一致

「太平洋戦争における性サービスの契約」

問題は朝鮮の募集業者に

2021年1月31日産経新聞

◈「ラムザイヤー事態」の始まり

- 韓国への事態の拡散



– 2021年2月1日から韓国のメディアは、一斉に「ハーバード大学教授」と「慰安婦は性奴隷ではない売春婦」という表現を際立たせた記事を流し始める

◈「ラムザイヤー事態」の始まり

- 事態の拡散と攻防



– 市民社会と学界、「学問の真実性」と「研究の誠実性」に基づいたラムザイヤー批判の声明や学術会議の開催

– 韓米日の歴史否定主義者、「学問の自由」を掲げてラムザイヤーを救い出す。国際学術誌の審査を経て掲載承認→独創性が認められたものであり、「慰安婦」問題について学術的進展を遂げたものだと主張

– 国際法経済学レビュー(IRLE)の一貫性のない「懸念表明」(expression of concern)

◈「ラムザイヤー事態」の始まり

- ラムザイヤーはなぜ？



– 2017年から急に、日本の被差別部落民、在日朝鮮人、沖縄人、日本軍「慰安婦」などについて執筆を増やし始めている。これらは英米圏の法経済学分野でも大変馴染みの少ないテーマだが、ラムザイヤーはこういった素材を否定と嫌悪の視線から議論する執筆をし、学問的成果に塗り替えている。

– 米国(ハーバード大)で教授を努めていることから人種嫌悪は「意図的に、しかしやむを得ず」避けているが、米国内で問題化されないであろう部落民、在日朝鮮人、沖縄人に対する差別の合理化については「もっと自由な討論が許される」ので、やりますよ、ということ。

研究質問

- ラムザイヤーはなぜ2017年から、歴史否定主義者の常套的な主張を法経済学の外貌を装って「挑発」するようになったのだろうか。2017年以降の、否定と嫌悪にまみれた執筆のために協力し合った人物、参考文献、直接的な関連基金、その他の関連組織や活動はどのような様相を呈しているのか？

- 「ラムザイヤー事態」から見た韓米日の歴史否定主義のイデオロギーと手法はどのような内容を持ち、その組織と活動はどのような様相で展開、拡散しているのか。

II
イデオロギー：
右派歴史否定主義と反知性主義

◈ ラムザイヤーのあやしい感謝

- ジェイソン・モーガン



- 2017年以降に書かれた7つのラムザイヤー論文で、4－5回繰り返し言及されているるジェイソン・モーガン(Jason M. Morgan)、三輪芳朗、福井義孝教授
- ジェイソン・モーガンは大学院生の時から「慰安婦の真実」国民運動という右派の歴史否定主義団体の支援を受け、右派の歴史戦争の広報役を担った。
- 2016年にウィスコンシン大学で現代日本法の歴史で博士号を取得するまで、日米を行き交いながらの歴史否定活動を展開。
- 2016年より反共・反米・嫌韓・嫌中・親日の視点から、日本の歴史否定主義の立場が完全に乗り移ったような本を出版。

◈ ラムザイヤーのあやしい感謝

- ジェイソン・モーガン



– 彼に言わせれば、フランクリン・ルーズベルト大統領は共産主義者であり、第2次世界大戦当時、日本は共産主義を懲らしめるためにアメリカと戦争をしたので、正義の味方である。

– 米国の学界は左派過激分子によって牛耳られており、客観的ではなく、日本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も、ポストモダニズム情緒主義と反知性主義にとらわれている。

◈ ラムザイヤーのあやしい感謝

- ジェイソン・モーガン



– 日本の右派シンクタンク・日本戦略研究フォーラムの主任任研究員

– この団体の基金で、秦郁彦の『慰安婦と戦場の性』(1999)をComfort Women Sex in the Battle Zone(2018)として翻訳出版

– 現在、麗澤大学教授で、西岡勉が会長を務めている歴史認識問題研究会の副会長である。

– ラムザイヤーとモーガンの交流は、歴史否定主義ネットワークの一部分。ラムザイヤーの主張、論理、方法は、韓米日も歴史否定主義ネットワークの産物

– このネットワークは反日を罪悪視。 反日に対して、共産主義者, 北を追従する左派とレッテル貼り。日本帝国主義の歴史を美化。

◈ 政治的意図の歴史的否定主義

- 否定の三つの類型（スタンリー・コーエン、2009：58-62）



- 文字での否定(literal denial)は事実そのものを否定。そんなことは怒らなかったという否定。
- 解釈的否定(interpretive denial)は、事件を別の方法で解釈し、国家暴力または人権侵害であることを否定。実際そのようなことは起こったが、その事件はこんなふうに(否定の文脈で)解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否定。
- 含蓄的な否定(implicatory denial)は、事件が人々に与える政治的、心理的、道徳的な含意を否定。それは起きたことだが、胸を炒めたり早急な措置が必要な事件として見ないこと。状況的にやむを得なかったとか、他の人もそうしたとか、もっとひどいことも多いというふうに否定。

◈ 政治的意図の歴史的否定主義

- ラムザイヤー前後の歴史否定主義

- ラムザイヤー以前に、韓米日歴史否定主義者が政治的意図の下に進めた「修正主義」の試みは、類似学術空間で相互引用の形で展開。公式学術空間で学術的真実性と研究の正直性を基準にした審査は受けていない。
- 否定と嫌悪にまみれた本の出版、オンライン講義コンテンツなどを、陣営化された方式で流通させ、口先だけで討論を叫び、実際は相手陣営に向かって一方的に「シャウト」する宣伝
- ラムザイヤー論文により、歴史否定と嫌悪の発話が、SSCI級の国際学術誌で審査を経て学術的主張として装われている事態。学問と表現の自由の形骸化

◈ 脱真実 反知性主義

- 脱真実は、事実の真偽に関係なく、信念や感情で世論形成を主導する現象。右派の歴史否定主義者たちは、事実と真実に基づいていると主張するが、真実を相対化したり、甚だしくは解体までする。
- 脱真実時代の右派歴史否定主義は、反知性主義の現象・傾向・態度の極端へと突き進んでいる。反知性主義は、知性、知識、専門に敵対する態度であり、「理性的・合理的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受け入れない精神状態や態度」をいう。
- 右派の歴史否定主義者たちは、口を開けばファクトを追求すると言うが、追求というよりは執着しているように見え、様々な偏向(行動偏向、可溶性偏向、確証偏向、否定性偏向、物語偏向)に閉じ込められている(カン・ジュンマン[강준만]、2019:35、40)。自分の陣営(領域)を中心に二分法的に思考し、その外側のことを知ることを拒否し、にせ物だと敵対視し、嫌悪。

◈ 脱真実 反知性主義

- 脱真実と反知性主義が重なり合う場に行って、いくら「これは嘘だ」と暴露したり、脱真実・反知性主義的な「態度」に突っ走る個人や集団に対して「あなたは嘘つき」と規定することは、脱真実反知性主義の「現象」から脱することではなく、その「傾向」に一層巻き込まれることである。
- 右派歴史否定主義者たちは逆に、日本軍「慰安婦」研究者や学界、この問題に共感する市民に向かった「反日」にとらわれて嘘をつく集団、そもそも韓国は嘘をいう国で、韓国人は嘘つき国民だと決めつける。右派歴史否定主義者らは、自分たちこそ実証的で、モダンで、真実に基づいている反面、相手が感情的でポストモダンで、偽り、甚だしくは反知性主義的だと決めつける。その上に共産主義だと上塗りする。
- 「韓国の嘘文化は国際的に広く知られている事実です。」(李栄薫[이·영훈]、2017:10)

◈ 脱真実 反知性主義

- 脱真実の時代の反知性主義という見方は、2017年以降のラムザイヤーの文章の背景を理解できるよう導いてくれる。日本軍「慰安婦」や「徴用」関連の文章に限らず、日本国内の被差別部落民、在日朝鮮人、沖縄人などマイノリティ集団に対する階級的・人種主義的な嫌悪認識を現わす文や、日本にかかわる韓国の近現代史に対する歪曲と間違いは、まさに陣営化された思考や偏向、敵対の深まりの原因であり、結果である。

- 脱真実の時代におけるニューメディアの世界と二分化された陣営の片方で、歴史否定主義は容易に払拭されない流れとして位置づけられつつある。この流れは韓米日の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ネットワーキング現象として拡散されている。「学術的真実性」の向こうにちらつく韓米日の歴史否定と嫌悪のネットワークを狙わずには、この現象・事態に根本的に対応することは難しいだろう。

Ⅲ
手法:
否定の実証主義と簒奪

◈ 否定の実証主義



– 歴史否定主義者にとっての「実証主義は、犠牲者たちの記憶が不正確で政治的に歪曲されたり操作されたものだという印象を人為的につくるために召喚する」手法。

– 歴史否定主義者たちは、論拠として各種統計や数値を並べて実証的学問の形を取り、これが真実だと主張するが、一部の資料は欠落させたり、ある資料は恣意的に解釈して事実を歪曲する。

– 公文書の解釈でも、文書が出てくる前後の背景や脈絡を批判的に分析せず、文書の中から自らの論拠として必要な部分の文章と単語だけを選んでつまみ食いする手法を駆使する。過剰解釈、一般化の誤り、曲解。

◈ 簒奪と詭弁

▪ 被害者の声の切り取りと簒奪

– 歴史否定主義者らは、事実の証拠となる資料があるかを問うが、核心はそれではなく、枠組み争い。100%証明できないのだから、すべての事実は論証の問題ではなく説得力の問題だと主張。「詭弁であっても、一生懸命に、声を高め、さらには確信に満ちた姿で自己主張をするのが有利」と主張する。

▪ 詭弁、「声の大きいほうの勝ち」

– 歴史否定主義者らは、被害者の証言は客観的事実ではないからと、歴史資料として認めないが、自分らの好みに合った証言は一部を切り取って恣意的に解釈して、被害を訴える声を、被害者に反したやり方で「簒奪」する手法を駆使する。

◈ これらの手法すべてを駆使するラムザイヤー



- ラムザイヤーの主張の中核(業者と女性[「慰安婦」]は「信頼できる約束」による「労役契約」を結び、各自自分の利益を極大化する合理的な計算をした末に、女性は短い契約期間の間に高収益をあげており、自由廃業して帰還することができた)について、これを裏づける根拠に欠け、1次資料を意図にそって選別加工して曲解しており、引用の仕方も不正確で不正直に行われたと反駁する批判がさっ到した。

- 具体的には、公娼や慰安所に連れて行かれた朝鮮人女性に対する契約書を見本としても提示できなかった点、契約内容を間接的に立証する際に引用した原著者の意図と脈絡に反して選別加工・歪曲して記述した点、被害女性の証言を歪曲した点、米軍文書から一部の内容を自分の意図に合わせて選別加工し、恣意的に解釈した点が指摘された。

◈ これらの手法すべてを駆使するラムザイヤー



- ラムザイヤーは論文の中で、業者の就業詐欺や、親からの虐待と前払い金搾取について言及しながら、業者と親に責任を転嫁している。甚だしくは、女性が業者・事業主の嘘や詐欺も知ることができたし、「親に言われるまま従わなくても良い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た」と言うことで、事実上被害女性に責任を転嫁している。日本政府と軍の免責を図っているわけだ。

- ラムザイヤーは、文玉珠(ムン・オクチュ)の証言を切り取って歪曲し、彼女の声を簒奪している。何よりも彼は、文玉珠証言集の原本を読んで引用したのではなく、その証言を歪曲して英訳した韓国歴史研究所(KIH)を引用しているが、ここは大げさな名称とは裏腹に、歴史否定と嫌悪を表す文章だけを集めたイルベ傾向の匿名オンラインブログである。

要約

- 歴史否定主義者のイデオロギーと手法は、ラムザイヤー教授の文章にも典型的な形式と内容をもって、そのまま現れている。
- 学術的真実性の問題に限らず、その政治的意図と背景を探ら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が明確に表れている。以前とはちがって、ラムザイヤーが一つの変曲点だとすれば、歴史否定主義の主張が米国の中位SSCI級の学術論文で展開され、問題なく審査をパスし、オンライン版に一応掲載された。このことは、日韓右派の歴史否定主義者らが「ラムザイヤー救援」に乗り出した背景および理由と直結する。

IV
組織と活動：歴史戦争とラムザイヤー救援

◈ 日本極右の歴史戦争



- 「慰安婦の真実」国民運動



– 2013年7月29日結成。代表は「つくる会」顧問、日本会議代表委員、日本の極右団体の背後と名指される加瀬英明(外交評論家)。

– 河野談話の撤回を求め、「主戦場」である米国での「少女像」設置の阻止、日本軍「慰安婦」記録の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への登録妨害活動などを目標とする極右団体のネットワーク組織。事務局は、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つくる会)に設置

– ユーチューバーのトニー・マラノ、弁護士ケント・ギルバート、ジャーナリストのヘンリー・ストークス、作家のマイケル・ヨン、そしてジェイソン・モーガンなど、日本の右翼を代弁する米国人スピーカーを支援。

◈ 日本極右の歴史戦争

なでしこアクション Japanese Women for Justice and Peace
正しい歴史を次世代に繋ぐネットワーク 「慰安婦=性奴隷」のウソに終止符を！

- 官民が一体化した歴史戦争









◈ 日本極右の歴史戦争



▪ 歴史認識問題研究会



・2016年10月1日設立

・会長は西岡力、副会長は高橋史郎、ジェイソン・モーガン(以下、麗澤大学)、江崎道朗(評論家)。

・国際社会の反日勢力に対抗して組織的に研究、資料収集、研究者の育成、外国語での広報、政府及び関係機関に政策提言などの活動

・『歴史認識問題研究』年2回発行。2017年9月創刊号～2021年3月第8号刊行

・日本に『反日種族主義』の主張と著者を積極的に紹介

◈ 日本極右の歴史戦争

▪ 西岡力



- 著書『でっちあげの徴用工問題』『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が韓国に李宇衍(イ・ウヨン)翻訳・メディアウォッチ刊行により紹介された。
- 極右インターネット言論メディアウォッチで活発に投稿活動
- 麗澤大学客員教授、モラロジー研究所歴史研究室(2021年歴史研究プロジェクトに変更)の責任者
- 歴史研究室の活動と歴史認識問題研究の活動がつながっている

◈ 日本極右の歴史戦争

- モラロジー研究会



- 研究所歴史研究室のプロジェクトで注目されるのは、日本文明研究フォーラム（代表は西岡力）。
- ラムザイヤー、ジェイソン・モーガン、ケビン・ドーク(Kevin M. Doak)教授がこのフォーラムの外国人役員
- ケビン・ドークはジョージタウン大学東アジア言語文化学科長、日本学教授、笹川財団(Nippon Foundation)碩座教授
- 同フォーラムは日米右派の歴史否定主義者ネットワーク組織。2019年7月、ラムザイヤーとドーク教授を招待して特別研究会を開催

◈ 日本極右の歴史戦争

- 日本の官民が一体化した歴史戦争は、主戦場である米国と国連の舞台に向けられ、「少女像」の設置と日本軍「慰安婦」問題の教科書記述を妨害するために、外交圧力と司法への提訴、「市民世論」を装った団体動員、歴史否定主義主張の宣伝および拡散に組織的力量を注いだだけでなく、米国の大学と学界にまで浸透した。

- 政府の公共外交予算や企業の寄付金だけでなく、モラロジー財団と研究所を通じた学術研究と教育支援は、右派歴史否定主義の主張や手法を再生産し拡散する上での潤滑油のような役割をした。反日を罪悪視する反共・嫌韓・嫌中傾向の歴史否定主義者たちの国際的交流と活動に油を注いだもの。

◈ 日本極右の歴史戦争

- 米国人だが麗澤大学で教授に抜擢された反米・親日傾向のジェイソン・モーガンと、ハーバード大学ロースクール日本学教授ラムザイヤーとの関係はこれを象徴的に示している。二人の関係は「産経」系の英字新聞ジャパンフォワードでも確認。互いに持ち上げたり支えながら、歴史否定主義の見方を信念化し、その信念に合った資料だけを選別加工し、曲解を強化した。

- こうした状況で、2021年2月に「ラムザイヤー事態」が起こると、歴史認識問題研究会会長と副会長の記名入りでIRLE編集長にラムザイヤー教授を支持する公開書簡を送っており、これは十分予見されたことだった。さらに「驚くほど広範囲な原資料に基づいた卓越した学術的結果物」として、「称賛されてしかるべき偉大な成果であって、検閲の対象とな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内容であった。

◈ 韓国での歴史否定と嫌悪の拡散

▪ 「反日種族主義」現象の拡散



- 2019年7月、『反日種族主義』を出版、韓日右派の歴史否定主義ネットワークの量質が深化
- 2020年5月、正義連、尹美香、李容洙をターゲットにした「歴史否定と嫌悪のバックラッシュ」事態。「5.16」(軍事クーデター)を狙って出版された『反日種族主義との闘争』と相まって展開された韓国の「ニューライト」と歴史否定主義の意図と企画
- ニューライトなどは、李容洙(イ・ヨンス)さんの記者会見(5.7、5.25)を「活用」して「尹美香(ユン・ミヒャン)事態」、「正義連事態」をつくり、これに対する陣営化した反発は「李容洙事態」につながった。

◈ 韓国での歴史否定と嫌悪の拡散

▪ 「反日種族主義」現象の拡散



- この事態を報じる極右フェークニュースメディアはもちろん、保守日刊紙のフレームや数多く量産された記事でも『反日種族主義』の言語、論理、手法がそのまま再現。
- 「挺対協は自らの功名心を満たすため、自分たちの職業的仕事を継ぐために」「個人人生の事柄などどうでもいいものと投げ捨て」、慰安婦を「民族の聖女」に押し立ててデモをしながら「誰も太刀打ちできない全体主義的権力として君臨した。」(李栄薫[イ・ヨンフン]ほか、2019：337-338)

◈ 韓国での歴史否定と嫌悪の拡散

▪ 「反日種族主義」現象の拡散



- 韓国保守メディア(朝鮮・中央・東亜)の記事が、日本語オンライン版で日本にも同時に出稿された。
- これを引用する日本の極右保守メディアは、この事態を尹美香・正義連・李容洙ハルモニの問題に限らせず、「慰安婦ニセモノ」、日本軍「慰安婦」運動の30年の歴史を否定する事実根拠にして報道した。
- 韓国保守メディアは、それらをまた日本現地からの特派員コラムなどとして韓国に報道し、否定と嫌悪を真実に仕立てた。



◈ 韓国での歴史否定と嫌悪の拡散

▪ 反日銅像真実糾明共同対策委員会





4回、9回、慰安婦像反対集会

- 2019年12月2日に組織。反日種族主義の著者イ・ウヨン[李宇衍] 、チュ・ドンシク(第3の道/主筆)、チェ・ドクヒョ(韓国人権ニュース/代表)、キム・ソヨン(大田市議会議員)が「徴用労働者像」の設置作家であるキム・ソギョン[金曙炅]、キム・ウンソン[金運成]夫婦より名誉毀損と損害賠償裁判に訴えられ、これに対応するため団体を設立。
- 2020年1月1日、水曜集会進行中に少女像のそばで4回目の慰安婦像反対集会を開き、「水曜集会中断」「少女像撤去」を主張。
- 反ムン(ジェイン)、反北、反中のために親日・親米をカミングアウトしたニューライト色の歴史否定主義団体と極右ニューメディア(ユーチューバーなど)

◈ 韓国での歴史否定と嫌悪の拡散

▪ 反日銅像真実糾明共同対策委員会



- 2020年5月12日、23回目の慰安婦像反対集会。韓国ニューライト歴史否定主義者が「恥辱の慰安婦の履歴を隅々まで暴くことで侮辱した挺対協と女性家族部は許しがたい人権侵害集団」と叫んだ。
- 被害者たちを嘲弄し侮辱してきた彼らが、被害生存者たちの「人権」を口にしている。これこそ被害者を奸悪に利用する「腹話術」。
- 毎週水曜集会が開かれる少女像のそばで親日愛国論、売国文在寅などの主張とともに「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否定と嫌悪の発話(denial and hate speech act)を吐き出している。

◈ 韓国での歴史否定と嫌悪の拡散

▪ 李承晩学堂&李承晩TV





- 2021年6月7日に李承晩学堂を設立、6月15日に李承晩TV開設。**反日種族主義打**の講義シリーズと、**日本軍慰安婦問題の真実**の講義シリーズなど、歴史否定と嫌悪コンテンツの産室
- ラムザイヤー事態については、2021年2月10日から4月7日まで、計8本の講義を編成
- 韓国語の講義より日本語字幕講義(日本人対象)のアクセス数が1.5～2倍多い。
- 李承晩TVは、韓日歴史否定主義者が連帯する主要な経路の一つ。



(上)日本軍慰安婦問題の真実講義シリーズ

(左)反日種族主義打破講義シリーズ

◈ 韓国での歴史否定と嫌悪の拡散



▪ 国史教科書研究所



- 2018年3月12日、教科書右派のニューフェースとして登場したキム・ビョンホンを前面に出して、極右インターネット言論フリーダムニュース(代表キム・ギス弁護士)付設で設立。
- 反日銅像真実糾明共同対策委員会の共同代表でもあるキム・ビョンホンは、2020年4月28日、少女像の前で初めて慰安婦法廃止を求めるデモ、10月4日には別途の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という一種の姉妹団体を設立。11月2日からは、保坂祐二(世宗大学)教授を攻撃する集会を相次いで開催する活動。

◈ 韓国での歴史否定と嫌悪の拡散



少女像の前での初めての慰安婦法廃止要求デモ
(2020.4.28) - キム・ビョンホン





◈ラムザイヤーを救え

▪ ラムザイヤーの価値と意味





- 否定(denial)の目的下で、否定(negative)の実証主義手法、嫌悪の視点で書いた文章を学術的に取りつくろい、かなり公認された国際学術誌に投稿して審査(peer review)にパスできる「ハーバード大学」教授。
- 米国人スピーカー「テクサス・ダディー」トニー・マラノ(YouTuber)やケント・ギルバート(弁護士)のような日本極右の歴史否定主義者から財政支援を露骨に受ける「傭兵」らとは比較にならない。
- 「ソフト権力」の支援を受けた「奨学生」として、歴史否定主義の拡散に自分の歩みを重ねてきたということは、ラムザイヤーの作業結果を見れば分かる。

◈ラムザイヤーを救え

▪ 韓日歴史否定主義者の対応





- 2021年2月6日、西岡力、声明
- 2月8日、日本の右翼教授6人、IRLE編集長に送付
- 2月9日、チョン・ギュジェ[정규재]、キム・デホ[김대호]、チュ・ドンシク[주동식]、ハン・ミンホ[한민호]、イ・ヨンブン[李栄薫]、リュ・ソクチュン[柳錫春]、チョン・アンギ[정안기]、イ・ウヨン[李宇衍]、キム・ビョンホン[김병헌]、チェ・ドクヒョ[최덕효]、ファン・ウィウォン[황의원]、キム・ギス[김기수]、イ・ドンファン[이동환]、キム・ソヨン[김소연]連名の共同声明。韓国反日銅像真実糾明共同対策委員会の人物、『反日種族主義』の著者などである。

◈ラムザイヤーを救え

▪ 韓日歴史否定主義者の対応

- 2021年2月9日、韓国歴史否定主義者の共同声明「ハーバード大学教授の慰安婦論文、慰安婦問題に対する本格的な討論の契機にすべき」
- 挺対協/正義連・運動団体陰謀論、朴裕河(パク・ユハ)、李栄薫(イ・ヨンフン)、柳錫春(ユ・ソクチュン)教授らの取り組みだけが学術的なものであるが、これに対し反日種族主義に満ちたメディアと運動団体、それに同調した司法府がいっしょになって、自分たちに加害を働いているという。何よりも、ラムザイヤー論文が国際学術誌に投稿され、ピア審査を経て掲載承認を受け、独創性が認められたにもかかわらず、学問に無関係な外部勢力が妄言云々と学術討論を妨害していると主張。これは文化大革命を連想させる反学文的妄動(こういった表現は、李栄薫のレパートリー)。
- このような構図の戦いを繰り広げようというのが、ラムザイヤー救援の本質である。

◈ラムザイヤーを救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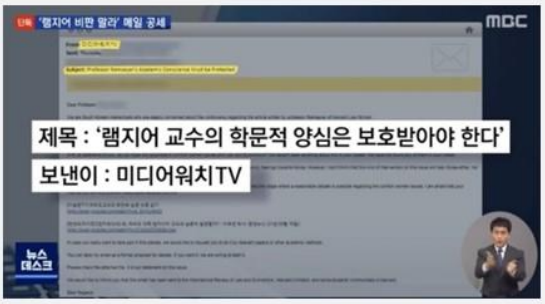
▪ 韓日歴史否定主義者の対応

- この時点ではまだ、国際学界、特に日本史研究者からの積極的な批判が出る前であったため、ラムザイヤー論文は国際学界や専門家らに認められ、そのうち学術討論を経てラムザイヤー論文が検証されるだろうと、果敢に主張していた。
- しかし、批判があふれると、李承晩テレビ関連の講義映像を見れば分かるように、韓国の歴史否定主義者たちの当惑がうかがえる。

◈ラムザイヤーを救え

- 韓日歴史否定主義者の対応





– 2月14日、ファン・ウィウォン(メディアウォッチ代表、反日銅像真実糾明共対委共同代表)、ハーバード大学教授たちに電子メール送付

◈ラムザイヤーを救え

- 韓日歴史否定主義者の対応











◈ラムザイヤーを救え

- ラムザイヤーの反撃と強行突破





- 2021年4月24日、日本の右派歴史否定団体である国際歴史論戦研究所となでしこアクションが開催したシンポジウム(テーマ：ラムザイヤー論文をめぐる国際歴史論争)へのラムザイヤーの映像メッセージ
- 自分に対する若手教授らの批判は「学問の自由を完全に無視して学者に暗殺未遂のような行為を働いた後、それを誇らしく思っている」もの。
- 5月5日、イ・ジンヒ教授に「凶暴な攻撃」であり「深刻な名誉毀損」云々と脅迫性メールを送っている。

THANK YOU

ドイツの「少女像」建設難航の事例分析と「慰安婦」運動の方向のための提言

ナ・ユシン(羅宥信) I ドイツ GPB カレッジ講師、コリア協議会会員

日本軍「慰安婦」運動は、1991 年 8 月 14 日、金学順女史が被害者として最初の名乗りを上げてから、大きな推進力を得ることになった。の後、被害者の肉声での告発は、法的規定や政治関係、学問的理論だけでは解決しきれない真実を暴露しながら国民的共感を集め、国際社会もそのような共感に応えた。

しかし一方で、国際社会には、これとはまったく異なる現実が存在する。その代表的な例が、海外での平和の少女像(以下、少女像)の建立をめぐる摩擦である。少なくない場合、該当地の当局が建立自体を承認しないか、公共の場における建立が最後まで拒否された。少女像は、国際社会が共感する戦時下での女性への性暴力に反対するという普遍的価値を表象するシンボル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銅像の建立が歓迎されない理由は何だろうか。国際社会のこのような現実の中で、「慰安婦」運動は今後どのような戦略を取るべきか。今日の私の発表はこれに関する内容である。

1. 「平和の少女像」建立難航の事例―フライブルクとベルリン

「平和の少女像」の建立が国際社会で歓迎されないようになった最も大きな理由が、日本の反対だということには反論の余地がない。ドイツでも少女像が建てられる度に、そのような難関に直面してしまう。韓国の立場からは、人権意識が発達し、過去清算では模範的な例として挙げられるドイツが韓国と距離を置き、むしろ日本の手を上げているような姿に戸惑いさえ感じられた。このようになった背景には、何より日本とドイツが政治・経済・歴史的に緊密な友好関係を結んでいるという点が大きく働いている。 特に最近、ドイツは「価値を共有するパートナー Wertepartner」である日本とインド太平洋の「安保」のために協力している。ベルリン市がベルリン少女像の撤去に関与する際に掲げた理由の一つも「アジア安全保障」であった。それでも私たちは、日本の阻止や国際政治論理という直接的な原因のほかに、海外での少女像建立に反対する他の理由があるのか、あるとすればそれが何なのか調べる必要があるだろう。そうしてこそ、今後の海外少女像建立の現実的な戦略を得ることができ、ひいてはこのよ

うな第 3 者の視線を通じて少女像建立の意義を点検し直すことができると考える。本発表では、ドイツのフライブルクとベルリンの二つの事例を重点的に検討する。

周知の通り、2016 年、韓国水原市はフライブルク市に少女像をプレゼントしようとしたが、日本が松山市との提携関係を絶つとフライブルクに対応したため頓挫したことがある。

実は日本が介入する前、フライブルクのザロモン市長は少女像の建立に積極的であった。しかし、その後に対立が浮き彫りになると、決定を撤回し、メディアとのインタビューでは自分はミスを犯したと述べた。彼のこの言葉は、彼が少女像の意味を知らなかったという意味ではない。ザロモン市長は、2015 年、韓日「慰安婦」合意と日本がお詫びを伝えたという事実を知っており、だからなおさらフライブルクに少女像を建てることに問題がないと考えた。特に、ドイツの記憶文化を踏まえれば、戦時性暴力の犠牲者を記念することに何か問題があろうとは考えられなかったのだ。

ならば、彼のミスとは何を指しているのだろうか。彼の言うミスとは、少女像が普遍的価値のための象徴とばかり考え、そこに他の目的、つまり日本を対外的に圧迫する意図があるとは知らなかったという。少女像は犠牲者を記念するものであって、加害者を告発する性格を持つとは思わなかったのだそうだ。そのため彼は、韓国側に「利用された(instrumentalisiert)」ような気までしたという。ザロモン市長の立場を理解する視点から見れば、人道主義的観点から少女像の建立に賛成したが、知らぬうちに日韓の対立に巻き込まれた上、不本意ながら韓国と一緒になったため日本から警告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ような形だ。つまり、自分は少女像の普遍的価値に同意したのであって、日本を圧迫することに同意したわけではないのに、知らないうちに自分も日本に圧力を加える立場に立たされたということだ。当時ドイツの有力日刊紙であり左派傾向の「タッツ」も、少女像は日本に道徳的な圧力を加えるための手段だと診断し、ボン(Bonn)大学日本学科のチェルナ教授は、少女像は日本に対する道徳的有罪判決の意味を持つため、フライブルク少女像の建立に反対だと言った。(ちなみに、チェルナ氏はその後、日本で少女像の展示が禁止されるのを見て、少女像に対する立場を変えた。)

ベルリン少女像が建設される過程でも、初めは似たような状況が展開された。ベルリン少女像は区役所の許可を得て設置されたが、設置から数日後に許可が撤回された。もちろん、そこには日本の介入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メディア報道により伝えられた。ドイツは要求に積極的に応えたのである。ところが、タッツの報道によれば、設置許可を撤回する公文には、まるで少女像を設置したコリア協議会が「区役所を騙したという印象を与える」表現が含まれていた。

この公文書によると、コリア協議会は問題化される余地が多分にある碑文の内容を役所に告知せず、その結果、ドイツと日本の外交関係に深刻な負担を与えたとなっている。碑文の内容で問題として指摘されたのは、戦時性暴力はドイツでも起こり現在まで色んな地域で起こっているのに、碑文では日本だけが言及されており、これは「韓国の立場から日本の政治を狙っ

た」言及だということだ。碑文が「暴力的紛争が起こった時間、場所、動機と関係なく」書かれるだろうという予想に反して、日本にだけ集中し、日本に反対する内容だという。

しかし、実際コリア協議会の銅像建立申請書には、少女像が戦時性暴力の再発防止と、被害者たちが加害国に補償と謝罪を求める目的があるとはっきり示されているので、碑文そのものは記載されていなくても、碑文が刻まれるということは明確に記載されている。結局、ミッテ区のフォンダセル区長はコリア協議会に書簡を送り、コリア協議会の銅像建立申請の過程で不明瞭な処理があったという印象を与える意図はまったく無いとして、これについて謝罪した。しかし、碑文に関する問題は、依然として論議の余地を残している。そのことを以下に説明する。

２．少女像の建立をめぐる議論

まず、上記２つの事例から確認できるのは、少女像の目的が２つに分離されて認識されていることだ。一つは、戦時性的暴力の再発防止という目的であり、もう一つは、日本に謝罪と補償を促すためで、それは日本に対する外交的圧力として認識される目的だ。韓国側の立場から見れば、原理として分離されないこの目的が、海外では分離され認識されている。ここで少女像が戦時性暴力に反対する普遍的価値を象徴するものと見なされる場合は問題ないが、日本に対外的圧力を加える意図があるなら受け入れられないという論理が同時に展開される。

少女像が日本に圧力を加える手段という側面を持つとしたら、問題化されるのは何だろう。もちろん、最初の答えは日本からの抗議だろうが、ここではドイツ側の論理にだけ集中したい。ドイツ側にとって、日本軍「慰安婦」は事実かどうか自体が問題視されることはない。上で取り上げたザロモン市長に言わせれば、「慰安婦」の歴史はインターネット上の陰謀論のようなものではないそうで、日本のお詫び表明があり基金も設置した点を指摘している。つまりは、日本も過ちを認めた事件というのだ。また、今回のことで、日本社会が暗い過去を清算することに大きな進展を遂げていないことを知ったともいう。それでも彼は、ドイツが歴史問題の清算のあり方をめぐり、第三国に介入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立場だ。これは、日本が自ら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だそうだ。ベルリンのミッテ区も「慰安婦」の歴史が事実かどうかに問題提起することはない。ミッテ区が碑文を問題視するのは、碑文に日本の犯罪事実だけが書かれているからであり、戦時性暴力への反対のための銅像建立そのものを問題視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だが、ドイツが、少女像を日本を圧迫する手段と認識しながらも許容した場合は、日韓問題に第３国であるドイツが外交的に介入することになるため、不干渉原則に反するという論理が台頭する。要するに、銅像を建てることは韓国の味方になることだというのだ。

少女像が日本に対する道徳的圧力を加える手段として認識される時に起こる、もう一つの問題がある。チェルナ教授はオーストラリアのストラスフィールドで少女像建立の申請が拒否

された理由に注意を換気させながら、「少女像は日本人に対する民族的誹謗」と言っている。ベルリンのミッテ区長も、少女像の存在が様々な国籍の人々の平和な共存を危機にさらすおそれがあると言っている。

一方、少女像には日本に謝罪を促すという意味の他にも、戦時下性暴力に反対する普遍的な意味があるという視点の立場もドイツ内に多数存在する。それはベルリン区議会での動きを見ても確認できる。区議会は区民を代表する機関で、議決機関ではないが、区役所に勧告意見を提示できる。

<少女像について議会で議論された案件>

ミッテ区の少女像を 1 年存置

・結果：賛成 27、反対 9

・賛成理由：少女像は戦時女性性暴力の過去清算と討論に生産的に貢献

・反対理由：碑文に反対

韓日関係で使われる外交手段

・補足事項：碑文を補足

ミッテ区少女像を永久存置

・結果：賛成 24、反対 5

・賛成理由：少女像は、戦時および非戦時性暴力に関する討論のための刺激剤

ドイツと日本は第 2 次世界大戦の同盟国であった。

・反対理由：碑文に反対

戦時性暴力は様々な国で発生する犯罪なのに、韓国と日本にだけ集中

ベルリンと何の関連性もない問題

他の記念物に代替可能、必ず少女像である必要なし

・補足事項：碑文を補足

以上を総合すると、ここでも少女像が普遍的価値を象徴するとみる文脈と、韓国と日本の歴史に関連した葛藤という文脈の二つに分離して思考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ここでどちらに比重を置いて見るかによって少女像設立に対する賛否が分かれるが、前者だけで評価されるときは大多数が少女像設置に異見がない反面、日本だけを加害者として見ることには全般的に留保的な態度が出ている。

３．今後の「慰安婦」運動に向けた提言

日本の圧力によって実際にドイツの行政決定が一瞬にして変わり得るということは、驚くべき心配なことである。いや、それ以上に失望だ。さらに懸念されることは、日本からの抗議と圧力が、少女像の持つ普遍的価値の位置を揺るがす結果をもたらすという点だ。内容の真偽いかんにかかわらず、日本の抗議は少女像から時間と空間を超越する普遍性を奪取し、韓日間の政治、歴史葛藤の流れを浮き彫りにする効果を持つ。結果的に、少女像に対して、これは普遍的価値を掲げてはいても、実質的には日本との争いで勝つための手段の一つだという見方がつくられ、またそのことにより、「慰安婦」問題が正義と真実という道徳的価値の問題ではなく、民族的自尊心に関する地域的葛藤の問題だという認識を生むことになる。韓国の立場では、女性が数年にわたって組織的に性奴隷として蹂躙された事件だが、これを「両国間の葛藤」という枠組みだけで認識するのはとても残念だ。だが、少なからぬメディアがいつの間にかこのような構図の中で「慰安婦」問題を扱っているのが現実だ。一例として、進歩系の日刊紙タツ紙の記者も、韓国と日本の関係を、イスラエルのテルアビブとイランのイスファハーンの関係に比較していた。過去の植民地支配国と被支配国という関係を捨てたまま、葛藤関係にあるという点だけを考慮し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見方の中では少女像は道徳的問題ではなく、政治的問題の文脈の中にだけ置かれるようになる。そうなると、なぜドイツが他国の政治問題に介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問題が提起されるのが当然なことになる。このような状況では、記念すべき犠牲者がいる国は、ドイツの地に銅像を立ててもいいのか、という反論も出てくるだろう。

では、ここに私たちはどんな答えを出すべきだろうか。少女像が戦時性暴力反対という普遍的価値を象徴するという論理は確かに説得力があるが、それだけだと「慰安婦」少女像ではなく、より国際的または普遍的文脈の他の形の像をつくろうという論理に、これといって反論する言葉がないだろう。また、日本が表面に現れないように碑文を取り除くという論理にも反対する名分がない。ベルリンの区長は、韓国と日本に限らない、ドイツの歴史清算にも貢献する戦時性暴力の犠牲者を称える記念物が出てく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いう。そのような願いの前で少女像はどういった答えを出すべきだろうか。少女像が今のこの姿のまま立っていようとするなら、どのように自らの存在の正当性を説得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まず少女像の目的を国際社会の視点から一度点検する必要があります。国際社会では少女像は反日ではないという韓国側の強調があっても、日韓の葛藤という影がつきまとうのは事実です。

このような点で少女像の碑文を補完する方法で、より普遍的な文脈に位置づけようという意見は考慮に値する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な意見は、単に日本の圧力に影響されただけで出された意見だけではないからだ。こういった意見を区議会で出した議員らは皆、日本からの抗議は不当なもので、ベルリン市が日本の圧力に「ひざまずいた」ことを非難する立場の人らだ。そのような人々が少女像の永久存置に同意しながらも、少女像の碑文に「手が加えられ

る」必要があると見たことは、少女像が他の文化圏でよりよく安着するための示唆を与えるものと解釈できる。

第二に、少女像の持つ歴史修正主義への反対という文脈を、より強く浮き彫りにする必要があります。戦時性暴力を犯したのは日本だけではないため、少女像を他の彫刻像に変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論理に対し、緑の党のベルターマン区議員は「少女像は戦時性暴力だけでなく、歴史修正主義批判というメッセージを含んでいる」と指摘している。歴史修正主義批判の立場から見れば、戦時性暴力反対の銅像は何らかの抽象的な形の普遍的価値を象徴するもの以上の具体的かつ歴史的事実を再現しているべきであり、そのような点で少女像は正当性を得ることができる。

そして、少女像を脱植民地主義の文脈に位置させる必要がある。驚くべきことに、あるいは当然ながら、多くのドイツ人は韓国が植民地としてどのような苦痛を受けたのか知らない。ちょうどドイツでは、今年ナミビアに謝罪し補償のための協定を結ぶなど、脱植民地主義に対する関心が高まっている。また学界では、ホロコーストと植民地主義を比較できるかという問題で論争が進行中だ。そこでは、ホロコーストは唯一無二の事件であって、植民地主義など他の歴史的事件と比較できないという立場と、ホロコーストは植民地主義や他の地域のジェノサイドと一脈相通じる部分がある、という見解が対立している。後者の立場の側は、ドイツでの記憶文化はホロコースト批判にのみ偏っているが、植民地で行われた残酷な反人道的行為も記憶文化の対象になるべきだという見方をしている。こうした背景の中で、少女像は植民地主義の被害女性という文脈を浮き彫りにするべき必要性がある。日韓の関係を単なる二国間の葛藤だけでなく、脱植民地主義という構造の中で見られるように、視点の転換を誘導するべきであろう。

最後に、日本軍「慰安婦」により語り尽くせない苦痛を受けた方々と、現在まで続いている全世界の戦時・非戦時下での性暴力の犠牲者たちが、昨今目撃されている力の論理を超え、国際社会で苦痛を認められ記憶されることを願ってやまない。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法動員(Legal Mobilization)の過程での証言の意味

ペク・ジェイエ(白在礼) I アメリカ マサチューセッツ大学博士課程

先の４月 21 日、日本軍性奴隷制の被害者と遺族たちが日本政府を相手に提起した二番目の損害賠償請求訴訟(以下、2 次訴訟)に対し、ソウル中央地方法院民事 15 部(裁判長ミン・ソンチョル[민성철])は、却下判決を下した。これは、わずか数ヵ月前の 1 月 8 日、ソウル中央地方法院民事 34 部(当時、キム・ジョンゴン[김정곤]部長判事)が、故ペ・チュンヒ[裵春姬]ハルモニなど慰安婦被害者 12 人が同じ趣旨で提起した訴訟(以下、1 次訴訟)に対して、原告勝訴判決を下していたのと正反対の結果である。同じ主旨の訴訟について、国内の裁判所が食い違った解釈を示したことにより、国内の司法制度および手続きが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において法的正義を追求し確認するというより、被害者たちにまたもや失望を与えることとなった。

1991 年に金学順が初めて日本軍性奴隷の事実を公開的に暴露して以来、韓国をはじめ世界の市民社会は、水曜集会、少女像および平和碑の設置、そして、生存者福祉への支援事業など様々な社会運動方式を動員して、被害者/生存者の尊厳の回復と正義の実現に向けて努力してきた。特に、日本軍性奴隷制に関連した犯罪行為について、その責任を究明し、加害者を処罰してこなかった不処罰の歴史を根絶するため、被害者や世界各国の関連活動家たち、そして、国際法律家たちが力を合わせ、民間レベルの 2000 年日本軍性奴隷戦犯女性国際法廷(以下、2000 年法廷)を開催した。国際的レベルで行われた 2000 年法廷以外にも、数回にわたって日本の裁判所に日本政府を相手取った謝罪および補償請求裁判を提起している。だが、これらの試みはすべて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こういった日本の司法システムの限界を経験する中で、被害者と遺族、市民社会は、韓国の司法システムを通じて法的正義を実現しようと、2010 年代に入って二度に渡り国内で提訴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今回の 1 次、2 次訴訟は、これまで被害者たちの勇気ある証言とそれらを証明する資料を発掘し、日本政府の責任を究明してきた市民社会による様々な努力の一環であり、その結果物であった。

国内で行われた 1 次、2 次訴訟に対する裁判府の食い違った判決は、司法体系および手続きを活用して社会の不条理を正そうとする社会運動方式としての法動員(Legal Mobilization)の役割と限界を同時に示している。本発表では、証言によって再現される被害者/生存者たちの経験が、法動員の過程でどのように扱われたのかについて考察した。これを通じて、法動員によ

る社会運動過程における法適用の段階で、とりわけ被害者/生存者の証言が持つ言説の主導権が弱化される様相を指摘した。特に、4 月 21 日に下された 2 次訴訟の判決は、日本軍性奴隷制に伴われた犯罪行為の不法性よりも、手続き的国際慣習法の適用を優位に置くことで、日本軍性奴隷制に対する不処罰を容認し持続させるものであり、ひいては被害者/生存者たちの正義回復を引き伸ばすことに寄与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批判した。

社会運動としての法動員(legal mobilization)

法動員概念の必要性

社会運動における法は、社会運動の目的そのものでもありながら、手段としてのその役割がしだいに重要かつ多様になりつつある。例えば、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に向けた社会運動の過程でも、日本軍性奴隷制の創設や運営に関する様々な行為を不法行為と命名し、被害者/生存者たちが人間として享受し得るべき幸福と尊厳性について回復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法的権利を規定する一方で、日本軍性奴隷制に対する責任を否定する日本政府に対抗して日本、韓国、米国の法的制度を活用してきた。このように法と法的手続きは、社会運動の過程で自分たちの要求を既存の法的権利用語により概念化し、運動の正当性を与える手段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たり、新しい法を制定したり既存の法修正を求めるという運動目的そのものとして機能したりもする。

本発表文では、日本軍性奴隷問題の解決に向けた社会運動のいくつもの方向の一つである法的正義の追求過程を理解するために、社会運動の一つである法動員(Legal mobilization)の概念を活用したい。そうすることは、法的正義の追求という目標の下に行われた多様な実践を理解する上で様々な利点を持つ。まず、法動員という概念により、社会運動における法が目標(target)そのものでありながら、手段としてのその役割がしだいに重要になり多様化する現象を捉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手助けする。例えば、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に向けた社会運動の過程においても、主要な運動方式としての定期水曜集会、平和碑の建立、あるいは多方面の連帯事業の活用を超え、裁判を通じて国際法上の不法行為としての日本軍性奴隷制に対する日本政府の法的責任を求めている。この過程で、戦時性的暴力に対する処罰規定がないため、半世紀ものあいだ不処罰を蔓延させた国際法と各国の国内法は、それ自体が改革の対象でもあり、同時に被害者/生存者らが侵害された権利を表現し、日本軍性奴隷制にかかわる残虐行為を不法行為として規定し、責任を否定する日本政府に対して公式に異議を申し立てる手段として活用されている。したがって、法動員という概念は、訴訟に代表される法による問題解決の試みを、裁判の可能性に対する法理的解釈あるいは判決に対する評価が構築してきた領域へと、より拡張する契機になるだろう。

また、法動員という概念は、法と社会運動の間の関係を把握する脈絡で考案されたもので、法的正義を追求する過程に伴われる様々な行為を捉えることを超え、それらの関係を有機

的に観察できる分析枠をも提供する。例えば、 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という社会運動が、違法行為や権利内容の規定、活用する法的メカニズムの選択、法律専門家たちの参加、司法機関の判断など多様な行為として現れる手段を選択することに影響を及ぼす要因を明らかにし、さらに、そのような法的制度の活用することが、該当社会運動に及ぼす影響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法動員という運動方式が、日本軍性奴隷制の被害者/生存者らの正義を実現するという究極的目標の脈絡においてどのような役割をしているのかを理解できるだろう。

最後に、法動員の概念は、法と社会運動を包括的に理解させる概念的道具として、現実的に社会運動が運動目標を達成する上で法をいかに効率的に活用できるのか、そして限界は何かを把握する上で役立つ。法動員は、法学の領域で見落としがちな戦略的手段としての法と、法の生産的権力(productive power)、社会運動研究において逃しやすい点、すなわち社会運動を可能に(enable)し、社会運動を構成する(shape)機会構造としての法を包括するために登場した概念としての法学と社会運動研究領域の隙間を埋めることができる。

このような概念を活用して日本軍性奴隷問題解決に向けた運動という脈絡で取り組まれた裁判を見ることにより、運動資源としての法体系をより包括的に理解し、ひいては社会運動の様々な段階でこれを効率的かつ戦略的に活用する方策を立てることにも役立てられるだろう。

法動員の概念が法と社会運動の領域を包括する分析の枠組みを提供しているとはいえ、ここでの様々な個別行為者の異なる役割に対しては依然として十分な関心を寄せられていない。既存の法学が判事や弁護士など法エリートの役割にばかり集中してきたことへの反省として法動員の概念を活用した研究は、社会運動領域の行為者が法の変化に受身的に影響されるばかりだったのではなく積極的に活用したのだという点にまで、視野を広げられるよう貢献した。しかしながら、社会運動に参加する多様な行為者らの異なる特性を深く扱うまでは至っていない。例えば、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に向けた社会運動でいえば、この社会運動の領域を一つの統合された(unitary)行為者と見なすことで、その内部の動学と法動員の間の関係については具体的な答えを出せていない。したがって本発表では、法動員という概念を通じて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に向けた法的正義の追求活動を見ることからさらに踏み込んで、その過程で被害者/生存者たちの証言が持つ意味を考えたい。

法動員概念の登場と発展

法と社会運動の関係が複雑に多様化し、その二つの間の力学関係に対する学問的関心も増えた。初期の研究は主に法学分野で行われた。法学研究は、主に裁判事例を研究対象とし、判事や弁護士など法エリートの社会正義に対する規範的熱望、実践、そしてそれが社会変化に及ぼす影響に関心を向けた。これに対して、社会科学的土台から始まった法社会学的研究は、従来の法規範が社会的ヒエラルキーを正当化する傾向について認識し、そのようなヒエラルキーに抵抗する法的主張と諸戦略の間の力学関係を主な関心事とした。それは、法の影響を受ける

だけの空間としてではなく、法を主体的に活用する空間としての社会運動に光を当てはじめることを意味した。このような上からの(トップダウン)または下からの(ボトムアップ)の研究は、しだいに両アプローチを融合しながら、法と社会運動との関係を実証的に分析する研究へとつながっていった。すなわち、法と社会運動の関係の特性が法体系に内在しているというよりは、可変的な社会的文脈と互いに影響を与え合うのだという点を仮定し、その関係の実証的分析を試みる研究が拡大されたのである(Cummings 2017; McCann 2006, 2017;Zemans 1983)。

このような関心はまさに、法動員(Legal Mobilization)という概念が登場し活用されるきっかけとなった。社会科学領域において、特に解釈主義的観点から結果よりはプロセスに関心を注ぐ諸研究においては、法的言語と象徴が社会の中で何らかの意味を構成する際に発揮される影響力に注目し、法的な命名(naming)、非難(blaming)、規定(framing)など、より多様な実践行為をすべて法動員という概念に入れて分析に活用した(McCann1994,2017)。これは、個別的かつ明示的な規則あるいは政策行為のみを対象として、それらの行為の直接的かつ即時的に判別可能な影響を分析する実証主義的アプローチとはちがって、法動員の主体と行為の領域をより拡大するものであった。このような文脈で、Boutcher and Chua (2018)は、法動員に関する研究が訴訟(litigation)だけを扱うのではなく、ロビー活動、政策立案、そして執行過程での法活用に加え、活動家たちが追求する多様な社会運動関連活動を含ませるべきだと主張する。最近、Lehoucq and Taylor (2020)は、これまで法動員が指してきた具体的な行為、目標、手段などについての具体的な概念化と理論化が不十分だったと批判しながら、「『明示的』かつ『意識的』に、公式の制度的メカニズムを用いて法を活用する行為」という、より具体的な定義を提案した(168)。法動員を構成する行為と目標の側面から、この定義は、訴訟のほかに行政手続や類似の司法手続も活用することまでを含むものである。

例えば、権利を主張するために国家の福祉行政システムを活用することや、多様な単位の国家機構にオンブズマン制度を活用して苦情を申し立てること、市民団体が裁判意見書を提出することなども、法動員に属すると見なすのである。しかし、同時にこのような定義は、該当事件に意味付けをして公的制度のメカニズムを活用するが明示的・意識的ではない法意識(legal consciousness)と、明示的かつ意識的に該当事件に意味付けはするが公的制度のメカニズムの活用はしない法的規定(legal framing)」、の両者を区別している。これは、法動員という概念を適用するにあたり、より確実な法体系との接点の上で、法と社会運動の関係に注目するよう求めているものといえる。このような本発表文では、Lehoucq and Taylor(2020)の指摘を念頭に置きつつ、法動員の概念が単に裁判だけ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点に強調点を置き、日本軍性奴隷問題解決に向けた社会運動の一環としての裁判について考察する。

法動員の概念を用いて社会運動との関係について分析した先行研究を見ると、大きく 3 つ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る。まず、法動員は運動設計と改革方向設定のような運動の初期段階に

おいて肯定的な影響力を発揮する(Boutcher and Chua 2018; McCann 1994)。特に、社会運動領域において、法的言語と象徴を活用して自分たちの要求を構成することで、関連する行為者たちの法意識を変化させ、新しい法的権利を構成し、以後ほかの運動との連携を可能にするという点を強調する。ただし、法の執行と適用に及ぼす影響は限定的であることを認めている。これは依然として公式の法曹人の役割を否定できないことを示している。しかし、これについては研究者の間で意見が一致したわけではない。社会運動にかかわる弁護士について、社会運動の脈絡と独立性を備えた存在だと捉えて、その介入の有無や程度が社会運動の結果の主たる要因と見る研究者もいるが(Levitsky 2006)、逆に、これら弁護士の役割は社会運動の設計段階ですでに内包されているから、決定的な要因にはならないと考える研究者もいる(Cummings and NeJamie 2010)。最後に、近年、法動員の概念を活用した研究を、国内法の領域を超えて国際法の領域へと拡張させる研究が登場している。それらは、国内の地域的社会運動の活動家らは単なる権利議論の受容者ではなく、下から正義を求め、正義をめぐる言説を発展させ、構成する行為者であることを示すことで、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社会運動の多様な層に注目し始めた(Lemaitre and Sandvik 2015;Vanhala 2011)。このような研究成果を通じて、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法動員の役割と限界を考察したい。

個別的総体性から集合的具体性へ:法動員による社会運動の始まりとしての証言

1991 年、金学順の証言は半世紀もの間の沈黙をやぶる信号弾であった。特に、解放以降も韓国や日本社会に重く覆われていた長い沈黙の幕を被害者/生存者が自ら開け、自身の生と苦痛を自分の声で世の中に語ったという点で重要な意味を持つ。被害者/生存者たちは証言することで、日本軍性奴隷制という特殊な経験を基点に形成された自分の人生の総体を表に出した。彼女たちの証言は、性奴隷制の運営主体である植民地支配国家の男性たちの視点で作成された公式の国家文書には現れない人権蹂躙の現実をつかみ取れるようにするものであった。もちろん、証言の過程が経験の正確な再現だとは言えない(キム・ドンシク[김동식]、ハン・ヘイン[韓恵仁]2017 ; ヤン・スジョ[양수조]2009 ; ヤン・ヒョナ[梁鉉娥]2001; 野崎与志子、キム・ジョンブン[김정분]2015)。ヤン・ヒョナ(2001)が指摘するように、証言とは証言者が経験した事実そのものというよりは、社会的規範と証言当時の彼女を取り巻く状況に影響を受けつつ構成された産物だ。それにもかかわらず、証言は一元化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個人の固有の脈絡と経験を総体的に再現することで、日本軍性奴隷制という集合的経験が具体的にどのような様相を帯びたのか知らせてくれたという点で、社会運動の重要なスタート地点であった。

日本軍性奴隷問題解決に向けた社会運動において法を動員する第一段階は、被害の内容を法言語により命名(naming)することだった。それは固有の経験と多様な脈絡の総体である証言から、日本軍性奴隷制の創設と運営など具体的な犯罪行為を構成する作業であった。例えば、「日本に行けば…、絹を織る工場に行けば…、絹を織ってものすごくお金も稼げるし、楽もで

きるし、見物もできるし、金をたくさん稼いで実家の親に送れば、両親が田んぼを買ったり畑も買える、そうできるって」[1]というコン・ジョンヨプ[孔点葉]の経験や、「彼らの話を聞いてみると、もっともらしいんだよ。だから、私らが[生活に:訳者]困っていたりするから、日本に…絹を織る工場に行けば、すぐに金を少しでも送れれば、親もちょっとは暮らせるだろう」[2]と話すキム・ファジャ(仮名)の経験のようなケースは、「就業詐欺」と命名された。そして、「ウチらちっこいのに、男の力に勝てるか？　ぱっと持ち上げられると、されるまま…、だから下ろしてくれって大声を出したら、ぎゅっと口をふさがれて。口をぎゅっと押えられてるから何も言えないし、大声も出せないじゃないか。で、その[トラックの]上に人が…、ウチらみたいな女たちがいて、何人かもわからないくらいだった」[3]というイ・オクソン[李玉善、李玉先の２名存在：訳者]の経験に類似したケースは「誘拐」と命名した。このように、証言者の多様な生涯史的脈絡と日本軍性奴隷制の下でのそれぞれ違う経験を、犯罪行為を表わす用語として命名する過程は、とりわけ運動初期の被害者/生存者たちが自分たちの経験が不法行為による被害であることを認識するきっかけをつくる意味があった(Arrington 2016 ; McCann 1994、2017)。これは特に、Arrington(2016)が強調しているように、日本軍性奴隷制の被害者/生存者たちも、証言以降に起こり得る報復や文化的タブーあるいは歴史の支配的言説による抑圧を恐れたり、あるいは自分の経験を被害として認識できなかったり、認めない場合だったため、より大きな役割をし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つまり、被害者/生存者たちは自らの経験を、自分のせいだとか、隠すべき過ちではなく、犯罪行為の被害として説明できる言葉が設けられたからである。

もちろん、法言語やシンボルはこのような日本軍性奴隷制を可能にし、彼女たちの苦痛を沈黙させてきた社会的条件や流れを既存の法言語を用いて意味化するには足りない点が多い。例えば、「強かん」「性暴力」「強制売春」のような既存の法言語で記述する場合は、被害者/生存者について、朝鮮の女性が植民地の人として動員の対象となった文脈や、長い間くり返し体系的に行われていた慰安所の運営方式、そして慰安所内の日常的暴力と差別などを盛り込むことができない。そればかりでなく、証言に現れた被害者/生存者の慰安所での経験によって奪われたであろう人生の機会や社会からの疎外などを、法言語は十分に表現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かし、法言語として被害の内容を命名することは、被害者/生存者に対して、自分たちの記憶を集合的経験の文脈から理解するという、法認識を持たせる意味があった。

---

[1] 東北アジア歴史財団、「日本軍『慰安婦』証言資料」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iswj.d_0002_0010.”

[2] 東北アジア歴史財団、「日本軍『慰安婦』証言資料」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iswj.d_0003_0010.”

[3]東北アジア歴史財団、「日本軍『慰安婦』証言資料」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iswj.d_0007_0010.”

さらに、日本軍性奴隷問題解決に向けた社会運動では、このように法言語により命名された犯罪行為は、当時の国際法はもとより日本の刑法に違反する不法行為と規定(framing)された。例えば、日本軍性奴隷制の下で女性らに加えられた性的暴力を、1907 年に締結され 1911 年に日本が批准した「陸戦の法規慣例に関する条約」(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の違反、とくに第 46 条に定められた「家族の名誉および権利は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Family honour and rights、the lives of persons、and private property、as well as religious convictions and practice, must be respected）」という規範に違反する不法行為と規定した(ト・シファン[도시환] 2008)。また、1994 年国際法律家協会(ICJ)は、日本軍性奴隷制の被害者/生存者や関係者らを調査した上で戦争犯罪と人道に対する罪と規定し、これに対する日本政府の責任を求めた(ムン・ヨンファ[문영화] 2019 ; チョン・ジンソン[鄭鎭星]2001)。このように国際条約に違反する具体的な不法行為と規定する法動員過程を通じて、日本軍性奴隷制の被害者/生存者たちは、日本国に対し責任を求める権利の主体として生まれ変わることになった。のみならず、被害者/生存者たちが日本政府の責任を求める主張もまた法的効力を有する主張となり、法的処理の対象としての正当性を構成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のように、証言に現れる複雑かつ多様な日本軍性奴隷制の被害の文脈を、法言語と象徴をもって再現し、被害者/生存者らの持つ権利の内容を規定することで、法的責任を否定する日本政府の態度を批判する正当性を構成することができた。

社会運動としての法動員と法適用の乖離

日本軍性奴隷制問題の解決に向けた社会運動は、運動初期に日本軍性奴隷制の被害者/生存者たちの経験を法言語で再現し、それを国際法上の不法行為と規定することで、裁判を一つの重要な運動手段として活用できることになった。これをもとに日本の裁判所で日本政府の責任を問う裁判に訴えたが、日本の司法で日本軍性奴隷制被害者/生存者の法的権利を認められ日本政府の責任を問うことは容易ではなかった。それでも、このような法動員による問題解決努力は、ついに 2000 年日本軍性奴隷制戦犯を裁く女性国際法廷という成果をおさめた(チョン・ジンソン 2001)。公式裁判手続きではなかったとはいえ、2000 年法廷は、日本軍性奴隷制を主導した日本政府と日本軍の当時の最高指導者に有罪を宣告することで、被害者/生存者たちの経験と権利を認めた。さらに、判決文は被害者の証言を直接引用することにより、日本軍性奴隷制の言説における被害者/生存者の主体性を明らかにし、その主導権を促した。もっとも、2000 年法廷のこのような明らかな成果にもかかわらず、その後も日本政府の法的責任を明示した法的判断が下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

最近、日本の裁判所での法的解決に限界を感じて、日本軍性奴隷制被害者の一部は韓国内での裁判に取り組んだ。まず、2013 年に、日本国を相手取り慰謝料と、それに対する遅延損害金の支払いを求める調停を申し立てた。この調停申請は難航を経て、裁判所の調停取り消し決

定があったため、結局、2016 年に訴訟に移行することとした。同年 12 月 28 日、日本軍「慰安婦」被害者/生存者たちは、日本政府を相手取った二つ目の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た。しかし、この二つの裁判の結果はまったく違っていた。1 次訴訟については、ソウル中央地方法院民事合意 34 部(当時、キム・ジョンゴン[김정곤]部長判事)が 2021 年 1 月 8 日、故ペ・チュンヒ[裴春姬]ハルモニら「慰安婦」被害者/生存者 12 人の訴えに、原告勝訴の判決を下した。それに対し 2 次訴訟については、わずか数ヵ月後の 4 月 23 日、ソウル中央地方法院民事 15 部(裁判長ミン・ソンチョル[민성철])は、故クァク・イェナム(郭禮南)、キム・ボクトン(金福童)ハルモニをはじめとする被害者/生存者と遺族 20 人余りが同じ趣旨で日本政府を相手に起こした損害賠償裁判に、却下決定を下した。

被害の内容とそれを構成する法的論理や趣旨は変わらないのに、正反対の結果が出された理由は何か？ まず、両裁判の判決文を見ると、証言によって再現される被害者/生存者の経験とその脈絡に対する理解の違いによ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る。1 次訴訟の判決文では、「慰安婦」の動員過程と慰安所生活に関して、すべての原告らの経験を記述している上、終戦後の生活に対する内容を含め、被害者/生存者の生活と被害の文脈を理解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4] 反面、却下を決定した 2 次訴訟の判決文には、被害者/生存者の声はまったく表われてこない。むしろ、被告である日本の視点から、戦争遂行の過程で慰安所を設置した動機、方式、規模などを縮約して記述しているだけで、被害者/生存者たちが日本軍性奴隷制によって受けた苦痛に関する言及は皆無である。[5] 2 次訴訟の判決は、当該案件で中心となる被害の性質を理解するために、被害者/生存者らの経験や言葉よりは加害者らの言葉を活用しており、被害者の人生をもう一度疎外させる結果を生んだ。

他方では、国家免除(state immunity)論争に代表される手続き的法に対する考慮の違いが、今回のような相反する結果をもたらした。国家免除論は、日本軍性奴隷制の関連で日本政府を相手取って提訴する場合、重要に考慮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国際慣習法的な事案である。とはいえ、2 次訴訟の判決文が紙面の大部分が、国家免除論に立脚して裁判が却下されるべき理由を説くことに割かれているのは、特異な点といえよう。[6] 国家免除論の適用の妥当性をめぐる議論はともかく、日本軍性奴隷制が数多くの国際法を違反した不法行為として認めら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手続き的国際慣習法に該当する国家免除論の優位を 2 次訴訟の判決のように簡単に認めることは、重大な人権蹂躙犯罪に対して不処罰を解消しようという国際人権規範の流れにも反するものだ。

この間の 1 次、2 次訴訟に対する相反する判決は、法動員を通じた社会運動過程での命名・規定・非難をすることが法適用の領域に及ぼす影響は限られているという、法と社会運動

[4] ソウル中央地方法院、2021. 1. 8.、2016 カハプ 505092 判決。
[5] ソウル中央地方法院、2021. 4.23.、2016 カハプ 580239 判決。
[6] ソウル中央地方法院、2021. 4. 23.、2016 カハプ判決。

の関係に関する研究結果にも一脈相通じるものがある。二つの裁判で被害者/生存者の正義実現のために動員された法言語と論理は同じであるが、裁判部の認識によって相反する結果が出たという点で、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に向けて法を動員する際の限界をどう克服するかについて議論が必要である。

最後に

本発表文では、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に向けた社会運動の中で法を動員するさまざまなあり方とその意味を考察した。まず、社会運動の段階では法言語と象徴を通じて総体的ではあるが個別に散らばっている被害者/生存者たちの経験を、具体的な集合記憶として捉えることにより、被害者/生存者をして、自分の経験を隠すべき過ちではなく、犯罪行為による被害の経験として認識させるという点で意義がある。また、社会運動を展開する中で、日本軍性奴隷制が従来の法体系のどの部分をいかに違反したかについて、その不法性を構成できるようにし、日本政府に対する批判の正当性を確保させる。最後に、韓国内で行われた 1 次、2 次訴訟の相反する判決により、法動員の最後の段階である裁判からは、被害事実についての法的構成の努力は決定的な影響を及ぼせないという従来の研究成果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

しかし、このことは訴訟による問題解決努力の無用性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むしろ、今まで、2000 年法廷と 1 次訴訟を除く司法的手続きにおいて日本軍性奴隷制についての認定が行われた点がないという事実を直視し、このような不処罰が持続される理由について、国際法をめぐる国際政治の観点から深く考える必要がある。特に、2019 年 7 月、アフリカのコンゴ民主共和国の元反乱軍指導者ボスコ・ヌタガンダ(Bosco Ntaganda)に対して、2002~2003 年にコンゴのイトゥリ地域で発生した強かんと性奴隷などによる戦争犯罪と人道に対する罪を問うて、有罪を宣告した事例がある(イ・ヘヨン[이혜영]2020)。このように次第に拡張・発展されていく、戦時の性暴力に対する国際人権規範の流れを、どのように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に活用できるのかを深めることも必要だろう。

今回の発表のための研究は、徹底して先行研究の成果の土台の上に行われた。特に、実際に資料を生産する過程なしに、これまでの研究者が長年努力して構築してきた研究資料や研究結果を、法動員という概念の文脈で再構成することに集中した。しかし、法動員による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より効率的な方策を考えるためには、次のような努力が必要である。今後の研究では、より深層的に証言資料を活用し、被害者/生存者の経験と言葉が法動員の過程でどのように再解釈され構成されるかを見ていく必要がある。それは被害者中心の正義の実現という究極的な目標下での法動員の役割と意味が何かということを把握する上で役立つだろう。また、社会運動の領域で活動家たちが、被害者/生存者の経験と要求を、なぜ、どのように、法動員を通じて解決しようと決定することになったのか、そしてこの選択が日本軍性奴隷制問題の解決に向けた社会運動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たかを、より具体的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

地域の市民団体の活動家、学生、学者、法曹人など多様な主体をインタビューし、社会運動内部の力学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れば、社会運動としての法動員が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文脈の中でどのような機能を担っているのかも分かることだろう。

最後に、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関連で取り組まれた裁判の様々な資料を収集・分析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この発表においては、裁判の結果である判決文を通じて、当該裁判とのかかわりで行われた様々な主体の実践を推し量らざるを得なかった。とりわけ、判決文では、裁判部の認識と判断を類推するにとどまった。しかし、起訴状、速記録、傍聴資料などの関連裁判資料をより広範囲に活用すれば、法的正義の追求過程における訴訟の意味と限界について、より正確な理解が可能になるだろう。こういった点が今後の諸研究で扱われることになれば、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法動員の過程をより深く理解し、さらに効率的に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参考文献

Arrington, Celeste L. 2016. “Victimhood and Governmental Accountability.” In *Accidental Activists : Victim Movements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in Japan and South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1–18.

Boutcher, Steven A., and Lynette J. Chua. 2018. “Introduction: Law, Social Movements, and Mobilization across Contexts.” *Law and Policy* 40(1): 5–9.

Cummings, Scott L. 2017. “Law and Social Movements: An Interdisciplinary Analysis.” In *Handbook of Social Movements Across Disciplines*, eds. Bert Klandermans and Conny Roggeband. Boston, MA: Springer, 233–70.

Cummings, Scott L., and Douglas NeJamie. 2010. “Lawyering for Marriage Equality.” *UCLA Law Review* 57(5): 1235–1332.

Lemaitre, Julieta, and Kristin Bergtora Sandvik. 2015. “Shifting Frames, Vanishing Resources, and Dangerous Political Opportunities: Legal Mobilization among Displaced Women in Colombia.” *Law and Society Review* 49(1): 5–38.

Levitsky, Sandra R. 2006. “To Lead with Law: Reassessing the Influence of Legal Advocacy Organizations in Social Movements.” In *Cause Lawyers and Social Movements*, eds. Austin Sarat and Stuart A. Scheingol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45–63.

McCann, Michael. 1994. *Rights at Work: Pay Equity Reform and the Politics of Legal Mobiliza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6. “Law and Social Movements: Contemporary Perspectives.”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2: 17–38.

———. 2017. “Law and Social Movements.” In *The Blackwell Companion to Law and Society*, ed. Austin Sarat.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506–22.

Vanhala, Lisa. 2011. *Making Rights a Reality? Disability Rights Activists and Legal Mobi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Zemans, Frances Kahn. 1983. “Legal Mobilization : The Neglected Role of the Law in the Political System.”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3): 690–703.

キム・ドンシク[김동식], and ハン・ヘイン[韓恵仁]. 2017. 「日本軍「慰安婦」証言歴史考証の拡張的意義」In 韓国女性政策研究院セミナー資料, 40–50.

ト・シファン[도시환]. 2008. 「日本軍慰安婦問題の現況と国際人権法的再照明」国際法学会論叢 53(3): 41–68.

ムン・ヨンファ[문영화]. 2019. 「日本軍慰安婦被害者訴訟における裁判行使」ジャスティス 174: 114–44.

ヤン・スジョ[양수조]. 2009. 「証言を通じてみた日本軍慰安婦実態」忠清文化研究 2: 125–65.

梁鉉娥. 2001. 「証言と歴史を書くこと-韓国人『軍慰安婦』の主体再現」社会と歴史 60: 60–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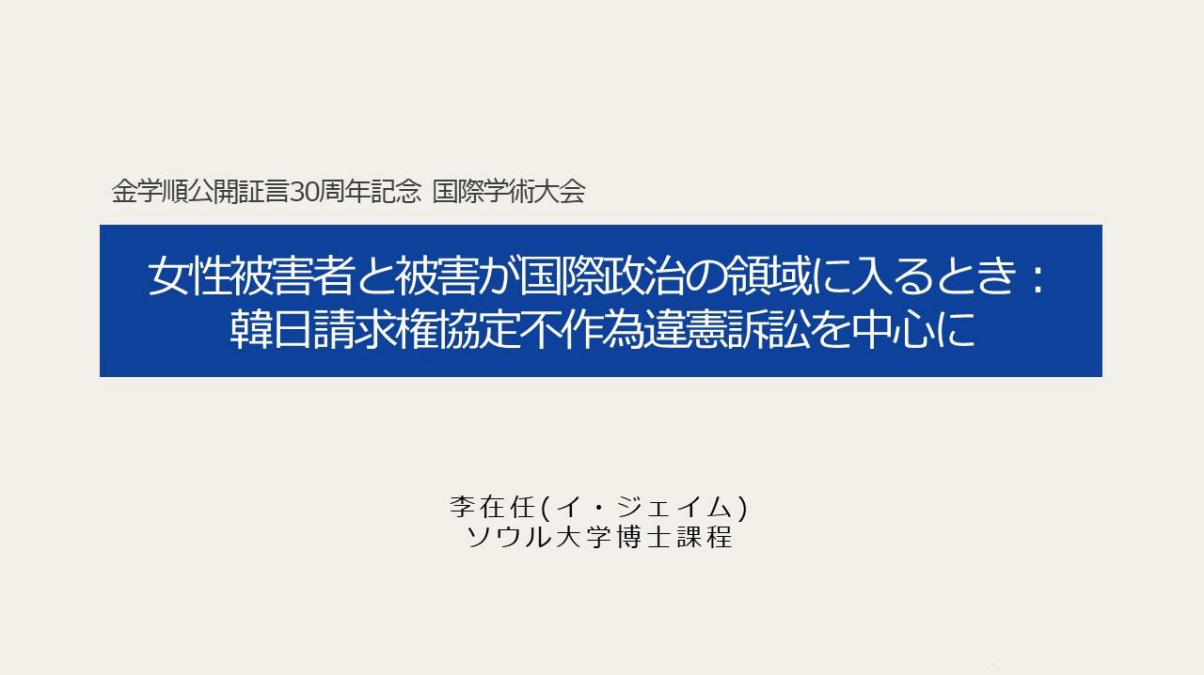
野崎与志子, and キム・ジョンブン. 2015. 「『慰安婦』論争：歴史と証言」歴史と歴史教育 30: 135–63.

イ・ヘヨン[이혜영]. 2020. 「‘性犯罪・性差別犯罪’(Sexual and Gender-Based Crimes)に関する国際刑事法発展の背景および現況*」国際法評論 55: 25–59.

鄭鎭星. 2001. 「2000 年日本軍性奴隷戦犯女性国際法廷の背景と意義」女性と社会(12): 16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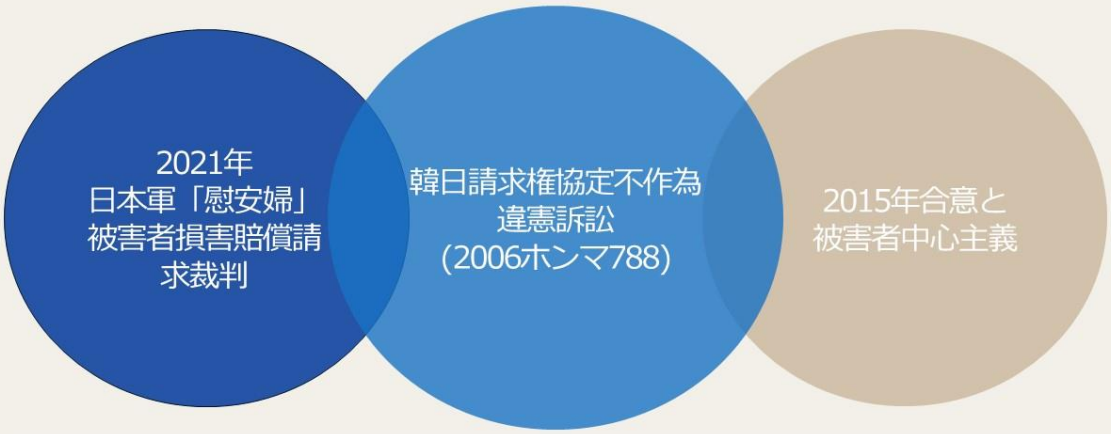
女性被害者と被害が国際政治の領域に入る時

イ・ジェイム(李在任) Ｉ ソウル大学博士課程



序論

問題提起



▶ **女性運動からの問題提起と国際政治、(女性)被害者を中心に問題を解決？**

序論

研究資料と研究方法

審判記録

2006年、日本軍「慰安婦」生存被害者は、外交通商部が協定第3条の「解釈および実施に関する紛争」を解決していない不作為は、請求人らの権利を侵害したものという決定を求める**審判請求書**を提出。
2011年8月、憲法裁判所は、両国政府間協定により個人賠償請求権が消滅したかをめぐる解釈上の紛争が存在し、韓国政府が第3条に示された手続きにより、これを解決する義務があると判断し、韓国政府の不作為が被害者の基本権を侵害したため違憲と決定。

法言説の分析

決定文を基に法的争点や決定の意義のみを扱う法学研究と違って、法廷を言説の場と見なし、支配的言説が現れる決定文を含む審判記録を、言説分析の対象とした(梁鉉娥[ヤン・ヒョナ]、2010：227)。
特に、本研究は「被害」と「被害者」に付与される意味、これを前提に両者が対立する地点、共有される観点および仮定を言説分析した。

文献研究

言説が生産された社会的・歴史的脈絡と再脈絡化のあり方も併せて検討するべく、関連法令、国会で生産された議案・議事録・請願書、政府の報道資料および政策報告書、新聞記事と単行本を文献資料として検討。

日本軍「慰安婦」の問題化過程：「被害者」の浮上

1990年代

日本軍「慰安婦」運動と過去事清算運動
：政治的主体としての「被害者」という呼び名

「被害」はジェンダーヒエラルキーと
ジェンダー暴力に対する正義の始発点に

2000年代

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下での対日過去事清算の流れ
：人権侵害の当事者としての被害者

▶ 2005年、日韓会談関連文書の全面公開と民官共同委員会の立場発表

慰安婦支援法と政府の外交政策
：人道主義的支援対象としての被害者

被害者は家父長的国家の保護の対象であり、
被害救済は「国内」問題、
被害は韓日外交の障害物と認識される

慰安婦被害者法への改正
：被害者の立場を反映するための
「被害者」命名

被害は新たな歴史叙述により、社会共同体の過去・現在・未来を再解釈し再構成するべき人権関連問題であると見なす、視点の転換。

違憲訴訟の法言説分析

1. 外交保護権：権利主体あるいは保護対象としての被害者

外交的保護義務		請求人側/憲法裁判所		被請求人側		対立のポイント
自国民が他国の国際法違反行為により被害を受けた場合、彼らを保護するために自国政府が他国に対して平和的な方法で権利を主張できるという国際法上の概念	>>	「被害者」は重大な人権侵害の被害者で、外交的保護権の主体であり、国家は彼らが外交的保護を受ける権利を保障する義務があるが、この限りではないため基本権が侵害されている。	>>	国際法上、外交保護権は国民から同意や委任を受けるものではなく、国家に属する権利であって、その行使の有無や方式は国家の裁量によって行使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外交的保護に関する条文草案の19条 ：重大な人権侵害被害者の見解を考慮 ▶韓日請求権協定 ：国家間外交と被害者の権利救済 vs. 個人の補償結果に対する不満足

違憲訴訟の法言説分析

2. 外交的解決：被害救済のための作為義務の行使

1) 被害の性格：特殊性あるいは普遍性

請求人側/憲法裁判所	被請求人側		対立のポイント
この被害は憲法の根幹となる価値にかかわる基本的人権侵害であり、人間の尊厳と価値が否定された重大な人権侵害であるため、作為義務を履行する必要が大きい。 被害の残酷性や被害者の規模、類例を見ないという点で特殊な被害。	強制動員被害のすべてが同じく重大な人権侵害であり、政府が日本軍「慰安婦」被害にだけ取り立てて外交的に取り組む義務はない。 大小ともに同じ被害であり植民地の人々皆が経験した戦争被害を、現実的に国家がすべて救済することはできない。	>>	▶民官共同委員会の発表 ▶「仲裁要請不履行に対する違憲確認」事件(98ホンマ206)との比較

違憲訴訟の法言説分析

2.外交的解決：被害救済のための作為義務の行使

2) 被害と現在：持続あるいは終結

請求人側/憲法裁判所	被請求人側		対立のポイント
被害が「現在の人権問題としても重要」 被害者にとって、現在深刻な基本権の侵害を受けており、韓国政府を通じた他の救済手段が存在しない	被害は専ら日本政府の過去の加害事実によるものであり、被害回復の責任は日本政府に帰属する。	>>	▶民官共同委員会の発表：国際法上の法的責任追求の有無

違憲訴訟の法言説分析

3. 韓(米)日の外交関係の展望：女性人権あるいは「国益」

請求人側	被請求人側		憲法裁判所
紛争解決の手続きに従うことは、「外交的信頼」のような国益に反するものではなく、「平和的かつ外交的な解決」。	「国内問題とは異なる国際関係の特殊性」のため、「全体的な国家利益の観点から適切ではない」。	>>	「消耗的な法的論争への発展可能性」または「外交関係の不都合」は、重大な人権侵害被害者の救済に背を向ける理由や「真摯に考慮されるべき国益とは捉え難く、協定第3条に基づく措置が『**真の国益**』に反するものでない」。 法的責任の履行は被害を「歴史的教訓とし、二度とそのような悲劇的状況が演出さ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が**真の韓日関係の未来**を築く方向」だ。

違憲訴訟の法言説分析

4. 被害者の苦痛に対する解釈

請求人側/憲法裁判所	非請求人側		苦痛を受けた高齢の女性被害者
「被害者」は苦痛で無力化された存在というよりは、不正義に怒り、抑圧に抵抗する主体(Stringer, 2014:31)。高齢の被害者の権利行使に関連し問題解決の緊急性を訴える。	日帝植民地期に誰もが「不可抗力的」に「苦痛」にさらされた。 「被害者」は、慰安婦支援法の目的に見合った人道主義的な保護・支援の対象。 被害者の苦痛を個人の痛みに還元。被害者の死後は問題が終結。	>>	▶被害者の位置をもとにジェンダー正義と軍事主義、植民地主義に対する省察を求める市民。 ▶気の毒で助けるべき存在。フェミニスト移行期正義の実現ではなく、被害者個人のトラウマの治癒のみを課題に。

2015 年韓日合意：被害/者言説の持続と遅延された平和構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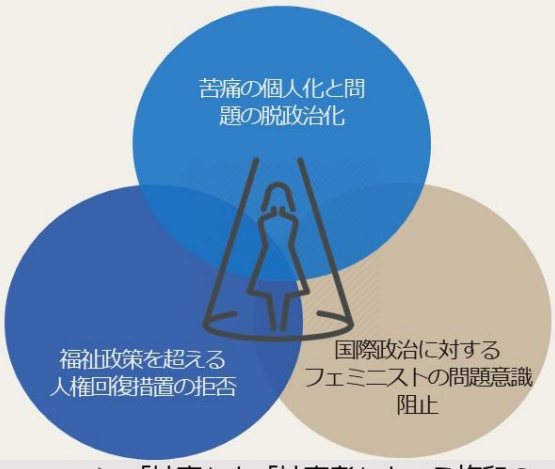
従来の国際政治の慣行どおりなされた合意により、被害者は内容から他者化され、手続きからは排除された(梁鉉娥[ヤン・ヒョナ]、2016)。

被害救済を通じて女性の人権と平和、正義を中心とする韓日関係を構築する契機とする代わりに、「これ以上韓日関係を硬直させず(チョン・ユンソプ[정윤섭] 、2015)」韓米日協力の北東アジア安保体制を構築するため。

「被害者」を「恨(ハン)の多い女性のお年寄り」の人道主義的支援の受け手と前提することで、被害救済と権利回復を個人化して脱政治化する。

戦時性暴力の根絶と平和構築過程における女性被害者の参加や、ジェンダー視点の反映に関する問題提起は受け入れられない。

結論



▶「被害」と「被害者」という旗印の、
新自由主義的転回に対抗する意味の取り組み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